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7호 2025.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고구려사 연구의 현단계와 과제 모색

임기환 ▮ 『삼국사기』 원전 연구와 고구려사 문헌연구 방법론 7
이성제 ▮ 중국 사서 수록 고구려 관계기사의 이해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51
양시은 ▮ 고구려 고고 자료 연구의 동향과 해석 87
이정빈 ▮ 20세기 전 · 중반 고구려 국가형성 연구와 사회성격 논쟁 135
김현숙 ▮ 1980~2000년 고구려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이해
–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와 수묘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169
정호섭 ▮ 21세기 고구려사 연구의 도약과 쟁점의 심화 217

논문

송종호 ▮ 중세 한일관계와 '경계인'론
–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씨의 연구에 관한 한 고찰 289
이승수 ▮ 청 건륭 28년 제(製) 만문(滿文) 『성경길림분계도(盛京吉林分界圖)』 연구 335
최덕규 ▮ 근대 동아시아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391
공준환 ▮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전쟁범죄
–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433
이유표 ▮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고고학의 재건과 굴절(1949~1978) 475
김정열 ▮ 고고학과 마르크스주의 중국사 건설
– 소련 고고학의 수용과 중국 고고학의 지향 1949~1962 525
설재희 ▮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의 대외교류와 문화재 외교의 개황(槪況) 567

서평

손성욱 ▮ 이념적 의례 속 현실적 교섭
– 『조선 · 청 관계와 사신외교』(김창수,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597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6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Goguryeo History: Current State and Future Research

Lim Gihwan ▮ Reserch Methodology on Goguryeo History through the Study on the Basic Materials of *Samguksagi* 7

Lee Seongje ▮ Understanding Chinese Historical Records on Goguryeo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Approach 51

Yang Sieun ▮ Research Trends and Interpretations of Goguryeo Archaeological Remains 87

Lee Jeongbin ▮ The Historiography of Goguryeo's State and Social Formation in the Early to Mid-20th Century 135

Kim Hyunsook ▮ Major Issues and Understandings in the Study of Goguryeo History from 1980 to 2000: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Early Political System of Goguryeo and the Grave Keeper 169

Jung Hosub ▮ The Leap in Goguryeo Studies and the Deepening of Issues in the 21st Century 217

Articles

Song, Jong-Ho ▮ Medieval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Marginal Man" Theory: A Review on the Studies of Mr. Shousuke Murai 289

Lee Seungsu ▮ Study of a Map of the Borderline of Mukden and Girin in Manchu Made in the Twenty-eighth Year of the Qianlong Period of the Qing Dynasty 335

Choi Deokkyoo ▮ Intelligence War and Cryptography in Modern East Asia: Focusing on the Sino-Japanese and Russo-Japanese Wars 391

Kong Joonhwan ▮ A Study on Japan's Aggression and War Crime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433

Lee Youpyo ▮ Rebuilding and Political Distortions of Early Archae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75

Kim Jungryol ▮ Archa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a Marxist Chinese History: The Reception of Soviet Archaeology and the Orientation of Chinese Archaeology(1949~1962) 525

Seol Jaehee ▮ Foreign Relations and Relic Diplomacy in the Archae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67

Book Review

Son Sungwook ▮ Pragmatic Negotiation within Ideological Rituals: Chosŏn·Ch'ŏng Kwan'gyewa Sashinoegyo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Qing Dynasty and the Diplomacy of Embassy] (Kim Chang-s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3) 59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고구려사 연구의 현단계와 과제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1

『삼국사기』 원전 연구와 고구려사 문헌연구 방법론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II.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 공유기사의 원전 탐색
III. 고구려본기와 잡지의 비교를 통한 원전 탐색-지리지 사례
IV. 중국 사서 출전 기사의 원전 탐색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고구려사를 이해하는 자료는 당연히 고구려인에 의해 남겨진 문자(文字) 자료가 기본 자료가 될 것이며, 공존했던 주변 국가에 의해 남겨진 문자 자료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인에 의해 작성된 문자 자료는 크게 고구려 당대의 문자 자료인 금석문(金石文)과 후대의 사서(史書) 편찬을 통하여 전해지는 문헌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석문 자료가 당대성(當代性)이라는 점에서 역사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현존하는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금석문의 성격상 특정 시기, 특정한 측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석문을 주된 자료로 하여 고구려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구려인에 의해 작성된 문자 자료가 후대에 전해지고 이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후대 사서에 기록되고 편찬된 자료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고구려본기를 비롯한 『삼국사기』의 고구려 관련 기사들이 고구려사 이해의 가장 기초적 자료이다. 다만 이들 기사를 사료로 삼기 위해서는 사료비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시기의 기록과 문자 자료가 전승되는 과정 및 기사 개변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고구려사를 구성하는 실증적 방법론으로서 고구려본기 기사의 형성 과정 및 원전 자료의 탐색, 그리고 사료 성격을 이해하는 연구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구려본기의 원전 자료에 대한 탐색이 직접적으로 기사의 신뢰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고구려본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거나, 고구려본기 기사의 원전 계통을 파악하면 각 기사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이해와 해석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다.[1]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3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래서 이 글은 고구려사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지, 열전을 구성하는 기사의 원전 자료에 대한 탐색 및 이를 통한 사료 비판의 방향, 그리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고구려사 구성을 위한 문헌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구려본기 기사를 전거 자료의 출전 계통 국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 사서를 전거로 하는 기사, 둘째, 백제·신라 측 전승 자료에 전거를 둔 공유 기사, 셋째, 고구려 독자의 전승 자료에 의거한 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 유형의 기사들의 원전 탐구와 이를 기초로 하는 고구려사를 구성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2]

---

1 『삼국사기』의 원전에 대한 연구 성과 증 고구려 관련 자료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鄭求福 外, 1995,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典的硏究』, 雄山閣; 李康來, 1997,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전덕재, 2021,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三品彰英, 195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硏究年報』; 井上秀雄, 1961, 「三國史記 地理志の史料批判」, 『朝鮮學報』 21.22합; 井上秀雄, 1968, 「三國史記の原典をもとめて」, 『朝鮮學報』 48;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 撰進과 "舊三國史"」, 『조선학보』 83;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 中國史書 引用記事의 再檢討」, 『조선학보』 104; 深津幸德, 1989, 「三國史記 記載對中國關係記事について－その檢討のための予備的考察」, 『學習院史學』 27; 신동하, 1995b,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신동하, 1995a,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분주의 연구」, 『동대사학』 1; 김태식, 1997,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54; 이강래, 200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분주 재론」 『백산학보』 67; 임기환, 2006,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임기환, 2018, 「고구려 전기 都城 관련기사의 재검토」, 『역사문화연구』 65; 전덕재, 201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東洋學』 64.

2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원전연구 방법론을 다룬 연구 논문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 공유기사의 원전 탐색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 중에서 백제본기, 신라본기와 공유기사를 살펴보자.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가 맺는 대외관계 기사는 거의 대부분 각 본기에 동일 사건 기사가 있다. 이를 이강래는 '공유(共有)기사'라고 하였는데,[3] 이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이 공유기사의 경우 각 국가별로 관련 전승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느 한 국가의 전승 자료를 기초로 각 본기에서 동일 사건으로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후자의 경우가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백제본기, 신라본기와의 공유기사 중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인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각 본기에 보이는 동일한 내용 기사에서 어느 본기 기사가 원전(原典) 자료에 의해 찬술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각 본기의 동일 기사는 계통이 다른 양국의 전승 자료가 각각 별개 원전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한 본기를 구성하는 자료를 원전으로 해서, 다른 본기에는 주어와 객어만 바꾸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술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느 기사가 원전 자료에 입각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사 내용의 상세함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기사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두 본기 기사 모두 서로 다른 계통의 원전에 의한 것으로 본다. 기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전의 귀속을 판단하기는 어렵다.[4] 물론 기사의 상세함이 곧바로 원전의 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겠지만, 때로는 기사의 내용에서 각국 관련 기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서술의 상세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의 분량이나 상세함을 고려하되 각 기사의 맥락에 따라 원전의 출전 국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

---

3 이강래, 1997, 앞의 책.

4 공유기사의 원전 판단에 대해서는 이강래, 1997, 앞의 책, 81~91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면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기사에 대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서 369~395년 기간에 양국 관계를 전해주는 총 13건의 공유기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사례로 삼은 이유는 고구려와 백제 양국 사이에 전쟁 등 가장 밀도 높은 대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이 각각 관련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어 공유 기사 작성 방식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및 백제본기에 기술된 고구려와 백제 대외관계 기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 사료 A와 같다.[6]

A-① (백)㉠ 근초고왕 24년(369)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백)㉡(근구수왕 즉위년) 先是 高句麗國岡王斯由 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고)고국원왕 39년(369)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績

A-② (백)근초고왕 26년(371)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

5 아래 서술은 임기환, 200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백제 관련 기사의 검토-영락 6년조 기사의 역사지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漢城百濟史料硏究』, 경기문화재단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이 글의 관점에 맞추어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6 인용문은 두 본기의 문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번역문이 아닌 원문으로 인용하였음을 양해바란다. 이하 『삼국사기』 백제본기 및 고구려본기 기년 기사는 전거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백제본기는 (백), 고구려본기는 (고)로 표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流矢死 王引軍退

(고)고국원왕 41년(371) ㉡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A-③ (백)근초고왕 30년(375)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擧兵報之

(고)소수림왕 5년(375) 秋七月 攻百濟水谷城

A-④ (백)근구수왕 2년(376) 冬十一月 高句麗來侵北鄙

(고)소수림왕 6년(376) 冬十一月 侵百濟北鄙

A-⑤ (백)근구수왕 3년(377) ㉠冬十月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고)소수림왕 7년(377) ㉠冬十月 百濟將兵三萬 來侵平壤城 ㉡十一月 南伐百濟

A-⑥ (백)진사왕 2년(386) 八月 高句麗來侵

(고)고국양왕 3년(386) 秋八月 王發兵 南伐百濟

A-⑦ (백)진사왕 5년(389) 秋九月 王遣兵侵掠高句麗南鄙

(고)고국양왕 6년(389) 秋九月 百濟來侵 掠南鄙部落而歸

A-⑧ (백)진사왕 6년(390)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고)고국양왕 7년(390) 秋九月 百濟遣達率眞嘉謨 攻破都押城 虜二百人以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⑨ (백)진사왕 8년(392) ㉠ 秋七月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고)광개토왕 1년(392) ㉠ 秋七月 南伐百濟 拔十城

㉡ 冬十月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絶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 乃拔

A-⑩ (백)아신왕 2년(393)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고)광개토왕 2년(393) 秋八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A-⑪ (백)아신왕 3년(394) 秋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 敗績

(고)광개토왕 3년(394) 秋七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 逆擊敗之 餘寇夜走

A-⑫ (백)아신왕 4년(395)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 伐高句麗 麗王談德 親帥兵七千 陣於浿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고)광개토왕 4년(395) 秋八月 王與百濟戰於浿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위 15건의 기사에서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보이는 동일한 내용 기사에서 어느 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인지를 살펴보자. 원전의 판단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를 기준으로 하여 기사 A의 원전 계통을 따져보자.

A-①의 경우는 기사의 상세함으로 볼 때 백제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이다. 그런데 백제본기에서도 근초고왕조 기사 ㉠과 근구수왕 즉위년조 기사 ㉡ 사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雉壤'과 '半乞壤', '高句麗王 斯由'와 '高句麗 國岡王 斯由'라는 표현상의 차이로 보아 전혀 다른 자료 계통임을 알 수 있다. A-①의 고구려본기 기사는 백제본기 A-①-㉠에 의해 작성되었다. 기사 A-①-㉡의 원전 자료는 백제본기를 편찬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중 '雉壤'과 '半乞壤'은 자료 계통이 다른 이칭으로 판단된다. 글자 형태를 보면 '半乞'은 '雉'의 오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 삼국유명미상지분조에 '치양'과 '반걸양' 지명은 수록되지 않았다. 지리지의 다른 자료에서 '치양'과 '반걸양'과 관련된 지명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리지 찬자가 이 두 지명의 지리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7] 지리지 유명미상지분조의 지명 추출이 백제본기 기사에 의거했다기보다는 백제본기 기사를 구성하는 주된 저본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8] 그렇다면 치양, 반걸양 등 지명을 포함하는 저본 자료는 둘 다 보조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A-①-㉠ 기사의 저본 자료가 지리지 유명미상지분조의 저본 자료와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A-①-㉡의 "高句麗 國岡王 斯由" 기사를 검토하자. '國岡王'이란 왕호는 고구려본기에서 고국원왕조 분주에 보이는 왕호 '國罡上王'과 통한다. 물론 표기 자체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고구려본기에서 분주 왕호의 저본 자료 그 자체는 아니다.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고구려 왕호는 본문계 왕호와 분주계 왕호로 나뉘어 그 저본 자료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A-①-㉡ 기사를 포함하는 백제본기 저본 자료는 고구려본기의 분주계 왕호를 포함하는 자료 계통이다.

그러면 이 저본 자료는 과연 어떤 성격의 자료일까?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보

---

7 『삼국사기』 지리지2 한주조 "雊澤縣 本高句麗刀臘縣 景德王改名 今白州"라는 기록과 지리지4 한산주조 "刀臘縣 一云雉嶽城"이라는 기록, 두 기록을 합하면 치악성이 고려시기 백주, 즉 배천 지역이 된다. 그러나 지리지 찬자가 雉壤(雉壤城)과 雉嶽城을 동일한 곳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8 필자는 이를 편년적 체제를 갖는 단일 史書로서 직관지에 보이는 '本國古記'와 동일한 사서로 파악하고 있다(임기환, 2006, 앞의 글, 47~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 백제계 전승 자료를 반영하는 사서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高句麗 國岡王 斯由"라는 문장은 백제 전승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아닐 것이다. 특히 고국원왕의 휘(諱)를 '사유(斯由)'라고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國岡王 斯由"라는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고구려 전승 자료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서(魏書)』 백제전에는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 고국원왕을 '釗'라고 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사가 순전히 백제계 전승 자료라면 아마도 '斯由' 대신 '釗'라고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원래의 저본 자료에는 '釗'라고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저본 자료의 편찬자는 '國岡王 斯由'라는 고구려계 전승 자료를 반영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A-①-㉡ 기사를 포함하는 저본 자료는 단순히 백제계 자료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계 전승 자료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삼국사와 같은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정한다.[9]

A-② 백제본기에 ㉠㉡ 두 기사가 있다. ㉠은 백제본기에만 보이는 단독기사이다. 이 기사의 내용도 백제와 고구려 관계인데, 왜 공유기사로 작성되지 않았을까? 일단 ㉠ 기사가 공유기사로 찬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유기사가 작성된 ㉡ 기사와는 전거 자료 계통이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공유기사가 작성될 당시에는 A-②-㉠ 기사가 백제본기 편찬에 반영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A-②-㉠ 기사의 저본 자료는 보조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아래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 기사의 浿河는 다른 공유기사의 浿水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A-②-㉡은 공유기사인데 백제본기 기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

9 고구려본기 및 백제본기를 포함하여 『삼국사기』의 기본 원전은 『구삼국사』로 보는 게 통설이다. 물론 필자는 이 통설에 이견을 갖고 있다. 앞서 필자의 추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A-①-㉡ 기사를 통해 『구삼국사』와는 또다른 삼국사의 편린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사서에서 고구려 왕호는 분주계 왕호를 저본으로 하고 있는 사서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다. 다만 고구려본기에는 10월 및 고국원왕의 사망 일자 23일이 밝혀져 있다. 물론 백제본기 기사의 저본 자료에 고국원왕의 사망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기 편찬자가 그 사망 월일 기사를 고구려본기에만 기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10월이 백제본기 기사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10월 23일이라는 고국원왕의 사망 일자는 고구려 측 전승 자료에 의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왕의 사망 월일에 대한 고구려 측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A-② 고구려본기 기사가 이 고구려 측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전체적으로 기사의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백제본기 기사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고국원왕의 사망일만 추가된 문장으로 추정된다.

A-③ 기사는 백제본기의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백제본기 기사를 원전자료로 볼 수 있다. A-④⑤의 경우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A-⑥의 경우는 고구려본기에 "王發兵"이라는 문장이 더 있는 고구려본기 기사가 좀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장이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저되지만 일단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일 가능성도 고려하고자 한다. A-⑦의 경우 백제본기의 '南鄙'보다 고구려본기의 '南鄙部落'이 약간 추가 정보가 있는 셈이지만, 이 역시 '부락'을 의미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A-⑥ 기사와 유사한 면이다. 마찬가지로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일 가능성을 고려한다. A-⑧의 경우 양국 관계 기사는 동일하다. 다만 백제본기에서 이어지는 "王拜嘉謨爲兵官佐平" 기사를 고려하면 백제본기가 원전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A-④⑤는 기사가 동일하여 판단이 어렵고, A-⑥⑦의 경우도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일 가능성을 열어두되 원전 계통에 대한 결정을 잠시 유보해둔다. ⑧의 경우는 양 본기의 기사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기사의 구성에서 백제본기 기사가 원전일 가능성이 높다.

A-⑨는 양 본기 모두 ㉠ 7월 기사와 ㉡ 10월 기사 두 기사가 있다. 기사 내용의 상세함으로 보아 ㉠ 기사의 경우는 백제본기가 원전 기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 관미성 관련 기사는 고구려본기 기사가 더 구체적이다. 그러면 과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자적인 고구려 측 자료가 전해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어지는 A-⑩에서 백제본기에 관미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A-⑨-㉡ 백제본기에서 단순히 관미성 함락 기사만 전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반대로 A-⑨-㉡ 고구려본기에서는 관미성 전투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된 것에 반하여 A-⑩에서는 성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관미성 기사는 백제 측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사료 A 공유 기사 중에서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소수인데, A-⑨-㉡ 관미성 기사처럼 내용이 풍부한 고구려 측 자료가 어떤 형태로 전해졌을지 추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⑨-㉡ 관미성 기사는 비록 고구려본기 기사가 상세하더라도 그 원전 기사는 백제 측 자료일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지는 않겠다. 공유기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 다시 판단하고자 한다.

A-⑩ 기사의 경우 백제본기에는 백제 장군 무(武)라는 인명, 관미성, 석현성이라는 지명, 관미성에서의 전투 양상 등 매우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와 달리 고구려본기에서는 백제가 남쪽 변경을 침략하여 장수를 보내어 막게 했다는 매우 간략한 내용이다. 관미성이라는 성명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A-⑩의 경우 고구려본기 기사가 과연 백제본기 기사를 축약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백제본기의 풍부한 내용을 간략화하여 고구려본기의 공유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A-①②의 공유기사와 비교해보자. A-① 백제본기에는 고구려왕 斯由, 고구려군 보기병 2만 명, 전투지명 치양, 백제군의 승리 및 고구려군 사상자 5,000여 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고구려본기에는 이 중 고구려군 사 2만 명, 치양전투의 패전 등을 기술하고 있다. 최소한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A-②-㉡의 경우에도 백제왕의 친정, 백제군 3만 명, 평양성 전투, 고국원왕의 사망 등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다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0월 23일이라는 고국원왕의 사망일이 고구려본기 기사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백제본기의 원전 자료에 기초하여 공유기사를 작성할 경우에도 핵심 정보는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이와 비교해보면 A-⑩의 고구려본기 기사는 백제본기 기사의 핵심 정보를 모두 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본기 기사를 축약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A-⑩의 고구려본기 기사는 고구려 측 자료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핵심 정보 없이 내용이 단순하여 이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고구려 측 자료가 어떤 형태일지 짐작하기 어렵다.

A-⑪의 경우를 보면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가 다른 원전 자료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광개토왕이 정예기병 5,000명을 거느렸다는 등 고구려본기 기사가 상세하지만, 백제본기에만 水谷城이란 지명이 있다. 물론 이 고구려본기 기사도 A-⑨ 관미성 전투 기사 사례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관미성 기사와는 달리 백제 측 자료일 개연성을 높여주는 다른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일단 고구려본기 기사는 고구려 측 전승 자료에 의한 것으로, 백제본기 기사는 백제 측 전승 자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A-⑫의 경우에는 백제본기 기사에는 좌장 진무(眞武)이란 인명, 패수(浿水)라는 지명, 고구려왕 담덕의 친정과 고구려군사 7,000명, 백제군의 패퇴와 8,000명의 전사라는 정보가 있다. 고구려본기 기사에는 고구려왕의 친정, 패수 전투의 승리, 백제군 8,000여 급 노획이라는 정보가 있다. 다만 "死者八千人"(백제본기)과 "虜獲八千餘級"(고구려본기)이라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 서로 충돌되는 정보가 없기에 다소 문장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이 공유기사는 백제본기 기사를 원전자료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 본기의 공유기사 중에서 백제본기 기사를 원전으로 하는 기사임이 거의 분명한 기사는 A-①②③⑨-㉠⑫이다. 반대로 고구려본기 기사를 원전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는 A-⑨-㉡ 하나뿐이다. 그리고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 각각 독자적인 별도 원전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사는 A-②-㉡ 평양성 전투기사, A-⑩⑪ 기사이다. A-⑩⑪ 기사에서 고구려본기 기사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전승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두 기사 모두 광개토왕대의 기사라는 점에서, 광개토왕대의 대백제 관련 기사에서 고구려 측의 독자적인 자료가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없다. 이런 맥락에서 A-⑨-㉡의 관미성 전투 기사도 고구려본기 기사를 일단 고구려 측 원전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A-④⑤⑥⑦⑧ 기사는 내용과 상세함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서 어느 본기를 원전 자료로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중 A-⑥⑦은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 자료인 개연성이 있지만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판단을 유보해두었다. 이와 같이 공유기사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고구려 측의 전승 자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상황이므로 양 본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인 경우 백제본기를 원전으로 하여 작성된 공유기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⑧ 기사를 보면 백제의 달솔(達率) 진가모(眞嘉謨)라는 보다 구체적인 인명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 진가모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 측 전승 자료에 의거하여 양 본기의 동일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명의 경우 두 본기 사이에 도곤성(都坤城)과 도압성(都押城)이라는 표기 차이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저본 자료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의 문장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곤란하다. 동일한 저본에 의거하였으나 어느 한쪽 본기의 기사가 자료 편찬 과정에서 나타난 오기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의 다른 지명 중에 '押' 계통이 많은 점을 근거로 도압성이 옳으며, 다른 지명인 팔곤송(八坤城)도 팔압성(八押城)의 오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10] 하지만 저본 자료가 백제 측 자료라는 점, 그리고 백제본기에 팔곤성이란 지명도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백제본기의 표기인 도곤성이 옳을 가능성이 크다. A-⑧ 기사가 백제본기를 원전으로 작성되었고, 동시에 고구려본기보다는 백제본기 기사를 원전으로 하는 기사가 다수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원전 계통을 판단하기 어려운 4건의 기사 역시 백제 측 저본 자료에 의거한 기사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삼국사기』 본기에서 369~395년 기간에 양국 관계를 전해주

10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1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총 15건의 공유기사 상당수가 백제 측 원전 자료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료 A 기사를 이해할 때에는 백제 측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 사료 A에서 나오는 주된 접전 지명인 雉壤, 水谷城, 浿河, 浿水, 都坤城(都押城), 石峴城, 靑木嶺, 關彌城 등의 지명 역시 백제계 지명임이 분명하며, 이들 전투 지점이 갖는 의미도 역시 백제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기와 지리지 유명미상지분조의 비교를 통해 원전 기사의 계통성을 나누어볼 수 있는 기사가 A-⑨와 A-⑩ 기사이다. 지리지 삼국유명미상지분조의 백제 지명 기술 순서를 보면 八坤城, 關彌城, 石峴城, 雙峴城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지리지 삼국유명미상지분조를 작성하는 저본 자료는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아니라 『구삼국사』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즉, 『구삼국사』의 백제 기사에서 초출 순서대로 작성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본기에서 지명 기술 순서를 보면 사료 A-⑨-㉠㉡에서는 석현성이 관미성보다 앞서 나온다. 따라서 관미성, 석현성이라는 기술 순서는 사료 A-⑩에 의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백제본기 기사에서 기년상 앞서는 사료 A-⑨ 기사는 적어도 삼국유명미상지분조를 작성하는 저본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즉, 관미성, 석현성이라는 지명을 포함하는 백제본기의 두 기사 A-⑨와 A-⑩은 두 계통의 저본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A-⑨ 기사는 백제본기의 저본 자료 중 주 자료인 『구삼국사』에는 없었고, 보조 저본 자료에 의해 보충된 기사이다. 물론 A-⑨ 기사가 전제되어야 A-⑩ 기사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이 두 기사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A-⑨에는 광개토왕이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는데, A-⑩에서는 석현성 등 5성을 회복하려고 출정했다는 내용은 당시의 전투 정황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성과 5성으로 기록상의 차이를 보이는, 계통이 다른 자료에 의거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앞서 A-②-㉠ 기사의 경우에도 고구려본기에 공유기사가 작성되지 않았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유로, 공유기사 작성 시에는 빠져 있다가 추후에 백제본기에 추가된 기사로 파악하고, 이 기사의 저본 자료는 보조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A-⑨ 기사가 『구삼국사』에는 없었고, 보조 저본 자료에 의해 보충된 기사라는 점과 서로 상통한다. 물론 이 두 기사가 같은 저본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요한 점은 주로 백제 측 전승 자료에 의해 작성된 다수의 백제-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도 동일한 저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자료와 보조 자료로 나뉘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기사가 내용상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자료 계통이 다르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사료 비판을 통해 역사상을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②-㉠의 패하(浿河)와 A-⑫의 패수(浿水)라는 두 지명의 비정 문제이다. 이 두 지명을 동일 지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표기의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두 지명의 지리 비정과 관련해서는 원전 계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패하'라는 지명과 관련해서 다음 두 기사가 주목된다. 즉, 온조왕대의 강역 획정 기사와 순수 기사이다.[11]

① 온조왕 13년 8월, 遂畫定疆埸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② 온조왕 38년 춘2월, 王巡撫 東至走壤 北至浿河 五旬而返

백제본기에서 '패하'라는 지명 표기는 사료 A-② 근초고왕 26년조 기사와 위 사료 온조왕대 기사 3개뿐이다. '패하'라는 지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패하 전투 기사와 온조왕대의 강역획정 기사 및 순무 기사는 전거 자료가 동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근초고왕 26년조의 패하 전투 기사는 이어지는 평양성 공격 기사와는 달리 고구려본기에 공유기사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근초고왕 26년 기사라고 하더라도 전거 자료 계통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11 아래 浿河 관련 내용은 임기환, 2013, 「삼국사기 온조왕본기 영역 획정 기사의 성립 시기」, 『역사문화연구』 47, 10~17쪽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전거 자료 계통성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 A-② '패하'와 A-⑫ '패수'가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사료 ① 온조왕 13년조 기사에서는 "東極走壤"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37 지리지4 유명미상지분조에는 '走壤城'으로 되어 있다. 走壤과 走壤城이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틀림없지만, 지명 표기 차이를 고려할 때 유명미상지분조의 원전 자료와 위 사료 ① 온조왕 13년조 기사의 원전 자료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유명미상지분조에 보이는 지명의 배열 순서가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지명 기사의 기년 순서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상지분조의 원전 자료는 백제본기 편찬의 기본 원전 자료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走壤과 함께 기술된 '패하'라는 지명은 백제본기 편찬의 주 저본 자료와는 계통성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즉, '패하'와 '패수'는 이들 지명이 가리키는 강이 동일한 지역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자료의 계통성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12] 따라서 '패하'와 '패수'를 동일 지명으로 간주한 기존 연구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Ⅲ. 고구려본기와 잡지의 비교를 통한 원전 탐색-지리지 사례

고구려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론으로서 고구려본기 기사와 잡지, 열전의 기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Ⅱ장에서도 그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본기와 잡지 기사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의 한 사례로 지리지 고구려조에 실려 있는 고구려 천도와 관련하여 그 변화 과정을 요약한 기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천도(이거, 이도)의 양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지리지 기사와 고구려본기 기사의 차이를 분석하여 여러 천도 기사의 전거 자료의 계통성을 파악하

12 필자는 '浿河'를 재령강이나 대동강으로, '浿水'를 예성강으로 비정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자 한다.[13]

사료 B.

(가) 按通典云 朱蒙以漢建昭二年 自北扶餘東南行 渡普述水 至紇升骨城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①**古記云 朱蒙自扶餘逃難 至卒本** 則紇升骨城·卒本似一處也 … (나) 自朱蒙立都紇升骨城 歷四十年 孺留王二十二年 移都國內城 [②**或云尉那巖城 或云不而城**][14] … 都國內 歷四百二十五年 長壽王十五年 移都平壤 歷一百五十六年 平原王二十八年 移都長安城 歷八十三年 寶臧王二十七年而滅 [③**古人記錄 自始祖朱蒙至寶臧王 歷年丁寧纖悉若此** ④**而或云 故國原王十三年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不可知其然否] … (다) 唐書云 平壤城亦謂長安 而⑤**古記云 自平壤移長安** 則二城同異遠近 則不可知矣 ([ ]는 분주 표시)

먼저 B-(가)의 기사를 분석해보자. (가)는 『통전(通典)』을 인용하여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도착한 곳이 '흘승골성(紇升骨城)'임을 밝히고 있는데,[15] 다시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주몽의 남하지가 졸본(卒本)임을 대교하고, 이를 통해 흘승골성과 졸본이 동일 지역임을 유추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의 찬자가

13 이하 서술은 임기환, 2018, 「고구려 전기 都城 관련 기사의 재검토-기사의 原典계통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5의 관련 내용을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14 이하 고구려본기 등에서 分註의 형태로 기술된 문장을 본 논문에서는 [ ]로 표기한다.

15 A-(가)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通典』의 본래 문장은 다음과 같다. "朱蒙棄夫餘東南走渡普述水 至紇升骨城居焉: (『通典』 권186 東夷下 高麗)". 이를 (가)에 인용된 『통전』기사와 비교하면 다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통전』의 본래 기사 없는 '以漢建昭二年'이라는 기년을 추가하였고, 『통전』의 '夫餘'를 '北扶餘'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지만, 일단 이 글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임기환, 2018, 앞의 글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서』를 대교하여 흘승골성과 졸본을 동일지역으로 파악하는[16] 것과 달리, 지리지 찬자는 『통전』을 대교하여 파악하고 있다. 전거 자료를 선택하는 태도에서 고구려본기 찬자와 지리지 찬자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사서(史書)에 그치지 않고, 국내 고기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다음 지리지 찬자가 인용한 ①古記는 어떤 자료일까? 일단 먼저 이 고기에서 인용한 기사와 가장 유사한 기사를 찾아보자. 『삼국사기』에서 B-(가)-① "朱蒙自扶餘逃難 至卒本" 문장과 가장 유사한 문장은 백제본기 온조왕조의 다음 기사이다.

百濟始祖 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이 두 기사를 비교하면 扶餘/北扶餘, 卒本/卒本扶餘라는 차이가 있기에 동일한 기사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 지리지 찬자가 『통전(通典)』을 인용할 때에도 다소 문구의 변형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온조왕조 기사를 인용하면서 개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B-① 고기가 현재 『삼국사기』 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전혀 다른 전거에 의거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삼국사기』의 저본 자료가 아닌 고기를 굳이 인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즉 B-① 고기는 『삼국사기』 편찬에 이용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 온조왕조 기사 외에는 달리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다.

다음 B-(나) 기사를 검토하자. (나)에서는 주몽의 흘승골성(紇升骨城) 건도에서 유류왕(孺留王)의 국내성(國內城) 이도, 평원왕(平原王)의 장안성(長安城) 이도까지 고구려 전시기에 걸쳐 3차례에 걸친 이도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 도읍 기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매우 상세한 내

16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즉위년조, "至卒本川 [魏書云 至紇升骨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용을 갖는 저본 자료에 의거한 기술임이 분명하다.[17] B-③ "古人記錄 自始祖朱蒙至寶臧王 歷年丁寧纖悉若此"라고 지리지 찬자가 언급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고인기록(古人記錄)'은 어느 특정 고기나 사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B-①의 고기와 B-③의 고인기록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동일한 자료는 아니다.

그러면 이 '고인기록'은 과연 어떤 자료일까? 일단 B-(나)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파악해보자. 첫째, 시조 주몽부터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고구려사 전체를 기술하고 있는 사서이다. 둘째, 세 차례에 걸친 이도 사실을 각 왕의 기년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몽왕부터 보장왕까지 상세한 기년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편년체의 사서임을 뜻한다. 그런데 A-(나)의 "고인기록"이 고구려본기의 주된 저본 자료와는 다른 자료였음은 평양성의 역년(歷年) 기록에서도 차이가 있음에서 확인된다. 장수왕 15년(427)의 "移都平壤", 평원왕 28년(586) "移都長安城"이란 기록은 고구려본기 기사와 문장도 동일하다. 그런데 A-(나)에서는 평양성의 역년이 156년이라고 하였는데, 고구려본기와 연표의 기년으로는 160년으로 계산된다.[18] 그리고 보장왕 27년(668) 멸망 때까지 장안성의 역년이 이 83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구려본기 기년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장수왕에서 평원왕 사이의 왕대 기년에서 4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고인기록'이 고구려본기의 주 저본 자료와 다른 자료이다.

이 점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B-(나)에서 주몽이 도읍한 곳을 '흘승골성'이라고 한 점이다. 그런데 B-(가)에서 『통전』을 통해 흘승골성을, 고기를 통해 졸본을 파악하고 서로 대교한 것을 보면, 지리지 찬자가 본 고기류 중에는 흘승골성으로 기록한 기사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고인기록에는 졸본으로 기록되었을 것인데, 지리지 찬자가 『통전』을 기준으로 흘

17 이정빈, 1987, 「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 『한국고대사연구』 87, 79쪽.
18 이정빈, 1987, 위의 글, 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승골성로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리지 찬자가 왜 바꾸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둘째, B-(나)에서 '유류왕(孺留王)'이라고 표기한 점도 주목된다. 유류왕이라는 왕호는 고구려본기 유리왕조의 "琉璃明王立 諱類利 或云孺留"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분주계 왕호 혹은 이름이기 때문에 유리명왕(琉璃明王)을 왕호로 하는 고구려본기 혹은 고구려본기의 주 저본 자료와는 다르다고 본다.[19] 따라서 고구려본기 기사에서 "琉璃明王 立 諱類利 或云孺留"라고 기술하게 되는 전거는 '유류왕'이라는 왕호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지 B-(나)의 전거 자료와 같거나 혹은 같은 계통의 자료임을 추정할 수 있다.[20] 그러면 이 고인기록에서는 시조는 주몽으로, 2대왕은 유류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왕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유류왕이라는 분주계 휘와 통하는 왕호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분주계 왕호를 사용한 사서로 추정된다. 하나의 사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구려본기에 본문계 왕호와 분주계 왕호로 뚜렷하게 나뉘어 기록된 것을 보면, 분주계 왕호를 계열로 하는 사서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B-③ 고인기록은 "自始祖朱蒙至寶臧王 歷年丁寧纖悉若此"라는 기록과 같이 시조 주몽에서 보장왕까지 하나의 체계 속에서 많은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사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주계 왕호를 포함하는 사서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고구려본기에서 분주계 왕호를 기록할 수 있는 저본 자료라고 판단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분주계 왕호를 사용한 사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조는 추모왕이 아니라 주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검토를 종합하면 이 '고인기록'은 주몽부터 보장왕까지의 상세한 기년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편년체의 사서로서, 보장왕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

19 노태돈, 2012,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10쪽.

20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조 분주에 기술된 이른바 비류시조 설화에서도 "朱蒙在扶餘所生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라고 하여 '孺留'라고 기술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백제본기 비류설화는 유리왕의 남하 설화만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지 B-(나)의 전거 자료와 서로 공유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려 시기에 작성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고구려 역사를 정리하여 편찬된 사서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구려본기의 주 저본 자료와 다른 또하나의 편년체 고구려 역사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인기록'이 분주계 왕호를 포함하며, 고구려 역사 전시기를 기록한 사서라고 한다면, 고구려본기의 주 저본자료는 아니고 보조 저본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고구려본기 찬자와 지리지 찬자 사이에 몇몇 지명에 대한 이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국내 천도 기사이다. 위 지리지 A-(나)에는 "孺留王二十二年 移都國內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유리왕 22년의 천도기사는 "冬十月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이라 하였기 때문에, 국내성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국내성'란 기사는 고구려본기에서 고기류를 저본 자료로 하는 기사에 한정하여 본다면, 고국원왕 2년 춘(春)2월조 기사에 1회만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된다. 게다가 국내성에 대한 이칭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A-②"國內城[或云尉那巖城 或云不而城]"이라고 하였는데,[21] 고구려본기에서는 "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 혹은 "國內尉那巖"이라고 하여, 위나암성을 이칭이라기보다는 성곽 명칭 혹은 국내 지명과 연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고구려본기의 기사와 지리지 고인기록 사이에는 자료 계통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목되는 기사는 B-④ "或云 故國原王十三年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이라는 기사이다. 지리지 찬자는 또 다른 고기 자료를 인용하여 고국원왕 13년의 평양동황성(平壤東黃城)으로의 이거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 기사는 고구려본기의 해당 기사와 문장이 동일하다. 지리지 찬자가 참고한 고기와 고구려본기의 해당 기사의 저본 자료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리지 찬자는 이에 대해 "不可知其然否"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평양동황성으로 이거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평양동황성이 서경의

21 같은 지리지에 수록된 總章 2년 李勣 奏稱 문서에 보이는 鴨淥水以北 已降城 중 '國內州[一云不耐 或云尉那]'라는 기사와 동일한 입장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쪽 목멱산중(木覓山中)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뜻인지 불분명하지만, 앞의 B-(나) 이도 과정을 정리하면서 고국원왕 때의 평양동황성으로 이거 사실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 이 사실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지리지 찬자가 고구려의 이도 과정을 정리한 B-(나)를 구성한 고인기록에는 고국원왕 때의 평양동황성으로 이거 기사가 없었음은 분명하다.[22]

그러면 B-(나)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구려본기 산상왕 13년조에 보이는 환도(丸都)로의 이도를 전해주는 "冬十月 王移都於丸都" 기사는 고인기록(古人記錄)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이 기사 역시 포함되지 않았음은 지리지 찬자의 환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즉, 같은 지리지에 수록된 총장 2년 이적(李勣) 주칭한 문서(이하 이적 문서)에 보이는 "鴨淥水以北 未降十一城" 중에 "安市城 舊安寸忽[或云丸都城]"이라는 기사가 있다. 환도성을 안시성의 이칭으로 이해하는 지리지 찬자의 인식을 통해 지리지 작성에 참고한 A-(나)를 구성하는 저본 자료에는 도성으로서 환도성에 대한 기사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산상왕 13년조의 "王移都於丸都" 기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천왕 21년조의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라는 이거 기사는 포함하고 있었을까? 뚜렷한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산상왕 13년조의 환도 이도 기사 및 고국원왕 때의 평양동황성 이거 기사가 없었음을 볼 때, 동천왕 21년의 이거 기사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위 지리지 기사 B-(나) 기사를 통해 고구려본기를 편찬하는데 저본 자료로 활용된 고기류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지리지 찬자가 고구려의 이도 과정을 정리한 전거 자료로서 '孺留王'이라는 왕호로 기술된 고기, 즉 고인기록이다. 둘째, B-④ 고국원왕 13년에 평양동황성으로 이거 기사를 포함하

22 그런데 지리지의 찬자가 A-④의 기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나)의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고기 자료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해당 고기에서 고구려의 천도를 현 지리지 문장과 같이 요약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는 고기이다. 그런데 지리지 찬자가 평양동황성으로 이거 기사 외에 따로 산상왕 13년 환도성 이도, 동천왕 21년의 평양성 이거 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④의 고기에는 이 두 기사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고구려본기의 이 두 기사의 저본 자료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인기록에도 이 두 기사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산상왕 13년 환도성 이도, 동천왕 21년의 평양성 이거 기사는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고구려본기 편찬 시에 또 다른 저본 자료에서 추가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여기서 하나 혹은 2개의 고기가 저본 자료가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다) 기사를 보면, B-⑤ 고기에서는 평양에서 장안으로 이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음에 반하여 『당서(唐書)』에서 평양성과 장안을 동일한 곳으로 보고 있기에 지리지 찬자는 평양성과 장안성의 동일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여기서 B-(나) 기사의 저본 자료가 B-⑤ 고기와 동일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평양 관련 기사들, 즉 B-(나)에서 언급한 장수왕 15년조 평양 천도 기사, 별도의 고기에 의거한 B-④ 고국원왕 13년조 평양동황성 기사, 그리고 지리지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또 다른 고기 자료에 의해 고구려본기에 보입된 동천왕 21년조 평양성 축조 기사는 각각 서로 다른 저본 자료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본기 및 지리지 편찬에 최소한 4종 혹은 5종의 저본 자료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B 기사에서 고기류의 계통성을 추정하면, ③과 ⑤는 같은 고기이고, ①과 ④는 이와 다른 고기이다. 그리고 ①과 ④가 동일한 고기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리지 서문에 해당하는 사료 B를 통하여 고구려 도읍과 관련된 저본 자료가 여러 계통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 왕도 및 천도(移都, 移居)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관련 기사가 갖는 자료 계통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따라서 고구려본기에 대한 사료 비판 과정에서 기사 원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연구방법론이라는 논거가 여기에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고 여기서 B-(나) 국내성과 관련하여 고구려본기의 국내 도성과 관련된 기사를 좀 더 검토해보자.

① 고국원왕 4년, 秋8月 增築平壤城

② 고국원왕 12년, 春2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秋8月 移居丸都城

③ 고국원왕 13년, 秋7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위의 세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국원왕 대에는 고구려 전기에 고구려본기에서 도읍지로 등장하는 지명, 즉 평양성, 환도성, 국내성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별도의 고기 자료에 의거한 고국원왕 13년 평양동황성 기사까지 더하면 모두 4개의 도읍 명칭이 등장한다.

그런데 위 기사에 따르면 모두 국내 지역으로 비정되는 3개의 도성 명칭이 축성과 과련하여 서로 다른 상황을 전하고 있다. 즉, "增築平壤城", "修葺丸都城", "築國內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내성 축성은 이 고국원왕 12년 기사가 처음이다. 유리왕 천도기사에서 '국내(國內)'라는 지명이 언급된 이후 위 고국원왕 12년조의 "築國內城" 기사 사이에는 도읍지로서 '國內(城)'이란 지명은 나타나지 않고 환도가 도읍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측 사서에서도 국내성이란 지명은 『주서(周書)』에서 처음 등장하며, 그 이전 사서에서는 환도를 고구려 도성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된다.

그러면 위 세 가지 도성 기사와 연결되는 고구려본기 내에서 선행하는 기사는 다음 세 기사이다.

④ 산상왕 2년: 春2月 築丸都城

⑤ 산상왕 13년: 冬10月 王移都於丸都

⑥ 동천왕 21년: 春2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⑥ 동천왕 21년조 평양성 이거 기사에서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이란 기록을 부가하고 있는데, 평양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는 ③ 고국원왕 13년조 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동천왕의 이거지인 평양성과 고국원왕대의 평양동황성의 양 기사 역시 자료 계통상으로 서로 연결지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⑥ 동천왕 21년의 "築平壤城" 기사는 ① 고국원왕 4년의 "增築平壤城" 기사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④ 산상왕 2년의 "築丸都城" 기사는 ② 고국원왕 12년의 "修葺丸都城" 기사와 내용상 연결되고 있다. 고국원왕 12년의 "築國內城"이라는 기사는 국내성을 초축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② 고국원왕 12년의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기사는 국내성과 환도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만, 유리왕 22년에 국내로 천도하여 축성한 위나암성과 국내성의 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즉, 고구려본기 기사 내에서는 유리왕 22년에 축성된 위나암성과 고국원왕 12년에 축성된 국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동천왕 21년조 "築平壤城" 기사의 평양성을 현 평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연결되는 고국원왕 4년조 "增築平壤城" 기사의 평양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고국원왕 4년의 '增築平壤城'의 평양성은 현 평양성으로 보고, 고국원왕 12년의 '築國內城'을 기존 평지성, 즉 평양성을 증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동천왕대의 평양성과 연결되는 고국원왕 4년조의 '增築平壤城' 기사를 부정하고, 이를 고국원왕 12년의 '築國內城' 기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추론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본기 기사들 사이의 내적 연관 관계를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관련 기사를 해석하면 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서로 접점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천왕 21년에 축조된 평양성을 현 집안시의 평지성, 즉 국내성의 초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하였듯이 고국원왕 4년에 증축한 평양성이 바로 동천왕대 축조한 동일한 평양성이기 때문에 고국원왕 12년에 초축한 국내성과 동일한 성일 가능성은 적어도 고구려본기상으로는 없다. 다시 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서 동천왕 때의 평양성을 현 집안시내 평지성, 즉 국내성으로 비정되는 성과 동일하게 파악하려면, 고국원왕 12년의 국내성 축성 기사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국원왕 12년에 수즙(修葺)한 환도성과 초축한 국내성이 동일한 성일 가능성도 없다. 위 기사에 나오는 각 도성 명칭은 고구려본기상으로는 모두 별개의 지명으로 이해된다. 이는 고국원왕대의 기사들이 여러 계통의 기사들이 통합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본기의 기사들이 갖는 원전 계통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상의 구성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중국 사서 출전 기사의 원전 탐색

고구려본기의 편찬에는 본문과 분주 기사에 걸쳐 많은 중국 측 사서(史書)가 전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3] 사서명(史書名)이 밝혀져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본문 기사로 찬술된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중국 측 사서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사서를 전거로 하는 기사는 다시 두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 사서명을 밝힌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사서명을 밝히지 않으나 현존하는 중국 사서와 대교를 통해 중국 사서의 기사를 전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이다. 사서명이 밝혀져 있는 자료는 『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위서(魏書)」·『양서(梁書)』·『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북사(北史)』·『자치통감(資治通鑑)』·『괄지지(括地志)』 등으로, 주로 분주(分註)에서 고구려본기 본문 기사를 대교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삼국사기』 편찬 때 혹은 그 뒤에 기술되었다.

그리고 『위서』를 제외하고는 중국 사서명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구려본기

23 이하의 서술은 임기환, 2006, 앞의 글에서 관련 내용을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문 기사에도 중국 사서에서 인용한 기사가 다수이다. 그중 많이 인용된 중국 사서는 『후한서』·『자치통감』·『위서』 등이다. 특히 『자치통감』이란 역사서의 도입이 새로운 삼국사로서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이다.[24] 이러한 중국 사서 기사를 인용할 경우 문장의 주체와 객체인 중국 왕조와 고구려("我")를 뒤바꾸는 개서(改書)가 있는데, 고구려본기의 기사로 편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개서이다. 그리고 긴 문장의 경우에는 문장을 축약하기도 하였는데, 문장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장의 일부를 탈락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런 기사는 매우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겠다.

한편, 동천왕 이전의 기사에서 『한서』, 『후한서』에서 인용한 기사 중에는 『삼국사기』 편찬 시에 편찬되었다기보다는 『삼국사기』 편찬 이전 모종의 사서를 편찬할 때 『한서』, 『후한서』의 기사를 저본 자료로 채택하였고, 이 모종의 사서를 『삼국사기』 편찬 시에 저본 자료로 삼은 기사의 사례는 이미 확인된 바이다.[25]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기사이다.

사료 C

① 蠶友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 詣樂浪投漢 [後漢書云 大加戴升等萬餘口] (고구려본기 민중왕 4년 10월조)

② (建武) 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詣 樂浪內屬.(『후한서』 고구려전)

사료 C ① 기사의 본문과 ② 『후한서』기사는 같은 내용으로서, ① 기사가 ② 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약간의 글자 이동(異同)이 있으며, 이에 대해 ① 기사의 분주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 분주는 고구려본기

24 田中俊明, 1982, 앞의 글, 76쪽.

25 田中俊明, 1982, 위의 글, 75쪽: 임기환, 2006,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찬자가 작성하였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고구려본기 편찬자는 C-① 기사를 『후한서』 기사에 의거하여 대교하면서도 ①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본래 저본 자료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는 점이다. 이 저본 자료가 아마도 고구려본기를 편찬하는 주 저본 자료일 것이다. 둘째, 고구려본기의 기본 저본자료에는 『후한서』 등의 중국 측 기사가 인용되어 있었다. 현재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사례를 보면 주어를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면 변개가 거의 없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음 신대왕 4년(168), 5년조 기사도 주목된다.

C-③ 신대왕 4年, 漢玄菟郡太守耿臨來侵 殺我軍數百人 王自降乞屬玄菟

C-④ 신대왕 5년, 王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將兵助玄菟太守公孫度 討富山賊

위 신대왕 4년조 기사 ③은 『삼국지』·『후한서』 등에는 이듬해인 169년(건녕 2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1년의 오차를, 중국 사서와는 다른 독자의 국내 전승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C-③ 4년조 기사는 『후한서』 고구려전에 의거하였다.[26] 다음 5년조 기사는 『후한서』에는 없고,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관련 기사가 있지만 기년이 밝혀져 있지 않다.[27] 따라서 이 기사는 『책부원구(冊府元龜)』 권973 건녕 2년조(169) 기사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28] 그런데 『책부원구』의 편찬 시기(1013, 고려 현종 4)와 수용 시기(11세기

26 『후한서』 고구려전, "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菟."

27 『삼국지』 고구려전, "靈帝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熹平中, 伯固乞屬玄菟.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 破之."

28 『冊府元龜』 권197, "是年(建寧二年) 高句麗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玄菟太守公孫度擊富山賊討平之." 이 『冊府元龜』의 기사 기년은 『삼국지』 기사에 의하면 명백히 오류이다. 아마도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를 오독한 것으로 짐작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말)를 고려하면, 이 5년조 기사와 4년조 기사는 그 인용, 편찬 시기를 달리하였을 본다. 즉, 신대왕 4년 기사가 본래 인용된 중국 사서와 1년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것도 4년조와 5년조가 시기를 달리하며 인용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삼국사기』 편찬 시에 5년조 기사를 새로 보입하면서, 앞의 기사와 년대가 중복되자, "玄菟郡太守耿臨來侵~" 기사를 1년 앞으로 소급시켜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권45 명림답부전(明臨荅夫傳)과 고구려본기 신대왕 8년조 기사를 비교해보자.

C-⑤ … 漢玄菟郡太守耿臨 發大兵欲攻我 王問羣臣 戰守孰便 衆議曰 …" (明臨荅夫傳)

C-⑥ "冬十一月 漢以大兵嚮我 王問羣臣 戰守孰便 衆議曰 …" (『삼국사기』 신대왕 8년조)

고구려본기 신대왕 8년조 기사와 명림답부전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앞부분의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명림답부전에는 "漢玄菟郡太守耿臨"의 존재가 추가되어 있다. 현토태수(玄菟太守) 경림(耿臨)의 침입은 고구려본기에는 신대왕 4년 기사(③)로 되어 있는데, 왜 명림답부전에서는 이러한 오독이 일어난 것일까? 고구려인 열전의 편찬은 고구려본기의 편찬이 완료된 후 본기에 근거하여 편찬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구려본기 편찬에 사용된 동일한 자료를 저본으로 편찬하였을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위 ④ 신대왕 5년조 기사는 『책부원구』에서야 그 기년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구려본기 편찬자들에 의해 보입되었다. 즉, 고구려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에는 신대왕 5년조 기사가 없었으며, 그렇다면 그 저본 자료에는 4년조 기사에 이어 8년조 기사가 연속되어 기술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자료를 저본으로 삼았을 열전의 편찬자는 4년조에서 현도태수로 등장하는 경림의 존재를 의식하고, 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은 8년조 기사의 '漢'에 "玄菟郡太守耿臨"이란 문장을 보입하여 명림답부전을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구려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에 이미 『후한서』에 의거한 기사 보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본기 편찬의 여러 저본 자료는 중국 사서를 전거로 하는 이들 기사를 과연 언제 인용하였을까? 개중에는 혹시 고구려시기에 작성된 것은 없었을까? 중국 사서의 기록 중 고구려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초기 여러 왕의 휘(諱)이다. 먼저 중국 사서에 전해지는 휘와 고구려본기의 휘 자료를 비교 검토해보자.[29] 대조대왕(大祖大王), 차대왕(次大王), 신대왕(新大王)의 본문 휘인 궁(宮), 수성(遂城), 백고(伯固)는 『삼국지』 혹은 『후한서』의 기록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대왕계 3왕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다.[30] 다음 고국천왕의 분주 휘인 이이모(伊夷謨) 및 산상왕의 분주 휘인 위궁(位宮)인데, 이 두 휘는 해당되는 왕의 대응에서 『삼국지』의 내용과 다르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전하는 발기(拔奇)와 이이모(伊夷謨)의 왕위계승 분쟁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고구려 국내 전승 자료에 의해 산상왕의 즉위 시에 고국천왕의 아우인 발기(發岐)와 연우(延優)의 분쟁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다.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삼국지』 기록대로라면 이이모는 산상왕의 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고국천왕의 휘로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지』에는 관구검의 침입이 위궁 때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고구려 국내 전승 자료에는 동천왕 때 관구검의 침공 기사가 기술되고 있다.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삼국지』 기술에 따르면 위궁은 동천왕의 휘가 되어야 하는데, 고구려본기에는 산상왕의 휘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왕계 상에서 1대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산상왕=이이모, 동천왕=위궁으로 수정할 때 『삼국지』 기사와 일치하게 된다.

---

29 아래의 서술은 임기환, 2024, 「고구려본기의 중국 史書 인용 양상과 초기 王系 기사」, 『사학지』 65, 112~119쪽의 서술을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30 3大王의 왕계에 대한 기왕의 논의 및 3대왕의 왕계가 후대에 만들어져 가상된 것이 아님에 대해서는 노태돈의 자세한 논증이 참고된다. 盧泰敦, 1994 「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91~99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내 전승 자료와 중국 측 사서 사이에 왕의 휘 혹은 왕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양자를 어느 시점에 대응시킬 때, 그 대응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 양 자료를 모두 살펴본 고구려본기 편찬자의 입장이 유의되는데, 동천왕 20년조 분주에 "通鑑以, 得來諫王, 爲王位宮時事 誤也"라고 하였다. 즉, 고구려본기 편찬자 중 분주 작성자는 『자치통감』에서 관구검 침입 시의 고구려 왕이 위궁(位宮)이라고 기술한 점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위궁이 산상왕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확신은 국내 저본 자료에 의거하였다.

고구려본기에서는 이이모와 위궁과 관련하여 중국 사서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해보자. 먼저 고국천왕 즉위년조 기사이다.

사료 D

D-① 故國川王 [或云國襄] 諱男武 [或云伊夷謨] 新大王伯固之第二子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漢獻帝建安初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 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上. ([ ]는 분주임)

위 사료에서 "伯固薨 … 還住沸流水"의 기사가 『삼국지』의 해당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다. 보다 정확한 문자 비교를 위해서 『삼국지』의 해당 기사 및 『통전』 권186 변방2 동이 고구려조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자.

D-②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建安(196~220)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삼국지』 고구려전)

D-③ 其後王伯固死, 有二子, 長曰拔奇, 小曰伊夷模. 拔奇不肖, 國人共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伊夷模爲王. 自伯固時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獻帝 建安中(190~220),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都於丸都山下.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古雛加駁位居是也. 伊夷模死, 子位宮立. 以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及長大, 果虐, 殆音凶. 今王生亦能視,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 宮有勇力, 便鞍馬. (『통전』 고구려조)

헌제(獻帝), 소노가(消奴加), 공손강(公孫康)이란 문장 표현에서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즉위년조 본문 기사(D-①)는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D-②)보다는 『통전』 고구려조 기사(D-③)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31] 그렇다면 이 기사의 인용은 『통전』 편찬인 801년 이후가 될 터이다. 이를 전제로 그 인용 과정을 추정해보자. 먼저 유의할 점은 '伊夷謨'의 표기에서 고구려본기의 분주에는 '謨'인데, 『삼국지』나 『통전』의 기사에는 '模'라는 점이다. 즉, 고구려본기의 위 문장은 『통전』의 해당 기사를 인용하면서도 굳이 '伊夷模'를 '伊夷謨'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이는 앞 문장인 "武 或云伊夷謨"라는 분주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서(改書)한 것으로 보인다.[32] 물론 『통전』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분주와 위 문장의 '伊夷謨'를 동시에 개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통전』으로부터 위 문장을 인용할 때 이미 남무(男武)를 '伊夷謨'로 표기한 어떤 저본 자료가 있었으며, 그 저본 자료에 근거하여 『통전』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伊夷謨'로 개서하였다고 추정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정리된다. (1단계) 고국천왕의 이름을

31 신동하, 1995b, 앞의 글, 50쪽.
『삼국지』에 보이는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문장이 『通典』 및 고구려본기에 없다는 점에서도 고구려본기 기사가 『통전』 기사에 의거하였음을 시사한다.

32 신동하, 1995b, 위의 글, 36쪽 (주)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伊夷模'로 표기한 시기, (2단계) 이 표기에 근거하여 『삼국지』·『통전』 등 기사를 인용하면서, 해당 기사의 '伊夷模'를 '伊夷謨'로 개서한 시기이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일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① 고구려본기 편찬자에 의해 인용되었을 가능성, ② 고구려본기 편찬 시 저본 자료에 이미 인용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상왕 즉위년조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D-④ 山上王 諱延優 [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 魏書云 朱蒙裔孫宮 生而開目能視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 亦生而視人 似曾祖宮 高句麗呼相似爲位 故名位宮云. ([ ]는 분주임)

위 기사에서도 분주인 "一名位宮"과 연관되어 "魏書云" 이하의 문장이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위서』를 인용했다는 위 기사는 정작 『위서』 기사와 다소 다르며, 일부 『삼국지』 기사의 요소도 반영되어 있다.

D-⑤ 至裔孫宮, 生而開目能視, 國人惡之. 及長凶虐, 國以殘破. 宮曾孫位宮 亦生而視人 以其似曾祖宮, 故名爲位宮, 高句麗呼相似爲位. (『위서』 고려전)

D-⑥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是也. 其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其國人惡之, 及長大, 果凶虐, 數寇鈔, 國見殘破. 今王生墮地, 亦能開目視人.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 (『삼국지』 고구려전)

위 세 문장을 비교해보면 고구려본기의 문장(D-④)은 『위서』 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라는 문장은 『삼국지』의 "今句麗王宮是也" "今王"이란 문장 서술을 원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궁과 위궁이 증조=증손 관계라는 정보는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가 유일하고, 『위서』 고려전은 이를 축약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지』 기사와 『위서』 기사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이점을 보면, 『위서』는 궁(宮)을 기준으로 증손인 위궁(位宮)을 언급하고 있지만, 『삼국지』 기사는 위궁을 기준으로 증조인 궁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의 『위서』에서 인용하였다는 기사 D-④는 궁의 증손으로서 위궁, 위궁의 증조로서의 궁의 존재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다만 今王, 즉 위궁을 기준으로 증조인 태조(太祖)를 거론하고 있어, 『삼국지』 기사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D-④의 『위서』 인용 기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문장을 변개하였으며, 그것은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이라는 문장에 맞추어져 있다. 이 기사에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궁=태조대왕 이라는 왕계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太祖'라는 본문계 왕호의 성립 이후에 작성된 문장이라는 점이다. 셋째, 이 인용 문장을 포함하는 저본 자료는 본문계 왕호로 구성된 사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 고구려본기 기사에서 태조대왕의 휘가 궁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만, 위궁, 즉 산상왕이 태조대왕의 증손이라는 점은 혈통상 맞지 않는다. 고구려본기의 왕계상에서 태조대왕은 산상왕의 백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위서』 기사의 인용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도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변형하고 그 변형의 중심이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라는 점에서 이 기사의 작성 시기와 편찬자의 의도에 더욱 궁금증과 의문이 커진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 어쨌든 이러한 문장 인용 방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편찬 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위서』의 인용 시기는 『삼국사기』 편찬 이전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가 된 모종의 사서를 편찬할 때로 추정하고 싶다.

한편, 기사 D-①과 ④는 각각 해당 왕의 즉위년조 기사를 구성한다는 점, 분주에 기록된 휘와 연관되는 중국 사서의 기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원 사서명을 밝혔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 기사의 작성 시기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다만 두 기사의 작성 시기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④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는 산상왕의 분주 휘 "一名位宮"이다. 위궁(位宮)을 산상왕의 휘에 대응시킨 시점과 이이모(伊夷謨)를 고국천왕의 휘에 대응시키는 시점은 아마도 같은 시기일 것이다.[33] 이와 같이 이이모와 위궁을 포함하여 중국 사서의 궁, 수성, 백고의 이름을 고구려의 왕계에 맞추어 대응시킨 시점은 고구려 당대로 짐작된다. 그러나 D-①④ 기사의 작성 시점은 고구려 당대는 아니고 그 이후 통일신라 혹은 고려초로 추정된다. 이는 '태조(太祖)'라는 용례에서 짐작된다. 태조대왕은 국조왕이 바뀐 왕호로서 일반적인 '태조'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태조대왕'이 아니라 '태조'라는 용법은 태조대왕의 왕호가 갖는 의미를 오해해서 사용된 용법으로 아마도 고려초가 아닐까 싶다.

고구려 당대에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를 국내 전승 왕계와 대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짐작한다. 그 시점은 언제일까? 일단 수성의 존재를 고려하면 『후한서』 편찬 이후가 될 것이다. 그 시점을 필자는 신집(新集)의 편찬 때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대왕의 본문 휘가 '백고(伯固)', 분주 휘가 '백구(白句)'인 점이 눈길을 끈다. 白句는 伯固의 이표기라기 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자체의 전승일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측 사서의 왕계와 고구려 국내에 전승 왕계를 대응시킬 때, 그 대응의 기준이 된 것이 백고와 백구였을 것이다. 그런데 백고가 본문 휘로, 백구가 분주 휘로 정리된 것은 宮(대조대왕)·遂成(차대왕)·伯固(신대왕)라는 3왕의 휘를 동시에 정리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국천왕(男武)이나 산상왕(延優)의 경우는 이미 고구려 자체에서 전승되는 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서 전하는 휘가 분주 휘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휘의 대응에서 사건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것은 백고와 백구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사서에 전해지는 5왕의 휘를 국내 전승 왕계에 기계적으로 대

33 왕호 및 諱의 분주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고구려본기 대부분의 분주 기사가 "一云", "或云"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료④ 산상왕 諱의 경우에만 "一名"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점은 산상왕의 휘 기사가 다른 분주 기사와는 다른 방식 혹은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응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국 사서에 전하는 5왕의 휘를 통해 대조대왕~산상왕의 왕계가 새로 정리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4]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고구려 왕계를 『후한서』에 맞추어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 왕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고구려본기 기사를 전거 자료의 출전 계통 국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 사서를 전거로 하는 기사, 둘째, 백제·신라 측 전승 자료에 전거를 둔 공유기사, 셋째, 고구려 독자의 전승 자료에 의거한 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 유형의 기사의 원전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서 전하는 공유기사의 원전 계통을 분석하기 위해 369~395년 기간에 양국 관계를 전해주는 총 13건의 공유기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유기사 상당수가 백제 측 원전 자료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유기사를 분석할 경우에 백제 측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주된 지명 역시 백제계 지명으로서 전투 지점이 갖는 의미도 백제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음 고구려 독자의 전승 자료에 입각한 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론으로서 고구려본기 기사와 잡지, 열전의 기사를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중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 실려 있는 고구려 천도기사 및 고구려본기의 천도 기사를 비교하여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를 추적하였다. 이 지리지 기사와 본기 기사의 차이를 분석하여 여러 천도 기사의 전거 자료의 계통성

34 高寬敏, 1996, 앞의 책, 1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그결과 고구려본기 및 지리지 편찬에 최소한 4종 혹은 5종의 저본 자료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전기에 고구려 본기에서 도읍지로 등장하는 지명, 즉 평양성, 환도성, 국내성에 대한 서로 불일치하는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들 천도 기사가 갖는 자료 계통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임을 해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측 사서에서 인용한 기사를 검토한 결과 고구려본기의 기본 저본자료는 단순히 국내 전승자료로 구성된 사서가 아니고, 특히 동천왕 이전의 기사에서 『한서』, 『후한서』에서 인용한 기사 중에는 『삼국사기』 편찬 시에 편찬되었다기보다는 『삼국사기』 편찬 이전 모종의 사서를 편찬할 때 『한서』, 『후한서』의 기사를 저본 자료로 채택하여 편찬된 사서였다. 이 글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시대에 중국 사서의 기사를 인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태조왕~산상왕 5대왕의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휘 기사이다. 필자는 신집을 편찬할 때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를 국내 전승 왕계와 대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대응의 기준은 신대왕으로 상정하였다. 즉, 신대왕의 본문 휘가 백고(伯固), 분주 휘가 백구(白句)인데, 백구는 고구려 자체의 전승인 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측 사서의 왕계와 고구려 국내에 전승 왕계를 대응시킬 때, 그 대응의 기준이 된 것이 백고와 백구였을 것이다. 그런데 백고가 본문 휘로, 백구가 분주 휘로 정리된 것은 궁(대조대왕)·수성(차대왕)·백고(신대왕)라는 3왕의 휘를 동시에 정리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국천왕(남무)이나 산상왕(연우)의 경우는 이미 고구려 자체에서 전승되는 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서 전하는 휘가 분주 휘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휘의 대응에서 사건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것은 백고와 백구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사서에 전해지는 5왕의 휘를 국내 전승 왕계에 기계적으로 대응시켰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李康來, 1997,『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전덕재, 2018,『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_____, 2021,『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鄭求福 外, 1995,『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高寬敏, 1996,『三國史記の原典的硏究』, 雄山閣.

논문

김태식. 1997,「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사료적 검토」,『역사학보』154.

노태돈, 1994「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_____, 2012,「고구려초기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한국고대사연구』68.

신동하, 1995a,「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분주의 연구」,『동대사학』1.

_____, 1995b,「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여호규, 2012,「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역사와 현실』84.

이강래, 2004,「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분주 재론」,『백산학보』67.

이정빈, 1987,「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한국고대사연구』87.

임기환, 2005,「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백제 관련 기사의 검토」,『漢城百濟史料硏究』, 경기문화재단.

_____, 2006,「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42.

_____, 2013,「삼국사기 온조왕본기 영역 획정 기사의 성립 시기」,『역사문화연구』47.

_____, 2018,「고구려 전기 都城 관련 기사의 재검토-기사의 原典계통을 중심으로」,『역사문화연구』65.

_____, 2024,「고구려본기의 중국 史書 인용 양상과 초기 王系 기사」,『사학지』65,

전덕재, 2016,「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東洋學』 64.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 撰進과 “舊三國史”」, 『朝鮮學報』 83.

_____, 1982 「“三國史記” 中國史書 引用記事의 再檢討」, 『朝鮮學報』 104.

井上秀雄, 1968 「三國史記の原典をもとめて」, 『朝鮮學報』 4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삼국사기』 원전 연구와 고구려사 문헌연구 방법론

임기환

고구려본기 기사를 전거 자료의 출전 계통 국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 사서(史書)를 전거로 하는 기사, 둘째, 백제·신라 측 전승 자료에 전거를 둔 공유 기사, 셋째, 고구려 독자의 전승 자료에 의거한 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세 유형의 기사의 원전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서 전하는 공유기사의 원전 계통을 분석하기 위해 369~395년 기간에 양국 관계를 전해주는 총 13건의 공유기사를 검토한 결과 공유기사 상당수가 백제 측 원전 자료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구려 독자의 전승 자료에 입각한 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론으로서 고구려본기 기사와 잡지, 열전의 기사를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중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 실려 있는 고구려 천도기사 및 고구려본기의 천도 기사를 비교하여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를 추적한 결과 고구려본기 및 지리지 편찬에 최소한 4종 혹은 5종의 저본 자료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전기에 고구려본기에서 도읍지로 등장하는 지명, 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평양성, 환도성, 국내성 기사는 자료 계통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임을 해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측 사서에서 인용한 기사를 검토한 결과 『삼국사기』 편찬 이전 모종의 사서를 편찬할 때 『한서』, 『후한서』의 기사를 저본 자료로 채택하여 편찬된 사서였다. 이 글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시대에 중국 사서의 기사를 인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태조왕~산상왕 5대왕의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諱 기사이다. 필자는 신집을 편찬할 때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를 국내 전승 왕계와 대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대응의 기준은 신대왕으로 상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휘의 대응에서 사건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것은 백고(伯固)와 백구(白句)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사서에 전해지는 5왕의 휘를 국내 전승 왕계에 기계적으로 대응시켰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후한서, 삼국지, 백제본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serch Methodology on Goguryeo History through the Study on the Basic Materials of *Samguksagi*

Lim Gihwan

We've broken down the genealogy of the Goguryeo articles by country of origin.

First, an article based on an article from a Chinese history book, Second, an article based on the Baekje-Bongi(百濟本紀) and Silla-Bongi(新羅本紀), third, Article based on Goguryeo's own writings.

First, we analyzed which of the common articles in Goguryeo-bongi(高句麗本紀) and Baekje-bongi is the original source. A total of 13 common articles were analyzed that con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369 to 39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that most of the common articles are from Baekje-Bongi.

Second, for articles from the Goguryeo period, we compared Goguryeo-bongi articles, Zhi articles, and Youl-jun articles. As 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xample, we compared the Goguryeo-bongi's Chundo article with the Geography-Zhi(地理志)'s Chundo article in the Geography-Zhi. The results show that at least four or five source materials were utilized in the compilation of Goguryeo-bongi and Geography-Zhi.

Third, by reviewing the articles cited in the Chinese history books, the history books compiled by citing the articles *Han history books*(『漢書』) and *Later Han history books*(『後漢書』) were used as the basic materials for compiling Goguryeo-bongi. A example of a Chinese librarian's article from the Goguryeo period is names of the five kings from King Taejo(太祖王) to King Sansang(山上王) that is taken from *Later Han history books*(『後漢書』) and *Three Kingdoms history books*(『三國志』).

Keywords: Samguksagi, Goguryeo-Bingi, Baekje-Bongi, Book of Later Han, Book of Three Kingdom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2

중국 사서 수록 고구려 관계기사의 이해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이성제 |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I. 머리말
II. 현도군(玄菟郡) 관계기사의 이해와 하서(河西) 4군 간독(簡牘)·고고(考古)자료의 활용
III. 오호십육국시대사(五胡十六國時代史)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책봉조공(册封朝貢) 관계사료의 이해
IV. 당대사(唐代史) 자료 이용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일찍부터 중원과 교섭을 가졌고, 그 결과 중원 왕조들이 남긴 사서들에는 고구려 관계기사가 많이 남아 있다. 책봉(冊封)·조공(朝貢)의 공식적인 교섭 사실로부터 고구려 내부의 정치상황이나 사회상,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서가 담고 있는 정보는 양적인 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못지 않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국내 사료와 함께 중국 사서의 관련 기록을 인용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고구려사 연구가 관련 자료들이 가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사료로 이용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료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해한 결과, 실제와 다른 모습을 그려놓은 오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고중세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성과를 살펴, 이를 고구려 관계기사의 이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간독(簡牘)이나 석각(石刻)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을 이용한 연구가 문헌사료의 부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보다 생생한 역사상을 살피고 있음을 본다. 예컨대 거련한간(居延漢簡)을 이용한 하서(河西) 4군의 변경 연구는 고구려와 현도군(玄菟郡)의 교섭과 양자의 관계를 살피는 데 참고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한편, 중국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의 제도나 사회상 기사는 해당 시기 고구려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찬자(撰者)가 전문(傳聞)이나 전대(前代) 기록에 의거하여 정리한 기록이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이질적인 정치·문화를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 용어로 설명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해당 시기 중원왕조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와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관련 중국 사서의 고구려 관계기사를 살피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글에서는 중국 사서의 관련 기록을 이용한 고구려사 연구에서 보이는 사료 이용의 문제와 새로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다.[1]

Ⅱ. 현도군(玄菟郡) 관계기사의 이해와 하서(河西) 4군 간독(簡牘)·고고(考古)자료의 활용

고구려 초기의 역사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등장이나 건국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상황은 매우 부실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가 전하는 건국설화를 비롯한 몇몇의 초기 기사와 한(漢)의 동방(東方) 경영 거점이 되었던 현토군 관련 기록들, 그리고 적석총(積石冢)과 군현성(郡縣城) 관련 고고자료들이 자료의 전부인 것이다. 이 가운데 중국사서에 보이는 현도군 관련 기록들은 고구려의 성장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자료라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2] 하지만 새로운 자료와의 연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고구려 초기사의 국내 전승사료에 비해 현도군 관련 기록들에는 검토할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그 상대가 된 고구려의 상황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토 자료의 증가에 따라 중국 고대사의 연구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거련(居延)과 돈황(敦煌) 지역의 고고

1 중국 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고구려 관계기사의 내용, 기술내용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성제, 2024, 「6장, 고구려 관련 국외 문헌사료」, 『고구려 통사 10-총론-』을 참조

2 임기환, 2020, 「5장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 통사1-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2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사와 여기에서 나온 간독자료를 통해 한대 서북지역의 변경 사회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한서(漢書)』 등의 문헌사료만으로는 살필 수 없었던 하서 4군 군현지배의 양상, 장(障)·새(塞)·수(燧)로 이루어진 변경 군사조직과 운용방식 등 한대 변군(邊郡)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하서 4군은 한이 서북지역을 개척하며 설치한 변군으로, 그 설치과정이나 변경지대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볼 때 현도군 관련 자료들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된다.[3]

먼저 현도군과 고구려의 관계 변천과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아래 기사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A. 한나라 때에는 북과 피리와 악공(樂工)을 하사하였으며, 항상 현토군에 와서 [(한나라의)]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아갔는데, 고구려현령(高句麗[(縣)]令)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그 뒤에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현토)]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상에 작은 성(城)을 쌓고서 조복과 의책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책구루(幘溝漊)라 부른다. 구루(溝漊)란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이르는 말이다.[4](『삼국지(三國志)』 권30 고구려)

이 기사는 현도군과 고구려 간의 관계 변화를 다루고 있어 간접적이나마 고구려의 성장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이에 그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

3 이러한 적용의 사례로는 김병준, 2011, 「돈황 현천치한간에 보이는 한대 변경무역-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 『한국 출토 외래유물: 초기 철기~삼국시대』를 들 수 있다.

4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漊. 溝漊者, 句麗名城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가 제기되어왔지만, 어째서 고구려현령이 현도군과 고구려의 관계에서 등장하는지, 명적(名籍)이 어떤 문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

아마도 현도군 설치 당시 고구려현은 현재의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에 있었다는, 현도군의 현성과 고구려의 중심지를 동일한 곳으로 파악했던 기존 이해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고구려의 중심지역에 설치한 현이니 고구려현이라 명명하였고, 그 현령이 고구려를 관할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집안 국내성 유적에서 보고되었던 토축 성지(城址)는 한대 토성지로 볼 수 없고, 고구려 시기 축성방식의 일부로 파악하는 견해가 유력해졌다.[5] 이제 고구려의 중심지역에서 한 군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현은 고구려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된다.[6] 또한 제2현도군 시기 고구려현의 위치는 현재의 신빈(新賓) 영릉진고성(永陵鎭古城)이었다. 그리고 제3현도군 시기 고구려현도 현재의 무순(撫順)이나 심양(瀋陽)[7]의 어딘가였다는 점에서, 시점과 이전(移轉)에 상관없이 고구려현은 요동군(遼東郡)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입지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현이 현도군과 고구려 관계에서 등장하는 까닭도 이러한 입지 조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

5 李新全 外, 2004,「關于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東北史地』2004-3, 35쪽.

6 필자는 고구려현이 처음부터 新賓 永陵鎭 한대고성에 있었으며, 제1현도군과 제2현도군의 고구려현 위치는 동일한 곳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李成制, 2011,「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韓國古代史硏究』64, 291쪽의 주 13).

7 제3현도군 시기의 군치가 현재의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었다. 무순 東洲古城址(武家昌, 1990,「撫順市小甲邦漢代遺址」『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무순 勞動公園고성지(齋藤武一, 1938,「撫順永安公園譽ヶ丘遺蹟」,『滿洲史學』2-3), 무순 古城子古城址(八木奬三郎, 1939,『滿洲都城市沿革考』), 심양 上伯官屯고성지(王鍾翰·陳連開 1979,「戰國秦漢遼東遼西郡縣考略」,『社會科學輯刊』1979-4) 등, 무순과 심양에서 확인된 군현성들이 그 후보지에 거론된 특징을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현의 입지가 이러하였다면, 그 현령이 관리했다는 명적(名籍)에 대해서도 새롭게 살필 대목이 생긴다.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8] 명적은 '낙랑군호구부(樂浪郡戶口簿)'와 같이 군현이 파악한 고구려 주민의 수를 기재한 호구 문서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대세를 점하고 있다.[9] 과연 고구려현령이 관리했다는 명적을 호구 문서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

호적(戶籍)이라면 성인 남성의 이름을 기재하고 어디에 사는지, 몇 명의 가족과 살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장부가 된다. 한의 호적제도에서는 호적을 향(鄕)에서 작성해서 이를 현으로 보내고, 현에서 관리하였다.[10] 그리고 이를 군에서 집계한 것이 낙랑군호구부와 같은 군급 호구부가 되는 것이다. 호구부가 아닌 호적이라고 보면 고구려현령의 관리라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구려인 개개인을 한 군현이 파악하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에 더해 현도군이 상대한 세력은 고구려만이 아니었다. 현도군의 동북방에는 부여(夫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양자의 관계는 고구려보다 더 긴밀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현령이 관리한 명적이 고구려인의 호구 문서였다고 하면, 부여인의 호구 문서 역시 현도군의 어떤 현에서 관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종래의 이해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하서4군의 하나인 장액군(張掖郡) 견수금관(肩水金關)에서 발견된 '오봉삼년이월리민출입관전적(五鳳三年二月吏民出入關傳籍)'은 견수금관이라는 관을 출입한 이들의 명부(名簿), 즉 명적이다.[11] '늠명적(廩名籍)'(식품 배급장부)과 같이 '○○명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들은 곳곳에서 찾아진다. 그렇다면 『삼국지』에 고구려와 관련하여 고구려현령이 관리했다는 명적은 자전의 뜻

8 李成制, 2011, 앞의 글, 300쪽.

9 임기환, 2020, 앞의 글, 287~288쪽; 이종록, 2022, 『고구려 전기 동해안지역 복속과 예족사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58쪽.

10 윤재석, 2010, 「진한대 호구부와 그 운영」, 『낙랑군 호구부 연구』, 77~78쪽.

11 李成珪, 2013, 「前漢 內郡과 河西 4郡 간의 交易網 形成-肩水金關 出土 簡牘 通行證과 關出入者簿名籍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2, 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풀이대로 이름을 기재한 명부이며 어떤 이들의 이름이 기재된 것인가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서』 권28 지리지에는 현도군의 호구 수와 속현 수를 기록하고 있다.

B. 현도군은, 무제(武帝) 원봉(元封) 4년에 개척하였다. 고구려(高句驪)는 왕망이 하구려(下句驪)라 하였다. 유주(幽州)에 속한다. 호수는 4만 5,006호이고, 인구는 22만 1,845인이다. 3개 현이 속해 있다. 고구려현(高句驪縣), 요산(遼山)에서 요수(遼水)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 요대(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 또 남소수(南蘇水)는 서북쪽으로 새외(塞外)를 지난다. 상은대현(上殷台縣), 왕망은 하은(下殷)이라 하였다. 서개마현(西蓋馬縣)이 있다. 마자수(馬訾水)는 서북쪽에서 염난수(鹽難水)로 들어와, 서남쪽으로 서안평현(西安平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2개 군을 지나며 총 연장 2,100리다. 왕망은 현도정(玄菟亭)이라 하였다.[12](『한서』 권28 지리지 8하)

이에 따르면 현도군은 고구려현, 상은대현, 서개마현의 3개 속현에 호구 수 4만 5,006호와 22만 1,845구를 보유하였다. 1개 현당 평균 7만 3,000명의 인구를 보유한 것이어서,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점에서 3곳에 불과한 현 수와 호구 수 사이의 불균형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어 왔다.

그간의 주된 이해는 이 호구 수에는 현도군 관할 밖에 있는 고구려 사회의 주민 수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현도군과 긴밀한

12 "玄菟郡, 武帝 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隊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上殷台, 莽曰下殷,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계를 보이고 있던 부여의 주민 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하서 4군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액군 거려현(居延縣)이 설치된 지역은 본래 흉노(匈奴의) 땅으로 하서 4군의 최북단이었다. 거련현은 현성을 중심으로 거련도위부(居延都尉府)와 여러 후관(候官)의 성곽 및 새(塞), 봉수(烽燧) 조직이 설치되어 흉노 방어의 거점이 되었다. 흉노정벌군의 전진 기지이자 교통 요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거련현에는 내군(內郡)으로부터 한인(漢人)이 이주해 오기도 했지만, 그 주민은 흉노계가 다수를 점하였다.[13]

장액군이 흉노의 땅에 설치되었던 것처럼 고구려현을 포함한 현도군의 설치 지역 역시 이맥(夷貊)이 거주하고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새로 들어선 군현의 구성원은 장액군의 거련현이 그러했듯이 고구려인을 포함한 이맥계가 다수를 점하였을 것이다. 다만 3개 현에 소속된 이맥계만 여기에 해당될 뿐, 군현 관할 바깥의 고구려왕이 다스리는 고구려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련현과 흉노의 관계 때문이다. 거련현에서는 흉노와의 경계에 새(塞)와 수(燧), 천전(天田)[14]을 펼쳐놓고 흉노의 잠입이나 한측으로부터의 도주를 차단하였다. 새 바깥의 흉노인들은 거련현의 관할 대상이 아니었고, 그 관할 대상은 새내(塞內)의 흉노계와 한인에 한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군 운용의 구체적인 실상이 이러하였다면, 한의 동북변에서만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하서 4군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이맥 사회는 군현의 관할 아래 들어가 있는 고구려인들과 그 바깥에서 한의 지배력과는 무관한 독자적 세력으로서 고구려국의 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온당하다.[15]

---

13 李成珪, 2013, 앞의 글, 74~75쪽.

14 천전이란 지면의 작은 돌을 제거하여 평평하게 만든 띠 모양의 모래땅으로, 사람이나 말이 그곳을 통과하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히게 된다. 그 역할은 흉노의 침입을 탐지하는 한편 한측으로부터의 도망자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籾山 明, 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中公新書, 67~68쪽).

15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81~182쪽; 윤용구, 2008, 「현도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제2현도군 시기 그 속현이 3곳에 불과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이 거련현 인근에 다른 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거련현은 하서 4군의 최북단에 외따로 떨어져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장액군의 군치 역득현(櫟得縣)으로부터 1,000여 리 떨어져 있었다. 그 중간 경로에는 다른 현이 설치되지 않았다.[16] 이로 보아 현의 수효 과다(寡多)만으로는 변군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변군의 행정조직은 군-현-향-리로 구성된 민정과 도위(都尉)-후관(候官)-부(部)-수(燧)의 군정(軍政)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이다.[17] 즉, 거련현에서 역득현까지의 경로에는 도위 이하의 군정기구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도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군정 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장위(障尉)의 존재가 눈에 띈다.[18] 진선(陳禪)이 현도군 후성현(候城縣) 장위(障尉)로 좌천되어 부임하던 중 요동태수로 전임했다는 기록에 보이는 것인데, 121년(고구려 태조왕 69년)의 일로 고구려의 공략에 따라 현도군이 혼하(渾河) 방면으로 퇴축한 제3현도군 시기에 해당한다. 장위는 군정기구에서 도위 아래 후관의 부관 격에 해당하는 하급 무관직이었다. 이러한 하급 무관직이 현도군 관련 기록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 지역에도 한의 군정기구들이 편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의 『한서』 지리지 기사 가운데 보이는 새(塞) 역시 하서 4군의 군사적 역할을 뒷받침해주었던 방어시설이다.

여기에 더하여 요령성 무순(撫順) 일대에서 조사 보고된 한대 봉수선(烽燧

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120~121쪽; 李成制, 2011, 앞의 글, 304~305쪽.

16 역득현을 비롯한 나머지 9개 현은 현재의 장액시 주변에 포진하였다.

17 籾山 明, 1999, 앞의 책, 58~59쪽.

18 "陳禪字起産, 巴郡安漢人也. … 時漢中蠻夷反畔, 以禪爲漢中太守, 夷賊素聞其聲, 卽時降服, 遷左馮翊, 入拜諫議大夫, … (永寧二年) 有詔勿收, 左轉爲玄菟候城障尉, … 禪旣行, 朝廷多訟之. 會北匈奴入遼東, 追拜禪遼東太守, …." (『後漢書』 권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線)은 현도군에도 하서 4군과 유사한 군정기구가 포진해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 봉수선은 무순을 중심으로 그 서쪽으로는 심양(瀋陽)까지, 동쪽으로는 소자하(蘇子河) 연안을 따라 신빈 영릉진고성과 왕청문(旺淸門) 일대까지 이른다. 이 봉수선은 약 60여 기로 150km의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19] 이들 봉수는 하서 4군의 군정계통에서 최말단에 위치했던 수(燧)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현도군에도 하서 4군의 그것과 같은 군정과 민정 계통의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현도군 예하의 몇 개 현성과 그 분포양상을 놓고 이들과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오던 그간의 이해에서 벗어나 고구려현성을 중심으로 여러 후관(候官)의 성곽 및 새(塞), 봉수(烽燧) 조직이 전개되어 있던 경관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20]

Ⅲ. 오호십육국시대사(五胡十六國時代史)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책봉조공(冊封朝貢) 관계사료의 이해

봉상왕(烽上王)에서 장수왕(長壽王) 대에 이르는 시기는 대체로 고구려의 전 역사 가운데 중기(中期)에 해당한다. 4세기에서 5세기 말까지의 이 시기에 고구려는 요동과 중원 방면을 무대로 다양한 사적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사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진(西晉)과 동진(東晉) 그리고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역사를 다룬 『진서(晉書)』와 편년체 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이용해왔다. 반면 당

19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2000-3. 이들 유적의 성격은 孫守道가 한대 요동장성의 봉수유적이라고 판단한 이래, 장새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孫守道, 1992, 「漢代遼東長城列燧遺跡考」, 『遼海文物學刊』 1992-2). 이에 대해 필자는 이 봉수선을 장성선으로 볼 수 없으며, 街道를 따라 설치된 '道上燧'라고 이해하고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의 하나였다고 보았다(李成制, 2011, 앞의 글, 309~312쪽).

20 아울러 통화 赤柏松古城과 自安山城이라는 군현성이 무순에서 뻗어나온 봉수선과 연결되며, 영릉고성과의 사이에 현이 없다는 사실도 유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사료라고 할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의 활용은 금기시해왔다.[21]

그런데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최근 오호십육국시대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십육국춘추』의 복원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시도들이 하나의 현상을 넘어 추세가 되고 있음을 본다. 『『資治通鑑』十六國資料釋證-漢趙·後趙·前燕國部分』·『『資治通鑑』十六國資料釋證-前秦·後秦國部分』[22] 등과 같은 사료 이해 작업뿐 아니라 『태평어람(太平御覽)』을 비롯한 각종 자료에 전하는 『십육국춘추』 관련 사료의 (佚文)을 수집·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五胡の會'가 펴낸 『오호십육국패사집일(五胡十六國覇史輯佚)』[23]은 오호 16국의 각국이 편찬한 국사(; 패사)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보다 원사료에 가까운 사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24] 한편, 2021년 결성된 한국의 '『십육국춘추집보(十六國春秋輯補)』연구회'[25]는 『십육국춘추집보』의 사료적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사들과 『[도본(屠本)] 십육국춘추』·『진서』·『자치통감』·유서(類書)의 일문을 비교 검토하고

---

21 522년 무렵 北魏의 崔鴻이 저술한 『십육국춘추』는 宋代에 이르면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최홍이 어떤 사료를 이용하여 이 사서를 펴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호십육국시대 각국이 만든 사서들은 약 50종에 달한다(『隋書』經籍志에서 이들을 '覇史'라고 분류). 최홍은 이들 패사를 자료로 삼아 4~5세기 화북의 역사를 16국시대라고 명명하고 그 역사를 총괄한 사서를 펴냈던 것이다(梶山智史, 2019, 「覇史の系譜-五胡十六國史料における繼承と再編」, 『唐代史研究』 22). 그 뒤 송대 『태평어람』의 편찬 과정에서 일문들이 여기에 수록되었고, 明淸代에 들어와 『(屠本) 十六國春秋』·『(何本) 十六國春秋』·『十六國春秋輯補』가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 『(도본) 십육국춘추』는 屠喬孫·項琳之가 輯佚한 것으로 何鏜의 『(하본) 십육국춘추』와 더불어 위작으로 여겨져왔고, 청대 湯球가 집일한 『십육국춘추집보』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평가되었다.

22 陳勇의 저작으로 2010년과 2015년,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23 五胡の會 編, 2012, 『五胡十六國覇史輯佚』, 燎原.

24 關尾史郎, 2012, 「「覇史」の概念とその佚文蒐集の意義について」, 『五胡十六國覇史輯佚』; 梶山智史, 2019, 앞의 글.

25 필자를 포함하여 중국고중세사·한국고대사 연구자 9명으로 구성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에서 새롭게 확인된 지식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십육국춘추』와 현행본 『진서』·『자치통감』의 계승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진서』의 경우, 여기에 수록된 16국 관계기사는 나라별 사서보다 『십육국춘추』와 유사성이 높다. 1차 사료인 나라별 사서를 참조하지 않고 최홍이 편집한 『십육국춘추』에 기본적으로 의존했던 탓인 듯하다. 또한 『자치통감』 16국 관계기사는 『십육국춘추』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료를 참조하고 문장을 다듬어 하나의 기사로 재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 이 때문에 그 기재내용이 『진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하다.[26]

다음으로 『십육국춘추』 관계 자료들의 성격과 계통성에 대해 파악하게 되면서, 이들 자료를 위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료의 계승관계를 파악하고 원사료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태평어람』「편패부(偏覇部)」 기사는 최홍의 『십육국춘추』 원본을 직접 절록(節錄)·인용한 북제(北齊)의 『수문전어람(修文殿御覽)』「편패부」의 기사를 옮겨 쓴 것이어서, 여기에 수록된 16국 관계 일문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어람』 등 각종 전적에 전하는 패사 일문(佚文)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현존 패사의 일문 중에는 『자치통감』에조차 전하지 않는 내용도[27] 찾아지고 있다.

『십육국춘추』의 집일서(輯佚書)[28]로는 『십육국춘추집보』와 『(도본) 십육국춘추』가 대표적인 성과물인데, 특히 『(도본) 십육국춘추』의 자료적 가치가 주목

---

26 梶山智史, 2019, 앞의 글, 15~20쪽.

27 岩本篤志, 2010, 「燉煌本『覇史』再考-杏雨書屋藏/燉煌秘笈『十六國春秋』斷片考」, 『資料學研究』 7. 암본독지에 따르면, 이 사료는 남조에서 편찬한 16국시대사 『三十國春秋』의 後燕 慕容垂 전의 일부라고 한다.

28 『십육국춘추』 집일서 특히 〈하본〉과 〈도본〉의 위작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들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洪承賢, 2023, 「『十六國春秋』 何本과 屠本의 輯佚 방식과 사료적 가치」, 『中國史研究』 145를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다. 그동안 『십육국춘추』는 북송 초기에 이르면 이미 사라졌다고 여겨져왔으나, 민간에서 명말~청초까지 잔본(殘本)의 상태로 유전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도본〉의 찬자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십육국춘추』 잔본을 보았고, 원서의 충실한 복원을 목적으로 16국사 관련 자료를 상세히 집성하고 편집, 역사적 흐름의 이해를 돕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29] 〈도본〉에는 〈집보〉에 없는 기사들이 도처에 보이며, 관련 기사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 기사는 『자치통감』의 기사와 중복되기도 하는데[30] 『자치통감』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자치통감』은 물론이고 『태평어람』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보인다. 『위서』 등 가용한 사서의 기사를 근간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추정된다.[31] 이상에서 현재의 자료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 연구를 통해 『십육국춘추』를 비롯한 16국 관계사료의 전체상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5호16국이라는 화북의 분립 상황은 북위(北魏)의 등장으로 일단락된다. 북위가 북중국을 평정함으로써 남북조시대가 열렸고, 고구려는 중원을 양분한 이 두 세력과 책봉조공(冊封朝貢)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나갔다. 아래의 C 기사는 435년 고구려와 북위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되어왔다.

C. 세조(世祖) 때 조(釗)의 증손 고련([(高)]璉)이 비로소 사자 안동(安東)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아울러 국휘(國諱)를 청하였다. 세조가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조서를 내려 황실의 계보와 황제의 이름을 적은 것을 주게 하였으며,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 이오(李敖)를

29 洪承賢, 2023, 앞의 글, 60~83쪽.

30 梁鎭誠, 2023, 「『十六國春秋輯補』所收『後秦錄』의 史的 考察(1): 後秦 前史-『十六國春秋輯補』卷49, 「後秦錄」1 註解-」, 『中國古中世史硏究』 144, 5쪽의 주 5)

31 洪承賢, 2023, 앞의 글, 6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내어 고련을 도독요해제군사·정동장군·영호동이중랑장·고구려왕(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으로 삼도록 하였다.(『위서(魏書)』 권100)[32]

이때 전개된 고구려의 외교와 관련하여 『위서』 권4上에는 "(6월) 병오(丙午), 고려·선선국병견사조헌(高麗·鄯善國並遣使朝獻)"의 기사가 보인다. 이 기록의 일자로 고구려는 북연이 북위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있던 서방의 다급한 상황에도 때늦은 대응에 나선 셈이 된다. 바로 이틀 뒤 북연 공격군이 출정했기 때문이다.[33] 이를 근거로 최근에는 두 사건은 서로 무관하며, 고구려가 조공 사절을 파견한 의도는 기록 그대로 북위와 책봉조공관계를 맺으려는 데 있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34]

고구려의 조공사 파견 기사는 고구려가 그 상대국에게 전개한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데 주요한 판단 요소임에 분명하다. 많은 경우 조공 사실만 기재할 뿐인데 구체적인 일자까지 알 수 있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더욱이 C 기록을 통해 고구려의 조공에 대한 북위 측의 반응 내용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록은 이때 전개된 대북위외교의 내용과 그 성과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6월 병오일을 과연 고구려 사절이 북위 태무제(太武帝)에게 방물과 표문을 바친 날, 즉 장수왕의 의향이 이날에 이르러서야 북위 측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볼 때 외교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32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幷請國諱. 世祖嘉其誠款, 詔下帝系名諱於其國, 遣員外散騎侍郎李敖, 拜璉爲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33 『위서』 권4상, "(435년 6월) 戊申, 詔驃騎大將軍樂平王丕等五將率騎四萬東伐文通. 秋七月, … 己卯, 丕等至於和龍, 徙男女六千口而還."

34 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고구려가 북위에 사절을 파견했을 때, 북위 측이 그를 어떻게 처우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장수왕의 의지가 태무제에게 전달되었을까 하는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앞서 소개한 연구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대(唐代)의 사례가 참고된다. 외국이 당에 사절을 파견해 왔을 때, 변경에 도착한 사절에 대해 국경의 주현(州縣)에서는 그 사절이 가져온 헌상물을 검색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홍려시(鴻臚寺)에 이첩하였다.[35] 또한 도성으로 보낼지를 문의하여 그 입경(入京)의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예컨대 일본의 14·17차 견당사(遣唐使)는 3개월 이상을 도착지인 양주(揚州)에서 소비한 뒤에야 비로소 입경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36]

이러한 당대 국경지대의 외국 사절에 대한 검문과 중앙에의 보고 과정으로 볼 때, 고구려 사절이 북위의 수도 평성(平城)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번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더욱이 당대의 사례들은 국교가 있는 상황에서의 입경(入境)이었다. 이에 비해 435년 고구려가 조공 사절을 보낸 것은 양국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일이 된다. 이러한 양국 관계에서 고구려 사절이 국경을 넘어와 조공을 목적으로 한 사행임을 밝혔을 때, 입국의 허용으로부터 평성으로의 이송 여부, 이들에 대한 처우 등은 국경의 일개 지방관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었음에 분명하다.

달리 말해 동방 변경의 보고를 통해 고구려 사절의 입국 사실이 북위 조정에 알려졌고, 북위 조정이 고구려 사절을 평성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위 측이 고구려가 조공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435년 6월 보다 한참 앞선 시점이 된다. 더욱이 고

35 『譯註 唐六典』 鴻臚寺 典客令.

36 石見清裕, 1998, 「邊境州縣における朝貢使節の待遇」,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3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려의 조공은 고구려가 그간 북위와 북연 관계에서 보이고 있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조공사절의 입국 보고는 북위 측에게 고구려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북위 측은 고구려 사절이 표문을 태무제에게 봉정하기 한참 전에 이미 고구려의 입장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위는 고구려의 조공에 호응하여 장수왕을 책봉하였다.[37] 그 이틀 뒤에는 북연 공략전의 재개를 의미하는 출병 명령이 내려졌다. 고구려의 조공이라는 정세 변화가 북연 배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었고, 북위는 북연의 굴복을 기다리는 대신 군사적 해결이라는 강경한 조치로 북연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던 것이다.[38] 북위가 고구려의 입장 변화를 인지한 것은 435년 6월보다 한참 앞선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북연 문제를 비롯한 동방정책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두 조치가 겨우 이틀에 불과한 시간을 두고 전개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그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사안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C 사료에는 양국이 맺은 책봉조공관계의 내용도 보이는데, 북위는 장수왕의 책봉호에 관할 범위를 '도독요해제군사(都督遼海諸軍事)'라고 명시하고 영호군관인 '영호동이중랑장(領護東夷中郎將)'을 수여하였다. 이 책봉호의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북위가 고구려를 동방의 패자로 인정하였으

37 C 기사는 『자치통감』에 거의 그대로 전재되고 있으며, 宋 文帝 元嘉 12년(435) 6월 병오일에 편년되고 있다. '世祖時'·'始'·'安東'·'員外散騎侍郎李敖'·'領護東夷中郎將' 등의 언급은 빠져 있지만, 『자치통감』 기사의 연원이 『위서』의 그것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다시피 『자치통감』은 편년체 사서이지만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할 때 사건의 중심이 되는 날짜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권중달, 2010, 「『자치통감』의 사학사적 의미」, 『韓國史學史學報』 21, 207~208쪽).

38 李成制, 2004, 「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2005, 『高句麗의 西方定策 硏究』, 國學資料院, 30~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며 그 독자적 세력권을 공인했다는 이해가 주류를 이루어왔다.[39] 435년의 양국 관계를 다룬 앞서의 연구 역시 고구려가 조공을 통해 북위 우위의 세력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책봉으로 세력권의 인정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문의 봉정과 책봉을 명하는 조서가 있었다는 것은 양측이 자신들의 의지를 문서로 교환하였고, 이로써 책봉조공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위의 책봉이 있었다고 해서 과연 고구려가 양국이 우호하게 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북위의 책봉호에서 관할권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고구려가 대북위외교에 나서기 바로 전인 433년 무렵 북연왕의 장자 풍숭(馮崇)이 왕과 불화하여 진수하고 있던 요서군(遼西郡)을 들어 북위에 귀부를 청한 일이 있었다.[40] 이때 북위는 그를 거기대장군·요서왕(車騎大將軍·遼西王)에 봉하였는데 그 책봉호에 '도독유평이주동이제군사(都督幽平二州東夷諸軍事)'와 '영호동이교위(領護東夷校尉)'가 보인다. 그런데 이 책봉은 북위가 북연 공략에 풍숭이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내린 것으로[41] 실제 부용세력에 불과했던 풍숭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정세로 보아 북위는 북연 공략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책봉조공관계가 필요하였다. 이때의 책봉이 고구려의 실력을 인정하고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북중국을 제패해가고 있어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던 북위의 입장에서는 장수왕이 조공 사절을 보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다. 그런 고구려를 특별히 우대해주어야 할 까닭은 없

---

39 三崎良章, 1982,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1983, 「高句麗の對北魏外交」, 『早稻田大學大學院文化硏究所紀要別冊』 9; 2000, 「東夷校尉考-その設置と「東夷」への授與」, 『西嶋定生博士追悼論文集 東アジア史の展開と一本』, 山川出版社; 盧泰敦, 1999,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東方學志』 44;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0 『魏書』 권97; 『資治通鑑』 권122.

41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硏究-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 一潮閣, 125~1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42]

이때의 책봉호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토욕혼(吐谷渾)의 사례가 참고된다. 493년 북위 효문제(孝文帝)는 토욕혼왕 복련주(伏連籌)를 책봉했는데, 책봉호의 구성내용을 보면 동서(東西)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435년 장수왕 책봉호와 모두 동일하다. 도독제군사와 영호군관직이 '요해(遼海)'와 '서수(西垂)', '동이(東夷)'와 '서융(西戎)'으로 대치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토욕혼왕 책봉의 과정은 북위의 장수왕 책봉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토욕혼왕은 북위의 입조 요구를 거부하고 변경에 군대를 배치하여 북위를 자극했고, 불손한 태도까지 보였다. 이에 북위에서는 정벌 논의까지 나오는 등 압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토욕혼왕이 굴복하여 세자를 보내 조공하였다. 493년의 토욕혼왕 책봉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점에서 북위가 토욕혼을 서방의 강국이라 여기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시기 탕창(宕昌)과 토욕혼 사이에 벌어진 분쟁은 토욕혼의 독자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토욕혼을 대국(大國)으로 섬겨왔던 탕창이 이 무렵 토욕혼왕에게 평대(平對)하고 사자를 구금한 일이 있었다. 이때 복련주는 군사적 보복에 나서려 했으나 토욕혼에 와 있던 북위 사자는 두 나라 모두 북위의 번(藩)이기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신절(臣節)을 어기는 행위라고 하며 저지하였다. 북위의 간섭으로 토욕혼은 인접국과의 분쟁조차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43] 이 사례는 책봉조공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우호관계의 성립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사료에 보이는 관계의 내용뿐 아니라 양측의 진의(眞意)를 파악하는 노력이 짝해야 함을 보여준다.

---

42 이성제, 2023b, 「4장 북위와의 교섭 재개와 5세기 후반기 대외관계」, 『고구려 통사 4-고구려 중기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동북아역사재단, 193쪽.

43 李成制, 2015, 「高句麗와 北朝의 冊封朝貢關係 -領護東夷中郎將과 領護東夷校尉의 授受와 그 의미-」, 『東洋學』 5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당대사(唐代史) 자료 이용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중국 사서의 고구려 관계기사는 당대(唐代) 사서에 이르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다루는 내용이나 자료의 양에서 전대의 사서들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성(大城)에는 욕살(褥薩) 1인을 두는데 (당의) 도독(都督)에 비견되며, 여러 성의 도사(道使)는 자사(刺史)에 비견된다'는 기사[44]는 고구려의 지방통치조직과 군제사에 관한 몇 안 되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대성의 성주인 욕살이 관할 지역의 행정은 물론 군사까지 관장했다는 그간의 이해는 바로 이 기사에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45]

이러한 자료 상황에서 1998년 보고된 〈이타인묘지(李他仁墓誌)〉의 '우시(于時), 수공책주도독겸총병마(授公柵州都督兼摠兵馬), 관일십이주고려(管一十二州高麗), 통삽칠부말갈(統卅七部靺鞨)'이라는 구절은 욕살이 고구려의 12개 주(州)를 비롯하여 말갈(靺鞨)의 37부(部)까지 통할하는 말 그대로 최상위의 지방관이자 군사령관임을 보여주는 실례로 여겨졌고[46]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대사자료DB에서도 '책성 지역의 행정권과 군권을 가

---

44 『구당서』 권199상, "外置州縣六十餘城, 大城置傉(; 褥)薩一, 比都督, 諸城置道使, 比刺史." 이 기사는 『한원』 고려조에 注文으로 인용된 『고려기』에 수록된 내용이 원전임에 분명하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구당서』의 관련 기사를 이용하였다.

45 욕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시한 이는 山尾幸久였다. 그는 『隋書』 기록과 北朝의 總管에서 유래한 도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욕살이 관할 지역의 군사를 총괄했으며 예하 諸城과 小城의 民政을 아울러 관할했다고 보았다(山尾幸久, 1974, 「朝鮮三國の軍事組織-コホリのミヤケ研究序說-」, 『古代朝鮮と一本』, 朝鮮史研究會 編, 龍鷄書舍).

46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생애와 族源-고구려에서 활동했던 柵城 지역 靺鞨人의 사례-『목간과 문자』 11, 214~215쪽; 余昊奎·李明, 2017, 「고구려 유민〈李他仁墓誌〉의 재판독과 주요 쟁점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85, 308~3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진 육살'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기존의 이해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47]

그런데 '책주도독겸총병마(柵州都督兼摠兵馬)'라는 관이란 고구려의 관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용어임에 분명하다. 이 점에서 이 구절을 단순히 풀이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기재방식을 당 측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D-1. (貞觀) 十九年(645), 命刑部尙書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領將軍常何等率江·淮·嶺·硤勁卒四萬, 戰船五百艘, 自萊州汎海趨平壤. 又以特進英國公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禮部尙書江夏王道宗爲副, 領將軍張士貴等率步騎六萬趨遼東. 兩軍合勢, 太宗親御六軍.(『舊唐書』 권199상)

2. 柴紹, 字嗣昌, 晉州臨汾人也. … 授右領軍大都督府長史. 大軍發晉陽, 兼領馬軍總管.(『舊唐書』 권58)

3 王及善, 洛州邯鄲人也. … 累遷左武衛將軍. 從太宗征遼東, 兼領左屯營兵馬, 與高麗戰於駐蹕山, 君愕先鋒陷陣, 力戰而死.(『舊唐書』 권90)

D-1은 잘 알려진 사료로 당 태종이 645년 고구려를 침공하기에 앞서, 공격군을 평양도행군(平壤道行軍)과 요동도행군(遼東道行軍)의 두 갈래로 편성하고 그 지휘관으로 장량(張亮)과 이세적(李世勣)을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장량은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재직 중에 평양도행군대총관이 되었고, 이세적은 특진·영국공의 지위에 있다가 요동도행군대총관에 임명되고 있다. D-2의 시소(柴紹)는 우령군대도독부장사(右領軍大都督府長史)의 직에 있다가 출병하게 되면서 마군총관(馬軍總管)을 겸하게 되었다. D-3의 왕급선(王及善)은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의 관직에 있다가 645년 고구려로 출전하게 되면서 좌둔영병

4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사료DB의 한국고대금석문 〈이타인묘지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左屯營兵馬)를 겸령하였다.

아래 두 사람의 관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우령군대도독부장사 혹은 좌무위장군이라는 본직에 있으면서 각각 마군총관, 좌둔영병마를 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소와 왕급선 경우는 출전의 상황이 계기가 되었고, 이때 군무를 맡게 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함(官銜)을 겸령의 형태로 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관에서 '겸(兼)'을 중심으로 앞의 것은 본직이며 뒤에 등장하는 관함은 전쟁 상황에서 추가된 '영직(領職)'[48]인 것이다. 이로 보아 장량과 이세적은 형부상서와 특진·영국공에서 행군대총관으로 전임(轉任)된 것이 아니라 본직을 유지한 채 행군대총관을 겸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666년 12월~668년 9월 무렵 이세적이 당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 오자, 책성도독 이타인은 휘하의 병마를 이끌고 출전했다가 항복하였다. '수공책주도독겸총병마(授公柵州都督兼摠兵馬)'란 바로 전시, 그것도 출정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이다. 그의 본직은 책주도독이며 여기에 '총병마'의 직함을 별도로 받아 12주 고려·37부 말갈로 구성된 출정군을 지휘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책성도독, 즉 책성욕살이 관할한 지역 범위는 12주 고려·37부 말갈이라는 광역이 될 수 없으며, 책성은 12주 고려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묘지는 그가 욕살의 관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총병마'했다는 별도의 관함을 명시하여, 12주 고려와 37부 말갈을 이끌고 항복한 그의 공적을 강조했던 것이다.[49] 아울러 장량과 이세적의 사례로 보아 이러한 '총병마'는 전쟁 상황에서 내려진 임시의 관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군이 낙양(洛陽)으로 회군한 뒤, 요동도행군과 평양도행군은 해산되었을 것이고 그 지휘의 권한 역시 회수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

48 영직이란 독립된 관이 아니라 都督某州諸軍事나 錄尙書事와 같이 본관을 소지한 상태로 겸직하는 것을 뜻한다. 그 자체의 品秩이 없고, 본관을 소지하지 않은 채 拜命하지 못하였다(山口正晃, 2017, 「將軍から都督へ-都督制に對する誤解-」, 『東洋史硏究』 76(1)).

49 李成制, 2018, 「褥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韓國古代史硏究』 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타인묘지〉의 욕살 관련 내용은, 욕살이 전쟁 상황에서는 출정군의 지휘관을 맡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욕살에 취임하는 자는 무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했음을 이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자료는 중국 남북조(南北朝) 이래의 '영직(領職)'이나 수당대(隋唐代)의 '행군(行軍)'과 유사한 관제와 군제를 고구려가 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재음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양당서(兩唐書)와 『자치통감』은 고구려와 당의 관계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사서들이지만 해당 자료의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 경과에 대한 편찬자의 의도적인 생략과 이에 따른 사실의 왜곡 상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료의 한계가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 당과 고구려의 관계, 특히 645년의 전쟁 기사이다.

양당서 등의 관련 기록에는 당군이 전격적인 기습으로 기세를 선점하였고, 고구려는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거듭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개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군이 은밀한 기동으로 고구려의 요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였고 현도성(玄菟城)에 이를 때까지 기습을 숨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수(隋)의 113만 대군도 넘지 못했던 요동성(遼東城)에 대해서는 황제인 태종(太宗)까지도 공성에 가담하는 등의 전력을 기울인 당군의 공세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백암성(白巖城)·비사성(卑奢城)의 공방전에서는 고구려가 험준한 지세에 의지해 맞섰으나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은덕과 당군의 과감한 기습으로 승전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주필산(駐蹕山) 전투와 안시성(安市城) 공방전에서도 보인다. 고구려군은 15만 대군을 투입하여 반전을 노렸으나 당 태종의 신묘한 전술로 주필산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당군의 공세는 안시성민의 거센 저항에 가로막혔고, 결국 회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련 사서들은 645년 전쟁에서 당군이 시종일관 승기를 잡고 있었던 듯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50]

50 이와 관련하여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이 위급했던 상황이 있었지만, 관련 사서들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는 양당서와 『자치통감』에는 수록되지 않는 자료로서, 당 측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전쟁에 나섰는가를 알려준다.

E. … 광록대부·형부상서(光祿大夫·刑部尙書) 장량(張亮)에게 수로군(水路軍)을 통솔하게 하였다. 또한 특진·태자첨사·영국공(特進·太子詹事·英國公) 이적(李勣)을 대총관으로 삼아 병력을 통솔케 하여,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고구려 도성을 곧바로 노리게 하였다. 4월 초순 (적당한 날을) 헤아려 바로 고구려 영토로 진격할 것이니 … (그대 선덕여왕은) 일찌감치 병력을 모아두었다가 작전에 호응하여 병마를 동원하고, 아울러 장량 등의 지휘를 받으라. … (내가 보낸 사자가 이르거든) 바로 신라 사자를 장량 등의 당군이 이른 곳에 보내, 함께 기한을 정하여 양군이 모이도록 하라.(『문관사림(文館詞林)』 권664)[51]

E 기록은 태종이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에게 보낸 조서(詔書)의 일부이다. 그 내용에서 장량이 수로군을, 이세적이 육군을 지휘하게 한다는 평양도행군과 요동도행군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종이 낙양(洛陽)에서 양군의 지휘관을 임명하고 병력 편성을 명했던 644년 11월 직후 작성되어[52] 신라에 보내졌던 조서로 보인다. 여기에서 태종은 선덕여왕에게 이듬해 4월 초순에 개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삼국사기』 권22 보장왕 8년 4월조의 찬자 평론; 金貞培, 2007, 「『三國史記』 寶藏王紀 史論에 보이는 '柳公權 小說' 문제」『韓國史學報』 26).

51 『文館詞林』「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一首」, " … 仍先令光祿大夫·刑部尙書張亮總統舟艫. 又令特進太子詹事·英國公李勣亦爲大總管董率兵馬, 並水陸俱進, 直指賊庭. 計四月上旬之內, 當入高麗之境. … 早令纂集應行兵馬, 並宜受張亮等處分. 朕仍令行軍總管·守右驍衛將軍·東平郡開國公程名振等爲張亮前軍, 並遣朝散大夫莊元表·副使右衛勳衛旅帥段智君等使往彼國. 元表等至日, 王卽宜遣使到亮等軍所, 共爲期會. … "

52 『자치통감』 권197 唐紀13 太宗貞觀 18년 11월 甲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할 것임을 미리 알리면서 당군의 움직임에 맞춰 신라군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신라군은 장량의 처분(處分), 즉 그 지휘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 내용으로 보아 당은 이세적 등의 맹장을 모두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고구려를 급습한다는 것뿐 아니라 신라군을 북진시켜 남북의 양면에서 고구려를 침공한다는 전략을 수립해두고 있었다.[53]

실제의 군사작전이 이 전략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세적이 이끈 당군이 645년 4월 1일에 요하를 건너 현도성을 급습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5만의 신라군이 북진하여 고구려의 수구성(水口城)을 공격했다는 기사[54]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당(羅·唐) 양군은 644년에 수립된 전쟁계획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신라군의 북진이 5월의 일이었음에 관심이 간다. 태종의 조서 내용에 따르면 신라군의 북진은 당군의 진군과 짝해야 하였다. 특히 장량의 지휘를 받으라는 언급이 있음에서 장량의 군은 5월 무렵 신라군과 연결하기 위해 요동반도를 뒤로하고 남진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장량의 군은 남진하는 대신 요동반도를 북상하여 7월 5일에는 개주(蓋州)의 건안성(建安城)을 공격하였고, 안시성 공방전이 한창이던 9월에는 사성(沙城; 비사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곧장 평양성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에 따르면, 요동도행군도 평양도행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남하하고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두 방면의 당군 모두가 9월이 되도록 요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사서들이 묘사한 상승(常勝)의 전황과 달리 당군은 개전한 지

53 『신당서』 권220에는 D-1의 기사에 이어 태종이 내린 조서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又發契丹·奚·新羅·百濟諸君長兵悉會."의 기사가 뒤를 잇는다. 이를 통해 E와 같은 조서를 契丹·奚·百濟 등에게도 보냈으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문관사림』에는 권664에는 백제 義慈王에게 보낸 조서도 실려 있다. 여기에 당군의 출병 계획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장량의 지휘를 받으라는 지시도 보인다.

54 『舊唐書』 卷199, "太宗將親伐高麗, 詔新羅纂集士馬, 應接大軍.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 降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년이 되도록 요동반도 서북부, 달리 말해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55]

이렇게 볼 때 관련 사서들은 단지 주필산 전투 상황만이 아니라 645년 전쟁 전반에 걸쳐 의도적으로 중요 사료를 생략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의 내용이 관련 사서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 전쟁에서 당군이 일방적으로 우세했고 그 기세가 안시성 공방전까지 이어졌다고 본 그간의 이해는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56] 당군이 요동반도 서북부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남북으로 고구려를 공략하겠다는 당의 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새로운 이해 아래 645년 전쟁과 여기에 관련된 여러 사안이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중국 사서의 고구려 관계기사를 이용한 연구에 보이는 사료 이용의 문제와 새로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55 이성제, 2023a, 「고구려의 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韓國古代史硏究』 109. 고구려는 631년부터 16년간 진행한 대규모 공사를 통해 요동 일대의 방어체제를 강화하였고, 당의 공세는 여기에 가로막혔던 것이다.

56 양당서와 『자치통감』의 편찬이 당대 이후인 후당이나 북송시기에 이루어졌기에 이 조서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대 사서 편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당은 왕조 개창 초기부터 황제의 실록을 저술하여 이를 기초로 『武德貞觀兩朝國史』 80권을 찬술하였고, 여기에 高宗代의 20권을 추가하여 모두 100권의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를 則天武后 대에 80권으로 된 『唐史』를 편집하고, 『구당서』가 편찬되는 後晉 연간에도 고조~代宗의 국사와 德宗 이전부터 文宗에 이르는 각 황제의 실록이 잔존해 있었다. 『구당서』는 이들 국사나 실록을 원사료로 채용하였다(福井重雅, 1984, 「『구당서』-その祖本の硏究序說-」, 『中國正史の基礎的硏究』, 早稻田大學出版部). 이로 미루어 적어도 645년 전역에 대한 사료 삭제와 사실 왜곡은 『태종실록』의 편찬 시기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초기사 연구에서 현도군(玄菟郡)과 고구려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에는 한대(漢代) 변군(邊郡)의 지배 양상, 변경 군사조직과 운용방식에 대한 중국 고대사의 연구 성과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서(河西) 4군의 간독(簡牘) 자료에 보이는 명적(名籍)의 사례는 고구려현령이 주관했다는 명적이 호적이 될 수 없으며, 특정한 용도의 명부임을 알려준다. 또한 현도군 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새(塞)와 장위(障尉), 그리고 봉수선(烽燧線)의 존재는 도위(都尉)-후관(候官)-부(部)-수(燧)로 이루어진 변군의 군정(軍政) 조직이 현도군에도 편제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도군 예하의 몇 개 현성을 놓고 이들과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오던 그간의 이해에서 벗어나 향후의 연구는 고구려현성을 중심으로 여러 후관의 성곽 및 새, 봉수 조직이 전개되어 있던 경관을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중기사 연구와 관련하여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오호십육국시대사 연구는 『진서(晉書)』·『자치통감(資治通鑑)』의 2차 사료에 의존하던 종래의 연구환경에서 벗어나 오호16국의 각국이 편찬한 국사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십육국춘추』와 『진서』·『자치통감』의 계승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서의 고구려 관계기사는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구려의 조공사(朝貢使) 파견 기사는 고구려가 그 상대국에게 전개한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데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의 교환은 양국 관계가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이해와 짝하여 외교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견사조공(遣使朝貢)'의 짧은 내용 속에는 고구려 사절이 입국한 뒤, 국경지대의 검문, 중앙에의 보고, 입경(入京)의 허용, 표문(表文) 봉정 등 사료로 전하지는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외교의 진행과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435년 고구려와 북위(北魏)가 맺은 책봉조공관계는 이러한 외교의 진행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였다. 아울러 책봉조공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혹은 책봉호의 내용만으로 이를 곧바로 우호관계의 성립으로 여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는 곤란하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확인된다.

『고려기(高麗記)』 등에 보이는 욕살(褥薩) 관련 기사는 찬자가 생소한 고구려 관제를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 용어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타인(李他仁)의 관력(官歷)에 보이는 '책주도독겸총병마(柵州都督兼摠兵馬)'의 구절은 당군 장수들의 관련 기록 속에서 유사한 기재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구절은 이타인의 본직이 책성욕살이며 여기에 '총병마'의 직함을 별도로 받아 12주(州) 고려(高麗)·37부(部) 말갈(靺鞨)로 구성된 출정군을 지휘했다는 내용으로 풀이되어야 옳다. 여기에서 고구려가 중국 남북조(南北朝) 이래의 '영직(領職)'이나 수당대(隋唐代)의 '행군(行軍)'과 유사한 관제와 군제를 운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양당서와 『자치통감』은 고구려와 당의 관계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사서들이지만 해당 자료의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 경과에 대한 편찬자의 의도적인 생략과 이에 따른 사실의 왜곡 상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645년의 전쟁 관련 기사는 이러한 사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644년 당(唐) 태종(太宗)이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은 양당서와 『자치통감』에는 수록되지 않은 자료로서, 645년 5월이 되면 요동반도(遼東半島)를 돌파한 당군이 압록강(鴨綠江) 이남으로 내려가 북진해 온 신라군과 만날 계획이었음을 알려준다. 이 사료의 발견으로 우리는 사서들이 묘사한 상승(常勝)의 전황과 달리, 당군은 개전한 지 반년이 되도록 요동반도 서북부, 달리 말해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李丙燾, 1976,『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金鍾完, 1995,『中國南北朝史硏究-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 一潮閣.

陳勇, 2010,『『資治通鑑』十六國資料釋證-漢趙·後趙·前燕國部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 2015,『『資治通鑑』十六國資料釋證-前秦·後秦國部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五胡の會 編, 2012,『五胡十六國覇史輯佚』, 燎原.

籾山 明, 1999,『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中公新書.

八木奬三郎, 1939,『滿洲都城市沿革考』.

논문

권중달, 2010,「『자치통감』의 사학사적 의미」,『韓國史學史學報』21.

김병준, 2011,「돈황 현천치한간에 보이는 한대 변경무역-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한국 출토 외래유물: 초기 철기~삼국시대』.

金貞培, 2007,「『三國史記』寶藏王紀 史論에 보이는 '柳公權 小說' 문제」,『韓國史學報』26.

盧泰敦, 1999,「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東方學志』44.

_____, 1999,『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안정준, 2013,「「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생애와 族源-고구려에서 활동했던 柵城 지역 靺鞨人의 사례-」,『목간과 문자』11.

梁鎭誠, 2023,「『十六國春秋輯補』所收『後秦錄』의 史的 考察(1): 後秦 前史-『十六國春秋輯補』卷49,「後秦錄」1 註解-」,『中國古中世史硏究』14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윤용구,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윤재석, 2010, 「진한대 호구부와 그 운영」, 『낙랑군 호구부 연구』.
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余昊奎·李明, 2017, 「고구려 유민〈李他仁墓誌〉의 재판독과 주요 쟁점 검토」, 『韓國古代史硏究』 85.
李成珪, 2013, 「前漢 內郡과 河西 4郡 간의 交易網 形成-肩水金關 出土 簡牘 通行證과 關出入者簿名籍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122.
李成制, 2004, 「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_____, 2005, 『高句麗의 西方定策 硏究』, 國學資料院.
_____, 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64.
_____, 2015, 「高句麗와 北朝의 冊封朝貢關係-領護東夷中郎將과 領護東夷校尉의 授受와 그 의미-」, 『東洋學』 58.
_____, 2018, 「褥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韓國古代史硏究』 92.
_____, 2023a, 「고구려의 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韓國古代史硏究』 109.
_____, 2023b, 「4장 북위와의 교섭 재개와 5세기 후반기 대외관계」, 『고구려 통사 4-고구려 중기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4, 「6장, 고구려 관련 국외 문헌사료」, 『고구려 통사 10-총론-』, 동북아역사재단.
이종록, 2022, 『고구려 전기 동해안지역 복속과 예족사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임기환, 2020, 「5장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 통사 1-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동북아역사재단.
洪承賢, 2023, 「『十六國春秋』 何本과 屠本의 輯佚 방식과 사료적 가치」, 『中國史硏究』 145.

武家昌, 1990, 「撫順市小甲邦漢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硏究」, 『北方文物』 2000-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孫守道, 1992,「漢代遼東長城列燧遺跡考」,『遼海文物學刊』1992-2.
王鍾翰·陳連開 1079,「戰國秦漢遼東遼西郡縣考略」,『社會科學輯刊』1979-4.
李新全 外, 2004,「關于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東北史地』2004-3.

關尾史郎, 2012,「「覇史」の概念とその佚文蒐集の意義について」,『五胡十六國覇史輯佚』.
楣山智史, 2019,「覇史の系譜-五胡十六國史料における繼承と再編」,『唐代史研究』22.
福井重雅, 1984,「『구당서』-その祖本の研究序說-」,『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山口正晃, 2017,「將軍から都督へ-都督制に對する誤解-」,『東洋史研究』76(1).
山尾幸久, 1974,「朝鮮三國の軍事組織-コホリのミヤケ研究序說-」,『古代朝鮮と一本』, 朝鮮史研究會 編, 龍鷄書舍.
三崎良章, 1982,「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朝鮮學報』102.
_____, 1983,「高句麗の對北魏外交」,『早稻田大學大學院文化研究所紀要別冊』9.
_____, 2000,「東夷校尉考-その設置と「東夷」への授與」,『西嶋定生博士追悼論文集 東アジア史の展開と一本』, 山川出版社.
石見淸裕, 1998,「邊境州縣における朝貢使節の待遇」,『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岩本篤志, 2010,「燉煌本『覇史』再考-杏雨書屋藏/燉煌秘笈『十六國春秋』斷片考」,『資料學研究』7.
齋藤武一, 1938,「撫順永安公園譽ケ丘遺蹟」,『滿洲史學』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국 사서 수록 고구려 관계기사의 이해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이성제

고구려 초기사(初期史) 연구에서 현토군(玄菟郡)과 고구려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에는 한대(漢代) 변군(邊郡)의 지배 양상, 변경(邊境) 군사(軍事)조직의 운용방식에 대한 중국 고대사(古代史)의 연구 성과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서(河西) 4군(郡)의 간독(簡牘) 자료에 보이는 명적(名籍)의 사례는 고구려 현령(縣令)이 주관했다는 명적이 호적이 될 수 없으며, 특정한 용도의 명부(名簿)임을 알려준다. 또한 현도군 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새(塞)와 장위(障尉), 그리고 봉수선(烽燧線)의 존재는 도위(都尉)-후관(候官)-부(部)-수(燧)로 이루어진 변군의 군정(軍政) 조직이 현도군에도 편제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오대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사 연구는 『진서(晉書)』·『자치통감(資治通鑑)』의 2차 사료에 의존하던 종래의 연구환경에서 벗어나 5호 16국의 각국이 편찬한 국사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사서 간의 계승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서의 고구려 관계기사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구려와 중원왕조(中原王朝)가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을 교환했다는 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양자가 상대국에게 전개한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데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다만 이러한 이해와 짝하여 외교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견사조공(遣使朝貢)'의 짧은 내용 속에는 고구려 사절이 입국한 뒤, 국경 지대의 검문, 중앙에의 보고, 입경(入京)의 허용, 표문(表文) 봉정 등 구체적인 외교의 진행과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기(高麗記)』 등에 보이는 욕살(褥薩) 관련 기사는 찬자(撰者)가 생소한 고구려 관제를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 용어로 설명한 내용이다. 특히 '책주도독겸총병마(柵州都督兼摠兵馬)'의 구절은 당군(唐軍) 장수들의 관력(官歷)에서 유사한 기재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그 의미는 병마(兵馬)를 지휘할 권한이 책성욕살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직이 책성욕살이며 여기에 '총병마'의 직함을 별도로 받아 출정군을 지휘했다는 내용으로 풀이되어야 옳다.

양당서(兩唐書)와 『자치통감』은 고구려와 당(唐)의 관계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사서들이지만 해당 자료의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 경과에 대한 편찬자의 의도적인 생략과 이에 따른 사실의 왜곡 상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645년의 전쟁 관련 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보인다. 상승(常勝)의 전황으로 묘사한 사서들의 왜곡 내용을 걷어내고 감추어진 실상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현도군, 『십육국춘추』, 『자치통감』, 책봉조공, 옥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Understanding Chinese Historical Records on Goguryeo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Approach

Lee Seongje

In studies of early Goguryeo history, whe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Xuantu Commandery(玄菟郡) and Goguryeo, it is essential to actively draw on the research achievements in ancient Chinese history regarding the modes of control exercised by Han dynasty border commanderies and the operational methods of frontier military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case of a name register(名籍) found in the bamboo slip(簡牘) documents of the four commanderies in Hexi(河西) indicates that a register purportedly supervised by a Goguryeo county magistrate could not have functioned as a household register(戶籍) but must have served a specific purpose. Furthermore, the appearance in records related to Xuanty Commandery as 塞 and 障尉, along with the existence of beacon lines(烽燧線), demonstrates that the military administrativ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rganization of the border army composed of the capital garrison officer(都尉), subordinate officials(候官), departmental officers(部), and signal towers(燧) was also established in Xuantu Commandery.

Recent studies on the history of the Five Hu(胡) and Sixteen Kingdoms period have moved beyond the conventional research environment which relied on secondary sources such as *the Book of Jin*(『晉書』) and the *Zizhi Tongjian*(『資治通鑑』) to grasp the overall picture of the national histories compiled by the various states of that era. In so far as the succession relationships among these official histories are revealed, the Goguryeo related accounts contained therein may prove instrumental in furthering our understanding.

The fact that Goguryeo and the chinese dynasties exchanged investiture(冊封) and tribute(朝貢) is a key factor in assessing the foreign policies that both sides deployed. However, alongside this insight,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process of diplomatic development. Within the brief account of "sending envoys to pay tribute"(遣使朝貢) is implicitly contained a detailed diplomatic procedure including the inspection of border regions after the Goguryeo envoy's entry, the report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granting of permission to enter the capital, and the presentation of formal memorials(表文 奉呈).

In texts such as the *Goryeogi*(『高麗記』), the account concerning Yoksal(褥薩) is the compiler's interpretation of an unfamiliar Goguryeo administrative system understood through his own conceptual framework and expressed in his own terminology. In particular, the phrase "柵州都督兼摠兵馬" is formulated in a manne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milar to that found in the official records of Tang generals. In this regard, the meaning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at the authority to command troops was vested in the office of Chaikseong Yuksal(柵城褥薩); rather, it indicates that his primary position was Chaikseong Yuksal, with an additional title of "General of the Troops"(摠兵馬) conferred upon him to command an expeditionary force.

Although the Liang Tangshu(兩唐書) and the *Zizhi Tongjian*(『資治通鑑』) are the principal official histories employed in studies of Goguryeo-Tang relations, caution is warranted in their use. This is because the compilers deliberately omitted details regarding the progression of events, thereby distorting the factual record. Such issues are particularly evident in the accounts of the war of 645; it is necessary to strip away the propagandistic narrative of "ever-victorious"(常勝) as portrayed by these sources and to uncover the concealed reality.

Keywords: Xuantu Commandery(玄菟郡), *Spring and Autumn Annals of the Sixteen Kingdoms*(『십육국춘추』), *Zizhi Tongjian*(『資治通鑑』), investiture(冊封) and tribute(朝貢), Yoksal(褥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3

고구려 고고 자료 연구의 동향과 해석

양시은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고구려 유적의 성격과 이해
III. 고구려 유물의 성격과 이해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중원의 고대 왕조 및 북방의 여러 세력과 끊임없이 경쟁하였던 고구려는 한반도의 다른 고대 국가보다 사회문화적 기반이 넓었다. 고구려의 문화는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성을 갖출 수 있었다. 역동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던 고구려 문화는 백제, 신라, 가야 등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통일신라와 발해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그 문화적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1]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독창성과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에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해당 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왕성, 왕릉과 귀족무덤'이, 북한에서는 벽화분을 위시한 '고구려 무덤군'이 각각 등재되었다.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등지에 남겨져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유적과 유물을 실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개별 보고서나 번역서 외에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간행한 『고구려 성』(여호규, 1998·1999)을 필두로 중앙문화유산연구원(구 중앙문화재연구원)의 『고구려의 고분문화』(2005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고구려 성 사진자료집』(이성제, 2006·2010),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정인성 외, 2008 등),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임기환 외, 2009·2010), 『평양지역 고구려 도성유적』(2013), 『황해도지역 고구려 산성』(2015), 『평안도지역 고구

* 투고: 2025년 1월 3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1 양시은, 2023a,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 한국고고학회 편, 『한국고고학 이해』, 진인진, 2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 산성』(2017),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여호규 외, 2020 등), 『충주 고구려비』(고광의 외, 2021),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북방지역 고구려·발해 유적 지도집』(2014), 『고구려의 토기』(2016), 『고구려의 철기』(2017),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2019),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의 도성』(20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 기와 –중국지역–』(2023) 등과 같이 기본 자료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2] 근래 발간된 『고구려 고고학』(강현숙 외, 2020)과 같은 개설서 역시 그간의 노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글은 『고구려 통사』(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0~ 2024)의 완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고구려 고고–유적 편』(2021)과 『고구려 고고–유물 편』(2023)에서 다루었던 고고 자료의 전반적인 성격과 주요 연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서술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고구려통사』에 수록된 원고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Ⅱ. 고구려 유적의 성격과 이해

1. 도성[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등의 문헌자료에는 고구려가 도읍을 옮긴 기사(移都, 遷都, 移居 등)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 개별 도성의 위치 및 천도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중국의 고대 도성은 일반적으로 평지에 황제나 왕이 머무르는 궁을 보호하

2 서울대학교박물관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전시도록 등은 생략하였다. 또한 분량 관계상 본문에서 단순 열거한 보고서 및 단행본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3 양시은, 2021c, 「도성체계」,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내성(內城)과 각종 행정관청 및 취락 등을 둘러싼 외곽(外郭)으로 구성된 방형 평면의 큰 성곽도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고구려는 중국과는 달리 중기까지도 도읍을 둘러싼 대형 성곽의 구조가 확인되지 않다가 6세기 후반 평양 장안성으로 천도한 이후에야 비로소 도시를 감싸는 외성(外城)을 갖추게 된다. 또 장안성은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돌로 성벽을 쌓은 바 토축 성벽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고대 도성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고구려 도성과 관련 기본 고고 자료는 『五女山城』(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國內城』(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丸都山城』(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고구려 평양성』(최희림, 1978), 「청암동토성에 대하여」(남일룡·김경찬, 1998·2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도성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주서(周書)』 고려전에 기록된 평양성에 대한 내용[4]과 개별 유적의 분포 양상을 토대로 고구려의 도성이 평지의 왕궁과 위급 시 사용된 배후의 산성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주장[5]은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1) 졸본 도성

「광개토왕릉비」에는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고 하고, 『위서(魏書)』에는 '흘승골성(紇升骨城)에 이르러 마침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졸본은 현재 중국 요령성 환인(桓仁)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환인 일대의 혼강(渾江) 유역에는 이른 시기 고구려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

4 '치소(治)는 평양성(平壤城)이다. 그 성은 동서가 6리이며 남쪽으로는 패수(浿水)에 닿아 있다. 성 내에는 오직 군량과 무기를 비축하여 두었다가, 적(寇賊)이 침입하는 날에는 곧 성안으로 들어가 굳게 지킨다. 왕은 따로 그 곁에 집(宅)을 마련하였으나, 평상시에는 거기에 살지 않는다.'

5 關野貞, 1914,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 25-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졸본 도성 연구의 가장 큰 쟁점은 왕이 평상시 업무를 보는 평지성 혹은 평지 거점에 대한 것이다. 졸본 도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통설은 하고성자토성(下古城子土城)과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6]이지만, 일부 연구자는 졸본을 혼강과 부이강(富爾江)의 합류지점 인근에 있는 나합성(喇哈城)으로 비정[7]하거나 혹은 오녀산성만 초기 도성으로 추정[8]하기도 한다.

오녀산성은 별도의 성벽을 쌓지 않고도 방어가 가능한 천혜의 요새이자 환인 분지 어디에서나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구려 초기 도성으로 상징성을 갖기에 충분하며,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고구려 초기에 활용되었음이 밝혀진 만큼 흘승골성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험준한 산 정상부에 자리한 오녀산성은 평상시 왕이 머무는 거처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정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상시 왕이 거처하며 정무를 보는 곳이 평지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고성자토성은 시굴조사에서 성벽 아래 수혈에서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어, 한대의 군현성이 아니라 고구려가 축조한 것임이 밝혀졌다.[9] 다만 오녀산성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광개토왕릉비」에서 언급한 졸본의 위치와는 차이를 보인다. 인근의 상고성자(上古城子) 고분군의 조영 연대로 볼 때 토성의 축조는 고구려 초기보다 약간 늦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토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 자료의 양상으로 볼 때, 졸본 도성의 평상시 왕의 거처에는 성곽이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오녀산성의 동쪽에 위치하며 이른 시기의 적석총부터 고구려 후기의 석실분까지 대규모 고구려 고분군이 자리한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부근의 수몰지구를 졸본의 평지 거점으로 보기

---

6 魏存成, 1985a,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2.

7 王從安·紀飛, 2004, 「卒本城何在」, 『東北史地』 2004-2, 43~46쪽.

8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觀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64~65쪽.

9 양시은, 2013, 「高句麗 城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한다.[10]

2) 국내 도성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인 국내는 중국 길림성 집안(集安) 지역으로, 통구(通溝) 분지 일대에는 국내성과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을 비롯하여 광개토왕릉비, 집안 고구려비, 태왕릉과 장군총 등 왕릉으로 비정되는 초대형 적석총이 분포해 있다.

국내 도성 연구의 주요 쟁점은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 시점과 당시 왕성의 위치, 그리고 국내성과 환도성의 운영 시기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유리왕 22년(기원후 3)에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尉那巖城)을 쌓았다'고 하나, 현재까지의 고고학 조사 결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 시점에 대해서는 ① 유리왕대,[11] ② 태조왕대(53~146년 재위),[12] ③ 신대왕대(165~179년 재위)[13], ④ 산상왕대(192~227년 재위)[14]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실 1906년 집안의 판석령(板石嶺) 도로공사 중에 발견된 관구검기공비(245년)를 제외하면 확실한 고고 자료가 거의 없어 국내로의 천도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신대왕 3년(167)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 사당(始祖廟)에 제사를 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적어도 2세기 중엽에는 졸본이 아닌 국내가 도읍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

10 梁志龍, 2008, 「關于高句麗建國初期王都的探討-以卒本和紇升骨城爲中心」, 『졸본 시기의 고구려 역사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6~38쪽.

11 魏存成, 1985a, 앞의 글; 박순발,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백제연구』 29 등

12 여호규,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권순홍, 2019,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13 임기환, 2015a,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구성-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9; 기경량, 2017a,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14 노태돈, 2012,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재 집안 지역의 성곽 유적은 국내성과 산성자산성(환도산성)뿐이다. 물론 유적의 분포 현황만 놓고 보면 국내 도성이 평지성과 유사시의 산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세키노[15]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중국 학계에서도 국내로 천도하면서 산성자산성을 축조하여 위나암성으로 삼고, 국내성 석축 성벽 아래에 있던 한대 토성을 평지성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라는 웨이춘칭(魏存成)의 주장[16]이 한동안 통설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고고학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2000년대 발굴조사를 통해 국내성 하부의 토축부는 한대 토성이 아니라 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토축기초(지정)부임이, 그리고 석축성벽 안쪽의 토축부에서는 회전대로 제작한 고구려 토기가 발견되어 국내성이 고구려 전기가 아닌 중기에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17] 이는 국내성 내부의 건물지 분포와 권운문와당의 출토 현황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18]

한편, 『삼국사기』에는 산상왕 2년(198)에 '환도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환도성으로 비정되는 산성자산성에서도 5세기대 이후로 편년되는 유물만 출토되었을 뿐, 2세기 말에서 3세기대로 편년되는 유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내성에서 출토되는 4세기대 권운문와당도 발견된 바 없다. 다만 「관구검기공비」를 고려하면 산성자산성이 3세기대에 존재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천도 시점부터 도성이 평지성과 방어용 산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2세기대 국내 도성의 양상을 졸본 도성처럼 평지성이 아닌 평지 거점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

15 關野貞, 1914, 앞의 글.

16 魏存成, 1985, 앞의 글.

17 심광주,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의 城郭硏究」,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179쪽.

18 여호규, 2019,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고구려발해연구』 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현숙은 초대형 무기단적석총인 마선구(麻線溝) 2378호분이 위치한 마선구고분군 일대에 국내 위나암의 왕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력한 후보지로 건강(建疆) 유적을 주목하였다.[19] 여호규 또한 3면이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어 별도의 성곽을 축조하지 않아도 평상시 거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마선구 일대를 국내 초기 도성으로 보았는데, 성곽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20]

그렇지만 마선구 평원 지대와 현 집안시내의 평원 지역은 그 넓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내로 천도할 시점에 굳이 좁은 마선구 지역을 천도지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임기환의 비판도 있다.[21] 이에 통구평야의 중심부인 현 국내성 일대가 일찍부터 '평지도읍(平地都邑)' 혹은 평지 거점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2]

3) 평양 도성

광복 직후부터 평양 도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 북한에서는 평양성의 모습을 기술한 『주서』의 기록을 토대로 전기 평양성이 대성산성과 안학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성산성은 전기 평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평지 왕성 부분은 논란이 있다.

우선, 안학궁은 고구려의 석실분을 파괴하고 조영되었음이 밝혀졌고, 성벽과 성문의 구조나 내부 건축물의 배치가 기존에 확인된 고구려 토성 유적과 차이가 확연하다. 또 성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와 와당 등 유물 다수가 고구려 후기 및 통일신라와 고려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평양 천도 시점이 아닌 고구려 후기[23]

---

19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28쪽.

20 여호규, 2019, 앞의 글, 18쪽.

21 임기환, 2018, 「고구려 國內 遷都 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 25쪽.

22 王志剛, 2016, 앞의 글; 기경량, 2019, 「고구려 왕도·도성의 공간과 경관」, 『고대 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제5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는 고려[24] 때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북한 학계에서는 여전히 해당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기 평양성의 또 다른 후보인 청암동토성 역시 성 중앙부에 청암리사지가 자리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토성에서는 서쪽 초석 건물지에서 벽화가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태왕릉과 장군총 등에서 수습된 국내성 시기의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 대성산성과 함께 평지 왕성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평양 동황성으로 이거하였다. 성은 지금의 서경 동쪽 목멱산 중에 있다'는 『삼국사기』 고국원왕 13년(343)조의 기록을 들어, 당시의 평양을 대성산성과 청암리토성 일대로 파악[25]하거나 평양 동황성을 청암리토성으로 추정[26]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전기 평양 도성이 평상시의 평지성과 비상시의 산성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대성산성만 왕성으로 비정한 새로운 주장도 제기되었다.[27]

한편, 고구려 도성의 모습은 6세기 후반 장안성으로 천도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장안성은 현 평양성으로, 북쪽의 모란봉과 을밀대, 만수대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3면은 대동강과 그 지류인 보통강을 자연해자로 활용하면서 자연 절벽과 능선에 성벽을 쌓았다. 성벽 외곽의 전체 둘레가 16km에 달하며, 기존의 고구려 성과는 달리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을 합친 평산성 구조이다. 내성·중성·외성·북성으로 구성되며, 특히 외성에는 도로를 기반으로 한 방리제(方里制)가 실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 왕성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

---

23 임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24 박순발, 2012, 앞의 글.

25 정찬영, 1966,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26 손영종,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7 기경량, 2017a, 앞의 글; 권순홍, 2019,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 지금은 고구려가 '건국 초부터 평지성과 산성을 짝으로 한 도성체제를 갖추었다'는 기존의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기존의 통설은 적어도 국내성이 축조되는 4세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 연구자는 전기 평양성 또한 평지에 별도의 성곽이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28]

2. 성곽[29]

고구려는 평지성을 쌓아 도시를 방어했던 고대 중국과 달리 산성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고구려는 험준한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성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점령이 쉽지 않았다. 고구려의 이와 같은 관방체계는 수·당과의 전쟁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고구려는 국경은 물론이고 도성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에 산성을 쌓아 다중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고구려의 유기적인 관방체계는 668년 당이 부여성(扶餘城)을 공략하자 인근의 40여 성이 항복했다는 기록이나 645년 요동성(遼東城)을 구원하기 위해 신성(新城)과 국내성에서 보병과 기병 4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 648년 박작성(泊灼城)을 구원하기 위해 오골(烏骨)과 안지(安地) 등 여러 성의 군사 3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 등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구려에서 성은 군사방어 뿐만 아니라 지방지배를 위한 기초 행정 거점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치소성(治所城)은 영토가 확장되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고구려 중기 이후에 효율적인 지방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다. 요동(遼東)이나 현도(玄菟) 등 수십 성에 모두 관청(官司)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다는 『북사(北史)』의 기록이나 지방에는 60여 성에 주(州)·현(縣)을 두었다는 『구당서(舊

28 양시은, 2021a, 「高句麗 都城制 再考」, 『한국상고사학보』 112, 82~83쪽.
29 양시은, 2021d, 「성곽」,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唐書)』의 기록은 고구려 내 치소성의 존재를 입증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은 고구려 멸망 이후 5부(部) 176성(城) 69만여 호(戶)를 9도독부(都督府) 42주 100현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翰苑)』에는 고구려 지방관을 대성(大城)의 욕살(褥薩)은 당의 도독(都督), 성(城)의 도사(道使)라고도 불리는 처려(處閭)는 자사(刺史), 누초(婁肖)는 현령(縣令), 소성(小城)의 가라달(可邏達)은 장사(長史)에 비견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태돈은 고구려 후기에 지방관은 욕살-처려근지-누초로, 치소성은 대성-성-소성으로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며,[30] 임기환은 9도독부는 욕살급, 42주는 처려근지급, 100현은 루초급에 대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31]

이 밖에도 고구려 중기 이후에 축조된 중대형의 평지성이나 하곡평지형 포곡식산성에서는 기와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고구려는 오직 불사(佛寺)·신묘(神廟) 및 왕궁·관부에만 기와를 사용하였다는 『구당서』의 기록을 고려하면, 이들 성에는 관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성은 250여 개소가 넘는다. 중국에는 150여 개소 이상이 있는데, 둘레가 1km가 넘는 중형급 이상의 산성이 많다. 2000년대 들어 환인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과 산성자산성, 통화 자안산성(自安山城), 심양 석대자산성(石台子山城), 유하 나통산성(羅通山城) 등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그 외 산성에 대한 조사 성과는 주로 약보고 형식으로 학술지에 소개되어 있다. 북한의 고구려 성은 50여 개소가량이 알려져 있는데,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연용이 이루어지면서 증·개축된 경우가 많다. 근래에 발간된 자료는 『고구려의 성곽』(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과 머리말에서 소개한 바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모두 개략

30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1 임기환, 2015b,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111~1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인 현황만 소개되어 있다. 남한에 소재한 고구려 성은 대략 50여 개소로, 둘레 400m 이하인 소규모 보루가 대다수이다. 그렇지만 상당수가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역시 발간되었다. 또 역사적으로 성의 운용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고구려 축성 기술 변화 및 편년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구려 성은 체성벽의 축조 재료에 따라 목책성, 토성, 토석혼축성,[32] 석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목책성은 연천 전곡리와 호로고루, 안성 도기동산성, 청원 남성골산성 등 남한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2열의 목책이 기본이다. 상부의 구조가 남아 있지 않아 목책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유적 중에서 구체적인 토층도가 제시된 고구려 토성은 환인 하고성자성뿐이다. 하고성자성은 성토법으로 축조되었는데, 김봉근은 고구려 성벽에서 판축용 틀을 설치하기 위한 목주, 판목, 횡장목, 종장목 등과 같은 구조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33] 그렇지만 서울 홍련봉2보루의 석축 성벽 안쪽 토축부에서 판축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어 고구려 토성 역시 판축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구려 석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돌의 가공 형태와 축조 방식에 있다. 쐐기형 돌과 북꼴 돌을 서로 맞물리게 쌓아 견고하다. 중국 학계에서는 한동안 성돌의 가공과 치석의 정도를 축조 집단이나 시간적인 속성으로 간주하였다.[34] 환인 및 집안 일대의 고구려 도성과 산성에서 쐐기형 돌로 정연하게 쌓은 성벽이 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32 토석혼축성은 외형상 토성과 구분이 쉽지 않아 토성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33 김봉근, 2021,「고구려 하고성자성의 축성기술과 그 의미」,『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고구려발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4 李殿福, 1998,「高句麗山城研究」,『北方文物』1998-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성벽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석재 가공 및 토목건축 기술이 필요하다. 환인 일대 이른 시기 고구려 적석총의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고구려 초기에는 인공성벽을 쌓을 만큼 석재 다루는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5] 또한 쐐기꼴 돌과 북꼴 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석축 성벽은 등탑 연주성(燕州城, 백암성)을 비롯한 고구려 중기와 후기의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돌의 가공 및 축성 방식만으로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36]

한편, 중기 이후의 고구려 성에서는 성벽의 기저부나 중심부는 흙을 채우고 외벽만 석축하거나 또는 내외벽을 모두 석축으로 하는 토심석축공법(土芯石築工法)이 확인된다.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된 성벽은 두꺼운 토축부와 얇은 석축부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토축부이고, 석축부는 외벽 경사를 유지하며 빗물에 의해 성벽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준다. 남한의 고구려 보루가 대체로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되었는데, 토축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박아 응력(應力)을 견디게 하였다.[37] 이와 관련하여 토축부의 목주열을 목책열로 오인[38]하거나, 보루의 토축부를 토성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39]

고구려 관방체계는 도성의 위치 및 고구려 정치사의 기존 연구 성과에 따라 크게 3기로 나누어보고 있다.[40] 최근에는 중국 학계의 기존 통설과 달리 고구려 산성의 본격적인 축조는 4세기 이후로, 5세기에 국내 도성 방어체계가 형성되

35 강현숙, 2015, 앞의 글, 24쪽.

36 李龍彬, 2008, 「鐵嶺境內高句麗山城的幾個問題」, 『東北史地』 2008-4.

37 심광주, 2014,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광진구.

38 양시은, 2013, 앞의 글, 179~181쪽.

39 안성현, 2016, 「홍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55; 백종오, 2024,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5.

40 양시은, 2013,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고, 6세기 이후에야 요동지역 관방 체계가 완전하게 갖추어졌다는 새로운 견해도 제시되었다.[41]

3. 고분

고구려 고분은 분구를 기준으로 크게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구분된다. 적석총은 지상에 돌을 깔고 시신을 안치한 뒤, 그 위에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일종의 분구묘로, 고구려 성립기부터 등장하였다. 봉토분은 흙으로 매장부를 덮은 무덤으로, 매장부는 횡혈식(橫穴式) 장법의 석실이 대부분이며, 고구려 중기 이후에 등장하였다. 이 밖에도 무덤 내부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벽화고분도 조영되었는데, 대개 석실봉토분이지만 간혹 적석총에서도 벽화가 발견되기도 한다.

고구려 고분은 분구의 축조 재료와 매장 방식, 벽화의 유무 등에 의해 여러 형식으로 나뉘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매장부는 석광(石壙)에서 석실로, 매장 방식은 단인장의 수혈식(竪穴式)에서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식으로 변화하였다. 적석총은 고구려의 발원지인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나, 봉토분은 고구려 전 영역에서 발견된다. 다양한 구조와 다채로운 내용의 벽화고분은 환인, 집안, 평양 등의 도성 지역과 황해도 일대에서 주로 확인된다.

1) 적석총[42]

적석총은 외형에 따라 강돌이나 가공하지 않은 할석을 간단한 돌무지 형태로 쌓은 무기단(무단), 외곽에 비교적 큰 할석으로 방형의 테두리를 만들어 내부의 강

41 趙俊傑, 2024, 「桓仁與集安地區高句麗山城防禦體系的形成」,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 동북아역사재단.

42 강현숙, 2021b, 「적석총」,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기단(방단), 가공된 장대석으로 기단을 만든 후 같은 방식으로 그 위에 여러 층의 단을 올린 계단(방단계제, 계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울타리를 두르듯이 돌을 쌓은 계장식(階牆式)도 있다.

적석총은 기본적으로 높고 크게 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분구는 무기단에서 기단식으로 축조되면서 방형 평면으로 정형화되었고, 이후 계단식으로 발전하였다. 대형분은 울타리를 두르듯이 쌓는 계장식에서 계단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1인이 안치됨으로써 매장이 마감되는 수혈식 장법(석광)에서 점차 2인 이상이 안치되는 횡혈식 장법(광실, 석실)으로 바뀌었다.

『후한서(後漢書)』 고구려조에는 '금과 은, 재물을 모두 써 후하게 장례를 치르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적석총이 고구려의 전통 묘제였음을 알 수 있다.

적석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기원과 변천, 왕릉의 비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적석총의 기원 문제는 요동반도 남단에서 신석기시대 말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축조된 적석묘로부터 출발한다.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강상(崗上) 및 누상(樓上) 무덤으로 대표되는 적석묘는 여러 기의 무덤이 함께 군집을 이루는 집단묘이다. 지상에 주검을 안치하고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였는데, 무덤에서는 화장이 행해졌다.

중국 학계에서는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 적석묘가 고구려 적석총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적석묘를 고조선의 묘제로, 고구려의 적석총은 고조선의 묘제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43] 다만,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은 시공간적 공백이 커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이에 리신취안(李新全)은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압록강 중·하류역은 요동반도 남단의

43 정찬영, 1967, 「고구려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96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장백 간구자(干溝子) 적석총을 거쳐 고구려의 적석총으로 변화하였고, 혼강 유역의 고구려 적석총은 석개석광적석묘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이다.[44] 이 견해는 중국 동북지역의 조사 성과들을 반영함으로써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으로의 변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국 학계의 기존 주장보다는 설득력이 있지만, 적석묘와 석개묘의 결합 과정이나 석개석광적석묘에서 석개가 사라지는 과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인 일대 석개석광적석묘와 장백 간구자 적석총 사이의 관계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45]

이 밖에도 왕멘허(王綿厚)는 통화 만발발자(萬發撥子)유적의 대석개묘, 석개적석묘, 토광석곽묘, 석관묘에서 화장이 관찰된 것에 근거하여, 춘추전국시대 다인합장의 토갱묘와 토갱석곽묘, 토갱석곽석관묘는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의 영향을 받은 예계(濊系)로, 전국시대 말에서 전한 초를 거치면서 출현한 화장을 한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와 적석묘는 맥계(貊系)의 무덤으로 보고, 맥계 묘제와 예계의 요소가 결합하면서 고구려 적석총으로 자체 발전하였다고 파악하였다.[46]

강현숙 역시 만발발자유적에서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 묘제에 다양한 형식이 병존하고, 구조, 장속과 토기 및 부장품 일부에서 선택적 결합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 또한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요소가 선택적·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47]

한편,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이었던 집안 지역에는 규모와 형태, 입지 등에서 다른 적석총에 비해 배타적 우월성을 가진 초대형 적석총이 존재한다. 이러

---

44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2009-1.

45 강현숙, 2021a,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 155쪽.

46 王綿厚, 2005, 「고구려문화와 중국 동북 예맥계 청동문화의 연원관계」,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

47 강현숙, 2021a, 앞의 글, 1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적석총은 한 변의 길이가 30~70m가량으로, 동시기 다른 무덤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또 독립된 묘역을 가지고 있으며, 적석분구 위에서 와당을 포함한 기와류가 출토된다. 여기에 묘역을 두르는 담장 시설이나, 제대(祭臺) 및 배장묘(陪葬墓) 까지 갖추고 있어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集安高句麗王陵』(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보고서의 발간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태왕릉'이라는 명문 전돌과 '신묘년호대왕(辛卯年好大王)'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방울이 출토되었으며, 광개토왕릉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태왕릉을 광개토왕의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도 태왕릉을 기준으로 왕릉의 특징을 도출하고 초대형 적석총 13기를 국내 도읍기의 왕릉으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조 변천에 입각하여 상대편년한 후, 수릉제(壽陵制) 시행을 전제로 기년명 와당을 포함한 출토 유물을 근거로 일부 묘주를 비정한 바 있다.[48]

그렇지만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의 "남녀가 결혼하면 곧 죽어서 입고 갈 옷을 준비한다"는 기사는 고구려에 수릉제가 존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수서(隋書)』 고구려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 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는 빈장(殯葬)의 기록이 있고, 광개토왕릉비에도 갑인년(414) 9월에 산릉(山陵)으로 이장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하니, 오히려 왕의 사후에 왕릉이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해당 보고서에는 왕릉의 연대 및 묘주 비정에 왕의 즉위년 혹은 몰년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이용, 수릉제 설정에 따른 적석총 축조연대와 묘주 매장연대의 차이, 묘상 건축에 쓰였다는 와당 연대가 번와(飜瓦)를 통해 무덤을 돌본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48 이희준, 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한국고고학보』 59, 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국내 도성 시기 고구려 왕릉의 비정[49]

	東潮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여호규	張福有	魏存成	임기환	이희준
마선구 2378					차대왕			
산성하 전창36					신대왕			
마선구 626					대무신왕		산상왕	
칠성산 871					태조왕	산상왕	신대왕 고국천왕	
임강총		동천왕		동천왕	산상왕	동천왕	동천왕	
우산하 2110					고국천왕	중천왕	중천왕	
칠성산 211			서천왕		서천왕	서천왕 미천왕	서천왕	
서대총	미천왕	서천왕	미천왕	미천왕	미천왕	미천왕	미천왕	
우산하 992	고국원왕		고국원왕		고국원왕	고국원왕	고국원왕	
마선구 2100	미천왕2차		소수림왕		봉상왕	소수림왕		
천추총	고국양왕	고국양왕	고국양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소수림왕	
태왕릉	소수림왕	광개토왕	광개토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광개토왕	고국양왕	고국양왕
장군총	광개토왕	장수왕	장수왕	광개토왕	장수왕	장수왕	광개토왕	

있다.[50] 이에 왕릉의 묘주 비정 문제는 수릉제를 가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고고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임기환 외,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43쪽 〈표3〉 수정.

50 이희준, 2006, 앞의 글, 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석실봉토분[51]

고구려 후기의 대표 묘제인 석실봉토분의 매장주체부는 석실이 대부분이지만, 도입 초기에는 전실(塼室) 내지는 천장 부분만 돌로 축조한 전석혼축실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표 2〉 평양 도성 시기 고구려 왕릉의 비정[52]

	東潮	趙俊杰	기경량	정호섭	강진원	강인구	최택선	주홍규	이도학
경신리1호분 (한왕묘)	장수왕	문자명왕	장수왕		문자명왕	장수왕		장수왕	
전 동명왕릉 (진파리10호분)	동명왕	장수왕	문자명왕	장수왕	장수왕	동명왕	동명왕		
토포리대총	문자명왕	안장왕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안장왕/문 자명왕			
호남리사신총	양원왕	안원왕	안원왕	안원왕	안원왕/ 양원왕	안원왕/ 양원왕			
동명왕릉1호분 (진파리4호분)		조다	양원왕	문자명왕					
동명왕릉9호분 (진파리1호분)			평원왕	안장왕					
강서대묘	평원왕	영양왕	영양왕	평원왕	평원왕	영양왕	영양왕		
강서소묘		양원왕	영류왕		보장왕		영류왕		
강서중묘	영양왕	평원왕	보장왕		영양왕	양원왕/ 평원왕	보장왕		
개마총									
동명왕릉4호분 (진파리7호분)				조다	조다				
내리1호분									영류왕

51 강현숙, 2021c, 「석실봉토분」, 『고구려 고고 – 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52 기경량, 2017b,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88, 〈표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석실봉토분 중에는 돌로 기단을 만든 후 석실을 조성하고 흙으로 봉분을 덮은 기단봉토분도 있는데, 이는 적석총과 석실봉토분의 축조 방식이 결합된 형식이다. 평양 지역의 대형 기단봉토석실분 중에는 평양 천도 이후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이 밖에도 석실 내부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벽화고분도 있는데, 벽화가 그려진 석실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며 천장 가구도 여러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평양 도성 시기의 고구려 왕은 장수왕부터 보장왕까지 모두 9명인데, 당 장안(長安)에 조성된 보장왕의 무덤을 제외한 8기의 무덤이 평양 인근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왕릉으로 비정할 만한 초대형 석실기단봉토분과 석실봉토벽화분은 경신리1호분, (전)동명왕릉, 토포리대총, 호남리사신총, 진파리1호분과 4호분, 그리고 강서대묘와 강서중묘로, 총 8기이다. 이 중 석재로 기단을 조성한 석실기단봉토분인 경신리 1호분, (전)동명왕릉, 토포리대총, 호남리사신총은 기단이 갖추어지지 않은 무덤에 비해 시기가 빠르다.

또한 평양 도성 시기의 왕릉급 석실봉토분은 한 변 길이 20~30m의 분구를 가지고 있다. 국내 도성 시기의 왕릉급 적석총에 비하면 분구의 규모가 작아진 것인데, 이는 석실봉토벽화분이 적석총처럼 분구 규모와 형태에 사회적 위계를 드러내는 무덤이라기보다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매장부를 지향하는 무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묘실 벽화의 주요 제재가 생활풍속에서 사신으로 변한 것처럼 사후관념의 변화와 관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덤의 입지 조건 또한 구릉 사면과 평탄 대지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장지 선정에서 지형 조건보다는 배타적 점유를 우선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전)동명왕릉의 동남쪽으로 120m 거리에는 '정릉(定陵)', '능사(陵寺)' 등의 명문토기가 출토된 정릉사터가 있다. 명문으로 볼 때 왕릉과 관련한 능사나 사당과 불교건축이 결합된 묘사(廟寺)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고분벽화[53]

고분벽화는 중국 한대에 유행한 장의예술 중 하나로, 고구려에는 영역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을 통해 도입되었다. 고분벽화는 벽화 자체가 예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헌 기록이나 고고 자료로써 확인하기 힘든 당대의 생활상과 문화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고구려인들의 죽음과 내세에 대한 관념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까지 고구려 벽화고분은 중국 환인과 집안, 그리고 북한의 평양과 안악 등에서 127기가 보고되었다. 고분벽화 주제는 크게 생활풍속, 장식도안, 사신(四神)이 있으며, 벽면에 회를 바른 뒤 그림을 그리거나 잘 다듬은 돌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주인공의 삶을 묘사한 생활풍속을 주제로 한 벽화가 도입되어 한동안 유행하였으나, 점차 죽은 자의 세계를 지키는 신수(神獸)로서의 사신이 벽화의 전면을 차지하게 된다.

고분벽화의 주된 관심은 기원과 계통에 대한 것이다. 집안 지역의 초기 벽화분으로는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만보정 1368호분과 우산하 3319호분이 있다. 만보정 1368호분은 석실봉토분으로, 벽면에 백회를 바른 후 기둥과 들보, 서까래 등을 그렸다. 반면 우산하 3319호분은 외형은 계단적석총이지만 내부는 전실(塼室)로, 백회를 바른 후 묘주의 생전생활 및 연꽃 등을 그렸다. 무덤의 내부 구조 외에도 동진대 청자가 다량으로 부장되었으며, '중랑(中郞)'이라는 관직명이 적힌 '정사(丁巳, 357년)'년명 권운문와당 등이 확인되어 중국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평주자사 동이교위 최비(崔毖)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당시 고구려의 지방이었던 황해도와 평양 일대에도 벽화가 그려진 석실봉토분이 축조되었다. 안악3호분(357년 조성)과 덕흥리무덤(408년 조성)은 벽면에 적힌 묵서명으로 인해 무덤의 축조 시기와 피장자의 내력을 가늠할 수 있다.

---

53 전호태, 2021, 「고분벽화」, 『고구려 고고 – 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묵서명에 따르면 안악3호분의 동수(冬壽)는 '유주 요동 평곽 도향 경상리(幽州 遼東 平郭 都鄕 敬上里)' 출신으로, '사지절 도독제군사 평동장군 호무이교위 낙랑상 창려·현도·대방태수 도향후(使持節 都督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玄菟帶方太守 都鄕侯)'를 지냈으며, 영화(永和) 13년에 69세의 나이로 죽었다. 동수(冬壽)는 전연을 세운 모용황의 사마(司馬)로 336년에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佟壽)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54]

안악3호분 주인공의 초상은 요양 상왕가촌(上王家村)의 서진대 벽화묘, 4세기대 초에서 중반 사이로 편년되는 조양 원대자(袁台子) 벽화묘의 초상과도 유사하다. 주인공은 장막 내 평상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비단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으며,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다. 주변에서 수발드는 시종들은 주인공에 비해 크기가 작다. 이러한 양상은 덕흥리 벽화고분과도 연결된다.

또한 안악3호분은 회랑을 갖춘 석실봉토분인데,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태성리3호분을 제외하면 고구려 석실봉토분에서는 회랑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회랑은 동한 말기 화상석 무덤에서 유행한 구조로, 요양 지역의 위·진시기 벽화묘에서도 발견된다.

만일 안악3호분의 피장자인 동수가 모용선비의 관리였고, 정치적인 이유로 고구려로 망명하여 과거 대방군의 영역이었던 황해도 일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면, 그가 거처했던 요서 지역의 서진대 혹은 모용선비의 문화가 고구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구려의 변방이었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고구려의 전통 묘제인 적석총이 아니라 벽화로 장식된 석실봉토분이 새롭게 등장한 점,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하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해당 지역에 변형된 전실묘가 여전히 축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구려가 중국의 유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점 등은 고구려와 북중국 세력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석실분처럼 새로운 유형의 무덤을 축조하거나 고분벽화라는 새로운 장의예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 장

54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造營과 祭儀』, 서경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망명 과정에서 장인집단도 함께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55]

다만 고구려가 고분벽화라는 외래적인 문화 요소를 수용하고 소화하는 방식은 선택적이며 제한적이었다. 벽화 도입 초기에는 전연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삶을 묘사한 생활풍속을 공통 주제로 삼으면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위·진 시기 요양 지역의 고분벽화에서 주요한 제재이던 연음백희(宴飮百戲) 장면이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천장부의 제재와 구성 방식도 다양한데, 해, 달, 별자리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구성의 삼연 벽화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덤 주인의 위세를 보여주는 행렬도와 사냥도는 주요한 제재로 취급되었다.

한편, 인물의 복식이나 기물 벽화에는 실생활의 모습이 담겼다. 안악3호분 동쪽 측실 내부에 그려진 부엌의 부뚜막이나 쌓여 있는 접시, 우물가의 동이와 옹 등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실제 유물과 동일하다. 행렬도에 그려진 각종 무구나 중장기병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벽화고분이 지역에 따라 축조 방식이나 구조가 통일되지 않고 벽화의 제재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입 과정이 결코 단선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분벽화라는 외래의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 역시 도입의 매개가 된 모용선비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건축유적[56]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즐겨 궁실을 지으며, 거처하는 곳

55 양시은, 2022, 「고분과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고고학』 21-2.

56 최종택, 2021, 「건축유적」, 『고구려 고고 - 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과 영성·사직에 제사한다"고 하였으며, 『구당서』 고려전에는 "산과 골짜기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모두 띠로 지붕을 엮었으며, 오직 사찰·신묘·왕궁 및 관청에만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고구려 사람들은 궁실을 잘 지었으며, 중요한 건축 부재였던 기와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분벽화에 성곽과 전각 및 건물의 구조가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연구에 참고가 된다.

고구려 건축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10년대에는 집안 동대자(東台子) 및 이수원자남(梨樹園子南) 유적 등이, 1930년대에는 평양성 내성의 만수대 건물지 및 평양 청암리사지 및 상오리사지, 원오리사지 등이 조사되었다.

중국에서는 1957년에 집안 동대자유적을 발굴조사하면서 건축 구조와 기능에 대한 논의가 얼마간 이루어졌으나, 고구려 건축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환인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 및 환도산성, 그리고 민주유적(民主遺蹟)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건축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말에 압록강의 지류인 독로강 유역에서 로남리유적을 조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평양 대성산성, 안학궁, 정릉사지 등을 발굴하였다. 이후 조사 성과와 고분벽화에 묘사된 건축요소 등을 바탕으로 고구려 건축의 종류와 상부구조, 기초시설 및 건축기술에 대한 개론서가 간행된 바 있다.[57]

남한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조사 성과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된 199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동대자유적 및 안학궁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57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한인호, 1995, 『조선중세건축유적연구(삼국편)』, 사회과학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고구려 유물의 성격과 이해

1. 토기[58]

고구려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기종이 평저(平底)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호·옹류는 목과 구연이 발달하였으며, 운반을 위한 용기류에는 대상파수(帶狀把手)가 부착되어 있어 삼국의 다른 토기와 구분된다. 기종은 30여 개에 달하는데, 관방유적과 생활유적에서는 거의 모든 기종이 출토되는 반면, 무덤에서는 구형호, 심발, 사이장경옹, 원통형삼족기, 부형토기, 시루, 완, 반, 호자 등 제한적인 기종만 확인된다. 사이장경옹이나 원통형삼족기를 비롯한 고분 출토 토기는 시유(施釉)된 것도 적지 않다.

고구려 토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중국에서 시작[59]되었는데,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60]가 있었다. 1990년에는 북한에서도 시유토기와 문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61] 남한에서의 연구 성과[62]가 두드러진다. 남한에서의 연구는 분석 대상이 시공간상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별 토기에 대해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제작 기법[63]과 기형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중국의 연구에 긍정적 자극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도 여러 편의 학위논문을 통해

58 최종택, 2023, 「토기」, 『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59 耿鐵華 · 林至德, 1984,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 1984-1; 魏存成, 1985b, 「高句麗四耳展沿壺的演變及有關的幾個問題」, 『文物』 1985-5.

60 東潮, 1988, 「高句麗文物に關する編年學的考察」,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10.

61 리광희, 1991, 「고구려시기 유약바른 질그릇의 변천」, 『조선고고연구』 1991-1.

62 최종택, 1998, 「高句麗 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 양시은, 2003,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의 종합화가 이루어졌으며,[64]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는 등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으며, 편년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구려 토기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전기(3세기 이전), 중기(4~5세기), 후기(6세기 이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기의 토기는 태토에 굵은 사립이 섞인 조질태토(粗質胎土)에, 회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빚은 토기가 대다수이다. 이 시기에 확인되는 기종으로는 심발, 장경호, 호, 동이, 시루, 접시, 합, 잔, 뚜껑 등이 있다.

고구려 토기는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발원한 혼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 일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지는 토기 제작 전통 위에 전국말~한대 회도(灰陶)의 영향이 가미되어 창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토기의 표면을 마연하는 방식이나 대상파수의 부착 등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전통으로, 니질태토(泥質胎土)와 회색토기 등의 속성은 새롭게 유입된 것으로 본 것이다.[65]

그렇지만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이었던 환인 오녀산성이나 망강루(望江樓)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에서는 니질태토와 마연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특징은 마성자(馬城子) 동굴유적을 시작으로 요동 지역 전체에 널리 퍼진 청동기시대 토기에서 관찰되며, 초기철기시대나 고구려 초기의 토기는 가는 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고 있어 재지적 전통의 계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철기문화의 도입과 함께 한반도에 전해진 니질화된 태토, 타날기법, 가마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 역시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66]

그럼에도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토기 중 일부 기형

64 孫顥,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65 박순발, 1999,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12.

66 양시은, 2021b,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파수가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 확인된다. 이에 고구려 토기는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집단이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 제작 전통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부여를 포함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4세기 이후가 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운 점토질의 니질태토, 회전대(돌림판)를 사용한 성형기법, 평저 기형, 횡위(橫位) 대상파수, 일부 기종의 시유, 특정한 문양의 시문과 암문(暗文) 기법 등이 나타나게 된다.

고구려 중기에는 거의 모든 기종이 등장하지만, 대형 옹, 직구옹과 같은 대형 토기는 중기 후반에, 광구호와 대부완은 후기에 나타난다. 동체부는 테쌓기와 함께 회전대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병이나 호의 어깨부위에는 횡침선대(橫沈線帶)와 함께 중호문(重弧文)이나 파상문, 점열문 등이 시문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강 유역 출토 고구려 토기에서는 6세기를 전후하여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다. 5세기대 토기는 아가리 끝이 둥글거나 직선으로 마무리되는 비중이 높은 반면, 6세기 이후의 토기는 아가리 끝을 밖으로 말아 접은 구연(口緣)의 비중이 높아진다. 또한 5세기대 토기는 동체 상단부에 횡침선과 함께 점열문, 파상문, 중호문 등의 문양이 새겨진 경우가 있지만, 6세기대 토기에서는 문양을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의 5세기대 토기 중에는 동체부 성형 과정에서 점토띠의 접합을 위해 타날을 실시하고 회전대를 이용하여 물손질 함으로써 표면의 타날 흔적을 지운 경우도 발견된다. 다만 475년 백제 한성 점령 당시 고구려 군대가 본토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 출토 토기와 6세기 전반 아차산 보루군 출토 토기에서는 타날 흔적이 남아 있는 토기가 거의 없다. 남한에서만 확인되는 타날 기법의 고구려 토기는 제작 과정에서 현지의 백제 장인이 참여한 결과로 추정된다.[67]

한편, 고구려 토기 중 완, 이배, 동이, 양이부호, 연통 등은 사비기 백제 토기

67 양시은,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 한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중 생활용기류는 고구려 토기의 기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일부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토기 제작 전통은 발해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고려 및 조선시대의 생활 용기에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옹기의 원형이 되었다.

2. 기와[68]

고구려의 기년명 기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내성 출토 '태녕 4년(太寧四年)'명 권운문와당이다. 태녕은 동진 명제(明帝)의 연호로 326년으로 비정된다.[69] 다만 집안 마선구 2378호분과 2381호분에서도 평기와가 출토되어, 고구려에서 1세기 무렵부터 기와를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집안 이수원자(梨樹園子) 남쪽 유적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에는 '조와소(造瓦所)' 및 '십곡의 주민이 만들었다(十谷民造)'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고구려 기와에서는 '관(官)'이나 '사(寺)' 등의 글자가 새겨진 예가 많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와 제작을 담당하는 관청과 관청이나 사찰에 기와를 조달하는 수공업 집단의 존재를 짐작케 한다.[70]

고구려 기와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동안은 와당의 문양을 중심으로 형식 분류와 편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연구 범위가 평기와로 확대되면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기술적 정보의 획득

68 백종오, 2023, 「와전」, 『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69 집안 제2소학교에서 출토된 '갑술(甲戌)'명 와당을 314년, 남문리에서 출토된 '대길(大吉)'명 와당의 기년을 '임신(壬申)'으로 보아 312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기경량, 2016,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권운문 와당 명문의 판독과 유형」, 『고구려발해연구』 56).

70 최종택, 2020, 「고구려유물」,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물론이고, 문자 및 도상 기와에 대한 해석, 와당 훼기(毁棄) 의례 행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려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를 기본으로, 수막새(와당), 마루수막새, 현월화, 착고, 배와, 치미, 기타 변형와 등이 있다.[71] 드림새에 문양이 장식되는 암막새는 고구려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집안 지역에서 손가락 끝(指頭文)이나 공구로 눌러 문양을 시문한 처마기와가 초대형 적석총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평양 천도 이후 출토되는 기와류는 적갈색 계통이 많은데, 집안 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기와류는 회색 계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암키와는 승문과 무문이 주를 이룬다. 예외적으로 집안 임강총, 칠성산 211호분과 우산 992호분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기와가 소량 확인되었다.

연천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적갈색 계통의 암키와는 좁은 각재를 둥글게 연결하여 만든 모골와통에 포목을 두르고 점토띠나 점토판 소지를 붙여 제작한 것이다. 기와 등면에는 승문, 거치문, 횡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복합문 등을 타날하였으며, 하단부 모서리를 잘라 귀접이를 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된다. 반면 수키와는 타날 후 문양을 지운 것이 대부분이다.[72]

수막새는 와당면의 문양에 따라 크게 권운문, 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복합문 와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4세기경에 출현한 권운문와당이 가장 빠르다. 한대에 유행한 권운문와당은 운문부가 4개로 구획되어 있는 반면, 고구려에는 운문부가 8개로 구획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국내성과 주변 건물지, 그리고 대형 적석총 등 집안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연화문와당은 불교 수용 이후로, 구획선(복선)이 있는 연화문와당은 4세기 후엽에, 5세기 후반경부터는 연화문 계열의 수막새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한다.[73]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와당 중 가장 많

71 주홍규, 2021, 「와전」,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 II-역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137쪽.

72 심광주, 2005b,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硏究」,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 1.

73 주홍규, 2021, 앞의 글, 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양의 종류도 다양하다. 집안의 대형 적석총에서는 회색 계통의 복선연화문와당이, 평양 지역에서는 적갈색 계통의 복선연화문와당과 일부 복합연화문와당이 출토되는 등 지역적인 차이가 감지되기도 한다.

한편, 수막새는 와범을 이용해 제작한 후 수키와와 접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고구려에서는 끼우기, 주연별도제작, 배면접합, 상부주연의 4가지 방식이 확인된다. 다만 연화문과 수키와부 제작기법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74]

이 밖에도 곱새기와, 현월와, 배와, 착고, 귀면와(마루수막새), 치미 등도 소량 확인된다. 지붕이 연결되는 경사면에 사용되는 현월와는 평양 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중국 전국시대나 한대의 반와당과는 달리 와당면과 수키와를 직각으로 접합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접합한 것이 특징이다.[75] 추녀마루나 내림마루의 끝단에 사용되는 곱새기와는 집안 환도산성과 평양 안학궁에서, 지붕마루 밑의 공간을 막는 착고는 집안 우산 3319호분과 천추총, 그리고 남한의 연천 호로고루에서, 용마루 좌우에 얹어 지붕을 장식하는 치미는 안학궁과 호로고루에서 출토되었다.

3. 무기와 무구[76]

고구려의 무기(武器)와 무구(武具)는 주로 성곽과 고분에서 출토되며, 고분벽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공성용 무기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없다.

북한 학계에서는 1950년대 말 벽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연

74 김진경, 2011, 「고구려 연화문 와당 제작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쪽.

75 주홍규, 2021, 앞의 글, 144쪽.

76 양시은, 2023b, 「무기 및 무구」, 『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출토 유물을 바탕으로 삼국시대 무기의 특성과 병종구성 및 전투 형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77] 남한에서도 1990년대부터 고구려 무기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78]이 진행되었으며, 문헌기록과 벽화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의 무기체계와 병종구성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79] 이후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고 2004년 중국에서 도성 및 주요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해지게 되었다.[80]

원거리 무기인 활과 관련한 고고 자료는 동리묘(佟利墓)로도 알려진 평양역전 이실분에서 출토된 골제 활 부속구가 유일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고구려에는 "맥궁(貊弓)"이라고 하는 우수한 활이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분벽화에도 여러 활이 묘사되어 있는데, 길이 1m가 넘지 않는 단궁(短弓)이 기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살의 끝부분인 철촉은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넓은 잎 모양의 광엽형(廣葉形), 날이 직선인 도끼날형(斧形), 세 갈래 날개가 달린 삼익형(三翼形), 도끼날형 철촉에 비해 촉신이 좁고 긴 형태의 착두날형(鑿頭刃形), 단면이 마름모꼴인 능형(菱形), 오각형의 납작한 촉두와 단면 방형의 긴 촉신에 좁고 긴 슴베를 가진 뱀머리 형태의 사두형(蛇頭形)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다양한 철촉의 형태는 기능적인 차이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고분벽화에서 한 장면에 다양한 철촉이 등장하거나 유적에서 여러 형식의 철촉이 함께 출토되기 때문이다. 고구려 중기 이후에는 이른 시기에 주로 확인되는 광엽형 철촉 대신 그 이전보다 슴베의 길이가 길어져 세장한 형태의 철촉이 유행하게 된다.[81]

---

77 박진욱, 1970, 「삼국무기의 특성과 그것을 통하여 본 병종 및 전투형식」, 『고고민속론문집』 2.

78 김성태, 1993, 「高句麗의 武器(1)」, 『문화재』 26 등.

79 여호규,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한국군사사연구』 2.

80 최종택, 2020, 앞의 글, 313~314쪽.

81 김보람, 2013, 「高句麗 鐵鏃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쇠뇌는 아직까지 실물로 발견된 사례가 없지만, 문헌에는 6세기 후반 고구려가 우수한 쇠뇌 제작에 힘을 기울였고, 이어 612년 수와의 전쟁 당시 성곽 전투에서 이를 적극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82]

도는 근거리 무기이다. 고분벽화에는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는 환두도(環頭刀)가 묘사되어 있으나, 실제 유적에서는 환두가 없는 도가 다수 발견된다. 무환두 역시 원래는 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나무자루가 달린 목병도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83] 주변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고구려의 환두도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은 경우(素環頭)가 대부분이지만, 환인 고력묘자 15호묘, 집안 마선 1호묘, 평양 병기창유적에서는 삼엽문(三葉文) 계통의 환두도가 출토되었다.

고구려에서 도끼(鐵斧)가 무기로 사용되었음은 안악3호분이나 약수리무덤 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환인 오녀산성이나 한강 유역의 아차산보루군에서는 실물자료가 출토되었다. 도끼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단인(單刃)의 횡공부(橫銎斧)와 양쪽에 날이 있는 양인부(兩刃斧)로 구분이 가능한데, 횡공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장병기를 대표하는 창의 경우, 문헌에서는 기병용 장창인 삭(矟), 보병용 창인 모(矛), 단창인 연(鋋)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 고고자료는 목제자루 없이 철제로 된 창끝(鐵鉾)과 창고달(鐵鐏)만 잔존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창끝은 관부(關部)의 형성 여부와 함께 끝부분의 형태에 따라 유관직기형(有關直基形), 무관직기형(無關直基形), 유관연미형(有關燕尾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관직기형이 연미형에 비해 먼저 출현하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시대의 갑옷은 찰갑(札甲)과 판갑(板甲)으로 구분되지만, 고구려에서는 작은 철편(小札)을 이어 붙여 활동성과 방어력을 높인 찰갑(札甲)만 확인된다.

---

82 정동민, 2020, 「612년 高句麗-隋 전쟁의 전개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34, 113~115쪽.

83 성정용, 2000, 「中西部地域 3~5世紀 鐵製武器의 變遷」, 『한국고고학보』 42, 1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천 무등리2보루 사례를 제외하면 완전한 형태의 실물 찰갑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북한의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감신총, 개마총, 그리고 중국의 통구12호묘, 삼실총 등과 같은 고분벽화에 갑주의 형태가 잘 묘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투구는 가늘고 긴 철판을 횡으로 연결하여 만든 종장판주(縱長板冑)와 작은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소찰주(小札冑)가 대표적이다. 간혹 복발이 없는 투구도 있는데, 정수리 부분에 유기질로 된 막음 장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투구 중에는 깃털이나 뿔을 부착하여 장식한 것도 있다. 투구와 관련한 실물 자료는 중국 환인 오녀산성과 무순 고이산성, 북한 농오리산성, 남한의 구리 아차산4보루, 연천 무등리2보루, 양주 태봉산보루 등 주로 관방유적에서 발견되었다.

4. 마구[84]

고구려에서 마구는 수레를 끄는 차마구(車馬具)와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써 기승마구(騎乘馬具)로 나뉜다. 이른 시기 적석총에서는 수레부속구의 하나인 차축두(車轄)나 차할(車轄)과 함께 재갈이 출토되어 차마구의 존재가 확인된다. 기승마구는 4세기에 출현한 중장기병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의 마구 연구는 등자나 행엽, 운주 등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마구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기승마구의 등장을 중국 동북지역의 모용선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구려의 기승마구는 신라, 가야로 확산되었고, 이들 마구는 다시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갈은 재갈쇠(銜)와 재갈멈치(鑣), 고삐이음쇠(引手) 등으로 이루어졌다. 재갈쇠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 철봉을 접거나 꼬아서 만들며 양 끝에는 둥근 고리가 있다. 재갈멈치는 막대형인 표비(鑣轡)와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판비

84 강현숙, 2023,「마구와 마갑주」,『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板轡)가 있다. 하구비적석총에서는 2개의 구멍이 뚫린 봉상의 표비가, 만보정 242호분에서는 S자형 표비가 출토되었는데, 차마구 용도로 추정된다. 금속제 경판비는 주로 4세기 이후의 무덤에서 기승마구와 함께 출토되고, 장방형의 입문이 달린 원형 또는 타원형의 경판에 재갈과 고삐이음쇠가 연결된 구조이다. 고삐이음쇠는 여러 형태에서 점차 양쪽 고리형으로, 그 길이는 점차 길어지는 변화를 보인다.

등자는 안장에 연결되는 자루와 발을 디딜 수 있는 받침부로 나뉜다. 등자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편년 문제와 관련하여 고대 동아시아의 교차 편년 자료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는데, 특히 풍소불묘(馮素弗墓)에서 출토된 단병 등자의 시기 문제는 국내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고구려 등자는 모두 자루의 길이가 긴 장병 등자로, 발받침부의 테두리가 둥근 윤등(輪鐙)이 주로 확인된다. 윤등은 재질에 따라 목심(木芯) 등자와 철제 등자로 나뉘는데, 나무로 등자 모양의 심을 만들고 그 위에 철판을 씌우고 못으로 고정한 것에서 등자 전체를 철로 만든 형태로 변화한다. 발받침부의 형태는 하트 모양에서 가로로 긴 타원형으로 바뀌며, 발을 받치는 답부는 일자형에서 여러 갈래형으로, 일자형은 못이 없는 것에서 못이 튀어나온 것으로 바뀌었다.

안장은 사람의 엉덩이가 닿는 부분인 거목(居木)과 앞뒤 한 쌍의 안장가리개(鞍橋)로 구성되어 있다. 안장가리개는 철제와 금동제가 있으며, 주로 고분에서 확인된다. 칠성산 1096호분과 마선구 1호분, 지경동 1호분에서는 좌목선구(座木先具)가 양쪽으로 나뉜 것이 출토된 반면, 장천 4호분과 만보정 1078호분에서는 좌목선구가 일체형인 안장가리개가 출토되었다.

마구 장식은 말 정수리를 장식하던 관자 또는 당루, 가슴걸이(胸繫)와 후걸이(尻繫)에 매달아 장식하는 말띠드리개(杏葉), 삼계(三繫)의 가죽 띠가 교차하는 곳을 고정하는 말띠꾸미개(雲珠)와 고들개에 다는 말방울(馬鈴, 馬鐸) 등이 있다.[85]

85 최종택, 2020, 앞의 글, 3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말띠드리개인 행엽은 심엽형, 타원형, 편원어미형, 검릉형 등이 있으나, 고구려에서는 심엽형만 출토된다. 말띠에 부착하는 운주는 처음에는 세움식이 없는 꽃모양 장식판(서대총, 우산하 992호분)과 반구형 장식판(산성하 전창1호분)이 사용되다가 차츰 반구형의 장식판 세움식(마선구 2100호분, 천추총, 우산하 540호분)이 더해져 반구형의 세움식 있는 운주(만보정 1078호분, 우산하 41호분, 장천 2호분)가 유행하게 된다.

고구려의 마구는 크게 3단계로 그 변화를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 1단계는 3세기까지로 아직까지 기승마구는 확인되지 않고 차마구가 중심이 되는 시기이다. 환인 망강루 고분군 출토 마구나 집안 임강총, 우산하 2110호분 등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 형상의 청동 차할은 길림 모아산(帽兒山) 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여 고구려 차마구의 등장은 부여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2단계는 기승마구가 출현하여 크게 확산된 4~5세기이다. 마구 세트가 일괄로 고분에 부장되고, 철제 갑주와 함께 마갑주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구려에서 기승마구의 출현은 중장기병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집안 칠성산 1096호분과 만보정 1078호분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마구 세트가 삼연(三燕)의 마구와 개별 성형기법, 형태, 그리고 조합상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86]을 고려하면, 모용선비 세력(전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승마구는 5세기에 들어서면 고구려식으로 변용되고 기능이 향상된다.

3단계에는 고분에서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고, 주로 성곽을 포함한 생활유적에서 차마구와 함께 기승마구가 출토되는데, 6세기 이후의 마구는 모두 철로 만든 것이어서 위신재로써의 기능이 사라지고 생활마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86 조윤재,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三燕과 高句麗의 문화적 교류」, 『선사와 고대』 43, 119~1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농구[87]

고구려의 철제 농구는 보습, 일(一)자형 삽날, U자형 삽날, 괭이(鐵钁) 등의 갈이농구, 쇠스랑과 같은 삶기농구, 철서(鐵鋤, 호미)와 같은 김매기농구, 그리고 낫과 같은 걷이농구로 구성되어 있다. 고구려 농구의 형태와 사용방식은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농구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구려가 성립되기 이전에 압록강 중류역에서는 주조괭이를 비롯한 연계 철기문화가 유행하고 있었지만, 고구려 성립 이후에는 단조괭이, 일자형 삽날, U자형 삽날, 낫과 같이 한대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철제 농구가 사용되었다. 4세기부터는 그 이전 단계의 농구와 더불어 고구려식 U자형 삽날, 쇠스랑, 철서, 보습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단조괭이만 사용했는데, 이는 백제·신라·가야 지역에서 단조괭이와 주조괭이를 모두 사용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U자형 삽날과 쇠스랑의 출현은 다양한 농구의 확대뿐만 아니라 농사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길이가 너비보다 긴 U자형 삽날이나 발이 짧고 발끝이 뾰족한 쇠스랑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볼 때, 이 농구는 논농사보다 밭농사에 주로 이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는 철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 고구려는 초기에 요동 지역 쟁기의 영향을 받아 한대 보습을 사용하였으나, 4세기 이후에는 투겁의 단면이 삼각형인 고구려식 보습을 쟁기에 사용하였다. 요하 유역의 선비족 문화권에서는 보습과 볏을 가진 쟁기가 사용된 것에 비해, 고구려에서는 보습만 달린 무상려만 확인된다. 역시 형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밭농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상의 여러 특징은 평양 천도 이전의 고구려에서는 산간의 평지를 이용한 밭농사가 발달하였음을 시사한다.

87 김재홍, 2023, 「생업도구 및 생활도구」, 『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장신구[88]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공적인 모임에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며, 금과 은 및 재물을 모두 써 후하게 장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실제 고분에서는 고구려 복식이나 장신구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지상에 노출된 적석총이 도굴되었거나 혹은 『북사』 열전의 기록처럼 매장이 끝나면 고구려에서는 죽은 사람이 생존 시에 썼던 의복·노리개·수레·말 등을 가져다가 무덤 옆에 놓아두는데,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를 다투어 가져갔다는 풍습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문헌에는 고구려 관인들은 비단 관에 깃 2개를 꽂고 금테나 은테를 섞어 두른다고 하였는데, 새깃은 신분 차이를 드러내는 장식이었다. 실제로 개마총, 쌍영총, 무용총 등의 고분벽화에도 직물로 만든 관에 새깃털 모양 장식을 끼운 조우관(鳥羽冠)이 묘사되어 있다.

집안 우산하 3105호분 출토 금동 관식(冠飾)에는 입식의 가장자리가 깃털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요령성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傳)집안 출토 금동관식에서도 이런 장식이 확인된다. 고구려 금동관식에서 보이는 조익형 관식, 산자형 장식, 깃털형 장식, 삼엽문 등의 요소는 5세기 신라 초기 관에서도 볼 수 있다.

귀걸이는 태환이식(太環耳飾)과 세환이식(細環耳飾)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태환이식이 고구려적인 특징을 더 잘 보여준다. 고구려의 귀걸이는 주환-유환(遊環)-중간식-수하식구조로 되어 있다. 태환이식에 소환구체(小環球體)와 심엽형 혹은 추형의 수하식을 갖춘 것이 전형적인 고구려 귀걸이라고 할 수 있다. 태환이식과 거의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세환이식은 신라 초기 귀걸이와 유사하여, 관과 함께 신라 장신구 문화의 기원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88 이한상, 2023, 「장신구」, 『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허리띠장식(帶金具)은 진(晉)과 삼연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진식대금구는 중국 중원왕조에서도 소유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고급 물품으로, 외교관계를 통해 주변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허리띠장식은 그 형태가 다양한데, 가운데가 오목한 장방형과 방형, 심엽형, 역심엽형으로, 수하식은 상방하원형, 방형, 말각방형, 심엽형 등으로 구분된다. 과판과 수하식의 결합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방식과 2개의 고리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산성하 152호분과 우산하 3560호분의 출토품은 장식의 세밀함 등을 볼 때 진으로부터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산하 3162호묘 출토품처럼 허리띠장식에 타원형 요패가 달린 것, 고구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횡장방형 허리띠장식에 말각방형의 수하식을 2개의 고리로 연결한 것은 중원 지역이나 삼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고구려화된 방식이다.[89]

금동신발은 우산하 3109호분, 칠성산 M1223호분, 장군총 제대 등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신발의 바닥면만 남아 있고 바닥에 금속제 못이 박혀 있으며, 바닥판의 가장자리에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신발과 접합하기 위한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다. 중원과 북방 지역의 무덤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된 사례는 없으므로, 남한에서 발견되는 금속못이 박힌 금동신발의 기원지는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고구려 고고 자료를 구성하는 유적과 유물의 전반적인 성격과 함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7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역 일원에서, 적석묘

89 최종택, 2020, 앞의 글, 264~2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영 전통과 연(燕)계 철기 문화를 영위하던 현지 세력과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으로 대표되는 집단의 결합으로 성립하였다. 고구려는 한(漢)으로 대표되는 중원과 주변 군현 세력에 맞서 도성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 험준한 산 정상부에 성을 축조함으로써 중국과는 대비되는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주변 국가의 토광묘나 전실묘와는 전혀 다른 적석총을 기본 묘제로 삼았다. 한으로부터 전래된 단조 철기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무기와 농구 등을 제작하였지만, 토기와 마구 등에서는 부여의 영향도 확인된다.

국내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점차 중앙집권적 왕권국가로서 발돋움하였으며, 4세기경에는 남으로는 평양과 황해도 일대까지, 서로는 압록강 하구인 단동 지역과 요동 일부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대형의 포곡식산성이 지방지배를 위한 치소성의 기능을 맡게 되었으며, 잘 다듬은 쐐기형 성돌로 쌓은 석성 외에 토성이 본격적으로 축조되었다. 적석총은 기단식에서 계단식 적석총으로, 그리고 매장주체부는 석광에서 석실로 변화하였으며, 국내 도성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적석총들이 조영되었다. 또한 4세기 중엽부터는 삼연으로 대표되는 모용선비 세력과 끊임없이 대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벽화고분, 마구세트, 암문, 허리띠장식 등이 고구려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고구려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는 외래문물을 적극적이면서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후 고구려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4세기대는 고분벽화, 건축, 토기, 기와, 마구, 농구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427년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요동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한 고구려는 평양 도성으로 향하는 여러 길목에 다중 방어체계를 갖추었으나, 이는 주로 서북쪽 전선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리고 주요 성에는 욕살을 비롯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고구려의 묘제는 석실봉토분으로 바뀌었는데, 적석총과는 달리 고구려의 전 영역에서 확인된다. 왕릉 역시 석실봉토분이 채택되었는데, 석실 내부는 벽화로 장식하였다. 고구려 후기의 고분벽화는 전체 벽면을 사신(四神)으로만 채우는 고구려의 독특한 장의예술로 승화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광개토왕대부터 시작된 남진으로 인해 현재 남한 지역에는 성곽과 고분을 비롯한 여러 고구려 유적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 결과, 축성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유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했다.

고구려는 발달된 철기문화를 보유하였으며, 이는 남한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다양한 제강기술과 단조철기 제작 공정이 존재하여 기능과 기종별로 적합한 소재 활용과 제작기술을 접목한 철기 제작기술체계가 갖추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90]

90 장은정, 2023, 「기타 금속기」, 『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造營과 祭儀』, 서경문화사.

손영종,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논문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_____, 2021a,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

_____, 2021b, 「적석총」, 『고구려 고고 – 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c, 「석실봉토분」, 『고구려 고고 – 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3, 「마구와 마갑주」, 『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권순홍, 2019,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기경량, 2016,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권운문 와당 명문의 판독과 유형」, 『고구려발해연구』 56.

_____, 2017a,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7b,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88.

_____, 2019, 「고구려 왕도·도성의 공간과 경관」, 『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제5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보람, 2013, 「高句麗 鐵鏃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근, 2021, 「고구려 하고성자성의 축성기술과 그 의미」, 『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고구려발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재홍, 2023, 「생업도구 및 생활도구」, 『고구려 고고 –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김진경, 2011, 「고구려 연화문 와당 제작기법 연구 –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발, 1999,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2,「高句麗의 都城과 墓域」,『백제연구』29.
백종오, 2023,「와전」,『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4,「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85.
성정용, 2000,「中西部地域 3~5世紀 鐵製武器의 變遷」,『한국고고학보』42.
심광주, 2005a,「高句麗 國家 形成期의 城郭硏究」,『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_____, 2005b,「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硏究」,『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1.
_____, 2014,「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광진구.
안성현, 2016,「홍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백제문화』55.
양시은, 2013,「高句麗 城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4,「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호남고고학보』46.
_____, 2021a,「高句麗 都城制 再考」,『한국상고사학보』112.
_____, 2021b,「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동북아역사논총』71.
_____, 2021c,「도성체계」,『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d,「성곽」,『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고분과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문화교류 양상」,『고고학』21-2.
_____, 2023a,「고구려의 사회와 문화」,『한국고고학 이해』, 한국고고학회 편, 진인진.
_____, 2023b,「무기 및 무구」,『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梁志龍, 2008,「關于高句麗建國初期王都的探討-以卒本和紇升骨城爲中心」,『졸본 시기의 고구려 역사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여호규, 2019,「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고구려발해연구』65.
王綿厚, 2005,「고구려문화와 중국 동북 예맥계 청동문화의 연원관계」,『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
이한상, 2023,「장신구」,『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이희준, 2006,「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한국고고학보』5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_____, 2015b,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_____, 2018, 「고구려 國內 遷都 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
장은정, 2023, 「기타 금속기」, 『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전호태, 2021, 「고분벽화」,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정동민, 2020, 「612년 高句麗-隋 전쟁의 전개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34.
정찬영, 1966,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_____, 1967, 「고구려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967-4.
조윤재,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三燕과 高句麗의 문화적 교류」, 『선사와 고대』 43.
趙俊傑, 2024, 「桓仁與集安地區高句麗山城防禦體系的形成」,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 동북아역사재단.
주홍규, 2021, 「와전」,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 Ⅱ-역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최종택, 2020, 「고구려유물」,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_____, 2021, 「건축유적」,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3, 「토기」, 『고구려 고고-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王從安·紀飛, 2004, 「卒本城何在」, 『東北史地』 2004-2.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觀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2.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2009-1.
李龍彬, 2008, 「鐵嶺境內高句麗山城的幾個問題」, 『東北史地』 2008-4.
李殿福, 1998, 「高句麗山城研究」, 『北方文物』 1998-4.

關野貞, 1914,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 25-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고구려 고고 자료 연구의 동향과 해석

양시은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고구려 통사』 완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고구려 고고 자료를 구성하는 유적과 유물의 전반적인 성격과 함께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역 일원에서 기원하였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험준한 산 정상부에 성을 축조함으로써 중국과는 대비되는 방어체계를 갖추었으며, 주변 국가와는 달리 적석총을 묘제로 삼았다. 연계통의 주조철기 제작기술 외에도 한으로부터 전래된 단조철기의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무기와 농구 등을 제작하였지만, 토기와 마구 등에서는 부여의 영향도 확인된다.

국내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점차 중앙집권적 왕권국가로서 발돋움하였다. 4세기대에는 중대형의 포곡식산성이 지방지배를 위한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으며, 쐐기형 성돌로 쌓은 석성 외에 토성도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석총은 기단식에서 계단식 적석총으로, 매장주체부는 석광에서 석실로 변화하였다. 왕릉은 초대형 적석총이었다. 한편, 모용선비 세력과 끊임없는 대립 과정에서 벽화고분, 마구세트, 암문, 허리띠장식 등이 고구려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전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면서 고구려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외래 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수용을 하였으며, 고구려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427년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요동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한 고구려는 도성으로 향하는 여러 길목에 다중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고구려의 묘제는 석실봉토분으로 바뀌었는데, 적석총과는 달리 고구려의 전 영역에서 확인된다. 왕릉 역시 석실봉토분이 채택되었는데, 석실 내부는 벽화로 장식하였다. 후기의 고분벽화는 전체 벽면을 사신으로만 채우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장의예술로 승화되었다.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 한성을 점령하고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남한에서 확인된 고구려 유적은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축성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유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였다.

주제어: 고구려, 고구려통사, 고고자료, 유적, 유물, 적석총, 고분벽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search Trends and Interpretations of Goguryeo Archaeological Remains

Yang Sieun

This paper commemorates the completion of the Comprehensive History of Goguryeo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y examining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Goguryeo's archaeological sites and artifacts, as well as key research issues.

Goguryeo originated around the Hun River basin and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Yalu River in the 1st century BCE. From its early days, Goguryeo constructed fortresses on rugged mountain summits, establishing a defensive system distinct from that of China, and adopted stone mound tombs as its burial practice, unlike neighboring countries. Its metalworking techniques included cast iron technology inherited from the Yan state and forged iron techniques introduced from the Han dynasty, which were utilized to produce weapons and agricultural tools. The influence of Buyeo culture is also evident in horse harness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relocating its capital to the Guknae region, Goguryeo developed into a centralized monarchy. By the 4th century, medium- to large-scale mountain fortresses with valley-enclosing structures served as administrative centers for regional governance. In addition to stone fortresses built with wedge-shaped stones, earthen fortresses began to appear. Stone mound tombs evolved from platform styles to stepped configurations, and burial chambers shifted from stone pits to stone chambers. Royal tombs were constructed as massive stepped stone mounds. Meanwhile, ongoing conflicts with the Murong Xianbei facilitated the introduction of mural tombs, horse harness equipment sets, dark burnished pottery, and belt decorations to Goguryeo. Furthermore, Buddhism, transmitted from the Former Qin, significantly influenced Goguryeo culture. Goguryeo demonstrated an active yet selective approach to integrating foreign elements, transforming them to suit its own cultural context.

In 427 CE, Goguryeo relocated its capital to Pyeongyang. Having secured complete control over the Liaodong region, the kingdom established multilayered defense systems along key routes leading to the capital. Its burial practices shifted to stone-chambered earthen mound tombs. Royal tombs also adopted this style, with their interiors adorned with mural paintings. Late-period tomb mural paintings evolved into a distinctive funerary art, filling entire walls with depictions of the Four Guardian Deities.

In 475 CE, Goguryeo conquered Baekje's capital, Hanseong, and extended its territory to the Geum River basin. Extensive excavations of Goguryeo sites in present-day South Korea have provided a deeper understanding of fortress construction techniques 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acilitated in-depth studies of its artifacts.

Keywords: Goguryeo, Comprehensive History of Goguryeo, Archaeological remains, Archaeological sites, Artifacts, Stone mound tombs, Mural tomb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4

20세기 전·중반 고구려 국가 형성 연구와 사회성격 논쟁

이정빈 | 경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II. 5족(族)·5부(部) 연구와 남한 학계의 국가형성론
III. 노예제 논쟁과 북한 학계의 일국발전사 정립
IV.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한국사의 보편성 추구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근대 역사학의 형식과 방법에 입각한 고구려사 연구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시작하였는데, 지금과 같은 이해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70년대까지 왕계(王系)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사료적 가치, 건국신화와 종족구성, 국가형성과 사회성격, 관제(官制)와 지배체제, 도성과 천도, 영역과 교통로, 전쟁과 국제관계 등 주요 주제가 탐구되었다.[1]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주제는 국가형성과 사회성격이었다.[2]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던 만큼 그의 국가형성과 사회성격에 대한 연구는 삼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고대사의 체계적인 이해를 견인할 수 있었으므로, 선결적인 주제로서 중시된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전반부터 축적되었는데, 논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3]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5부(部)를 중심으로 국가형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고, 그와 같은 사회의 성격(생산양식)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전자가 사료비판과 실증을 중시하였다면 후자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였고, 전자가 지배층의 편제와 같은 사회의 상층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피지배층의 처지와 같은 사회의 하층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갈래의 연구는 연구 시각과 방법이 상이하였는데, 각각 남·북한 학계의 통설

---

* 투고: 2025년 1월 9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3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1 盧重國, 1985, 「高句麗對外關係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盧泰敦, 1986, 「高句麗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政治史 理論-」, 『東方學志』 52.

2 임기환, 2006, 「고구려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白山學報』 76, 428~484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17~19쪽.

3 李基東,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3~4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인 이해를 구축한 바탕이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중반, 구체적으로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형성과 사회성격에 대한 두 갈래의 연구 궤적과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고를 통해 지금의 고구려사 연구를 돌아 보고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5족(族)·5부(部) 연구와 남한 학계의 국가형성론

고구려의 국가형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미나시 류(今西龍)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연구가 주목된다.[4] 이들 연구는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구려의 5족(族)·5부(部)에서 출발하였다.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라고 하였고,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라고 하였다.[5] 5족·5부(이하 고유명 5부)가 있었는데, "今", 즉 3세기 중반에 국왕은 계루부에서 배출하고 있었다고 한 것이다.

『후한서』 동이전에도 같은 사실이 전하는데,[6] 7세기 당(唐)에서는 "今高驪五部", 즉 당대(當代)의 내부·동부·서부·남부·북부 등 방위명 5부에 대응시켜 이해하였다. 『후한서』 이현(李賢, 653~684)의 주(注)와 『한원(翰苑)』 옹공예(雍公叡)의 주가 대표적이다.[7]

일찍이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7세기 당의

4 今西龍, 1921, 「高句麗五族五部考」, 『史林』 6-3; 1937, 『朝鮮古史の硏究』, 近江書店; 池內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五部」, 『東洋學報』 16-1.

5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동북아역사넷).

6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75 고구려(동북아역사넷).

7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75 고구려의 注(동북아역사넷);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의 注文(동북아역사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족·5부 이해를 수용하였다.[8] 5족·고유명 5부·방위명 5부가 모두 같다고 본 것이다. 나카 미치요는 부족명이었다고 하였고,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행정구역명이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마니시 류는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은 『위략(魏略)』을 전재한 것으로, 3세기 중반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과거시제인 "本"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5족은 5개의 부족으로 3세기 중반 이전에 5부족(고유명 5부)이 병립하였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3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왕권이 성장하고 5부족의 귀족이 계루부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를 편제하기 위해 방위명 5부가 성립하였다고 하였다.

이케우치 히로시는 이마니시 류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나아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5족·고유명 5부를 씨족(clan)으로 해석하였다. 많은 씨족이 분거(分居)하여 결합하며 유력한 씨족이 5족·고유명 5부를 구성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427년 평양 천도 이후 방위명 5부가 귀족의 편제 단위로 정착하고 성(城)을 단위로 한 지방통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완성되어갔다고 이해하였다. 이마니시 류·이케우치 히로시는 고구려가 씨족·부족(5족·고유명 5부)에서 출발해 국가(방위명 5부)를 형성하였다고 본 것이다.[9]

이와 관련하여 모건(Lewis Henry Morgan)의 『고대사회』(1877)가 참고된다. 이 책에서 인류는 「야만-미개-문명」의 단계로 진보하였는데, 혈연에 기반한 씨족과 이를 기초로 결합한 부족·부족동맹(부족연합)에서 지연·영역에

8 那珂通世, 1894~1896,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3~7~10; 1958, 「高句麗考」, 『外交繹史』(卷2), 岩波書店, 106~108쪽;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 25-4·5; 1970, 『白鳥庫吉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346~349쪽.

9 今西龍·池內宏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계에서는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38~43쪽처럼 7세기까지 고유명 5부의 전통이 지속되었다고 보아 방위명 5부 역시 혈연집단에 기초한 지배자집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반한 국가(state)가 건설되면서 문명이 개시되었다고 하였다.[10]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도 참고된다. 이 책은 『고대사회』(1877)에 기반하여 원시사회의 해체와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을 한층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고대사회』(1877)처럼 국가는 혈연집단이 아니라 지연집단을 단위로 하였고,[11] 지역에 따라 민을 구분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12]

이마니시 류·이케우치 히로시가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5족·고유명 5부를 혈연집단(씨족·부족)으로 보고, 방위명 5부를 통해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인류학 방면의 국가형성 이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은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의 역사발전단계론을 심화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고전으로 정립되었는데, 백남운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구려의 국가형성을 설명하였다. 『조선사회경제사(朝鮮社會經濟史)』(1933)가 그 대표적인 성과였다.

백남운은 『후한서』 동이전 및 이현의 주(注)에 보이는 고구려의 5족·고유명 5부가 각기 많은 씨족으로 구성된 부족이었고, 고유명 5부는 부족동맹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유명 5부의 부족동맹은 '원시적 부족국가'로 정의하였다.[13] 원시적 부족국가는 고대 노예제 국가의 서막으로, 4세기 율령 반포에 따라 노예제는 전성기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14] 3~4세기를 통해 원시적 부족국가에서

---

10 루이스 핸리 모건 지음, 최달곤·정동호 옮김, 2005, 『고대사회』, 문화문고, 19~23쪽; 머윈 S. 가바리노 지음, 한경구·임봉길 옮김, 1997, 『문화인류학의 역사』(개정판), 일조각, 68~73쪽; 류웰린 지음, 한경구·임봉길 옮김, 1998, 『정치인류학(2판)』, 일조각, 12~14쪽 참조.

11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91, 「1884년 제1판 서문」,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재판), 아침, 6~7쪽.

12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91, 위의 책, 231쪽.

13 白南雲, 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백남운전집1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 실천, 1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대 노예제 국가로 전환된다고 본 것이다. 원시적 부족국가를 상정한 점이 주의된다. 이른바 '과도기 국가'를 설정한 것이다.[15]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는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구려의 제가(諸加)와 하호(下戶)를 귀족과 노예의 계급으로 파악하였고, 그 전제로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가(家) 단위의 가족이 성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가장(父家長) 가족(이하 가부장 가족)이었다고 하였다.[16]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가부장 가족은 여러 세대의 가족과 비자유민으로 구성된 세대 공동체로, 원시사회의 씨족 공동체(혈연 가족·푸날루아 가족)와 고대사회 이후 유지된 개별 가족(일부일처제 가족)의 과도기 형태였다.[17]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고구려는 원시적 부족국가라고 하였는데, 이를 구성한 부족은 혈연집단에서 지연집단으로의 재편을 예비한 과도기 국가의 사회 단위였던 것이다.

백남운의 원시적 부족국가 설정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되며 비판을 받았지만,[18] 해방 이후 부족국가 개념은 폭넓게 수용되었다.[19] 예컨대 『조선민족사개론(朝鮮民族史槪論)』(孫晋泰, 1948)과 『조선사개론(朝鮮史槪說)』(京城大學 朝鮮史硏究會 編, 1949)에서도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는 여러 부족 중 가장 유력한 부족으로 고구려는 부족국가(부족연맹왕국·部落國家)였다고 하였다.[20] 그런데 이때 부족은 원시 씨족사회-가부장 가족이 완전히 붕괴되고 계급사회에 기초해 수립된 것으로,[21] 고조선(위만조선)이

14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위의 책, 180~181쪽.

15 余昊奎, 1996,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19, 222쪽.

16 白南雲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앞의 책, 130, 178쪽.

17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91, 앞의 책, 76~81쪽.

18 余昊奎, 1996, 앞의 글, 222~225쪽 참조.

19 朱甫暾, 1990, 「韓國 古代國家 形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회,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224~229쪽 참조.

20 孫晋泰, 1948, 『朝鮮民族史槪論』, 乙酉文化社, 64~66쪽; 京城大學 朝鮮史硏究會 編, 1949, 『朝鮮史槪說』, 弘文書館, 46~50쪽.

21 孫晋泰, 1948, 앞의 책, 45~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손진태(1948, 50쪽)의 씨족사회·부족국가 구분

	씨족사회시대	부족국가시대
정치	민주주의	귀족주의 발생
경제	공동생산·재산공유	재산공유제 점진적 붕괴·사유재산제 발생
사회	近親婚·씨족원 가족·남녀평등·무계급	遠親婚·개인주의 가족·남녀불평등·계급 발생(노예 生長)
문화	씨족	부족·귀족문화 발생
대외	씨족 전체 투쟁 및 방위행동	부족 투쟁 및 방위행동
민족	민족태동기	민족형성 초기

한국사 최초의 부족국가였다고 하였다.[22]

이처럼 『조선민족사개론』(1948)·『조선사개설』(1949)은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나아가 부족국가를 과도기 국가가 아닌 고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23] 『조선사개설』(1949)의 경우 고구려 태조왕대부터 "원시국가의 형태를 완전히 벗게 되어 국가다운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24]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을 혈연집단으로 설정한 데서 이탈하여 고대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단위로 본 셈이다. 가령 『한국사-고대편-』(1959)에서는 태조왕대부터 집권 국가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부족제가 붕괴되고 행정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25]

---

22 孫晋泰, 1948, 위의 책, 45~50쪽; 京城大學 朝鮮史硏究會 編, 1949, 앞의 책, 5~6, 9쪽.

23 해방 이후 백남운의 이해가 변화한 사정도 감안된다. 그는 무계급사회(원시씨족공동사회)와 계급사회를 구분하고, 계급사회를 다시 「아세아적 단계-노예소유자적 단계-봉건적 단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부족동맹·부족국가는 아세아적 단계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初계급사회로 서구의 고대사회와 구분된다고 하였다. 白南雲, 1946, 「조선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 『민족문화』 1;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1, 『백남운전집4 彙編』, 이론과 실천, 136~137쪽.

24 京城大學 朝鮮史硏究會 編, 1949, 앞의 책, 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족 개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의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였다.[26] 그 역시 이마니시 류·이케우치 히로시처럼 5족·고유명 5부와 방위명 5부를 구분하였는데, 5족·고유명 5부를 혈연집단인 씨족(clan)으로 본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시나 쇼에이는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나(那)와 통한다고 하였고, 나는 단일한 혈연집단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나의 어의를 추적해 이를 압록강 계곡의 지연집단으로 해석하였다. 고구려 국가형성의 기반이 혈연집단이 아니라 지연집단이었다는 것이다.

미시나 쇼에이는 지연집단이 크기와 발달 정도에 따라 부락(band)-부족(tribe)-국가(state)로 구분되는데, 나는 이 중에서 부족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원시적 소국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27] 고구려는 원시적 소국인 고유명 5부의 연합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4세기 미천왕대 왕권이 강화되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부족연합의 국가는 지연집단에 기초하였지만 원시성을 유지하였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갖춘 때부터 고대국가(고대왕권국가)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28]

이처럼 해방 이후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5족·고유명 5부를 지연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는데, 남한의 역사학계에서는 그것이 혈연집단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였다. 예컨대 김철준은 씨족과 부족을 구분하였고, 고구려가 씨족사회의 해체를 배경으로 부족국가를 형성했다고 했지만, 고유명 5부는 혈연집단 부족으로 공동체적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였다.[29] 고유명

25 震檀學會(李丙燾·金載元), 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236~237, 242~243쪽.

26 三品彰英, 1954,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 『朝鮮學報』 6; 김성현 譯, 2021, 「高句麗의 五族에 관하여」,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7 三品彰英, 1954, 위의 글, 39쪽 ; 김성현 역, 2021, 위의 글, 251~252쪽

28 三品彰英, 1954, 위의 글, 55쪽 ; 김성현 역, 2021, 위의 글, 270쪽

29 金哲埈, 1975, 앞의 책, 117~1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부·나가 씨족 공동체에 기반한 부족이었음을 중시한 것이다.[30] 이기백도 고유명 5부는 5족을 중심으로 한 부족으로 파악하였는데, 부족은 혈연집단이었다고 하였다.[31]

남한의 역사학계에서 부족·부족국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된 것은 1970년대였다. 특히 1971년부터 월간 『신동아(新東亞)』에서 5회에 걸쳐 각 방면의 연구자를 모아 한국고대사의 주요 문제를 토론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토론은 『한국상고사(韓國上古史)의 쟁점(爭點)』(1975)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다룬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부족·부족연맹·부족국가·고대국가의 개념에 대한 검토였다. 예컨대 이용희는 부족국가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32] 혈연집단과 지연집단은 구분되며 국가는 지연집단에서 성립한다고 하였다. 혈연집단의 일종인 부족과 지연집단인 국가는 엄밀히 나누어지므로, 부족국가 개념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종래의 부족국가를 대체할 용어가 고민되었다. 천관우는 고대국가를 「성읍국가-영역국가」로 구분하였고,[33] 이기백은 「성읍국가-연맹왕국-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구분하였다.[34] 예컨대 이기백은 성읍국가의 지배자로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피장자를 상정하였는데, 그는 권력을 가진 정치적 지배자였고, 지연 중심의 정치적 기구를 지녔다고 하였다.[35]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부족과 구분되는 한국사 최초의 국가로 성읍국가가 출현하였다고 본 것이다. 고구려의 고유명 5부는 성읍국가에서 비롯하였고 연맹왕국으로 출발하

30 金哲埈, 1975, 앞의 책, 120~122쪽.

31 李基白, 1959, 「高句麗 王妃族考」, 『震檀學報』 20;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85~86, 84~86쪽.

32 李用熙, 1975, 「古代 그리이스의 部族과 國家」, 千寬宇 編,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219~229, 232쪽.

33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 2; 1989, 『古朝鮮史·三韓史 硏究』, 一潮閣, 267~275쪽.

34 李基白, 1976, 『韓國史新論(改正版)』, 一潮閣, 25~26, 43~45쪽.

35 李基白, 1976, 위의 책, 25~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고 하였다.[36]

부족·부족사회·부족국가가 고조선 이후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서구의 신진화론에서 제시한 'band-tribe-chiefdom-state'의 발전단계를 소개하고 부족국가를 대신하여 치프덤(chiefdom)을 원용하기도 하였다.[37] 치프덤은 군장사회(君長社會)·군장국가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고대국가 이전의 과도기 국가였다.[38] 「원시 사회-군장사회(군장국가)-고대국가」의 발전단계를 구상한 것이다.[39]

이상과 같은 연구 경향 속에 고구려의 5족·고유명 5부에 대한 이해도 변화하였다. 노태돈의 연구가 대표적이다.[40] 그는 5족과 고유명 5부가 같다고 하였고, 고유명 5부는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미시나 쇼에이의 견해를 수용하여 고유명 5부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나를 원형으로 하며, 나는 지역집단(지연집단)이었다고 하였다.[41] 나아가 부의 성립은 국왕 집권(執權)의 부족연맹을 말해주는 것으로,[42] 고구려는 1세기 후반 이전에 고유명 5부가 확립되면서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43] 이에 따라 고유명 5부의 성립과 해체는 고구려 고대국가 형성의 전사(前史)가 아닌 고대국가의 한 단계로 설정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통설적인 논의가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

36 李基白, 1976, 위의 책, 37, 42쪽.

37 金貞培, 1973, 「韓國古代國家 起源論」, 『白山學報』 14.

38 자세한 논의는 李基東, 1984, 「回顧와 展望(古代)」 『歷史學報』 104, 167~171쪽; 1989, 「韓國 古代國家形成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新進化論의 援用문제를 중심으로-」, 『汕耘史學』 3 참조.

39 金貞培, 1973, 앞의 글, 77~82쪽의 경우 철기시대 이후 고조선·부여·고구려 등은 고대국가로, 삼한은 치프덤(準國家)에 견주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40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 -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41 盧泰敦, 1975, 위의 글, 4~5쪽.

42 盧泰敦, 1975, 위의 글, 9~10쪽.

43 盧泰敦, 1975, 위의 글, 13~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노예제 논쟁과 북한 학계의 일국발전사 정립

고구려의 사회성격에 대한 논의는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백남운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에 주목하였다.[44] 그는 동이전의 대가(大家)가 제가(諸加)를 가리킨다고 보고 이를 귀족이었다고 하였으며, 하호(下戶)는 노예였다고 하였다. 또한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라고 한 데서 형벌노예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남운은 3세기 고구려를 원시적 부족국가로 정의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회는 귀족과 노예의 계급관계에 기초하였다고 하였다.[45] 3세기 원시적 부족국가에서 이미 노예제가 성립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4세기 후반 율령의 반포를 통해 노예제가 확립되었다고 하였다.[46]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백남운은 고구려의 노예제 성립에서 정복전쟁을 중시하였다. 국왕은 정복전쟁의 결과 확대된 영역과 노예는 국유의 원칙 아래에 통제하였는데, 그 다수는 귀족 등에게 분할·사여하였고, 국왕·귀족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생산의 동력을 얻었다고 하였다.[47] 이에 '국왕·귀족-민'은 '노예주-노예'의 관계였다고 하였다. 정복전쟁을 통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노예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속의 노예제 사회였다.

주지하다시피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1933)를 저술한 주요 목적의 하나는 한국사에서 '원시 공산사회-고대 노예제-중세 농노제' 등의 세계사적 역사발전법칙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48]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공인받고자

---

44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동북아역사넷).
45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앞의 책, 148~149쪽.
46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위의 책, 180~181쪽.
47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위의 책, 187~19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다수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사에서 세계사적 보편성보다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하였다.[49] 그들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서구와 같은 전형적인 노예제가 부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고구려사 연구에서는 김광진의 연구가 대표적이었다.[50]

물론 김광진도 노비를 통해 노예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노예는 씨족사회에서 출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노비가 노예제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51] 김광진은 원시적 부족국가를 설정하는 데에도 반대하였다. 그는 3세기까지 고구려가 씨족사회였다고 하였다. 씨족을 사회 단위로 삼아 포족(胞族)·부족동맹이 형성되었는데,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가 부족동맹으로 후대의 방위명 5부로 이어졌다고 하였다.[52]

다만 김광진 역시 고구려의 국가형성에서 정복전쟁을 중시하였다. 4~5세기 정복전쟁과 영역확장을 통해 광역에 분포한 피정복 종족집단을 속민(屬民)으로 삼고 공납(貢納)을 수취함으로써 씨족사회를 해체하고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속민-공납 관계가 종족집단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족적 노예제'라고 하였다.[53] 그런데 김광진은 고구려의 국가형성이 씨족공동체를 바탕으로 했으며, 그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7세기까지 보이는 방위명 5부가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씨족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한 '동양적 전제정치'의 국가였다는 설명이었다.[54]

---

48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134쪽.

49 방기중, 1992, 위의 책, 160~170쪽.

50 金洸鎭, 1937, 「高句麗社會の生産樣式 -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 『普專學會論集』 3, 普成專門學校普專學會; 김지현 譯, 2015, 「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 -국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51 金洸鎭 著, 김지현 譯, 2015, 위의 글, 319~320쪽.

52 金洸鎭 著, 김지현 譯, 2015, 위의 글, 323, 331~337쪽.

53 金洸鎭·김지현 譯, 2015, 위의 글, 337~3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단 김광진만 아니라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사에서 국가적인 토지공유와 씨족공동체의 유제(사유재산의 미발달)를 강조하였는데, 해방 이후 전석담은 이와 같은 기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원시 공산 사회-봉건 사회」라는 발전 경로를 제시하였다.[55] 그는 고구려를 비롯한 한국사의 여러 나라에서 노예제는 부재하였다고 하였다.[56] 삼국 시기부터 조선 시기까지 사회적 노동의 중심은 농민이었고, 농민은 조세의 형태로 지대를 납부했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삼국 시기의 고구려도 농노제·봉건제 사회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북한의 삼국시대사 이해는 백남운의 연구를 바탕으로 통설을 구축하였다. 예컨대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조선고대사』(1951)에서는 삼국이 토지국유제의 원칙에 입각해 국왕·귀족이 다수의 노예를 지배한 고대 노예제 국가였다고 하였다.[57] 백남운의 연구에 기초한 서술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 김광진의 본격적인 반론이 펼쳐지며 논쟁이 재개되었다.

김광진은 1~2세기 한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거해야 할 문헌은 『삼국지』 동이전으로,[58] 그 가운데 가장 선진적이었던 고구려를 주목한다고 하였다. 〈표 2〉와 같은 사료 해석이 참고된다.[59]

김광진은 2세기까지 한국사 속의 제종족은 계급사회로 향해 가는 과도기에

---

54 金洸鎭 著, 김지현 譯, 2015, 위의 글, 347~356쪽.

55 전석담의 학문적 배경과 한국사 인식에 대해서는 주동빈, 2020, 「전석담 역사학의 숨은 '발원지'와 해방 전후 한국 사회경제사 인식 -도호쿠제국대학 경제학과와 '시대구분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8, 633~646쪽 참조.

56 全錫淡, 1948a, 『朝鮮史敎程』, 乙酉文化社, 28쪽; 1948b, 『朝鮮社會經濟史』, 博文出版社, 23, 25, 27쪽.

57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조선고대사』(1952, 연변교육출판사), 9~10쪽.

58 김광진, 1955a,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과정(상) -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력사과학』 8, 12~13쪽.

59 김광진, 1955a, 위의 글, 15~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김광진(1955)의 1~2세기 고구려 사회 이해

구분	사례	해석
1	國中大會 東盟	원시공동체 사회의 民會
2	소노부-계루부 교체, 국왕 共立	씨족 제도에 구속된 왕권
3	諸加評議	종족 조직의 평의회
4	無牢獄	강제 시설의 부재
5	那部를 동원한 전쟁	씨족·부족 단위의 군대조직 편성
6	諸大加의 사자·조의·선인	부족 자치기관
7	견노부의 종묘, 부여신 숭배	원시적 종교 형태

위치하였고, 계급과 왕권 그리고 사유재산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노예제 국가를 설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60]

그런 한편 고구려는 1~2세기 철기를 수용하며 생산력이 발전하였고,[61] 인접한 중국의 봉건사회와 접촉하며 봉건적 생산관계를 도입하였다고 하였다.[62] 『삼국지』 동이전에서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라고 하였듯,[63] 고구려는 옥저 사회를 통제하며 공납 관계(봉건적 농민)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봉건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고 하였다.[64] 그리고 정복을 통해 획득한 토지와 인민은 군사적·정치적 유력자에게 식읍으로 사여했는데, 식읍이 봉건적 영지의 맹아였다고 하였다.[65] 이와 같은 변화의 추이 속에서

60 김광진, 1955a, 위의 글, 19쪽.

61 김광진, 1955a, 위의 글, 36쪽.

62 김광진, 1955a, 위의 글, 38~39쪽.

63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동북아역사넷).

64 김광진, 1955b,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과정(하) -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력사과학』 9, 48~49쪽.

65 김광진, 1955b, 위의 글, 51~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낙랑·대방이 쇠퇴한 3세기 후반부터 국가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하였다.[66] 전석담처럼 봉건제 사회설을 주장하면서 고대국가 형성의 시점은 약간 상향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씨족공동체의 유제를 중시하였다.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고, 씨족공동체는 농촌공동체로 용해되었지만, 그 구성원의 씨족적 관계는 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신당서』 고려전에서 대대로의 취임을 두고 귀족 세력이 대립하는 모습, 연개소문이 국인(國人)의 동의를 얻어 부직을 승습하였던 모습이 씨족공동체의 흔적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삼국 시기까지 씨족 공동체의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노예제 생산양식이 병존하였다고 하였다.[67]

『조선사개요』(1957)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를 '조기 봉건사회'라고 정의하였다.[68] '조기 봉건사회'는 공동체 생산양식과 노예제 생산양식 그리고 농노제 생산양식이 병존하며 서로 투쟁하던 시기를 의미하였다. 조기 봉건사회설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 역사학계 내부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69] 1956년 10월 31일~11월 2일 과학원에서 열린 토론과 그 성과를 묶은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집』(김광진·도유호 外, 1957, 과학원 력사연구소; 1989, 일송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토론회에서는 노예제 사회설, 조기 봉건 사회설, 절충설(고구려·백제 노예제 사회, 신라 봉건 사회)이 경합하였다.[70]

---

66 김광진, 1955b, 위의 글, 61쪽.

67 김광진, 1955b, 위의 글, 62~65쪽.

68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조선사개요』, 국립출판사(1996, 한국문화사), 60~61쪽.

69 도유호, 1956, 「조선 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사회가 없었는가」, 『력사과학』 3; 김광진, 1956, 「삼국 시대의 사회-경제 구성에 과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상)·(하)」, 『력사과학』 5·6; 김응수, 1956, 「다시 한 번 조선 노예 시대 문제를 론함」, 『력사과학』 5.

7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盧泰敦, 1991, 「北韓學界의 三國時代史 硏究動向」, 歷史學會 編, 『北韓의 古代史硏究』, 一潮閣, 72~95쪽; 송호정, 1989, 「북한에서의 고중세사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 122~146쪽; 이경섭, 2017,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韓國史學史學報』 36, 119~125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쟁은 1959년 11~12월 과학원 력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종식되었다.[71] 1960년 역사학계의 합의를 발표하였는데, 삼국에 선행한 고조선을 (고대 동방형) 노예소유자 사회로 규정한다고 하였다.[72] 1962년에 발간된 『조선통사(상)』은 북한 학계의 새로운 통설을 잘 보여준다. 『조선통사(상)』(1962)에서는 고조선·부여·진국을 노예 소유주 국가로, 삼국부터 봉건 국가로 서술하였다.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구려의 대가(大家)는 봉건 지배층이었고, 하호(下戶)는 양인과 천민이었다고 하였다. 다만 노예제와 공동체의 유제가 있었다고 하였다.[73] 조기 봉건사회설이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통사(상)』(1962)에서 제기된 새로운 통설은 한편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의된다. 삼국 시기는 조기 봉건사회설에 따라 서술하였지만, 한국사 전반으로 보면 노예제를 설정함으로써 아시아적 특수성보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다.[74] 북한 학계의 새로운 통설에 따르면, 한국사는 '원시 공동체 사회-고대 노예제-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현대 사회주의'를 모두 경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소련에서 그러하였듯 일국사의 단선적 발전단계론을 확립한 것이다.[75]

일국사의 단선적 발전단계론이 확립됨에 따라 고구려의 국가형성 시점은 상향되었고, 발전단계는 높이 평가되었다.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일각의 학자들은 『삼국지』 동이전의 사료적 가치를 낮추어 보고,[76] 고구려 국가형성의 시점

71 편집부, 1960b, 「학계소식: 우리 나라에 존재한 노예 사회의 시기 문제에 대한 과학 토론회」, 『력사과학』 1, 120쪽.

72 편집부, 1960a,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4, 14쪽.

73 과학원,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73~74쪽.

74 홍종욱, 2016,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 『歷史學報』 232, 312쪽.

75 홍종욱, 2014, 「반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반역사학으로 -동아시아 '전후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서술-」, 『역사문제연구』 31, 82~83쪽; 2022, 「주체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140, 341, 344쪽.

76 김일출, 1955b, 「진수의 『삼국지』와 그 고구려전의 사료적 가치」, 『력사과학』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상향하기 시작했는데,[77] 『조선통사(상)』(1962)에서는 고구려가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의 한 세력으로 종족집단을 이루고 있었고, 기원전 1세기 중반에 국가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였다.

이제 북한 학계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왕계와 영역 확장을 설명하였고,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는 행정 구역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국가형성은 "남부 조선에서의 낡은 노예 제도의 붕괴와 새로운 봉건 요소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을 크게 추동하였다"고 평가하였다.[78]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 시기의 봉건제(농노제)가 발전하였다고 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리지린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그는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었는데, 국가-농민만 아니라 귀족-농민도 영주-농노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79] 평양 천도 이전의 경우 귀족-농민의 관계가 중요하였는데, 고유명 5부의 귀족은 자기 영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방위명 5부도 마찬가지였다. 방위명 5부는 수도와 지방에 있었는데, 부병(部兵)이 있었다는 점에서 영주와 같은 처지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리지린의 연구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속에서 지배층과 인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조선사회경제사』(1933)의 연장선상에서 생각된다.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제시된 백남운의 노예제 사회 이해를 농노제 사회 이해로 대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삼국 시기까지 봉건사회의 성립 시점이 상향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리지린의 연구는 『고구려사연구』(리지린·강인숙, 1976)를 통해 보완되었고, 『조선전사』(1979)에 반영되었다.

『고구려사연구』(리지린·강인숙, 1976)에서는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는 『삼국사기』의 나(那)와 동일한 것으로 정치적·지역적 단위였다고

77 김일출, 1955a, 「고구려 '유국 900년'설에 관하여」, 『력사과학』 1.
78 과학원, 1962, 앞의 책, 73~76쪽.
79 리지린, 1967, 「고구려의 령주제」, 『력사과학』 5, 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논의를 구체화하였다.[80] 이에 『고구려사연구』(리지린·강인숙, 1976)와 『조선전사』(1979)에서는 고유명 5부의 귀족이 봉건 영주였음을 분명히 하였고,[81] 2~3세기 고유명 5부의 봉건 영주를 중앙의 관료와 왕실의 인척으로 포섭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해갔다고 하였다.[82]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속에서 지배층(국왕·귀족)과 인민이 영주-농노의 관계(봉건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본 셈이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였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통설적 이해가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83]

Ⅳ.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한국사의 보편성 추구

이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남·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는 국가형성의 시점과 발전의 단계를 상향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제시기 식민주의 역사학을 의식한 측면이 다분하였다.

예컨대 이케우치 히로시는 고구려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일본 고대국가와 비견했는데, 일본사에 비추어 고구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완비 시점을 7세기 이후로 보고자 하였다.[84] 사료를 통한 논증과 달리 비교사의 시각에서 국가형성의 시점을 늦추어 본 것이다. 또한 이마니시 류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 주목된다.

---

80 리지린·강인숙, 1976,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8, 『고구려 역사』, 논장, 54~56쪽.

81 리지린·강인숙, 1988, 위의 책, 158~169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3-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5~55쪽.

82 리지린·강인숙, 1988, 위의 책, 174~175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위의 책, 73~80쪽.

83 손영종, 2007, 『조선단대사(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17, 42~56쪽 참조.

84 池內宏, 1926, 앞의 글, 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구려 사회는 부족 조직에서 부별 조직으로 변천하였다. 신라는 일찍이 부족 조직이 소멸하고 부별 조직이 있었지만, 진골과 성골 사이에는 오래도록 부족시대의 흔적이 남았다. 신라 통일시대에서 부별 조직도 점차 해체되었고 고려의 경우 지방인이 건립해 지배층이 일신되어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던 부별 조직은 완전히 소멸하였다. 가족제도로서 성에 따라 가계를 표시하였고, 이후 성이 발달해 본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성이 정치상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씨조선에 들어와 양반의 계급이 성립하였고 이후 성은 정치에서 다소 의미를 가진 경향이 있었다. 나아가, 양반이 계급으로 나뉘어 부별 조직으로 퇴화하려는 듯한 기이한 경향이 나타나려 할 때, 일본과 합치면서 국가 상황이 완전히 변화했다.[85]

이마니시 류는 한국사에 부족시대의 흔적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의 양반도 부별 조직으로 퇴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벌열과 세도정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고구려의 고유명 5부에서 방위명 5부로의 개편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전망하였지만, 한국사의 장기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부족의 흔적, 즉 원시사회의 혈연집단이 강고히 지속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원시사회의 유제는 일제의 한국 병합으로 일변하였다고 하였다. 정체성이 장기간 지속되던 중에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을 내재한 설명이었다.[86]

백남운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백남운은 조선민족이 "특수한 전통의 자손이 아니며 생물학적으로 진화해온 일반적·정상

---

85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硏究』, 近江書店, 442~443쪽.

86 今西龍와 池內宏의 연구에 내재된 식민주의에 관한 근래의 연구로,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박찬흥, 2017,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한국고대사 시기구분과 고조선·한사군 연구」, 『역사와 담론』 84 참조. 주로 식민주의 역사학의 타율성론이 검토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 인간이다"라고 하였다.[87] 제국주의에 맞서 아시아의 많은 역사학자는 자국의 역사를 유럽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 역사, 세계사로 보고자 하였다. 백남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88] 비록 김광진·전석담 등은 한국사의 아시아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주장하였지만, 그들 역시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다.

가령 전석담은 "조선의 사회적 발전과정의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노예제적 관계의 미발전을 충분히 평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혁명의 필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89] 그는 "선진 제국민(諸國民)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노예사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국사는 "선진 한민족(漢民族)의 발전한 봉건적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발전과정이 촉진"되었다고 하였다.[90] 전석담은 한국사의 정체성을 통해 혁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자 했고, 외부의 자극을 통한 역사발전의 비약을 전망하였다.[91] 김광진도 같은 생각이었다.

김광진은 이미 소련을 통해 북한·몽골·중국이 자본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92] 고대사에서 노예제를 경유하지 않고 봉건사회로 이행한 것도 그와 같은 비약의 사례였다.

맑스-레닌주의 역사학의 발전은 노예 소유자적 사회를 경과하지 않고도 원시사

87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앞의 책, 22~23쪽.

88 홍종욱, 2014, 앞의 글, 69~70쪽.

89 全錫淡, 1948b, 앞의 책, 33~34쪽.

90 全錫淡, 1948b, 위의 책, 31쪽.

91 오웬 밀러, 2011, 「해방공간과 전석담의 역사 인식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임지현 외,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241~242쪽.

92 김광진, 1955a, 앞의 글, 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회로부터 직접 봉건사회로 넘어간 특수한 발전을 한 나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를 경과하지 않고, 또 발전시키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낙후한 나라들은 선진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원조로써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에트 제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일정한 발전단계를 밟아서 공산주의에로 넘어갈 수 있다."[93]

한(漢)을 통해 고구려가 봉건사회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듯, 소비에트를 통해 북한도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광진·전석담은 정체성을 말하였지만, 식민주의 역사학과 비교해 현실 인식과 전망은 달랐다. 오히려 비약적 발전을 상정함으로써 정체성의 극적인 타개를 기대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사회성격 논쟁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을 의식한 가운데, 식민지-해방 직후의 현실 인식과 혁명에 대한 전망을 내포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역사학계에서는 일국사의 단선적 발전을 강조하였고, 한과 같은 외부의 영향은 전면적으로 배격하였다. 자주적 발전의 역사상이 추구된 것이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그 배경이었다. 여전히 북한의 역사학은 마르크스주의의 외형을 보였지만, 민족주의의 시각이 그를 잠식해갔다.

더욱이 남북 분단이 고착되면서 북한의 역사학은 민족주의를 넘어 국가주의에 예속된 면모를 보였다. 북한은 삼국 중에서 특히 고구려를 중시하였다. 고구려는 평양에 수도를 두었기에 평양에 수도를 둔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상징하였다고 본 것이다.[94]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사 인식이었다. 1972년 북한 헌법

93 김광진, 1957, 「조선원시사회 붕괴의 특수성과 봉건적 우클라드의 발생과정」, 김광진·도유호 外,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력사연구소(1989, 일송정, 16쪽)

94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준성, 2021, 「북한 정권의 평양 인식 변화와 활용 -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추이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65, 59~6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의 수도마저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되고, 주체사상이 확립되면서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사 인식은 더욱 견고해졌다.[95]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사 인식을 보였던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재조명되었고,[96]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역사학의 실증은 더욱더 약화되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은 남한의 역사학도 제약하였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신라를 중시한 면모를 보였다. 예컨대 이병도는 6·25 전쟁 중 한강 유역을 재수복하고 북한과 대치 중이던 남한의 현실 속에서 한강 유역을 바라보면서 남한을 삼국시대의 신라에 비견하였다. 신라처럼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남한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97] 신라 중심의 삼국시대사 인식이었다. 이와 같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한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는 부진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남한 학계에서도 1960년대 이후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이 전면에 등장하였고, 차츰 실증적인 연구가 축적되었다. 고구려사 연구에서도 새로운 전망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노태돈의 다음과 같은 회고가 참고된다.

> 1960년대 후반 사학과 강좌 중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식민주의 사학 극복을 강조하는 과목이었고,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학설이었다. 나 역시 이런 설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 시기 내가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 민족허무주의였고, 패배주의에 젖은 체념과 관념적인 자기만족 의식이었다. 패배된 상태에서 저항을 강조하는 민족 수난사 위주의 역사서 또한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패배와 좌절과 함께 승리와 성취도 함께 지닌 건강한 보통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갈망하였다. … 모색 끝에 이를 삼국의 중심 세력인 5부나 6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해해 보기로 하였다. 국가의 성립 문제에서 주목하였던 점은 국가가

95 조인성, 2009a, 「북한의 고구려통일론」, 석문이기동교수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96 조인성, 2009b,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

97 李丙燾, 1956, 「漢江流域의 歷史的意義」, 『斗溪雜筆』, 一潮閣, 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닌 일정 지역 내에 포괄된 집단들을 규합하는 '집권력의 존재'였다. 당시 중국 郡縣의 압박을 받고 있던 정세하에서, 고구려에서 집권력의 형성은 곧 遠心分離 작용을 하는 외세의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바이다. 幘溝漊 설치 기사를 통해 외세 배제를 확인하고, 5부의 형성 및 고구려 국가의 성립 시기를 상정해보았다. 백제와 신라도 구체적 대상은 달리하였지만 외세 배격을 통해 국가 형성을 가름해보았다. 아울러 삼국 초기의 국가구조와 계급 구성의 틀을 설정해보았다.[98]

노태돈은 1960년대 후반 많은 사학과 학생이 그러하였듯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학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 국가형성의 의미를 "외세의 배제"와 같은 한국사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보통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갈망하였다"고 하였다. 식민주의 역사학을 염두에 두고, 그를 비판적으로 봄으로써 한국사의 보편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 고구려의 5부와 국가형성 연구는 그와 같은 갈망 속에서 수행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 북한에서 나온 『고려사 연구』(1976)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 참고된다.

고구려의 5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고구려 역사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기원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전에 고구려의 5부를 5개의 혈연집단으로 해석함으로써 건국 초기의 고구려를 아직 원시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부족들의 연합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남조선의 반동사가들은 오늘도 의연히 고구려의 5부를 5개의 혈연집단으로 해석함으로써 초기 고구려 사회를 부족연합체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가 부당하다고 보면서 고구려의 5부는 부족연합체가 아니라 5개의 정치적·지역적 단위였다고 보면서 이제 그 근거를 들어보기로 한다.[99]

98 노태돈, 2015, 「나의 학문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77, 320~322쪽.

99 리지린·강인숙, 1976,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8, 『고구려 역사』, 논장, 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7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이 무렵 남한의 역사학계가 종전처럼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를 혈연집단-부족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와 달리 북한의 『고구려사연구』(1976)는 고유명 5부를 정치적·지역적 단위, 즉 지역집단으로 본다고 하였다. 남한의 통설적인 이해는 여전히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에 기반했지만, 북한은 이를 넘어섰다는 설명이었다.

전술하였듯 1970년대 이후 남한 학계에서도 부족·부족국가 개념이 재검토되었고, 고유명 5부를 지연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었다. 비록 연구의 방법과 시각은 달랐지만, 같은 시기 남·북한의 연구는 비슷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슷한 결론이란 국가형성의 시점과 발전단계를 상향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 다시 말해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 연구 시각과 방법의 차이에도 지향은 같았던 것이다.

Ⅴ. 맺음말

고구려의 국가형성에 대한 연구는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5족·5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였다.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유명 5부는 7세기 사료에 보이는 방위명 5부와 동일시되었는데, 1920년대부터 이를 구분하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를 통해 고대국가 형성을 조망하였다. 즉, 5족·고유명 5부는 씨족·부족의 혈연집단이었고, 방위명 5부는 고대국가 지배층의 지역적 편제로 지연집단이었다고 하였다. 해방 이후~1950년대 중반 고유명 5부도 지연집단이었다고 본 견해가 등장하였지만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부족·부족국가 개념이 재검토되면서 고유명 5부는 지연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고대국가 형성의 시점은 상향되었고, 지금의 통설적인 이해가 기반을 마련하였다.

1930년대 백남운도 5족·고유명 5부를 씨족·부족으로 이해하였는데, 그는 3세기 고구려의 부족이 계급사회에 기초하였고, 대가(大家)와 하호(下戶)는 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예주-노예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고구려의 5부 연맹은 원시적 부족국가로, 노예제의 원형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4세기 율령 반포 이후 노예제를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백남운의 이해에 대해 김광진·전석담 등은 3세기까지 원시 공동체사회가 지속되었고 노예제는 부재하였다고 하였다. 해방 이후 그들은 한국사가 노예제 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봉건사회로 이행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양자의 견해 차이는 1950년대 중·후반 북한 역사학계의 주요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전반 북한 학계는 고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이를 계승한 고구려를 봉건제 사회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국사의 발전단계론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까지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고구려 국가형성기부터 고유명 5부의 지배층과 농민이 영주-농노 관계였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고구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속에 지배층을 포섭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봉건국가가 성립하였다고 하였다. 지금의 통설이 윤곽을 잡은 것이다.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의 연구는 고구려 국가형성의 시점을 늦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다. 원시시회의 유제가 강고히 지속되었다고 하였고, 한(漢)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내재된 식민주의였다. 일제시기~1970년대 남·북한의 연구는 고구려사 연구에 투영된 식민주의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국가형성의 시점과 발전의 단계를 상향해갔다. 식민주의 역사학을 비판하며 이를 전도하고자 한 반(反)식민주의의 지향이었다.

분단으로 남·북한은 삼국시대사의 중심에 각기 신라와 고구려를 두며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연구 방법과 시각에도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1970년대까지 남·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는 모두 식민주의를 넘어 한국사의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노선은 달랐을지언정 추구한 바는 같았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京城大學 朝鮮史硏究會 編, 1949, 『朝鮮史槪說』, 弘文書館.

과학원,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조선사개요』, 국립출판사(1996, 한국문화사).

金哲埈, 1975,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루이스 핸리 모건 지음, 최달곤·정동호 옮김, 2005, 『고대사회』, 문화문고.

류웰린 지음, 한경구·임봉길 옮김, 1998, 『정치인류학(2판)』, 일조각.

리지린·강인숙, 1988, 『고구려 역사』, 논장.

머윈 S. 가바리노 지음, 한경구·임봉길 옮김, 1997, 『문화인류학의 역사(개정판)』, 일조각.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 상-』, 역사비평사.

白南雲 지음, 하일식 옮김, 1991, 『백남운전집4 彙編』, 이론과 실천.

_____, 1994, 『백남운전집1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 실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3-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손영종, 2007, 『조선단대사(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孫晋泰, 1948, 『朝鮮民族史槪論』, 乙酉文化社.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歷史學會 編, 1991, 『北韓의 古代史硏究』, 一潮閣.

李基東,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李基白, 1976, 『韓國史新論(改正版)』, 一潮閣.

_____,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李丙燾, 1956, 『斗溪雜筆』, 一潮閣.

임지현 외, 2011,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全錫淡, 1948a, 『朝鮮史敎程』, 乙酉文化社.

_____, 1948b, 『朝鮮社會經濟史』, 博文出版社.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조선고대사』(1952, 연변교육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震檀學會(李丙燾·金載元), 1959,『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千寬宇, 1989,『古朝鮮史·三韓史 硏究』, 一潮閣.
千寬宇 編, 1975,『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91,『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재판)』, 아침.
한국고대사연구회, 1990,『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今西龍, 1937,『朝鮮古史の硏究』, 近江書店.
那珂通世, 1958,『外交繹史』(卷2), 岩波書店.
白鳥庫吉, 1970,『白鳥庫吉全集 3-朝鮮史硏究-』, 岩波書店.

논문

김광진, 1955,「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과정(상)·(하) -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력사과학』 8·9.
_____, 1956,「삼국 시대의 사회-경제 구성에 과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상)·(하)」,『력사과학』 5·6.
金洸鎭 著, 김지현 譯, 2015,「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 -국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전통문화연구』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김응수, 1956,「다시 한 번 조선 노예 시대 문제를 론함」,『력사과학』 5.
김일출, 1955a,「고구려 '유국 900년'설에 관하여」,『력사과학』 1.
_____, 1955b,「진수의『삼국지』와 그 고구려전의 사료적 가치」,『력사과학』 3.
金貞培, 1973,「韓國古代國家 起源論」,『白山學報』 14.
盧泰敦, 1975,「三國時代의「部」에 關한 硏究 -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韓國史論』 2,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노태돈, 2015,「나의 학문 활동」,『한국고대사연구』 77.
도유호, 1956,「조선 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사회가 없었는가」,『력사과학』 3.
盧重國, 1985,「高句麗對外關係史硏究의 現況과 課題」,『東方學志』 49.
盧泰敦, 1986,「高句麗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政治史 理論-」,『東方學志』 52.
리지린, 1967,「고구려의 령주제」,『력사과학』 5.
李基東, 1984,「回顧와 展望(古代)」,『歷史學報』 104.
_____, 1989,「韓國 古代國家形成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新進化論의 援用문제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심으로-」, 『汕耘史學』 3.
박찬흥, 2017,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한국고대사 시기구분과 고조선·한사군 연구」, 『역사와 담론』 84.
三品彰英 著, 김성현 譯, 2021, 「高句麗의 五族에 관하여」,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송호정, 1989, 「북한에서의 고중세사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余昊奎, 1996,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19.
이경섭, 2017,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韓國史學史學報』 36.
이준성, 2021, 「북한 정권의 평양 인식 변화와 활용 -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추이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65.
임기환, 2006, 「고구려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白山學報』 76.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조인성, 2009a, 「북한의 고구려통일론」, 석문이기동교수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_____, 2009b,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
주동빈, 2020, 「전석담 역사학의 숨은 '발원지'와 해방 전후 한국 사회경제사 인식 -도호쿠제국대학 경제학과와 '시대구분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8.
편집부, 1960a,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4.
_____, 1960b, 「학계소식: 우리 나라에 존재한 노예 사회의 시기 문제에 대한 과학 토론회」, 『력사과학』 1.
홍종욱, 2014, 「반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반역사학으로 -동아시아 '전후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서술-」, 『역사문제연구』 31.
_____, 2016,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歷史學報』 232.
_____, 2022, 「주체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14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武田幸男, 1980,「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學生社.
池內宏, 1926,「高句麗の五族及五部」,『東洋學報』1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20세기 전·중반 고구려 국가형성 연구와 사회성격 논쟁

이정빈

오늘날 고구려사 연구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20~1970년대였다. 연구의 주된 과제는 국가형성과 사회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었다. 이 글은 연구 쟁점을 정리하고 사학사적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국가형성 연구는 1920년대 5부(部)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사료 속의 부를 씨족·부족의 혈연집단과 지연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를 통해 고대국가 형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연집단의 성립 시점을 상향하면서 지금의 통설이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성격 연구는 1930년대 노예제의 성립을 검토하면서 시작하였는데, 노예제의 존부를 두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해방 이후 노예제 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봉건사회로 이행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1960년대 전반 북한 학계는 고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이를 계승한 고구려를 봉건제 사회로 규정하며 일국사의 발전단계론을 확립하였다. 현재 북한 학계의 통설이 윤곽을 잡은 것이다.

일제시기 일본인 역사학자의 연구는 일본사를 기준에 두고 고구려의 발전을 늦추어보고자 한 경향이 있었다. 원시시회의 유제가 강고히 지속되었다고 하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한(漢)의 영향을 크게 강조하였다.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었다. 한국인 역사학자는 그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였다. 해방 이후 분단으로 남·북한은 연구 방법과 시각에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식민주의를 넘어 한국사의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노선은 달랐을지언정 추구한 바는 같았다.

주제어: 씨족, 부족, 국가, 노예제, 봉건제, 식민주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Historiography of Goguryeo's State and Social Formation in the Early to Mid-20th Century

Lee Jeongbin

The foundation for contemporary research on Goguryeo history was established between the 1920s and the 1970s. This paper organizes the historiography of research on state and social formation. The study of state formation began in the 1920s with research on the "Bu"(部). The "Bu" were classified into clans and tribes, with ancient states believed to have formed through the restructuring from kinship to territorial groups. By raising the establishment timeline of territorial groups, the groundwork for the current prevailing theory was laid.

Research into social formation started in the 1930s with an exami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slave society, which led to debates about its existence. In the early 1960s, North Korean academia defined Gojoseon as a slave society and Goguryeo, whic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ucceeded it, as a feudal society, thereby establishing a developmental stage theory of national history. This has shaped the current prevailing theory in North Korean scholarship.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historians posited that primitive societal remnants persisted robustly in Goguryeo and emphasized strong influences from the Han(漢) dynasty. These views were part of colonial historiography's theories of stagnation and external influence. From th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1970s, Korean research evolved by critiquing these colonial perspectives. Despite differences in methodologies and perspectives due to the divis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endeavored to transcend colonialism and establish the universality of Korean history. Although their approaches diverged, their ultimate goal was aligned.

Keywords: clan, tribe, state, social formation, slave society, feudal society, colonial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5

1980~2000년 고구려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이해

–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와 수묘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김현숙 |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I. 머리말
II. 초기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
III. 수묘인과 수묘제를 둘러싼 논의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한국 학계에서는 1980년대까지 고구려 초기 국가의 성립과 구조 및 성격, 그리고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축해나가면서 고구려의 기본 골격을 파악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그에 기반하여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로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가 고구려의 세부적인 면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고조되었고, 한국 고대사학계 전반에서 제출된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 후반기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고구려사 연구는 한 단계 발전했다. 연구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었고, 내용의 질적 수준도 상승했다. 연구영역의 확대와 연구내용의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 고구려사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야는 고구려의 국가형성 및 그와 연관된 정치체제 문제였다. 고구려는 고조선과 부여를 이어 성립되었고, 고대 삼국 가운데 선도적인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으므로, 백제나 신라의 국가형성 및 통치체제 연구에서 고구려의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국가형성 문제, 초기 국가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정치체제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압록강 중류 유역 거주 집단의 결집과 초기 국가형성 과정, 관등제를 통한 정치세력의 편제, 지방통치제의 내용과 변화, 신분제의 성립과정, 영역확대 과정 등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고구려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1800년대 후반 비가 재발견된 이후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결정적인 근거라며 일제 시기 관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신묘년조를 두고 한일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재일교포학자 이진희의 비문변조설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가중되었다. 나아가 조작된 비문의 연구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신묘년조에만 과잉 몰입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비문 자체의 내용과 구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비 건립 당시 고구려의 국내외 상황과 당대 고구려인들의 인식,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광개토왕비의 이른바 수묘인연호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구려 사회상과 문화적인 측면, 지역지배의 양상, 민에 대한 의식, 수묘라는 특수한 노역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이 기울이게 되었다.[1]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후에는 광개토왕비 관련 연구 가운데 수묘인 관련 문제에 주의가 집중되었다.

198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연구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식민사학의 질곡에서 벗어난 후 내재적 발전론이 제기됨으로써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 아래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에 시대구분론과 사회구성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국 고대사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고구려 초기 국가의 성립과 구조, 정치체제, 정치운영원리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2] 이 시기에 이루어진 고대 국가 형성[3] 및 발전과정에

---

1 武田幸男, 1979, 「廣開土王陵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

2 盧泰敦, 1981, 「국가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노중국, 1990, 「총설: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주보돈, 1990,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 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4] 관련 사료와 현장이 공존하는 신라사와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성장하면서 고대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건국되어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었던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도 고구려사 연구 활성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삼국사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 자료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5]과 충주고구려비라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것도 고구려사 연구의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삼국사기』 기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구려본기에 실린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충주고구려비의 발견은 지리적·공간적 격절로 인해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고구려가 바로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충주고구려비의 발견 경위와 비문 내용, 삼국의 관계 등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6] 물

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여호규, 1996a,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19; 김광수, 1997, 「고대국가형성론」,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3 李基白, 1985, 「高句麗의 國家形成 문제」, 『한국 古代의 국가와 사회』.

4 이 시기에 한국고대사연구회가 결성되어 고대사 전공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고대사연구의 진전을 이끌었던 것도 고구려사 연구발전의 배경이 되었다. 한국고대사연구회에서는 1988년에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또 그다음 해에는 '한국 고대국가의 발전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기획 학술회의에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두 학술회의의 결과물이 1990년에 출판된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한국고대사연구회, 1990, 민음사)이다.

5 金元龍, 1967, 「三國時代 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 7; 高柄翊, 1969,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歷史敍述」, 『김재원박사화갑기념논총』; 1976, 『韓國의 歷史認識(上)』, 創作과 批評社 再收; 千寬宇, 1975, 「三韓의 성립과정」, 『사학연구』 26; 千寬宇, 1976, 「三韓의 국가형성(상)」, 『한국학보』 2; 이기백, 1976, 「삼국사기론」, 『문학과 지성』 26; 신형식, 1981,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 신형식, 1985, 「高麗前期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硏究』; 盧泰敦, 1987, 「『三國史記』 上代記事의 信憑性 問題」, 『아시아문화』 2.

6 金貞培, 1979,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 『史學志』 13;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내용과 연대에 대한 검토」, 『史學志』 13; 李基白,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문제」, 『史學志』 13; 李丙燾, 1979, 「중원고구려비에 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론 이 시기까지는 고구려사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충주고구려비 연구도 일차적인 검토에 그치고 말았지만, 새로운 당대 자료의 출현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의 본격적인 진행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이 개방되어 고구려유적에 대한 현장답사가 가능해진 것과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 학계가 안고 있는 역사현장으로부터의 유리와 자료부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미진했던 고구려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고구려사를 전론으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연구 여건의 변화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사 연구의 발전을 이룩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나온 많은 연구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인 부체제론과 조기집권체제론, 그리고 광개토왕비 수묘인연호조에 나오는 수묘인과 수묘제 관련 논의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Ⅱ. 초기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

고구려사는 관점과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시기구분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수도의 변천에 따라 고구려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환인(桓仁)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던 (기원전 108년)~210년경까지를 제1기인 비류시대(沸流時代), 집안(集安) 지역으로 천도한 210년경~427년까지를 제2기인 환도시대(丸都時代), 427~668년까지를 제3기인 평양시대(平壤時代)라

여」, 『史學志』 13; 이호영, 1979, 「중원고구려비 題額의 新讀」, 『史學志』 13; 손영종,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불렀다.[7] 그는 이 가운데 제2기는 중앙집권체제의 완성기, 제3기는 성숙기라고 보았다.[8]

이와 달리 노중국은 고구려사의 변천과정을 정치사적인 면에서 태조왕 이전, 태조왕~고국원왕, 소수림왕~문자명왕, 안장왕 이후의 네 단계로 나누었고, 이는 또 소수림왕을 기준으로 불문 관습법 시대와 성문법 시대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9] 그리고 임기환은 중앙집권적 체제로의 발전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고구려사를 국가 형성~3세기 말까지, 4~5세기, 6~7세기의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하고, 5세기경에 집권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10] 또 김현숙은 말갈족(靺鞨族)의 존재양상과 지배방식의 변화 등을 사료의 내용에 따라 편의상 건국~3세기 말까지, 4세기~5세기 중엽, 5세기 중엽~멸망기까지의 3단계로 나누어 살피거나,[11] 지방통치 방식의 변화를 살피면서 나부 중심의 다원적인 권력구조 아래 정치가 운영되었던 건국~3세기 말까지를 고구려 전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구축된 4~5세기를 중기, 전제화되어 있던 왕권이 약화되고 일부 유력귀족들이 세력을 키워 통치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던

---

7 末松保和, 1965, 「朝鮮三國·高麗の軍事組織」, 『靑丘史草』 1; 1996, 『高句麗と朝鮮古代史』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3, 吉川弘文館, 59~64쪽에서는 고국천왕의 사후 그 형인 拔奇와 왕위쟁탈전을 벌였던 伊夷模가 新國을 만들었다는 『三國志』 권30 魏書東夷傳 高句麗條에 의거해 이때 集安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金哲埈은 '更作新國'이라는 것은 集安 내에서의 왕궁 이동에 불과한 것일 뿐 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金哲埈,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8 末松保和가 시기구분에서 제1기의 시작을 불투명하게 잡은 이유는 玄菟郡 高句驪縣이란 명칭이 '高句麗族'이란 이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漢 武帝의 4군 설치 때 부터 고구려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고구려족이 현토군으로부터 반독립적인 상태로 된 기원전 75년경부터라 할 수도 있으며, 後漢 光武制가 고구려의 왕호를 인정한 32년부터라 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末松保和, 1965, 앞의 글; 1996, 앞의 책, 59쪽).

9 盧重國, 1979a,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10 林起煥, 1995a, 「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金賢淑,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韓國古代史硏究』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7세기의 3시기로 구분하기도 했다.[12]

이 글은 고구려 지배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므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 3시기 구분법, 즉 집권체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초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확립된 중기, 그리고 그 체제가 이완된 시기인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는 시기구분법에 기반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가려고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에서 가장 논의가 집중되었던 분야는 초기 정치사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국 전후 시기 압록강 중류 유역 정치세력의 상황과 활동, 초기 정치체제, 중앙정치제도와 운영방식, 지배층의 편제방식, 왕실 교체와 왕계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초기 고구려 정치체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었다.[13] 이에 대해 집권체제론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과 부체제론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으로 나눠졌다. 초기 고구려 정치체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국가 형성 과정과 초기 국가의 구조, 정치운영 방식, 관등제, 지방통치제, 민의 위상 및 민에 대한 인식, 대민지배방식 등 국가운영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고구려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 학자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14]

---

12 金賢淑, 1996,「高句麗 地方統治體制 硏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고구려사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이 대거 발표되었는데, 이 가운데 국가형성과 초기 정치체제에 대한 전론(全論)이 다섯 편이나 된다. 또 중기와 후기의 정치체제까지 다루거나 지방통치제도나 영역확장 과정 등을 다뤘지만, 초기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도 다룬 글까지 합한다면 모두 아홉편이나 된다. 이 외에 개별적인 논문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14 고구려의 통치체제에 관한 연구 가운데 노중국, 1979a, 앞의 글; 1979b,「高句麗國相考(上), (下)」,『韓國學報』16, 17; 李鍾旭, 1979,「高句麗 初期의 左·右輔와 國相」,『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등이 1979년에 발표되었다. 1980년 초반부터 武田幸男, 1980a,「朝鮮三國の國家形成」,『朝鮮史硏究會論文集』17; 武田幸男, 1980b,「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世界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권체제론은 고구려가 국초부터 이미 왕권 중심의 권력 집중을 이루었고, 태조왕대에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완비했다고 보는 학설을 지칭한다. 이 경우 고구려는 건국 이후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화가 점점 더 강화되어갔다고 본다. 고구려는 1세기 중후반에 이미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왕 아래 정비된 행정조직과 관료조직을 두고 중앙정치를 운영했고, 제가회의보다는 군신회의가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찍부터 왕권을 대행하는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해 지방을 통치했다고 본다.[15]

김광수와 이종욱이 가장 대표적인 집권체제론자로 분류된다. 김광수는 1983년에 나온 「고구려 고대 집권국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에서 고구려 초기의 국가체제를 집권체제였다고 규정했다.[16] 고구려사에서 집권체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김광수는 고구려의 경우 태조대왕대를 지나면서 지배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었으며, 왕권이 국주적(國主的) 성격을 확실히 했다고 이해했다. 즉, 고구려의 초기 왕권은 영역 내 단위집단 수장층의 누층적인 연결 위에 성립된 종주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나, 철기문화의 보급에 따른 사회 변동과 한동안 지속된 유이민 파동하에서 생겨난 지배체제상의 모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집권적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자적 수장층을 기반으로 하던 초기 지배체제가 태조왕 이후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집권적 지배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17]

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李鍾旭, 1982a, 「高句麗 初期의 中央政府組織」, 『東方學志』 33; 鬼頭清明, 1984, 「高句麗の國家形成と東アジ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1 등 관련 연구들이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 김광수의 논문을 위시하여 일련의 박사학위논문들이 제출되었다.

15 이에 대해 나부체제론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집권체제론은 고구려가 이른 시기에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고 본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조기집권체제론'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임기환, 2013,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16 金光洙, 1983, 「고구려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金光洙, 1983, 위의 글; 金光洙, 1989, 「고구려사 연구의 제문제」, 『韓國上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종욱은 고구려가 일찍부터 왕권에 의해 중앙정치기구와 지방통치조직이 편성되고 정비되었다고 이해했다. 그는 태조왕대에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이 완비되어 운영되었다고 보면서, 국가 성립 이후 사료에 등장하는 나부를 지방통치조직이나 국왕에 의해 편제된 군사 단위로 파악했다.[18] 그는 방위부를 계루부의 지역구분으로 보고 나(那) 세력들이 방위부로 이동하면서 정치적 비중이 나에서 방위부로 옮아감으로써 중앙집권화가 완성된 것으로 이해했다. 이에 따라 나부명부와 방위명부는 계속 공존했다고 보고 그 근거로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다우환노를 들었다. 즉, 다우환노를 환노부 출신의 다우라고 해석하여, 나부명부가 5세기까지도 존속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19]

금경숙과 박경철도 일찍이 강화된 국왕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실시되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금경숙은 고구려 건국 전부터 동가강 유역에 존재하던 정치체인 나의 발전단계를 군장사회 단계로 상정하고,[20] 고국천왕대에 왕의 직할령인 5부 출신의 을파소가 국상을 맡게 된 이후, 나의 역할은 축소되고 5부가 부상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건국 초기 왕권이 확고하지 못했을 때 기존 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회의를 운영했으며, 초기부터 왕 직속의 관료기구를 두었는데, 관료의 최고 위치에 좌, 우보 내지 국상을 두어 왕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21] 부여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관제가 성립되었고 4, 5세기, 즉 중기 이후 고구려가 영역이 팽창하고 왕권이 더욱 강화되어 관위가 더욱 분화, 발

史』, 민음사; 金光洙, 1991, 「高句麗의 '國相'職」, 『李元淳停年紀念論叢』; 김광수, 1997, 앞의 글.

18 李鍾旭, 1979, 앞의 글; 李鍾旭, 1982a, 앞의 글; 李鍾旭, 1982b,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제도」, 『역사학보』 94·95합집; 李鍾旭, 1987, 「고구려 초기의 정치적 성장과 대중국관계」, 『동아사의 비교연구』, 일조각.

19 李鍾旭, 1982b, 위의 글.

20 琴京淑, 1989, 「고구려의 '那'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5.

21 琴京淑, 1994, 「고구려 초기의 중앙정치구조-諸加會議와 國相制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관직도 세분화되었을 것이나 기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22] 또 고구려 지방통치는 곡(谷)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태조왕대 이후 축성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군사방면과 대민지배에서 성이 지방통치의 중심이 되었으며, 초기부터 지방관이 파견된 것으로 파악했다.[23]

박경철은 나부를 계루부가 다른 나를 국가지배구조 내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의도적으로 분획된 국가의 하부 단위정치조직으로 보면서, 국가형성기 국가성격을 '전제적 군사국가' 또는 신분제를 근간으로 전일적인 통제력이 관철되는 신분국가로 이해했다.[24] 그는 국가형성 이전의 고구려를 '고구려사회'라고 개념화하고 이를 군장사회 수준이라고 이해했다. 그가 말하는 '고구려사회'는 나, 나국, 국(國)으로 기록된 정치체들로 고구려를 구성하는 기초집단이었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사회'가 존재했던 시기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이들은 압록강 중류 유역에 존재하면서 무기단적석총을 축조했고, 기원전 2세기 말에는 대략 12개에서 18개 이하의 지역집단들이 '고구려사회'를 구성하여 상호제휴하고 갈등을 겪으며 성장했고 한의 현도군에 대항하면서 세력을 키워갔으며, 환경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적 팽창정책을 지향했다.[25]

그는 군사국가로서의 고구려가 영역을 확대하여 혼강 및 압록강 중류 유역의 국내성 지방, 두만강 하루 일대의 책성(柵城) 지방,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 일대, 요하 유역의 요동성 일대, 송화강 유역의 부여성 일대에 군구(戰區)를 형성하여 전략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는 멸망기까지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26] 그는 고구려 국세가 팽창됨에 따라 지배구조 내 중심 폭의 확장과

---

22 琴京淑, 1995a, 「고구려 前期의 정치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琴京淑, 1995b, 「고구려 前期의 地方統治 고찰」, 『史學硏究』 50.

24 朴京哲,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 『韓國古代史硏究』 14.

26 朴京哲, 1988, 「高句麗軍事力量의 再檢討」, 『白山學報』 35; 朴京哲, 198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변방의 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즉, 고구려사의 전개는 통시적인(通時的)으로는 변방 공간의 확대과정이고, 공시적으로는 지배구조 안에서 중심과 변방의 차별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불안정성이 곧 제국으로서의 고구려가 갖는 미숙성의 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27]

고구려가 초기부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했고 이후 왕권이 더 강화되면서 정치체제도 더 발전했다고 본 집권체제론과 달리 부체제론은 고대국가의 정치체제가 연맹체적인 부체제를 거쳐 영역국가적인 중앙집권체제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부체제론은 고대 삼국의 국가구조와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단위정치체로서의 부의 존재에 주목한 노태돈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28]

노태돈은 고구려 초기사를 부체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보고 그에 대해 설명했다. 즉,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비류나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 등의 나부들과 주나, 조나 등의 소국들이 나오는데, 압록강 중류 유역에 다수 존재했던 이 나들이 완만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다가 뒤에 점차 다섯으로 통합되었다. 이 다섯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계루 집단을 중심으로 전쟁, 무역과 외교 등 대외적인 방면에서 창구를 단일화하여 한(漢) 등의 외부세력과 교류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계루 집단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다른 4나 내부의 일에 간여하게 되면서, 여러 나들이 자치적인 연맹부족에서 고대국가의 부로 전환하게 되었다. 태조왕 대에 5부가 성립되었으며, 5부는 고구려 건국 주체 집단으로서 고구려 안의 다른 피정복집단에 비해 집단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는 고구려에서 5부의 성립과정은 곧 고대국가의 성립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초기 국가체제와 운영에서 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史學硏究』 40.

27 朴京哲, 1988, 위의 글; 朴京哲, 1989, 위의 글; 朴京哲, 1996, 앞의 글; 朴京哲, 1997, 「高句麗와 濊貊: 高句麗의 住民과 그 文化系統」, 『白山學報』 48.

28 盧泰敦, 1975, 「三國時代 '部'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했다는 점에서 이를 부체제라 불렀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는 모두 단위정치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태돈의 부체제론은 한국 고대국가의 구조를 파악하고, 발전과정과 국가성격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고구려의 국가형성 과정과 초기 국가의 내부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했다.[29] 그러나 그가 제기한 부체제론은 고대 삼국의 내부구조와 운영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본인이 지적한 대로[30]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보편성과 함께 각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국의 부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개별적인 고찰이 더 필요했다. 그 후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는 기본 성격과 규모, 발전단계 면에서 서로 다른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사에서는 관련 사료를 통해 고구려 자체의 국가형성 과정이나 초기 국가의 성격을 밝히려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구려의 부체제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정치적 실체로 '○나(那)', '○○나부' 관련 사료가 고구려 초기 정치사 관련 자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하여 백제와 신라의 부체제와 구분하여 나부통치체제 혹은 나부체제라 불렀다.[31]

임기환, 여호규, 김현숙은 노태돈의 부체제론을 고구려사에 적용하여 국가형성 과정과 초기 국가의 내부구조 및 정치운영 방식, 귀족세력의 편제방식, 지방통치제, 대민지배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부

29 盧泰敦, 1981, 「국가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연구입문』.

30 盧泰敦, 1986, 「高句麗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政治史 理論」, 『東方學志』 52.

31 林起煥,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慶熙史學』 14; 林起煥, 1995a, 「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호규, 1992, 「고구려 초기 나부 통치 체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 여호규, 1995a,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5; 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賢淑, 1993, 「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 『慶北史學』 16; 金賢淑, 1995, 「高句麗 前期 那部統治體制의 運營과 變化」, 『歷史敎育論集』 2; 金賢淑, 1996, 「高句麗 地方統治體制 硏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체제론자로 묶여지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어서 고구려 초기사의 성격을 조금씩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임기환은 한국 고대국가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지배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연맹체제에서 집권체제로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며, 부체제기를 국가발전 단계에서 연맹체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는 압록강 중류 유역에 존재했던 나를 국읍과 읍락으로 이루어진 삼한의 소국에 비견하고, 고구려가 나부체제기를 거쳐 집권국가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32] 그리고 고구려 초기 연맹체를 구성하는 단위정치체는 나부였고, 나부는 내부에 다수의 나국(나집단)과 곡집단을 포함하는 소연맹체의 기반에서 성립하였으며, 이런 초기의 지배체제가 나부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부체제가 각 단위집단의 자치적 성격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는데, 2세기 말 이후 사회발전에 따라 그것이 약화되면서 계루부 내에 왕경지배자집단인 방위명부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후 나부의 제가세력도 왕경으로 결집하여 방위명부로 편제됨으로써 3세기 말에는 나부가 소멸했다고 이해했다.[33]

여호규는 나부체제를 통치체제로 보았다. 그는 압록강 중류 유역 정치세력의 성립과 성장, 발전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단계별로 나누어 살폈다.[34] 그는 기원전 2세기 중반경 압록강 중류 유역에는 지역 정치집단인 나집단들이 형성되었고, 이 나집단들 사이에 통합과 복속이 활발히 전개되어 나국들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원전 82~75년에 제1현도군을 서북방면으로 퇴축한 이후 소노집단을 중심으로 나국연맹이 형성되었으며, 나국 간의 복속과 통합이 격화될 무렵 주몽집단이 졸본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맹주 집단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을 계루집단이라고 보았다.

그는 계루집단은 태조왕대에 이르러 독자적인 단위정치체를 4개의 나부로

32 林起煥, 1995a, 위의 글.
33 林起煥, 1987, 앞의 글; 林起煥, 1995a, 위의 글.
34 여호규, 1992, 앞의 글; 여호규, 1997,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제하면서 이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권력으로 등장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각 나부는 자체의 관원조직과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독자적인 대외운동력을 상실하고 계루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았다. 즉, 각 나부는 자치권을 지닌 동시에 계루부의 통제를 받는 하부 단위정치체였으며, 계루부와 4나부는 고구려 국가를 성립시킨 주체로서 이 지역 전체에 통치력을 행사하는 두 축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므로 고구려 초기 사회는 전반적으로 나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의미에서 나부체제로 명명할 수 있고, 계루부 왕권의 통치력이 나부를 매개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나부통치체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부체제가 3세기 중엽 전환기를 거쳐 3세기 후반에 해체되었고, 이후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35]

김현숙은 나부체제를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파악했다. 그는 고구려가 소국-소국연맹(지역연맹)-부체제기-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는 기원전 2세기 무렵 압록강 중류 유역에는 5개의 유력 소국과 그보다 작은 정치집단들이 지역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연맹체의 첫 번째 맹주국이 『삼국사기』에 비류국으로 나오는 소노부(연노부) 세력이었고, 다음으로 맹주국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졸본부여와 부여유이민계 세력이 결합한 주몽세력이라고 보았다.[36]

김현숙은 주몽 이후 유리왕, 대무신왕대에 이르는 동안 맹주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 고구려 왕실로 정립되었고, 부여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대무신왕대에 당시 가장 유력했던 비류부와 연나부를 먼저 나부로 편제함으로써 나부체제의 기틀을 잡았으며, 태조왕대에 5나부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 왕은 나부체제 성립 이후 이이제이책을 사용하여 유력한 나부나 나부 내의 어느 한 세력집단에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견제하고 조정하

35 余昊奎, 1992, 앞의 글; 余昊奎, 1995a, 앞의 글; 여호규, 1997, 앞의 글.

36 金賢淑, 1994,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丘史學』 47; 金賢淑, 1995,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식으로 정치를 운영해나갔는데,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왕권의 강화 등 여러 요인으로 3세기 말에 나부체제가 해체되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했다.[37]

이와 같이 부체제론에 입각하여 고구려사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고구려 초기사를 이해하는 데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냈다. 부체제를 국가형성 과정의 일부로 보거나 정치체제의 하나로 이해하기도 했고, 양자를 결합하여 고구려사의 전개과정에 적용하기도 했다.[38] 또 한국 고대국가 초기 단계부터 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부체제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자 부체제론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김영하는 연맹 단계에 대해 고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복속된 소국에 대한 통제방법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독립된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부체제론에 대해서도 국가발전단계와 정치체제 발전단계의 서로 다른 층위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39]

이런 상황에 이르자 부체제론을 최초로 제기한 노태돈이 초기 고대 국가의 구조와 정치운영 방식을 정리하면서, 초기 국가의 정치체제로서 부체제의 개념과 범주를 다시 설명했다.[40] 이 글에서 그는 부체제론을 일종의 연맹체론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족연맹체는 원시사회에서 국가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상에 등장하는 한 단계의 정치체일 뿐 국가가 아니며, 그와 달리 부체제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치체제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고

37 金賢淑, 1993, 앞의 글; 金賢淑, 1996, 앞의 글.

38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3~24쪽.

39 김영하, 1994,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성격」, 『한국사』 3, 한길사; 김영하, 1995, 「한국 고대 사회의 정치구조」, 『한국고대사연구』 8; 김영하, 2000, 「한국고대 국가의 정치체제 발전론」, 『한국고대사연구』 17.

40 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적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부족연맹체에서는 연맹체회의의 구성원인 연맹장과 부족장들이 본질적으로 대등한 자격과 위상을 지니며, 연맹장은 세습되지 않았고 연맹체 회의 또한 비상설적인 것인데, 부체제하의 제가회의는 의장인 왕 또는 마립간과 제가가 상하관계였고, 왕위를 세습했으며 회의체 또한 상설적 성격을 가졌다고 설명했다.[41]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가형성기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초기의 정치조직과 관등제, 최고위직인 국상과 제가회의의 성격, 지방통치제와 관련된 내용 등 여러 연관된 분야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나타났다.

관등제의 경우가 그 한 예에 속한다. 국초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정치세력을 어떤 방식으로 편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국가 정치체제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선되는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초기에는 사성(賜姓), 식읍 하사, 관등·관직의 수여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다. 이후에는 귀족세력들을 중앙정치체제 안에 편입하기 위해 세력과 출신 차이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상정하는 관등제를 만들었다. 관등제의 제정과 정비는 중앙정부 조직의 편성과정이자 지배체제의 정비과정으로 국가발전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였다.

고구려 초기에는 관등과 관직의 차이가 불분명했고, 관등의 신분적 성격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료를 통해 3세기 중엽에는 이미 관등제가 성립되어 있었고, 후기에는 더 분화,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관등의 성격과 관등제의 성립과정을 최초로 검토한 연구자는 김철준이었다. 그는 부족집단들을 누층적으로 집적하여 편제한 것이 고대국가였다고 보고, 초기 고구려 관등 중 가(加)와 그 후신인 형(兄)은 족장 출신의 관등으로 족적 기반을 지닌 족장층을 통합해 그 세력 정도에 따라 차등 있게 중앙관으로 편제하였고, 사자(使者)는 고대국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수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했다.[42] 다케다 유키오(武田幸

41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男)는 고구려 초기 관등제는 제가 세력의 지배자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관등과 왕 직속의 관료적 성격을 갖는 관등의 이원적 구조였는데, 이것이 4세기에 일원적으로 정리되었다가 후기에 다시 14개 관등으로 분화, 발전했으며, 고구려 관등제에는 신분제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43]

이와 같이 고구려 초기 관등제가 제가세력의 관등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귀족의 관등이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계통의 관등을 적절하게 편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학계의 이후 일반론이 되었다.

집권체제론자의 경우, 고구려 관등제를 국왕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된 체제 아래 분화된 직능을 담당하던 관제라 보았다.[44] 이종욱은 초기의 중앙정부 조직을 관등제를 통해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관등과 관직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45] 이 경우 초기 관등과 중기 이후 관등 조직의 성격 차이나 변화·발전되는 양상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반면 나부체제론에 입각해 초기 고구려 정치체제를 보는 경우, 고구려 관등제가 기본적으로 국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등과 나부세력을 편제한 관등의 서로 성격이 다른 관등을 서로 교차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 2세기 말 이후의 관등조직을 연구한 임기환은 고구려 초기 관등제가 패자-우태-조의의 나부 계열과 대로-주부-사자의 방위부 계열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케다 유키오와 달리 후기 관등제가 14관등이 아니라 13관등이었으며, 3개의 신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고, 4~5세기와 6~7세기 관등제의 차이는 곧 왕권과 귀족세력의 정치적 역관계의 추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46]

여호규는 초기 관등조직은 나부의 다양한 지배력을 편제하던 관등, 계루부

---

42 金哲俊, 1956,「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華甲紀念論叢』.

43 武田幸男, 1978,「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朝鮮學報』86.

44 김광수, 1983, 앞의 글.

45 李鍾旭, 1982a, 앞의 글.

46 林起煥, 1995b,「고구려 초기 官階組織의 성립과 운영」,『慶熙史學』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권을 뒷받침한 관등, 나부의 자치권을 뒷받침한 관등으로 구성되어 왕권과 나부의 역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초기 관등 조직에서 중기 관등 조직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4세기 이후 일원적인 관등 조직의 정비 내용에 대해 살폈다.[47] 또 노태돈은 이후 관등제가 기본적으로는 제가세력의 편제 기능을 하였으나, 관등제 성립 이후에는 관등제 자체의 운영원리에 의해 5부인을 왕실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체로 결집시켜나가는 기능을 했다고 덧붙였다.[48]

나부체제론과 집권체제론은 초기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초기의 관직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것은 국상(國相)과 상가(相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제가회의의 성격과 직접 연결되며, 초기의 정치 운영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집권체제론자인 이종욱은 왕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일을 의논하는 군신회의의 장이 국상이라고 보았다.[49] 김광수도 상가는 대수장층이고, 국상은 국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막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모두 왕권 아래 집권적 정치제도의 구성요소였고, 제가회의도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는 기구였다고 보았다.[50] 금경숙도 제가회의는 초기부터 왕권 아래 편제된 비상설기구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상은 제가회의의 장이 아니고, 좌·우보와 동일하게 왕권 강화의 역할을 수행한 관이었으며, 제가회의와 국상은 대립적인 존재였다고 파악했다.[51]

이와 달리 노중국은 국상이 초기 관등제 중 가장 상위로 보이는 상가와 동일하며, 제가회의의 장으로서 왕권과 제가회의의 역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52] 여호규는 상가가 곧 국상이라고 보는 설을 따르면서, 좌·우보는

47 여호규, 1997, 앞의 글.
48 노태돈, 1999, 앞의 책.
49 李鍾旭, 1979, 앞의 글.
50 金光洙, 1991, 앞의 글.
51 금경숙, 1994, 「고구려 초기의 중앙정치구조-諸加會議와 國相制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권 아래 나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적 실무 기능을 담당했고, 국상은 나부의 행정실무를 국가 차원에서 통솔했으며, 3세기 이후 제가회의가 상설 귀족회의로 전환되었을 때 귀족회의의 의장이 된 것으로 이해했다.[53] 임기환은 이를 초기 정치 운영체제와 관련지어 좌·우보제는 2나부 연합에 기초하였고, 국상제는 본격적인 5나부체제에 대응하는 정치운영체제라고 보았다.[54]

하지만 김현숙은 국상의 성격과 설치 배경에 관해서는 집권체제론자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 그는 초기 고구려의 최고위 관직은 좌보와 우보였고, 좌보는 나부세력, 우보는 계루부의 출신 귀족이 맡아 공동으로 정치를 운영했는데, 뒤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최상위관으로 국상을 설치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국상이 왕 아래 최고위 관직자로서 왕권을 배경으로 정치를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55]

노태돈도 상가가 곧 국상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지 않고, 상가는 4부의 부장에게 부여한 일종의 작위였고, 국상은 왕의 측근 관직이라고 보았다. 또 당시 국정 운영의 중심은 제가회의였으며, 이는 관료조직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5부 전체의 통합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왕권 아래 종속되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국상은 이전의 대보(大輔), 좌·우보를 이은 것으로서 왕의 측근이 주로 임명되어 왕을 보좌하여 왕권강화를 도모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다.[56]

지방통치제 연구 역시 고구려 초기의 정치체제를 집권체제론적 시각으로 보느냐, 나부체제론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집권체제론의 경우 이종욱의 견해처럼 국초부터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이

52 盧重國, 1979b, 「高句麗 國相考」(上, 下), 『韓國學報』 16, 17.
53 여호규, 1998, 「고구려 초기 제가회의와 국상」, 『한국고대사연구』 13.
54 林起煥, 1995a, 앞의 글.
55 金賢淑, 1993, 앞의 글.
56 노태돈, 1999,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각지에 파견되어 지역을 지배했다고 이해했다.[57] 금경숙도 같은 입장에서 고구려 지방통치가 건국 당시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해나갔으며, 촌으로 구성된 곡이 기본적인 역할을 했는데, 태조왕대 이후 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보았다. 성은 군사적 역할이 중요했고 이것이 계속 유효했지만, 점차 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켜나가 중기 이후에는 성이 지방통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방관은 축성사업이 활발해지던 초기부터 파견된 것으로 보았다.[58]

부체제론의 입장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방관 파견은 3세기 후반경이 되어야 이루어졌고, 4세기 이후 지방통치가 본격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때부터 교통로를 중심으로 주요 전략 거점 지역에 성을 축조하고 이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통치체제의 기본구조와 변화, 그리고 군현제 실시 여부나 지방 5부의 존부(存否) 문제 등에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4~5세기의 지방지배 연구에 주요한 토대를 제공한 것은 다케다 유키오의 연구였다.[59] 그는 광개토왕비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구려에서는 곡지배(谷支配), 성촌지배(城村支配), 종족지배(種族支配), 유목과 수렵으로 영위하는 비정주적인 영(營)을 기저단위로 하는 거란(契丹)에 적용한 집단적 지배형태인 부락(部落)-영(營) 지배 등 구성원들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통치했지만, 일원적인 성 지배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즉, 고구려가 농경정주양식을 영위하는 촌(村)을 기저사회로 하는 성-촌 지배, 성-호(戶)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수취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임기환은 이러한 다케다 유키오의 설에 동의하면서 고구려의 내부 구성과 기저 사회의 양상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여, 초기 지방지배가 성·곡 지배에서 성 중심 지배로 이행해갔다고 정리했다.[60] 또 여호규는 교

57 이종욱, 1982b, 앞의 글.
58 琴京淑, 1995b, 「고구려 前期의 地方統治 고찰」, 『史學硏究』 50.
59 武田幸男, 1979,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로를 중심으로 지방통치조직의 정비과정을 살폈는데, 4~5세기에 지방통치조직이 상하 2단계로 중층화되었으며, 지방관도 수사(태수)-재(宰)가 상하 통속관계를 가졌다고 보았다.[61]

김현숙은 고구려 지방통치제의 전체적인 발전과정에 대해 살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3세기 말부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부터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4세기 중반까지는 주요 거점지역에만 지방관을 파견했으므로 이를 거점지배라 불렀다. 거점지배는 전략요충지에 구축된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지역에는 태수, 그보다 중요도가 낮은 지역에는 재를 보내 통치했으며, 태수나 재들은 치소 인근 지역을 벗어난 외곽 지역 주민들까지 개별적으로 통치하지는 못했다.

4세기 중후반경 영역확대로 통치단위들이 중앙과 직접 연결되는 거점지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방어체계상에도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게 되자 태수-재의 2단계 지배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점적인 지배에서 면적인 지배로 전환되었다. 2단계 지배체제하에서는 통치단위를 몇 개 합친 넓은 지역을 상위 지방관이 관장했기 때문에 이를 권역지배라 불렀다. 이때부터는 모든 주민을 호적에 등재하고 보편적인 법률에 따라 통치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영역지배가 가능했다. 광개토왕대에 영토가 급격히 팽창하자 다시 상·하위 행정단위를 포괄한 광역을 총괄하는 지방관인 수사(守事)를 설정하여 수사-태수-재의 3단계 지배체제가 되었다.[62]

여호규와 김현숙의 지방지배 관련 연구에서는 수사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 여호규는 모두루묘지와 충주고구려비에 나오는 수사를 군급 지방관인 태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63] 김현숙은 복수의

60 林起煥, 1987, 앞의 글.

61 여호규, 1995b,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62 金賢淑, 1996, 앞의 글; 金賢淑, 1997, 「고구려 중·후기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의 전개과정」, 『한국고대사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태수-재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의 상위 지방관이 수사라고 보았다.[64] 이 견해 차이는 당시의 지방통치조직을 2단계였다고 보느냐, 3단계로 발전했다고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지방통치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성을 단위로 구성된 6~7세기 지방제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65]

Ⅲ. 수묘인과 수묘제를 둘러싼 논의

광개토왕비는 1880년대 후반에 재발견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4~5세기 동북 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당대 자료이자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금석문 자료로서 수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광개토왕 비문은 한국 고대사 중에서도 특히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시기와 1970년대까지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고대 한일관계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이른바 신묘년(辛卯年) 기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학계에서는 이 기사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특히 왜와 고구려, 왜와 남부지역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주력했다. 즉, 이 기사를 한반도 남부지역을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식민지로 지배했다고 하는 임나일본부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정인보는 이 구절을 신묘년에 왜가 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했다.[66] '래(來)'와 '도해파(渡海破)' 사이에 고구려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본 것이다. 정인보의 설은 신묘년 기사에 대한 새로

63 여호규, 1995b, 앞의 글.

64 김현숙, 1996, 앞의 글.

65 이에 대해서는 김현숙, 1996, 앞의 글 참조.

66 鄭寅普,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百樂濬博士還曆紀念國學論叢』, 思想界社, 6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운 이해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재일교포 학자 이진희가 광개토왕비 탁본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발견하여 급기야 광개토왕비 자체가 훼손 내지 변조되었다는 석회도부설을 제기했다.[67] 이 비문변조설은 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광개토왕비 연구를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했다. 이후 1984년에 중국 현지 학자인 왕지앤췬(王健群)이 광개토왕비에 석회를 바른 것은 맞지만 그것은 탁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지, 비문을 조작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며 광개토왕비문 변조설을 부정하는 연구서를 발표했다.[68] 그럼에도 여전히 비문 글자가 훼손, 혹은 변조되었다고 보는 시각 아래 읽을 수 없는 부분에 들어갈 글자를 추정하거나 석독의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69]

한편, 하마다 고사쿠(浜田耕策)가 신묘년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1885자에 달하는 논문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문구에만 매몰되어 논쟁을 벌여왔던 그동안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광개토왕비문 전체의 문장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비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신묘년조는 독립된 조항의 연대기 기사가 아니라 병신 6년조의 전치문적인 성격의 문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신묘년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과거 방식대로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라,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고구려가 백제를 치기 위해 왜라는 악역을 동원한 명분조성용이며, 실제 국제정세 및 국가 간 역학관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70]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과 고구려의 위대함과

67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68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69 서영수, 1996, 「신묘년기사의 변상과 원상」, 『고구려연구』 2.

70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성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구려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비석이므로 고구려 입장을 과시하는 과장이 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논문은 비문변조설로 인해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광개토왕비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70년대 말부터 광개토왕비 연구는 신묘년 기사에 집중한 연구보다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건국신화와 고구려 초기 왕계, 광개토왕의 영역확대 과정과 정복대상, 고구려왕의 천하관, 비문 마지막 부분의 수묘인연호로 시작되는 기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 가운데 수묘인연호조는 4~5세기 고구려 수묘인과 수묘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수묘인 관련 내용은 광개토왕비문 전체에 대한 석독(釋讀)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짚고 지나가는 정도에 그쳤을 뿐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71]

이 사료의 사회사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연구자는 일본의 다케다 유키오였다. 그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수묘인연호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그들의 존재 양상, 수묘인의 차출 상황과 수묘제의 수행방식, 수묘인의 성격 등에 대해 살폈다.[72]

1980년대 중반 이후 고구려 사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묘인 관련 연구도 이런 방면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다.[73] 1986년에 고구려 수묘인의 신

71 白南雲, 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金錫亨, 1974, 「三國時代の良人農民」, 『古代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王健群, 1984, 『好太王碑の研究』, 雄渾社; 耿鐵華, 1984, 「高句麗好太王碑及び高句麗王朝と好太王について」, 『文物天地』(『市民の古代』 7, 1985 再收); 藤田友治, 1986, 『好太王碑論爭の解明』, 新泉社.

72 武田幸男, 1979, 앞의 글.

73 광개토왕비에는 4세기 말 5세기 초 동북아시아 일대의 상황과 당대 고구려의 사회상 및 다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비문의 전체 내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밀한 분석과 함께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부터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수묘인에 관해 관심이 고조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과 수묘역의 수행 방식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핀 손영종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글은 수묘제 문제를 전론으로 다룬 최초의 논고였는데, 고구려가 봉건제 사회라고 보는 관점 아래 수묘인의 신분과 노역 운영체계를 분석했다.[74] 그리고 김현숙이 1987년에 광개토왕비 수묘인연호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수묘인의 신분과 원래의 출자, 수묘역에 발생한 문제와 그에 대한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염려와 그로 인해 실시한 개혁, 관련 법령과 처벌조항 공시 등 수묘인과 수묘제에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했고,[75] 뒤에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학술지에 게재했다.[76] 1988년에는 조인성이 수묘인의 임무와 그들의 사회적 처지, 수묘제 시행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핀 글을 발표했고,[77] 이 해에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국연(國烟), 간연(看烟)의 출신지와 신분 문제에 대해 논한 껑톄화(耿鐵華)의 논문도 나왔다.[78]

수묘제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때 고구려 수묘제의 변화와 수묘인과 광개토왕비의 성격, 고구려의 대민편제 방식 등에 대해 살핀 비중있는 논고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조법종, 이성시, 임기환, 이인철, 몬타 세이이치(門田誠一)의 글이 그것이다.[79] 이로 인해 수묘제 연구는 더욱 심

---

74 손영종, 1986,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수묘인 연호의 계급적 성격과 립역방식에 대하여」, 『력사과학』 3호.

75 金賢淑, 1987,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77 趙仁成, 1988,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韓國史市民講座』 3.

78 耿鐵華, 1988, 「好太王碑的國烟看烟及其身分問題」, 『求是學刊』 1988-4.

79 林起煥, 1994, 「광개토왕비의 國烟과 看烟」, 『역사와 현실』 13;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韓國古代史研究』 8; 門田誠一, 1995, 「瓦からみた高句麗の守墓制と領域支配」, 『文化史學』 4; 李成市, 1996, 「廣開土王碑の立碑目的と高句麗の守墓役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李仁哲, 1997, 「4~5世紀 高句麗의 守墓制-廣開土大王碑의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 『淸溪史學』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되어 고구려 사회의 내부 구조와 국연, 간연의 성격, 수묘제의 정비 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330가의 연호 가운데 국연 30가만 국내성으로 와서 직접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담당했다고 보거나,[80] 수묘인의 차출을 고구려의 대민편제 및 지방지배 방식이란 관점에서 파악하는 등[81] 새로운 시각에서 비문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관련 논의를 더욱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나온 연구성과로 인해 고구려 사회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고구려의 수묘제와 수묘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연구자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났다.

수묘제 연구에서 쟁점이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수묘인의 구성 및 성격을 둘러싼 논의다. 광개토왕비 수묘인연호조에 의하면, 414년 당시 수묘인은 '구민(舊民)'과 '신래한예(新來韓濊)'라 지칭된 신·구 두 집단에서, '국연'과 '간연'으로 구분되어, '가(家)', '연호(烟戶)' 단위로 차출되었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이전에는 원근에서 데려온 구민들로 왕릉 수묘 일을 맡겼는데 그들이 자꾸 약해질까 염려되므로[구민리열(舊民羸劣)], 자신의 사후에는 광개토왕 본인이 직접 데려온 신래한예들로 수묘인을 삼으라고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수왕은 신래한예 220가를 수묘연호로 삼았는데, 이들이 법칙을 모를까 염려하여 다시 구민 110가를 차출했다. 신래한예는 광개토왕의 유언에 나오듯이 광개토왕이 직접 공략해서 데리고 온 백제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구민은 광개토왕 이전 대부터 고구려 영역 내에 거주하던 본래의 고구려인이라고 본 경우도 있었지만,[82] 그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역시

80 趙法鍾, 1995, 위의 글.

81 林起煥, 1994, 앞의 글.

82 박시형, 1966, 앞의 책, 224~225쪽;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102쪽; 井上秀雄, 1975,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文·解說」, 『好太王碑探訪記』, 三秀舍, 77쪽. 井上秀雄은 구민을 고구려 본래의 주민이고 왕족의 유력자들이 제공한 노예들이라고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영역확장 과정에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83] 요컨대 구민과 신래한예 모두 고구려의 영역확장 과정에서 편입된 지역의 복속민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거의 없다.

하지만 구민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다. 즉, 비문에 나오는 구민은 일반적인 복속민이 아니라 수묘의 법칙을 알고 있는 존재로서 광개토왕 이전 시기부터 왕릉 수묘역에 종사해온 수묘인으로 보는 설이 있다.[84] 이 경우 비문에 나오는 '구민리열'이란 구절을 기존 수묘인의 약화를 일컫는 것으로, 결원이 생기고 조직이 흐트러진 기존 수묘인들을 장수왕 즉위 초에 정리해 110가로 재편하여 신래한예 220가와 합쳐 새로 수묘인연호 330가를 편성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임기환과 조법종은 구민리열을 전체 구민 일반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졌음을 말한다고 본 박성봉의 견해[85]에 따라 구민과 신래한예의 농업생산력 차이가 수묘인 교체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86] 그러나 임기환도 언급했듯이 구민과 신래한예의 경제적 기반이나 농업생산력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논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된 것이 수묘인의 거주지와 신분 문제였다.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수묘인들이 모두 수도로 사민되어 왕릉을 관리했다고 보는 사민설(徙民說)[87]과 평상시에는 원거주지에 살다가 직역을 수행해야 할 시기에만 수도로 올라가 역을 수행했다고 보는 번상설(番上說)[88]로 나누어졌다. 수묘인의

---

83 김현숙, 1989, 앞의 글.

84 김현숙, 1987, 앞의 글; 조인성, 1988, 앞의 글; 이인철, 1997, 앞의 글

85 朴性鳳, 1985, 「廣開土好太王期의 內政整備에 대하여」,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86 임기환, 1994, 앞의 글; 조법종, 1995, 앞의 글.

87 수묘인이 노예였다고 보는 논자들과 필자, 그리고 조인성과 이인철이 이에 해당한다.

88 김석형, 손영종, 임기환 등이 이에 속한다. 손영종은 수묘제 입역의 구체적인 방식은 알 수 없어도 각 지역단위와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몇 달씩 상번(교대근무)하거나 1년 혹은 몇 년씩 장번(장기근무)하는 방식으로 입역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주지 문제는 바로 수묘인의 신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사민설의 경우, 수묘인의 신분을 노예로 보는 입장과,[89] 국가기관에 직접 예속되어 수묘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했던 특수직역인집단(特殊職役人集團)으로서 일반 자연촌에 거주하는 일반 양인보다는 사회적 위상이 낮았고 노예보다는 높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다시 나누어졌다.[90] 후자에 동의한 조인성은 수묘인들이 발해의 부곡(部曲)과 유사한 존재일 것으로 추정했다.[91] 수묘인이 노예였다고 본 설은 수묘인들이 모두 복속민 출신이라는 것과 매매 대상인 존재들이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특수직역인집단으로서 일반인들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고 본 설은 그들이 매매 대상이 되었고, 거주지 이전과 직업 전환의 자유가 없지만,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92]

반면 번상설은 수묘인이 일반민과 같은 양인이라고 본다. 김석형은 수묘인이 농노적 성격을 띤 양인으로서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수묘역을 담당했을 뿐으로 평소에는 원거주지에 살다가 당번이 되면 수도에 올라가 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았다.[93] 껑톄화,[94] 손영종[95] 등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는 비문에 나타나는 수묘인이 '가(家)'로 표기되

고 그를 뒷받침하는 '자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세 봉건국가들에서 수릉, 수묘군이 입역하던 방식과 공통점이 있다며, 수묘제를 통해서도 4~5세기 고구려가 봉건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89 白南雲, 1933, 앞의 책, 218쪽; 勞幹, 1929, 「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高句麗都城之位置」, 『勞幹學術論文集』 甲編, 532쪽; 王健群, 1984, 앞의 책, 209쪽.

90 김현숙, 1989, 앞의 글

91 趙仁成, 1988, 앞의 글, 103쪽.

92 김현숙, 1989, 앞의 글.

93 金錫亨, 1974, 「三國時代の良人農民」, 『古代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95~96쪽.

94 耿鐵華, 1984, 「高句麗好太王碑及び高句麗王朝と好太王について」, 『文物天地』; 1985, 『市民の古代』 7 再收 및 1990, 『好太王碑新考』, 133~143쪽.

95 손영종, 1986, 앞의 글, 17~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자기경리(自己經理)를 영위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매매금지법 등으로 신변이 보장되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또 다른 주제는 국연과 간연의 성격 및 역할 차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연이 수묘의 책임자였고, 간연이 청소 등을 담당하는 노역자였다고 보는 설이 있다. 나카 미치요(那珂通世)가 "국연이 주가 되고 간연은 보조하는 자인 것 같다"라고 최초로 양자의 차이점을 지적했다.[96] 이후 박시형도 국연이 왕릉 수묘에서 주된 복무를 수행하고 간연은 국연의 복무를 각 방면에서 보좌해주는 임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았다.[97] 이어 다케다 유키오도 나카 미치요의 견해를 인정한 위에서 국연은 국강상에서 국가적 노역인 수묘역에 종사하도록 지정된 자들이며, 간연은 왕묘의 간수(看守), 간시(看視), 간호(看護)를 담당한 자들이라고 규정했다.[98]

껑톄화는 국연은 근교를 포함한 도시와 도읍에 거주하는 성민(城民) 출신으로 주로 수공업생산과 가공에 종사하던 자들인 데 반해, 간연은 심산유곡(深山幽谷)에 거주하던 곡민(谷民)으로서 주로 농업과 어렵 생산을 영위하던 자들이라 하여 거주환경과 직업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99] 또 손영종은 국연은 부유하여 수묘역 한몫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고 간연은 그렇지 못하여 열이 합쳐 한몫을 하는 자들이라 보았다.[100]

위의 연구자들 가운데 껑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연과 간연의 차이를 수묘역 수행 시 역할의 차이에서 찾았다. 이와 달리 차출 당시부터 국연과 간연을 구분하여 차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묘인이 되기 이전에 국연은 그 지역의 지배

96 那珂通世, 1893, 「高句麗古碑考」, 『史學會雜誌』 49; 1915, 『那珂通世遺書』, 大日本圖書株式會社, 498쪽 再收.

97 박시형, 1966, 앞의 책, 226쪽.

98 武田幸男, 1979, 앞의 글, 84~85쪽.

99 耿鐵華, 1988, 앞의 글.

100 손영종, 1986, 앞의 글, 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층, 간연은 피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수묘인으로 차출된 이후에도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본 설이 있다.[101] 하지만 이 경우 각 지역에서 국연과 간연을 일정한 비율로 뽑지 않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간연만 차출된 곳도 있으며, 아단성과 잡진성이 합쳐 10가의 간연을 내기도 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2] 또한 국연은 국강상(國罡上)에서 수묘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간연은 제3의 지역이나 본래의 거주지에서 수묘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달했다고 본 견해도 나왔는데,[103] 이 경우 매매의 대상이 된 수묘인은 국연에 국한되므로 국연이 간연보다 사회적 위상이 낮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묘연호의 편성과 수묘역의 수행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었다. 수묘인들이 수행했던 일은 담당 능역과 봉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능역에서 거행되는 제사 관련 업무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국연만 국강상으로 올라와 직접 수묘역을 수행했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연과 간연의 소임이 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연은 수묘역 수행 시 지휘, 감독을 했고, 간연은 묘역에 대한 보호, 순찰, 청소, 능역 내의 건물 관리, 그리고 능역 안에서 행해지는 제수용품의 준비 등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수묘인들이 수묘역을 수행할 때 노역조의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적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330가의 수묘연호 가운데 구민은 110가로 국연이 10가, 간연이 100가이고, 신래한예는 220가로 국연이 20가, 간연이 200가이다. 구민과 신래한예의 비율은 1:2이고, 국연과 간연의 비율은 1:10이다. 이에 따라 김현숙은 국연 1가와 간연 10가의 총 11가로 구성된 노동조가 수묘역의 기초적인 노동단위였다고 보고, 이들이 일정량의 노역을

101 金賢淑, 1989, 앞의 글, 21~22쪽.
102 임기환, 1994, 앞의 글, 195쪽.
103 趙法鍾, 1995,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임지거나 몇 개의 노동조가 합쳐 1기의 왕릉을 각각 책임지고 관리하는 식으로 역을 수행해나갔을 것으로 보았다.[104] 조인성은 신래한예가 법칙을 모른다는 점을 염려하여 구민 110가를 더 편성했다는 비문의 구절을 염두에 두고 구민 국연 1가와 간연 10가, 신래한예 국연 2가와 간연 20가의 총 33가의 연호가 한 조가 되어 수묘역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았다.[105] 이인철은 66호씩 5개 부대로 나누어, 3개 부대는 소수림왕릉, 고국양왕릉, 광개토왕릉의 3기 능의 수묘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2개 부대는 기와나 벽돌을 굽는 노역에 동원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106]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수묘인이 담당했던 왕릉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330가의 수묘연호가 모두 광개토왕릉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이 외에 집안 소재 왕릉 모두를 수묘했다고 보는 설과,[107] 광개토왕릉 포함 3기의 왕릉만 관리했다고 보는 설이 있다. 이 중 세 번째 설은 다시 고국원왕릉, 고국양왕릉, 광개토왕릉을 수묘했다는 설과[108]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릉을 관리했다는 설,[109] 국연 30가만 광개토왕릉을 관리했다는 설[110] 등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설은 광개토왕비가 광개토왕을 왕릉에 모신 후 세운 비석이므로 다른 왕릉 소속 수묘인에 대한 내용을 적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두 번째 설은 330가라는 수묘연호가 광개토왕릉 하나만 관리했다고 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선대 왕릉 소속 수묘연호를

104 김현숙, 1989, 앞의 글, 22쪽.

105 조인성, 1988, 앞의 글.

106 이인철, 1997, 앞의 글.

107 金賢淑, 1989, 앞의 글, 15쪽.

108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の一·二の問題」, 『歷史公論』 4.

109 李仁哲, 1996, 「廣開土好太王碑 守墓人烟戶條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 『廣開土好太王碑 硏究 100年(下)』, 高句麗硏究會.

110 조법종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두 합한다면 집안 지역에 거주하게 될 수묘인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설도 한 왕릉에 330가의 수묘인은 너무 많은 인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설은 비석에 보이는 조선왕(祖先王)을 조왕(祖王)과 선왕(先王)으로 나누어 그 대상이 되는 왕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네 번째 설은 그 내부에서도 각각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30호 정도가 하나의 왕릉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인원이라고 보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수묘제 관련 또 다른 쟁점은 수묘제의 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다. 광개토왕비를 통해 4~5세기 당시 고구려 수묘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발생한 문제는 수묘인의 차착(差錯)과 매매, 구민의 리열(羸劣)로 인해 왕릉 수묘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수묘인의 차착과 매매를 막기 위한 석비의 건립, 매매금지법의 제정, 구민에서 신래한예로의 수묘연호 교체였다.

수묘연호의 차착에 대해 김현숙은 330가의 수묘연호가 여러 왕릉에 일정한 숫자만큼 배치되거나, 혹은 노동조가 순회하면서 수묘할 때 수묘역 이행 순서나 노동조 편성상의 혼동과 섞갈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111] 이와 달리 임기환은 각 지역에서 수묘연호를 징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았다.[112] 이인철은 수묘인들이 수묘역을 게을리하고 엉뚱한 무덤에서 역을 이행했다고 핑계를 대어 문책을 피하려는 현상을 막고자 수묘인의 출신 지역과 국연, 간연의 숫자를 새겨놓은 것으로 보기도 했다.[113]

이와 관련하여 광개토왕비에 왜 330가 수묘연호의 출자지(出自地)를 일일이 명기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묘인이 왕릉 곁으로 사민되어 약을 수행했다고 보는가, 순번이 되었을 때만 왕도로 가서 수

111 金賢淑, 1989, 앞의 글, 6쪽.
112 林起煥, 1994, 앞의 글, 178~179쪽.
113 李仁哲, 1997, 앞의 글, 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묘역을 수행했다고 보는가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사민설의 경우에는 수묘인 차출 이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수묘연호의 출자지역에서 책임지고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목록을 명기했다고 본다. 반면 번상설의 경우에는 연호 할당 지역에서의 징발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라고 본다.[114] 그 지역으로부터 수묘인을 지속적으로 징발하기 위해 수묘인의 출신지를 석비에 모두 새겨놓았다고 보는 것이다.[115]

수묘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불법매매 문제였다. 여기서 매매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수묘역을 양인의 번상역으로 본 김석형은 수묘인 사이에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가 생겨 부유한 수묘인이 빈곤한 수묘인에게 재화(財貨)를 주고 자신의 수묘역을 대신 맡기는 대립(代立)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116] 기본적으로는 수묘인의 인신매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만, 그들의 노동력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연구자도 있다.[117]

이와 달리 국가에서 수묘인에게 경작용으로 내어준 토지를 서로 매매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118]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매매의 대상(토지)을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119] 국가가 수묘인들에게 토지를 경작용으로 내어주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국유지이며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묘인의 토지 전매행위는 불

114 林起煥, 1994, 앞의 글, 180쪽.

115 이와 관련하여 김락기는 수묘연호 차출 지역을 명기한 광개토왕비문 가운데 '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지목하고, 이 두 성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차후 인원보충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멀리 떨어진 두 성에서 합쳐서 간연 10가를 차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락기, 2006, 「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立役方式: 廣開土王陵碑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1.

116 金錫亨, 1993,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 신서원, 250~251쪽.

117 金賢淑, 1989, 앞의 글, 21쪽.

118 趙法鍾, 1995, 앞의 글, 219~224쪽.

119 임기환, 1994, 앞의 글, 198~1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120] 여하튼 수묘인의 매매문제가 4~5세기 고구려 왕릉 수묘제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은 광개토왕비뿐 아니라 2012년에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에도 매매금지령과 처벌 내용을 새겨놓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외에 수묘제 정비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먼저 수묘인차착을 막기 위한 비석의 건립과 매매금지령의 제정, 수묘연호의 교체 등 관련 정비작업을 광개토왕의 교언에 따라 장수왕이 시행했다고 본 설이 있다.[121] 이 경우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각 조선왕릉 마다 묘상입비(墓上立碑)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비를 건립함으로써 그 교언을 수행한 것이라 보았다. 이 경우 수묘연호의 매매금지령도 광개토왕비 건립 당시에 수묘제 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광개토왕대부터 수묘제 정비가 진행되어 조선 왕들의 묘에 비석을 세우는 묘상입비가 이루어졌다고 본 견해도 나왔다.[122]

Ⅳ. 맺음말

지금까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고구려사 연구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고구려 초기의 정치체제 및 수묘인과 수묘제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 정리했다.

검토 대상 시기인 2000년 이후 고구려사 연구는 더 팽창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선행 연구의 학문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당시 연구의 문제점과 남겨진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별

120 李仁哲, 1997, 앞의 글, 70쪽.
121 金賢淑, 1989, 앞의 글.
122 耿鐵華, 1988,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쟁점 사안과 주요 논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 시기의 연구가 고구려사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데 길잡이가 되었고, 다음 시기에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 연구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논란이 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구려 초기의 정치체제를 집권체제로 보느냐, 나부체제로 보느냐의 문제는 고구려의 국가형성 과정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각에 따라 정치운영방식과 관등제, 주요 관직의 성격, 지방통치제, 제가회의와 군신회의의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이른바 집권체제론자들은 고구려 초기부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귀족이 관등제에 의해 국왕 아래 서열화되어 있었으며, 최고위직인 국상은 군신회의의 장으로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는 존재였고, 일찍부터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를 실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반면 나부체제론자들은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 유역의 정치세력들의 누층적인 결합으로 성립된 후 국왕이 속한 계루부와 4개의 나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를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점차 국왕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며 나부의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나부의 장들과 기타 귀족들을 관등제로 서열화하여 국왕 아래 직속시켰으며, 3세기 중후반경부터 왕명을 대신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지배를 해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 시기에 광개토왕비 연구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른바 신묘년조에만 집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건국신화, 광개토왕의 영역확장 과정, 고구려 왕의 천하관, 수묘인연호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이 시기에 특히 관심이 집중된 주제가 고구려 수묘인과 수묘제였다. 학계에서는 수묘인의 신분, 국연, 간연의 성격, 수묘역의 수행방식,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수묘인의 소속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고구려 수묘인과 수묘제 연구 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동북공정의 영향으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더 고조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자의 숫자와 연구성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때에도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와 수묘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나부체제론이 고구려 정치체제의 변화, 발전 및 그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나간 것과 달리 집권체제론의 경우 중기 이후 및 다른 분야로 연구를 더 확장하지 않았다.

또 수묘제 연구는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2012년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함께 재차 열기를 띠게 되었다. 그에 따라 광개토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실 수묘인은 묘지기와 능지기란 이름으로 후대까지도 존재했다. 이들의 주거지나 수행한 일의 내용이나 특성 등은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수묘인 관련 논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성격과 관계없이 논의가 비약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기존 연구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정리되긴 했지만, 수묘역 체계와 운영방식, 수묘인의 신분 등은 여전히 더 다각적인 각도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고구려연구회 편, 2000, 『고구려연구』 10(중원고구려비 특집호).

孔錫龜, 1999, 『高句麗 領域擴張史 硏究』, 書景文化社.

金哲埈, 1975,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리지린·강인숙, 1976, 『고구려사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출판사.

손영종, 1990, 『고구려사(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_____,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歷史學會 編, 1985,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李基白,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硏究』, 一朝閣.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 一潮閣.

한국고대사연구회, 1990,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耿鐵華·孫仁杰 편, 1993, 『高句麗硏究文集』, 延邊大學出版部.

朴燦奎, 2000, 『"三國志·高句麗傳"硏究』, 吉林人民出版社.

楊春吉·耿鐵華 主編, 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硏究』, 吉林文史出版社.

王健群, 1984, 『好太王碑硏究』, 吉林人民出版社.

大林太良, 1984, 『東アジアの王權神話-日本·朝鮮·琉球-』, 弘文堂.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硏究序說-』, 巖波書店.

논문

姜仙, 1995, 「高句麗 國都 移動에 關한 一考察 -建國初부터 故國原王代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韓國學硏究』 4.
강현숙, 2000, 「石槨積石塚을 통해 본 高句麗 五部」, 『외대사학』 12.
공명성, 2000, 「구려사연구」, 『조선고대사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琴京淑, 1989, 「고구려의 '那'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5.
_____, 1994, 「고구려 초기의 중앙정치구조-諸加會議와 國相制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6.
_____, 1995a, 「고구려 前期의 정치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5b, 「고구려 前期의 地方統治 고찰」, 『史學硏究』 50.
_____, 1999, 「高句麗의 諸加會議와 國相制 運營」, 『강원사학』 15·16합집.
金光洙, 1983, 「고구려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89, 「고구려사 연구의 제문제」, 『韓國上古史』, 민음사.
_____, 1991, 「高句麗의 '國相'職」, 『李元淳停年紀念論叢』.
_____, 1997, 「고대국가형성론」,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_____, 1994,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성격」, 『한국사』 3, 한길사.
_____, 1995, 「한국 고대 사회의 정치구조」, 『한국고대사연구』 8.
_____, 1997, 「高句麗의 發展과 戰爭」, 『大東文化硏究』 32.
_____, 2012,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金貞培, 1979,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 『史學志』 13.
金哲俊,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華甲紀念論叢』.
金賢淑, 1987,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硏究』 65.
_____,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韓國古代史硏究』 6.
_____, 1993, 「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 『慶北史學』 16.
_____, 1994,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丘史學』 47.
_____, 1995, 「高句麗 前期 那部統治體制의 運營과 變化」, 『歷史敎育論集』 2.
_____, 1996, 「高句麗 地方統治體制 硏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7, 「고구려 중·후기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의 전개과정」,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 11.
盧重國, 1979a,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_____, 1979b, 「高句麗 國相考」(上, 下), 『韓國學報』 16, 17.
_____, 1981,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_____, 1990, 「총설: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盧泰敦, 1975, 「三國時代 '部'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
_____, 1986, 「高句麗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政治史 理論」, 『東方學志』 52.
_____, 1988,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_____, 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
_____, 1994, 「高句麗의 初期 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고희기념논총』.
_____,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朴京哲, 1988, 「高句麗軍事力量의 再檢討」, 『白山學報』 35.
_____, 1989,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史學硏究』 40.
_____,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 『韓國古代史硏究』 14.
朴性鳳, 1985, 「廣開土好太王期의 內政整備에 대하여」,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내용과 연대에 대한 검토」, 『史學志』 13.
徐永大, 1995,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 『韓國古代史硏究』 8.
_____, 1997, 「高句麗 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東西文化論叢』2, 인하대학교 동양사연구실 연대에 대한 검토」, 『史學志』 13.
서영수, 1996, 「신묘년기사의 변상과 원상」, 『고구려연구』 2.
손영종, 1984, 「고구려의 5부」, 『력사과학』 1984-4.
_____,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_____,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령역」, 『력사과학』 1986-2.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2000, 「중원고구려비의 해독과 내용의 의의」, 『사총』 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梁起錫, 1983,「4-5세기 고구려 왕자의 천하관에 대하여」,『호서사학』 11.
여호규, 1992,「고구려 초기 나부 통치 체제의 성립과 운영」,『한국사론』 27.
_____, 1995a,「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역사와 현실』 15.
_____, 1995b,「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한국사연구』 91.
_____, 1996a,「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역사와 현실』 19.
_____, 1996b,「고구려의 기원」,『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97,『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8,「고구려 초기 제가회의와 국상」,『한국고대사연구』 13.
李基白, 1979,「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문제」,『史學志』 13.
_____, 1985,「高句麗의 國家形成 문제」,『한국 古代의 국가와 사회』.
李道學, 1991,「方位名 夫餘國의 성립에 관한 檢討」,『白山學報』 38.
_____, 1992,「高句麗 初期 王系의 복원을 위한 검토」,『韓國學論集』 20.
李丙燾, 1979,「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史學志』 13.
李仁哲, 1996,「廣開土好太王碑 守墓人烟戶條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廣開土好太王碑 硏究 100年(下)』, 高句麗硏究會..
_____, 1997,「4~5世紀 高句麗의 守墓制-廣開土大王碑의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淸溪史學』 13.
李鍾旭, 1979,「高句麗 初期의 左右輔와 國相」,『全海宗華甲紀念論叢』.
_____, 1982a,「高句麗 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 33.
_____, 1982b,「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제도」,『역사학보』 94·95합집.
_____, 1987,「고구려 초기의 정치적 성장과 대중국관계」,『동아사의 비교연구』, 일조각.
이호영, 1979,「중원고구려비 題額의 新讀」,『史學志』 13.
林起煥, 1987,「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體制」,『慶熙史學』 14.
_____, 1994,「광개토왕비의 國烟과 看烟」,『역사와 현실』 13.
_____, 1995a,「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5b,「고구려 초기 官階組織의 성립과 운영」,『慶熙史學』 19.
_____, 1996,「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民'의 성격」,『고구려연구』 2.
任昌淳, 1979,「中原高句麗碑小考」,『史學志』 13.
鄭寅普, 1955,「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百樂濬博士還曆紀念國學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叢』, 思想界社.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硏究-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8.
조인성, 1988,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수묘제」, 『한국사시민강좌』 3.
_____, 1990, 「4, 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변화」, 『韓國古代史硏究』 4.
주보돈, 1990,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池炳穆, 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

姜孟山, 1983, 「試論高句麗族的源流及其早期國家」, 『朝鮮史硏究』 1983-3.
_____, 1989. 「고구려족의 기원과 초기의 국가형태」, 『조선학 연구』 1, 연변대학출판사.
耿鐵華, 1988, 「好太王碑的國烟看烟及其身分問題」, 『求是學刊』 1988-4.
顧銘學, 1983, 「「三國史記」與「舊三國史」和「東明王篇」」, 『朝鮮史硏究』 1983-5.
勞幹, 1929, 「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高句麗都城之位置」, 『勞幹學術論文集』 甲編.
李殿福, 1993, 「高句麗民族的形成,發展與解體」, 『中國古代北方民族史』, 黑龍江人民出版社.
張甫白, 1996, 「高句麗五部與統一的民族和國家」, 『黑龍江社會科學』 1996-1.
張春霞, 1999, 「高句麗國家的形成發展滅亡」, 『全國首屆高句麗學術硏討會論文集』, 吉林社會科學院高句麗硏究中心·通化師範學院高句麗硏究所.

鬼頭清明, 1984, 「高句麗の國家形成と東アジア」, 『朝鮮史硏究會論文集』 21.
末松保和, 1965, 「朝鮮三國·高麗の軍事組織」, 『靑丘史草』 1.
木下礼仁, 1981, 「中原高句麗碑」,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논총』.
武田幸男, 1978,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6.
_____, 1979, 「廣開土王陵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東洋文化硏究所紀要』 78.
門田誠一, 1995, 「瓦からみた高句麗の守墓制と領域支配」, 『文化史學』 4.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硏究ー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ー」,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1.
_____, 1982, 「好太王碑文の一·二の問題」, 『歷史公論』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1986,「高句麗廣開土王陵墓比定論の再檢討」,『朝鮮學報』119·120.
三品彰英, 1954,「高句麗の五族にいて」,『朝鮮學報』6.
李成市, 1994,「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思想』842.
田中俊明, 1994,「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朝鮮文化研究』1,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川本芳昭, 1996,「高句麗の五部と中國の'部'について一考察」,『九州大學東洋史論集』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1980~2000년 고구려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이해

–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와 수묘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김현숙

1980년에서 2000년까지 고구려사 연구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집권체제론(集權體制論)과 나부체제론(那部體制論) 및 수묘인(守墓人)과 수묘제(守墓制)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했다. 고구려 초기의 국가체제를 집권체제로 보느냐, 나부체제로 보느냐의 문제는 고구려의 국가형성 과정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각에 따라 정치운영방식과 관등제(官等制), 주요 관직의 성격, 지방통치제, 제가회의(諸加會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집권체제론자들은 고구려 초기부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귀족이 관등제에 의해 국왕 아래 서열화되어 있었으며, 최고위직인 국상(國相)은 군신회의의 장으로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는 존재였고, 일찍부터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를 실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나부체제론자들은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 유역의 정치세력들의 누층적인 결합으로 성립된 후 국왕이 속한 계루부와 4개의 나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를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점차 국왕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며 나부의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나부의 장들과 기타 귀족들을 관등제로 서열화하여 국왕 아래 직속시켰으며, 3세기 중후반경부터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에 광개토왕비 연구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른바 신묘년조(辛卯年條)에만 집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건국신화, 광개토왕의 영역확장 과정, 고구려 왕의 천하관,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고구려 수묘인과 수묘제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었다. 학계에서는 수묘인의 신분, 국연(國烟), 간연(看烟)의 성격, 수묘역(守墓役)의 수행방식,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수묘인의 소속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이후 고구려 수묘인과 수묘제 연구의 심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주제어: 집권체제론(集權體制論), 나부체제론(那部體制論), 관등제(官等制), 수묘인(守墓人), 수묘제(守墓制), 수묘역(守墓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Major Issues and Understandings in the Study of Goguryeo History from 1980 to 2000: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Early Political System of Goguryeo and the Grave Keeper

Kim Hyunsook

From 1980 to 2000, the centralized system theory(集權體制論), the nabu system theory(那部體制論), and the trends in research on the grave keeper(守墓人) and tomb guarding system(守墓制), which were raised as major issues in the study of Goguryeo history, were summariz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e system of early Goguryeo should be viewed as a centralized system or a nabu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and nature of Goguryeo.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n this,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operation method, the official rank system, the nature of major government positions,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Jega Council(諸加會議) differ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centralized system theorists believed that a centralized system centered on the king was established from the early Goguryeo period. Therefore, all nobles were ranked under the king by the rank system, and the highest position, the national prime minister(國相), was the head of the council of the king and was in charge of running the state by following the king's orders. It was understood that local officials were dispatched early on to directly rule the country.

The Nabu system theorists believed that Goguryeo was established through the multi-layered combination of political powers in the middle reaches of the Amnok River, and that the Gyerubu, to which the king belonged, and the four Nabu were the main axes to run the country. After that, power was gradually concentrated around the king, the autonomy of the Nabu was weakened, and the Nabu chiefs and other nobles were ranked by the rank system and placed directly under the king. It was believed that local officials were dispatched from around the mid-to-late 3rd century.

During this period, the study of the Gwanggaeto Stele also entered a new phase. Moving beyond the stage of focusing only on the so-called Sinmyo year(辛卯年) clause, research was conducted o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founding myth, the process of Gwanggaeto the Great's territorial expansion, the Goguryeo king's view of the world, and the tomb-guarding man's household. Of these, particular attention was focused on Goguryeo tomb-guarding men and tomb-guarding rites. In academic circles, there was active discussion on the status of Grave keeper(守墓人), the Gukyeon(國烟) and Ganyeon(看烟), the method of carrying out tomb-guardi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uties, and the affiliations of Grave keeper recorded on the Gwanggaeto Stele. The research during this period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further in-depth study of Goguryeo Grave keeper and tomb-guarding rites.

Keywords: Centralized system theory(集權體制論), Nabu System Theory(那部體制論), Official rank system(官等制), Grave keeper(守墓人), Tomb guarding system(守墓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6

21세기 고구려사 연구의 도약과 쟁점의 심화

정호섭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초기사 연구의 쟁점
III. 중기사 연구의 쟁점
IV. 후기사 연구의 쟁점
V. 도성과 왕릉 연구의 쟁점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는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연구자의 수도 늘었고, 간행된 관련 자료도 증가했으며, 발굴 성과도 다수 제시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려사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진전과 도약이 있었고,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가 세분화되면서 쟁점 역시 심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기존자료의 재검토와 신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연구의 심화와 다각화가 나타났다. 문헌과 금석문, 고고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연구 주제별로는 비문, 묘지명, 묵서명, 기타 명문자료 등 고구려 금석문과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도성을 비롯한 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대외관계사 연구와 함께 이와 연관되는 전쟁과 영역 연구가 두드러졌다.

한국 학계에서는 연구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히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수십 편이 나왔고, 관련 저서와 논문 등 많은 연구 성과도 쏟아졌다. 연구 주제와 관점도 세분화되고 심화되었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도 개척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개별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들은 연구사 검토의 미흡이 확인되고, 연구 내용도 역사학의 맥락적 이해나 관점보다는 소재주의적 연구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아울러 많은 연구에서 기존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큰 차별성 없이 미세한 차이에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거나, 동일 주제에 대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경우도 확인

* 투고: 2025년 1월 8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8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다. 일부의 경우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고증이 철저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논지 전개에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여 사상누각의 가능성마저 보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중국 학계 역시 동북공정과 함께 젊은 연구자가 늘어났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기존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들이 제시되었다.[1] 이전에 비해 많은 연구 성과가 쏟아지기도 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확인되지만, 점차 연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의 고구려 연구는 변방사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 중국 주류 역사학계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 학계나 일본 학계의 연구는 오히려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북한 학계는 조선고고연구나 력사과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논문이 제출되었는데, 고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구려사 관련 논문이 적은 편이다. 내용을 보면 주로 고분과 고분벽화, 도성과 산성, 기와, 무기, 마구, 주거, 복식 등 고고학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밖에 문헌 사료와 금석문 연구, 전쟁 연구 등과 함께 일부 새로운 연구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연구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듯하다. 일본학계는 연구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가장 적은 편이다. 매년 고구려 관련 논문이 10편이 되지 않거나 10편이 좀 넘는 상황인데, 주로 대외관계나 금석문, 고분벽화, 기와 등 고고자료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타 외국 학계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도 매우 저조하였는데, 고구려사 연구자가 소수에 그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그 이전 시기의 연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생산하였다. 여기서는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에서의 주요 논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한

1 範恩實, 2018, 「2010년 이래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성과 정리」, 『고구려발해연구』 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초기사, 중기사, 후기사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과 아울러 고고학뿐만 아니라 문헌사 연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도성과 왕릉 연구의 쟁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금석문과 관련한 쟁점은 다른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일부만 언급할 것이고, 동북공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한중 학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Ⅱ. 초기사 연구의 쟁점

1. 기원과 성립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하여 예(濊)·맥(貊)·예맥(濊貊, 穢貊) 등의 명칭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예·맥 동종설과 예·맥 이종설로 대별된다. 본래 선진 문헌의 맥과 예라는 별개의 족칭에서 출발해 예맥이라는 연칭에 이르게 되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왔으나,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중국에서는 기존의 예맥설뿐만 아니라 고이(高夷)설, 숙신계통 부여설, 염제족설(염제신농씨), 상인(商人)설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국 학계는 대체로 고구려 건국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주민 집단은 예족 혹은 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 무렵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예맥사회와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하였고, 기원전 2세기 후반경부터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적석총을 바탕으로 성립한 고구려사회,[2] 혹은 구려종족 내지는 원고구려사회로 명명하기도 하였다.[3] 아울러 구려(句驪)라고 불리다가, 고구려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점차 맥이라는 종족

2 박경철, 2003, 「고구려 '민족' 문제 인식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3 송호정, 2007, 「고구려의 기원과 예맥」, 『고구려연구』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이해하거나[4] 선진시기 이래 요동 지역에 거주해오던 예가 곧 예맥이고 여기서 다시 예와 맥으로 분화되었다고 보기도 한다.[5] 한편,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예맥'이라는 연칭은 예와 맥 두 종족의 합칭이 아니라, 종족적으로 예를 일컫는 명칭이었다가 사실상 고구려가 맥으로 지칭되는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는 예와 구분되는 종족으로서 맥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부여계 세력이 남하하여 토착집단과 융화되던 과정에서 맥이 등장하였다고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6]

고구려 초기의 왕계와 관련하여 『삼국지』 고구려전에 소노부(연노부)에서 계루부로 왕실이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바,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왕계에 왕실 교체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왕계는 주몽(동명성왕)을 주축으로 하는 단일 계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성씨가 해씨(解氏)왕과 고씨(高氏)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왕실 교체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조왕대의 등장을 왕실이 교체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계루부 왕실 내에서의 방계로의 전환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이 형제관계에서 차례로 왕위를 이어가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중국사서에서 이들 세 왕이 부자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등 차이가 확인된다. 광개토왕비에는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을 차례로 적고 광개토왕을 17세손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위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왕계는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듯 초기 왕계와 관련한 문제는 사료마다 다른 기록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시조에 대한 인식이나 왕계의 성립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태조왕을 시조로 이식하다가 후대 어느

4 여호규, 2011, 「고구려의 종족기원에 대한 일고찰」, 『사림』 38.

5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6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점에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7] 왕계가 초기부터 성립하였다는 견해도 있다.[8] 또한 신대왕대에 건국전승의 3왕과 신대왕을 기준으로 하는 국조왕(國祖王)-차왕(次王)-신왕(新王) 등 3왕의 왕계는 정리되어 있었고, 민중왕-모본왕의 존재는 고국천왕 이후에, 東川王대에 초기 왕계도 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9] 한편, 왕위계승원리에 초점을 두면서 초기 5왕의 부자 계승은 실제의 혈연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웅적 왕자(王者)관에 입각한 비혈연적 계승원리로, 다음 태조왕부터 신대왕까지의 계승은 동일 세대(世代)의 세대주의적 계승원리로 파악하고 이는 고국천왕-산상왕대에 형제계승으로 변형되었다가, 11대 동천왕 이후에는 부자계승원리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10] 또한 고구려본기의 초기 왕계를 주몽왕-□-대무신왕-민중왕-모본왕이란 졸본계 왕계, 유리왕-재사-태조대왕/차대왕/신대왕이라는 국내계 왕계로 나누어보면서 소노부 왕실에서 계루부 왕실로의 교대는 태조왕대에 이루어졌고, 3왕 사이는 의제적 형제 관계였으며, 이후 단일한 왕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11]

고구려 건국설화와 관련하여 고구려 금석문이나 중국사서, 국내사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근래 집안고구려비에도 건국과 관련한 구절이 확인되면서 건국설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원왕(元王)과 관련한 해석이다. 대체적으로 부여와 고구려 건국설화가 여러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인공의 이름으로 기록된 동명과 추모 혹은 주몽, 그리고 태생과 난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출생 등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따라서 두 설화를 엄연히 다른 두 고대국가의 건국을 전하는 별개의 설화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서사구조상의 유사성

---

7 조인성, 노태돈 이후 2000년대 이후로는 통설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 김기흥, 2005,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왕계」,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9 임기환, 2016, 「고구려 왕계의 성립과정과 시기」, 『한국고대사연구』 83.

10 여호규, 2010,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原理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11 임기환, 2022a, 「고구려 태조대왕과 신대왕 王系에 대한 재검토」, 『역사문화연구』 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관련하여 부여 건국설화를 원형으로 고구려 건국설화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건국설화 계통은 주몽의 출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구려 당대 금석문인 광개토왕비와 모두루묘지에 전하는 북부여출자설인데 중국 문헌에 전하는 부여출자와 동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전하는 동부여 출자설이다. 이러한 고구려 건국설화의 성립 시점에 대해서는 고구려 초기형성설, 4~5세기설이 있다. 초기형성은 부여 동명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고구려 건국설화가 초기 내지는 태조왕대, 혹은 적어도 3세기에는 창출되었다고 보고 있고,[12] 고구려 중기에 체제정비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소수림왕대, 광개토왕이나 장수왕대에 부여설화를 차용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13] 근래에는 건국설화의 유형과 관련지어 5세기 이후 성립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5세기 중후반 부여출자와 6세기 이후 동부여설화 등이 접합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14]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비, 모두루묘지명 등 당대 금석문에 나오는 고구려 건국설화를 통해서 볼 때 주몽-유리왕-대무신왕으로 이어지는 건국설화의 기본적인 골격이 적어도 4세기 후반경에는 갖추어졌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군남려의 내속과 관련하여 기원전 128년에 예군남녀가 한의 요동군에 투항한 사실에서 이들 예군남녀가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고구려 세력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성격과 지역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예군남려

12 김기흥, 2001,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이종욱, 2004, 『한국사의 1막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禮-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20; 최광식, 2007b, 「고구려의 신화와 국가제사」,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範恩實, 2013, 「高句麗祖先記憶解析」, 『東北史地』 2013-5.

13 노태돈은 소수림왕대, 이성시는 미천왕대, 白鳥庫吉은 광개토왕이나 장수왕대로 본 이후 다수의 연구자가 4세기 후반경에 건국설화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 조우연, 2010, 「4~5세기 고구려 국가제사와 불교신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8만 구가 위치했던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요동군의 동부 산간지대에서 동해안 함흥 방면에 이르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송화강 유역의 부여 지역,[15] 천산산맥에서 청천강 일대,[16] 요동반도와 압록강 중류 일대[17]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연맹장으로 보기도 하고[18]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주민집단을 주도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치적 결합이 이루어진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19]또한 예군 남려 등 28만 세력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견해가 양분되어 있는데, 동해안의 동옥저 지역[20]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21]가 있다.

현도군과 고구려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책구루의 설치 시기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된 편이다. 삼국지에 전하는 책구루 기사를 통해 고구려 사회 내부의 정치적 결집은 현도군의 동계에 책구루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책구루가 설치된 시점에 대해서는 유리왕대설,[22] 기원전 75년 전후설,[23] 유리왕-대무신왕대설,[24] 태조왕대설,[25] 희평연간(熹平年間)설[26] 등이 제기된 바

15 박경철,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한국고대사연구』 14.

16 권오중,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17 조영광, 2011, 「고구려초기의 국가 형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김미경, 2002,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 24.

19 여호규, 2005b,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 『軍史』 54.

20 김미경, 2007,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여호규, 2005b, 앞의 글.

22 이종욱, 1999, 『한국의 초기국가』, 아르케.

23 윤용구, 2006, 「高句麗의 흥기와 幘溝漊」,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이성제, 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 -'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4; 박노석, 2015, 「고구려의 발전과 현도군 책구루의 변화」, 『전북사학』 46; 장병진, 2015,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 『한국고대사연구』 77; 이종록, 2018, 「高句麗와 玄菟郡의 관계와 幘溝漊 설치 배경 검토」, 『先史와 古代』 55; 이준성, 2020, 「濊君 南閭의 동향과 滄海郡·玄菟郡 설치」, 『白山學報』 116; 김성현, 2021, 「高句麗 初期 支配勢力의 再編과 政治體制의 變動」,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4 김미경, 2007, 앞의 글; 김현숙, 2007,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현재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태조왕대설은 책구루가 계루부 왕실이 대

외교섭권을 일원화한 결과물로 고구려의 5부체제 성립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책구루의 설치 시기를 앞당겨 보는 견해들은 태조왕대 이전에 이미 고구려가 현도군과의 교섭을 단일화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여러 세력과도 교섭하고 있었음을 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진된 연구들은 기원전 75년설을 많이 따르고 있는 분위기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데, 고구려 초기사 이해에도 차이가 있는 듯하다. 특히 후대의 사서에 나타나는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 책구루에 이어 왕망에 의한 고구려병의 징발 관련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연대순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책구루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책구루 설치를 고구려사회에 대한 분리조종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고[27] 호시를 통한 이민족 통제 방책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28] 반면에 책구루는 외교적 위세품을 두던 곳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29] 한 관인들의 공식 복식인 조복의책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를 사여하는 것은 한나라 측에서 해당 지역의 대표자임을 공인해주는 일종의 책봉 행위로 파악하기도 한다.[30] 또한 현도군은 고구려를 대상으로 조복과 의책을 사여하였으며, 이후 고구려가 찾아 오지 않았음에도 현도군에서는 책구루라는 성을 쌓아가면서까지 교섭을 유지한 것은 현도군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31]

---

25 노태돈이 제기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여호규가 국제정세 및 중국왕조의 대외정책과 관련시켜 검토한 바 있다(여호규, 2005b, 앞의 글).

26 김효진, 2024, 「2세기 고구려의 對後漢 관계와 국제정세」, 『한국고대사연구』 113.

27 윤용구, 2006, 앞의 글.

28 이성제, 2011, 앞의 글.

29 김창석, 2004, 「고구려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여호규, 2005b, 앞의 글.

30 장병진, 2015, 앞의 글.

31 이종록, 2018,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이 동방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중국 문물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군(郡)에 속하게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이해하기도 하며[32] 한의 현도군과 고구려 사이의 비대면 접촉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33] 책구루와 관련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고구려 초기사의 이해와 사료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 해석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보다 신중한 사료해석이 요구된다.

2. 국가 형성과 정치 체제

고구려의 국가 형성 및 그 발전과정이나 지배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초기 정치사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나와 있어 기본적인 틀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지속된 측면이 있다.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는 소위 '부체제론'과 '조기집권체제론'으로 이해되어왔는데, 양자는 계루부 왕권의 집권력과 나부의 자치권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였지만, 고구려 초기 정치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체제론은 나부를 자치권을 지닌 단위정치체로 파악하고 왕권과 함께 중요한 정치운영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며[34] 조기집권체제는 조기부터 왕권강화와 집권화를 강조하고 나부를 정치운영의 주체로 이해하지 않는다.[35] 이에 따라 초기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도 서로 다

32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3 김효진, 2024, 앞의 글.

34 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부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7; 여호규, 2000b,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한국고대사연구』 17; 임기환, 2003b,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김현숙, 2007, 앞의 글; 조영광, 2012, 「高句麗 初期의 國家 形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규호, 2021, 「高句麗 官制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5 박경철, 2002,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 28; 금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르게 이해하는데, 나부체제론은 왕권의 집권력과 나부의 자치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치체제가 성립하였고, 제가회의가 중요한 기구라고 이해하고 있다. 조기집권체제론은 왕권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적·관료적 기구가 이른 시기부터 정비된 것으로 보면서 군신회의를 중요한 기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부체제론과 조기집권체제론은 계루부 왕권이 점차 강화되어가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집권화로 나아갔다는 점은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한편, 국가 구조와 정치 체제에 대한 연구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양자를 상호 유기적인 연관 하에서 고찰할 때 비로소 고구려사의 윤곽이 파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36] 이러한 '부체제론'과 '집권체제론'은 모두 나름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논의의 문제점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바 있다. 집권체제론은 나부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기 이후의 중앙집권체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초기 정치체제의 고유한 특징과 운영원리를 간과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부체제론은 나부의 자치권과 정치운영상의 연맹체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성립 이전의 집단 간 통합 원리와 초기 정치체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37] 또한 '부체제론'은 국가 발전 단계와 정치 체제 발전 단계의 서로 다른 층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38]

고구려 초기의 정치체제의 이해와 관련하여 관등제의 구성과 운영, 왕권의 위상변화와 회의체의 변천, 좌우보나 국상 등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고구려의 성립과 당시의 사회구성을 살피는 것은 고구려 국가 형성과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데, 부체제론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틀로 제

숙, 2004, 『고구려 전기 정치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종욱, 2008,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고구려의 국가 형성과 성장에 대한 〈모델3〉』, 서강대학교출판부.

36 노태돈, 2000, 앞의 글.

37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38 김영하, 2000, 「한국 고대 국가의 정치 체제 발전론」, 『韓國古代史硏究』 17; 김영하, 2012,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강된 측면이 있고, 부체제론을 바라보는 시각도 논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부가 고구려 초기사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나부가 어떠한 역사적 요인으로 등장하게 됐는지, 나부의 구성과 영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나부와 나부체제의 등장 배경이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만 나부체제의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구려 초기 정치 운영을 봉건제적 원리나 관제를 작적 면모로 이해하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39] 고구려 국가형성과 지배체제나 정치체제의 변동을 보다 다각화한 입장에서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등제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주제로 고구려 국가체제 확립과 궤를 같이하여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초기 관등과 관련해서는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보이는 상가(相加), 대로(對盧), 패자(沛者), 고추가(古鄒加), 주부(主簿), 우태(優台), 승(丞), 사자(使者), 조의(皁衣), 선인(先人) 등이 있다. 관등제에 관해서도 나부체제론과 조기집권체제론의 이해에 차이가 있다. 나부체제론에서는 초기 관등제는 태조대왕대 이후 나부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제가세력을 세력의 대·소에 따라 편제하는 중앙정치조직의 하나로 성립하여, 2세기 이후에는 나부와 방위부라는 이원적 부조직의 구조에 대응하는 형태로 성립하였다가 3세기 이후 나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부계 관등이 소멸되고 4세기 이후에는 사자계와 형계 관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관등조직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40] 또한 초기 관등제는 계루부 왕권이 나부의 지배세력을 편제하기 위해 부여한 관등, 계루부 왕권의 집권력을 뒷받침하는 관등, 나부의 자치권을 뒷받침하는 관등 등 다원적인 구성 양상을 보이고, 주부나 사자처럼 관직과 관등이 미분화된 사례도 보인다고 이해하고 있다.[41] 반면 조기

39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41 여호규, 2014,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권체제론에서는 초기부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이고 집권적인 형태의 관등제가 성립되었고 관직과 관등은 분리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정 관등과 관련하여 고추가, 패자, 우태, 조의, 대로, 주부 등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도 제가회의, 군신회의, 좌·우보, 국상 등에 주목하였는데, 관점에 따라 정치체제의 운영양상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 나부체제론에서는 나부의 자치권을 중시하며 제가회의를 중요하게 설정하고, 좌·우보나 국상 등은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집권체제론에서는 초기부터 왕권의 확립과 집권화를 강조하며 국왕 중심의 행정적·관료적 정치기구가 정비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제가회의는 설정하지 않거나 제한된 기능만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제가회의보다는 군신회의나 최고 관직인 좌·우보, 국상 등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나부체제론에서는 나부와 제가, 집권체제론자는 왕권을 강조하면서 좌·우보와 국상의 성격도 나부의 자치권과 왕권의 집권력이라는 어느 하나의 측면을 중심으로 초기 관직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3세기 중반을 전후해 고구려에서는 초기의 나부가 점차 소멸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대신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조기집권체제론의 입장에서는 집권체제 내에서의 변화이지 큰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부체제론에서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국사기에 방위부는 대무신왕대에 처음 등장하였다가 이후 고국천왕대에 재등장하여 동천왕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미천왕 때까지 나부와 방위부는 병존하는 모습이다. 대무신왕대의 방위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기집권체제론에서는 인정하는 편이고, 부체제론에서는 대체적으로는 부정하는 견해가 우세하다.[42] 방위부의 공간적 범위는 기내로 표현된 계

42 이종욱이 대무신왕대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한 이후 조기집권체제론에서는 이를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루부 전역을 포괄한다는 견해와 국내성 일대로 한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방위부를 수도 국내성 일대로 파악하는 견해 중에서도 구체적인 방위부의 범위에서는 왕성이 중부이고 주변을 4방위부로 이해하기도 하고[43] 국내성 내부를 5방위부로 편제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44] 국내성 내부가 5방위부로 편성되기에는 너무 좁다는 시각에서 국내성을 포함하여 현재의 집안 지역 전체를 5방위부로 구획하였다고 보기도 한다.[45] 또한 최근에는 고국천왕 시기에는 집안 지역 전체를 4방위부로 구획하였다가 3세기 후반에 국내성지를 축조한 다음 그 내부를 중부와 4방위부로 구획하였다고 보기도 한다.[46]

고구려가 주변 지역을 복속하면서 새로 편입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납을 바치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배로 이해하기도 하고, 직접지배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도 결국 초기 정치운영 체제와 영역지배 방식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집권체제론에서는 처음부터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지방통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나부체제론에서는 복속한 지역에 그 지역의 수장을 통한 공납에 기반한 간접통치가 실시되었고, 3세기 말에 가서야 지방관이 요충지에 파견되기 시작하여 중앙집권체제가 성립하는 4세기 이후에야 지방관을 보내 직접통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47]

정하고 있는데, 노태돈을 필두로 한 부체제론의 입장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43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4 임기환, 2003a, 「고구려 도성제의 변천」, 『한국의 도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여호규, 2012c,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韓國古代史硏究』 66.

45 정호섭, 2015,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한국사학보』 56; 조영광, 2016,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81.

46 임기환, 2015,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구성-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9.

47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중기사 연구의 쟁점

1. 정치와 사회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율령반포는 태학 설립, 불교 수용 등과 함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완비로 이해되고 있다. 고구려의 율령반포는 삼국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데, 고구려가 수용한 율령제도에 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다. 고구려 율령의 기초가 된 것은 서진의 태시율령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다가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함께 여기에 보이는 율은 왕릉 수묘 사안에 대한 단행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태시율령이 형법인 율과 행정법인 령으로 구분되었고, 포괄적 법전체계를 갖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한 단행법으로서의 율은 태시율령과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진한, 조위대의 율령에 주목하는 견해들이 나오게 되었다.[48] 진한, 조위대의 율령은 율과 령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보면 국왕은 교령을 통해 법제를 제정 또는 개수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령을 기초로 해서 운영된 진한-조위대의 율령과 더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율과 령이 따로 개수된 사정에서 태시율령과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49] 이처럼 고구려 율령제도의 수용은 태시율령 계수설이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다가 집안고구려비의 발견 이후 진한-조위대의 율령을 계수하였다고 본 견해가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구려 율령의 편목과 내용을 전혀

48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史硏究』 72; 홍승우, 2016, 「고구려 율령의 형식과 제정방식-「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사례 분석」, 『木簡과 文字』 16; 전덕재, 2015, 「373년 고구려 율령의 반포 배경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80; 정동준, 2017,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소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韓國史硏究』 178.

49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韓國古代史硏究』 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알 수 없어 율령에 관한 자료가 매우 단편적인 상황에서 율령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구려로의 불교 전래와 관련해서는 소수림왕 2년 전진(前秦)에서의 전래가 공식적인 첫 기록이지만, 그 이전부터 불교와 접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보인다. 『양고승전(梁高僧傳)』과 『해동고승전』에 동진 고승 지둔도림(支遁道林)과 고려도인(高麗道人)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통해 볼 때 소수림왕대인 372년보다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둔도림은 격의불교(格義佛教)를 대표하는 인물로 고구려 초기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50] 한편, 고구려에는 일찍이 북방불교가 왕실 중심으로 전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전연(前燕) 왕실에서 불교가 성행하였고, 모용씨(慕容氏)가 침입하였을 때 고구려에 불교가 알려졌다는 것이다.[51] 혹은 미천왕대 후조(後趙)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된 바 있고[52] 낙랑·대방 지역을 통해 고구려에 불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구려 불교 초전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순도로 기록된 것도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담시로 기록된 것도 있다. 담시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지 오래되었으나 그에 의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져 불교 본연의 면목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초전불교가 격의불교였다면, 담시는 이에서 벗어난 새로운 불교 경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순도와 아도 이후 변화된 중국의 불교 경향을 고구려에 전해서 불교 전래자로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53] 아울러 담시가 고구려에 불경과 율장을 가지고 와서 구

50 김상현, 2005, 「중국문헌소재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김두진, 2011, 「고구려 초전불교의 공인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36.

51 이용범이 제시한 이후 2000년대 들어 박윤선이 다시 제기하였다(박윤선, 2004,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5).

52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표영관, 2008, 「고구려 불교전래 재고」, 『고구려발해연구』 32.

53 김상현, 2007, 「고구려의 불교와 문화」,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복적인 성격의 불교가 아닌 본의불교로서의 내용을 고구려에 알렸기에 사상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왕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54] 한편, 담시가 북조불교를 전했을 것으로 보면서 광개토왕대 요동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승려라고 파악하기도 하며[55] 반대로 담시가 중국 남방불교신앙과 연결되었던 점에서 공인불교신앙의 모습으로 여기기도 한다.[56]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수용,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헌기록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다. 고구려 초기불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구려가 국가 혹은 왕실 차원에서 불교 전래와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근래에는 불교가 왕권 정당화 내지는 중앙집권화의 이론 장치로 역할을 했다거나, 평양 지역의 중국계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등 불교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기존 견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고구려 불교 전래 및 수용 문제와 관련해 왕권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을 비판하고, 이른바 국가적 공인 이전 사전(私傳)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기도 한다.[57] 나아가 고구려의 불교 수용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 민과 지배세력 다수의 공감을 전제로 한 새로운 종교 내지는 문화의 수입이지, 왕권강화 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나아가 고구려의 불교는 국가 혹은 왕실 차원에서 전래,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개토왕대에 평양에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구사(九寺)'를 '아홉 관청(혹은 관사)'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전개와 더 자연스럽다고 이해하기도 한다.[58] '사(寺)'의 실체와 관련해, 한대(漢代) 이래로 9경(九卿)의 관서를 '사(寺)'라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낙랑 지역에 새롭게 관청(九寺)을 창설한 것은 본

54 김복순, 2011, 「4~5세기 삼국사기의 승려 및 사찰」, 『신라문화』 38.

55 남무희, 2011, 『고구려 승랑 연구』, 서경문화사.

56 김두진, 2011, 앞의 글.

57 최광식, 2007c, 「토착신앙과 불교의 관계」,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58 조우연, 2011, 「4~5세기 고구려의 불교 수용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탐구』 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격적인 평양 천도를 위한 중앙관료기관 창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9]

지방통치제도로써 군현제와 관련해서는 5세기 이후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명실상부하게 정연한 주군현제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남한 학계에서는 군현제 실시 여부를 두고 여러 견해가 있다. 군현제 실시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주(州)-군(郡)-현(縣)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나 행정단위의 명칭은 그대로 성이라 했다고 보거나, 일시적으로나마 군현이란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모두루묘지에 나오는 '차국군(此國郡)'과 '차군(此郡)'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5세기부터 군제(郡制)가 시행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 물론 주나 군이 확인된다고 해서 중국식 군현제나 주현제와 동일한 체제였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이 지방통치단위이지만 그것을 주, 군 등으로 명명하여 지방을 편제했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5세기 전후에 시행되던 군제가 6세기 후반에 소멸되었다고 보아왔다.[60] 2000년대 이후에도 완전한 군현제는 아니어도 그 원리를 활용해 통치조직을 정비하거나 각 행정단위를 조정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는데, 이 경우 군이란 용어를 중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소멸한 뒤 그 잔영이 부분적으로 남은 것으로 이해했다.[61] 아울러 통설적 입장에서 5세기 군제의 시행을 율령제도 수용과 연관지어 살피기도 하였고[6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주읍(州邑), 주군(州郡), 군읍(郡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지리지의 한주, 삭주, 명주에 속한 주, 군, 현과 소경들이 모두 고구려의 군, 현 또는 성, 홀 등이었음을 근거로, 평양 천도 이전의 정복 지역에는 성 중심 지배가, 이후의 정복

59 그런데 『삼국사기』 광개토왕 2년 가을 8월 조에는 "평양에 9사를 창건하였다(創九寺於平壤)"로 되어 있다. 만약 9개의 관청이라면 '創'이라는 글자보다는 '立' 혹은 '置' 등이 어울리는 표현이다. 대체로 『삼국사기』 용례를 살펴볼 때 '創'은 주로 사찰 건립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정호섭, 2018,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사학연구』 130).

60 노중국, 임기환, 노태돈 등의 견해로 통설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61 김현숙, 2005, 앞의 책.

62 홍승우, 2009, 「백제 율령 반포 시기와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역에 대해서는 군현적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63] 이러한 통설적 입장에 대해 『삼국사기』와 『한원』 고려기, 덕흥리고분 묵서명, 모두루묘지, 고구려 유민 묘지명 등 군현제 관련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여, 군현제 시행을 전면 부정하기도 한다.[64] 고구려의 주군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료가 부족하고, 남아 있는 사료도 고구려 당시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금석문에서도 고구려 주군현을 확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원』 고려기의 기록은 중기의 군(郡) 흔적이 남아 있는 사료로 보고 있지만, 군을 언급한 직접적인 사료로 볼 수 없고, 말약이나 군두는 무관직이므로 이 기록만으로 지방행정단위로서 군의 실재성을 인정할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집권적 지방통치가 고구려 일부에서 진행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 전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고구려에서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의 실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당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밀접한 만큼 보다 미시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민지배와 관련하여 고구려 수묘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광개토왕비에 대한 재검토와 집안고구려비 발견과 궤를 같이하였는데, 수묘제에 대한 이해는 고구려 대민지배와도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에서의 수묘제는 고구려 초기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광개토왕비문에는 5세기경의 고구려 수묘인 연호(烟戶)의 편성과 수묘제의 개편 등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집안고구려비에도 고구려 수묘제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 고구려 수묘제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적힌 내용과 관련한 이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광개토왕비에서 수묘인 연호를 보면, 구민에는 국연이 10가(家), 간연이 100가이고, 신래한예에는 국연이 20가, 간연이 200가였다. 수묘인 연호가 220가인 경우에는 국연 20가, 간연 200가이므로 20가 정도가 수묘인의 기본 단위였을 것

63 최희수, 2012, 「5~6세기 高句麗 地方統治의 운영」, 『韓國古代史探究』 10.

64 정호섭, 2019, 「고구려의 州·郡·縣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이해해오고 있는데, 비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구민을 추가한 연호인 330가라고 본다면 20가의 구성으로는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묘인 연호 운영에 대해 30가 혹은 33가가 한조를 이루어 국내성 시기의 왕릉 수묘에 동원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65] 국연과 간연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국연이 수묘역(守墓役) 수행에 주가 되고 간연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연과 간연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입역상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국연과 간연을 수묘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국역(國役)편제에서 연호 일반을 파악하는 보편적인 편제방식인 국연-간연 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국연은 국도의 연, 간연은 지방의 연으로 이해하기도 하고[66] 국연은 직접적으로 역을 지는 존재이고, 간연은 경제적으로 국연을 뒷받침하는 예비 수묘인이거나 간연은 결원을 대비한 인원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67] 또한 국연을 광개토왕을 위한 연호, 간연은 기타 왕릉에 배정된 연호로 보기도 하였다.[68] 한편, 고구려 수묘인 연호의 사민인지, 번상입역인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는데, 여전히 이러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수묘인

65 33가를 한조로 보는 견해는 조인성과 김현숙이 제기한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이성시와 정호섭이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이성시, 2008, 「광개토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정호섭, 2012, 「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 改編」, 『先史와 古代』 37). 한편, 30가를 한조로 보는 견해로는 김락기와 기경량이 있다(김락기, 2006, 「고구려 수묘인의 구분과 입역방식」, 『한국고대사연구』 41; 기경량, 2010,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한국사론』 56).

66 이도학,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연과 간연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8.

67 권정, 2002, 「한중일 비교를 통해 본 고대 수묘인의 성격」, 『일어일문학연구』 42-2; 김락기, 2006, 앞의 글;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고구려발해연구』 39.

68 기경량, 2010,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호의 차출방식과 대민지배를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12년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으로 고구려 수묘제에 대한 연구는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집안고구려비에는 광개토왕비에 보이지 않는 '연호두(烟戶頭) 20인명(人名)'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연호두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다. 각 왕릉에 배정된 수묘인 연호 20가의 호주로 이해하거나,[69] 반대로 수묘인 연호 가운데 연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내지 관리자로 보기도 한다.[70] 이처럼 연호두에 대한 견해는 집안고구려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호주설(戶主說)과 대표자 혹은 관리자설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집안고구려비가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묘상입비의 실물이며, 광개토왕대에 수묘인 연호가 각 왕릉에 20가씩 배치되고 그 호주의 이름이 비에 새겨진 것으로 이해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집안고구려비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묘상입비의 실물이 아닌 전혀 다른 교령비 등과 같은 성격의 비이고, 수묘인 연호 가운데 국연과 같은 왕릉의 책임자 내지 관리자가 있어 그들의 이름만 비에 새겨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으로 인해 고구려 수묘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였지만, 논란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한편, 광개토왕은 수묘인이 매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묘인 매매 문제도 법제화하고 있다. 즉, 수묘인 연호를 서로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판 자는 형벌을 받고 산 자는 대신 수묘하도록 한 조처였다. 수묘인을 사고판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수묘인 자체의 불법적 매매나 귀족에 의한 수묘인 노동력 수탈, 토지, 무기 등이 제기되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도 수묘인 사이에서의 노동력 매

69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여호규, 2013b,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硏究』 70; 공석구, 2013, 「집안 고구려비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5;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수묘제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등).

70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정호섭, 2013a,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硏究』 70; 李成制, 2013, 「集安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韓國古代史硏究』 70;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매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71] 광개토왕비나 집안고구려비에 나타난 문장으로 보면 매매되는 것이 수묘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구절에서도 수묘인 이외의 다른 사항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묘인 노동력이나 수묘인 자체의 매매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72] 수묘인 혹은 수묘인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매매에 대해 왕이 교령 등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2. 대외관계와 영역변천

고구려사 연구에서 국제정세의 변동과 이와 연동되는 대외교섭은 바로 고구려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사 연구도 이러한 대외관계에 주목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사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각 세력들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이전 연구에 비해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연구가 많이 진전된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영역변천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4세기 고구려 대외관계의 방향은 5호 16국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연(前燕), 전진(前秦), 후조(後趙), 후연(後燕) 등과 다층적인 외교관계와 한반도 중서부에 있었던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 그리고 남쪽으로 백제와의 관계로 전개되었다. 4세기 대외관계에서는 전연과의 관계에서 고구려로 침공한 루트로 거론되는 남도와 북도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중국, 일본, 북한, 한국 학계가 저마다 다른 루트를 설정해온 것이다. 이처럼 남도와 북도가 어느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는데, 2000년대 이후로도 이 논쟁은 지속되었다. 기존의 다양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 남도, 북도에 대한 루트 비정이 있었다.[73] 주로 분기점이 어디인지, 목저성이나 남소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71 기경량, 2010, 앞의 글; 정호섭, 2012, 앞의 글.

72 정호섭, 2012,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고 구체적 경로는 어디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왔는데, 2000년대 이후로도 영릉진을 분기점으로 보아 영릉진-왕청문진-통화-집안의 경로를 북도, 영릉진-환인-신개하-집안 경로를 남도로 파악하였으며,[74] 무순-소자하-부이강-신개하 경로를 북도, 태자하-환인-혼강 하류 압록강 연안 경로를 남도로 상정하기도 하였다.[75] 또한 무순-소자하-영릉진-육도하-환인-신개하-집안의 경로를 북도, 태자하-환인-신개하-집안의 경로를 남도로 설정하고, 북도와 남도는 북도의 진입로인 무순 일대의 직선 교통로와 남도의 진입로인 태자하 연안의 구불구불한 지형을 표현한 것을 위서와 진서에 등장하는 '북치(北置)'와 '남섬(南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76] 남도와 북도 문제는 사료 해석과 교통로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세기 전반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차지한 이후의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북한학계와 남한학계는 아주 큰 이견이 있긴 하다. 북한학계는 동수, 유주자사 진 등을 모두 고구려 왕이나 고구려 출신으로 이해하면서 직접지배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학계는 연구자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낙랑군과 대방군 지배는 간접적인 지배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수나 유주자사 진의 경우처럼 중국계 망명객을 안치하고, 보호·통제하면서 낙랑과 대방 지역을 경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77]

---

73 공석구, 2007a,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15;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30; 기경량, 2016, 「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한국문화』 73.

74 공석구, 2007a, 위의 글.

75 정원철, 2011, 앞의 글.

76 기경량, 2016, 앞의 글.

77 공석구와 임기환의 2000년대 이전 연구 이후로도 이 지역지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제시되었다(공석구, 2007b,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白山學報』 78; 여호규,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硏究』 53; 안정준, 2013, 「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韓國古代史硏究』 69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5세기 대외관계는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전후한 시기의 관계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있었다. 여러 국가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 광개토왕대에는 중국 세력으로 서쪽 방면으로 국경을 접한 후연, 그리고 북위, 북연, 남연 등의 세력이 있었고, 남쪽 방면으로는 국경을 접한 백제와 신라, 백제와 협력관계에 있었던 왜가 있었으며, 또 다른 국경을 접하고 있던 주변 세력인 거란, 숙신, 동부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과의 대외관계가 주목된다. 특히 광개토왕비의 영락 17년조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후연과의 전쟁인지, 백제와의 전쟁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후연과의 전쟁은 영락 17년조 기사의 문구를 중시하고, 『삼국사기』의 후연관계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78] 백제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거론된 사구성이나 루성 등의 명칭이 백제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광개토왕비의 전체 맥락이 백제전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79] 이 논쟁도 어디까지나 당시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후연과의 전쟁에 대한 이해나 비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입장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는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편,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하게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을 요동 지역의 정세와 고구려의 진출 과정 및 후연과 고구려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논의에서도 그 시점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395년 이전에 요동 지역을 장악하였다고 보는 견해[80]와 이 보다 늦은 400~402년 무렵 혹은 407년경에야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다는 견해[81]로

78 천관우 이후 후연전이 주장되어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도 대표적으로 공석구가 재차 이를 보강하였다(공석구, 2012, 「廣開土王의 요서지방 진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79 박시형 이후 백제전이 주로 주장되어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도 대표적으로 여호규가 재차 이를 보강하였다(여호규, 2012a,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80 공석구, 2012, 앞의 글;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 45.

81 여호규, 2012b,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뉘고 있다. 전자는 삼국사기에 요동을 장악한 직접적인 기록이 있고, 또한 당대 금석문인 광개토왕비의 영락 5년조 기사를 중요시하며, 모용보에 의한 광개토왕의 책봉 기사를 주목한다. 반면 후자는 자치통감 등의 기록에 따라 400년까지 후연이 요동 지역인 평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400년 이후에야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제적 영역확보나 지배력의 정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수왕대의 대외관계에서 고구려는 420년대 전반까지는 동진이나 송과 교섭하였고 평양천도에 따른 내부수습 과정에서 외교관계를 하지 못하다가 430년대 후반에서야 북위와 교섭하였다. 이후 440년부터 북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채 송과 외교관계에 집중하다가 462년에 북위와의 교섭을 재개했다. 대체적으로 439년에서 440년경이 대중관계에서 분기점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세력균형을 이룬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도 그러한 경향이 없진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시기별로 달라지는 양상에 대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대책으로 보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고구려가 420년대 전반까지 동진·송과 교섭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연구자들이 백제 혹은 왜에 대한 견제책으로 파악해온 반면, 주로 북위에 대한 견제책으로 이해하고 있다.[82] 425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에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도 있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83] 435년부터 고구려가 북위와 교섭하면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것은 대체로 강자인 북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

교」, 『韓國古代史硏究』 67; 이성제,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한국고대사연구』 68.

82 노태돈, 2012a,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67; 김철민, 2016, 「고구려 장수왕대의 대송외교와 그 배경」, 『한국사학보』 63; 井上直樹, 2002, 「高句麗と五世紀の東アジア」,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0.

83 박진숙, 2004,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백제」, 『한국고대사연구』 3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84] 또한 북위의 북연에 대한 온건책을 고구려의 사신 파견이 계기가 되어 북위가 강경한 정벌정책으로 선회하였다고 보면서 북위의 우위를 인정하고 북위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85] 한편, 오래전부터 440년에 북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대송외교를 전개한 것은 주변국들이 송 중심으로 북위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86] 2000년대 이후 연구들도 기본적인 인식은 동일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고구려가 송과 북위의 대결 구도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북위의 위협을 차단했다고 보기도 하고, 산동반도 일대의 정세 변화와 깊이 연관된다고 이해하기도 하며, 북위 견제와 함께 백제나 왜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을 지녔다고 이해하기도 한다.[87] 한편, 송 중심의 대북위 포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교역이나 중개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88]

5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북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고구려는 북위와의 외교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외교를 재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이 약화되고 백제가 북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고, 물길이 북위에 고구려 공격 의향을 밝히는 등 고구려 주변의 세력들이 북위와의 연계를 도모하게 되면서 북

84 오래전부터 이러한 견해는 지속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도 井上直樹, 박진숙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85 이성제,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5, 「고구려적 국제질서인식의 성립과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6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견해로 통설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7 井上直樹, 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政勢」,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8; 이성제, 2005, 앞의 책; 백다해, 2016, 「5세기 국제정세와 장수왕대 대송관계의 성격」, 『역사와 현실』 102;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8 김진한, 2020, 위의 책; 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나 물길이 북위에 접근한 시기가 470년이어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도 있다.[89] 나아가 북위와의 외교 재개는 백제와 왜의 연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백제와 신라의 동맹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90] 결국 고구려는 북위와 외교적 노력으로 우호 관계를 이룬 결과 북위와 주변의 적대세력 간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자왕대에도 고구려는 거의 매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북위도 이에 호응하여 두 나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발굴 등을 통한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강역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고고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고구려의 강역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강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의 강역을 명확하게 선으로 획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고구려 중기의 한강 유역 이남의 영유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구려가 475년에서 551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강 이남과 경기 남부 지역을 장악하여 직접적으로 영역을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475~551년 사이에 한강 유역 영유에 관한 논란은 그것이 해당 지역을 고구려가 영유했는가 아니면 백제가 영유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세부적으로는 고구려가 영유했다면 공고한 지배체제가 구축된 직접적인 영역지배인가 아니면 교두보 내지는 요충지의 확보 차원에서의 일시적 점유인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가 이 시기 한강 유역을 공고하게 차지했다는 통설은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고지'와 475년 장수왕의 한성 함락과 백제의 웅진 천도, 『일본서기』 흠명기에 전하는 551년 성왕의 한성 회복 등의 기록이 중요한 근거였고, 근래 고고학자료들도 여기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와 달리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89 井上直樹, 2000, 앞의 글.

90 井上直樹, 2000, 위의 글; 박진숙, 2004, 앞의 글; 김진한, 2020,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산' · '한성' 관련 기록과 한강 이북에서 벌어진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기록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통설적인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킨 이후 이 지역을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역지배가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다.[91]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은 듯한데, 한강 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점유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백제의 점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조는 대체로 5세기 상황의 반영이고, 475년경부터 고구려의 직접적인 영역지배가 가능한 곳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고구려의 한성 점령 이후 동성왕에서 무령왕에 이르는 시기에는 대체로 한강 유역이 회복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 백제본기에는 한강 이북 일대에 비정될 수 있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475년에서 551년 사이에 고구려와 백제의 접전지는 475년 이전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동성왕과 무령왕대에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하였다고 보는 것이다.[92] 통설적 입장에서 한강 유역과 그 이남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 지배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한강 이남에서도 고구려 산성과 고분 등의 유적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91 임기환, 2002,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양태」, 『향토서울』 66; 김수태, 2006, 「백제 성왕대의 변경-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4;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 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硏究』 47; 양시은,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여호규,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92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 김현숙, 2003,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서영일, 2003, 「한성 백제의 남한강수로 개척과 경영」, 『문화사학』 20; 김현숙, 2008, 「고구려의 한강 유역 영유와 지배」, 『百濟硏究』 50; 양기석, 2008,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김현숙, 2009, 「475년~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鄕土서울』 73; 백종오, 2009, 「남한내 고구려고분 검토」, 『高句麗渤海硏究』 35; 박현숙, 2010,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韓國古代史硏究』 5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즉, 공고한 지배체제의 구축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요충지의 확보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93] 한편, 최근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로 기인하여 한강 이남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이나 고분 유적이 확인되지만, 전체 유적의 빈도나 규모, 문화적 양상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고구려에 의한 영역 지배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고 일시적인 점유나 군사적 요충지와 교통로 중심의 거점지배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것이다. 동성왕-무령왕대 관련 사료 해석, 성곽과 고분 등 고고학적 해석 차이에 따른 한강 이남 지역 지배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Ⅳ. 후기사 연구의 쟁점

1. 정치와 지배체제

고구려 후기 정치사는 안장왕대부터 이어지는 고구려 정국의 혼란과 귀족연립정권 내지는 귀족연립체제 속에서의 정국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원인을 국내계 귀족세력과 평양계 신흥 귀족세력의 대결 구도를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있다.[94] 반면 귀족연립정권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데, 귀족연립정권을 설명하는 중국 측 기록이 왕위계승전을 비롯한 정변 뒤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양원왕에서 영류왕에 이르기까지 왕권의 위상이 회복 내지는 강화된 것에 주목하여 귀족연립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

93 심광주, 2001,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김영심, 2003,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영역」,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문안식,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서울지역의 동향」, 『서울학연구』 39;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高句麗渤海研究』 36; 김영관, 2015,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 『백제문화』 52;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94 임기환, 2004,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다.[95] 또한 귀족연립정권에서 정치 운영의 핵심이었던 귀족회의가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온 기구로 정치체제의 전환이란 시각에서 귀족연립체제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96] 이처럼 귀족연립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구려 후기 정치사를 귀족연립체제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 상황이다. 다만 부체제-중앙집권체제-귀족연립체제라는 틀로 고구려사를 설명할 때 각 체제 간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중앙집권체제라는 틀 속에서 귀족연립체제를 설명하고 중앙정치체제만의 특징을 차이로 제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후기에도 귀족세력들은 귀족회의를 통해 국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족회의의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먼저 위두대형 이상의 상위 5관등 소지자가 구성원으로 대로(對盧)로 칭했다고 보고 있다.[97] 반면 귀족집단의 대표자들이 제2위 관등인 막리지(莫離支: 태대형)를 차지하며 귀족회의체를 구성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98] 대대로를 관직과 관등으로 구분하면서 대대로 관등을 소지한 대인들이 '대인회의'로 정치적 역관계를 조정하고 상위 5관등 소지자가 일반 귀족회의를 구성하였다는 이원적 운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99] 또

95 이문기, 2000, 「고구려 막리지의 관제적 성격과 기능」, 『백산학보』 55; 민철희, 2002, 「고구려 양원왕·평원왕대의 정국변화」, 『사학지』 35; 이문기, 2003, 「고구려 중리제의 구조와 그 변화」, 『대구사학』 71; 김진한, 2007, 「6世紀 前半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군사』 64; 김진한, 2009, 「嬰陽王代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隋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3; 최호원, 2012, 「高句麗 嬰陽王代의 新羅攻擊과 國內政治」, 『한국사연구』 157; 최일례, 2015, 「평원왕대 정국 운영의 특징과 그 함의」, 『고구려발해연구』 53; 최일례, 2016,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한국고대사연구』 82.

96 장병진, 2017, 「고구려 정치사 서술에 쓰이는 개념과 용어들」, 『學林』 40.

97 노태돈 이후 정원주가 다시 제기하였다(정원주, 2013, 「高句麗 滅亡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98 임기환, 2004, 앞의 책.

99 윤성환, 2015,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大對盧」, 『군사』 9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제1위 관등은 대로라고 보면서 제1위 관등이자 5부의 대표자인 대로가 합의하여 최고위 관직자인 대대로를 선임했다고 보기도 한다.[100] 한편, 대대로의 주기적인 선출은 이러한 막리지들 사이의 역관계를 재조정하며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후기의 귀족연립체제는 대대로-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로 이해하기도 한다.[101] 대대로, 막리지, 대로 등의 성격과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로가 관직인지[102] 관등인지[103] 아니면 특정 귀족회의나 합좌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칭호인지[104] 등의 논란도 있어서 최근 금석문 등에 나타나는 기록상의 해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류왕대 고구려 정국에 대해서는 대외정책과 관련지어 영류왕과 연개소문의 대립축을 중심으로 논의해온 이후 양자의 대립축을 토대로 정국을 분석하였다. 보장왕대의 정국운영과 관련해서도 연개소문 정변과 정치권력의 구조에 관심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영류왕과 연개소문 간의 대립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료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대체로 대당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당온건론을 중시하였던 영류왕이 대당강경론자였던 연개소문과 외교노선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왕권을 강화하려던 왕의 의도에 연개소문이 장애가 되었거나[105] 연개소문이 정변 직후에 김춘추에게 영토 반환을 요구했으며, 직접 신라 공격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대신라강경책을

100 이규호, 2017, 「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 127.

101 임기환, 2004, 앞의 책.

102 임기환, 2004, 위의 책; 윤성환, 2015, 앞의 글.

103 이성제,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分析」, 『中國古中世史硏究』 38.

104 정원주, 2013, 앞의 글;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105 김기흥이 제기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방용철이 다시 제기하였다(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분으로 삼아 정변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한다.[106] 이와 함께 특히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막리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왔다. 막리지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 제1위 관등인 대대로(大對盧)와 동일한 것으로 대대로를 통칭하여 막리지로 불렀다는 견해와 막리지는 제2위 관등인 태대형(太大兄)의 별칭(別稱)이라는 견해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기존의 막리지에 대한 이해가 연개소문 정변 이후 확대 해석된 것으로 막리지는 관등과 관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관제로 국왕의 근시업무를 담당하는 내조의 영수인 중리태대형(中裏太大兄)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였다.[107] 한편 중리계(中裏系) 관등을 국왕의 측근세력이나 국왕 근시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관등의 일종이므로 관등제의 운영과 연관시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108]

연개소문 집권 이후의 정치 운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2000년대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귀족연립체제가 유지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보장왕의 왕권과 연개소문의 권력이 양분된 이원집정제로 파악하기도 하며, 연개소문의 독재적 권력이 행사되는 체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견해는 이어졌는데, 연개소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권력이 독점되는 현상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귀족연립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 후기 관등과 관련해서는 사료상에 보이는 차이에 따른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구려 후기 관등이 12관등인지 아니면 13관등인지에 관한 것인데,[109] 주서 고려전과 천남산묘지명에는 13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수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 등에는 12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의

106 최호원, 2013, 「연개소문의 정변과 高句麗·新羅 關係」, 『사총』 80; 김강훈, 2021,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역사학보』 249.

107 이문기, 2003, 앞의 글.

108 여호규, 2016, 앞의 글.

109 오래전부터 武田幸男이 13등급을 제기해오다 임기환이 12등급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임기환, 2004,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이인 것이다. 또한 신당서와 한원 고려기에 보이는 과절(過節)과 부절(不節)을 관등으로 보아 14등급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10] 사료마다 차이도 있지만, 문헌기록과 금석문상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보다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듯하다.

『한원』 고려기의 기록은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논쟁이 있어왔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당시 지방통치단위가 몇 단계로 편제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조직에 대해서는 성과 지방관의 대응관계와 관련하여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제대성(욕살-가라달)-제성(처려근지-가라달)-성(루초)의 3단계설이 점차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1] 한편,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조직의 구조와 관련하여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내평(內評)과 외평(外評)의 위치와 지방 5부의 존부 여부인데, 지방관인 욕살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아직 논란이 있을 뿐 2000년대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듯하다. 아울러 고구려 후기 지방관인 욕살, 처려근지, 가라달, 루초 등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한편, 지방통치조직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산성이 군사적 기능과 지방통치 기능을 함께 수행했다는 것에 주목하여 확인되는 산성을 통해 고구려의 방어체계와 지방통치조직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를 지방통치조직과 운용양상에 대해 추정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2000년대 들어서 직접 고구려 산성을 답사하여 확인하게 되면서 나온 성과라 할 수 있다.[112]

---

110 노중국, 2003, 「삼국의 관등제」,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11 武田幸男 이후 임기환, 김현숙, 여호규, 최희수, 나동욱 등 많은 연구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체로 3단계설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112 여호규, 임기환, 이경미, 이성제 등에 의해 많은 연구성과가 제시된 바 있어 여기서는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국제정세와 수당전쟁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동북방 부여성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방어선이었다.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해서는 무엇이 장성 유적인가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 우선 기록처럼 긴 장벽의 존재를 가정하고서 경계선인 요하 동안에 흙으로 장벽을 구축했다는 견해[113]와 국경 지대의 산성들을 연결하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견해가 있는데,[114] 이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조금씩은 보인다. 반면 연결된 장벽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산성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했다는 견해도 있다.[115] 결국 사료상의 장성의 실제 여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특히 노변강 유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토축으로 된 '노변강 유적'을 고구려 천리장성 유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를 부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리장성의 노선에 대한 의견 차도 존재해왔다. 이것은 고구려 부여성의 위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중국 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요령성과 길림성으로 양분되어 장성의 경로를 각기 지역적 입장에서 설정해왔다. 부여성의 위치를 주로 농안 일대 혹은 서풍 성자산산성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농안에서 영구에 이르는 경로와 서풍 성자산산성에서 대흑산산성에 이르는 경로가 주로

113 李健才, 신형식, 田中俊明 등이 제시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호규, 張福有·孫仁杰·遲勇, 우석훈, 신광철 등이 재차 언급하였다(여호규, 2000a,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 우석훈, 2014, 「요하 유역의 고구려 천리장성」, 『군사』 92; 신광철, 2022,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4 陳大爲, 梁振晶, 王綿厚 등 중국학자들에 의해 1980~1990년대에 주로 제기된 견해이다.

115 이성제, 2014b,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嶺南學』 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정되어온 것이다. 후기 부여성의 위치 문제에서 농안을 중요 지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116] 아직까지 농안 일대에서 고구려 산성이 확인된 바 없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천리장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모든 견해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직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견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학계의 논의를 거쳐서 천리장성의 기능과 성격, 경로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신라가 당과 연결됨에 따라 고구려는 백제와 연화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삼국사기』 등에 보인다. 때문에 7세기 여제연화를 긍정하는 입장[117]이 통설적인 견해를 차지해왔다. 백제와 고구려, 왜국의 비밀 군사 동맹 관계가 595년경에는 이미 성립하여 백제 멸망 이후까지 이어졌고, 이 동맹체제는 고구려가 수, 당을 의식한 군사 협력을, 백제와 왜국은 신라를 상대로 하는 군사 협력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이다.[118] 이에 반해 신라가 당나라에 구원요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는 입장[119]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제연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에는 여제연화설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20]

---

116 한국학계에서는 노태돈과 여호규가 후기 부여성의 중심지를 농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117 盧重國, 鄭孝雲, 金壽泰, 山尾幸久 등이 견해를 제시한 바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김은숙의 견해가 있다(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118 김은숙, 2007, 위의 글.

119 李昊榮이 처음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박윤선, 2007,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방용철, 2016,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120 정동준, 2006, 「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61, 135쪽; 윤성환, 2011,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단계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79, 40~43쪽; 정원주, 2013, 앞의 글; 金德原, 2016, 「고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제와 고구려는 관계를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못한 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양국 간의 관계 변화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121] 또한 643년의 화친 내용은 고구려는 백제 북변의 안위를 보장해줌으로써 백제의 대신라 공세를 묵인하는 대신, 백제는 예상되는 당의 고구려 침공이 있을 경우 후방에서 고구려의 남변을 교란하지 않거나 최소한 당을 활용해 고구려를 견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122] 아울러 642년 기록에 대해 고구려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655년 기록 역시도 백제는 참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이는 당시 신라가 항상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123]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인 연화의 한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입하였을 때 고구려가 백제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24] 아울러 여제연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인 동맹은 현실적으로 나당관계와 비교해서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나당연합처럼 군사동맹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를 고구려와 백제 두 국가의 결합이 당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125]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연계 형태는 초반에는 신라에 대한 순차적인 공격을 통해 서로 간의 군사적 위기를 해소시켜주는 정도였다가 626년 당의 한반도 삼국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과 신라에 대한 일방적 편애 속에서 630년 왜에서의 사신단 회동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형태의 연계를 모색하기 시작하

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135~139쪽; 김지영, 2016,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2, 116~117쪽; 최호원, 2020, 「고구려 후기 국내정세와 신라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1 박윤선, 2007, 앞의 글.

122 윤성환, 2011, 앞의 글.

123 방용철, 2016, 앞의 글.

124 李昊榮이 제기한 이래 2000년대 이후에도 비슷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윤성환, 2011, 앞의 글; 최호원, 2020, 앞의 글).

125 정원주, 2013,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으나, 642년 당항성 탈취 도모와 655년 신라 북변 공격에서 드러나듯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군사연계 수준이었다고 보기도 한다.[126]

한편, 여제연합의 군사적 전략은 연합공격 등 직접적이기보다는 적에 대한 분산 효과 등 간접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127]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는 군사적인 동맹과 같은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여제연화설'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백제 간 화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긍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제한적 연화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사료를 통해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연화 자체를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의 연화가 나당연합군을 상대하는 굳건한 결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신라를 공동으로 공격하여 성(城)을 차지하는 등 양국의 가시적인 이익이 구현될 때 작동 가능한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28]

7세기 국제관계에서 고구려와 서역의 관계에 관해서 많이 논의된 것이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조우관을 쓴 인물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아프라시압 궁전의 고구려 사절도를 통해 당시 강국에 실제로 파견된 고구려 사절로 이해하는 견해가 보편적이다.[129] 조우관을 쓰고 환두대도를 찬 2명의 사절은 고

126 김지영, 2016, 앞의 글.

127 정동준, 2006, 앞의 글

128 정호섭, 2023,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과 고구려의 대응」, 『선사와 고대』 72.

129 발견 이후 알바움, 김원룡, 박진욱 등 많은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데, 2000년대 이후로도 다수의 연구자가 이에 관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다(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최광식, 2007a,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 『중앙아시아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 -고구려 사신의 康國 방문 이유-」, 『백산학보』 89;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압 宮殿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한 고찰 - 高句麗에서 사마르칸드(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8-2; 이재성, 2016,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려가 7세기 중엽경에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보낸 외교 사절로 보거나 고구려가 서돌궐에 우호와 통상을 위해 보낸 사절 등으로 이해하면서 실제적 사실에 대한 그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편, 궁전 벽화 속의 고대 한국인이 실제로 파견된 신라인이나 발해인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지만, 고구려 사절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정착되고 있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당은 대체로 650년대부터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여러 주변 국가를 형식적이지만 기미지배 체제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의 종주권이 서돌궐카간국에서 당왕조로 바뀌는 정세 변동이 있었다.

7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는 당(唐)나라와의 장기적인 전쟁 상황이었다. 고구려가 수도인 평양으로부터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강국(康國)까지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그리고 사절이 파견되었다면 고구려는 어떤 목적으로 파견하였는지, 사절 파견의 결과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고구려인의 모습은 맞지만 실제로 파견된 사절이 아니라 강국의 세계관에 의해 표현된 고구려인의 이미지가 당이나 돈황벽화 등에 보이는 전형적인 도상의 차용에 의한 것 혹은 강국의 입장에서 어딘가에서 접촉한 동쪽의 끝나라인 고구려인의 이미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30] 아울러 실제 파견된 사절이 아닌 것으로 보면서 표현된 고구려 이미지는 서돌궐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31] 이후 이러한 논의에 대한 재비판도 있었다.[132]

---

130 정호섭, 2013b,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 -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남학』 24.

131 이성제, 2019,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고구려 사절이 아프라시압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

132 서길수, 2020a, 「아프라시압 高句麗 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Ⅰ)」, 『고구려발해연구』 66; 서길수, 2020b, 「아프라시압 고구리[高句麗]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고구리[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Ⅱ)」, 『동북아역사논총』 6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부흥운동과 유민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고지에서의 유민의 동향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부흥운동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668년 12월에 고구려 지배를 위해 5부(部), 176성(城), 69만 7,000호(戶)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대체하여 9도독부(都督府), 42주(州), 100현(縣)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공이 있는 고구려인을 부, 주, 현의 장관인 도독, 자사, 현령으로 임명하고, 당 관리가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는데, 기미지배를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한 자료로 주목되는 것이 『삼국사기』 권37 지리지에 있는 압록수 이북의 31개의 성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압록수 이북의 아직 항복하지 않은 11성(未降城)', '압록수 이북의 이미 항복한 11성(已降城)', 압록 이북의 도망한 7성(逃城)', 압록수 이북의 쳐서 얻은 3성(打得城)'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667년에 당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시 남생측이 목록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추정해왔다.[133] 당의 2차 원정군의 공격이 개시된 667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당군에 의해 작성된 전황표라는 것이다. 반면 이 목록이 고구려 멸망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134] 최근에도 이 목록을 669년 이후 당이 고구려 지역에 기미지배를 하고자 했을 때 작성된 자료로 보면서 목록에 보이는 '미항성(未降城)' 등을 유민들에 의해 부흥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안동도호 설인귀가 당의 지배를 벗어나 있

133 池內宏 이후 노태돈 등이 제기했고, 최근 임기환이 재차 언급한 바 있다(임기환, 2022b,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한국사학보』 86).

134 이병도가 제기한 견해로 2000년대 이후로도 다수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김현숙, 2004,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김강훈, 2016,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軍史』 99; 장병진, 2016, 「당의 고구려 고지(故地) 지배 방식과 유민(遺民)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1; 김강훈, 2018,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배 시도와 유민의 동향」, 『대구사학』 133; 방용철, 2018, 「고구려 부흥전쟁의 발발과 그 성격」, 『대구사학』 133; 오진석, 2021, 「연남생 투항 이후 고구려 서북부 성곽방어체계의 붕괴과정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1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던 압록수 이북의 고구려 성을 공략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목록'이라고 이해하면서 669년 전반 신성, 요동성, 안시성, 부여성 등 고구려 주요 성을 중심으로 요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135] 그런데 신성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항복한 성이 확인되고, 669년 전반 당군의 군사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서 이 목록이 멸망 이후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는 점도 있다. 이러한 목록의 작성 시기에 대한 논란은 '미항성' 목록에 기재된 요동 지역의 중요한 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하는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목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서안과 낙양 등지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고구려 유민 묘지명이 다수 소개되어 이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에서 살아간 유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고구려 말기의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자료가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 자료는 30건에 가깝다. 개별 유민 묘지명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개별 유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구려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측면이 있다. 고구려 유민 묘지명은 고구려 말기의 상황과 고지에서의 부흥운동 그리고 유민들의 여러가지 인식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되었고, 특히 출신에 따른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136] 아울러 이를 이주사나 디아스포라로 바라보는 연구도 등장하였다.[137] 유민 연구가 1세대나

135 김강훈, 2018, 앞의 글.

136 유민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서 모두 열거할 수 없어서 일부만 언급한다(李成制, 2014a,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硏究』 75; 김수진, 2017, 「唐京 高句麗 遺民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호규·拜根興, 2017,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2019,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高句麗渤海硏究』 64).

137 苗威, 2011, 『高句丽移民研究』, 吉林大学出版社; 拜根兴, 2012, 『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 以西安洛阳出土墓志为中心』, 中国社会科学出版社; 정호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세대의 경우 고구려에서 삶을 영위한 바 있기 때문에 고구려사와 연관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유민 후속세대들의 역사가 과연 고구려사의 범주인지, 당나라 역사의 범주인지, 이민이나 이주사의 영역인지 아니면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자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민사 이해에 대한 기존의 민족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유민들의 상장례를 통해 접근한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138] 고구려 유민사가 한국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V. 도성과 왕릉 연구의 쟁점[139]

1. 도성

고구려는 천도를 몇 번 단행하였기에 도성의 위치와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성은 역사학의 한 축인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도성과 관련한 논의는 문헌기록이나 금석문의 기록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오녀산성, 국내성과 환도산성, 안학궁성 등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초기 도성과 관련하여 졸본과 흘승골성, 유리왕대 천도기록이 전하고 있는 국내 위나암의 위치와 그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졸본 혹은 홀본은 현재 중국 요령성 환인으로 비정되는데

2017,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선사와 고대』 53.

138 정호섭, 2021, 「唐의 喪葬令을 통해 본 고구려·백제 遺民의 喪葬禮」, 『한국고대사연구』 104.

139 이 부분은 고구려사 전시기에 걸친 내용이고, 고고학뿐만 아니라 문헌사에서도 쟁점으로 다룬 부분이어서 별도로 장절을 설정하였고, 『고구려통사-총론편-』에 수록한 2000년대 이후 연구동향과 관련한 필자의 서술을 바탕으로 수록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견이 없고, 흘승골성도 대체로 오녀산성으로 보고 있다. 졸본의 평지 중심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는데, 나합성,[140] 하고성자성,[141] 고려묘자 일대[142]로 보기도 하고 평지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143] 등이 있다.

나합성은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홀본 서쪽 성산 위에 도읍을 정했다는 기록에 따른 방위는 맞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는 측면이 있고, 고고학적인 실체 확인이나 연대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하고성자성은 환인의 평지성이라는 점은 부각될 수 있지만, 오녀산성의 서쪽에 위치한 관계로 방위 측면에서 광개토왕비와 맞지 않는다. 고려묘자촌은 현재 수몰 지역인데 평지성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존재가 확인된 바 없이 주변에 고려묘자 무덤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 위나암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후대에 각색하여 건도지로 재설정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오녀산성으로 보기도 하고[144] 환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기도 하는데, 산성자산성[145]과 패왕조산성[146] 등이 제기된 바 있다.

---

140 田中俊明, 2005,「高句麗 長安城의 規模와 特徵 -條坊制를 中心으로-」,『白山學報』72; 노태돈, 2012b,「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韓國古代史硏究』68; 이도학, 2015,「『三國史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韓國古代史硏究』79.

141 王綿厚, 2003,『高句麗古城硏究』, 文物出版社; 閔德植, 2003,「高句麗 平壤城의 都市形態와 設計」,『高句麗硏究』15; 박순발, 2012,「高句麗의 都城과 墓域」,『韓國古代史探究』12.

142 조법종, 2007,「고구려 초기도읍과 비류국성 연구」,『白山學報』77; 여호규, 2012, 앞의 글; 양시은, 2014,「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구려발해연구』50; 김현숙, 2017,「고구려 초기 王城의 위치와 國內 遷都」,『先史와 古代』54.

143 기경량, 2017a,「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순홍, 2019,「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진원, 2020,「고구려 졸본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전승의 정비」,『사림』73.

144 노태돈, 2012b, 앞의 글; 이도학, 2015, 앞의 글; 권순홍, 2019, 위의 글; 강진원, 2020, 위의 글.

145 강현숙, 2015,「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역사문화연구』56.

146 김현숙, 2017,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안 지역에 대한 발굴결과 집안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자산성에서 3세기 이전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벽 안쪽 토축의 기초 부분에서 4세기 초로 편년되는 토기편들이 확인됨에 따라 고구려 천도시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유리왕 22년의 국내로의 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점차 강해졌고, 이에 천도를 태조왕대,[147] 신대왕대,[148] 산상왕대[149]로 보는 견해가 나왔다.

고구려가 졸본에서 국내 지역으로 천도한 직후에는 건강유적 등을 근거로 마선구 지역을 평상시 거점으로 하였다는 견해[150]가 있지만, 대체로는 넓은 평지를 두고 굳이 좁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대체로 지금의 국내성 일대가 중심지로 이해하고 있다.[151] 국내성의 초축 시기는 고고학적으로는 3세기 중반~4세기 중반으로 상정되고 있다. 적어도 이 시기까지 국내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해가 부상한 것이다. 과거 1975~1978년 발굴 조사에서 집안현성의 단면을 끊어 살펴보았을 때 석성(石城) 아래에 있는 토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토성은 현토군 때 것으로서 고구려현의 유지로 보아 집안현성 등 한대의 토성이나 연의 요동군과 관련한 거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152]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 결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147 김종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 3; 여호규,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148 임기환, 2018, 「고구려 國內 遷都 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 기경량, 2020, 「고국원왕대 평양동황성의 위치와 이거 기록의 성격」, 『한국학연구』 57; 강진원, 2020, 앞의 글.

149 노태돈은 근래 이에 대해 재론한 바 있다(노태돈, 2012b, 앞의 글).

150 여호규, 2005b, 앞의 글.

151 노태돈, 2012b, 앞의 글; 임기환, 2015, 앞의 글.

152 李殿福, 1981, 「高句麗的丸都城」, 『文物』 1981-6;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2;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 1984-1; 李殿福·孫玉良, 1990, 「高句麗的都城」, 『博物館研究』 1990-1; 李殿福, 2006, 「國內城始建于戰國晚期燕國遼東郡塞外上的一個據点之上」, 『東北史地』 200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153] 고구려성의 축성을 '토심석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환도산성의 경우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는데, 발굴 결과 출토되는 유물의 연대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여러 차례 개축의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점에만 발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기와 등의 편년으로 볼 때 고고학적 증거로만으로는 5세기 이후의 성으로 보인다. 도성과 천도 등 위와 같은 논쟁은 문헌 사료의 해석과 고고학 자료의 해석상의 괴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 도성이 산지성과 평지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154]

한편, 『삼국사기』 동천왕대 기록에 등장하는 평양성은 과거부터 현재의 평양설,[155] 강계설,[156] 집안시 양민지역설,[157] 집안 국내성설[158]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는데, 집안 국내성설이 다수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고국원왕대 등장하는 평양동황성에 대해서도 과거 여러 후보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청호동

15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04, 『國內城』; 심광주, 2005,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성곽연구」,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局, 2009, 「2008年集安市國內城社區辦公樓地 點高句麗居住址的發掘」, 『北方文物』 2009-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9, 「集安市實驗小學校發掘地點考古發掘簡報」, 『北方文物』 2009-4; 양시은, 2013, 「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 『嶺南學』 24.

154 기경량, 2017a, 앞의 글; 임기환, 2018, 앞의 글.

155 채희국, 1965,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정찬영, 1966,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손영종, 1990,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56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王權 및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强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2.

157 张福有, 2004a, 「高句丽第一个平壤城在集安良民即国之东北大镇-新城」, 『东北史地』 2004-4; 임기환, 2015, 앞의 글.

158 심광주, 2005, 앞의 글; 김희선, 2010, 「高句麗 國內城 研究」, 『白山學報』 87; 여호규, 2012c, 앞의 글; 강진원, 2018, 「고구려 국내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집권력 강화」, 『한국문화』 82; 기경량, 2018,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사학연구』 1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성,[159] 청암동토성,[160] 임강지역,[161] 안학궁지,[162] 의암동토성[163] 등이 다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평양성과 평양동황성 기록은 추정 의견만 있을 뿐 명확한 것은 없는 상태이다.

427년 천도와 함께 평양 시기의 도성에 대해서도 논쟁도 이어졌다. 고구려가 427년 국내 지역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함에 따라 천도와 함께 조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도성이 있을 수 있고, 장안성이 축조됨으로써 후기 도성으로서 평양성이 멸망할 때까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고구려 도성이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제기된 것이 대성산성과 안학궁성, 대성산성과 청암동토성을 주목하였다. 청암동토성에서는 왕궁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안학궁성의 조영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안학궁성을 평지성 유적으로 이해하면서 약수리 고분벽화의 성곽도를 안학궁성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안학궁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고구려 기와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기와까지 출토되고 있다. 고구려 전형적인 기와도 출토되고 개와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고구려 때의 유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164] 반면 대부분의 기와가 고려시대의 것이고 고구려 석실묘를 파괴하면서 고려시대 안학궁이 조영된 것으로 보고 고려시대 축조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65] 아울러 장수왕 천도 때에 청암리 토성이 궁성이었다가 안학궁성 축조 이후 왕궁으로 삼았다는 이해도 있고[166] 건축군 배치를 통해 북위식의 영향이 확인되므로 6세기 이전

159 손영종,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신서원.

160 閔德植, 1989, 「고국원왕대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시고」, 『용암 차문섭교수 화갑기념 사학논총』, 신서원; 장효정, 200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13.

161 张福有, 2004b, 「高句丽平壤东黄城考」, 『东北史地』 2004-5; 張福有, 2005, 「고구려의 평양, 신성과 황성」, 『고구려 역사문제 연구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162 임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硏究』 137.

163 기경량, 2020, 앞의 글.

164 고구려연구재단,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165 田中俊明, 2005, 앞의 글; 박순발, 2012, 앞의 글; 기경량, 2017a,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건축물로 이해하기도 한다.[167] 이에 대해 건축군 배치가 북위식 동서당제와 차이가 있고, 중국 5대 시기 개봉 황궁의 형태와 유사함을 지적하기도 한다.[168] 한편, 근래에는 평양 천도 직후의 평지성의 존재를 완전하게 부정하기도 한다. 대성산성이 왕성으로 기능하였고, 평지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호동과 임흥동, 안학궁의 서쪽 지역에서 확인된 도시유적을 중심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도시유적이 중심지로 기능하다가 장안성 축조 이후에서야 현재의 평양성이 도성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169]

장안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려 후기 도성인 평양성이다. 산성과 평지성의 이점이 결합된 형태의 장안성과 관련해서는 양원왕 8년 장안성을 축조하고 평원왕 28년 장안성으로 이도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장안성의 축조는 양원대의 정국 전환용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불안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축성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170] 양원왕대의 장안성의 축조와 달리 평원왕대의 천도는 장안성의 초축 시기와 내성 축조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원왕대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축성사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평원왕대의 장안성으로의 이도는 신라의 북상, 돌궐의 위협에 대한 대비, 수와의 대결에 대비 등 대외적인 정세 변화도 지적되었다.[171] 평양성 각자성석을 통해 장안성이 552년부터 593년까지 축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도한 이후에도 축성은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안성 축성 과정에 대해서는 내성과 외

166 임기환, 2021, 「고구려 평양도성 논의에 대한 재검토」, 『高句麗渤海硏究』 70.

167 양정석, 2008, 「高句麗 安鶴宮 中央 建築群에 대한 考察 -前殿 高臺建築 形制의 채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56.

168 기경량, 2023, 「평양 안학궁 유적의 성벽 및 건축군 분석을 통한 축조 시기 검토 -중국 五代 開封 皇宮 및 高麗 王宮과의 비교-」, 『고구려발해연구』 76.

169 기경량, 2017a, 앞의 글; 권순홍, 2019, 앞의 글.

170 김희선, 2008, 「6~8세기 東아시아 都城制와 高句麗 長安城」,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71 임기환, 2007,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 중성과 북성의 축조에 대해서는 선후관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가로구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고, 그 영향관계도 북위 낙양성과 수의 대흥성 등으로 달리 이해하고 있다.[172]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만으로 이도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근 평양 지역의 고지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작업[173]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양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처럼 도성과 관련한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와의 괴리, 아울러 고구려 도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차로 인해 고구려 도성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지점에 있다.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왕릉

고구려 왕릉에 대한 실측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중국 측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결합하여 고구려 왕릉과 제의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논의의 중심은 그동안 문헌사적으로 피장자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 측 기록 등의 문헌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기타 금석문 자료에 보이는 고구려 왕호와 장지를 좀 더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고고학적으로 묘제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맥락과 연결시켜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문제를 재검토해나가는 과정에

172 기경량, 2017a, 앞의 글; 권순홍, 2019, 앞의 글.

173 허의행, 2022, 「평양성의 구조와 내·외부 시설의 고지형적 접근」, 『高句麗渤海研究』 72; 양정석·허의행, 2023, 「고지형 분석 기반 강도 궁궐 배치 구조 시론」, 『한국중세사연구』 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왕릉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왕릉 축조와 관련하여 수릉이나 귀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왕릉 비정도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대체로 수릉이나 귀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근래 많이 나왔다.[174]

환인 지역의 왕릉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왕릉급 무덤도 부재한 상황이고, 특별한 기록이나 지리적 특성이 없어서 왕릉 비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안 지역의 왕릉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은 왕릉 비정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집안 일대 왕릉 비정

구분	연구자	왕릉 비정
마선구626호분	張福有·孫仁杰·遲勇	대무신왕
	임기환, 桃崎祐輔	산상왕
	정호섭	태조왕
	기경량	신대왕
칠성산871호분	張福有·孫仁杰·遲勇	태조왕
	魏存成, 정호섭, 기경량	산상왕
	임기환	신대왕 혹은 고국천왕
임강묘	여호규, 임기환, 魏存成, 이도학, 박진욱, 손수호, 정호섭, 기경량, 강진원	동천왕
	張福有·孫仁杰·遲勇	산상왕
	桃崎祐輔	중천왕

174 이희준, 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한국고고학보』 59;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의 被葬者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43; 공석구, 2008,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조영」, 『高句麗渤海研究』 31; 임기환·아즈마 우시오·모모자키 유스케·강현숙·바이건싱,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산하2110호분	손수호	대무신왕
	張福有·孫仁杰·遲勇	고국천왕
	魏存成, 임기환, 정호섭, 기경량, 강진원	중천왕
	桃崎祐輔	동천왕
칠성산211호분	왕릉보고서, 張福有·孫仁杰·遲勇, 임기환, 桃崎祐輔, 정호섭, 기경량, 강진원	서천왕
	魏存成	서천왕 혹은 미천왕
	손수호	중천왕
서대묘	손수호, 이도학	서천왕
	기타 대부분 연구자	미천왕
우산하992호분	손수호	소수림왕
	이도학, 정호섭	비왕릉
	강진원	미천왕릉
	기경량	미천왕 2차릉
	기타 대부분 연구자	고국원왕
마선구2100호분	왕릉보고서, 魏存成, 桃崎祐輔	소수림왕
	東潮, 정호섭	미천왕(2차왕릉)
	張福有·孫仁杰·遲勇	봉상왕
	기경량, 강진원	고국원왕
	이도학	미천왕
천추묘	浜田耕策	미천왕
	여호규	고국원왕
	왕릉보고서, 東潮, 魏存成, 桃崎祐輔, 손수호, 方起東	고국양왕
	張福有·孫仁杰·遲勇, 임기환, 정호섭, 이도학, 기경량, 강진원	소수림왕
태왕릉	東潮	소수림왕
	이도학	고국원왕
	여호규, 임기환, 정호섭, 기경량, 공석구, 강진원	고국양왕
	기타 대부분 연구자	광개토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군총	손수호	산상왕
	關野貞, 永島暉臣愼, 田村晃一, 이도학, 여호규, 백승옥, 임기환, 정호섭, 기경량, 공석구, 강진원	광개토왕
	초기 대부분 연구자, 중국 연구자, 浜田耕策, 조법종, 東潮, 桃崎祐輔	장수왕
우산하3319호분	李展福	고국원왕
	耿鐵華	소수림왕
	張福有	前燕 王禹 혹은 韓壽
	孫仁杰·遠勇	崔毖
	桃崎祐輔, 정호섭	漢人官僚(中郎)
마선구 2378호묘	張福有·孫仁杰·遲勇, 정호섭	차대왕
	기경량	고국천왕
우산하0540호분	張福有·孫仁杰·遲勇	고국양왕
	정호섭	고국원왕
환인망강루4호묘 우산하 0호분 마선구 노호취 마선구2381호분 산성하전창36호분 호자구 1호묘 산성하전창1호분	張福有·孫仁杰·遲勇	동명성왕 유리명왕 민중왕 모본왕 신대왕 동천왕 중천왕

평양권 고구려 왕릉은 대체로 대형 석실 봉토묘나 벽화묘를 중심으로 하여 왕릉 비정이 이루어졌다. 중국학계는 집안에 있는 대형 벽화묘들을 평양 시기 고구려 왕릉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평양 지역에 위치한 대형 고분들인 전동명왕릉, 경신리 1호분, 토포리대총, 진파리 1호분, 진파리 4호분, 호남리 사신총, 강서대묘 등의 대형 고분들이 왕릉급으로 비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고분에 대한 왕릉 비정도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덤의 위상, 벽화 내용, 장지와 입지, 기와 비교 등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다.[175]

175 정호섭, 2010,「高句麗 壁畵古墳의 銘文과 被葬者에 관한 諸問題」,『고구려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평영 일대 왕릉 비정

구분	연구자	왕릉 비정
전 동명왕릉	東潮, 최택선, 강인구	동명왕
	강현숙	동명왕(허묘)
	永島暉臣慎, 魏存成, 조영현, 정호섭, 趙俊杰, 門田誠一, 강진원	장수왕
	기경량, 주홍규	문자명왕
경신리 1호분	東潮, 강인구, 주홍규, 기경량	장수왕
	趙俊杰, 강진원	문자명왕
진파리 1호분 (동명왕릉 9호)	정호섭	안장왕
	기경량	평원왕
진파리 4호분 (동명왕릉 1호)	永島暉臣慎, 정호섭	문자명왕
	趙俊杰	조다
	기경량	양원왕
진파리 7호분 (동명왕릉 4호)	정호섭, 강진원	조다
토포리 대총	東潮	문자명왕
	趙俊杰, 기경량	안장왕
	강인구	문자명왕 혹은 안장왕
	강진원	안원왕 혹은 양원왕
호남리 사신총	정호섭, 趙俊杰, 기경량	안원왕
	東潮	양원왕
	강인구, 강진원	안원왕 혹은 양원왕
내리 1호분	이도학	영류왕

해연구』 36; 강진원, 2014, 「평양도읍기 고구려 왕릉의 선정과 묘주(墓主) 비정」,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주홍규, 2017, 「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사학보』 68; 기경량, 2017b,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8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서대묘	關野貞, 이병도, 東潮, 정호섭, 강진원	평원왕
	內藤湖男, 최택선, 趙俊杰, 강인구	영양왕
강서중묘	趙俊杰	평원왕
	이병도, 강진원, 기경량	영양왕
	內藤湖南, 東潮	영류왕
	강인구	양원왕 혹은 평원왕
	최택선, 기경량	대양왕
	정호섭	비왕릉
강서소묘	趙俊杰	양원왕
	최택선, 기경량	영류왕
	강진원	대양왕
	東潮	영양왕
	정호섭	비왕릉

Ⅵ. 맺음말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는 동북공정의 영향으로 인해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고구려사 관련 연구자가 늘어났고, 고구려발해학회 등의 전문학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연구프로젝트 확대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2000년 이후 고구려사 박사학위자 등 많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다양한 주제의 저서와 논문, 보고서 등이 다량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중국이나 북한 지역을 직접 조사 혹은 답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한국과 중국 지역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진 측면이 있다. 특히 집안고구려비 등과 같은 새로운 금석문 자료의 출현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논쟁에 관한 부분이 심화된 측면이 있고, 새로운 논쟁거리도 발생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긍정적인 면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소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고구려사의 연구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사나 유사류의 통독 등 보다 폭넓은 사료 읽기를 통한 동아시아 흐름 속에서 고구려사를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서를 탐색하고 사회과학 등의 이론 학습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사료를 이해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통시적 입장을 견지하고, 근대국민국가의 산물인 민족과 국가 위주의 역사인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층 위에서 전개된 역사의 흐름을 포괄하는 역사 인식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고구려사와 관련한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과 인식은 무척 강한 편인데, 조금만 시선을 전환해보면 기존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관점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셋째, 소재주의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고구려사 연구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해당 논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차이에 의미를 두고 신설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고구려사 전개에서 해당 논의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 분명히 자각해야 기존과는 다른 논의를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사 정리 시 보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연구 성과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이나 후에 정리된 논문 하나를 주석에 붙이고 연구사를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고구려사 연구의 맥락 속에서 각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위치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자리매김한 바탕 위에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구려사는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적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동아시아사의 흐름 속에서 비교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의 학자들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열린 역사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고구려사 연구에는 사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고고학이나 미술사에 관심을 가지고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만주나 북한 지역이 고구려의 중심 지역이었던 관계로 고구려사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현장답사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손영종, 1990,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이종욱, 1999, 『한국의 초기국가』, 아르케.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손영종,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신서원.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금경숙, 2004, 『고구려 전기 정치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이종욱, 2004, 『한국사의 1막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이성제,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고구려연구재단,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임기환· 아즈마 우시오·모모자키 유스케·강현숙·바이건싱,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남무희, 2011, 『고구려 승랑 연구』, 서경문화사.

김영하, 2012,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王綿厚, 2003,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04, 『國內城』.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

苗威, 2011, 『高句丽移民研究』, 吉林大学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및 보고서

채희국, 1965,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정찬영, 1966,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王權 및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强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2.

閔德植, 1989, 「고국원왕대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시고」, 『용암 차문섭교수 화갑기념사학논총』, 신서원.

박경철,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한국고대사연구』 14.

권오중,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김영하, 2000, 「한국 고대 국가의 정치 체제 발전론」, 『韓國古代史硏究』 7.

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7.

여호규, 2000a,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_____, 2000b,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한국고대사연구』 17.

이문기, 2000, 「고구려 막리지의 관제적 성격과 기능」, 『백산학보』 55.

장효정, 200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13.

김기흥, 2001,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심광주, 2001,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권정, 2002, 「한중일 비교를 통해 본 고대 수묘인의 성격」, 『일어일문학연구』 42-2.

김미경, 2002,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 24.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

민철희, 2002, 「고구려 양원왕·평원왕대의 정국변화」, 『사학지』 35.

박경철, 2002,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 28.

이도학,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연과 간연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8.

임기환, 2002,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김영심, 2003,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영역」,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김종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 3.

김현숙, 2003,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노중국, 2003, 「삼국의 관등제」,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閔德植, 2003,「高句麗 平壤城의 都市形態와 設計」,『高句麗硏究』15.
박경철, 2003,「고구려 '민족'문제 인식의 현황과 과제」,『한국고대사연구』31.
서영대, 2003,「高句麗의 國家祭禮-東盟을 중심으로」,『韓國史硏究』120.
서영일, 2003,「한성 백제의 남한강수로 개척과 경영」,『문화사학』20.
이문기, 2003,「고구려 중리제의 구조와 그 변화」,『대구사학』71.
임기환, 2003a,「고구려 도성제의 변천」,『한국의 도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_____, 2003b,「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한국고대사연구』1.
김창석, 2004,「고구려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新羅文化』24.
김현숙, 2004,「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한국고대사연구』33.
박윤선, 2004,「고구려의 불교 수용」,『한국고대사연구』35.
박진숙, 2004,「장수왕대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백제」,『한국고대사연구』36.
김기흥, 2005,「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왕계」,『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김상현, 2005,「중국문헌소재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노태돈, 2005,「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양태」,『향토서울』66.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5,「고구려적 국제질서인식의 성립과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광주, 2005,「고구려 國家形成期의 城郭 硏究」,『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여호규, 2005a,「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한국고대사연구』38.
_____, 2005b,「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軍史』54.
김락기, 2006,「고구려 수묘인의 구분과 입역방식」,『한국고대사연구』41.
김수태, 2006,「백제 성왕대의 변경-한강유역을 중심으로-」,『백제연구』44.
윤용구, 2006,「高句麗의 흥기와 幘溝漊」,『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이희준, 2006,「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한국고고학보』59.
정동준, 2006,「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역사와 현실』61.
공석구, 2007a,「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동북아역사논총』15.
_____, 2007b,「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白山學報』78.
김미경, 2007,「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현, 2007,「고구려의 불교와 문화」,『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김진한, 2007, 「6世紀 前半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군사』 64.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大丘史學』 89.
박윤선, 2007,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송호정, 2007, 「고구려의 기원과 예맥」, 『고구려연구』 27.
임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硏究』 137.
조법종, 2007, 「고구려 초기도읍과 비류국성 연구」, 『白山學報』 77.
최광식, 2007a,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 『중앙아시아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07b, 「고구려의 신화와 국가제사」,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07c, 「토착신앙과 불교의 관계」,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공석구, 2008,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조영」, 『高句麗渤海硏究』 31.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숙, 2008, 「고구려의 한강 유역 영유와 지배」, 『百濟硏究』 50.
김희선, 2008, 「6~8세기 東아시아 都城制와 高句麗 長安城」,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양기석, 2008,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양정석, 2008, 「高句麗 安鶴宮 中央 建築群에 대한 考察 -前殿 高臺建築 形制의 채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56.
이성시, 2008, 「광개토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이종욱, 2008,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 -고구려의 국가 형성과 성장에 대한 〈모델3〉』, 서강대학교출판부.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의 被葬者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43.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 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硏究』 47.
표영관, 2008, 「고구려 불교전래 재고」, 『고구려발해연구』 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진한, 2009, 「嬰陽王代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隋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3.
김현숙, 2009, 「475년~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鄕土서울』 73.
백종오, 2009, 「남한내 고구려고분 검토」, 『高句麗渤海硏究』 35.
여호규,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硏究』 53.
홍승우, 2009, 「백제 율령 반포 시기와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기경량, 2010,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한국사론』 56.
김희선, 2010, 「高句麗 國內城 硏究」, 『白山學報』 87.
문안식,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서울지역의 동향」, 『서울학연구』 39.
박현숙, 2010,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韓國古代史硏究』 58.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高句麗渤海硏究』 36.
양시은,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여호규, 2010,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原理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정호섭, 2010, 「高句麗 壁畵古墳의 銘文과 被葬者에 관한 諸問題」, 『고구려발해연구』 36.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조우연, 2010, 「4~5세기 고구려 국가제사와 불교신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고구려발해연구』 39.
김두진, 2011, 「고구려 초전불교의 공인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36.
김복순, 2011, 「4~5세기 삼국사기의 승려 및 사찰」, 『신라문화』 38.
여호규, 2011, 「고구려의 종족기원에 대한 일고찰」, 『사림』 38.
윤성환, 2011,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단계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79.
이성제, 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 -'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4.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30.
조영광, 2011, 「고구려초기의 국가 형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우연, 2011, 「4~5세기 고구려의 불교 수용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탐구』 7.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고구려 사신의 康國 방문 이유-」, 『백산학보』 8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석구, 2012,「廣開土王의 요서지방 진출에 대한 고찰」,『한국고대사연구』67.
노태돈, 2012a,「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한국고대사연구』67.
노태돈, 2012b,「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한국고대사연구』68.
박순발, 2012,「高句麗의 都城과 墓域」,『韓國古代史探究』12.
여호규, 2012a,「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역사와 현실』84.
여호규, 2012b,「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韓國古代史研究』67.
여호규, 2012c,「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韓國古代史研究』66.
이성제, 2012,「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한국고대사연구』68.
전호태, 2012,「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한국고대사연구』68.
정호섭, 2012,「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 改編」,『先史와 古代』37.
조영광, 2012,「高句麗 初期의 國家 形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호원, 2012,「高句麗 嬰陽王代의 新羅攻擊과 國內政治」,『한국사연구』157.
최희수, 2012,「5~6세기 高句麗 地方統治의 운영」,『韓國古代史探究』10.
공석구, 2013,「집안 고구려비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고찰」,『고구려발해연구』45.
김수태, 2013,「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韓國古代史研究』72.
김현숙, 2013,「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韓國古代史研究』72.
안정준, 2013,「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韓國古代史研究』69.
양시은, 2013,「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嶺南學』24.
여호규, 2013a,「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백제문화』48.
_____, 2013b,「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韓國古代史研究』70.
李成制, 2013,「集安高句麗碑로 본 守墓制」,『韓國古代史研究』70.
이재성, 2013,「아프라시압 宮殿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한 고찰 - 高句麗에서 사마르칸드(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중앙아시아연구』18-2.
임기환, 2013,「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45.
정원주, 2013,「高句麗 滅亡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정호섭, 2013a,「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韓國古代史研究』7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3b,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 -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남학』 24.
최호원, 2013, 「연개소문의 정변과 高句麗·新羅 關係」, 『사총』 80.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史硏究』 72.
강진원, 2014, 「평양도읍기 고구려 왕릉의 선정과 묘주(墓主) 비정」,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양시은, 2014,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우석훈, 2014, 「요하 유역의 고구려 천리장성」, 『군사』 92.
李成制, 2014a,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硏究』 75.
_____, 2014b,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嶺南學』 25.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수묘제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김영관, 2015,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 『백제문화』 52.
박노석, 2015, 「고구려의 발전과 현도군 책구루의 변화」, 『전북사학』 46.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윤성환, 2015,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大對盧」, 『군사』 95.
이도학, 2015, 「『三國史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 『韓國古代史硏究』 79.
이성제,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分析」, 『中國古中世史硏究』 38.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硏究』 51.
임기환, 2015,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구성-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9.
장병진, 2015,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 『한국고대사연구』 77.
전덕재, 2015, 「373년 고구려 율령의 반포 배경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80.
정호섭, 2015,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한국사학보』 56.
최일례, 2015, 「평원왕대 정국 운영의 특징과 그 함의」, 『고구려발해연구』 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경량, 2016, 「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한국문화』 73.
김강훈, 2016,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軍史』 99.
金德原, 2016,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김지영, 2016,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2.
김철민, 2016, 「고구려 장수왕대의 대송외교와 그 배경」, 『한국사학보』3.
방용철, 2016,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백다해, 2016, 「5세기 국제정세와 장수왕대 대송관계의 성격」, 『역사와 현실』 102.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이재성, 2016,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임기환, 2016, 「고구려 왕계의 성립과정과 시기」, 『한국고대사연구』 83.
장병진, 2016, 「당의 고구려 고지(故地) 지배 방식과 유민(遺民)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1.
조영광, 2016,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81.
최일례, 2016,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한국고대사연구』 82.
홍승우, 2016, 「고구려 율령의 형식과 제정방식-「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사례 분석」, 『木簡과 文字』 16.
기경량, 2017a,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7b,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88.
김수진, 2017, 「唐京 高句麗 遺民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숙, 2017, 「고구려 초기 王城의 위치와 國內 遷都」, 『先史와 古代』 54.
여호규·拜根興, 2017,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이규호, 2017, 「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 127.
장병진, 2017, 「고구려 정치사 서술에 쓰이는 개념과 용어들」, 『學林』 40.
정동준, 2017,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소 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韓國史硏究』 178.
정호섭, 2017,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선사와 고대』 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홍규, 2017, 「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사학보』 68.
강진원, 2018, 「고구려 국내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집권력 강화」, 『한국문화』 82.
기경량, 2018,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사학연구』 129.
김강훈, 2018,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배 시도와 유민의 동향」, 『대구사학』 133.
방용철, 2018, 「고구려 부흥전쟁의 발발과 그 성격」, 『대구사학』 133.
이종록, 2018, 「高句麗와 玄菟郡의 관계와 幘溝漊 설치 배경 검토」, 『先史와 古代』 55.
임기환, 2018, 「고구려 國內 遷都 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
정호섭, 2018,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사학연구』 130.
권순홍, 2019,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2019,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高句麗渤海研究』 64.
이성제, 2019,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라시압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호섭, 2019, 「고구려의 州·郡·縣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33.
강진원, 2020, 「고구려 졸본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전승의 정비」, 『사림』 73.
기경량, 2020, 「고국원왕대 평양동황성의 위치와 이거 기록의 성격」, 『한국학연구』 57.
서길수, 2020a, 「아프라시압 高句麗 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 - 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Ⅰ)」, 『고구려발해연구』 66.
_____, 2020b, 「아프라시압 고구리[高句麗]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 - 고구리[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Ⅱ)」, 『동북아역사논총』 68.
이준성, 2020, 「濊君 南閭의 동향과 滄海郡·玄菟郡 설치」, 『白山學報』 116.
최호원, 2020, 「고구려 후기 국내정세와 신라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강훈, 2021,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역사학보』 249.
김성현, 2021, 「高句麗 初期 支配勢力의 再編과 政治體制의 變動」, 서울대학교 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오진석, 2021,「연남생 투항 이후 고구려 서북부 성곽방어체계의 붕괴과정과 그 영향」,『역사와 현실』122.
이규호, 2021,「高句麗 官制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기환, 2021,「고구려 평양도성 논의에 대한 재검토」,『高句麗渤海硏究』70.
정호섭, 2021,「唐의 喪葬令을 통해 본 고구려·백제 遺民의 喪葬禮」,『한국고대사연구』104.
신광철, 2022,「관방체계를 통해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호규, 2022,「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역사와 현실』124.
임기환, 2022a,「고구려 태조대왕과 신대왕 王系에 대한 재검토」,『역사문화연구』81.
_____, 2022b,「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한국사학보』86.
허의행, 2022,「평양성의 구조와 내 · 외부 시설의 고지형적 접근」,『高句麗渤海硏究』72.
정호섭, 2023,「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과 고구려의 대응」,『선사와 고대』72.
양정석·허의행, 2023,「고지형 분석 기반 강도 궁궐 배치 구조 시론」,『한국중세사연구』72.
김효진, 2024,「2세기 고구려의 對後漢 관계와 국제정세」,『한국고대사연구』113.

井上直樹, 2000,「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政勢」,『朝鮮史硏究會論文集』38.
_____, 2002,「高句麗と五世紀の東アジア」,『東アジアの古代文化』10.
田中俊明, 2005,「高句麗 長安城의 規模와 特徵 -條坊制를 中心으로-」,『白山學報』72.

李殿福, 1981,「高句麗的丸都城」,『文物』1981-6.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文物』1984-1.
魏存成, 1985,「高句麗初中期的都城」,『北方文物』, 1985-2.
李殿福·孫玉良, 1990,「高句麗的都城」,『博物館硏究』1990-1.
张福有, 2004a,「高句丽第一个平壤城在集安良民即国之东北大镇-新城」,『东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史地』 2004-4.
_____, 2004b, 「高句丽平壤东黄城考」, 『东北史地』 2004-5.
_____, 2005, 「고구려의 평양, 신성과 황성」, 『고구려 역사문제 연구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李殿福, 2006, 「國內城始建于戰國晚期燕國遼東郡塞外上的一個據点之上」, 『東北史地』 2006-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局, 2009, 「2008年集安市國內城社區辦公樓地 點高句麗居住址的發掘」, 『北方文物』 2009-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9, 「集安市實驗小學校發掘地點考古發掘簡報」, 『北方文物』 2009-4.
拜根兴, 2012, 『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 以西安洛阳出土墓志为中心』, 中国社会科学出版社.
範恩實, 2013, 「高句麗祖先記憶解析」, 『東北史地』 2013-5.
_____, 2018, 「2010년 이래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성과 정리」, 『고구려발해연구』 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21세기 고구려사 연구의 도약과 쟁점의 심화

정호섭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연구자의 수도 늘었고, 간행된 관련 자료도 증가했으며, 발굴 성과도 다수 제시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려사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진전과 도약이 있었고,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가 세분화되면서 쟁점 역시 심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기존자료의 재검토와 신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연구의 심화와 다각화가 나타났다. 특히 문헌과 금석문, 고고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구주제별로는 비문, 묘지명, 묵서명, 기타 명문자료 등 고구려 금석문과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도성을 비롯한 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대외관계사 연구와 함께 이와 연관되는 전쟁과 영역 연구가 두드러졌다. 고구려사 관련 연구자가 늘어났고, 고구려발해학회 등의 전문학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연구프로젝트 확대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2000년 이후 고구려사 박사학위자 등 많은 연구자가 새롭게 등장했고, 다양한 주제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저서와 논문, 보고서 등이 다량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중국이나 북한 지역을 직접 조사 혹은 답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한국과 중국 지역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진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고구려, 고구려사, 쟁점, 연구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Leap in Goguryeo Studies and the Deepening of Issues in the 21st Century

Jung Hosub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on the history of Goguryeo has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While the influence of China's Northeast Project cannot be overlooked, this reflects the growing interest in Goguryeo history. The number of researchers has increased, more related publications have been issued, and numerous excavation results have been presented. Overall, studies on Goguryeo history have advanced and leapt forwar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ith research topics becoming more diverse and specialized, and controversies becoming more profound.

In particular, existing materials have been reexamined, and newly discovered materials have been studied, leading to deeper and more diversified research. The proportion of studies utilizing literature, epigraphic records, and archaeological data has also relatively increased. By research topic, studies on Gogurye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scriptions—such as epitaphs, handwritten records, and other inscriptions—have become more active, while interest in spatial studies, including cities and fortresses, has grown. Additionally, research on external relations, wars, and territorial boundaries has become prominent.

The number of researchers specializing in Goguryeo history has increased, with systematic academic societies such as the Goguryeo-Balhae Research Society and expanded research projects by organizations lik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coming notable phenomena. In the 21st century, many new researchers, including PhD graduates in Goguryeo studies, have emerged, and numerous books, articles, and reports on a variety of topics have been pub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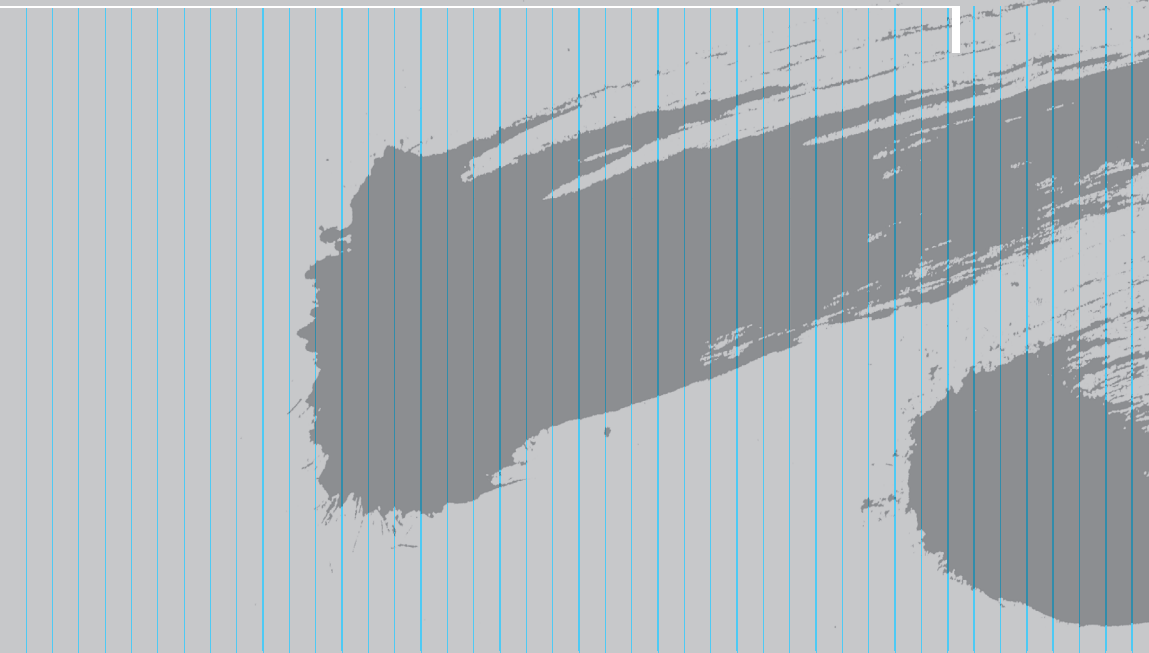
Although limited, it has become possible to directly survey or explore regions in China and North Korea. New materials discovered in Korea and China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vibrancy of research. The diverse issues surrounding Goguryeo history clearly demonstrat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research in this field.

Keywords: Goguryeo, Goguryeo History, Issues, Research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7

중세 한일관계와 '경계인'론

–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씨의 연구에 관한 한 고찰 –

송종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석사

I. 머리말
II. 무라이 쇼스케 씨의 연구 궤적 및 '경계인'론
III. '경계인'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
IV. 맺음말에 대신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1980년대 이래 일본의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를 이끌어온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씨는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자"[1]라 평가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본 내 그의 위상에 관해서는 우선, 그의 대외관계사·지역사 연구 성과들이 일본 중세정치사 연구 본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을 넘어서, 한국, 중국, 그리고 서양 연구자들[2]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가 '경계인'론을 통해 제시한 중세 동아시아 세계관 때문일 것이다.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에 의하면, 국가 간 경계는 근세 이전까지 선(線)이 아닌 '경계공간'이라는 면(面)의 형태로 존재했다. 그 '경계공간'에 사는 '경계인'들은 국가 간을 연결하는 무역, 외교, 해적 등 활동을 영위했다고 한다. 또 이들 '경계인'들은 국가·민족을 초월한 집단이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세력은 '국가'와 상극·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무라이 씨는 이러한 '경계인' 집단의 대표적인 예로서 14~16세기 동아시아에서 활동한 '왜구'를 들고 있다.

그의 연구는, 중세 동아시아 세계에 국가·민족을 초월한 집단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세 수백 년의 역사를 일관되게 조망한다는

---

* 투고: 2025년 1월 11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하고 한일관계사학회와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가 2024년 10월 12일 공동개최한 학술대회 "한일 역사인식의 상호 간극과 해법 모색을 위한 歷史像의 재검토"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中村 翼, 2022, 「書評 村井章介著『古琉球 海洋アジアの輝ける王国』」, 『洛北史学』 24, 82쪽.

2 예컨대, Peter D. Shapinsky, 2014, *Lords of the Sea: Pirates, Violence, and Commerce in Late Medieval Japa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p. 187~188 등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연구자·지식인들은 '경계인'론의 여러 논지 중 '경계인'으로서의 왜인이 국가를 초월한 존재로서 활동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은 중세 동아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왜구의 출신에 대한 쟁점이 뒷전으로 밀리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은 한국·중국 연구자들이 근대 이후 형성된 '국가'·'민족' 이데올로기 편견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한국·중국 연구자들은 일본 연구자들이 과거 왜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의심해왔다.

무라이 씨는 '국가·민족을 초월한 경계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익을 우선하는 사고에서 탈피한 연구'[3]를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오히려 한·중·일 각국 연구자들 상호 간에 국가·민족적 간극이 더욱 커져감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각국 연구자들이 모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아시아 관계사·지역사 연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 연구자들 상호 간 공감대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기초는, 무라이 씨가 제시한 '경계인'론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가 어떤 문제의식과 배경 아래, 어떤 입론 과정을 거쳐 '경계인'론이라는 담론 체계를 제시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색을 통해 무라이 씨가 이룬 성과에서의 명암이 명확히 파악된다면, 향후 중세 한일관계사의 실제 모습을 해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무라이 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일본 연구자들의 비평이 다수 있었다. 주로 ① 무라이 씨가 발간한 연구서들에 대한 서평[4] 및 ② 각

3 村井章介, 2014a,「戦後歴史学私記」,『中世史研究の旅路-戦後歴史学と私-』, 校倉書房, 24쪽(初出: 2011,『歴史評論』729) 참조.

4 山室恭子, 1989,「書評 村井章介著『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史学雑誌』98(8), 1408~1416쪽; 古谷暢子, 1989,「書評: 村井章介著『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歴史評論』472, 90~93쪽; 関 周一, 1990,「書評 村井章介『アジ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자의 저술 속에서 연구사 조망 맥락에서 이루어진 평가[5]의 형식이었다. 이 연구들은 무라이 씨 연구가 갖는 연구사적 배경 및 가치를 설명하는 한편, 그 안에 내포된 여러 측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무라이 씨의 해당 연구서 또는 연구자 자신의 관심 분야에 한정된 평가였으므로, 그의 연구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또한 일본 학계에서의 연구 맥락에서 이루어진 비평이라는 점에서, 외국 학계에서의 시각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

한편, 일본 측 선행연구에 비해서 그 연구 건수는 적지만, 한국 연구자들로부터는 ① 전근대 한일관계사의 연구사 맥락에서 무라이 씨의 견해를 비평하는 접근법과 ② 그의 개별 학설에 집중하여 그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지적하는 접근법에서의 연구들이 보인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김보한 씨(2009·2014), 이수열 씨(2019) 등의 연구가 있었다.[6] 이들은 일본 연구

のなかの中世日本』」, 『歴史学研究』 603, 35~41쪽; 六反田 豊, 1994, 「書評 村井章介 著『中世倭人伝』」, 『年報朝鮮学』 4, 85~92쪽; 田中健夫, 1994, 「書評 村井章介『中世倭人伝』」, 『歴史学研究』 657, 37~39쪽; 黒嶋 敏, 2014, 「書評 村井章介 著『日本中世境界史論』」, 『史学雑誌』 123(10), 1846~1854쪽; 中島 楽章, 2014, 「書評と紹介 村井章介 著『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 『日本歴史』 798, 97~99쪽; 中村 翼, 2016, 「書評 村井章介著『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 『日本史研究』 647, 86~93쪽; 中村 翼, 2022, 앞의 글, 82~88쪽. 또한 한국 연구자의 서평으로서는 李領, 1997, 「書評 村井章介 著『中世倭人傳』」, 『日本歷史硏究』 6, 155~159쪽; 홍성화, 2013, 「바다와 은(銀)을 통해서 본 근세 동아시아의 역사: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세계사 속의 전국일본(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코기토』 7, 641~653쪽 등이 있었다.

5 関 周一, 1994, 「中世「対外関係史」研究の動向と課題」, 『史境』 28, 52~60쪽; 関 周一, 2002, 「序論」,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4~12쪽; 橋本 雄, 2003, 「中世日本対外関係史の論点-王権論·冊封体制論·地域論を見直す-」, 『歴史評論』 642, 16~23쪽; 須田牧子, 2011, 「序章: 中世対外関係史論の現在と本書の課題」,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6~11쪽; 関 周一, 2024, 「序章」, 『中世の海域交流と倭寇』, 吉川弘文館, 2~7쪽 등.

6 김보한, 2009,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東北亞歷史論叢』 26, 55~57쪽; 김보한, 2014, 「일본 중세사의 '해양인식', 어떻게 볼 것인가」, 『日本歷史硏究』 40, 113~116쪽; 이수열, 2019, 「왜구론의 행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의 평가에서는 볼 수 없던, 무라이 씨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개괄적인 수준의 평가에 머문 점은 아쉽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무라이 씨의 '왜구=경계인'설 및 '왜구=비영주(非領主)·주민(住民)'설에 관해서 각기 비평한 이영 씨(2019)의 연구 두 편이 있었다.[7] 그 이전까지 한국·일본에서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분석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지만, 개별 주제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는 장점과 더불어 아쉬움도 있었다. 필자(2016·2017)도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 입론 구조 및 '왜구=경계인'설에 대한 비평 논문 두 편[8]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경계인'론에 관한 무라이 씨의 저서 두 편, 즉 『일본중세경계사론(日本中世境界史論)』(2013) 및 『경계사의 구상(境界史の構想)』(2014)이 발간된 직후, 그 주요 논지를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위 논문 두 편 역시 무라이 씨의 연구 성과 전반을 조망하지 않았고, 특정 저서 논지 일부분에서의 내적 정합성 측면에 집중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연구의 지향점, 그리고 한국·일본의 선행연구에서의 한계점들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우선 제Ⅱ장에서 무라이 씨의 그간 연구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 성과 및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그의 '경계인'론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131~131쪽.

7 이영, 2019a,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境界人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倭寇とはだれか」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58, 281~304쪽; 이영, 2019b,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왜구=비영주(非領主)·주민(住民)〉설에 관한 한 고찰」, 『歷史敎育論集』 72, 255~290쪽.

8 宋鍾昊, 2016,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境界人論' 및 그 倭寇 연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6, 345~373쪽; 宋鍾昊, 2017,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왜구=경계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歷史敎育論集』 63, 155~1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무라이 쇼스케 씨의 연구 궤적 및 '경계인'론

1. 1988년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의 성과

일본의 대외연구사 연구에서는 일찍이 1945년 이전까지,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만주 지역 통치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일본 연구자의 왕성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9]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상당 기간 방향성을 찾지 못하며 침체기를 겪는다. 이 시기 중세 대외관계사 연구는 일본 사학계 안에서도 "중세사 전체로부터 고립"[10]된 것, 즉 일본중세사 본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변 영역으로 치부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부터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씨 등을 중심으로, 정치사 중심의 일국사(一國史)에서 민중 중심의 지역사로 그 시선을 전환한 사회사 연구의 조류가 형성된다. 또 1980년대 초 츠카모토 마나부(塚本 学) 씨,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씨 등에 의하여, 동아시아 3국 간에 놓인 '바다'·'해역'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이 학계의 주목을 받는다.[11] 이러한 새로운 지향점들은,

---

9 이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田中健夫, 2003, 「中世対外関係史研究の動向」, 『対外関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90쪽(初出: 1963, 『史学雑誌』 72(3)); 楠木 武, 2000, 「中世日韓関係史の研究をめぐって」, 歴史教育研究会 編, 『日本と韓国の歴史教科書を読む視点: 先史時代から現代までの日韓関係史』, 梨の木舎, 111쪽; 윤성익, 2008, 「戦前·戦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韓日關係史研究』 31, 201~240쪽; 김보한, 2009, 앞의 글, 35~50쪽; 須田牧子, 2011, 앞의 책, 4쪽; 尹誠翊, 2015, 「帝國 日本의 植民지배와 역사서술 속에서의 倭寇」, 『동국사학』 59, 397~453쪽; 이수열, 2022, 「'바다의 역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론: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5, 106쪽 등 참조.

10 島田次郎, 1960, 「新刊紹介 田中健夫 著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歴史評論』 115, 93쪽; 田中健夫, 2003, 앞의 글, 90쪽; 村井章介, 2014a, 앞의 책, 18쪽 등 참조.

11 塚本 学, 1980, 「日本史は特異なのか-全体会の斉藤報告に関連して」, 『歴史学研究月報』 248, 2~3쪽; 田中健夫, 2012, 『倭寇-海の歴史-』, 講談社, 5쪽(初出: 1982, 教育社); 田中健夫, 1994, 앞의 글, 38쪽 등 참조. 이 시기 '바다' 중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라이 쇼스케 씨의 광범위한 인문학적 식견 및 그가 스스로 "사료주의"[12]라 부르는 그 특유의 '통합적 사료 해석(史料操作)'[13] 방식과 결합하여, '경계인'론이라는 큰 담론을 낳았다.

무라이 씨가 1988년에 출간한 그의 최초 연구서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은 그의 초기 연구논문 15편을 모은 논문집이다. 이 연구서에서 그는, 당시 일본에서의 정설적 견해들을 극복하면서, ① 규슈 정서부(九州征西府) 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이 명에 칭신·입공(稱臣入貢)했던 사실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당시 불리해진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14] ② 14세기 말 무로마치 막부가 '명과의 국교 수립, 규슈 남조 토벌, 왜구 금압'을 동일한 하나의 과제로 보고 추진했다는 점,[15] ③ 1370년대 이후 왜구 활동 절정기의 주된 배경은, 『고려사』에 기재된 항왜 등경광(藤經光) 토벌

'지역사' 중심 연구 경향에 관해서는, 関 周一, 1994, 앞의 글, 50~52쪽; 関 周一, 2002, 앞의 책, 7~9쪽; 나카다 미노루(中田 稔), 2010,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11~212쪽; 関 周一, 2013, 「中世「東アジア」研究の動向」, 『歴史学研究』 906, 26~27쪽; 村井章介, 2014a, 앞의 책, 18~20쪽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이수열 씨는 이 시기 일본에서의 '바다의 역사' 제안은 원래 왜구 연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다(이수열, 2022, 앞의 글, 104쪽 참조).

12 村井章介, 2014a, 앞의 책, 17쪽.

13 「史料操作」이란 일본 역사학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여러 개의 사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순 없이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료를 해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秋山哲雄·田中大喜·野口華世 編, 2021, 「「歴史学」を学ぶということ」, 『日本中世史入門-論文を書こう』, 勉誠出版, 7~8쪽(初出 2014)]. 즉, '사료 개찬(改竄)'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사료 분석 방식이다. 다만 우리말에서는 위 용어가 '조작(造作)'과 발음이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잠정적으로 '통합적 사료 해석'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기로 한다.

14 村井章介, 1988, 「征西府権力の性格」,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282~289쪽 참조.

15 村井章介, 1988, 「日明交渉史の序幕-幕府最初の遣使にいたるまで-」, 위의 책, 267~26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패 사건이 아니라,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의 규슈 정서부 침공 이래 격화된 규슈 남북조 동란이었다는 점[16] 등의 견해를 새롭게 제시했다. 이러한 무라이 씨의 새 견해들은 모두 현재 일본 및 한국의 다수 연구자가 공감하고 있다.

그가 최초로 제시한 위 견해들은 중세 한일관계사 연구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었다. 예컨대, 이영 씨(2010)는 위 ②의 무로마치 막부의 방침과 관련하여, 막부가 이를 규슈 현지에서 실행하기 위해 파견한 사람이 이마가와 료슌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17] 또 필자(2023)도 위 두 연구자의 연구를 기반으로, 1369년(공민왕18) 이래 30년간 이어진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의 배경을 이마가와 료슌의 위 역할에서 찾은 바 있다.[18]

위와 같이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에 게재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은, 무라이 씨의 구체적이고 미시적(微視的, micro)인 주제 선정과 그의 치밀한 사료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해명된

16 村井章介, 1988, 「倭寇と朝鮮」, 위의 책, 320~321쪽(初出: 滕維藻ほか編, 1986, 『東アジア世界史探究』, 汲古書院)(손승철·김강일 역, 2008, 『동아시아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124쪽) 참조.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48쪽; 羅鍾宇, 1994, 「홍건적과 왜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0)』, 405쪽; 金普漢,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少貳冬資의 피살과 관련해서-」, 『日本歷史研究』 13, 64쪽; 송종호, 2023a,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67~69쪽 등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무라이 씨는 1997년부터 위 견해를 철회하고, 다시 등경광 사건을 부각시키는 예전 일본 다수설 측 서술로 돌아갔다[村井章介, 2013b, 「倭寇の多民族性をめぐって」, 『日本中世境界史論』, 岩波書店, 156~157쪽(初出: 大隅和雄·村井章介 編, 1997,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国際関係』, 山川出版社) 등 참조].

17 이영, 2010,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韓日關係史研究』 36, 199~201쪽(재게재: 2015, 『황국사관과 고려말 왜구』, 에피스테메) 등 참조.

18 송종호, 2023b, 「고려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2, 74~9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용이 일본 중세정치사 연구 본류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무라이 씨는 그 이전까지 '고립'되어 있던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계에 새로운 활기 및 방향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1993년 『중세왜인전』 이래 '경계인'론의 성과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의 기초는 1988년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에 게재된 논문 「중세 일본 열도의 지역 공간과 국가(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国家)」(초출 1985)에 제시되었던 '동심원'론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중세 국가 일본의 고전적 형태에 관하여 당시 교토(京都) 등 서일본 사람들은 교토·가마쿠라(鎌倉) 두 곳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바깥으로 '중심 → 주연(周縁) → 경계(境界) → 이역(異域)' 등이 동심원 구조로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3세기 무렵 '환중국해 지역'과 '환일본해 지역'[19]이 형성되었고 이 두 '지역'이 '국가' 일본의 동심원 구조와 충돌하였으며, 이러한 '지역'과 '국가'는 14세기 이래 서로 상극(相克)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20] 이러한 그의 '동심원'론이 '경계인'론 이론 구축에 크게 작용했다.

또 무라이 씨는 1988년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에 게재된 「왜구와 조선(倭冦と朝鮮)」(초출 1986) 뒷부분에, 새로이 「보론4: 고려·조선인 "왜구"(補論4: 高麗·朝鮮人の"倭冦")」 논의를 추가했다.[21] 여기에서 그는 (아래 요약된) '경계인'론에서의 핵심 주장들을 간략하지만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언급했다. 이렇듯 '경계인'론의 대략적인 골격은 이미 1988년 그의 저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

19 물론 '일본해'는 '동해'로 불러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무라이 씨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옮겨 쓰기로 한다.

20 村井章介, 1988, 「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国家」, 앞의 책, 108~142쪽(初出: 1985, 『思想』 732).

21 村井章介, 1988, 「高麗·朝鮮人の"倭冦"」, 위의 책, 328~334쪽(손승철·김강일 역, 2008, 앞의 책, 131~13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의 전체 윤곽 및 청사진은, 1993년 개설서 『중세왜인전(中世倭人伝)』을 통해 정식으로 제시된다. 이 책은 비록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설서 형태였지만, 그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 풍부한 사료 제시, 유려한 문장 등으로 현재까지도 그의 저서 중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 그 이후로 그는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했는데, '경계인'론 연구 성과가 가장 정제된 형태로 정리된 최근 저서가 바로 2013년 연구서 『일본중세경계사론』 및 2014년 개설서 『경계사의 구상』이다.

1993년 『중세왜인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된 그의 '경계인'론의 대표적 논지들은 위에 제시한 2013·2014년 저서들에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세의 경계는 선(線)이 아니라 면적을 갖는 공간 형태였다. 거기에 생성된 '경계공간' 내지 '지역'은 국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계인'들의 생활과 생산의 터전이었다.

② '왜'와 '왜인'은 각기 '경계공간', '경계인'으로서, 현대의 일본·일본인과는 다른 개념이었다. '왜복'과 '왜어'는 단순히 일본 복장, 일본어가 아니라, 환중국해 해역 경계인들 공통의 것을 의미했다.

③ '왜구'는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집단이다. 따라서 조선인, 일본인 등 그 출신을 따지는 것은 의미 없다.

④ '지역'과 국가는 서로 상극의 관계로 대치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경계인'인 왜구였다.

'경계인'론의 위 대표적 논지들은 현재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정설로 굳어져 있다. 오늘날 일본의 많은 연구자는 관심 분야를 막론하고, '경계인'론에서의 위 논지들을 인용하고 있다.[22] 이 점에서도 무라이 씨가 오늘날 "일본 역사학

22 예컨대, 関 周一, 2011, 「アジアから見た日本の境界」, 竹田和夫 編, 『古代·中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를 대표하는 학자"로까지 불리고 있는 점을 이해할 만하다.

3. '경계인'론과 지역사 연구의 현재 상황

무라이 씨는 1975년 이래로 수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해왔다. 1988년부터는 저서 및 편저서도 다수 발간해왔다.[23] 그중 그의 단독 저서만 열거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보듯이, 그의 단독 저서만 20권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의 남다른 학문적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대외관계사, 즉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지역사'는 초창기부터 그의 주된 연구 주제였다. 일중(日中) 관계에 못지않게, 한일 관계도 그가 큰 관심을 쏟은 주제였다. 중세 한일 관계에 관한 그의 초기 연구 성과는 1988년 연구서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 및 1993년 개설서 『중세왜인전』에 수록되어 있다. 그 이후 1999년 개설서 『중세 일본의 안과 밖』과 2006년 개설서 『경계에 걸쳐선 사람들』을 거쳐, 2013년 연구서 『일본중세경

の境界意識と文化交流』, 勉誠出版, 115, 122쪽; 橋本 雄, 2014, 「東アジア世界の変動と日本」, 大津 透ほか 編, 『岩波講座 日本歴史8·中世3』, 岩波書店, 43쪽; 森平雅彦, 2017, 「高麗後期」, 李成市·宮嶋博史·糟谷憲一 編, 『朝鮮史1』, 山川出版社, 274쪽; 六反田 豊, 2017, 「朝鮮初期」, 李成市·宮嶋博史·糟谷憲一 編, 『朝鮮史 1』, 山川出版社, 335~336쪽; 山内 譲, 2018, 『海賊の日本史』, 講談社, 93~94쪽; 中村 翼, 2019, 「東アジア海域世界の境界人と政治権力-一四世紀の分水嶺を考える-」, 『日本史研究』 679, 34~65쪽; 黒嶋 敏, 2020, 「ナワバリに生きる海人」, 秋道智彌·角南篤 編, 『海はだれのものか (海とヒトの関係学3)』, 西日本出版社, 84~95쪽; 荒木和憲, 2021a, 「中世の「日本」はどんなカタチをしていたのか?: 境界の「曖昧さ」」, 『REKIHAKU』 2, 40, 43쪽; 荒木和憲, 2021b, 「東アジア交流の玄関口としての境界領域」, 秋山哲雄·田中大喜·野口華世 編, 앞의 책, 490~491쪽; 関 周一, 2024, 「東シナ海と倭寇」, 앞의 책, 63~65쪽 등 참조.

23 이 제3절에서 무라이 쇼스케 씨의 연구 저술에 관한 목록 및 정보에 관해서는, ① researchmap マイポータル(https://researchmap.jp/read0118349) (1975~2017년 정보) 및 ② 일본 국회 도서관 검색 홈페이지(https://ndlsearch.ndl.go.jp/) (2018~2024년 정보)를 참고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무라이 쇼스케 씨의 저서 일람

연도	제목	유형	연구분야
1988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	연구서	대외관계사
1993	『중세왜인전』	개설서(문고)	대외관계사
1995	『동아시아 가도[往還]: 한시와 외교』	연구서	대외관계사
1997	『바다에서 본 전국(戰國) 시대 일본: 열도사에서 세계사로』 (2012년 증보판 발행)	개설서(문고)	대외관계사
1997	『국경을 넘어서: 동아시아 해역 세계의 중세』	연구서	대외관계사
1999	『중세 일본의 안과 밖』(2013년 증보판 발행)	개설서(문고)	대외관계사
2001	『호조 도키무네(北条時宗)와 몽골 침입: 시대·세계·개인을 읽는다』	개설서	일본중세사/ 대외관계사
2003	『일본의 중세 10: 분열하는 왕권과 사회』	개설서	일본중세사
2005	『동아시아 속의 일본 문화』(2021년 증보판 발행)	개설서	대외관계사
2005	『중세 국가와 지방 사회』	연구서	일본중세사
2006	『경계에 걸쳐선 사람들』	개설서	대외관계사
2008	『동아시아 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한국어 번역 논문집)	연구서	대외관계사
2013	『일본중세경계사론』	연구서	대외관계사
2013	『일본 중세의 이문화(異文化) 접촉』	연구서	대외관계사
2014	『중세사 연구의 여로: 전후(戰後) 역사학과 나』	개설서	사학사
2014	『중세 사료와의 대화』	연구서	사료론
2014	『일본역사 나의 최신 강의 12: 경계사의 구상』	개설서	대외관계사
2016	『일본중세사(4): 분열에서 천하통일로』	개설서(문고)	일본중세사
2019	『옛 류큐: 해양 아시아의 빛나는 왕국』	개설서(문고)	류큐사
2022	『호조 도키무네와 아다치 야스모리(安達泰盛): 국제 전쟁과 가마쿠라 정치사』	개설서(문고)	일본중세사

계사론』, 2014년 개설서 『경계사의 구상』이 그의 대외관계사 및 '경계인'론에 관한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중세경계사론』은 2014년 제36회 가도카와 겐요시 상(角川源義賞)을 수상하면서 일본 내에서 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업적이 크게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런데 〈표 1〉에 보듯이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대외관계사 분야에 관한 저서 비중이 상당히 감소했다. 특히 '경계인'론에 관한 후속 저서는 보이지 않는다.[24] 이를 감안하면 2015년 이후 무라이 씨의 관심분야 중 대외관계사 및 '경계인'론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25]

이와 대조적으로 근래 일본에서 대외관계사 연구 분위기에는 새로운 경향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가·지역 간 교류는, 국가(막부) 수준, 지방 권력(지역 영주) 수준, 민중 수준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이하 각기 "상층", "중층", "기층").[26] 일찍이 세키 슈이치(関 周一) 씨(2002)는 무라이 씨의 연구에서 일본의 상층·중층 수준의 관계사·지역사가 무시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층, 즉 지역 권력(영주층)에 의한 지역사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27] 스다 마키코(須

24 한편, 〈표 1〉에 제시된 연구서·개설서 이외의 저술들을 본다면, 2015년 이후에도 2024년까지, 그는 다수의 편저서와 연구논문을 꾸준히 출간·발표하고 있다. 다만 그 연구논문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일본중세사 분야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류큐사 및 대외관계사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각주 23번에 언급된 자료 출처들을 근거로 2015~2024년 동안 무라이 씨가 발표한 연구논문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일본중세사 13건 이상, 류큐 및 홋카이도 역사 5건 이상, 일중관계사 5건 이상, 한일관계사 2건 정도이다(주제가 복수인 경우, 중복하여 계수함). 한일관계사에 관해서는, 村井章介, 2020, 「近世初頭, 対馬·朝鮮間の〈境界文書〉群: 『江雲随筆』の魅力を語る」, 『朝鮮史研究会論文集』 58, 5~29쪽; 村井章介, 2022, 「境界史の構想-史料を掘り下げる-」, 『歴史科学』 249, 1~15쪽 등 2건만 보인다.

25 이에 관하여 나카지마 가쿠쇼 씨(2014) 및 나카무라 츠바사 씨(2016)는 이 무렵 무라이 씨의 저서 제목에서 '아시아'와 '바다'라는 키워드가 빠지고, 그 대신 '일본(중세)'라는 용어가 이를 대체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나카무라 씨는 무라이 씨가 국가라는 체계를 상대화했던 시각이 "대다수 일본사 연구자를 매료시킬 정도의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참신함과 의외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中島楽章, 2014, 앞의 글, 97~98쪽; 中村 翼, 2016, 앞의 글, 90~92쪽 등 참조).

26 藤田明良, 1992, 「日本中世史における近年の「東アジア海域」研究について-日朝民衆の交流とその背景-」, 『朝鮮史研究会会報』 106, 4쪽; 橋本 雄, 1998, 「室町·戦国期の将軍権力と外交権-政治過程と対外関係-」, 『歴史学研究』 708, 17~18쪽; 関 周一, 2002, 앞의 책, 4쪽 등 참조.

27 関 周一, 2002, 앞의 책, 4~5, 10~12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田牧子) 씨(2011) 역시 이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대외관계사 연구가 이미 일본중세사 연구와는 독립(즉, 분리·고립)되어, "중세사 연구에 대한 제언력(提言力)을 잃었다."고 평가했다.[28] 이 비판은, 무라이 씨가 1988년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을 통해 일본중세사 본류 연구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 취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0년대 일본 학계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그래서 국가·정치 권력의 체제(즉, 상층·중층 수준)가 경계인(즉, 기층 수준)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29] 하시모토 유(橋本 雄) 씨의 위사(僞使) 연구(상층 막부 수준), 구로시마 사토루(黒嶋敏) 씨의 일본 도호쿠(東北)·규슈·류큐 등 '변경' 지역의 정치사 연구, 스다 마키코 씨의 오우치씨(大内氏) 연구,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씨의 대마도 소씨(宗氏) 연구(이상 중층 지방 권력 수준) 등[30]이 근래 일본 지역사의 주된 성과이자 지향점이 된 것이다.

요컨대, 무라이 씨가 1993년 『중세왜인전』 이래 제시해온 기층 수준의 '경계인'론 내지 '지역사'론의 대표적 논지들은 현재까지도 일본 중세사 연구자들 간에 꾸준히 인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기존에 제시했던 논지들이 인용·반복되는 것일 뿐, 그의 연구가 2015년 이후 여타 연구자들에 의해 더 발전·심화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의 시각은 이미 상층·중층 수준으로 옮겨졌고, 무라이 씨 자신도 대외관계사보다는 일본중세사 쪽으로 관심의 축을 옮긴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 학계에서의 '경계인'론에 대한 관심 퇴조는 어디에서 나온

28 須田牧子, 2011, 앞의 책, 10~11쪽.

29 中村 翼, 2019, 앞의 글, 34쪽 참조.

30 橋本 雄, 2012a, 『僞りの外交使節: 室町時代の日朝関係』, 吉川弘文館; 黒嶋敏, 2012, 『中世の権力と列島』, 高志書院; 須田牧子, 2011, 앞의 책; 荒木和憲, 2017,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荒木和憲, 2021b, 앞의 글, 488~502쪽 등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 연구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갖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측면에 관해서는 아래 제Ⅲ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경계인'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

이 제Ⅲ장에서는,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에 대한 일본 학계의 관심이 퇴조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경계인'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방대하고 광범위한 무라이 씨의 연구 성과 전부를 검토하고 논평하기에는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가 공부하는 중세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연구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검토한 바를 ① 이론 체계의 불명확성, ② 사료 취급 방식의 문제점, ③ 입론 과정에서의 일본 편향성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 이론 체계의 불명확성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의 이론 체계에는 여러 수준에서의 불명확성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점을 두 가지 든다면, ① 핵심 용어의 불명확성 및 ② 추측 형식의 과도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핵심 용어의 불명확성

우선, '경계인'론의 핵심 용어, 즉 '경계', '경계공간', '경계인', '지역', 그리고 무라이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한 '왜', '왜인' 등 용어 정의에서의 불명확성이다. 이에 관해서는 구로시마 사토루 씨(2014)도 무라이 씨의 '경계' 용어 사용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그의 '왜구 경계인'설 주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1] 또한 필자(2016·2017)도 이 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에 관하여 논증한 바 있는데,[32] 그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라이 씨는 "근대의 경계는 선(線)으로 명확하지만, 전근대의 경계는 윤곽이 명료하지 않은 영역이었다."라고 한다.[33]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경계'가 정치적·군사적 의미에서의 경계인지, 비정치적 의미에서의 경계인지 불명확하다.[34]

② 무라이 씨는 『쇼유키(小右記)』[35]의 사료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일본 사이 경계는 고대 이래로 명확한 '바운더리(boundary)', 즉 '선'의 형태였다고 서술한다.[36] 그런데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영역으로서의 '경계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경계인'으로서 '왜인', '왜구'를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

31 黒嶋 敏, 2014, 앞의 글, 1850쪽.

32 宋鍾昊, 2016, 앞의 글, 349~359쪽; 宋鍾昊, 2017, 앞의 글, 162~163쪽 등 참조.

33 村井章介, 2006, 『境界をまたぐ人びと』, 山川出版社, 1~3쪽; 村井章介, 2013b, 「序言」, 앞의 책, v~vi쪽; 村井章介, 2014b, 『日本歴史 私の最新講義12: 境界史の構想』, 敬文舎, 82~85, 306쪽; 村井章介, 2022, 앞의 글, 1쪽 등 참조.

34 김보한 씨도 무라이 씨 등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경계'의 정의가 다양함을 지적한 바 있다(김보한, 2011, 「중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 고찰」, 『韓日關係史硏究』 39, 77~79쪽 참조).

35 『小右記』 寛仁三年四月廿五日(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 『大日本古記録』, 『小右記』, 권5, 140쪽). 「[1019년 도이(刀伊)의 입구(入寇) 당시 퇴각하는 여진족을 추격하는 군사들에게] '다만 먼저 이키·대마 등 섬으로 가되, 일본의 경계[境]에까지만 습격하라. 신라의 경계[境]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도독[후지와라노 다카이에(藤原隆家)]께서 분부하셨다. … (但先可到壹岐·對馬等嶋,限日本境可襲撃, 不可入新羅境之由, 都督(隆家)所誡仰也者)」.

36 村井章介, 2014b, 앞의 책, 63쪽, 85쪽, 280쪽 등 참조. Bruce Batten, 아라키 가즈노리 등도, 일본사에서 드물게 보이는 예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쓰시마 해협(対馬海峡)이 존재하고, 국경 건너편에 신라와 같은 통일국가가 있었으므로, 7세기 이래 국경이 고정화되어 있었다고 하였다(ブルース バートン, 2000, 『日本の「境界」』, 34~36쪽; 荒木和憲, 2021b, 앞의 글, 493쪽 등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③ 무라이 씨는 '경계인'을 '경계공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지만,[37] '경계공간'에 살지 않았던 여타 사람들도 '경계인'으로 지목한다. 고려의 화척(禾尺)·재인(才人), 왜구에 의한 피로인(被擄人), 조선계 왜인,[38] 조선의 왜어 통사(倭語通事),[39] 일본 근세의 '키리스탄(기독교인)'[40] 등이 그들이다. 핵심 용어의 정의와 그 용례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④ 무라이 씨는 '왜인'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 '삼도(三島)' 등 규슈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이라고 함으로써 통상적인 '일본인' 용어보다 협의의 개념을 제시함[41]과 동시에, ⓑ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포르투갈인을 포함하는 뉘앙스를 갖는 광의의 개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42] ⓒ 물론 '왜', '왜인'을 일본, 일본인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43]

이렇게 '경계인'론에서의 핵심 용어들은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정의되고 사용된다. 게다가 이러한 불명확한 핵심 용어들은, 예컨대 서기 3세기 '왜인'을 서술한 「위서 왜인전」[44]에서부터(이때는 아직 '일본'이라는 국호가 제정되기 전이다), 14세기 고려말 왜구의 주체였던 '왜인', 1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보

37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39쪽(이영 역, 2003,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51쪽); 村井章介, 2013b, 「序言」, 앞의 책, vi쪽 등 참조.

38 村井章介, 1993, 위의 책, 37~38쪽(이영 역, 2003, 위의 책, 48~49쪽); 村井章介, 2013b, 「一五世紀日朝間の境界人たち」, 앞의 책, 203~206쪽 등 참조.

39 村井章介, 1993, 앞의 책, 44~47쪽(이영 역, 2003, 앞의 책, 56~59쪽) 참조.

40 村井章介, 2014b, 앞의 책, 225~233쪽 등 참조.

41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29, 142쪽 등 참조.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宋鍾昊, 2017, 앞의 글. 160~162쪽; 이영, 2019a, 앞의 글, 288~290쪽 참조.

42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50쪽 등 참조.

43 예컨대, 村井章介, 1993, 앞의 책, 61쪽(이영 역, 2003, 앞의 책, 73쪽). "「왜사 광엄(倭使光嚴) …」 … 이 광엄은 어엿한 '일본국사(日本國使)', 즉 쇼군 아시카가 요시카츠(足利義勝)의 사자였다."

44 정확히는 『三國志』, 「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傳, 倭人 조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는 '조선계 왜인', 16세기 중국 대륙 연안에서 보이는 다양한 민족을 지칭하는 '왜인'에까지, 모두 구분 없이 동일한 용어로 구사된다. 무라이 씨가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환중국해 해역'이라는 '지역'이, 그 시기와 공간, 양 측면 모두에서 너무 넓게 설정되어, 그에 관한 적절한 서술·분석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45]

2) 추측 형식의 과도한 사용

다음으로 '경계인'론이 제시하는 대표적 논지들이 원래 추측의 형식으로 제기된 후, 다른 연구자들이 이를 절대적 '명제'의 형태로 인용하면서, 원래 모호한 채로 제기된 논의가 다시 재생산·확산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46] 예컨대 〈표 2〉를 보자.[47]

---

45 橋本 雄, 2003, 앞의 글, 22쪽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은 일찍이 야마무로 교코(山室恭子) 씨(1989)·세키 슈이치 씨(1994)가 무라이 씨가 정립한 '지역' 개념에 관하여, 이 '지역'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응집핵은 무엇인지 의문을 표시한 점, 이영 씨(1997)가 「위서 왜인전」에 서술된 3세기 왜인과 중세 왜인이 동질적인 존재인지에 관한 의문을 표시한 점, 세키 슈이치 씨(2002)가 무라이 씨의 지역 설정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史實)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점 등도 같은 맥락의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山室恭子, 1989, 앞의 글, 1412쪽; 関 周一, 1994, 앞의 글, 60쪽; 李領, 1997, 앞의 글, 157쪽; 関 周一, 2002, 앞의 책, 10쪽 등 참조).

46 무라이 씨 외에도, 이러한 추측, 의문문 등의 문체는 특히, 다나카 다케오 씨 및 다카하시 기미아키 씨의 저술에서도 종종 보인다[예컨대, 다나카 씨의 '삼도(三島)'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는, 田中健夫, 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5쪽; 田中健夫, 2012, 앞의 책, 46쪽(初出 1982);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朝尾直弘ほか 編, 『日本の社会史1: 列島内外の交通と国家』, 岩波書店, 147~148쪽 등 참조. 다카하시 기미아키 씨의 '제주도인 왜구설'에 관련해서는 高橋公明, 1987,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済州島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98, 189, 190, 191, 192, 193쪽(金昌奎 譯,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島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8, 126, 127, 129, 131쪽) 등 참조]. 문제는 이러한 추측, 의문문 형식의 가설 또는 시론(試論)이 여타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하여 확인·확정된 견해로 인용되면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47 田中健夫, 1987, 앞의 글, 153쪽; 村井章介, 1988, 「倭寇と朝鮮」,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는 제주도 해민이 왜복(倭服)과 왜어(倭語)를 사용했다는 조선 성종 시기 사료[48]에 관하여, 일본 주요 연구자들의 견해를 원문 그대로 인용·정리한 것이다.[49]

첫째, 관련 사료의 의미에 관하여 다나카 씨(1987)는 원래 "'왜인과 사이에 모종의 일체감을 공유했기 때문인지'는 금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문장), 그 자신의 의견은 밝히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서 무라이 씨는 1988년 위 다나카 씨의 견해를 인용한다고 하면서도, "모종의 일체감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구절)고 표현함으로써 다나카 씨의 표현을 미묘하게 변형했다. 2013년에는 아예 다나카 씨의 의견을 "모종의 일체감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확정적 명제 형태로 인용했으므로, 그 인용 내용은 더욱 원전과 멀어졌다(ⓖ문장).[50] 여기에서 다나카 씨의 당초 불명확한 입장 제시가 무라이 씨에 의하여 확

332쪽(손승철·김강일 역, 2008, 앞의 책, 135쪽); 村井章介, 1993, 앞의 책, 38~39쪽(이영 역, 2003, 앞의 책, 50쪽); 村井章介, 2013b, 「倭寇の多民族性をめぐって」, 앞의 책, 165, 176쪽; 村井章介, 2014b, 앞의 책, 140쪽; 六反田 豊, 2017, 앞의 글, 335~336쪽. 〈표 2〉에 인용된 문헌 외에도, 村井章介, 1997, 「国家を超える視覚-日本中世史の立場から-」, 『国境を超えて-東アジア海域世界の中世』, 校倉書房, 30쪽; 村井章介, 2013a, 『中世日本の内と外 (增補)』, 筑摩書房, 196~197쪽(初出 1999); 関 周一, 2024, 「東シナ海と倭寇」, 앞의 책, 吉川弘文館, 63쪽 등에도 같은 주제에 관련한 서술이 있다.

48 『성종실록』 권145, 성종 13년 윤8월 12일 무인;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 등.

49 한편, 하마나카 노보루 씨는 〈표 2〉에 인용된 연구자들과 반대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왜인'과 '일본인'은 그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실체는 서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왜복·왜어 관련 사료들에 관해서도, 조선 해민이 해적 행위를 할 때 왜복·왜어를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왜복·왜어가 이 해역 사람들 공통의 옷차림·언어'라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왜어'는 대마도·이키 등 지역의 언어였을 것이므로, '일본어'의 방언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浜中 昇, 1996, 「高麗末期倭寇集団の民族構成 -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 『歴史学研究』 685, 60쪽 참조).

50 한편, 2014년 개설서 『경계사의 구상』에서는 "모종의 일체감이 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라고 쓰고 있다(ⓗ문장). 그러나 이것은 다나카 씨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 문장에서 무라이 씨 자신의 의견이 처음 등장하지만, 2014년까지도 그의 의견은 추측에 머물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제주도 해민의 왜복·왜어 사용' 사료에 관한 일본 주요 연구자들의 견해

연구자	연도	저서/논문	내용
다나카 다케오 (田中健夫)	1987	「왜구와 동아시아 통교권」	제주인이 왜인의 언어·의복을 모방한 것은 … ⓐ**왜인과 사이에 모종의 일체감을 공유했기 때문인지는 금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언어를 공유했던 사실에는 중대한 의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무라이 쇼스케 (村井章介)	1988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	… "ⓑ**왜인과 사이에 모종의 일체감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 (田中健夫 논문 153쪽).
	1993	『중세왜인전』	대마도 주변 해역에서 해적 행위를 하던 사람들에게, ⓒ**왜복은 공통의 차림새, 왜어는 공통 언어가 아니었을까?** 그 옷을 입고 그 말을 함으로써 그들은 귀속된 ⓓ**국가나 민족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른바 자유인으로서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 ⓔ**이 점에서 왜구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라는 질문 자체는 그다지 의미 없다.** ⓕ**왜구의 본질은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차원의 인간 집단이기 때문이다.**
	2013	『일본중세경계사론』	[왜복을 입은 데다가] 언어까지 왜어를 사용한 행위는 "ⓖ왜인과 사이에 모종의 일체감을 공유했던" 점을 엿볼 수 있다[각주: 田中健夫 논문 인용]. 14세기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귀속 의식 면에서도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벗어나, 왜인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세력에 투신하고자 하는 '연합에의 한 걸음'을 내딛는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2014	『경계사의 구상』	이러한 행위는 ⓗ**왜인과의 사이에 모종의 일체감이 존재했던 점을 추측하게 한다.** 나아가 말하면, 일본-조선 간 경계영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복은 공통의 옷차림, 왜어는 공통 언어였던 것은 아닐까.** 그 옷을 입고, 그말을 함으로써, 그들은 귀속된 국가와 민족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이른바 ⓙ**자유인으로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면, '왜구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라는 질문의 무의미함**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본질은 그 민족적 귀속 내지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한 국가 내지 민족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라는 점에 있었다.
로쿠탄다 유타카 (六反田 豊)	2017	「조선 전기」	[조선인 해석이 왜복·왜어를 사용했다는] 사례도 문헌상에 산견(散見)되는 점에서, 당시 '왜'란 국가로서의 일본이 아니었고, '왜복'과 '왜어'는 당시 조선과 일본의 경계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옷차림, 공통 언어였다고 함으로써,** 왜구의 본질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차원의 인간 집단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왜구가 실체로서 그러한 존재였던 점은 사실로 하더라도, [조선측의 인식은 서북 규슈의 해적집단으로 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적 명제 형태로 인용 및 확대 재생산된 모습이 보인다.

둘째, '왜복은 공통의 옷차림, 왜어는 공통 언어'라는 문언에 관해서 본다. 이 문장은 1993년『중세왜인전』에 처음 등장한 이후, '경계인'론의 대표적 논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원래 "~는 아니었을까"라는 의문문 형식이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도 의문문이었다(ⓒ·ⓓ문장). 단순히 그의 추측이거나,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억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무라이 씨의 의문문은 2014년『경계사의 구상』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문장). 그가 1993년에 품었던 추측·억측이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까지 명확히 이론화되지 못했음이 엿보인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억측을 기반으로, "왜구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라는 질문은 의미 없다.", "왜구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집단이다."라고 일찍이 단언했다(ⓔ·ⓕ·ⓚ·ⓛ문장). 위 명제들은 이러한 억측-단언의 흐름만을 통해 현재까지 '경계인'론에서 대표적 논지로 유지되어온 것이다.

셋째, 무라이 씨의 억측과 단언은 여타 일본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 豊) 씨(2017)는 무라이 씨의 의문문 형 억측을 "공통의 옷차림, 공통 언어였다고 함으로써"라는 명쾌한 결론 형태로 인용하고 있다(ⓜ문장). 물론 이것은 무라이 씨의 모호한 문체를 간과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쿠탄다 씨의 논문을 읽는 독자들로서는, 무라이 씨의 견해가 원래부터 충분한 사료 및 탄탄한 논리 구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크다.

요컨대, 무라이 씨는 다나카 다케오 씨의 "모종의 일체감"에 관한 단순한 관심 표명을 변형하여 인용하면서, 이를 자신의 주장 논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의문문 형식의 억측으로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그 억측을 기반으로 '왜구는 국경을 초월한 집단'이라는 대명제를 제시했다.[51] 또

51 이렇게 무라이 씨가 충분한 논증 과정 없이, 그의 핵심 주장 또는 견해를 의문문, 추측, 상상 등의 문체로 제시했던 사례는 그의 저술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예컨대 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의 억측은 다른 일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명쾌하게 논증된 명제로서 재생산·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라이 씨의 주요 논지에 관해서는, 그 사료적·이론적 근거 및 논리적 흐름의 치밀성과 명확성에 관하여 더 엄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사료 취급 방식의 문제점

무라이 씨는 그 스스로 '사료에 대한 몰두·집착', '사료주의', '사료를 파헤친다' 등의 표현[52]으로 자부하듯이, 탁월한 '통합적 사료 해석(史料操作)' 능력으로 일본학계에 정평이 나 있다.[53] 그러나 한편으로 로쿠탄다 유타카 씨(1994), 하시모토 유 씨(2012), 구로시마 사토루 씨(2014) 등 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은, 무라이 씨의 사료 해석에서의 오류, 인용 문언에서의 부정확성, 사료 선택에서의 부적절성 등 사료 취급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54]

井章介, 1993, 앞의 책, 58쪽(이영 역, 2003, 앞의 책, 70쪽); 村井章介, 2013b, 앞의 책, 133, 134, 138, 158, 164~165쪽 등 참조.

52 村井章介, 1988,「序論 アジアへの視線」, 앞의 책, 24쪽; 村井章介, 2014a, 앞의 책, 17쪽; 村井章介, 2022, 앞의 글, 1쪽.

53 関 周一, 1990, 앞의 글, 38쪽; 橋本 雄, 2012b,「解説 日本史と世界史とをどうつなげるか-現在的課題への処方箋」, 村井章介,『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筑摩書房, 296쪽; 黒嶋 敏, 2014, 앞의 글, 1848쪽; 中島楽章, 2014, 앞의 글, 98쪽; 中村 翼, 2022, 앞의 글, 82쪽 등 참조.

54 六反田 豊, 1994, 앞의 글, 90~91쪽; 橋本 雄, 2012b, 앞의 글, 310~313쪽; 黒嶋 敏, 2014, 앞의 글, 1848~1849쪽 등 참조. 로쿠탄다 씨는『중세왜인전』에서『조선왕조실록』한문 원문이 오독·오역된 부분을 지적했다. 구로시마 씨는『일본중세경계사론』내용 중, ①『조간기시키(貞觀儀式)』,『신사루가쿠키(新猿楽記)』등 일본 사료 인용에서 그 인용문이 미묘하게 바뀐 점, ② 철포의 일본 전래 시기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 사료 및 유럽 사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일본 내 기초 사료인『뎃포키(鉄炮記)』의 기록을 무시한 점, ③『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 지도 속의 형상을 일본 내 문언 사료보다 우선했던 점 등을 비판했다. 이 중 무라이 씨의 철포 일본 전래 시기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당시 일본 내 비판이 집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나라에서도 필자(2017)와 이영 씨(2019a, 2019b)가 무라이 씨의 '왜구 경계인'설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시각에서 사료 취급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55]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료 인용에서의 누락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6월 사료를 인용하면서 「有斬倭環國者」 부분이 누락됨으로써, 피로(被擄) 고려인들의 왜구에 대한 반항 사실이 서술되지 않음.[56]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1월 10일 계유 사료를 인용하면서 「如不得志」라는 가정형 문구가 누락됨으로써, 화척·재인과 삼도 왜구의 연합 계획이 이미 실현되는 것으로 잘못 읽힘. 또 그 진술자 이성(李成)의 진술 전부가 무고죄로 처벌되었다는 사료 내용이 누락됨으로써, 그 진술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유발함.[57]

ⓒ『단종실록』 권13, 단종 3년 2월 20일 병신 사료를 인용하면서 「詐稱」이라는 단어 중 「詐」가 누락됨으로써, 왜인 삼보라쇄모(三甫羅灑毛)의 혈통이 원래 일본인이었다는 점이 불명확해짐.[58]

② 사료 해석에서의 오류

되었다. 위 구로시마 씨(2014)의 비판 이전에 이미, 나카지마 가쿠쇼 씨(2005), 이가와 겐지(伊川健二) 씨(2007), 마토바 세츠코(的場節子) 씨(2007), 하시모토 유 씨(2012) 등 여러 연구자가 이 문제점을 비판·지적한 바 있다(橋本 雄, 2012b, 앞의 글, 310~313쪽 참조).

55 宋鍾昊, 2017, 앞의 글, 155~189쪽; 이영, 2019a, 앞의 글, 281~304쪽; 이영, 2019b, 앞의 글, 255~290쪽.

56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34~135쪽; 宋鍾昊, 2017, 앞의 글, 174~175쪽 참조.

57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37쪽; 宋鍾昊, 2017, 앞의 글, 180~182쪽; 이영, 2019a, 앞의 글, 293~296쪽 참조.

58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25쪽; 宋鍾昊, 2016, 앞의 글, 353쪽; 이영, 2019a, 앞의 글, 290~292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사』 권43, 공민왕 21년 9월 18일 임술 사료 중 「若」은 이를 가정형 의미의 '만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와 같은'으로 잘못 해석함. 그 결과 사료 번역문의 전체 문맥이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기 제주도민과 왜구의 연합이 이미 형성되어 명 황제조차도 이들을 토벌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됨.[59]

③ 사료 해석에 관한 논리 비약 또는 과장

ⓐ 1357년 승천부 흥천사(昇天府興天寺)에서의 충선왕 부부 초상화 절도 사건으로부터 왜구 행위에 '반(反)국가성' 내지 '정치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고려인이 왜구 주체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위 사건이 있던 1350~1360년대 무렵 왜구 침구에 고려인이 관여했다는 사료나 학설적 주장은 전혀 제기된 바 없음.[60]

ⓑ 15세기 사료에서 '왜인' 중에 조선계 왜인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왜구'에 고려·조선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그러나 15세기 '왜인'에 일부 조선계 혈통이 있다고 하여, 이를 14세기 왜구 구성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61]

---

59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36쪽; 宋鍾昊, 2017, 앞의 글, 179~180쪽; 이영, 2019a, 앞의 글, 292~293쪽 참조.

60 村井章介, 2013b, 「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33쪽; 宋鍾昊, 2017, 앞의 글, 167~169쪽; 이영, 2019b, 앞의 글, 276~283쪽 참조. 또 이영 씨(2003)·윤성익 씨(2021)는 이에 관하여, 왕가의 초상화는 왜구의 약탈물 중 고려 조정이 각별히 여기는 것이라서 『고려사』에 특별히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라이 씨의 해석은 자신의 왜구론에 입각해 왜구의 약탈물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이영, 2003,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23, 223~225쪽; 이영, 2019b, 앞의 글, 280쪽; 윤성익, 2021, 「'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한일관계사학회 2021년 국내학술대회), 39쪽 등 참조].

61 村井章介, 2013b, 앞의 책, 125, 203~206쪽; 宋鍾昊, 2016, 앞의 글, 366~367쪽; 이영, 2019a, 앞의 글, 286~29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라이 씨의 사료 취급에서의 문제점은 '왜구 경계인'설에 한정해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기로 한다.

무라이 씨는『일본중세경계사론』에서 고려말 왜구 절정기에 고려 조정이 이른바 '공도화(空島化)'[62] 정책을 실시했다는 취지를 서술한 바 있다. 그 시기 관련 사료에 고려 해안 지역 관청들이 내륙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지역 주민들은 그대로 남아 왜구 세력권 내에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경계인'론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인용문 1-1〉과 같이『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사료를 인용한 후 설명을 덧붙였다.

〈인용문 1-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남수문(南秀文)이 쓰기를, 태안군(泰安郡)은 … 고려 말에 방비가 허술하여 왜(倭)가 뻗어왔다. 홍무(洪武) 계축년(1373) 군(郡)이 입은 피해가 몹시 참담했다. ⓐ**수령은 겨우 아전 한두 명을 이끌고, 서산군(瑞山郡)에 임시로 의탁했다.** 계해년(1383)에 다시 예산현(禮山縣)으로 옮겼다. 경오년(1390)에 적의 기운이 잦아들어, 서산으로 돌아와 막았다. … [무라이 씨가 인용을 생략한 부분] ⓑ영락(永樂) 병신년(1416) 우리 태종께서 봄 수렵으로 행차하셨다. 그 땅의 황폐함을 애석해하시며, 즉시 군(郡)을 옛 관아에 복구할 것을 명하셨다. 이듬해 다시 여기에 성을 쌓았다.」

… ⓒ보통 이것은, 주민을 전부 이끌고 섬[63]을 비웠다고 해석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 군수가 역인(役人) 몇 명을 이끌고 옮겨갔을 뿐이고, 군현의 임시 이전[僑

62 '공도화' 또는 '공도 정책'은 당시 사료에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고, 근대 일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그 명칭이 생겼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도화' 내지 '공도 정책' 명칭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金晧東, 2005,「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空島政策' 재검토」,『民族文化論叢』32, 270~272쪽; 신명호, 2008,「조선 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海島政策을 통한 空島政策 재검토」,『역사와 경계』66, 1~27쪽; 손승철, 2010,「조선시대 '空島政策'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이사부와 동해』1, 275~288쪽; 한문종, 2011,「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韓日關係史硏究』39, 136~137쪽 각주 6번 등 참조.

63 무라이 씨는 "'섬'을 비웠다"고 표현했지만, 태안군은 섬이 아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寓]이란 실상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 바다를 생계 수단으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내륙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64]

무라이 씨는 위 사료가 보통 '주민이 모두 섬을 비웠다.'고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주민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인용한 사료의 취지를 부정한다(ⓒ 문단). 그런데 〈인용문 1-1〉 중 무라이 씨가 ⓐ·ⓑ 문장 사이에 인용을 생략한 부분에는, "흩어진 백성들이 미처 돌아오지 않으므로 온 경내가 가시덤불 속 황무지가 된 채 짐승 소굴로 변해버렸다.(流冗未歸, 蓋境荊榛棄爲獸藪.)"[65]라는 문장이 있다. 또 〈인용문 1-1〉에서 인용된 남수문(南秀文)의 기록 뒤에 바로 이어지는 신숙주(申叔舟)의 기록에서도 태안군 관아가 이전할 당시 현지 주민이 함께 이주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66]

---

64 村井章介, 2013b, 「倭寇の多民族性をめぐって」, 앞의 책, 157~158쪽. 밑줄은 무라이 씨의 저서에 있는 것이고, ⓐ, ⓑ 등은 필자가 임의로 넣었다. "…" 부분 중 "[무라이 씨 인용 생략 부분]"은 무라이 씨가 임의로 생략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면 사정상 필자가 번역을 생략한 것이다.

6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泰安郡, 客館. "… 泰安郡 … 高麗之季, 武弛倭張。洪武歲癸丑, 郡被禍甚慘. ⓐ**守僅率一二吏 僑寓瑞山郡.** 癸亥又移禮山縣。歲庚午, 賊氛稍息, 還堡于瑞山. **號曰蓴堤, 備禦海寇, 兼任群寄, 然流冗未歸, 蓋境荊榛棄爲獸藪, 國家故置講武場.** ⓑ永樂歲丙申. 我太宗駕幸春蒐. …" ⓑ문장 앞 밑줄 부분이 무라이 씨의 사료 인용에서 누락된 부분이다.

6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泰安郡, 客館. "신숙주가 쓰기를… 지난 왕조 말엽에 여러 차례 병란을 겪어서 모두 가시덩굴의 숲이 되어 짐승들의 터로 변했다. 우리 나라의 운이 흥하며 인정(仁政)과 위엄이 먼 변방까지 미쳐서 바다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런 뒤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군민이 모두 돌아오고,** 다른 고을의 백성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도 또한 즐겨 이곳으로 모여 왔다. … 하물며 **군(郡)이란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백성이 없으면 군이 될 수 없고,** … (申叔舟記。… 前朝之季, **屢經兵燹沒爲荊棘之林, 狐兎豺虎之墟。**自國朝興運, 仁威達被海寇屛跡, 然後**郡民之散而之四方者悉復,** 他邑之民無所於歸者亦樂就焉。… **況郡爲民設,無民不可爲郡,** …)"
참고로 남해현에 관한 기사도 함께 소개한다. "경인년부터 왜적에게 침략당하기 시작하여, 붙들려 가기도 하고 이사하기도 하여 군의 속현인 평산·난포가 쓸쓸하게 사람이 없었다. 8년이 지난 정유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 진양 선천(鐥川)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즉, 사료 원문 전체를 생략 없이 읽으면, 실제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그 결과 태안 지역이 황폐해졌다는 취지가 명확하다. 그러나 무라이 씨는 그러한 사료 내용이 누락·무시된 채로, '주민들이 스스로 왜구 세력권 안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는 정반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무라이 씨는 〈인용문 1-1〉에 이어 다음과 같이 논의를 발전시킨다.

〈인용문 1-2〉『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8월 병신조[에는]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가 아뢰었다. "거제·남해 두 섬은 왜적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근년 이래로 도적의 변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역(役)을 피하여 두 섬으로 피해 들어가는데, 남해에는 200여 호, 거제에는 360여 호입니다.** 만일 변이 있으면 이들은 반드시 노략당할 것입니다. 만약 두 섬에 백성 거주를 금할 수 없다면, 마땅히 성을 지킬 군사를 두고 엄하게 방어해야 합니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 "근년 이래로 도적의 변이 좀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듯이 ⓕ왜구가 이미 진정된 시기의 것이다.[67] … ⓖ공도화 정책으로 군현이 섬으로부터 옮겨온 후에도 섬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섬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왜

들판에 거처했다. 그리하여 토지도 지키지 못하고, 공물과 부세도 바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 판도(版圖)에 기재된 재물과 부세가 나오는 곳이 모두 풀이 무성한 사슴의 놀이터로 되어버렸고, 왜구들의 소굴이 된 지가 46년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尙道, 南海縣, 城郭).

또한 위 두 곳 이외에도, 『세종실록』에 경상도 거제현(巨濟縣)·명진현(溟珍縣), 흥선도(興善島), 충청도 남포현(藍浦縣) 등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다(『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권149, 지리지 충청도 공주목 남포현 등 참조). 그러나 무라이 씨는 이 모든 사료들의 취지를 부정 또는 무시한다[村井章介, 1993, 앞의 책, 28~29쪽(이영역, 2003, 앞의 책, 39~40쪽) 참조].

67 ⓕ문장에서 무라이 씨는 이 사료가 "왜구가 이미 진정된 시기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418년(세종즉위년)은 1419년(세종1) 5월 충청도 비인현(庇仁縣)에의 대규모 왜구 침구와 6월 조선의 대마도 정벌이 있었던 직전 해였다. 또 『조선왕조실록』 상 한반도에의 왜구·왜적 침구 기록은 그 이후로도 계속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 세력권에 있었던 것이므로, 공역 등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왜구가 진정된 결과, 국가로서 그들에게 역(役)을 부과할 필요가 생겼다. 이랬던 것은 아닐까? … ⓙ국가 정책에도 구애받지 않고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왜구 세력권에 들어가서라도 같은 생활을 계속하는 선택을 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보고 싶다.[68]

우선 〈인용문 1-2〉 ⓖ문장에서 무라이 씨는 '이른바 '공도화' 정책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섬에 남아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인용문 1-1〉에서 관련 사료 주요 부분이 누락된 채 이루어졌던 의문문 형식의 추측이, 확정된 명제 형식으로 발전하여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 1-2〉에 인용된 사료 중 ⓓ·ⓔ 문장에서는 "근년 이래로 도적의 변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 두 섬으로 피해 들어가는데,"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료 내용에 근거한다면, 남해·거제 지역에 수백 호의 사람이 있게 된 것은, 원래 주민들이 왜구 침구로 말미암아 내륙으로 피신했다가, 조선 건국 후 왜구 활동이 잦아들자 귀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음이 명확하다. 무라이 씨가 추측한 ⓖ문장은 ⓓ·ⓔ 사료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무라이 씨는 잘못된 억측인 ⓖ문장에 근거하여 ⓘ·ⓙ문장과 같이, '공역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왜구 세력권에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자도 있었다고 **상상해보고 싶다.**'는 식의 의문문 형태의 견해와 "상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의 과도한 추측성 결론이 등장한다. 그러나 〈인용문 1-2〉에서도 무라이 씨가 인용하지 않은 사료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면, 그의 '의문문'과 '상상적 희망(?)'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면 사정상 아래 각주에서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

68 村井章介, 2013b, 「倭寇の多民族性をめぐって」, 앞의 책, 158쪽. 밑줄은 무라이 씨의 저서에 있는 것이고, ⓓ, ⓔ 등은 필자가 임의로 넣었다. 〈인용문 1-2〉에서 무라이 씨가 제기하는 주장의 원형 및 근본적 의도에 관해서는, 村井章介, 1993, 앞의 책, 73~78쪽(이영 역, 2003, 앞의 책, 87~91쪽)을 참고하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친다.)[69]

〈인용문 1-1〉과 〈인용문 1-2〉에서 무라이 씨는 사료 문언 중 중요한 대목 인용을 생략했고, 그 결과 독자들과 여타 연구자들은 원 사료의 전체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그의 사료 취급에서의 문제점이 보인다.

위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생각하면, 결국 '경계인'론의 제반 주장들은 각각 그 사료적 근거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69 무라이 씨가 인용을 생략한 사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1-2〉에 인용된 도절제사의 계서(啓書)가 계속되면서] "남해(南海) 동쪽 적량(赤梁) 및 서쪽 노량(露梁), 거제 서쪽 견내량(見乃梁)에는 마땅히 모두 병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영(水營) 내이포(乃而浦)로부터 거제까지 물길로 50여 리가 되니, **만일 왜적의 변이 있으면 좇아가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영등포 만호(永登浦萬戶)를 자산도(玆山島)로 옮겼는데, 다시 영등포로 돌려 백성들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여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했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두 섬에 사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재(家財)는 모두 불러 내오고, 다만 장정들만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농사를 짓도록, 이미 전교를 받잡고 공문을 보냈으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도 만호를 영등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라고 했다. 병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두 섬의 땅이 기름져 농사지을 만하니, 마땅히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농민을 보호하도록 하옵소서**"라고 했다. ("… 南海東面赤梁·西面露梁, 巨濟西面見乃梁, 竝宜置兵船. 自水營乃而浦至巨濟, 水路五十餘里, 倘有賊變, 未易赴援. 前者移永登萬戶于玆山島, 請復還永登浦, 以安民業." 上令議政府, 六曹議之. 僉曰: "**二島所居婦人、小兒, 家財刷出, 止留丁壯耕農事, 已受敎行移, 不必更論。玆山萬戶則復還永登甚當.**" 兵曹議曰: "二島之地, 膏腴可耕, **宜置木柵, 以庇農民。**")」(『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8월 19일 병신).

위 사료 내용 중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 당시 조선 조정의 관심사는 왜적에 의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 섬 거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무라이 씨가 〈인용문 1-2〉 ⓗ·ⓘ문장에서 언급한 국가의 공역 회피는 이 사료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무라이 씨의 주장처럼 조선 조정이 섬 주민들의 공역 회피 가능성만 경계한 것이었다면, 조선 조정에 가장 위협이 될 장정만을 섬에 남겨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인 1420년 당시 위와 유사한 취지를 보여주는 사료로는, 예컨대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윤1월 27일 병신 등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입론 과정에서의 일본 편향성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 입론 과정에서는 ① '동심원'론에서 보이는 일본에의 편향성, ② '국가와 지역 간 상극 관계'론에서 보이는 일본에의 편향성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동심원'론에서 보이는 일본에의 편향성

위 제Ⅱ장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이, '동심원'론은 원래 중세 서일본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일본이 교토·가마쿠라라는 두 '중심'에서 시작하여 그 바깥쪽으로 '중심 → 주연 → 경계 → 이역'이라는 동심원 구조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다가 13세기 무렵 '환중국해지역'과 '환일본해지역'이 이 동심원 구조와 충돌했는데, 이 두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계인'들은 주로 츠가루 안도씨(津軽安藤氏), 류큐인, 왜구, 일본 상인들이었다는 취지였다.[70]

그런데 이 '동심원'론에서는, 무라이 씨의 일본을 향한 편향적 관심이 엿보인다. 먼저 '동심원'론은 중세 일본인들(특히 서일본 사람들)의 관념 및 당시 일본 국내 현상에 근거했을 뿐이다.[71] 그 '경계' 건너편인 '이역'에 존재한 중국인 및 고려·조선인들의 관념, 그리고 이들 이웃 국가에서의 당시 현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무라이 씨가 그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거론한 사람들은 모두 '근대국가' 일본의 영토 내에 속하는 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그의 관심이 일본에

---

70 村井章介, 1988,「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国家」, 앞의 책, 112~133쪽 참조.

71 나아가 세키 슈이치 씨는, 일본 '국가'의 '동심원' 구조는 그 '중심'에 위치한 중세 서일본 사람들의 관념이고, 2개의 '지역' 공간은 구체적인 교류를 파악하기 위한 무라이 씨의 모델이라고 함으로써, '국가' 관념과 '지역' 모델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関 周一, 1990, 앞의 글, 38쪽 참조). 즉 '국가'(서일본 사람들의 관념)와 '지역'(현대 역사학자의 모델)이 충돌한다는 무라이 씨의 서술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세키 슈이치 씨는, '중심' 이외의 주연·경계·이역 사람들의 '국가' 영역 관념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는 당연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다(関 周一, 위의 글, 1990, 39쪽 참조). 이 점에서도 무라이 씨의 '동심원'론에는 이론적인 약점이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에서는, 중세 일본인의 인식 체계에만 근거하여, 일본과 다른 외국 간에 있다는 '경계공간'이 일본과 외국 각기 상호 대칭 형태로 존재했다고 전제한 후, 일본 경계 바깥쪽 '경계공간'에 거주하는 '경계인'들을 일본 경계 안쪽 '경계인'들과 한데 묶어버린다. 이것은, 중세 일본인의 세계관으로써 그 이웃 세계, 즉 고려·조선 및 중국 등 각 국가 사람의 세계관 인식을 대체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무라이 씨 자신이 말했듯이, 일본 중세에 "막부의 지배력은 중앙집권 관료제 국가인 조선·중국에 비해 훨씬 미약했고, '왜인'의 통제는 지역 지배자인 '영주층'에 맡겨져 있었다."[72] 반면 조선은 국가 중앙 권력이 지방 연안·도서 지역에까지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중앙집권 국가였으므로, 무라이 씨가 말하는 '주연' 및 '경계' 지역이 조선에도 존재했는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했다.[73] 그러한 검토 없이 중세 일본의 지방분권 체제를 그대로 그 시기 조선 및 중국의 모습에 투영하는 방식은 당시 동아시아의 모습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결국 '경계인'론의 입론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라이 씨가 일본 경계 안쪽의 '경계인'들에 대하여 갖는 관심·이해도와, 경계 바깥쪽의 '경계인'들에 대하여

---

72 村井章介, 2013b,「倭寇とはだれか」, 앞의 책, 142쪽; 荒木和憲, 2021b, 앞의 글, 496쪽도 같은 취지이다.

73 이 문제점에 관하여 김보한 씨(2011)는, 중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을 고찰하면서, '경계영역'은 대체로 일본 국내 지역에 한정하여 존재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가 조선의 '경계영역'으로 전환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조선의 '경계영역' 하에서의 대마도인은 통제받는 존재였으므로, 일본의 '경계영역' 하에서의 자유로운 상황과는 다른 처지에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보한, 2011, 앞의 글, 75~101쪽). 또한 한문종 씨(2011)·손승철 씨(2011)는 조선의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을 고찰하면서, 삼포, 고초도, 울릉도 등 지역에 관해서는 조선 조정의 명확한 경계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지적했다(한문종, 2011, 앞의 글, 131~158쪽; 손승철, 2011,「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韓日關係史硏究』39, 205~259쪽). 위 연구자들의 견해는 모두, 무라이 씨의 위 전제와는 달리, 중세 일본의 경계 건너편의 한반도 영역에서는 '경계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갖는 관심·이해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론에서 보이는 일본에의 편향성

무라이 씨는 '국경에 걸쳐선 지역'과 기존의 국가 간에는 모순·대항이라는 상극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론은 그의 1988년『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이래 그의 대표적 논지 중 하나였다.[74] 무라이 씨는 이러한 상극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지역', 즉 '경계공간'을 근거로 한 왜구의 침략(侵掠) 활동을 "국가에 대한 반역"[75]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라이 씨가 상정한 국가는 어디일까? 바로 고려·조선과 중국일 뿐, 일본은 아니었다. 무라이 씨 스스로도 왜구의 중핵(中核)은 일본 북규슈 지역의 일본인 해민이라고 하지만, 그 왜구 집단은 일본이 아닌 고려·조선 및 중국이라는 국가와 대립한다. 또 제주도, 남해안의 해민들은 조선과 대립했다고 한다. 16세기 중국 연안을 침구한 왜구는 중국과 대립했다고 한다.

이렇게 무라이 씨의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론에서는 그 '국가'로서 일본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76] 세키 슈

---

74 村井章介, 1988,「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国家」, 앞의 책, 134~139쪽; 村井章介, 1993, 앞의 책, 57~58쪽 (이영 역, 69~70쪽); 村井章介, 1997, 앞의 책, 27쪽, 30쪽 등 참조. 다만 '지역과 국가 간 상극'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의 2013·2014년 저서들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14년『경계사의 구상』에서도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구도는 "대항관계"라는 용어를 통하여 거의 그대로 서술되었다(村井章介, 2014b, 앞의 책, 40~44쪽 참조). 또한 일본 연구자들의 최근 논문에서도 여전히 '지역과 국가 간 상극'은 무라이 씨 주장의 대표적 논지 중 하나로서 거론된다(中村 翼, 2016, 앞의 글, 86쪽; 関 周一, 2024,「序章」, 앞의 책, 3쪽 등 참조).

75 村井章介, 1988, 앞의 책, 96, 134쪽 참조.

76 무라이 씨가 '상극 관계'에서 '국가' 일본을 거론한 예는, ① 규슈 정서부 가네요시 친왕(지역)과 북조 막부·남조 조정(국가) 간 관계, ② 도요토미 히데요시(국가)의 '환중국해 해역'(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 시도, ③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해적정지령'의 대상이 된 해상 세력 상호간(지역) 분쟁 등 총 3건이 있었다(①·②: 村井章介, 1988,「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国家」, 앞의 책, 134, 138~139쪽; 関 周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치 씨(1990·1994), 하시모토 유 씨(2003), 스다 마키코 씨(2011) 등 일본 연구자들도 일찍이 이 문제점을 포착하고 지적한 바 있다.[77]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과 국가 일본 간 상극 관계에 관한 서술을 빠뜨린 점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무라이 씨는 '지역' 세력인 츠가루 안도 씨가 막부 쇼군의 가신으로서 오히려 '지역' 내에서 국가의 규제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환일본해지역'에서는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론에 "답변할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자인한 바 있다.[78] 또한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어야 할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해적정지령(海賊停止令)에 대해서 무라이 씨는, "히데요시는 그 왜구왕 왕직(王直)의 피를 잇는 '왜구적 세력'의 통할자(統轄者) … 수호자(守護者)"라고 평가했다.[79]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무라이 씨는 일본 내에서는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1990, 앞의 글, 39쪽 참조, ③: 村井章介, 2014b, 앞의 책, 44쪽 참조). 그러나 ①·②에서의 '지역'은 무라이 씨가 '경계인'론 논의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기층 경계인이 아닌 지역 권력에 관한 것이므로, 무라이 씨의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위 두 사례 모두 1988년 저서에서 간략히 언급된 이후 다시 거론된 적은 없었다. ③에 관하여 무라이 씨는 "해적정지령은, 〈일본 내〉 해상 세력 상호의 분쟁을 모두 강대한 국가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村井章介, 2014b, 위의 책, 44쪽 참조). 즉, 여기에서도 '지역'과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지역' 상호 간 갈등을 거론했을 뿐이다.

77 関 周一, 1990, 앞의 글, 39쪽; 関 周一, 1994, 앞의 글, 55쪽; 橋本 雄, 2003, 앞의 글, 23쪽; 須田牧子, 2011, 앞의 책, 10쪽 등 참조. 이러한 일본 연구자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무라이 씨는 '지역과 국가 간 상극'이라는 표현 자체는 2000년대에 들어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세력으로서 중국인 해상(海商)들을 추가하고, 중세 일본 국가권력의 취약성을 언급한 점(村井章介, 2014b, 앞의 책, 39~44쪽 참조) 역시 위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 간 상극'이라는 대립 구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상극 관계에서 '국가' 일본을 누락시키는 점 자체에 관한 그의 견해는 여전히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78 村井章介, 1988, 「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国家」, 앞의 책, 134쪽.

79 村井章介, 2012, 『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筑摩書房, 219쪽(初出: 1997, 『海から見た戦国日本: 列島から世界史へ』, 筑摩書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지역' 세력 양측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론은, 일본인들로 구성된 '지역'과 일본 이외의 '국가' 간의 갈등 관계를 서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근대국가' 내지 현대 일본인의 시각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는 편향성이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라이 씨가 '지역과 국가 간 상극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해온 왜구 논의로 돌아온다. 무라이 씨는 그의 '왜구 경계인'론을 비판하는 한국·중국의 연구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라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론해왔다.[80] 그러나 무라이 씨의 왜구론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야마무로 교코(山室恭子) 씨로부터 '왜구의 악행을 무시한 지나친 왜구 편애[贔屓の引き倒し]'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81] 즉, 한국·중국 연구자들의 비판은,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라는 근대적 이념에 근거했다는 논리로 간단히 무시해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요컨대 그가 주장하는 '왜구=다민족적·초국가적 집단'론의 원천에는 오히려 그 근거가 되는 '경계인'론, 나아가서는 '동심원'론에서부터, 일본을 향한 그의 편향적 관심이 보인다. 따라서 그가 오히려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는 시각'에 이르지 못하고, '중세 왜'와 '근대국가 일본'의 관련성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래서 그 주장의 순수성·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

80 예컨대, 村井章介, 2013b, 앞의 책, vi~vii쪽, 126~128쪽 등 참조. 이러한 맥락의 견해는 무라이 씨뿐 아니라, 현재 일본 학계의 대체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南基鶴, 2003, 「중세 고려·일본 관계의 쟁점 -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 『日本歷史硏究』 17, 97쪽; 이수열, 2019, 앞의 글, 138~139쪽 등을 참조.

81 山室恭子, 1989, 앞의 글, 1412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맺음말에 대신하여

오늘날 세계 각 국가는 국경선이라는 명확한 경계로 서로 구분되어 있다.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빠른 교통수단, 초고속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국제간 상호 소통 및 각종 물자·서비스 교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에 따른다면, 현대에 들어서 더욱 '경계공간'의 면적은 넓어지고, '경계인'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현대의 경계는 '선'으로 명확하지만, 전근대의 경계는 '면'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무라이 씨의 견해와는 다르게 느껴진다. 필자가 무라이 씨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어쨌든 무라이 씨의 말대로 중세와 현대의 '경계공간'·'경계인'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고 하자. 그렇다면 중세 수백 년 동안은 '경계공간'·'경계인'의 모습이 항상 똑같이 유지되었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13세기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 시기의 '경계인', 14세기 후반 한반도에의 왜구 창궐 시기의 '경계인', 15세기 삼포 개항 및 계해약조(癸亥約條) 체결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정착된 이후의 '경계인', 16세기 중국 연안에서 왜구 활동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의 '경계인'의 구성과 활동 양상 등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를 묶어서 서술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중국·조선·일본 각국의 해당 시기 정치사·관계사를 무시하고, 오직 기층에 있는 '경계인'의 활동만으로 그 시기를 규정할 수 있을까?

적어도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지역사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대외관계사·지역사 연구는 국가 수준 및 지방권력 수준의 정치사·관계사 쪽으로 그 관심 방향이 옮겨와 있다. 무라이 씨의 기층 '경계인'론 이론 체계가 심화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계인'론에서의 몇 가지 대표적 논지들은 일본의 다수 연구자에 의해 별 비판 없이 인용·재생되면서 정설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 이러한 일본 내 학계 분위기는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한국 연구자들도 많이 계신다. 일본 연구자들의 과거 연구사를 정리·분석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무라이 씨 등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해오셨다.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고 향후로도 계속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일본 연구자 및 여타 국가 연구자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 이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라 생각한다.

즉,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에 관하여, 그 사료적 근거 및 논리 흐름 등 입론 체계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거기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그에 대한 대안적 견해까지 제시하여 일본 연구자들 역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로써 한·중·일 삼국 연구자들 간에 놓인 간극의 크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고려사』.

『新增東國輿地勝覽』(권19, 忠淸道, 泰安郡; 권31, 慶尙道, 南海縣).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성종실록』).

『小佑記』(寬仁三年四月廿五日, 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 『大日本古記録』, 『小佑記』 권5, 140쪽).

단행본

関 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_____, 2024, 『中世の海域交流と倭寇』, 吉川弘文館.

橋本 雄, 2012a, 『偽りの外交使節 : 室町時代の日朝関係』, 吉川弘文館.

山内 譲, 2018, 『海賊の日本史』, 講談社.

須田牧子, 2011,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田中健夫, 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_____, 2012, 『倭寇-海の歴史-』, 講談社(初出: 1982, 教育社).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_____, 1993, 『中世倭人伝』, 岩波書店(이영 역, 2003,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_____, 1997, 『国境を超えて-東アジア海域世界の中世』, 校倉書房.

_____, 2006, 『境界をまたぐ人びと』, 山川出版社.

_____, 2012, 『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筑摩書房(初出: 1997, 『海から見た戦国日本: 列島から世界史へ』, 筑摩書房).

_____, 2013a, 『中世日本の内と外 (增補)』, 筑摩書房(初出 1999).

_____, 2013b, 『日本中世境界史論』, 岩波書店.

_____, 2014a, 『中世史研究の旅路 : 戦後歴史学と私』, 校倉書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4b,『日本歷史 私の最新講義12: 境界史の構想』, 敬文舍.
村井章介, (무라이 쇼스케), 손승철·김강일 역, 2008,『동아시아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秋山哲雄·田中大喜·野口華世 編, 2021,『日本中世史入門-論文を書こう』, 勉誠出版 (初出 2014).
荒木和憲, 2017,『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黒嶋 敏, 2012,『中世の権力と列島』, 高志書院.
ブルース バートン, 2000,『日本の「境界」』, 青木書店.

Peter D. Shapinsky, 2014, *Lords of the Sea: Pirates, Violence, and Commerce in Late Medieval Japa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논문

金普漢, 2001,「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少貳冬資의 피살과 관련해서-」,『日本歷史硏究』13.
_____, 2009,「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東北亞歷史論叢』26.
_____, 2011,「중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 고찰」,『韓日關係史硏究』39.
_____, 2014,「일본 중세사의 '해양인식', 어떻게 볼 것인가」,『日本歷史硏究』40.
金皓東, 2005,「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空島政策' 재검토」,『民族文化論叢』32.
羅鍾宇, 1994,「홍건적과 왜구」, 국사편찬위원회,『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0)』.
나카다 미노루(中田 稔), 2010,「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3.
南基鶴, 2003,「중세 고려·일본 관계의 쟁점 -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日本歷史硏究』17.
손승철, 2010,「조선시대 '空島政策'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이사부와 동해』1.
_____, 2011,「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韓日關係史硏究』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宋鍾昊, 2016,「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境界人論' 및 그 倭寇 연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중세사연구』46.
_____, 2017,「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왜구=경계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歷史敎育論集』63.
송종호, 2023a,「'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80.
_____, 2023b,「고려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82.
신명호, 2008,「조선 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海島政策을 통한 空島政策 재검토」,『역사와 경계』66.
윤성익, 2008,「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韓日關係史硏究』31.
_____, 2015,「帝國 日本의 植民지배와 역사서술 속에서의 倭寇」,『동국사학』59.
_____, 2021,「'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한일관계사학회 2021년 국내학술대회).
이수열, 2019,「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해항도시문화교섭학』21.
_____, 2022,「'바다의 역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론: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75.
李領, 1997,「書評 村井章介 著『中世倭人傳』」,『日本歷史硏究』6.
____, 2003,「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韓國史硏究』123.
____, 2010,「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36(재게재: 2015,『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____, 2019a,「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境界人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倭寇とはだれか」를 중심으로-」,『한국중세사연구』58.
____, 2019b,「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왜구=비영주(非領主)·주민(住民)〉설에 관한 한 고찰」,『歷史敎育論集』72.
한문종, 2011,「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韓日關係史硏究』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성화, 2013,「바다와 은(銀)을 통해서 본 근세 동아시아의 역사: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세계사 속의 전국일본(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코기토』73.
古谷暢子, 1989,「書評: 村井章介 著『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歴史評論』472.
高橋公明, 1987,「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済州島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98(金昌奎 譯, 1989,「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島를 중심으로-」,『耽羅文化』8).
関 周一, 1990,「書評 村井章介『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歴史学研究』603.
_____, 1994,「中世「対外関係史」研究の動向と課題」,『史境』28.
_____, 2011,「アジアから見た日本の境界」, 竹田和夫 編,『古代·中世の境界意識と文化交流』, 勉誠出版.
_____, 2013,「中世『東アジア』研究の動向」,『歴史学研究』906.
橋本 雄, 1998,「室町·戦国期の将軍権力と外交権 -政治過程と対外関係-」,『歴史学研究』708.
_____, 2003,「中世日本対外関係史の論点 -王権論·冊封体制論·地域論を見直す-」,『歴史評論』642.
_____, 2012b,「解説 日本史と世界史とをどうつなげるか-現在的課題への処方箋」, 村井章介,『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筑摩書房.
_____, 2014,「東アジア世界の変動と日本」, 大津 透ほか 編,『岩波講座 日本歴史8·中世3』, 岩波書店.
楠木 武, 2000,「中世日韓関係史の研究をめぐって」, 歴史教育研究会 編,『日本と韓国の歴史教科書を読む視点: 先史時代から現代までの日韓関係史』, 梨の木舎.
島田次郎, 1960,「新刊紹介 田中健夫 著「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歴史評論』115.
藤田明良, 1992,「日本中世史における近年の「東アジア海域」研究について -日朝民衆の交流とその背景-」,『朝鮮史研究会会報』106.
浜中 昇, 1996,「高麗末期倭寇集団の民族構成 -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歴史学研究』685.
山室恭子, 1989,「書評 村井章介 著『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史学雑誌』98(8).
森平雅彦, 2017,「高麗後期」, 李成市·宮嶋博史·糟谷憲一 編,『朝鮮史 1』, 山川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版社.
六反田 豊, 1994,「書評 村井章介 著『中世倭人伝』」,『年報朝鮮学』4.
_____, 2017,「朝鮮初期」, 李成市·宮嶋博史·糟谷憲一 編,『朝鮮史 1』, 山川出版社.
田中健夫, 1987,「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朝尾直弘ほか 編,『日本の社会史1: 列島内外の交通と国家」, 岩波書店.
_____, 1994,「書評 村井章介『中世倭人伝』」,『歴史学研究』657.
_____, 2003,「中世対外関係史研究の動向」,『対外関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初出: 1963,『史学雑誌』72(3)).
中島楽章, 2014,「書評と紹介 村井章介著『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日本歴史』798.
中村 翼, 2016,「書評 村井章介著『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日本史研究』647.
_____, 2019,「東アジア海域世界の境界人と政治権力-一四世紀の分水嶺を考える-」,『日本史研究』679.
_____, 2022,「書評 村井章介 著『古琉球 海洋アジアの輝ける王国』」,『洛北史学』24.
村井章介, 2022,「境界史の構想-史料を掘り下げる-」,『歴史科学』249.
塚本 学, 1980,「日本史は特異なのか-全体会の斉藤報告に関連して」,『歴史学研究月報』248.
荒木和憲, 2021a,「中世の「日本」はどんなカタチをしていたのか?: 境界の「曖昧さ」」,『REKIHAKU』2.
_____, 2021b,「東アジア交流の玄関口としての境界領域」, 秋山哲雄·田中大喜·野口華世 編, 2021,『日本中世史入門·論文を書こう』, 勉誠出版.
黒嶋 敏, 2014,「書評 村井章介著『日本中世境界史論』」,『史学雑誌』123(10).
_____, 2020,「ナワバリに生きる海人」, 秋道智彌·角南篤 編,『海はだれのものか(海とヒトの関係学3)』, 西日本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세 한일관계와 '경계인'론

–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씨의 연구에 관한 한 고찰 –

송종호

무라이 쇼스케 씨는 1988년 저서 『아시아 속의 중세 일본』을 통하여, 당시 동아시아 관계사에서의 여러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였고, 이는 일본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경계인'론을 제시했다. '경계인'론에서는 중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경계공간'이 있었다고 하며, 이곳을 근거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경계인'이라 일컫는다. 이들은 무역, 외교, 해적 등의 국제적 활동을 영위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왜구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경계인'론은 기층민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 상부에 있던 국가 및 지방 권력에 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문제점에 관해서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2010년대 이후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관계사·지역사 연구는 기층민의 사회사보다는 지방 권력의 정치사 위주로 전개되었고, 무라이 쇼스케 씨의 '경계인'론에서의 발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계인'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인'론의 이론 체계에는 여러 수준에서의 불명확성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점으로서는, ① 핵심 용어 정의에서의 불명확성 및 ② 추측 형식의 과도한 사용을 들 수 있다.

둘째, 무라이 씨의 사료 취급 방식에 관해서는 한국·일본의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사료 인용에서의 문구 누락 및 부정확성, 사료 해석에서의 오류, 사료 문언으로부터의 논리 비약 및 과장, 사료 선택에서의 부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에 더하여 이른바 '공도 정책(空島政策)'에 관한 무라이 쇼스케 씨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료 인용 및 논증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무라이 씨의 '경계인'론 입론 과정에서는, ① 그 이론적 기초인 '동심원'론에서 보이는 일본에의 편향성 및 ② '국가와 지역 간 상극 관계'론에서 보이는 일본에의 편향성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가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는 시각'에 이르지 못하고, '중세 왜'와 '근대국가 일본'과의 관련성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무라이 쇼스케, 村井章介, 경계인, 왜구, 왜인, 공도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Medieval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Marginal Man" Theory: A Review on the Studies of Mr. Shousuke Murai

Song, Jong-Ho

Mr. Shousuke Murai presented new perspectives on various issues in East Asian relations history in his 1988 book, *Medieval Japan in Asia*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This publication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Japanese academic circles. Building on these achievements, he introduced a new theory called the "Marginal Man Theory." Through this theory, he proposed that there were "Marginal Spac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in the Medieval Period, referring to those who operated in these spaces as "Marginal Men." These people engaged in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trade, diplomacy, and piracy, with the Waegu (Wakou, Japanese pirates) being a notable example.

However, his "Marginal Man Theory" primarily focused on grassroots common people, and did not adequately address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fluence of states and local powers affecting them. This issue was noted by several Japanese scholars from the 2010s onward. Consequently, since then, studies in Japan regarding the East Asian regional history have tended to emphasize the political history of local powers rather than the social history of grassroots common people. with developments in Mr. Murai's "Marginal Man Theory" becoming scarc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current "Marginal Man Theory" needs to resolve the following challenges:

Firs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Marginal Man Theory" lacks clarity on several levels, particularly in (1) the unclear definitions of core terms and (2) the excessive use of speculative statements.

Second, regarding Mr. Murai's handling of historical records, several scholars from both Korea and Japan have pointed out problems, such as omissions and inaccuracies in citations, interpretive errors, leaps in logic and exaggerations, and inappropriate selection of sources. This paper also highlights additional issues in Mr. Murai's citation and arguments regarding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新增東國輿地勝覽』) in relation to the so-called "Island Evacuation Policy (空島政策)."

Third, Mr. Murai's "Marginal Man Theory" exhibits several problematic aspects, including (1) a pro-Japanese bias in his "Concentric Circles" argument, and (2) another pro-Japanese bias in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Region" argument. These aspects reveal that he has yet to reach a "trans-national perspective", and remains constrained with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medieval Japan" and "modern nation-state Jap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ywords: Shousuke Murai, Marginal Man, Waegu, Wajin, Island Evacuation Polic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8

청 건륭 28년 제(製) 만문(滿文) 『성경길림분계도(盛京吉林分界圖)』 연구

이승수 | 북경대학 역사학과 박사연구생

I. 머리말
II. 『성경길림분계도』의 제작 배경
III. 압록강 탐사와 지도의 제작
IV. 헐린산맥과 '열두 계곡'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건륭 28년(1763) 5월, 길림장군 헝루(henglu, 恒祿)는 지도 한 장을 그려 황제에게 전송했다. 백두산 주변부와 송화강 상류, 호이파하(hoifa bira, 輝發河) 유역 일대를 담은 헝루의 지도에는 그가 두 차례에 걸쳐 압록강변을 따라 이동한 탐사 경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었고,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의 관할 구역의 분계(分界)를 곳곳에 주기했다. 지도의 좌측 상단에는 만주어로 "조선 변경의 갈파진(qoi bo jeng)이 있는 곳을 조사하고 예전부터 분계로 삼은 헐린산맥의 지도(solho jecen i giya I po jeng bisire babe baicafi, daci hešen obuha helin dabagan i ba na i nirugan)"라는 표제를 적었다.(이하 이 글에서는 이 지도를 『성경길림분계도(盛京吉林分界圖)』[1]로 번역하고 때때로 "헝루 지도"로 약칭한다.)

강희 연간 이래로 청조는 만주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로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강희 28년(1689)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직후 흑룡강장군 바하이(bahai, 巴海)와 흠차부도통 랑탄(langtan, 郎談)이 『길림구하도(吉林九河圖)』(원제: 『구외구대인도(口外九大人圖)』)와 『오라등처지방도(烏喇等處地方圖)』 등을 제작했으며[2] 그 시기를 전후로 『흑룡강유역도(黑

---

* 투고: 2025년 1월 6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1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은 지도 만주어 표제를 『中朝分界地圖』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헝루의 지리조사와 지도 제작은 조청 양국의 분계와 관련이 없고, 성경과 길림 두 지역의 분계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도 제작의 목적과 지도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지도의 표제를 『盛京吉林分界圖』로 고쳐 번역했다.

2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청의 흑룡강 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는 吉田金一, 1980, 「郎談の「吉林九河図」とネルチンスク条約」, 『東洋学報(東洋文庫和文紀要)』, 30~70쪽; 吉田金一, 1983, 「ネルチンスク條約で定めた清とロシアの國境について」, 『東洋史研究』 42, 62~87쪽; 承志, 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 - 帝国の形成と八旗社会』, 名古屋大學出版社; 承志, 2013, 「滿文《烏喇等處地方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龍江流域圖)』,[3] 『영고탑지도(寧古塔地圖)』,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등 만주 전역, 혹은 일부를 담은 여러 지도가 차례로 제작되었다. 만주 지방 지도의 제작은 동시기에 전국 단위로 진행된 지리 조사와 총도(總圖) 및 지리지를 간행하는 사업과 궤를 함께하기도 했다. 청조는 강희 20년대에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의 간행을 착수한 이래로 전국 모든 부·주·현의 지리지와 지도를 수집·정리하고 재간행하는 작업을 계속했고, 강희 56년(1717)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 최초의 경위도 실측 지도집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청조가 보유한 만주의 지리 정보는 갈수록 체계화되고 상세해졌다.

청 전기의 상황에 한정하자면, 당시 청조가 열성적으로 만주의 지리를 수집하고 각종 지도를 제작했던 것은 러시아나 조선 같은 이웃 국가들과 국계를 획정하고 자국의 판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랑탄의 길림 지도가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나, 『황여전람도』를 제작할 때 부트하 울라(butha ula, 打牲烏拉) 총관(總管) 묵던(mukden, 穆克登)을 백두산으로 특파하여 사계(査界)를 명령하고, 그를 조선으로 보내 조선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지도에 담았다는 사실 등이 이를 증명한다.[4] 그러나 청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백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만주 지역, 특히 그중에서도 유조변 바깥 지역은 민정(民政) 행정구역이

考」(烏雲畢力格 主編, 『滿文檔案與淸代邊疆和民族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84~377쪽 수록) 등을 참조.

3 『黑龍江流域圖』에 대한 전제 연구로는 承志, 2013, 「尼布楚條約界碑圖的幻影-滿文《黑龍江流域圖》硏究」(烏雲畢力格 主編, 위의 책, 378~488쪽 수록) 참조.

4 청조의 강역 인식과 『황여전람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孫喆, 2003, 『康雍乾时期輿图绘制与疆域形成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조청 국계 획정과 『황여전람도』의 관계에 관해서는 張存武, 1987, 「淸代中韓邊務問題探源」, 474~475쪽(張存武, 『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 463~503쪽 수록); 장상훈, 2006, 「청대 황여전람도 수록 「조선도」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8, 113~152쪽; 이화자, 2019, 『백두산 답사와 한중국경사』, 혜안, 67쪽 등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설치되지 않고 인구가 희박하여 세세한 지리를 조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만주는 기후가 혹독하고 지세가 험준하여 삼림 깊숙한 곳을 장기간 탐험하는 일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이기도 했다.[5] 따라서 황제의 판도를 굽어보겠다는 이념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국계 획정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이든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수요가 없다면 굳이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모든 하천과 산봉우리를 일일이 조사해 지도로 남길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당장의 시무(時務)와 관련된 지역까지만 상세히 파악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다른 사정이 생기면 따로 조사를 진행해 지도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헝루의 압록강 탐사 역시 이러한 청조의 장기적인 만주 지리 정보 수집 프로젝트의 한 단원에 해당한다.

헝루의 지도에 그려진 전체 영역 중에서 그가 직접 다녀온 곳은 아주 작은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헝루가 직접 다녀온 압록강 상류 지역 역시 사실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탐사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강희 24년(1685)에 주방협령(駐防協領) 러추(lecu, 勒楚)와[6] 강희 50년(1711)에 총관 묵던이 백두산을 탐사하러 갔을 때 모두 헝루와 완전히 동일한 노선을 밟았고, 그중 묵던의 조사 결과는 강희제의 『황여전람도』에 꽤 자세히 그려지기도 했다.[7] 즉, 묵던의 백두산 방문 이후 불과 6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 되어 압록

5 일례로 강희 48년(1709)에 강희제는 흑룡강 일대로 측량을 떠나는 유럽인 선교사들과 만주인 대신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지역까지 결코 무리해서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여러 차례 당부했다(『黑龍江將軍衙門檔』 1-1709冊 「吏·兵部, 理藩院, 盛京兵部來文檔」 강희 48년 4월 13일).

6 강희 25년 러추의 압록강 상류 탐사 및 그 과정 중에 발생한 "三道溝 사건"에 관해서는 張月瑩, 2017, 『三道溝事件與朝鮮的應對』,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참조.

7 강희 50년 묵던의 압록강 상류 탐사 노정에 관해서는 이화자, 2024, 「성경 상봉각의 만문백두산도에 대한 고증 -강희 『황여전람도』와의 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102, 31~55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 상류 지역은 다시금 '잘 모르는 땅'이 되어 인력과 비용을 들여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던 것이다. 압록강 상류에서 이러한 지리정보의 '후퇴'와 '망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60년 만에 다시 이뤄진 형루의 답사 이후 그곳은 다시 어떻게 인식되고 관리되었는가? 형루의 압록강 탐사와 그 결과물인 『성경길림분계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질문들의 해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형루의 지도는 학계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며 그동안 몇몇 연구자가 언급하거나 소개한 바 있다. 먼저 한국의 연구자 윤욱은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 이하 "일당관"으로 약칭)에 소장된 "월접포(月摺包)"의 조선 관련 문건들을 조사하던 도중 형루의 지도를 발굴했고 2013년에 한국 학계에 처음으로 이 지도를 소개했다.[8] 이후 2016년에는 김선민이 형루가 지도를 제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김순정·이원삼(金順丁·李元三) 사건"의 시말을 분석한 연구에서 형루가 지도를 제작하게 된 경과와 그 의미를 언급하기도 했다.[9] 위 두 연구를 통해 형루가 지도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탐사 과정, 지도와 관계된 청·조선 양국의 문헌 자료들은 상당 부분 탐구되었다. 다만 위 연구들은 지도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에 수록된 정보와 그것이 가진 의의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중앙민족대학에서 개최된 "중국 변강 민족 문제 학술 연토회(中國邊疆民族問題學術研討會)"에서 제광(齊光)이 형루의 지도를 중국 학계에 소개했다. 역사지리학자인 제광은 지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성경과 길림의 행정구역 분계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지도에 동봉된 한 건의 주접을 활용하여 짧은 요약문으로 지도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추후 따로 전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10] 요컨대 형루 지도의 존재

8 윤욱, 2013, 「朝淸關係史 연구에 있어서 滿文史料의 중요성에 관한 試論-滿文月摺包의 朝淸關係史 關聯 史料와 그 價値-」, 『역사학보』 218, 341~379쪽.

9 김선민, 2016, 「18세기 후반 청-조선의 범월문제와 경계관리: 金順丁·朴厚贊 사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 81~127쪽.

10 齊光, 2017, 「從滿文檔案看18世紀中期的淸朝與朝鮮邊境及盛京, 吉林烏拉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와 대략적인 내용 등은 각국의 학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지도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보충하여 역사지리학적인 시각과 연구 방법을 사용해 헝루 지도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Ⅱ장에서는 헝루 일행이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조사를 떠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서술했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은 주제인 성경과 길림 두 지역이 조선과의 국경 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건륭기에 이르러 청조가 압록강 상류 유역을 망각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헝루의 두 차례에 걸친 탐사 과정과 지도를 제작한 과정, 그리고 지도에 수록된 지리 정보에 대해 서술했다. 여기서는 헝루의 지도가 지닌 '지도제작사(History of Cartography)'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의 저본자료를 추적하고 동일 지역을 그린 다른 만·한문 지도들과 헝루 지도의 지리 정보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더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청조가 압록강 상류 지역을 소홀히 여기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는 압록강 상류 유역의 지형적·지정학적 환경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동안 만주 역사지리 연구에서 잘 언급되지 않은 '헐린산맥'에 주목하여 헐린산맥이 만들어낸 지리 조건이 성경과 길림 두 지역의 변경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그것이 청과 조선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將軍轄區的分界線」(提要), 『中國邊疆民族問題學術研討會資料集』(未刊), 269~270쪽. 제광은 당시 인민대학 청사연구소와 복단대학 역사지리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清史地圖集』의 편찬 과정 중에 지도를 발굴해 활용했던 것 같다. 『清史地圖集』은 2020년도에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華林甫·鄒逸麟 主編, 2020, 『清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未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성경길림분계도』의 제작 배경

건륭 26년(1761) 10월, 함경남도 삼수부(三水府) 갈파진 주변의 압록강 강변에서 김순정 등 여섯 명의 민인이 조선의 순찰병에게 체포되었다. 조선인의 범월은 조선의 중대한 과실이며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으므로, 조선 조정은 죄인들을 심문하기도 전에 일단 청측에 이 사실을 보고하기로 했다. 12월 23일, 조선은 예부로 자문(咨文)을 보내 황제의 관용을 구하는 한편 곧 죄인들을 심문하여 범월 여부를 밝힐 것이고, 실종된 이원삼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포하겠다고 약속했다.[11] 익년 2월 예부의 제본(題本)[12]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건륭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변경의 대신들이 단순히 보고를 빠뜨린 것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비교적 온화한 태도로 조선과 국경을 맞댄 성경과 길림의 두 장군에게 각각 성지를 내려 어째서 조선인의 범월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13]

그러나 건륭제의 기대와 달리 현지의 두 장군은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성경장군 칭보오(cingboo, 淸保)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가 알고 있기로 "성경의 관할 지역에서 조선과 변경을 마주한 지역은 오직 봉황성의 영역뿐"인데, 최근 봉황성에서 조선인의 범월을 보고해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성경의 경내에서 범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짧게 상주했다.[14] 칭보오는 군기처로부터 성지를 인수한 바로 다음날

---

11 『同文彙考』 原編 卷58 犯越10 我國人「馳報三水民犯越咨」, 건륭 26년 12월 23일.

12 "內閣大庫檔案" 077532「題報查明朝鮮國越境犯法之民人金順丁等七名有無在內地生事并逸犯李元三有無逗留另齎咨官所賞銀兩照例於戶部移取」, 건륭 27년 2월 24일.

13 『乾隆朝滿文寄信檔譯編』 3冊-249「寄諭盛京吉林二將軍著將朝鮮邊民越界一事查明具奏」, 건륭 27년 2월 26일.

14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80-1994-022「奏查盛京地方並無越界之朝鮮人摺」, 건륭 27년 3월 10일. "조사해보니, 성경의 관할 지역에서 조선과 국경을 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주접을 보냈으므로 그의 조사는 다소 성급하고 무성의한 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칭보오는 성경장군으로만 약 8년이나 재직한 베테랑 관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업무 처리에 공백이 많다는 지적이 장군아문 내에 제기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은퇴가 결정되어 북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15]

반면 이제 막 길림에 부임하여 순탄한 관도를 밟고 있던 헝루는 보다 주도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종실(宗室)의 일원인 헝루는 황제가 즉위한 이후 줄곧 길림 지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는지 모르지 않았다. 길림장군의 전체 관할 구역 중에 조선과 경계를 맞댄 영역은 모두 닝구타(ningguta, 寧古塔)와 훈춘(huncun, 琿春)의 소관이었으므로 헝루는 닝구타와 훈춘에서 최근 조선인의 월경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게 했다.[16] 사건의 조사는 대체로 훈춘의 관할에서 이루어졌다. 건륭 27년(1762) 3월 14일, 훈춘협령 덕두(dekdu, 德都)는 휘하의 순찰병들이 매해 두만강의 지류인 가하리 하구(gahari angga)에서 두만강 하구(tumen i angga)에 이르기까지 국경 지대를 순찰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조선인들이 월경한 사건은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했다.[17] 그러나 헝루는 덕두가 조사한 구간이 훈춘의 전체 관할 구역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두만강 하구를 넘어 동쪽의 수이푼 하구(suifun i angga)에 이르는 모든 구간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18] 3월 30일, 덕두는 관할 경내에 있는 모든 카룬

나는 곳은 오직 봉황성의 영역뿐입니다. 이 사이에 봉황성에서 전혀 조선의 변민들이 국계를 넘었다는 일을 보고한 바 없습니다(baicaci, mukden i harangga kadalara ba, coohiyan gurun de jecen acahangge, damu fuhacan hešen, ere sidende fuhacan hoton ci umai coohiyan gurun i jasei irgen jecen be dabaha sere baita boolanjiha ba akū).”

15 『高宗純皇帝實錄』 卷662, 건륭 27년 윤5월 1일; 『高宗純皇帝實錄』 卷662, 건륭 27년 윤5월 13일.

16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113~114쪽, 건륭 27년 3월 14일.

17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357~358쪽, 건륭 27년 3월 14일.

18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124~126쪽, 건륭 27년 3월 2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arun, 卡倫: 경계초소)의 관원들로부터 최근 조선인의 범월 사건이 결코 발생한지 않았다는 보증을 받아 보고했다.[19] 약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친 형루는 "최근 2년간 길림의 관할 경내에서 조선인의 월경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20]

두 장군이 모두 범월 사건이 일어난 적 없다고 주장하자 건륭제는 비로소 변경의 관원들이 사건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에서 죄인들의 범월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건륭제는 조선인들의 범월을 당연한 사실로 여겼다. 나아가 현장의 하급 관병들은 사건을 발각하였는데 상관에게 사실을 숨기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황제가 이러한 의심을 품게 된 가장 큰 근거는 스스로 사건을 보고해온 조선의 '정직함' 때문이었다. 그는 조선 국왕이 굳이 자신의 실책을 밝힌 것은 이미 사건이 발각되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21]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황급히 청조에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조선의 성심을 생각해보면, 양국의 서로에 대한 신뢰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고 하겠다.

범월을 확신하는 황제는 실찰(失察)의 죄가 어느 장군의 책임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예부에 조선의 함경도 삼수부 갈파진이 누구의 관할과 가까운지를 물

19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378~383쪽, 건륭 27년 3월 30일. 건륭 27년 시점을 기준으로 훈춘 경내에는 훈 춘성 바로 근처에 묵더허(mukdehe)와 미잔(mijan)의 두 카룬이 있었고, 두만강 하구의 다이두(daidu) 카룬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수이푼 하구까지 시투(situ), 훌라무(hūlamu), 투라무(turamu), 몽고(monggo) 카룬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건륭기 훈춘 일대의 카룬에 관하여 김선민, 2016, 앞의 글, 115~116쪽; 徐少卿, 2014(4), 「基於《琿春副都統衙門檔》的琿春協省略體系復原(1736~1860年)」, 『北方文物』, 86~91쪽; 徐少卿, 2014, 「清代東北巡防體系研究」,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10~22쪽 등을 참조.

20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2-0032, 건륭 27년 4월 7일.

21 『乾隆朝滿文寄信檔譯編』 3冊-281, 「諭吉林將軍恒祿著務將朝鮮邊民越界一事查明具奏」, 건륭 27년 4월 2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22] 그러나 예부라고 해도 함경도 정도를 들어봤을 뿐 갈파진 같은 작은 성의 위치를 알기는 어려웠다. 예부는 자신들이 가진 제한된 정보에 근거해서 '조선의 함경도가 관할하는 땅은 길림과 가깝다'고 모호하게 답할 뿐이었다.[23] 당시 예부가 함경도라는 지명을 접할 만한 사안이란 대체로 회령과 경원에서 열린 개시와 관련된 것이며 두 지역의 개시는 모두 길림장군의 관할 아래에 있는 닝구타와 훈춘에서 담당했으므로, 예부는 함경도의 건너편이 길림 지역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인식했던 것 같다.

어쨌든 조정에서 조선을 가장 잘 아는 부서는 예부였으므로, 황제는 예부의 의견에 근거해 길림장군을 다시 다그쳤다. 예부의 소견을 듣고 다급해진 헝루는 훈춘협령에게 재조사를 명령했다.[24] 협령 덕두는 지난번 여러 카룬의 관원들로부터 받았던 보증이 여전히 틀림없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훈춘 경내의 모든 촌락과 사람이 숨을 만한 궁벽한 곳을 모두 직접 수색해보았으나 최근 조선인이 월경한 흔적도, 도망친 이원삼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25]

이번에는 지난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닝구타부도통의 관할 구역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건륭 25년(1760)에 훈춘성 서쪽의 후지(hūji), 부르하툰(burhatun), 하일란(hailan) 등지를 "10월 연위(演圍)의 위장(圍場)"[26]으로 구획하면서 가하리하의 서쪽은 닝구타에서 관할하게 되어,[27] 지난 훈춘협령의 조사

22 『乾隆朝滿文寄信檔譯編』 3冊-277, 「諭禮部堂官著將朝鮮邊民越界一事查明具奏」, 건륭 27년 4월 16일.

23 『乾隆朝滿文寄信檔譯編』 3冊-281, 「諭吉林將軍恒祿著務將朝鮮邊民越界一事查明具奏」, 건륭 27년 4월 24일.

24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153~154쪽, 건륭 27년 5월 16일.

25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409~413쪽, 건륭 27년 5월 21일.

26 만주어로는 10월에 행해지는 위렵(圍獵)을 가리켜 "군사를 훈련시키고, 황제의 입에 오르는 제작(祭胙)의 위렵(cooha urebume, dele angga de isibume amsun i aba)"이라고 불렀다. 10월 위렵은 한 해의 농사일이 모두 끝난 뒤인 10월 말 소설(小雪)을 전후로 약 20일간 거행되었고, 위렵에서 획득한 사슴 꼬리와 내장 등의 물품은 모두 내무부(內務府)에 귀속되어 황실에서 소비되었다.

27 『琿春副都統衙門檔案』 권5, 69~70쪽, 건륭 26년 10월 6일; 『琿春副都統衙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제외되었다. 게다가 가하리하의 서쪽에는 평소에 카룬을 두지 않으므로 "수시로 조사하고 순찰하는(erin akū baicame giyarire)"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과거 건륭 11년(1746)에 길림장군 아란타이(arantai, 阿蘭泰)의 건의로 훈춘의 주변부와 두만강 강변, 동부 해안 지대에 "상설 카룬(enteheme tebuhe karun)"들을 추가로 설치했지만,[28] 훈춘 일대에 설치된 여러 카룬들은 모두 닝구타와 훈춘에서 수이푼 삼장의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

그림 1 훈춘 주변의 카룬과 닝구타·훈춘의 관할 범위

* 참고자료: 徐少卿, 2014(4), 86~90쪽.

檔案』 권5, 124~126쪽, 건륭 27년 3월 24일.

28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298-0032, 건륭 11년 8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기 위한 것이라서 모두 가하리하의 동쪽에만 설치되어 있었다(그림 1). 가하리하의 서쪽은 인삼이 나지 않아 도삼인들이 유입될 위험이 적었기 때문에, 카룬을 두지 않고 닝구타의 관병들이 때때로 순찰하는 정도로 그쳤다. 인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조선인들이 범월했을 가능성도 적다는 뜻이겠지만, 헝루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 따로 인원을 보내 혹여 가하리하의 서쪽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했다.

닝구타좌령 허샨(hešan, 赫善)과 훈춘좌령 더성거(dešengge, 德僧阿) 두 사람이 부르하툰의 위장을 경유해 함경도 회령부의 건너편에 도착했고, 회령부사를 만나 범월 사건에 대한 정보와 갈파진의 위치를 물었다. 회령부사는 "삼수부의 갈파진이라는 곳은 백두산의 서쪽 3~4일 노정의 끝에 있으며, 그곳은 성경 관할 땅의 건너편이다. 회령과는 1,500여 리 떨어져 있다"[29]라고 답해주었다. 허샨 등은 회령부사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회령성의 서쪽으로 백두산을 향해 "길림장군 관할의 서쪽 끝"에 도달하기까지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혹여 강변에 갈파진이라는 곳이 있지 않은지를 수색했다. 이들은 "백두산 동쪽의 조선의 마지막 성"(함경북도 무산진으로 추정된다.)에 도달해 그곳의 조선 관원들에게 물었더니 회령부사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대답했다. "우리들은 함경북도에서 관할하는 성이다. 이 성이 곧 함경북도의 서쪽 끝이며 백두산으로부터 첫 번째 성이 틀림없다. 우리 함경북도에는 삼수부 갈파진이라는 곳이 없다."[30] 두 좌령은 주변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백두산에 이르도록 조선의 다른 성보나 촌락이 강변에 없는 것을 눈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야 복귀했다. 며칠 뒤 도

29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4-0021, 건륭 27년 윤5월 6일. "san šui fu i giya I po jeng sere ba, šanyan alin i wargi ilan duin inenggi on i dubei mukden i harangga ba i teisu bi, hūi ning fu ci giyalabuhangge emu minggan sunja tanggū ba funcembi"

30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4-0021, 건륭 27년 윤5월 6일. "be, hiyan ging doo i amargi goloi harangga hoton, ere hoton uthai goloi wargi dube, šanyan alin i da i hoton inu, meni amargi golo de umai san šui fu i giya I po jeng sere ba ak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착한 훈춘협령의 최후 조사 결과도 동일했다. "백두산의 동쪽으로 두만강 남안을 따라 조선의 성보 20여 개가 있지만 그중에 삼수부나 갈파진이라는 이름의 성은 없습니다."[31] 복수의 경로로 백두산 동쪽 두만강 강변에는 갈파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형루는 확신에 찬 어투로 황제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 **백두산의 동쪽, 두만강의 북안은 모두 닝구타와 훈춘의 관할 지역입니다.** 산과 봉우리가 험준한 땅일 뿐 아니라 인삼이 생산되는 산과 가깝기 때문에 몇백 리에 이르도록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강의 남안은 모두 조선의 성과 촌락입니다. **백두산의 서쪽, 압록강의 북안은 성경이 관할하는 땅이며 강의 남안은 곧 조선의 땅입니다.** 지금 훈춘협령 덕두와 좌령 허샨, 더셩거 등이 각기 보고해온 것에 따르면, 신 저희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건너편인 백두산의 동쪽 두만강 강변에는 삼수부와 갈파진이라는 성이 결코 없습니다.[32]

형루의 조사는 체계적이고 상세하여 믿을 만했으므로 황제의 시선은 다시 성경으로 향했다. 칭보오가 북경으로 돌아간 뒤 장군직을 대리하고 있던 성경형부시랑 조전(朝銓)과 부도통 부얀달라이(buyandalai, 布顔達賴) 두 사람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는 여전히 길림의 관원들에 비해 그다지 면밀

31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4-0021, 건륭 27년 윤5월 6일. "šanyan alin i dergi tumen ula i julergi dalin be dahame coohiyan gurun i hoton orin bi, ere orin hoton dorgide umai san šui fu, giya I po jeng sere gebungge hoton akū."

32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4-0021, 건륭 27년 윤5월 6일. "**šanyan alin i dergi, tumen ulai amargi dalin gemu ningguta, huncun i harangga ba,** alin hada haksan hafirhūn baci tulgiyen, orhoda tucire alin de hanci ofi, ududu tanggū ba de isitala niyalma tehekūbi, julergi dalin gemu coohiyan gurun i hoton, gašan tokso, **šanyan alin i wargi, yalu ula amargi dalin mukden i harangga ba, julergi dalin uthai coohiyan gurun i ba,** ne gūsai da dekdu, nirui janggin hešan, dešengge se teisu teisu boolaha bade, aha meni harangga kadalaha ba i teisu, šanyan alin dergi, tumen ulai dalin de, umai san šui fu, giya I po jeng sere hoton ak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지 않았다. 조전은 봉황성수위(鳳凰城守尉)에게 문서를 보내 함경도 삼수부의 위치를 아는지 묻거나, 마침 성경성에 머무르고 있던 황영협령(荒營協領: 성경위장의 관원)과 웅악성수위(熊岳城守尉)를 불러 같은 질문을 했을 뿐이었다. 조선의 사무와 관계가 없는 위장과 웅악성의 관원이 조선의 지리를 알 리 없었고, 봉황성에서도 현지의 노인들과 통사(通事)들에게 조사하여 물어봤으나 조선의 지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는 답변을 보내왔다.[33] 결국 조전은 조선의 삼수부와 함경도라는 땅이 어느 지역의 맞은편에 있는지 조사한 증거가 성경에 없다며 자신 없는 투로 상주했다.[34]

성경장군 칭보오와 시랑 조전의 조사 방식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성경의 관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점은 조선과의 국계를 오로지 "봉황성의 관할"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Ⅳ장에서 후술하는 것처럼 전체 압록강 유역 중에서 봉황성이 담당하는 구간은 동가강(佟佳江) 하류 서안의 '관전(寬甸) 6보(堡)' 지역과 압록강 하류 유역뿐이었고 압록강의 중상류 유역은 봉황성이 아닌 흥경성과 개원성의 순찰 범위에 속했다. 길림의 관원들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과 달리 성경의 변경 관리에는 적잖은 공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오래 근무한 칭보오조차도 조선과의 국경 지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공백은 일부 관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 지방의 구조적인 폐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지역의 국경 관리 상태에 이러한 차이가 있던 것에는 양쪽 모두에 원인이 있었다. 먼저 길림에서 관할하는 두만강 유역은 당시 청조의 최대 인삼 산지인 우수리·수이푼 삼장이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 건륭 10년(1745)을 전후로 남해(南海, juleri mederi: 훈춘 동쪽의 연해지방)와 덕덩기

33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79-1951-013, 「奏報朝鮮民人越界摺」, 건륭 27년 6월 17일.

34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5-0039, 건륭 27년 6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ekdenggi: 우수리강의 중류 유역) 일대에 횡행하던 도삼 조직을 뿌리 뽑는 것이 동북의 중대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이때 닝구타와 훈춘 일대의 카룬과 순찰 체제가 한 차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35] 길림의 관원들이 자신들의 관할 영역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 압록강 중상류 유역과 그 주변부는 동가강 상류에 얼민·할민(elmin·halmin) 삼장이 있을 뿐(그마저도 강희 말기 이후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가치가 퇴색되었다), 그 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만한 요인이 없었다. 게다가 압록강 중상류 지역은 지세가 험요해 왕래가 쉽지 않았고, 강 건너편 역시 '폐사군(廢四郡)' 지역으로 조선인들마저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땅이었다. 요컨대 청조의 입장에서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가기도 어렵고, 딱히 공을 들여 지킬 필요도 크지 않은 곳이었다. 이에 비해 압록강 하류 유역은 다양한 이유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봉황성 바로 앞의 관전 지역은 과거 명 말기까지만 해도 농지로 사용되었던 땅이라 개간이 용이했고, 압록강 하구의 주변은 목재가 풍부하고 해운 교통이 유리해 도벌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산동과 요서, 직예의 해안으로부터 배를 타고 오는 도삼(盜蔘) 조직들이 육로의 감시망을 피해 압록강의 물길을 따라 동가강 유역의 삼장으로 침투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36] 이러한 이유로 압록강 하류 유역은 청과 조선 양국 모두로부터 범죄자들의 유인력이 컸고, 자연히 봉황성의 관련 사무는 번잡해졌다. 성경의 관원들이 조선과의 국계를 오로지 "봉황성의 관할"로만 이해하고,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던 것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김순정의 범월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공백 상태 때문에 발

35 건륭기 청조의 남해, 덕덩기 관리 정책과 카룬의 정비 과정은 徐少卿, 2014, 앞의 글, 52~53쪽; 聶有財, 2017, 『淸代琿春"南海"海疆研究』, 吉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등을 참조.

36 옹정말-건륭초기까지 "망우초(莽牛哨)"를 둘러싼 논쟁은 당시 압록강 하류 지역에 만연한 도삼 범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선민, 2011, 「雍正-乾隆年間 莽牛哨事件과 淸-朝鮮國境地帶」, 『중국사연구』 71, 69~97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의 관원들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마침내 황제의 분노가 폭발했다. 황제는 두 장군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힐책하고 두 대신이 직접 조선의 변경으로 가서 삼수부의 갈파진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이 성경과 길림 중 누구의 관할인지를 확인하라고 명령했다.[37] 이로써 길림장군 형루의 국경 지대 탐사가 시작된다.

Ⅲ. 압록강 탐사와 지도의 제작

1. 형루의 탐사 노정

형루 일행이 압록강변을 탐사한 여정을 서술하기에 앞서 강조해야 할 점은, 당시 이들의 탐사 목표는 기존에 정해지지 않은 분계선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불확실한 분계를 재확인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성경과 길림의 관원들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산의 서쪽인 압록강 유역은 성경의 관할이고 산의 동쪽인 두만강 유역은 길림의 관할이라는 사실을 공인하고 있었다. 길림의 관원들이 백두산의 동쪽, 즉 두만강 강변에 갈파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전력했던 것이나, 성경형부시랑 조전이 휘하 관원들에게 갈파진의 위치를 조사할 때 그곳이 "백두산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38] 물었던 사실 등이 이것을 증명한다. 요컨대 형루 일행의 탐사는 조선인들이 범월한 삼수부 갈파진이 백두산의 서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다.

---

37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18-009-000031-0001,「爲朝鮮國逃人越境著恒祿布彦達賴親赴朝鮮邊境詳查具奏並飭地方官嚴緝朝鮮國逃人亦著盛京吉林將軍查明回奏事」, 건륭 27년 7월 2일;『大清高宗纯皇帝实录』卷666 건륭 27년 7월 2일.

38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5-0039, 건륭 27년 6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헝루의 1차 탐사는 길림장군의 관할에서 시작되었다. 건륭 27년 8월 15일, 헝루는 닝구타의 남쪽에서 부얀달라이를 만나 함께 회령으로 향했다.[39] 이들이 먼저 회령을 찾았던 것은 아마도 회령부사가 일전에 갈파진이 압록강의 남안에 있다고 진술했던 것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회령부사는 이전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삼수부는 백두산의 서남쪽인 압록강의 동쪽에 있다"고 대답했다.[40] 두만강변에 갈파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압록강으로 가기로 했다. 그들은 일단 길림장군의 치소인 기린울라(girin ula, 吉林烏拉) 성으로 복귀한 뒤, 성경장군의 관할지역인 유조변의 왕청변문(汪清邊門, 舊 興京邊門)으로 출발했다.

헝루 일행이 회령에서부터 압록강 강변으로 가기 위해 선택한 노선을 주목해보자. 이들은 우선 기린울라로 복귀한 뒤 다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흥경(興京) 관할의 왕청변문으로 갔다. 그리고 왕청변문을 나가 압록강 중류 유역에 도달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갈파진을 수색했다. 오늘날의 교통로를 고려하면 과도하게 먼 길을 우회하는 경로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백두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이들이 회령에서 바로 압록강 상류로 가지 못하고 기린울라에 복귀한 것까지는 수긍이 된다. 그러나 만약 기린울라에서 곧장 남쪽을 향해 가서 송화강 상류를 통해 백두산으로 간 뒤 압록강을 따라 내려오며 갈파진을 찾았다면 비교적 빠르게 갈파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송화강 상류의 너연(neyen, 訥殷) 지방을 거쳐 백두산에 오르는 이 노선은 과거 강희 16년(1677)에 내대신(內大臣) 우머너(umene, 吳默訥)가 황명으로 백두산을 탐사하러 갔을 때 부트하 울라의 생정(牲丁)들과 함께 개척했던 길이다.[41] 또한 후술하

39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7-0028, 건륭 27년 7월 9일.

40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78-0027, 건륭 27년 9월 1일, "san šui fu, šanyan alin i wargi julergi yalu ulai dergi ergide bi,"

41 우머너의 백두산 탐사에 관하여, 이훈, 2014, 「청 초기 백두산 탐사와 황제권」, 『동양사학연구』 126, 235~275쪽 참조. 기린울라에서 백두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영고탑지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듯이 당시 헝루 일행은 아무런 사전 준비나 정보 없이 탐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문에 소장되어 있던 꽤 자세한 길림 지도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길림에서 백두산으로 바로 가는 길을 몰랐을 리는 없다.

헝루 등이 이렇듯 먼 우회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갈파진이 그렇게까지 압록강의 상류에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갈파진이 어디쯤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고도가 높은 백두산에서부터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보다 고도가 낮은 압록강 중류에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갈파진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둘째, 왕청변문에서 출발하여 동가강의 하원을 지나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노선은 과거 강희 50년(1711)에 묵던이 백두산을 탐사할 때 개척한 길이었다.[42] 묵던의 탐사 이후 청의 삼부(蔘夫)들은 계속 그 길을 사용했을 것이고, 성경의 관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익숙한 길이었을 것이다.

셋째, 이들의 탐사 목표가 결국 '갈파진의 건너편이 성경의 관할'이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었으므로, 성경 지역에서 길을 떠나야 마땅히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당대인들의 암묵적인 상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곳이 성경의 관할로 구획되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애초부터 길림에서는 도달하기 어렵고 성경의 경내에서 교통이 통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왕청변문을 탐사의 출발지로 정한 것 역시 그곳이 바로 성경장군이 발급하는 얼민·할민의 삼표(蔘票)를 가진 삼부(蔘夫)들이 인삼을 캐러 가는 출발 지점이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9월 중순, 헝루와 부얀달라이는 한인 삼부를 길잡이로 삼아 왕청변문을 나섰고 삼부들이 사용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 압록강으로 갔다. 먼저 동가강 상류의 얼민·할민 삼장을 지나 10월 3일에 풀기얀 하다하(fulgiyan hada bira, 紅石拉子河)의 하원에 도착했고, 마할라산(mahala alin 또는 mao el šan, 帽兒山)의

42 이화자, 2024, 앞의 글, 38~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개를 넘어 압록강 중류 유역의 두도구(頭道溝)에 도달했다. 이후 그들은 압록강 북변의 골짜기들을 하나씩 관통하며 삼도구(三道溝)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뜻밖에도 평안북도 강계에서 담비 가죽을 찾아 범월한 박후찬 등 조선인 여덟 명을 체포하게 된다.[43] 10월 중순, 형루 일행은 오도구(五道溝)에 도착했지만 비와 눈이 내리고 길이 얼기 시작해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조선이 강변에 설치한 파수(把守)들은 날이 추워지자 모두 철수했고, 조선의 다른 성보나 민가도 보이지 않아 갈파진의 위치를 물을 수 없었다. 10월 27일, 형루 등은 결국 탐사를 중단하고 복귀를 결정하기로 한다.[44] 건륭제는 임무에 실패한 형루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이듬해 봄에 다시 탐사할 것을 명령했다.[45]

익년 3월, 형루의 2차 탐사가 시작되었다.[46] 형루 일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왕청변문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갈파진을 찾기로 했다. 지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갈파진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백두산에 붙어 있어서 압록강 중류에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너무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압록강의 북변에는 백두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헐린 다바간(helin dabagan, 黑林嶺, 이하 '헐린산맥')이 압록강과 평행을 이루며 동서로 뻗어 있다. 이 산맥에서 내려와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하천들이 바로 두도구 이하 십이도구까지 'N도구'로 명명된 '열두 계곡(juwan juwe holo)'이다. 지난해의 실패를 통해 형루는 헐린산맥 남면은 경사가 급하고

---

43 박후찬의 범월과 연이은 도주 사건은 열두 계곡 지역에 대한 청조의 몰이해와 무방비 상태를 보여주며, 반대로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박후찬 일행의 도주와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김선민, 2016, 앞의 글, 106~107쪽.

44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81-0043, 건륭 27년 11월 4일.

45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18-009-000031-0002「爲恒祿等巡邊拿獲越境之朝鮮國捕貂人復令脫逃看守兵丁著枷責革退恒祿等交部察議行文並朝鮮國緝拿逃犯治罪事」, 건륭 27년 11월 12일.

46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80-2011-029,「奏起程去朝鮮邊界交涉倒賣人蔘案件將印務交副都統傅良署理折」, 건륭 28년 2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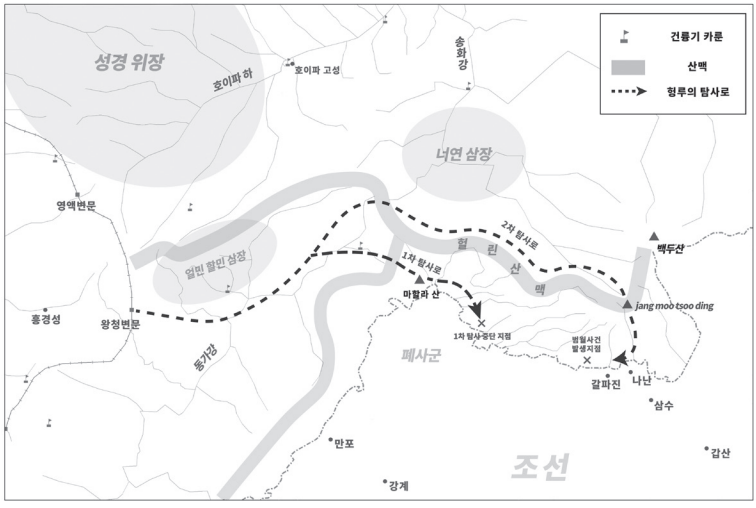


그림 2 헝루의 1, 2차 압록강변 탐사 노정

(지도에 표시된 건륭기 변내외 카룬에 대해서는 이 글 Ⅳ장의 〈그림 8〉에서 상술)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완만한 헐린산맥의 북면을 따라 백두산 근처까지 충분히 간 뒤에 산맥을 넘어 압록강 상류 유역에 도달하고,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갈파진을 찾기로 했다. 송화강 상류 너연 지역에서 산맥을 넘어 곧장 압록강 상류로 가는 이 길은 그동안 청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노선이었다(그림 2).

4월 19일, 헝루 일행은 백두산 서남쪽의 장무초정(章茂草頂, jang moo tsoo ding)[47]이라는 봉우리를 넘어 십이도구(십사도구의 오류)[48]의 하원에 도착했고,

47 백두산 서남쪽 망천아(望天鵝, 해발 2,051m)를 가리킨다. 헝루 일행은 봉우리 서쪽의 능선을 통해 산맥을 넘었지만, 현재는 그보다 더 완만한 망천아 봉우리의 동쪽 능선으로 산맥을 건너 지금의 길림성 장백현(長白縣)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더 보편화되어 있다.

48 나난성은 실제로는 십이도구가 아닌 십사도구의 하원에 있다. 이러한 착오는 헝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압록강변으로 내려가자 강 건너에 조선의 나난성(羅暖城)이 있었다. 4월 22일, 헝루는 다시 서쪽으로 강을 따라 내려가 십일도구(십삼도구의 오류)의 하구에 있는 갈파진에 도착했고, 마침내 갈파진의 관원들로부터 김순정의 범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49] 헝루는 황제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며 지역의 정찰에 실패하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전임 장군 칭보오와 부도통 부얀달라이를 논죄해야 한다고 탄핵했다.

2. 지도의 제작 과정과 수록 정보

헝루는 갈파진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황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 한 장을 그려 보냈다. 황제가 먼저 지도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안 자체가 지리와 관련된 것이고, 본래부터 지도 보기를 좋아하는 황제의 기호를 알았기 때문에 헝루가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 준가르(準噶爾)와 회부(回部), 면전(緬甸), 대소금천(大小金川) 등 건륭기에 있었던 여러 전역 때마다 그랬듯이 건륭제는 대신들이 주접과 함께 보낸 지도를 보면서 원거리에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지도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오류를 발견할 경우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도에 근거해 진격로를 정해주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50] 이번에도 건륭제는 헝루가 보낸 지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돌려보내며 그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가 두도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계곡을 센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 역순으로 계곡의 수를 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청인들은 십이도구 뒤로 계곡이 더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헝루는 자신들이 산맥을 넘어 내려온 십사도구를 마지막 계곡인 십이도구라고 잘못 생각했다.

49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90-0039, 건륭 28년 4월 23일.

50 『高宗純皇帝實錄』 卷588, 건륭 24년 6월 6일; 卷590, 건륭 24년 윤6월 1일; 卷617, 건륭 25년 7월 25일; 卷770, 건륭 31년 10월 1일; 卷920, 건륭 37년 11월 1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탐사한 경로와 두 지역의 분계선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라고 명령했다.[51] 헝루가 1차로 그려 보낸 바탕 지도 위에 첨지와 주기가 덧붙여진 형식의 『성경길림분계도』는 이러한 과정으로 제작되었다.[52]

이 지도는 가로가 세로보다 약간 더 긴 장방형이며 현재 이미지 파일이나 마이크로 필름으로만 열람이 가능해 실제 크기를 알 수 없다. 지도의 방위는 동시대에 만주 지역을 그린 다른 여러 지도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뒤집힌 '상남하북(上南下北)'의 구도로 되어 있다. 지도의 포괄 범위는 남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중상류 유역과 두만강 상류, 서쪽으로는 위원보변문에서 왕청변문까지의 유조변 일선, 북으로는 위원보변문에서 기린울라로 향하는 역참로 일선, 동쪽으로는 길림장군의 직할 지역과 닝구타부도통 관할 구역의 분계가 되는 영거 다바간(yengge dabagan. 英額嶺) 일선에 해당한다. 지명과 주기는 모두 만문으로 표기되었고, 지도의 좌측 상단에 지도의 표제가 역시 만문으로 적혀 있다(지도의 이미지는 이글 말미에 모사본으로 게재).

헝루는 이 지도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장군아문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지도를 저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헝루의 지도에는 그가 답사한 압록강 유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송화강 유역이나 호이파하 유역 등 길림장군 관할 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헝

51 『乾隆朝滿文寄信檔譯編』 4冊-462, 「寄諭吉林將軍恒祿著將赴朝鮮邊界勘查路線於圖上貼籤奏覽」, 건륭 28년 5월 14일.

52 이 지도는 오늘날 일당관의 "軍機處錄副奏摺"에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가 내무부(內務府) 조판처(造辦處)의 여도방(輿圖房)이나 병부의 직방청리사(職方淸吏司) 등 지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문에 들어가지 않고 군기처에 소장된 것은 그것이 본디 주접과 한 세트로 만들어진 지도였기 때문이다. 청조의 주접 보관 제도에 따르면, 황제가 비답(批答)하여 작성자에게 보낸 원접(原摺)이 황궁으로 반송('繳回')되면, 먼저 군기처에서 주접의 복사본('錄副奏摺')을 만들어 월별로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고('月摺包'), 황제의 주비가 담긴 원접은 주사처(奏事處)로 보내 비장(秘藏)시켰다('朱批奏摺'). 만약 헝루의 사례처럼 주접에 지도나 청단(淸單, getuken afaha), 청책(淸冊, getuken cese) 같은 참고 자료들이 동봉되면, 참고 자료들은 추후의 참고와 증빙을 위해 부접(副摺)과 짝을 맞추어 월접포에 수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루가 현장에서 아무런 배경자료 없이 이렇게 세밀한 지도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루는 탐사를 떠나면서 길림장군의 관할 지역 전체를 꽤 자세하게 담은 지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탐사를 마친 뒤 그것을 일종의 백지도(blank map)로 삼아 그 위에 자신의 조사 결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경길림분계도』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의 조사 범위에 한하여, 형루가 소지한 저본 지도란 마찬가지로 "녹부주접"에 수록된 『장백산휘발성형세도(長白山輝發城形勢圖)』(이하 『장백산도』로 약칭),[53] 혹은 그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어떤 지도로 추정된다. 『장백산도』는 형루의 지도와 달리 지도가 주접 원건에서 분리되어 있고, 지도에 제목이나 주기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지도의 발송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이 지도를 그렸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도의 포괄 범위와 구도, 산맥과 하천의 형세, 화법 등이 형루의 지도와 거의 일치하여 두 지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당관은 『장백산도』가 "건륭 27년"에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 일당관의 분류가 맞는다면 이 지도는 앞서 인용한 건륭 27년 6월 17일에 성경형부시랑 조전이 작성한 주접의 부도(附圖)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전은 갈파진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건륭 23년(1758)에 길림장군의 지역에서 얼민·할민의 "삼표를 시행하는 일 때문에 그렸던 지도를 다시 따라 그렸습니다. 살펴보시도록 함께 상주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54] 그의 주접에는 지도가 빠져 있으나, 마침 같은 해 다른 달의 월접포에 『장백산도』가 들어

53 이 제목은 일당관에서 임의로 붙인 것으로 지도 원본에는 따로 표제가 적혀 있지 않다. 지도의 크기는 세로 85.5cm 가로 80cm이다.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80-1997-027, 「長白山輝發城形勢圖」, 건륭 27년.

54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79-1951-013, 「奏報朝鮮民人越界摺」, 건륭 27년 6월 17일, "abkai wehiyehe i orin ilaci aniya de girin ula i jiyanggiyūn i baci, elmin halmin i bade temgetu bithe yabubure jalin nirufi benjihe nirugan be songkoi dasame nirugan nirufi suwaliyame gingguleme tuwabume wesimbu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으므로 정황상 조전의 주접과 『장백산도』가 본래 한 세트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55]

그러나 『장백산도』를 조전이 만든 것이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건륭 23년의 지도를) 따라 다시 그려 보낸다"라고 했으므로 이 지도 역시 과거의 다른 지도를 저본으로 사용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전이 언급한 "건륭 23년의 지도"란 흠차부도통 푸깅(fuging, 傅景)이 송화강 상류의 너연 지방에서 새로운 삼장을 개방하기 위해 백두산 주변부를 조사한 뒤 그린 지도를 가리킨다. 푸깅의 지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그가 작성한 주접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그의 지도는 조전의 『장백산도』나 헝루의 『성경길림분계도』와 거의 동일한 범위를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푸깅은 지도를 통해 새로 개방할 삼장의 주변부, 즉 백두산 이북의 호이파하-송화강 상류-영거산맥 일대의 지리를 황제에게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56] 이렇듯 당시 성경과 길림 지방에서는 지리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몇 년 간격으로 유사한 지도들이 연달아 제작되었으며, 헝루 역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성경길림분계도』를 만들었다.

『성경길림분계도』에 표기된 지명은 총 171개로 ① 인문·행정지명(邊門, 城市, 驛站 등), ② 자연지명(河川, 山林 등), ③ 주기(注記)의 세 종류로 나뉜다. 주기는 헝루가 황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탐사 과정이나 성경·길림의 분계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첨지를 붙여 표기한 것이다(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이 글 말미의 [부록]으로 게재). 헝루의 지도는 "황여전람도" 계열의 전국지도는 물론이고, 『길림구하도』나 『흑룡강유역도』, 『오라등처지방도』, 『영고탑지도』, 『성경

55 일당관은 『장백산도』가 "건륭 27년 12월의 월접포"에 담겨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지도의 작성일자는 "건륭 27년"까지만 비정했다. 일당관이 보기에 그것이 반드시 12월에 작성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던 것 같다.

56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77-1687-027, 「奏報於二道江一帶挖蔘無關長白山風水及設卡查禁偷蔘者折」, 건륭 23년 3월 16일;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77-1687-029, 「奏報遵旨赴烏蘇里德克登吉等處巡查私挖人蔘事宜折」, 건륭 23년 3월 16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지전도』 등 만주 지역만 따로 그린 지방 지도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자세한 지리 정보를 수록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지도들이 모두 송화강과 호이파하 유역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시점인 강희 연간에 제작되었던 것과 달리,[57] 형루의 지도는 유조변 안팎을 관리하는 여러 정책이 성숙되고 만주의 지리 정보가 충분히 갖추어진 건륭 중기에 제작되어 지리 정보의 정확도 역시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형루의 지도는 오늘날 보존된 수량이 비교적 많은 만청(晩淸) 시기의 만주 지도들과, 보존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청 초기의 만주 지도를 계통적으로 연결해주는 중간 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지도가 담고 있는 여러 정보 가운데 가장 귀중한 정보는 형루가 지도를 제작한 목적이기도 한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의 관할 분계'에 대한 것이다. 형루는 지도와 함께 보낸 주접에서 "헐린산맥의 북쪽과 산툰하(santun bira, 三屯河)의 동쪽은 길림 관할이고, 헐린산맥 남쪽의 열두 골짜기와 압록강 강변은 모두 성경 관할이다"라고 적시했다.[58] 지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헐린산맥의 북사면과 남사면에 각각 "북면은 길림의 관할", "남면은 압록강에 이르도록 100여 리. 성경 관할"이라는 주기를 적었고, 산툰하의 좌우에는 "동변은 길림의 관할", "서변은 성경의 관할"이라는 주기를 적었다([부록] 참고). 그리고 지도 곳곳에 만주어로 "허션(hešen, 界址)"[59]이라고 적은 첨지를 붙여 두 지

57 『길림구하도』나 『흑룡강유역도』, 『오라등처지방도』 등은 모두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된 강희 28년(1689)을 전후로 제작되었다. 『영고탑지도』, 『성경여지전도』 등은 강희 25년에 설치되고 36년에 철폐된 "관방변문(寬邦邊門)"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아, 강희 25년에서 36년 사이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여전람도』는 강희 50년대에 간행되었으며 이후 옹정기와 건륭기에 재간되었지만 성경과 길림 일대의 지리 정보는 강희기의 초판을 그대로 답습했다.

58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80-2030-029, 「奏呈覽中朝邊界地圖摺」, 乾隆 28년 5월 24일 "helin dabagan i boso ergi, santun bira i dergi dalin girin i ula harangga ba, helin dabagan i antu ergi juwan juwe holo, yalu ula gemu mukden iharangga ba,"

59 만주어 hešen은 본래 "그물의 벼리(綱)"라는 뜻이지만, 돌(wehe), 비석(camhari), 봉퇴(buktan) 등의 명사와 결합하여 "계지(界址)"를 뜻하기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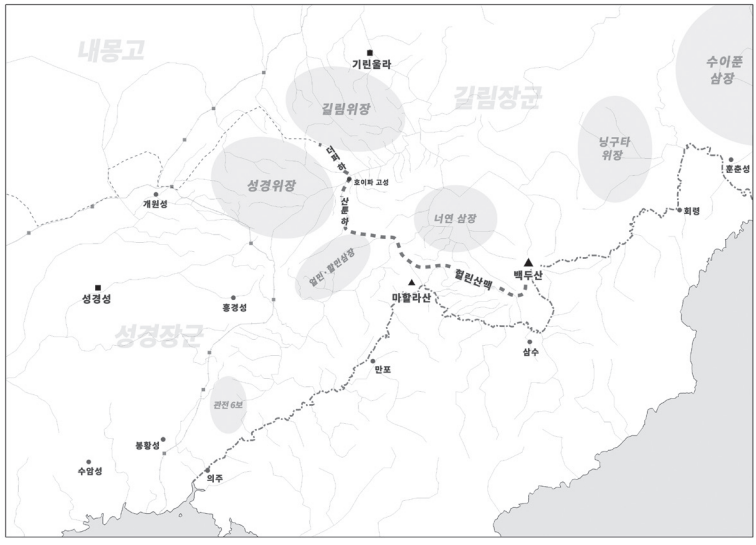


그림 3 『성경길림분계도』에 표시된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의 관할 분계선(굵은 점선)

* 주(註): 더퍼하 이북의 분계선(가는 점선)은 임옥설의 연구와 담기양의 지도를 참고하여 보충했다.

역의 분계점을 보다 상세하게 표시했다. 이 분계점은 백두산 서쪽 헐린산맥의 산줄기를 따라 4개, 산툰하 수원에 1개, 호이파성 북쪽의 더퍼하(defe bira, 德佛河)의 하구와 수원에 각각 1개씩 총 7개가 찍혀 있다. 헐린산맥의 산줄기와 산툰하, 더퍼하 두 하천의 강줄기, 그리고 7개의 분계점을 모두 연결해 선으로 만들면 건륭기 당시의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의 분계선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3).

헐린산맥과 산툰하, 더퍼하 등 세 지형지물이 성경과 길림의 분계를 이루게 된 것에는 모두 각자의 배경이 있다. 다만 산툰하-더퍼하 구간은 과거에 임옥설(任玉雪)이 성경위장과 길림위장의 분계선을 복원한 연구에서 이미 상세히 다

이하 이 글에서는 '분계점'으로 번역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룬 바 있으므로,[60] 이 글에서는 김순정의 범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구간인 헐린산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하 Ⅳ장에서는 헐린산맥이 어떠한 이유로 두 지역의 분계선이 되었고, 또 이 산맥의 지리 조건이 두 지역의 변경 지대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이 청조가 건륭기에 이르러 압록강 상류 유역을 '망각'하게 된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Ⅳ. 헐린산맥과 '열두 계곡'

헐린산맥은 『황여전람도』에 'heliyen dabagan', 『건륭내부여도(乾隆內府輿圖)』에 '흑림달바한(黑林達巴漢)'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방지에는 『성경통지(盛京通志)』(건륭 43년)에 '분수령(分水嶺)'이라는 지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 분수령. (기린울라)성 남쪽 800여 리에 있으며 흑림령(黑林嶺)이라고도 한다. 장백산의 남쪽 기슭의 줄기가 서북쪽으로 굽이치며 뻗어 간다. 3개의 샘이 산맥의 골짜기에서 솟아나오니, 곧 동가강의 하원이다."[61]

『성경통지』의 서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헐린'이라는 지명은 어떤 하나의 봉우리나 고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백두산에서부터 동가강 하원을 향해 연결되는 산줄기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62] 헐린산맥의 다른 이름이 '분수령'이었

60 任玉雪·李榮倩, 2016, 「清代盛京圍場的隸屬與盛京, 吉林將軍轄區的分界」, 『中國歷史地理論叢』 第31卷-第4集, 121~128쪽

61 『盛京通志』(乾隆43年) 卷27 山川三, "分水嶺, 城南八百餘里, 亦名黑林嶺. 即长白山南麓一幹, 盤曲西北指者也. 嶺有三泉自谷中涌出, 即爲佟家江之源."

62 『성경통지』에 따르면 청인들은 백두산에서 갈라져 나온 헐린산맥이 계속 서쪽으로 뻗어나가 '성경삼릉(盛京三陵)'의 주산(主山)인 계운산(啓運山)과 천주산(天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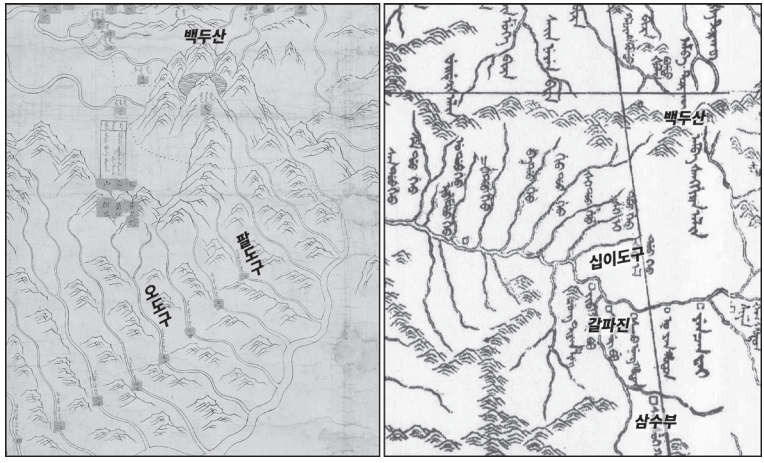


그림 4 『영고탑지도』(강희 30년 전후)와 『황여전람도』(강희 56년)에 묘사된 백두산과 열두 계곡. 『영고탑지도』에는 팔도구 까지만 표기되어 있으며 『황여전람도』에도 십이도구 위쪽은 모두 공백이다.

출처: (좌)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 (우) 汪前進 · 劉若芳 編, 2007

던 까닭은 그것이 동가강과 압록강, 호이파강, 송화강 등 만주의 주요 하천들을 가르는 공통의 분수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압록강 상류 유역의 헐린산맥의 남사면에는 압록강을 향해 평행을 이루며 흘러 내려오는 여러 계곡이 있었다. 청인들은 그것을 '두도구(emuci holo)'에서 '십이도구(juwan juweci holo)'까지로 명명하고 '열두 계곡(juwan juwe holo)'이라고 통칭했다. 명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압록강 상류 유역과 헐린산맥 일대에는 여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에 의해 구축되고,[63] 결국 누르하치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압록강 상류 북안은 사람이 살

山), 융업산(隆業山)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63 조선 중기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여진 부락과 조선 사이의 대립에 관해서는 김순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않게 되고 점차 만주족의 시야에서 벗어난 공간이 되었다. 이후 강희 연간에 이르러 청조는 백두산과 압록강의 지리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강희 중기 협령 러추와 강희 말기 총관 묵던의 탐사를 거치며 열두 계곡이 점진적으로 개척되었다.[64] 다만 이화자의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당시 묵던은 두도구에서 십이도구까지는 압록강의 북변을 따라 이동하다가 폐사군의 동쪽 끝인 후주(厚州)의 건너편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강을 건너 조선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강의 남변(삼수-혜산 노선)을 따라 백두산으로 갔다.[65] 당시 묵던의 목적은 백두산의 주변부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압록강 상류는 그저 지나가는 경로에 불과했으므로, 묵던의 답사를 반영한 『황여전람도』에는 열두 계곡 일대의 정보가 소략했고, 특히 묵던이 조선 땅을 통해서 이동한 십이도구 위쪽의 압록강 북안(지금의 길림성 장백현 일대)은 계속 공백으로 남았다(그림 4).

조선인들은 압록강 상류 북변에 대해 청인들보다 더욱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사실 조선 초기에 이만주(李滿住) 세력과 대적하고 사군(四郡)을 설치한 이래로 조선인들은 압록강 상류 유역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었다. 헐린산맥 남사면의 여러 계곡은 여진인들이 조선의 변경을 침략해 오는 통로, 이른바 '적로(賊路)'로 인식되어 더욱 중요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청조가 그곳에 '○○도구'라는 이름을 붙이기 훨씬 더 이전부터 압록강 북변의 모든 계곡과 사이사이의 고원마다 '○○동(洞)' 혹은 '○○평(坪)' 등으로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예상 가능한 적들의 침투로를 분석하며 독자적인 지리 정보를 축적해

2010, 「조선 중종대의 북방 야인 구축」, 『조선시대사학보』 54, 53~88쪽; 이재경, 2018, 「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 『한국문화』 83, 265~307쪽; 박정민, 2019, 「온하위(溫河衛)의 세력확대와 조선의 대응」, 『만주연구』 28, 179~205쪽 등을 참조.

64 강희 중기에 제작된 『영고탑지도』에 팔도구까지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강희 중기까지 청조는 팔도구까지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강희 말기 묵던에 의해 비로소 열두 계곡이 전부 개척되었던 것 같다.

65 이화자, 2024, 앞의 글, 42~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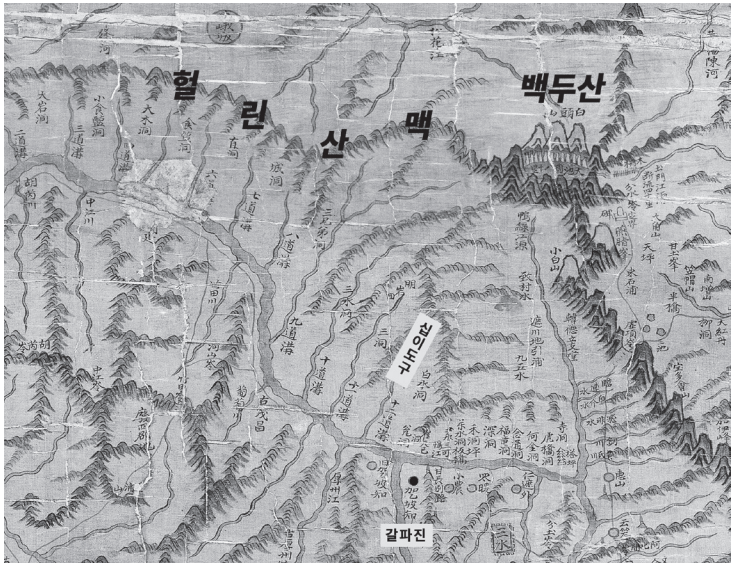


그림 5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18세기 중엽)에 그려진 백두산과 열두 계곡

* 주(註): 압록강 북안의 여러 지류에 중국식 지명과 조선 지명이 병기되어 있고, 십이도구 위쪽으로 압록강 북변의 지명이 모두 상세하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왔다.[66] 그리고 강희 연간에 이르러 청조가 그곳으로 관원을 보내 지리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청인들과 접촉하는 사건이 늘어나게 되자 조선은 적극적으로 청측이 조사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양국의 서로 다른 하천 지명 체계(道溝/洞)를 대조·통합하는 작업까지 모두 갖추어 두었다[67](그림 5). 조선이 이렇듯 압록강 상류 유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66 조선 초기 압록강 상류 북변의 '동구(洞口)'에 대한 인식은 세종 18년(1437) 평안도 도절제사 이철(李蕆)에게 내린 「제구지책(制寇之策)」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9일).

67 압록강 북변의 '도구(道構)'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은 물론 그곳이 군사·외교상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조선인들은 강의 남안에 서서 헐린산맥의 지형을 관측하는 것이 용이하고,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강의 남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강물만 건너면 산맥의 곳곳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반면 청조의 입장에서 열두 계곡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험난했다. 상게한 〈그림 3〉의 지도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열두 계곡 지역은 남쪽의 압록강, 북쪽의 헐린산맥, 동쪽의 백두산으로 둘러싸여 좁고 긴 회랑(回廊)과도 같은 형태를 띤다. 헐린산맥은 송화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을 가로막는 천연의 장벽이 되어 길림 지방에서 산맥을 넘어 압록강 상류로 가기 어려웠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청조는 일찍부터 헐린산맥을 길림과 성경의 분계로 삼고 길림은 산맥의 북사면까지만 관할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 지역으로부터 온다고 해서 길이 편안한 것도 아니었다. 묵던과 헝루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조변을 나가 동가강 하원의 마할라산을 넘은 뒤 압록강을 따라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열두 계곡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강변의 경사가 급해 길이 매우 위험했다. 과거 묵던이 이곳에서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던 것이나,[68] 헝루의 1차 탐사 때 오도구에 이르러 눈에 길이 막히고 절벽에서 말과 사람이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겪고 결국 탐사를 포기했던 것 등이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압록강 상류의 열두 계곡은 청조의 강역임에도 청인들은 도달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선인들은 비교적 쉽게 왕래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지리 조건을 가졌다. 교통의 격절과 정보의 부족은 청조의 관리 부실을 야기했으며, 그러한 국가 권력의 공백 상태는 결국 조선 민인들의 범월을 유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물론 청조가 압록강 상류 유역에서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명 체계에 대한 조선의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배우성, 2010, 「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후기 사회」, 『역사학보』 208, 235~269쪽 참조.

68 묵던이 頭道溝 일대를 통과하며 겪은 고초에 대해서는 이화자, 2024, 앞의 글, 39~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은 강희 중기 이래로 유조변 안팎 곳곳의 "중요한 통로(oyonggo kamni angga, 要隘口)"에 카룬을 설치하고 허가받지 않은 인원들의 왕래를 차단했다. 카룬은 강희 연간에 유조변과 가까운 곳부터 설치되기 시작해서 시대가 흐르며 점차 길림, 닝구타, 훈춘, 흑룡강 지역으로 확장되었다.[69] 성경의 관할 아래에 있던 유조변 내외의 카룬에 한정하자면, 강희 45년(1706)에서 강희 60년(1721)까지 유조변 주변에 카룬 28좌(座)가 차례로 설치되었고[70] 이후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여 건륭 중기에는 변내 18좌 변외 19좌, 총 37좌가 되었다가, 가경 9년(1804)에 성경장군 푸기윤(fugiyūn, 富俊)이 카룬을 정비하면서 변내 3좌, 변외 18좌, 총 21좌가 되었다.[71] 건륭기와 가경기에 설치되었던 성경 관할의 카룬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건륭기에 조선과의 국경 지대에 설치된 카룬은 대체로 관전 6보 주변과 압록강 하류 일대에 집중되었다. 가경기 이후에는 평안도 벽동(碧潼)과 이산(理山) 건너편의 강가에 카룬을 추가로 배치하여 압록강 중류까지 카룬의 범위가 조금 확장되었지만, 만포(滿浦)의 위쪽, 특히 마할라산 동쪽의 열두 계곡 지역에는 계속하여 카룬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과의 국경선에는 봉황성과 가까운 압록강 하류의 강변에만 카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성경장군 칭보오가 조선과의 국경을 모두 '봉황성의 관할'로 알고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

69 만주 지역 카룬에 대한 총론은 馬長泉, 2005, 『清代卡倫制度研究』, 哈爾濱出版社, 116~127쪽.

70 『光緒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蓼務·關汛巡防」.

71 건륭기에서 도광 연간에 이르기까지 유조변 동변 안팎에서 진행된 카룬의 이주와 치폐,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구범진, 2019, 「19세기 盛京 東邊外 山場의 管理와 朝·淸 公同會哨」, 『사림』 32, 261~301쪽. 참조. 가경 9년 푸기윤의 카룬 정비와 관련된 당안 문건은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954-0005, 가경 9년 6월 3일;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97-3673-059, 「奏詳查盛京邊外各卡倫情形摺」, 가경 9년 6월 9일; 03-1689-022 「呈卡倫圖式」, 가경 9년 6월 11일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조가 끝내 압록강 중상류의 강변에 카룬을 두지 않은 이유는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룬은 변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또한 거리가 멀면 관병들의 근무 기피 현상이 심해지며 상관들이 감독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궁벽한 곳까지 카룬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리란 보장이 없었다.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거리가 멀어 설치비용이 높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가 드물고 범월의 가능성이 낮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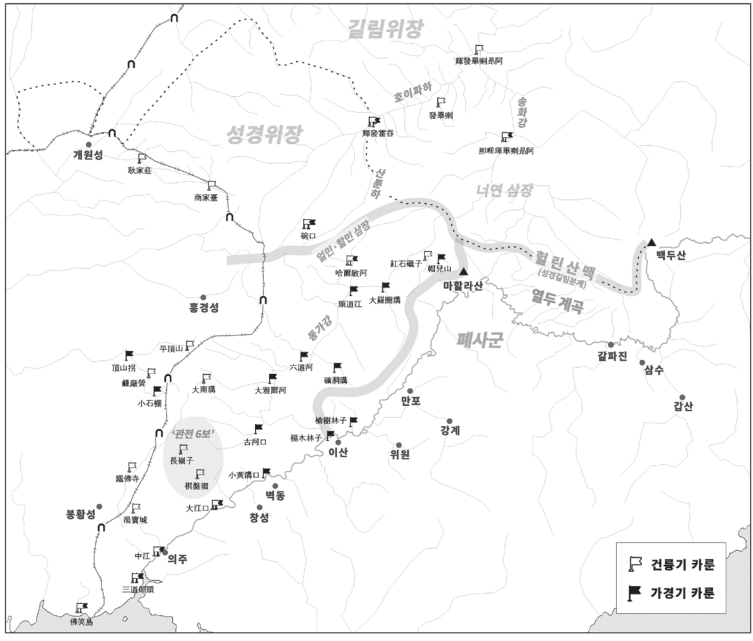


그림 6 건륭기, 가경기에 설치된 유조변의 내외(內外) 카룬

* 고지도와 현대지도를 활용해 현재 위치의 비정이 가능한 것들만 표기한 것이다. 두 시기의 카룬이 동일 위치에 계속 설치된 경우에는 두 종류의 기호를 겹쳐 그렸다.

* 참고자료: 위 지도는 『황여전람도』, 『영고탑지도』, 『성경길림흑룡강등처표주전적여도(盛京吉林黑龍江等處標注戰績輿圖)』, 『성경길림분계도』, 『성경동변내외각잡륜도(盛京東邊內外各卡倫圖)』, 『봉애이변문외도식(鳳靄二邊門外圖式)』 등의 청대 만한문 여도를 참고했고, 보다 정확한 위치는 만철(滿鐵)에서 제작한 『중국대륙십만분의일지도집성-만주(中国大陸十万分の一地図集成-滿洲)』의 경위도 좌표와 지형을 참고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므로 비용 대비 실익이 낮아 카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위 지도로부터 유조변과 조선 사이에 설치된 여러 카룬의 지세를 살펴보면, 당시 청조가 카룬을 설치한 궁극적인 목표는 청인이든 조선인이든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자들로부터 자국의 자원(토지·목재·인삼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조선인들의 도강(渡江) 그 자체를 방지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압록강 하류 유역은 조선에서 강을 건너면 곧장 개간과 벌목이 가능한 너른 땅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을 따라 카룬을 배치하여 조선인들의 도강을 막을 필요가 있었지만, 중상류 유역은 만약 조선인들이 강을 넘더라도 땅이 비좁아 개간이 어렵고, 인삼이 생산되는 곳과도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의 조선인의 도강을 막자고 깊숙한 곳까지 카룬을 설치하기보다는 혹여 그들이 강을 넘어 오더라도 자원을 훔칠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조금 후방에 카룬을 두었던 것이다.

한편, 청의 이러한 방침에는 조선인들의 범월을 막는 일은 조선 조정의 책무이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논리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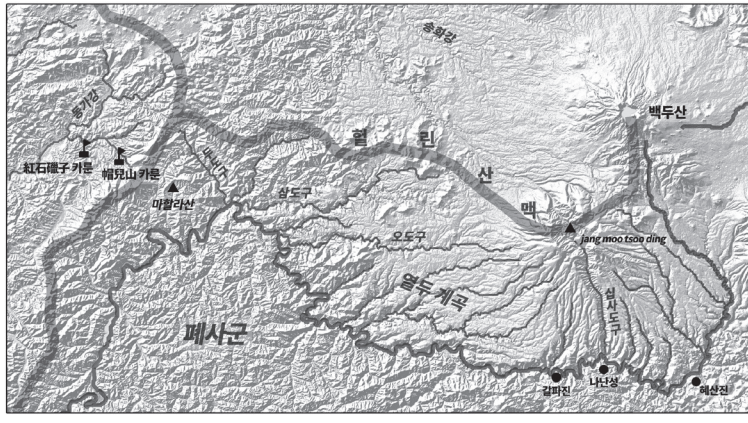


그림 7 마할라산과 열두 계곡 일대의 지형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다. 사실 청의 입장에서는 입관 이전에 조선과 합의한 "각수봉강(各守封疆)"의 오랜 전통에 따라 자국의 허가받지 않은 인원들이 압록강 근처로 가는 것을 막으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는 다한 셈이었다. 타국 백성들의 범월을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관병들을 보내느니, 차라리 조선 조정을 압박해서 그들의 국경을 스스로 방비하게 하는 편이 나았다. 건륭제가 조선인 박후찬 등으로부터 조선이 강변에 설치한 파수들이 가을에 모두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조선국왕을 강하게 질책하며 파수의 철수를 엄금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7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결합되어 청조의 압록강 상류 유역에 대한 순찰권의 종점은 동가강 유역에서 열두 계곡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마할라산으로 설정되었다. 마할라산의 고개를 막아서면 내지에서 압록강 상류로 들어가는 자국의 인원을 제어할 수 있고, 혹여 조선인들이 범월해 오더라도 열두 계곡 내부에서만 머물 수 있을 뿐 인삼이 많이 나는 동가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열두 계곡 지역에서도 인삼과 담비는 자랐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김순정이나 박후찬 등이 범월한 것이지만, 생산량이 아주 많지 않았으므로 그곳을 수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손실이 크지 않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평시에는 동가강 상류에 홍석랍자(紅石磖子, fulgiyan hada) 카룬 1좌를 상설 설치해 삼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삼표를 발급하지 않는 해에는 마할라산 입구에 임시로 모아산(帽兒山) 카룬 1좌를 추가로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정도로 만족했다[73](그림 7).

그러나 청조의 이러한 방침은 자연히 조선의 민인들에게 범월의 여지를 제

72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18-009-000031-0002, 「爲恒祿等巡邊拿獲越境之朝鮮國捕貂人復令脫逃看守兵丁著枷責革退恒祿等交部察議行文並朝鮮國緝拿逃犯治罪事」, 건륭 27년 11월 12일; 김순정 사건 이후 압록강변의 조선 파수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김선민, 2016, 앞의 글, 107~108쪽 참조.

73 삼표를 발급하지 않는 해에만 임시 카룬을 추가한 이유는 보통 삼표를 발급하는 해에는 삼부들이 자신들의 합법적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삼인들을 제지하는 자경 역할을 하여 삼부들이 없는 해에 도삼의 위험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이 마할라산의 동쪽을 봉금(封禁)하고 극소수의 삼부들만 통행시킨 덕택에 조선인들은 범월하더라도 청인들을 마주칠 위험이 적었다. 또한 삼표를 발급하지 않는 해에는 이론상 청의 관병도 삼부들도 아무도 오지 않는 완전한 공백 지대가 되어 더욱 발각될 염려가 없었다. 헝루가 열두 계곡을 지나며 조선인들이 남기고 간 야영지와 그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74] 적발된 김순정과 박후찬 등은 운 없는 소수의 사례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조선인이 무방비 상태의 열두 계곡을 오갔을 것이다.

김순정의 범월 사건으로 인하여 성경의 관원들은 그동안 마할라산 동쪽의 열두 계곡 지역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고 나름의 방지책을 시도했다. 부도통 부얀달라이는 임시 카룬인 마할라산 카룬을 상설 카룬으로 승격시키자고 건의했고,[75] 후임 부도통 워셩거는 마할라산 카룬의 관병들이 단순히 입구만 막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열두 계곡 내부로 들어가 조선인의 범월을 감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76] 그러나 이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상류 유역은 여전히 제대로 방비되지 못했다. 이로부터 불과 10여 년이 지난 건륭 36년(1771)에 영액변문의 좌령이 개원성 관할의 카룬들을 점검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액변문 바로 앞에 위치한 완구(碗口) 카룬과 홍석랍자 카룬 두 좌만 언급되어 있고 모아산 카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모아산 카룬을 상설로 승격하자는 부얀달라이의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완구·홍석랍자 두 카룬의 관병들마저도 비가 많이 내리고 곡식이 썩어버렸다는 핑계를 대며 카룬을 비우고 조기 복귀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77] 이러한 상황에서는 혹여 마할라산과 가까운 곳에 카룬을 추가로 배치

74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81-0043, 건륭 27년 11월 4일.
75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82-0009, 건륭 27년 11월 10일.
76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492-0048, 건륭 28년 6월 4일.
77 “宮中檔滿文朱批奏摺” 04-02-002-000596-0048, 건륭 36년 9월 21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열두 계곡 지역을 순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건륭 28년에 길림장군 헝루가 두 차례에 걸쳐 압록강 상류 지역을 조사한 과정과 그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작한 『성경길림분계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청조의 변경 관리 정책에 나타난 허와 실을 살펴보았다. 압록강 상류의 열두 계곡 지역에서 발생한 조선 민인들의 범월 사건은 청조의 국경 관리, 그중에서도 성경장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내재되어 있던 허술함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륭 10년대에 길림 지역의 순찰 체계를 정비한 이후 길림의 관원들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조선과의 국경 지대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성경의 관원들은 인삼이 생산되는 동가강 상류 지역이나 조선인과의 접촉이 잦고 개간과 벌목의 위험이 높은 압록강 하류 유역의 관리에만 치중하여 압록강 상류 유역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해가 부족했다.

압록강 상류 유역의 관리에 이러한 공백이 생겨난 배경에는 헐린산맥이라는 독특한 지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헐린산맥은 송화강 상류와 압록강 상류를 격절시키는 천연의 장벽으로 청조는 일찍부터 그것을 성경과 길림의 관할 분계로 삼아, 압록강 유역은 모두 성경장군이 관할하고 두만강 유역은 모두 길림장군이 관할한다는 것이 두 지역 사이에 공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압록강 상류 유역은 성경에서 간다고 해도 길이 멀고 지세가 험난해 깊숙한 곳까지 관병들을 파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청조는 열두 계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마할라산 입구까지만 카룬을 두고 그 너머의 지역은 순찰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방침이 수십 년간 계속되면서 압록강 상류 지역은 묵던의 탐사 이후 60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미지의 땅'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헝루가 압록강 상류 유역을 조사하여 두 장군의 관할 경계를 분명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이후에도 압록강 상류 유역은 '방치'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다. 가경 연간 이후로 조선과 청 양측의 민인들이 압록강 유역에서 대규모 벌목과 불법 개간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면서,[78] 청조는 그러한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압록강 하구와 압록강 중류 유역에 카룬을 추가로 설치하고, 봉황성 인근의 유조변을 정비하며, 청과 조선의 관원들이 함께 변계를 순찰하는 회초(會哨)[79]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마할라산 너머의 열두 계곡 지역은 여전히 청조의 순찰권에서 벗어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곳은 여전히 도달하기 힘들고 위험하며, 별로 쓸모없어 직접 인력을 들여 지키는 것보다 조선에 책임을 떠맡기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헐린산맥의 지형이 만들어낸 이러한 공백 상태는 광서(光緖) 말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소된다. 광서 33년(1907) 청조는 만주의 장군제(將軍制)를 철폐하고 성제(省制)를 새롭게 도입했다.[80] 이 시기를 전후로 만주 지역에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되어 광서 34년(1908)에 헐린산맥의 남쪽에 봉천성(奉天省) 관할의 장백부(長白府)가 설치되고, 선통 원년(1909)에는 헐린산맥의 북쪽에 무송현(撫松縣), 안도현(安圖縣)이 설립되어 장백부의 소속이 되었다.[81](그림 8) 이로써 그동안 길림장군의 관할 아래에 있던 헐린산맥의 이북이 처음으로 봉천성에 편입되고, 헐린산맥을 성경과 길림의 경계선으로 삼았던 수백 년의 관행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다. 백두산 바로 근처까지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곧

78 가경 연간 압록강 하구에서 조선인과 청인들이 함께 결탁하여 일으킨 대형 벌목사건인 "고려구 사건"에 관해서는 方華玲, 2018(1), 「嘉慶八年盛京高麗溝盜砍木植案研究」, 『滿族研究』, 23~27쪽 참조. 도광 연간 압록강 하류 유역의 불법 개간에 관해서는 구범진, 2019, 앞의 글, 272~281쪽 참조.

79 조청 會哨제도에 관해서는 구범진, 2019, 앞의 글, 282~297쪽; 張士尊, 2017, 「柳條邊 동쪽의 개발과 중국-조선 會哨 제도-清代 檔案에 있는 관련 기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 겸하여 논함」, 『동국사학』 62, 509~526쪽 참조.

80 광서 말기 만주 행정구역의 변화에 대해 구범진, 2006, 「清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 14, 66~107쪽.

81 周振鶴 等編, 2013, 『中國行政區劃通史 · 清代卷』, 復旦大學出版社, 141~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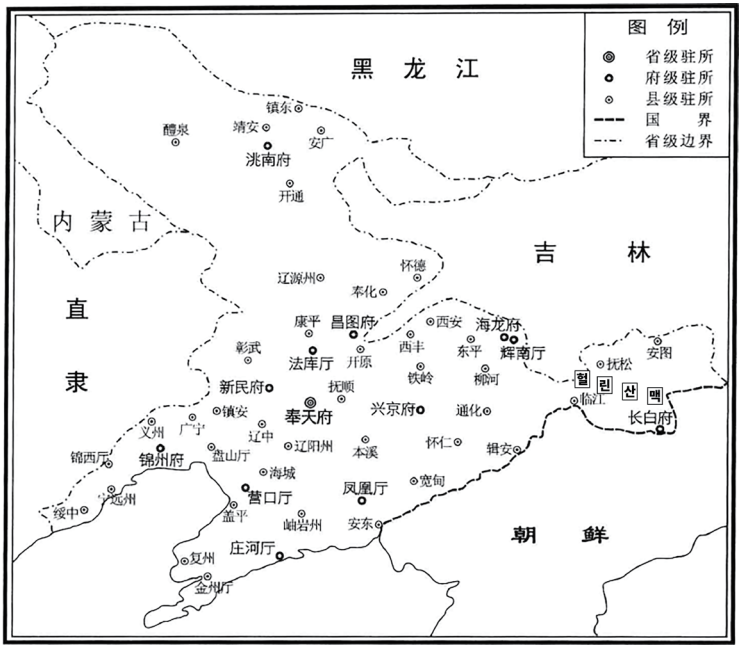


그림 8 청말 봉천성(奉天省) 행정구역도(지도의 "헐린산맥"은 인용자가 표기)

출처: 周振鶴 等 編, 2013, 131쪽

봉금이 효력을 상실하여 그동안 민간인들이 정주하지 않았던 압록강 상류와 송화강 상류의 구석구석까지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맥의 남북면이 같은 행정구역의 아래로 편제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이주민들의 활동으로 인해 마할라산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교통로를 대체하여, 헐린산맥의 남북을 직접 관통하는 새로운 교통로가 개발되었고 이로써 산맥의 남북이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묶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역설적이게도 만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했던 봉금이 무용해진 이후에야 청조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시야 밖에 두었던 변경의 가장 궁벽한 곳까지 자신들의 분명한 강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1. 고지도

『乾隆十三排全圖(內府輿圖)』, 汪前進·劉若芳 編, 2007, 『淸廷三大實測全圖集』, 外文出版社.

『吉林九河圖』(臺灣故宮博物院, 平圖021457).

『吉林輿圖』(Library of Congress, gm71002468).

『寧古塔圖』(臺灣故宮博物院, 平圖021563).

『寧古塔地圖』(臺灣故宮博物院, 平圖021465).

『東國大地圖』(국립중앙박물관, 덕수 4396).

『鳳凰二邊門外圖式』(臺灣故宮博物院, 故機108422).

『盛京吉林分界圖』(中國第一歷史檔案館,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80-2030-029).

『盛京吉林黑龍江等處標注戰績輿圖』(臺灣故宮博物院, 故殿024556-024581).

『盛京東邊內外各卡倫圖』(中國第一歷史檔案館,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202-4060-024).

『盛京輿地全圖』(臺灣故宮博物院, 平圖021548).

『雍正十排全圖』, 汪前進·劉若芳 編, 2007, 『淸廷三大實測全圖集』, 外文出版社.

『烏喇等處地方圖(臺灣故宮博物院, 平圖021453).

『長白山輝發城形勢圖』(中國第一歷史檔案館,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0180-1997-027).

『中国大陸十万分の一地図集成-滿洲』, 中國地圖資料研究會 編, 2003, 株式會社科學書院.

『皇輿全覽圖』, 汪前進·劉若芳 編, 2007, 『淸廷三大實測全圖集』, 外文出版社.

『黑龍江流域圖』(臺灣故宮博物院, 平圖02145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고문헌

『高宗純皇帝實錄』.

『光緖大淸會典事例』.

『同文彙考』.

『盛京通志』(乾隆 43年).

『朝鮮王朝實錄』.

3. 당안자료

『乾隆朝滿文寄信檔譯編』(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2011, 岳麓書社).

“軍機處滿文錄副奏摺”,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宮中檔滿文朱批奏摺”,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內閣大庫禮部題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內閣大庫檔案”, 臺灣中央硏究院.

『琿春副都統衙門檔』(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2007, 廣西師範大學出版社).

“黑龍江將軍衙門檔”, 中國第一歷史檔案館.

단행본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연구』, 혜안.

_____, 2019, 『백두산 답사와 한중국경사』, 혜안.

譚其驤 主編, 1987, 『中國歷史地圖集』(共8冊), 中國地圖出版社.

馬長泉, 2005, 『淸代卡倫制度硏究』, 哈爾濱出版社.

烏雲畢力格, 2013, 『滿文檔案與淸代邊疆和民族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周振鶴 等編, 2013, 『中國行政區劃通史·淸代卷』, 復旦大學出版社.

承志, 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 – 帝国の形成と八旗社会』, 名古屋大學出版社.

논문

구범진, 2006, 「淸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 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8,「19세기 盛京 東邊外 山場의 管理와 朝·淸 公同會哨」,『사림』32.
김선민, 2011,「雍正-乾隆年間 莽牛哨事件과 淸-朝鮮國境地帶」,『중국사연구』71.
_____, 2016,「18세기 후반 청-조선의 범월문제와 경계관리: 金順丁·朴厚贊 사건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72.
김순남, 2010,「조선 중종대의 북방 야인 구축」,『조선시대사학보』54.
박정민, 2019,「온하위(溫河衛)의 세력확대와 조선의 대응」,『만주연구』28.
배우성, 2010,「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후기 사회」,『역사학보』208.
윤욱, 2013,「朝淸關係史 연구에 있어서 滿文史料의 중요성에 관한 試論-滿文月摺包의 朝淸關係史 關聯 史料와 그 價値-」,『역사학보』218.
이재경, 2018,「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한국문화』83.
이화자, 2024,「성경 상봉각의 만문백두산도에 대한 고증 -강희『황여전람도』와의 관계-」,『중국근현대사연구』102.
이훈, 2014,「청 초기 백두산 탐사와 황제권」,『동양사학연구』126.
張士尊, 2017,「柳條邊 동쪽의 개발과 중국-조선 會哨 제도-淸代 檔案에 있는 관련 기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 겸하여 논함」,『동국사학』62.
장상훈, 2006,「청대 황여전람도 수록「조선도」연구」,『동원학술논문집』8.

方華玲, 2018(1),「嘉慶八年盛京高麗溝盜砍木植案研究」,『满族研究』.
徐少卿, 2014,「淸代東北巡防體系研究」, 復旦大學 碩士學位論文.
_____, 2014(4),「基於《琿春副都統衙門檔》的琿春協省略體系復原(1736-1860年)」,『北方文物』.
聶有財, 2017,「淸代琿春"南海"海疆研究」, 吉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承志, 2013a,「滿文《烏喇等處地方圖》考」(烏雲畢力格 編,『滿文檔案與淸代邊疆和民族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
____, 2013b,「尼布楚條約界碑圖的幻影-滿文《黑龍江流域圖》研究」(烏雲畢力格 編,『滿文檔案與淸代邊疆和民族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
任玉雪·李榮倩, 2016,「淸代盛京圍場的隸屬與盛京, 吉林將軍轄區的分界」,『中國歷史地理論叢』31卷-第4集.
張月瑩, 2017,「三道溝事件與朝鮮的應對」,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存武, 1987,「淸代中韓邊務問題探源」(張存武, 1987,『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灣商務 수록).
齊光, 2017,「從滿文檔案看18世紀中期的淸朝與朝鮮邊境及盛京, 吉林烏拉兩將軍轄區的分界線(提要)」,『中國邊疆民族問題學術硏討會資料集』.

吉田金一, 1980,「郎談の「吉林九河図」とネルチンスク条約」,『東洋学報(東洋文庫和文紀要)』.
_____, 1983,「ネルチンスク條約で定めた淸とロシアの國境について」,『東洋史研究』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청 건륭 28년 제(製) 만문(滿文) 『성경길림분계도(盛京吉林分界圖)』 연구

이승수

이 글은 건륭 중기에 길림장군 헝루가 압록강 상류 유역에서 수행한 지리 조사와 그 결과로 제작된 『성경길림분계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청조의 변강 관리 정책이 가진 허실을 밝혔다. 헝루의 『성경길림분계도』는 '황여전람도' 계열의 전국 지도는 물론이고 청대의 다른 여러 만주 지도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상세한 지리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당시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이 관할하는 영역의 분계선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청이 조선과 국경을 접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모두 성경장군과 길림장군 두 아문에서 나누어 관할했으며, 그중 백두산을 기준으로 산 서쪽의 압록강 유역은 모두 성경장군이, 산의 동쪽인 두만강 유역은 모두 길림장군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이 길림의 관원들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성경에서 관할하는 압록강의 상류 유역은 관리에 허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청조는 길림장군 헝루를 파견해 해당 지역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압록강 상류 지역의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이유는 헐린산맥이라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었다. 압록강과 평행선을 그리며 뻗은 헐린산맥의 산줄기는 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장군과 길림장군의 관할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든 길림에서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천연의 장애물이 되었다. 그 결과 헐린산맥으로 둘러싸인 압록강 상류 북변의 '열두 계곡'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청조의 관심에서 벗어난 공간이 되었다. 조선 민인들의 범월 사건은 내재되어 있던 압록강 상류 유역 관리의 허점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방관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이후로도 청조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그곳을 면밀하게 방비하기 어려웠다.

주제어: 만문 고지도, 성경장군, 길림장군, 압록강, 조청관계, 범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Study of a Map of the Borderline of Mukden and Girin in Manchu Made in the Twenty-eighth Year of the Qianlong Period of the Qing Dynasty

Lee Seungsu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eographical survey of the upper Yalu River basin conducted by the Jilin province general Henglu in the middle Qianlong period and the resulting A map of the borderline of Mukden and Girin written in Manchu characters, and to reveal one aspect of the Qing dynasty's borderlands management policies. General Henglu's map contains more detailed geographical information than The Kangxi Atlas and all other Manchu maps of the Qing dynasty, and especially has great historical value because it specifically depicts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two provinces of Mukden and Girin.

Both the Yalu River and the Tumen River basins, which borders between Qing Dynasty and Joseon, were divided into two sections: General of Mukden and General of Girin, and among them, the Yalu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iver basins west of Changbaishan Mountain were all controlled by General of Mukden and the Tumen River basins east of the mountain were controlled by General of Girin. However, whereas the Tumen River basin was relatively well organized and managed by officials of Girin, the Yalu River basin, especially the upper reaches of the Yalu River,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General of Mukden, were neglected. The border incursions by the Joseon people exposed the neglection in the upper Yalu River basin, which prompted the Qing dynasty to send the General Henglu to survey and map the area in detail once again. The unique terrain of Helin Mountains was one of the reasons why the General of Mukden neglected to manage the upper Yalu river basin. The Helin mountain range, which runs parallel to the Yalu River, not only served as a dividing line between the jurisdictions of the Mukden and Girin provinces, but also as a barrier to entry, whether from the Mukden or Jilin, and as a result, the "Twelve Valleys" area surrounded by the Helin Mountains became a space that remained out of the Qing's interest for many years.

Keywords: Old Map in Manchu, General of Mukden, General of Girin, Yalu river, Choseon-Qing relationship, Border incurs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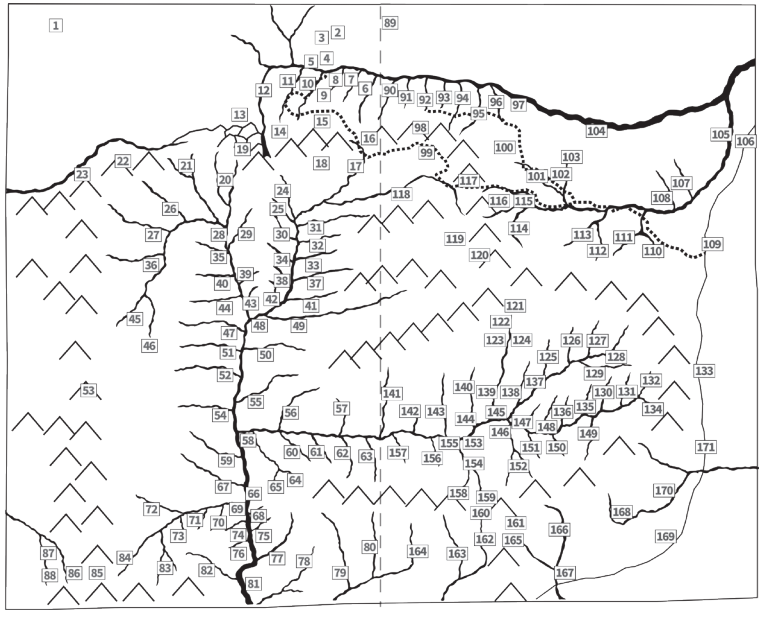


그림 9 『성경길림분계도』 모사본(模寫本). 인용자 모사. 그림 위의 좌우면 구분선(점선)은 인용자가 추가.

출처: 중국 제일역사당안관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성경길림분계도』의 지명록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좌-1	solho i ba(조선 땅)	주기	–	–	–
좌-2	giya I po jeng mukden i harangga ba i teisu(갈파진은 성경 관할 땅의 맞은편)	주기	–	–	–
좌-3	san šui fu	성시	san šui hoton	三水和屯	–
좌-4	giya I po jeng	성시	sin gar pu	新噶爾堡	–
좌-5	lo nan	성시	no yan hoton	諾言和屯	–
좌-6	jakūci holo	하천	ba doo geo	八道溝	八道溝
좌-7	uyuci holo	하천	gio doo geo	九道溝	九道溝
좌-8	juwanci holo	하천	ši doo geo	十道溝	十道溝
좌-9	antu ergi, yalu ula de isibume tanggu ba funcembi, mukden i harangga(남면. 압록강에 이르도록 100리 남짓. 성경의 관할)	주기	–	–	–
좌-10	juwan emuci holo	하천	ši i doo geo	十一道溝	十一道溝
좌-11	juwan juweci holo	하천	ši el doo geo	十二道溝	十二道溝
좌-12	yalu sekiyen	하천	–	–	–
좌-13	golmin šanyan alin	산	amba šanggiyan alin	安巴山彦阿林	長白山
좌-14	helin dabagan i mului hešen(헐린 산맥 산마루의 地界)	주기	–	–	–
좌-15	helin dabagan jang moo tsoo ding alin	산	–	–	–
좌-16	hešen	주기	–	–	–
좌-17	sain neyen	하천	sain neyen bira	三因諾因必拉	薩音諾音
좌-18	boso ergi girin ulai harangga(북면은 길림의 관할)	주기	–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좌-19	tamun gebungge omo (타문이라는 이름의 호수)	하천	–	–	他們泡
좌-20	turakū	하천	amba turakū	阿木巴圖拉庫	大小土拉庫
좌-21	niyamniyakū	하천	niyamniyakū	尼雅木尼雅庫必拉	尼雅木尼雅庫
좌-22	yengge dabagan i da hūwang ding alin	산	–	–	–
좌-23	tumen ula	하천	tumen ula	土門烏拉	土門江
좌-24	ehe neyen	하천	ehe neyen bira	額赫訥恩必拉	額赫訥音
좌-25	fodoho bira	하천			
좌-26	yajan bira	하천	yarjan bira	雅爾占必拉	雅卽河
좌-27	hoktonggi bira	하천	hotonggi bira	和通集必拉	霍克特依河
좌-28	fulhū angga	하천	fulhū bira	富爾胡必拉	富爾霍河
좌-29	sejulen bira	하천	sejulen bira	色朱倫必拉	色珠勒河
좌-30	udana bira	하천	–	–	–
좌-31	hailan bira	하천	–	–	海蘭河
좌-32	šele bira	하천			
좌-33	jaha bira	하천	yaha bira	雅哈必拉	雅哈河
좌-34	fa bira	하천			
좌-35	genggiyen bira	하천	–	–	更音河
좌-36	necin bira	하천	–	–	–
좌-37	kiyakū bira	하천	kiyakū bira	雅庫必拉	–
좌-38	finakū bira	하천	–	–	–
좌-39	hailan giranggi bira	하천	–	–	–
좌-40	nunggele hailan	하천	–	–	–
좌-41	joronggo bira	하천	–	–	
좌-42	dahū bira	하천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좌-43	yangsikū bira	하천	–	–	–
좌-44	aksingga bira	하천	–	–	–
좌-45	hubtu bira	하천	–	–	
좌-46	fulhū sekiyen	하천	fulhū bira	富爾胡必拉	富尔霍河
좌-47	meren bira	하천	–	–	莫勒河
좌-48	ayan i angga	하천	–	–	–
좌-49	narhūn bira	하천	narhūn bira	那爾混必拉	那尔渾河
좌-50	finju bira	하천	–	–	–
좌-51	samsi bira	하천	samsi bira	薩木什必拉	薩木西河
좌-52	sele bira	하천	sele bira	色勒必拉	色勒河
좌-53	yengge dabagan	산	–	–	–
좌-54	jacin bira	하천	–	–	扎金河
좌-55	toho oro	하천	–	–	那尔渾河
좌-56	beji bira	하천	–	–	–
좌-57	gun bira	하천	gun bira	滾必拉	滾河
좌-58	hoifa angga	하천	–	–	–
좌-59	mukin bira	하천	mukin bira	木欽必拉	木欽河
좌-60	tampin bira	하천	–	–	–
좌-61	burka bira	하천	–	布拉喀必拉	佈尔哈河
좌-62	hūlan bira	하천	–	庫蘭必拉	海蘭河
좌-63	fodoho bira	하천	fodoho bira	佛多羅必拉	佛多霍河
좌-64	girsa bira	하천	kirsa bira	奇爾薩必拉	吉尔薩河
좌-65	maida gargan	하천	–	–	–
좌-66	sunggari ula	하천	sunggari ula	松阿里烏拉	–
좌-67	fiyoho bira	하천	fiyoho bira	非約和必拉	匪呼河
좌-68	mayan bira	하천	mayan bira	瑪顔必拉	馬依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좌-69	lafa angga	하천	lafa bira	拉發必拉	拉法河
좌-70	gūwalca bira	하천	gūwalca bira	瓜爾查必拉	瓜勒察河
좌-71	šorha bira	하천	–	–	–
좌-72	giyooha bira	하천	giyooha bira	角哈必拉	蛟哈河
좌-73	ulin bira	하천	–	–	–
좌-74	yamen bira	하천	–	–	雅門河
좌-75	hailan bira	하천	–	–	海蘭河
좌-76	ehemu bira	하천	–	–	額和木河
좌-77	undehen bira	하천	undehen bira	溫德亨必拉	溫頭河
좌-78	seoden giyamun	역참	seode giyamun	搜得站	蒐登站
좌-79	salun bira	하천	salun bira	薩隆必拉	–
좌-80	ilmen giyamun	역참	ilmen giyamun	依爾捫必拉	伊勒們站
좌-81	girin i ula	성시	girin ula i hoton	吉林烏拉和屯	吉林
좌-82	ehemu giyamun	역참	ehemu giyamun	額赫穆站	額和木站
좌-83	lafa giyamun	역참	lafa giyamun	拉發站	拉法站
좌-84	toiton giyamun	역참	toiton giyamun	推屯站	推通站
좌-85	secu weji	산	seci weji mulu	色寄倭集穆魯	–
좌-86	ikei giyamun	역참	–		衣溪■站
좌-87	emehe soro	역참	omoho soro giyamun	鄂默和索羅站	俄木和索站
좌-88	omoho giyamun	역참	omoho soro giyamun	鄂默和索羅站	俄木和索站
우-89	solho i ba(조선 땅)	주기	–	–	–
우-90	nadaci holo	하천	ci doo geo	七道溝	七道溝
우-91	ningguci holo	하천	lio doo geo	六道溝	六道溝
우-92	sunjaci holo	하천	u doo geo	五道溝	五道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우-93	duici holo	하천	sy doo geo	四道溝	四道溝
우-94	ilaci holo	하천	san doo geo	三道溝	三道溝
우-95	jai holo	하천	el doo geo	二道溝	二道溝
우-96	ujui holo	하천	teo doo geo	頭道溝	頭道溝
우-97	mahala alin	산	mao el šan	帽兒山	-
우-98	duleke aniya ubaci nimanggi de teisulefi amasi mariha.(작년에 이곳에서 눈을 만나서 되돌아갔다.)	주기	-	-	-
우-99	hešen	주기	-	-	-
우-100	wangcing jase ci sunja tanggū ba hamimbi, juwan juweci holo de isibume sunja tanggū ba hamimbi(왕청변문에서 500리 떨어져 있다. 십이도구에 이르기까지 500여 리 남짓이다.)	주기	-	-	
우-101	lefu holo	산	-	-	
우-102	duleke aniya yabuha jugūn(작년에 갔던 길)	주기	-	-	
우-103	fulgiyan hada bira	하천	hūng ši ladz bira	紅石拉子必拉	-
우-104	yalu ula	하천	yalu giyang	鴨綠江	雅綠江
우-105	tunggiya ula	하천	tunggiya ula	佟家烏喇	通雅江
우-106	giyamcan jase	변문	giyamcan duka	加牟蟾邊門	-
우-107	maca bira	하천	maca bira	馬查必拉	瑪察河
우-108	ulgiyan bira	하천	ulgiyan bira	烏爾澗必拉	乌尔夾河
우-109	wangcing jase	변문	wang cing duka	王淸門	汪淸門
우-110	imsun bira	하천	imsun bira	依木孫必拉	-
우-111	giyaltukū bira	하천	giyaltukū bira	甲爾圖庫必拉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우-112	halmin bira	하천	halmin bira	哈爾敏必拉	哈尔敏河
우-113	elmin bira	하천	elmin bira	額爾敏必拉	–
우-114	ilga yafan	하천	ilga yafan	依爾哈雅範	–
우-115	tunggiya sekiyen	하천	tunggiya sekiyen	佟家色欽	–
우-116	ere aniya yabuha jugūn (올해 갔던 길)	주기	–	–	–
우-117	helin dabagan	산	–	–	–
우-118	halhūn muke	하천	halhūn muke bira	哈爾渾木克必拉	–
우-119	helin dabagan i bošo ergi, girin i hoton ci jakūn uyun tanggū ba adali aku.(헐린산맥의 북면은 기린 울라성에서 800~900리 사이로 거리가 균일하지 않다.)	주기	–	–	–
우-120	hešen	주기			–
우-121	hešen	주기	–	–	–
우-122	santun sekiyen	하천	–	–	–
우-123	dergi dalin girin i ulai harangga (동변은 길림의 관할)	주기	–	–	–
우-124	wargi dalin mukden i harangga (서변은 성경의 관할)	주기	–	–	–
우-125	ibadan bira	하천	–	–	–
우-126	hūwakū bira	하천	–	–	–
우-127	ajige solho	하천	–	–	–
우-128	amba solho	하천	–	–	–
우-129	giyooha bira	하천	–	–	–
우-130	ilaci ibadan	하천	–	–	–
우-131	jai ibadan	하천	–	–	–
우-132	ujui ibadan	하천	–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우-133	yengge jase	변문	yengge duka	英額邊門	英額門
우-134	hoifa sekiyen	하천	–	–	–
우-135	duici ibadan	하천	–	–	–
우-136	sunjaci ibadan	하천	–	–	–
우-137	tampin bira	하천	–	–	–
우-138	yengge jase ci ilan tanggū ba hamimbi(영액변문에서 300리 남짓)	주기	–	–	–
우-139	girin i hoton ci ilan tanggū dehi ba(기린성에서 300~400리)	주기	–	–	–
우-140	hūwang ni ho bira	하천	–	–	–
우-141	tohiyan bira	하천	tohiyan bira	托欣必拉	托新河
우-142	giyoha bira	하천	giyoha bira	角罕必拉	蛟哈河
우-143	fa bira	하천	fa bira	發必拉	法河
우-144	hoifa hada	하천	hoifa hoton	輝發和屯	輝發城
우-145	santun i angga	하천	san tun bira	三屯必拉	三通河
우-146	jabjan oforo	하천	–	–	–
우-147	nadaci ibadan	하천	–	–	–
우-148	ningguci ibadan	하천	–	–	–
우-149	ilga yafan	하천	–	–	–
우-150	bayan bira	하천	bayan omo	巴顔鄂模	–
우-151	meihe bira	하천	amba meihe bira	阿木巴梅和必拉	–
우-152	fiyatarkū bira	하천	–	–	–
우-153	fe hoton	성시	–	–	–
우-154	hešen	주기	–	–	–
우-155	defe angga	하천	defe bira	德佛必拉	德佛河
우-156	niomošon bira	하천	–	牛木順必拉	牛莫順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지명	속성	康熙皇輿全覽圖	乾隆內府輿圖	吉林輿圖
우-157	dulinggū bira	하천	–	–	都凌阿河
우-158	defe sekiyen	하천	–	–	–
우-159	ulhū holo	산	–	–	–
우-160	hešen	주기	–	–	–
우-161	sejulen alin	산	–	–	–
우-162	itun	하천	itun bira	義屯必拉	依通河
우-163	ibadan giyamun	역참	ibadan giyamun	依巴丹站	伊巴丹站
우-164	suwayan giyamun	역참	suwayan giyamun	刷姻站	刷延站
우-165	altan emel giyamun	역참	altan emel giyamun	阿爾坦額墨爾站	阿尔坦我莫洛站
우-166	hersu giyamun	역참	hersu giyamun	赫爾蘇站	赫爾蘇站
우-167	hersu jase	변문	hersu jase	赫爾蘇門	赫爾蘇門
우-168	yehe giyamun	역참	yehe giyamun	葉赫站	葉赫站
우-169	burtuku subargan jase	변문	burdeku duka	布爾德庫門	–
우-170	monggo holo giyamun	역참	monggo holo giyamun	蒙古和羅站	–
우-171	wei yuwan pu jase	변문	u yuwan bu duka	威遠堡邊門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09

근대 동아시아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최덕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I. 머리말
II.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접속
III. 청일정보전쟁과 일본의 청국 암호 해독
IV. 러일정보전쟁과 러시아의 일본 암호 해독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전근대와 근대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전신(電信, telegraph)의 사용 유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목격되고 있듯이 현대전은 정보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외교사와 전쟁사 연구의 공백 지대에 남아 있는 정보전쟁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 글로벌 전신 케이블 네트워크(The global telegraph cable network)가 부설된 주된 목적은 통상 증진이었다. 이는 해저케이블 제작과 전용 선박 운용 관련 전문가 및 자본을 갖춘 영국이 부설 사업을 주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신이 모스(S. Morse)에 의해 시스템화되었다면, 구리에 절연 피복을 입힌 해저케이블을 발명한 영국은 전신망의 세계 확산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영국 전신 회사들은 세계 케이블의 63.1%를 보유함으로써 제국주의 시대 정보 패권국의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영국의 패권적 지위가 종식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다. 유선에서 무선 통신 시대로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화의 시기에 글로벌 무역과 통상 증진에 최적화되었던 해저케이블은 정보 고속도로의 효용성이 인정되었지만, 전시에는 승전을 위해 파괴해야 할 1순위가 되고 말았다. 해저 전신은 민간 기업 소유임에도 전시에는 교전국의 행동의 자유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선 통신의 발명과 확산은 근대 세계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지만 전시에 절단 혹은 파괴로부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전신 네트워크가 전시에 파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에도 결코 소멸

* 투고: 2025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R24127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국가 권력 강화의 메커니즘이라는 전신 네트워크 본연의 속성 때문이었다. 국가가 안보를 빌미로 통신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논리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논리를 압도해왔기 때문이었다. 1875년 국제전신연맹(ITU) 상트페테르부르크 총회에서 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전신 감청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합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에 감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른 대안이 바로 암호였다.

본 주제의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근대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에 대한 연구의 토대가 되는 전신에 관한 각론은 정립되어 있다.[1] 일본의 연구에서는 아리야마 테루오(有山輝雄)의 3부작 『정보패권과 제국일본』 시리즈가 주목된다.[2] 하지만 그의 연구는 미디어사 연구 분야를 개척, 견인해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암호 해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특히 그의 연구는 일본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전신 네트워크의 전구성(全球性, Globality)을 도외시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는 아리야마가 일본이 러일전쟁기에 친러적 덴마크 전신회사의 전신망을 우회하기 위해 대만 경유-푸저우-홍콩 노선을 확보했음을 밝혔으나 기밀전문이 러시아에 의해 감청, 해독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3] 이에 러일전쟁 기간 일본의 전문들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전문들이 유럽의 파리에서 감청, 해독되었음을 밝

---

1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연희, 2018, 『전신으로 이어진 대한제국, 성공과 좌절의 역사』, 혜안; 김현미, 2019, 「일본의 한반도 군용 해저 통신망 구축과 '제국' 네트워크」, 『崇實史學』 43; 박진홍, 2018, 「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전신선 가설」, 『한국근현대사연구』 84; 이승희, 2005, 「청일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한국파견'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1.

2 有山輝雄, 2013, 『情報覇権と帝国日本 I: 海底ケーブルと通信社の誕生』, 吉川弘文館; 2013, 『情報覇権と帝国日本 II: 通信技術の拡大と宣伝戦』, 吉川弘文館; 2016, 『情報覇權と帝國日本Ⅲ: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3 有山輝雄, 2016, 『情報覇權と帝國日本Ⅲ: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86~2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혔다. 이는 동아시아보다는 글로벌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글은 전신 감청과 암호 해독이라는 정보전쟁의 시각에서 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가 글로벌 전신망에 연결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동아시아 전신망이 러시아가 후견하는 덴마크의 대북전신회사(Great Northern Telegraph Company)와 영국의 동방확장회사(Eastern Extension Telegraph Company) 네트워크로 양분되는 원인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둘째, 청일전쟁 개전 무렵 일본이 청국의 암호를 해독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전과 시모노세키 강화회의를 유리하게 이끌었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청국 암호가 보안에 취약했던 원인 구명이 주된 논점이다. 셋째, 러일정보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일본이 청국의 암호를 해독했던 청일전쟁과는 달리 20세기의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전쟁의 양상이 개별국가 단위에서 정보 동맹의 차원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정보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정보 동맹 혹은 정보공동체(Five Eyes)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Ⅱ.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접속

최초의 해저 전신인 대서양 해저케이블(1858)이 신의 가호를 받고 탄생하였음에도 세속세계에서 그 신성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 뷰캐넌(J. Buchanan)이 해저케이블을 "신의 섭리에 따른 도구(instrument destined by Divine Providence)"로 명명했음에도[4] 그 불가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

4 D. R. Headrick, 2009, "Strategic and Military Aspects of Submarin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전신에 대한 불가침성 인정이 전신 네트워크를 사실상 독점한 영국의 기득권 유지에 대한 찬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패권이 강화될수록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는 전시에 절단과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해저케이블이 소멸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것이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 권력 강화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었다. 그 단초는 통신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인 검열 제도의 도입이었다. 전신의 국유화를 배경으로 기존의 우편 검열권이 새로운 통신 수단인 전신으로 확대되었다. 개별 전보에 대한 검열권을 인정받았던 영국의 우정청장(Postmaster General)은[5] 국제 케이블사업자에게 전신 착발신 기기를 우체국의 기기와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국제 전신은 우정청을 경유하여 착발신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국제 전보의 착발신을 전신 회사와 별도의 키스테이션(key station)을 경유하도록 한 검열 방식은 이후 근대 정보전쟁에서 전문을 감청하는 방식의 원형이 되었다.

전신을 통한 정보통신은 국경을 넘는 네트워킹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19세기 중반부터 전신 관련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창설이 요구되었던 이유이기

Telegraph Cables, 1851-1945", *Communications Under the Seas: The Evolving Cable Network and Its Implications*, Edited by Bernard Finn, Daqing Yang, The MIT Press, p. 188.

5 Paul F. Scott, 2022, "The first interception Provision: Section 4 of the Official Secrets Act 1920", *The Journal of Legal History*, Vol. 43, No. 3, pp. 359~360. 영국의 경우, 1868년 전신법에 의거하여 우정청이 저렴하고 안정된 전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전신 기업을 국유화했다. 1868년 법 제30조는 우편 감청 사례에 따라, 비록 암묵적이지만 전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우체국과 관련된 공무에 종사하거나 우체국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반하여 전신 메시지 또는 전송을 목적으로 우체국장에게 위탁된 메시지의 내용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거나 감청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직무에 반하여(contrary to his duty)'라는 단서 조항은 그의 직무에 따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했다. 국가 간 전신 연결 방식, 표준 시간대 설정, 국제 전신 요금 산정 및 회원국 자격 등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창설이 절실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술과 코드의 표준화와 전보의 유통과 국제 전보 요금 규정을 통일하는 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1865년 국제전신연맹(ITU)이 파리에서 창설됨으로써 영불해저케이블(England-France Cable, 1851)이 최초로 부설된 지 14년 만에 전신은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이끌어냈다.

국제전신연맹 창립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된 이후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한 마지막 회의는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ITU 총회였다. 그 사이 제2차 비엔나 회의(1868), 제3차 로마 회의(1871)를 거치면서 국제 전신 관련 주요 아젠다를 둘러싼 각국 정부 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이후에 개최된 ITU 회의는 전신 요율표 작성 및 요금 정산 방식에 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다루는 실무회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러시아는 ITU 체제에 편입(1865)된 이후 국내 전신망 개선과 국제 전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방책 마련에 적극적이었다.[6] 러시아 전신 국장 뤼더스(Karl von Lüders)는 공익적 시각에서 국내 전신 요금을 인하(1866)함으로써 전신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했다.[7] 이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했던 그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국제 전신 요금 책정을 둘러싼 ITU 회의에서도 그는 상업적 이윤을 중시했던 민간 전신 케이블 회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ITU 베

6 Walter Kirchner, 1974, "The Industrialization of Russia and the Siemens Firm 1853-1890",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22, n. 3. pp. 324~325. 러시아 전신국은 1850년대 지멘스(Siemens)사가 러시아에 가설했던 전신선의 유지, 보수 부분을 1867년에 인수함으로써 지멘스사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7 Marsha Siefert, 2020, "The Russian Empire and the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1856-1875",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Transnational techno-diplomacy from the telegraph to the Internet*, De Gruyter Oldenbourg, pp. 23~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린 회의(1885) 전신 요율 위원회는 "단어당 과금을 하되, 최소의 기본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8] 그 결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신 회사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카르텔 형성이 목격되었던 반면 독일과 러시아는 전신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유라시아국가인 러시아의 ITU 가입은 유럽 전신네트워크의 동아시아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에 러시아의 대외 전신이 확장되는 과정은 독일 지멘스사의 퇴조와 덴마크의 대북전신회사(Great Northern Telegraph Company-이하 "GNTC"로 약함)의 약진이 교차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서양 해저케이블을 성공시킨 영국의 존 펜더(J. Pender)의 컨소시엄과 덴마크의 티트겐(C.F.Tietgen)이 주도하는 GNTC 간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한 배경에는 러시아 황태자와 덴마크 공주의 혼사(婚事)가 있었다. 티트겐은 러시아 황태자 알렉산드르(Tsarevich Alexander)와 결혼한 덴마크 공주의 혼인(1866) 관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9] 그 결과, GNTC는 러시아 시베리아 전신선을 매개로 동아시아를 유럽과 연결하는 북방전신을 완성할 수 있었다.

1870년에 착공한 블라디보스토크-나가사키-상하이 해저케이블 공사는 1872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더욱이 북방전신은 존 펜더의 동방확장회사(Eastern Extension Telegraph Company-이하 "EETC"로 약함)가 부설(1871년 6월 초)한 인도-싱가포르-홍콩을 연결하는 남방노선과 경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신을 둘러싼 영러 대결을 본격화하는 단초가 되었다. 러시아의 후견을 받는 덴마크 전신 네크워크에 일본과 중국이 접속된 상황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이 영러 정보전쟁의 격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따라

8 J. Kniestedt, 1988, "The first 20 year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elegraph Conference in Berlin, 1885", *Telecommunication Journal*, Vol. 55, no. 9, pp. 612~614.

9 К. Якобсен, 2000, "Большое Север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Общество и Россия: 130 л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вете большой политики,"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No. 4, pp. 45~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전신이 근대정보전쟁의 필수 자산이 된다면, 영러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의 전신은 무역보다는 전략적 목적에서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에 접속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시베리아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러시아가 국제 전신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측면은 전신 검열 강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회에서 합의된(7.22.) ITU 협약 제7, 8조에서 전신의 감청과 차단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0] 제7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법률과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개인 전신의 전송을 중지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문화했다.[11] 이는 러시아 특유의 광범위한 국경지방의 불안정성과 반체제 혁명운동에 대한 대응책의 반영이었다. 차르 정부는 1863년 폴란드 반란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바르샤바 전신선이 절단되었고 1866년 차르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미수 사건을 겪으면서 전신 관리 강화와 혁명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 형법 제 60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전보 통신을 방해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러시아 내무부의 전신 검열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반체제인사와 혁명 세력에 대한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비밀경찰의 권력 또한 강화되었다. 이들은 외국공관의 우편물과 전신을 감청하여 해독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일종의 블랙 캐비닛(black cabinet)으로 내무성 경찰청의 지휘하에 있었다.[12] 따라서 이 같은 러시아 특유의 검열의 일상화는 전신에 대한 국가 감시와 통제 강화에 ITU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10 Jill Hills, 2006, "What's New? War, Censorship and Global Transmis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8(3), pp. 197~198.

11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Signed at St. Petersburg, July 10/22, 1875.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 No. 4, 1913. pp. 276~278. 제8조에 따르면, 개별 정부는 필요시 여타 정부에 즉시 통지하는 조건으로, 국제 전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12 Marsha Siefert, 2020, 앞의 글, pp. 29~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75년 ITU 협약에 의해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합법화가 인정되었다면, 통신비밀을 지켜내려는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된 것은 당연했다. 그 대응책의 요체는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의 사용이었다. 그러나 ITU 페테르부르크 협약에서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페테르부르크 협약 제6조에 따르면, 오직 국가기관만 기밀 암호 전문을 수·발신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간의 암호 전문은 이를 허용한 국가끼리만 통신이 가능했고, 다만 이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라도 그들 영토의 경유는 허용하도록 했다.[13] 민간의 암호 전문 사용 제한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대변했다.

첫째, 러시아는 전신에 대한 상시적 검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호 통신 급증은 해독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1872~1873년 러시아 외무성에 수신된 전보는 2만 1,107건이었지만 해독된 건수는 38%에 불과했고, 전문요원도 3~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 외무성 암호국 역시 재외공관에 보내는 전문의 암호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외국공관으로 보내온 기밀전문의 감청 및 해독이 본연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를 경유하는 국제 전문을 재전송할 경우,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 전문은 오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숫자는 알파벳보다 모스 부호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전신망의 신뢰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암호전문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알파벳이 아닌 숫자로 이루어진 전신 코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의 전신 코드가 혁신을 거듭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의제는 전신망의 중립화였다. 이는 1871년 ITU 로마 회의에서 미국 대표였던 사이러스 필드(Cyrus W. Field)가 제기했던 전시(戰時) 전신의 중립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

13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Signed at St. Petersburg, July 10/22, 187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58년 대서양 해저케이블 부설에 참여하였던 필드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해저케이블은 전시에도 파괴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1858년 대서양 해저케이블이 처음 작동했을 당시 뷰캐넌 대통령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낸 전보에서 "모든 기독교 국가는 신의 축복인 대서양 전신이 전시에도 통신할 수 있도록 영구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전시 "전신망 중립"에 대한 합의는 해저케이블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신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해저케이블은 육상 전신보다 검열과 절단의 위험이 덜 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케이블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개전 직전에 해저케이블이 적성국에 의해 절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1884년 3월 14일 파리에서 제정된 "해저케이블 보호를 위한 국제전신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Submarine Telegraph Cables)"에서도 케이블 보호에 관한 조문들을 규범화하면서도, 이 협약의 제15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전국의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 of belligerents)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15] 요컨대 교전국의 행동의 자유와 케이블의 불가침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신 네트워크는 근대사회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전시 전신망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망중립(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면서 영국의 해저케이블 정책도 일변했다. 이는 1885년부터 영국의 전신선과 케이블은 외국 영토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올레드 루트(All Red Route)"정책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영국령(英國領)만 연결하는 통신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했다. 전신

14 D. R. Headrick, 2009, 앞의 글 p. 188.

15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Submarine Telegraph Cables (Paris, 14 March 1884), Article XV: "It is understood that 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do not in any way restrict the freedom of action of belligerent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영국이 정보유통의 경제성보다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던 올레드 정책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영국 재무상 힉스비치(M. Hicks Beach)가 1885년에 부설한 홍콩-거문도 해저케이블을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거문도 케이블은 기존의 홍콩-상하이-나가사키 노선을 경유하지 않고 홍콩에서 직접 거문도를 케이블로 연결한다는 의도였지만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새로운 케이블 부설에 8만 5,000파운드가 지출되었음에도 거문도에서 철수하면서 케이블을 단지 1만 5,000파운드에 매각했기 때문이다.[16] 거문도 케이블은 예산상의 문제를 초래하였지만, 러시아 남하 저지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의 산물이기도 했다. 영국이 한국의 대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으로 청국의 속방화 정책을 측면 지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이후 한국 최초의 육상 전신인 서로전선(西路電線)이 부설(1885)되었다. 인천-서울-의주-봉황성(鳳凰城)을 연결하는 서로전선의 부설 비용[은(銀) 10만 냥]은 청국의 대한(對韓) 차관의 형식을 빌린 홍콩·상하이 은행(Hong kong-Shangai Bank) 자금이었다. 청국 전보상국(電報商局)이 한국 정부에 20년 상환 무이자 차관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톈진의 회풍은행(香港上海銀行)의 재정 협력이었다.[17] 그 결과 청국은 영국의 재정 협력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신을 청 제국의 전신망에 포섭할 수 있었다.

청국의 한국전신망 포섭계획은 한청간의 대등한 전신 접속보다는 청 제국 전신망의 일부로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골자였다. 한성전보국(漢城電報局)을 설립하여 화전국(華電局)의 한국총국으로 삼고, 총판과 각 지방 분국 위원 역시 청국 관리를 임명한 것도 한국의 전신망 지배 계획의 일환이었다.[18] 이 계획

16 P. M. Kennedy, 1971, "Imperial Cable Communications and Strategy, 1887-1914",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86. No. 341. pp. 732~733.

17 有山揮雄, 2016, 앞의 책, 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명문화한 조중전선조약(朝中電線條約, 1885.7.17.) 제1조에 따르면, 서로전선의 가설과 관련 비용은 청국이 차관의 형식으로 조달하되 한국 정부가 연한을 정하여 소요 경비를 상환하며, 화전국에서 차관을 대여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했다.[19] 결국 한국 정부에 차관의 상환 의무를 부과한 대신 전신의 관할권은 청국에 귀속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조중전선조약은 한반도 전신에 대한 청국의 독점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 전신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과 상충된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는 '한일해저전선가설의정서(朝日海底電線設置議定書,1883.3.3.)'의 제2조 "조선은 타국 정부와 회사에 해저 전신선의 이익에 대항하는 전선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조문과 충돌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신을 청국에 복속시키고자 한 이홍장(李鴻章)의 계획은 한반도 전신 주도권을 둘러싼 청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Ⅲ. 청일정보전쟁과 일본의 청국 암호 해독

청일 개전 무렵 일본은 청국의 암호를 해독했다. 이는 일본이 청국에 대승을 거두는 배경이 되었으며 시모노세키 강화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근거가 되었다. 일본이 청국 암호를 해독했던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망(1909) 30주년이 되는 해에 출간된 『기밀일청전쟁(機密日淸戰爭)』을 통하여 비로소 알

18 冯超, 2007, 「甲午战争时期中国电报局的作用」, 『安徽教育学院学报』 第25卷 第5期, 23~28쪽. 平壤局 위원으로 왕석지(王锡祉), 義州局 위원 장정주(张廷桂)가 임명되었다.

19 『高宗實錄』, 高宗 22年(1885) 6月 6日. 朝中電線條約 제6조에 따르면, 中國電報商局이 톈진의 홍콩·상하이 은행(匯豐銀行)자금 은(銀) 10만 냥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0 有山揮雄, 2016, 앞의 책, 60~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졌다. 『기밀일청전쟁』에는 전전 및 강화회의 기간에 일본 측이 해독했던 37통의 기밀 전보(李鴻章總理衙門其他來往秘電)가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1] 그렇다면 청의 기밀 전신이 감청과 해독에 취약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근대 세계 형성에 기여했던 전신(Telegraph)에 대한 청 정부의 초기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1865년 청국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던 공친왕(恭亲王)은 주청 러시아 공사 블란갈리(А.Г.Влангали)에게 구리 전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전신 시스템을 시험해본 결과 매우 불편했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22] 불편함의 요체는 점과 대시(dot & dash)를 사용하는 모스(Morse) 부호와 표의 문자(表意文字)인 한자는 공생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한자는 근대를 상징하는 모스 부호와 호환이 불가능했다.

이는 근대 초기 서구 과학 기술과 문물 수용에 대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원인이기도 했다. 동시에 중국의 근대화가 전신과 상생하기 곤란한 한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한 이유였다. 환언하면, 중국의 암호 전문 역시 표의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암호 해독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결국 청국의 암호보안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보통신에 적합한 중국어 개혁이 필요했다.

중국에서 전보를 사용하려면 한자를 모스부호로 전송하기 위한 중간 기제가 필요했다. 코딩(coding)이 그 방법이었다. 이는 개별 한자에 4자리 숫자를 부여하여 코드화함으로써 전신으로 숫자를 송수신하는 방식이 고안된 이유였다. 이 문제가 중국인이 아닌 덴마크의 대북전신회사의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신 회사의 수익 창출은 전신 사용자의 저변 확대와 중국 내 전신 네트워크 확장과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전신을 통한 정보전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발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덴마크 천문학자 한스 쉘

21 伊藤博文 編. 1967, 『機密日清戦争』, 原書房, 266~295쪽.

22 Erik Baark, 1997, *Lightning Wires: the telegraph and China's technological modernization, 1860-1890*. Greenwood Press. p. 6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레럽(Hans Schjellerup)과 상하이 항만관리자인 비귀에(S. A. Viguier)의 헌신으로 코드북(codebook)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23] 그 결과 대북전신회사는 1872년 비귀에가 편찬한 중국어 코드북 『전보신서(電報新書)』를 출간할 수 있었다.

비귀에의 『전보신서』 출간은 전신 수발신의 편의가 목적이었지만 그 본질은 중국어 전보의 암호화를 의미했다. 『전보신서』는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 자주 쓰는 상용한자 6,899개를 추출하여 0000부터 9999까지 개별 한자에 4자리 숫자를 부여한 것이었다. '○○○一'는 한자 '一', '○○○二'는 '丁', '○○○三'는 '七'을 나타내는 이 코드북은 숫자의 순서가 코드북 편찬의 원리였다.[24] 『전보신서』는 『강희자전』에서 선별된 한자를 부수(214개)에 따라 '一'에서 부수(部首) '약(龠)'자까지 분류하고 각 부수별로 획수에 따라 상용한자를 배열했기 때문이다. 이에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한자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수와 획수에 따라 한자를 찾아 그에 상응하는 숫자를 인코딩해야 했다. 따라서 청의 전보 수발신자는 동일한 코드북을 지참해야만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했다. 요컨대 청대의 전보는 코드북이 있어야만 해독이 가능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일반 전문과 기밀 전문의 경계는 높지 않았다.

청조가 전신 도입 초기부터 보안 유지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전신에 내재된 기밀 유지의 취약성이 있었다. 이는 중국의 근대사상가 정관응(鄭觀應)이 전신 건설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별약암호(別約暗號)"라는 통신보안의 해법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했다.[25] 이 암호의 특징은 『전보신서』의 코드를

---

23 Erik Baark, 1997, 위의 책. pp. 84~86. 쉘레럽은 대북전신회사 티트겐의 제안에 따라 1870년 초 5,454개의 한자를 선정하여 전통적인 한자 사전 편찬 방식에 따라 개별 한자에 4자리 숫자의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24 Zhang Wenyang, 2018, "The grammar of the telegraph in the Late Qing: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Chinese telegraphic codebooks",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12-2, pp. 229~230.

25 "별약암호(別約暗號)" 방식을 정관응이 제안했다는 夏维奇의 학설과 달리, 울룩 쿠주글루는 『전보신서』를 편찬한 비귀에가 창시자라는 학설을 제시했다. 울룩에 따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반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수시로 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발신자가 덧셈 또는 뺄셈할 숫자를 수신자에게 확인시키고 그에 따라 덧셈 또는 뺄셈을 수행한 코드를 전송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전신국 직원은 전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반면 수신자는 역산(逆算)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받는 방식이었다.

비귀에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은 정관응이 제안한 해법은 향후 청조의 오랜 기간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이 되었다. 이 방식의 효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한 인물이 북양대신 이홍장이었다. 1880년 그는 청조 최초의 전신선인 톈진(天津)-상하이(上海) 노선 가설을 상주할 당시, 정관응의 방안을 기밀누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요사안을 비밀리에 전할 경우, 별도의 암호를 설정함으로써, 전신선 관리자도 알 수 없기에 누설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26] 따라서 청국 정부의 초기 전신 암호는 『전보신서』의 개별 한자 고유번호에 별약암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청국의 암호가 『전보신서』와 별약암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음에도 기밀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지속되었다. 이는 별약암호가 정보 보안의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 사전에 만나서 가감해야 할 숫자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불편한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국의 암호보안 강화 방안은 두 가지 방향에 집중되었다. 하나는 인적 보안이다. 이는 한자를 전신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코드북을 제3자가 입수할 경우, 기밀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신 사무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는 통신보안 차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중국인 요원들로 전신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신 학교의 설립은 필수였다. 1876년 4월 7일 1년 과정의 중국 최초의 전신 기

면, 비귀에는 1872년 발간된 『전보신서』에서 키넘버(key number)를 사용하여 암호문 제작 방식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米)"의 고유 숫자가 4149인바, 키넘버를 5555로 할 경우, 4149+5555=9694 (Modulo 10)가 된다는 것이다. Ulug Kuzuoglu, 2018, "Chinese cryptography: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and intelligence management, 1927-1949", *Cryptologia*, 42:6, pp. 517~518.

26 夏维奇, 2009, 「晚清电报保密制度初探」, 『社会科学辑刊』 第4期, pp. 113~1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술학교인 푸저우(福州) 전보학당(電報學堂)이 정식 개설된 것도 외국인을 대체하여 중국인 요원들로 전신 운용하기 위함이었다.[27] 다른 하나는 도덕성이었다. 통신보안을 위해서는 중국 전신 관리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기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국 기밀전문의 보안은 전신 담당자들과 그들의 도덕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청국 정부가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통신보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 또 다른 분야는 한자와 라틴어 알파벳의 공존 문제였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공생이라는 불가능 해보는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궁극의 통신보안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 정부는 전신 도입 초기부터 한자와 알파벳의 공생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청국은 인간과 전신 기술 그리고 암호라는 정보통신의 3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자 했다. 따라서 청국이 주목한 정보 보안을 위한 또 다른 방책은 알파벳과 한자의 공존이 가능한 코드북의 혁신에 그 방향이 맞춰졌다.

비귀에의 『전보신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편찬되었다면, 중국인의 시각에서 전신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코드북이 『전신신법(電信新法)』이다. 이 코드북은 1870년 톈진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폭동 사건인 톈진 교안(教案)과 관련, 프랑스로 파견된 사과(致歉) 사절단의 번역관 장덕이(张德彝)가 편찬했다.[28] 1870년의 청국 전신은 국내 전신망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북전신회사의 케이블도 1870년 12월 8일 청조의 허가 없이 상하이에 무단 육양(陸揚)되어 있는 상황이었다.[29] 이에 프랑스 파견 사절 단장인 삼구통상대신(三口通商大

27 Erick baark, 2001, “Wires, Codes and People: The Great Northern Telegraph Company in 1870-90”, *China and Denmark: Relations Since 1674*,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pp. 134~135.

28 ZHANG Wenyang, 2018, 앞의 글, pp. 230~231.

29 Jorma Ahvenainen, 1981, *The Far Eastern Telegraphs: The History of Telegraphic Communications between the Far East, Europe and America before the First World War*. Suomalainen Tiedeakatemia: Helsinki, pp. 43~4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臣) 숭후(崇厚)와 총서 간의 긴급 연락을 위해 국제 전신이 시도되면서 비귀에의 『전보신서』 초고가 시험대에 올랐다. 장덕이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인 사용자 입장에서 『전보신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별도의 코드북 편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장덕이의 『전신신법』은 한 페이지당 가로 세로 각 10개의 한자를 배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100개의 한자를 수록했다. 한자를 쉽게 찾아 코딩하고 해독하기 위함이다. 숭후는 『전신신법』 서문에 "서양인이 만든 한자와 서양어를 절충한 전보 서적을 개정하고 목록을 추가했다"고 평가했다. 이 코드북이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널리 사용된 이유는 청국의 해외공관과 총리아문 간의 통신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30] 따라서 『전신신법』(1871)은 최초의 중국인 사용자에 최적화된 코드북이 되었다.

1870년대 후반부터 청국의 공식 사절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파견되면서 종래의 『전신신법』 단본(單本)에 의존하던 코드북이 다양화되었다. 이는 주영불공사(駐英佛公使) 증기택(曾紀泽)과 주독공사 이풍보(李鳳苞)가 통신보안을 위해 새로운 개별 코드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편집하고 제정한 코드북은 각자 암호를 약정한 별약 암호집이었다. 이에 중국 코드북의 단본 시기에서 다본 병용 시기가 열리게 되었다. 코드북의 다본화는 국제 통신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본 코드북이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한자와 라틴 알파벳의 공존과 조화의 방식을 모색하는 출발점의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주영불공사로 임명된 증기택은 이홍장의 건의 따라 임지에 도착 후 사용할 코드북을 사전에 제작했다. 이는 그가 1878년 8월 25일 이홍장을 알현했을 당시, 새로운 코드북을 만들어 별약암호를 통해 기밀 전문을 송수신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홍장을 비롯한 청의 고위 관료들 역시 외교 전문의 기밀 누설 방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었음을 방증하고 있었다.

청국의 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실천 방식이 정착되어가는

30 夏维奇, 2009, 앞의 글, 113~1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또 하나의 난제는 통신비용 문제였다. 국제전신회사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암호 전문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신 이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알파벳 기반의 전문에서 숫자를 사용한 암호를 사용하거나 일상용어에 대한 코드북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관용구를 코드북으로 제작할 경우, 숫자를 활용하여 복잡한 메시지를 저렴하게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전보 의존도가 높았던 로이터(Reuter) 통신 역시 1860년대 중반부터 코드북을 사용하고 있었다.[31] 따라서 한자를 전신으로 전달하기 위해 코드북을 사용했던 청국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코드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신회사들이 코드 및 암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는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ITU(국제전신연맹) 총회였다. ITU 회원들은 187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외국 전보'에 관한 규정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전신 요금의 이원화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유럽 내부의 전신은 공공성을 중시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민간 기업이 부설한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는 유럽 외부 지역과의 통신 요금은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데 있었다. 그 결과 유럽 내의 전보가 유럽 이외의 지역과 연결되는 전신 요금에 비해 훨씬 저렴해지는 이중구조가 성립되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구별하는 이중 요금제의 논리는 "전신왕(The King of cable)"으로 불렸던 존 펜더(J. Pender)가 제시했다. 그는 통신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부 측의 논리에 맞서 유럽의 민간 전신 기업들의 주주들은 동시에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전신 요금 인하는 세수의 감소와 주주 이익 손실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전신의 공공성을 강조한 정부 측과 전신의 정치화로 맞선 기업가의 논쟁은 요금을 유럽의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

31 Simone Müller, 2015, "Beyond the Means of 99 Percent of the Population: Business Interests, State Intervention, and Submarine Telegraphy", *The Journal of Policy History*, Vol. 27, No. 3, pp. 450~4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뤘다.[32] 그 결과 1879년 런던 ITU 회의에서 이중 요금제가 확정되면서 청국의 전신 이용 요금 역시 인상되었다.

전신 비용 상승은 청국 코드북의 혁신을 요구했다. 알파벳 기반의 유럽 전신에서 숫자의 사용은 암호로 간주되어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4자리 숫자로 코딩된 청국 전문은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전신신법』에 근거한 청국의 전보는 한자 전송을 위한 불가피한 코딩이었지만 유럽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통신 규정에 따라 국제 전신에서 3자리 숫자까지 한 글자로 인정함에 따라 4자리 숫자로 코딩된 한자는 2글자로 간주되었다. 이에 한자 100자로 작성된 전문을 국내 전신으로 발송할 경우 10위안을 넘지 않았지만, 이를 영국과 프랑스로 전송할 경우 약 300위안이 소요되었다.[33] 따라서 청국이 전신 요금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은 코드북을 새로운 방식으로 편찬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주영공사 증기택이 고안한 전신 비용 절감책은 유럽인들의 코드북 모방이었다. 그는 상용구(常用句)를 코드북으로 만들어 숫자로 수발신하는 유럽의 관례에 착목하여, 중국어 역시 4자리 숫자 코딩 방식과 별개로 관용구를 숫자로 만든 코드북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세관원들이 영어 사전에서 상용구를 발췌하여 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증기택이 편찬한 코드북이 『전구집금(電句集錦)』(1880)이다. 이 코드북은 상용구에 5자리 고유 숫자를 부여하여 조응시키는 방식으로 편찬한 것으로 영국 코드북이 모델이었다. 『전구집금』에 근거한 5자리 숫자 코딩 전문에도 두 글자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34] 따라서 증기택의 『전구집금』은 『강희자전』에서 선별한 개

32 Simone Fari, 2020, “Telegraphic Diplomacy From the Origins to the Formative Years of the ITU, 1849–1875”,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pp. 186~188.

33 ZHANG Wenyang, 2018, 앞의 글, pp. 233~234.

34 ZHANG Wenyang, 2018, 위의 글, pp. 233~2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 한자에서 관용구와 문장으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국 코드북의 혁신에 일조했다.

증기택의 상용구 사용 방식과는 별도로 주독 공사 이봉포(李鳳苞)가 고안한 전신 요금 절감책은 4자리 숫자 코드를 3자리로 변경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상용 한자 가운데 우선 999자를 선별하여 3자리 고유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4자리 숫자를 두 글자로 간주하던 요금 규정에 대응했다. 나아가 이 방식을 발전시켜 3자리 숫자를 3자리 알파벳으로 대체함으로써 1만 7,576개(26*26*26)의 알파벳 조합에 상응하는 한자를 전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가 1881년에 편찬한 『전보간편(電報簡編)』은 전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한자 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모스부호에서 숫자보다 알파벳이 더 간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총리아문과 해외 공관의 왕복 전문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보간편』은 한자를 알파벳 코딩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35]

한자를 전송하기 위한 코딩 방식의 진전을 배경으로 청국 정부가 전신을 국가의 기간 통신으로 수용한 계기는 1879년 일리(伊犁)문제로 불거진 러시아와의 전쟁 위기였다. 청국의 전신 발전의 동인은 통상보다는 전쟁 위기였다. 일리 위기를 계기로 톈진에 전보총국(電報總局)이 설치(1880)되었고 상하이-톈진 전신선 가설(1881) 및 청국 전역으로 전신을 확장하는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전신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보급형 코드북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홍장의 측근으로 전보총국의 총판에 임명된 성선회(盛宣懷)가 『전신신법』을 바탕으로 1만 개의 상용한자로 편찬한 『전보신편(電報新編)』이 그 결과물이었다. 아울러 덧셈과 뺄셈을 활용한 암호화 방식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었다.

1880년 러청전쟁 위기가 보급형 코드북의 편찬 계기였다면, 관용 기밀전신 전용 코드북의 개발은 청불전쟁(Sino-French War)이 그 동인이었다. 1883년 말 청불전쟁 발발을 계기로 총리아문은 다양한 코드북 사용에서 비롯된 수발신

35 夏维奇, 2009, 앞의 글, 1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혼선을 피하고 정보 통제를 위하여 『전신신법』 개정판을 배포했다. 관용 암호 전용 코드북을 만들기 위해 총리아문은 장덕이가 편찬(1871)했던 『전신신법』을 1883년과 1888년 개정하여 완성본을 만들었다. 총서는 관용 코드북을 배포하면서 비밀 보관의 원칙과 외부에서 이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36] 전신신법의 개정판을 보급하고 엄격한 기밀 유지를 강조했음에도 청국 암호는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국의 암호는 전시에 교전 상대국이 코드북 개정판을 은밀히 매수할 경우, 기밀전문의 비밀 누설을 방지할 대책은 거의 없었다.

이에 나가사키 사건(1886)[37]에서 청국 수병이 분실한 코드북을 일본기관이 입수한 것이 청일전쟁 개전 무렵 일본이 청국의 암호를 해독한 계기가 되었다는 통설[38]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청국 코드북 입수 경위를 "우연"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연론의 근거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 자료실에 소장된 나카타 다카노리(中田敬義)의 저작 『日淸戰爭ノ前後』(1938)이다. 저작에 따르면, "… 메이지 19년에 지나(支那)의 어떤 수병이 나가사키에서 소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구레 다이고로(呉大五郎)라는 사람이 지나의 전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지나는 알파벳이 없는 나라이므로, 자전(字典)에서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문자를 제외하고 잘 사용하는 문자에 1,2,3,4의 숫자를 방기(傍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자전이 작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쪽의 전신부(電信簿)였고, 그 책이 외무성에 있다. …."[39] 요컨대 일본은 우연히 주운

---

36 ZHANG Wenyang, 2018, 앞의 글, p. 237. 총리아문은 전신을 통한 교신의 통제, 감독권 유지를 위해 코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1888년 이후 적어도 아홉 가지 버전의 코드북이 발행되었다.

37 "나가사키 사건(長崎事件)"은 1886년 8월 나가사키에 기항한 청국 군함 "정원(定遠)호" 수병들과 일본 군경의 충돌로 나가사키 시민들이 청국 수병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한 폭동 사건이다. 청일 양측에서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张礼恒, 2006,「伍廷芳与中日长崎事件」,『东岳论丛』第27卷 第 2期, 150~154쪽.

38 吕万和,1979,「甲午战争中清政府的密电码是怎样被破译的」,『历史教学』第6期, 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작은 자전에 근거하여 청국의 기밀 전문들을 해독해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총리아문이 관용 기밀전문의 코드북을 개정한 것은 1888년이고 이후 광서 16년(1890)에 재차 개정했다.[40] 아울러 별약(別約)암호 사용도 병행했다. 이에 일본이 청국의 기밀 전문 해독을 위해서는 적어도 1890년 이후 개정된 『전신신법』 코드북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했고 청국 공사관의 전문을 감청하여 별약암호(key number)를 찾아내야만 했다. 따라서 일본의 청국 암호 해독은 나가사키 사건(1886)에서 주운 자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우연론보다는 개정된 코드북을 비밀리에 매수하여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청국 기밀전문의 별약암호인 암수(key number)를 찾는 작업에 착수한 시점은 1894년 6월 22일이다. 이 무렵 일본이 총리아문의 1890년 개정판 코드북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청국의 기밀 전문은 코드북과 암수(暗數)라는 이중장치로 잠겨 있기 때문에 코드북을 확보한 즉시 별약 암수를 찾는 수순을 밟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주일청국공사 왕봉조(汪鳳藻)에게 조선 주둔 일본군의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제1차 절교서"(6.22.)를 보냈다. 왕공사가 이를 암호 전문으로 총리아문에 보고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6월 23일 왕공사는 총리아문에 장문의 암호 전문을 발신했고 일본 외무성 전신 과장 사토 아이마로(佐藤愛麿)는 이 전문을 감청, "제1차 절교서"와 대조할 수 있었다.[41] 그 결과, 암수(暗數)를 찾아냄으로써 일본은 청일전쟁 개전 무렵 청국의 기밀 전문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42]

---

39 中塚明, 1992, 『蹇蹇錄ノ世界』, みすず書房, 62~63쪽.

40 吉辰, 2014, 「马关议和清政府密电问题考证补」, 『山東社會科學』 第6期, 116~117쪽. 광서 16년(1890)에 재차 개정된 전신신법은 '신신법(新新法)'이라고 칭했다.

41 中塚明, 1992, 앞의 책, 70~71쪽.

42 Gregory Nedved, 2018,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artially decrypted", *Cryptologia*, 42-2, pp. 97~9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러일정보전쟁과 러시아의 일본 암호 해독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는 일본의 기밀 전문들을 해독했다. 주러일본공사관 무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대령이 1905년 말 참모본부에 제출한 그의 활동 보고서 낙화유수(落花流水)에서 이를 밝혔기 때문이다.[43] 아카시는 러시아 비밀경찰 '오흐라나(Охрана)'가 자신과 핀란드, 폴란드 및 조지아 독립운동가들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그의 편지 검열뿐만 아니라 암호 전문까지 해독했다고 보고했다.[44] '오흐라나'가 수집한 아카시 대령의 러시아 후방교란 작전 관련 증거 자료들은 전후 그가 유럽에서 축출되는 빌미가 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일본의 기밀 전문을 어떻게 감청하고 해독했을까?

아카시 대령의 보고는 일본의 기밀 전문들을 러시아에서 해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러일 개전을 앞두고 기밀전문의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통신보안 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의 요체는 일본의 대외전신망을 독점적으로 부설, 운영하고 있던 대북전신회사(GNTC)의 배제였다. 일본 군부가 대러 전쟁을 상정할 경우, 제1순위로 배제해야 할 기업으로 친러성향의 GNTC를 꼽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의 모친이 덴마크 왕실 출신이었고 GNTC 역시 덴마크 기업인 점은 상술한 바 있다. 대북전신회사가 부설했던 블라디보스토크-나가사키-상하이 전신에 의존한 유럽과의 통신을 전시에도 지속한다면, 비밀누설 위험은 고조될 수밖에

---

43 Antti Kujala, 2005, "The Japanese General Staff and the Issue of Concerted Anti-Government Action in the Russian Empire, 1904-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Volume I, pp. 261~263.

44 National Archives, Record Group 263: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aris Okhrana 1885-1905, L. 1-12. 오흐라나는 1881년 황제 알렉산드르 2세 암살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공안기관으로 혁명 세력 감시, 추적 및 체포가 주요 목표였다. 尙友倶樂部, 2014, 『寺內正毅宛明石元二郎書翰. 付『落花流水』原稿 (『大秘書』)』, 芙蓉書房出版, 172~1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없었다. 따라서 일본 참모본부 제3부(운수, 통신 담당)는 이미 1901년 말부터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참모본부 제3부의 의견서에서 제시된 대책은 GNTC 전신망 대체재 개발이 핵심이었다. 테라우치(寺內正毅) 참모본부 차장을 통해서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次郎) 육군 총무장관에게 전달(1901.12.21.)된 이 의견서는 우선 일본 대외 통신의 전반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다.[45] 그 요지는 일본과 구미를 연결하는 대외 전신은 대북전신회사의 전신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전신망은 대북전신회사의 시베리아 전신(상하이-나카사키-블라디보스토크)과 동방확장전신회사(EETC)의 지중해 전신(상하이-싱가포르-인도-수에즈-유럽)이 있으나, 영국계 EETC의 전신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상하이의 대북전신회사 전신국을 경유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상하이 전신국은 동아시아 전신의 허브로서 이곳으로 집중된 유럽행 전신을 시베리아 전신과 지중해 전신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군사정략상 불안을 해소하고 기밀누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책은 대북전신회사가 구축한 기존의 전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으로 전송되는 노선의 확보에 있었다. 예를 들면 태평양횡단 해저케이블 부설이 그 해법이었다.

이와 더불어 의견서에는 대북전신회사가 부설(1884)한 대한해협 해저케이블을 대체할 해법 또한 제시되어 있었다. 의견서는 일본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결하는 GNTC의 해저케이블에 의존하지 않는 방책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GNTC로부터 기존의 해저케이블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둘째, 일본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한일 해저케이블 포설(布設)이다. 이를 위해 시모노세키-부산 해저케이블 증설을 위한 전신 재료를 평시에 준비하여 체신성에 보관한다는 세부 방침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GNTC가 한일 해저케이블을 일본에 매각하지 않고 일본의 독자적

45 「次長より陸軍總務長官へ案」, 參秘第235号1, 12月 21日 移牒, Jacar C09122712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일케이블 증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이 대한해협 해저케이블을 독자적으로 증설할 경우, 이는 GNTC에 케이블 부설독점권을 부여한 협정(1882.12.28.) 제6조 위반이었다.[46] 더욱이 대북전신회사는 일본 체신국장 고마쓰 겐지로(小松謙次郎)가 러일전쟁 기간 중 한일 해저케이블 매수 협상을 제의(1904.9.20.)해오자, "전시 중립"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중립은 유럽 열강 사이에 위치한 덴마크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기밀 유지와 통신보안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신회사와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해법은 친러기업의 전신망을 회피하여 구미 국가들과 소통 가능한 우회로의 확보에 있었다. 일본 정부가 고안해낸 우회로는 대만-푸저우(福州)-홍콩 라인이었다. 이는 1902년 10월 22일 청정부가 GNTC에 베이징-캬흐타 전신 부설권을 허가하면서 영국의 EETC에게도 홍콩의 샤프 피크(Sharp Peak)-푸저우 전신 독점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청 정부는 중국 전신 시장을 양분했던 이들 회사에 영업권 확대를 보장하는 대신 이익 배분과 간접비 징수 방식으로 재정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47] 이에 1903년 12월 26일 일본 해군성이 대만총독부 해군참모장 야마가타 분조(山縣文藏)에게 보낸 훈령에서 향후 주요 전보는 대만을 경유해서 전송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일본은

---

46 Eiich Ito, 2007, "The Danish Monopoly on Telegraph in Japan- A case study of an unequal communication system in the Far East", *Keio communication review*, No. 29, pp. 91~92. 일본 정부와 대북전신회사가 약정(1882.12.28.)한 면허장(對大北電信會社海底線陸揚免許狀) 제6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허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20년간 일본과 아시아 대륙, 또는 그 근방 도서[대만, 홍콩, 루손(Luzon)군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부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전신회사 이외의 타 회사에 해저전신선 부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47 Jorma Ahvenainen, 1981, 앞의 책, pp. 154~156. 청 정부는 푸저우의 난타이(南台)에 동방확장회사의 독자적 전신국 설치를 허가하여 홍콩의 Sharp Peak과 연결하는 전신의 독점권을 부여했다. 1903년 2월 말 극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전신선인 베이징-캬흐타 전신이 개통되었음에도 동방확장회사 전신의 사용량이 급증했던 이유도 일본 기밀 전문들이 전적으로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만총독부의 야마가타 분조가 기밀 전문들을 유럽어로 번역하여 영국 전신으로 발신함으로써 전송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기밀누설을 방지하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48] 그 결과 대만 경유 우회로는 동맹국 영국의 전신을 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통신보안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일본이 통신보안을 위해 대만 경유의 새로운 방패를 마련하였다면, 이를 무력화할 러시아의 창(槍)은 차르 정부의 방첩 기관들이었다.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의 방첩 업무는 육·해군 총참모부, 외무성, 그리고 내무성 경찰국에서 주관했다.[49] 해외 주재 러시아 무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던 총참모부 군사통계국 국장 첼레브로프스키(В. П. Целебровский) 소장이 군사 방첩의 중심이었다면, 국내외 일본인 첩보원 대상의 방첩 기관은 '오흐라나(Охрана)'로 불렸던 경찰청 산하 비밀경찰이 그 주역이었다. 1904년 7월 초 경찰청장 로푸힌(А. А. Лопухин)의 지시로 설치된 '오흐라나' 소속의 국제스파이수사국(Отделение по розыску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шпионстве)은 국제 공조수사를 원칙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이 대만 경유의 영국전신회사 노선을 통해 런던 및 유럽공관과 통신보안을 도모하였더라도, 영국 전신이 통과하는 친러성향의 유럽 국가와 공조할 경우, 그곳에서 일본의 전문을 감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동맹국 영국을 통하여 통신의 우회로를 확보했다면, 러시아 또한 동맹국 프랑스와 공조를 통해 대일 방첩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러시아는 1904년 10월에 이르러 주러 청국 공사관의 사실상 모든 서신과 전문에 대해 검열과 감청을 하고 있었다. 이는 비록 대북전신회사가 부인했지만 1903년 2월에 개통된 베이징-캬흐타 전신을 러시아 경찰청이 감청하고 있었

48 有山輝雄, 2016, 앞의 책, 289~291쪽.

49 Д. Б. Павлов, 1996, "Россий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No.1, pp. 14~15. 방첩에 관한 외무성과 경찰청의 업무 협력은 외무상 람즈도르프(В. Н. Ламздорф)와 경찰청장[로푸힌, 코발렌스키(С. Г. Коваленский), 라치콥스키(П. И. Рачковский)]을 통해 이뤄졌다. 방첩 기관이 얻은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황제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청 정부의 유럽통신은 캬흐타-상트페테르부르크-레이파야(Leypaja)-코펜하겐을 잇는 GNTC의 노선을 활용함으로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관은 유럽 주재 청 공사관으로 공문을 분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50] 따라서 청 정부의 코드북을 입수하고 감청 전문 사본을 확보한 러시아는 청국의 기밀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기밀 유지는 암호만큼이나 전신망의 통제가 관건이었다.

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일본공사관은 개전 직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의 공관 이전(1904.2.20.)을 계기로 러시아 비밀경찰의 감청과 서신 검열에서 벗어나 있었다. 아울러 일본은 청국과는 달리 영국 회사의 전신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통신보안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통신보안의 안정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배경에는 차르 정부의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 파견 결정(1904.4.19.)이 있었다. 러시아가 전쟁 초반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발트함대"로 알려진 제2태평양함대를 편성하여 일본 함대에 포위된 뤼순의 제1태평양함대를 구원한다는 전세 역전 프로젝트를 수립했기 때문이다.[51] 따라서 러시아 제2 태평양함대의 극동 원정 계획은 이를 저지하려는 측과 무사 항행을 보장하려는 측 간의 치열한 첩보전을 촉발했다.

1904년 4월 말부터 제2 태평양함대의 극동 항로에서 일본이 사보타주(sabotage)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집결되기 시작했다. 이에 함대의 이동 경로는 극비사항이었지만, 일본이 일종의 '점감요격(漸減邀擊)' 전략에 입각하여 발트해에서 수에즈 운하에 이르는 해역에서 함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획책할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1904년 7월 오흐라나는 정보채널을 통해 일본의 특무대가 흑해와 발트해로 비밀리에 이동하여 군함과 장비를 구입하고 러시아 함대를 겨냥한 파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52]

---

50 Д. Б. Павлов, 1996, 위의 글, p. 17.

51 В. Ю. Грибовский, В. П. Познахирев,1999, *Вице-адмирал 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СПб., pp.158~15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에 그 대비책으로 경찰청장 로푸힌이 서유럽 주재 일본 공관에 대한 감시망 조직의 필요성을 내무성에 보고(1904.8.3.)함에 따라 오흐라나의 국제스파이수사국의 활동 영역 역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서유럽에서 오흐라나가 일본 전문들을 감청하고 획득했던 장소는 국제 통신의 허브였던 프랑스 파리였다. 일본의 암호 전문들이 유럽의 공관이나 도쿄의 외무성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파리 우편체신국(post and telegraph office in Paris)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절차상 일본의 전문들은 이곳에서 비밀리에 복제되어 프랑스 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파리 주재 러시아 오흐라나에게 전달되었다. 이같은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보 협력은 일본의 기밀 전문을 프랑스가 감청하기 시작한 러일 개전 시점과 일치했다.[53]

러시아와 프랑스는 전제정과 공화정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정치체제를 유지하였음에도 1894년 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국이 되었다. 일종의 "계약 결혼"으로 평가받은 이 동맹은 프랑스에게는 독일의 침략에 대비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게는 프랑스의 자본조달이 본연의 목적이었다. 이는 러일 개전 무렵 러시아의 대외부채 400만 루블 가운데 300만 루블이 프랑스 투자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54] 따라서 러일전쟁 기간 프랑스의 적극적인 대러 정보 협력은 일본의 암호 전문을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52 Д. Б. Павлов, 2018,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Секретные операции на суше и на море*, М., pp. 90~152. 비밀경찰에서 입수한 헤이그 주재 일본 공사 미쓰하시(三橋信方)가 파리 주재 일본 무관에게 보낸 서신(1904.10.11.)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을 직접 파괴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유럽해역을 통과해야 했다. 이에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제2태평양함대가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야간항행 과정(1904.10.22.)에서 발생했던 도거뱅크(Dogger bank) 사건은 일본의 사보타주에 대한 러시아의 공포를 보여준 전형이었다. 이 사건은 진실규명을 위해 파리에서 국제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가 최초로 구성(1905.1.9.~2.25.)되었음에도 러시아 함대에 대한 사격 주체로 간주되었던 일본 수뢰정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53 Christopher Andrew, 2018, *The Secret World: A History of Intelligence*, Yale University Press, pp. 467~4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암호는 1904년 7월부터 해독되기 시작했다.[55] 이는 오흐라나의 방첩 임무 수행을 위한 국제스파이수사국 설치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국제스파이수사국장 마누일로프가 러시아 암호전문가 크리보슈-네마니치(Владимир Кривош-Неманич)를 대동하고 파리에 도착(1904.7.)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착 즉시 일본의 기밀 전문 해독을 위해 프랑스 경찰청 외사2국과 협업을 시작했다. 크리보슈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이었음에도 언어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인정받아 상트페테르부크 대학 동양학부로 진학하여 동 대학을 졸업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이후 그는 러시아 우정총국에서 외국 서신 검열과 외무성 정보과의 암호 해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56]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파리 우편 체신국에서 감청한 일본의 전문들을 토대로 프랑스 경찰청의 암호전문가 하버나(J. Haverna), 외무부 정보국 소속 육군 장교 바저리(E. Bazeries)와 암호 해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불 정보협력을 통해 제2 태평양함대의 극동 원정을 준비하기 위한 방첩 작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프랑스 경찰청과 마누일로프의 협력은 전문 감청뿐만 아니라 우편 검열로도 확대되었다. 이는 일본 공관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파리 경찰청의 주선으로 파리 주재 일본공사관에 근무하는 프랑스인 요원들을 소개받은 마누일로프는 이들을 통해 첩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주불공사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와 영국과 네덜란드 주재 일본 공사 그리고 일본 외

54 Boris Ananich, 2005, "Russian Millitary Expenditures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Volume I, pp. 449~451.

55 Inaba Chiharu, 1998, "Franco-Russian Intelligence Collaboration against Japan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05", *Japanese Slavic and East European Studies*, Vol. 19, pp. 9~10.

56 А. В. Бабаш, Е. К. Баранова, Д. А. Ларин, 2012,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Безопастность, История Защиты Информации в России*, M. pp. 390~393. 크리보슈-네마니치(1865~1942)는 프랑스와의 정보 협력을 통해 프랑스 암호 해독 기술을 전수받아 러시아 최고의 암호전문가로 성장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그는 소련의 정보기관에서 암호학을 강의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과의 왕복 서신에 대한 사본의 확보는 러불 정보 협력의 결과물이었다. 더욱이 러일전쟁 직전 개정된 일본 암호의 코드북[메이지 37년 암호표(明治 37年 暗號表)]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도 헤이그 주재 일본 공관의 현지 고용인들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57] 메이지 37년 암호표는 1874년부터 사용해오던 일본 고유의 "9×9 좌표식 코드북"[전신비호구구격(電信秘号九九格)]을 일본외상 고무라 주타로가 개정(1904.2.3.)한 것이었다. 이는 영어 평문을 알파벳으로 코딩했던 기존의 대외 기밀전문의 보안 강화가 그 목적이었다.[58] 그럼에도 일본의 코드북(메이지 37년 암호표) 매수와 같은 러불 컬래버레이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했던 프랑스가 동맹국 러시아의 승전을 위해 물밑 협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의 오흐라나 파리지부 역시 프랑스 정보국에 암호 해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답했다.

파리 주재 일본공사관의 기밀 전문에 대한 감청자료가 러시아로 전달된 마지막 날짜는 1905년 3월 12일이었다.[59] 이는 프랑스가 이날 이후부터 더 이상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지 않았고 이를 러시아에 보내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그것이 러일전쟁의 봉천(奉天) 전투(1905.2.20.~3.10.) 결과와 연동되었다고 보고 있다. 만주의 봉천 인근에서 벌어진 러일전쟁 최대의 지상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동맹국 러시아가 만주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 독일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러일 강화(講和)를 조속히 주선하여

57 Evgeny Sergeev, 2007,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in the War with Japan, 1904–05: Secret operations on land and at sea*, pp. 143~144.

58 大野哲弥, 2018, 『通信の世紀: 情報技術と国家戦略の一五0年史』, 98~99쪽; 大野哲弥, 2012, 『国際通信史でみる明治日本』, 76~77쪽. 아울러 기존의 5자리 숫자로 구성된 영문 암호에 암호키 15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를 나타내는 코드가 "11111"이라면, 15를 더해 "11126"으로 코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암호표도 2종류로 만들어 홀수달에는 1호, 짝수달에는 2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59 Inaba Chiharu, 1998, 앞의 글, p.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복귀하길 기대했다.[60]

프랑스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를 꺾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쟁 차관 지원 중단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1905.3.12.) 프랑스 은행단 대표들이 대러 차관 조건에 합의하였음에도 차관조약 서명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프랑스 은행단 대표들의 파리 소환 이유는 봉천 전투에서 러시아의 패전 소식 때문이었다.[61] 다른 하나는 상술한 러불 정보협력의 중단이었다. 자금과 정보가 차단된 차르 정부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 결국 암호 해독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지만, 전황의 변화 역시 암호 해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쓰시마해전(1905.5.27.~28.)에서 패배한 이후 러시아는 1905년 6월 12일 일본에 강화회의 개최 장소로 프랑스 파리를 제안했다.[62] 프랑스 정부 역시 파리 주재 러시아 비밀경찰과 프랑스 경찰국은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전문을 감청하고 해독했던 러불 정보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회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러일강화회의 개최지는 미국의 포츠머스로 정해졌다.[63]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9.5.)이 체결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1906년 6월 러시아 출판사 수보린(Суворин)에서 출간된 팸플릿 「러시아 혁명의 이면(裏面)-일본의 자금으로 촉발된 러시아의 무장봉기(Изнанка революции: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России на японские средства)」에는 아카시 대령과 핀란드 독립운동가 질리아쿠스(Koni Zilliacus), 조지아 혁명가 데카노지(G.

60 О. Н. Кузенцова, 2009,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1905 г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 3, p. 42.

61 Boris Ananich, 2005, 앞의 글, pp. 455~456.

62 『日本外交文書』, 第37卷·第38卷 日露戰爭 5卷, No. 235. “露國全權委員ノ任命竝會合地ニ關ツ提議ノ件.”

63 『日本外交文書』, 日露戰爭 5卷, No. 241, 242. 1905년 6월 25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제안한 워싱턴보다는 포츠머스를 제안하자 러일 양국은 이를 수용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ekanozi) 등과 주고받은 편지와 전문들이 실려 있었다.[64] 팸플릿의 발간 목적은 러시아 비밀경찰에서 확보한 이들 편지와 전문들을 증거 사진들과 함께 공개하기 위함이었다.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에서 무장봉기를 선동하고 혁명 정당들을 지원했던 주역이 바로 일본이었음을 폭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팸플릿 서문에는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은 러시아 혁명가들의 조국에 대한 배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이 종식되어 러시아는 일본과 갈등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음에도 왜 차르 정부는 이 팸플릿을 공개했을까? 문제는 이 팸플릿이 즉각 독일 언론에 유포되어 베를린 최대의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참모본부가 전후 러시아의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아카시 대령을 1906년 2월 독일 주재 무관으로 임명한 사실과 깊은 관련 있었다. 러일전쟁 기간 아카시가 러시아 후방교란 작전을 위해 유럽에 수립해놓은 정보망을 활용한다면, 임무 수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아카시를 위험인물로 간주했던 차르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 해법은 유럽에서 아카시의 축출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이 증오했던 혁명 세력들과 아카시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팸플릿을 러시아가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 결과 아카시는 독일 주재 무관으로 근무한 지 10개월 만인 1906년 12월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1907년 헌병대장 자격으로 출현한 곳은 한국이었다.

V. 맺음말

상술한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

64 Изнанка революции: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России на японские средства, Спб., 1906. 팸플릿의 분량은 20쪽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동아시아의 접속"에서는 근대 국제 통신수단인 전신이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되는 과정을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권력 강화의 메커니즘"으로서 전신 네트워크의 속성을 고찰했다. 이는 전신 네트워크가 전시(戰時)에 파괴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 때문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전신연맹(ITU) 총회(1875)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전신의 감청과 검열의 권한을 인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감청과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사례가 바로 암호였다.

둘째, "망 중립(Network Neutrality)"에 대한 국제 합의 무산이라는 관점에서 전신 네크워크의 취약성을 고찰했다. 육상 전신과 해저케이블로 연결된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는 세계무역 발전에 기여했지만 전시에 절단되거나 파괴될 취약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전시에도 전신망은 파괴하지 않는다는 "망 중립"의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었음에도 1884년 파리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전신 네트워크를 거의 독점한 영국의 전신 패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은 전신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변화를 겪게 되었고 홍콩과 거문도를 직접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부설(1885)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에 한국 최초의 육상전신선인 서로전선(1885)도 영국의 거문도 점령 직후 가설되었다. 대러견제의 전초기지로서 한반도 지정학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한반도 전신을 자국 전신망에 포섭하려는 청국과 한국 전신에 대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일본의 대립은 양국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제Ⅲ장 "청일정보전쟁과 일본의 청국 암호 해독"에서는 청일전쟁의 승전과 시모노세키 강화회의를 유리하게 이끌었던 일본의 청국 암호 해독의 원인을 고찰했다. 청국 암호가 쉽게 해독될 수 있는 취약성의 배경에는 전신을 통해 한자(漢字)로 통신할 수 없는 근대 통신 기술과 한자의 공생 불가의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한자를 모스(Morse)부호로 코딩하는 방식은 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적으로 평문과 암호문을 차별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기밀전문 보안은 코딩보다는 코드북을 소지한 관련자들의 도덕심과 애국심에 의존하는 인적 보안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중국 근대 암호는 문자와 소리를 구분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어 병음(漢語拼音) 방안이 도입(1958)된 것도 한자와 근대 통신 기술의 접목을 시도한 중국 전신 역사의 산물이었다.

제Ⅳ장 "러일정보전쟁과 러시아의 일본 암호 해독"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첫째, 암호 해독 주역의 진화이다. 암호 해독의 단위가 개별국가에서 정보 협력이 가능한 동맹 국가로 진화한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최초의 국제전쟁인 러일전쟁은 19세기 전쟁인 청일전쟁과 달리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와의 정보 협력이 암호 해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파리 주재 러시아 비밀경찰 오흐라나와 프랑스 경찰국이 러일개전 초기부터 적어도 1905년 3월 봉천 전투 시기까지 러불동맹을 배경으로 일본의 기밀전문 감청과 서신 검열에 긴밀히 협력한 과정과 내용을 정리했다.

둘째, 러시아의 제2 태평양함대의 극동 원정을 둘러싼 일본의 사보타주와 러시아의 방첩작전을 고찰했다. 이 과정에서 주러 일본 무관 아카시 모토지로 대령이 주도한 러시아 후방 교란작전과 혁명 정당 지원 관련 기밀 전문과 서신들이 러불 정보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증거 자료들은 아카시 대령이 유럽에서 축출되는 빌미가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Submarine Telegraph Cables(Paris, 14 March 1884).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Signed at St. Petersburg, July 10/22, 1875.

National Archives, Record Group 263: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aris Okhrana 1885-1905.

Изнанка революции: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России на японские ср едства, Спб., 1906.

단행본

김연희, 2018, 『전신으로 이어진 대한제국, 성공과 좌절의 역사』, 혜안.

伊藤博文 編, 1967, 『機密日清戦争』, 原書房.

大野哲弥, 2018, 『通信の世紀: 情報技術と国家戦略の一五0年史』, 新潮社.

中塚明, 1992, 『蹇蹇錄ノ世界』, みすず書房.

Ahvenainen, Jorma, 1981, *The Far Eastern Telegraphs: The History of Telegraphic Communications between the Far East, Europe and America before the First World War*. Suomalainen Tiedeakatemia: Helsinki.

Baark, Erik, 1997, *Lightning Wires,: the telegraph and China's technological modernization*, 1860-1890. Greenwood Press.

Sergeev, Evgeny, 2007,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in the War with Japan, 1904-05: Secret operations on land and at sea*, Routledge.

논문

김현미, 2019, 「일본의 한반도 군용 해저통신망 구축과 '제국' 네트워크」, 『崇實史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3.
박진홍, 2018,「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 전신선 가설」,『한국근현대사연구』, 84.
이승희, 2005,「청일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 가설 문제-한국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21.

吉辰, 2014,「马关议和清政府密电问题考证补」,『山東社會科學』第6期.
冯超, 2007,「甲午战争时期中国电报局的作用」,『安徽教育学院学报』, 第25卷 第5期.
吕万和, 1979,「甲午战争中清政府的密电码是怎样被破译的」,『历史教学』第6期,
夏维奇, 2009,「晚清电报保密制度初探」,『社会科学辑刊』第4期,
张礼恒, 2006,「伍廷芳与中日长崎事件」,『东岳论丛』第 27卷 第 2期.

Ananich, Boris, 2005, "Russian Millitary Expenditures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Volume I,
Fari Simone, 2020, "Telegraphic Diplomacy From the Origins to the Formative Years of the ITU, 1849-1875",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Headrick, D. R., 2009, "Strategic and Military Aspects of Submarine Telegraph Cables,1851-1945". *Communications Under the Seas: The Evolving Cable Network and Its Implications*, The MIT Press.
Hills, Jill, 2006, "What's New? War, Censorship and Global Transmis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8(3).
Inaba, Chiharu, 1998, "Franco-Russian Intelligence Collaboration against Japan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05", *Japanese Slavic and East European Studies*, Vol. 19.
Kennedy, P. M. 1971, "Imperial Cable Communications and Strategy, 1887-1914",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86. No. 341.
Kirchner, Walter, 1974, "The Industrialization of Russia and the Siemens Fir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53-1890",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22, n. 3.

Nedved, Gregory, 2018,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artially decrypted", *Cryptologia*, 42-2.

Scott, P. F., 2022, "The first interception Provision: Section 4 of the Official Secrets Act 1920", *The Journal of Legal History*, Vol. 43, No. 3,

Siefert, Marsha, 2020, "The Russian Empire and the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1856-1875",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Transnational techno-diplomacy from the telegraph to the Internet, De Gruyter Oldenbourg.

Zhang, Wenyang, 2018, "The grammar of the telegraph in the Late Qing: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Chinese telegraphic codebooks",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12-2.

Павлов, Д. Б. 2018,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Секретные операции на Суше и на Море*, М:СП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근대 동아시아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

최덕규

전근대와 근대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전신(電信, telegraph)의 사용 유무이다. 19세기 말 글로벌 전신 케이블 네트워크가 부설된 주된 목적은 통상 증진이었다. 이는 해저케이블 제작과 전용 선박 운용 관련 전문가 및 자본을 갖춘 영국이 부설 사업을 주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국의 패권적 지위가 종식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다. 유선에서 무선 통신 시대로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화의 시기에 글로벌 무역과 통상 증진에 최적화되었던 해저케이블은 정보 고속도로의 효용성이 인정되었지만, 전시에는 승전을 위해 파괴해야 할 1순위가 되고 말았다.

전신 네트워크가 전시에 파괴될 위험성을 내포하였음에도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국가 권력 강화의 메커니즘이라는 전신 네트워크 본연의 속성 때문이다. 국가가 안보를 빌미로 통신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논리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논리를 압도해왔기 때문이다. 1875년 국제전신연맹(ITU) 상트페테르부르크 총회에서 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전신 감청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합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에 감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른 대안이 바로 암호였다. 따라서 전신 감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암호는 근대 전쟁을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주제어: 정보전쟁, 암호, 전신 네트워크, 국제전신연맹, 통신보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Intelligence War and Cryptography in Modern East Asia: Focusing on the Sino-Japanese and Russo-Japanese Wars

Choi Deokkyoo

One of the criteria that distinguishes pre-modern warfare from modern warfare is the use of the telegraph. What allowed the telegraph network to evolve to the present day, despite the risk of its destruction in wartime, was its inherent nature as a mechanism for the consolidation of state power. The power of state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n the name of security overwhelmed the right of privacy. For this reason, the 1875 St. Petersburg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ITU) legalized state authority to intercept telegraph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ecurity and order. Ciphers emerg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evading interception and were inextricably linked to telegraph interception, leading to their development in modern warfa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ywords: Intelligence War, Cryptography, Telegraph,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ITU),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10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전쟁범죄

–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공준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I. 문제 제기: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동남아시아
II.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의 침략범죄
III. 침략과 해방 사이
IV. 점령과 지배의 이면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문제 제기: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동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후 연합국 11개국은 도쿄에 모여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을 실시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심판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주된 목적은 일본이 수행한 전쟁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주요 전범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재판에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공격은 불법적인 '침략(aggression)'으로 간주되었고, 전쟁을 주도한 주요 전범들은 '평화에 반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일본이 수행한 전쟁에서 침략의 대상은 어디였는가?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주요 연합국 국가인 미국, 영국, 네덜란드, 소련 등이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는 침략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이 전후에 재현한 '태평양 전쟁'의 서사는 진주만에 대한 불법적인 공습에서 시작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핵 공격으로 끝나는 구성을 취한다. 일본의 불법적 침략에 대항하는 미국의 '정의로운 투쟁'은 진주만의 복수를 위해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씩 수복해나가며, 결국에는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일본 본토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전쟁에 대한 서사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전장이 된 장소가 어디였는지 망각하게 한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영국령 말레이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태평양 전쟁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자원지대를 획득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은 서구 국가와의 전쟁이 필요했다. 일본에 있어 이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21)로 수행된 연구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쟁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을 내세우며 아시아 식민지의 독립을 약속하였고 동남아시아의 민족주의자를 협력자로 끌어들여 전쟁과 점령, 지배에 활용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전쟁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다. 동남아시아는 전쟁의 목적이자 대상이며, 전쟁이 수행된 장소였지만, 동남아시아는 전쟁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연합국이 주도하였고, 이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전쟁범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문제점으로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재판에 참여한 11개국 중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 필리핀, 인도의 3개 국가만 있었다는 점, 한국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역은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재판에 참여한 서구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에 식민지를 가진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아시아 문제가 부재하거나 경시되었다고 주장되어온 주요 근거였다.[1]

물론 위와 같은 지적이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아시아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검찰국(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IPS)의 연합국 검사들은 자국 식민지 지역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조사하여 이를 방대한 양의 증거문서로 만들어 법정에 제출했다. 전쟁범죄에 한정해서 볼 때, 연합국은 백인 포로나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우선시하기는 했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도 다수의 증인과 증거가 다루어졌다는 것이 재판 자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져왔다.[2]

다만 재판에 연합국이 아시아 문제를 다루었던 것은 아시아의 식민지 지배

---

1 栗屋憲太郎, 1989,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大沼保昭, 1997, 『東京裁判から戦後責任の思想へ』, 東信堂; 우쓰미 아이코 저, 김경남 역,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2 Yuma Totani, 2008, *The Tokyo War Crimes Trial: The Pursuit of Justice in the Wake of World War II*,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宇田川幸大, 2018, 『考証 東京裁判: 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吉川弘文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둘러싼 전후의 맥락과 관계가 있다. 일본의 아시아 점령 이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는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는 열망이 분출되었는데, 이러한 식민지 지역에서 서구 국가가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고 식민지에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범재판이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가지이(梶居佳広)는 국제검찰국의 동남아시아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가 식민지 종주국의 통치 정당성 회복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보며, 링겐과 크립(Lingen & Cribb)은 전범재판이 동남아시아의 탈식민이라는 흐름 속에서 서구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한다.[3]

그런데 기존 연구는 아시아에 대한 전쟁범죄의 처벌 여부를 놓고 극동국제군사재판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또 '아시아 문제'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같은 아시아 국가라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그리고 서구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의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침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점령 통치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점령은 서구의 식민지배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컨대 전범으로 처벌된 혹은 처벌될 사람이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그중에는 조선인도 있었다는 우쓰미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전범처벌 문제는 여러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다.[4] 같은 '아시아' 혹은 같은 '식민지'라는 시선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문제를 등치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동남아시아가 침략과 전쟁범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진 방식 전반을 검토한다.

---

3 梶居佳広, 2012,「東京裁判における日本の東南アジア占領問題: 検察側立証を中心に」,『立命館法学』年5·6(345·346号).

4 우쓰미 아이코·무라이 요시노리 저, 김종익 역, 2012,『적도에 묻히다: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역사비평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IMTFE charter), 기소장(indictment), 속기록(transcript), 판결문(judgement), 증거문서(exhibit)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의 기소와 심리, 판결 과정에서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추적한다.[5] 이를 통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는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유지했던, 전후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식민지배의 중층적인 구조를 확인할 것이다.

Ⅱ.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의 침략범죄

1.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침략'을 전쟁범죄로 처벌했다는 사실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에 '평화에 반하는 죄'로 규정된 침략범죄는 연합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범죄였다.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과 아시아를 침략하는 데 가담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곧 이 주요 전쟁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연합국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연합국은 1943년 10월 모스크바 선언에서 범죄에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없는 전범, 즉 침략에 가담한 주요 전범에 대해 연합국이 공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6] 이 선언은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뇌부와 일본제국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연합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범재판을 준비하였고 일본에서는 맥아더의 GHQ가 주요 전범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린 후 침략과 관련된 이들을 체포했다.

---

5 이 글에서 사용한 극동국제군사재판 관련 자료는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UNWCC) 아카이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UNWCC Reel 118~186)을 활용했다.

6 "The Moscow Conference, October 1943", statement on atrociti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시의 국제법이 침략을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로 처벌해야 할 행위로 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은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을 근거로 평화에 반하는 죄를 구성했다.[7] 연합국은 런던에서 뉘른베르크 헌장을 선포하며 평화에 반하는 죄를 정의했고,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은 뉘른베르크 헌장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8]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A급 범죄'인 평화에 반하는 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평화에 반하는 죄: 선전포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하거나 국제법, 국제 조약, 협정, 협약을 위반한 전쟁의 수행 혹은 앞서 언급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계획이나 공동모의에 참여하는 것.[9]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은 평화에 반하는 죄를 국제법 혹은 국제 조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서명한 켈로그-브리앙 조약뿐만 아

---

7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1928년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와 프랑스 외교장관 브리앙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전쟁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국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전쟁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아니나, 전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일본을 포함한 56개 국가가 동참했다. Yuma Totani, 2008, 앞의 책, pp. 79~80; Neil Boister and Robert Cryer, 2008, *The Tokyo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 Reappraisal*,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6~118.

8 뉘른베르크 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특징 및 비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신희석, 2015,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서울국제법연구』 22(2); 김성천, 2014, 「전범재판의 이념과 시사점-일본 전범재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6(2); 이장희, 2011,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김창록, 2009, 「토오쿄오재판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문명의 심판 '대' 승자의 심판' 그리고 아시아」, 『東北亞歷史論叢』 25; 공준환, 2023, 「연합국의 전범재판과 '인권' 의제」, 『역사비평』 143.

9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26 April 19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라, 일본이 전쟁 이전에 체결한 각종 국제 조약의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범죄를 입증하도록 했다. 헌장은 '선전포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평화에 반하는 죄가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정식 선전포고를 통한 전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침략에 해당한다면 범죄로 간주하도록 했다.[10] 이를 통해 만주사변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침략이 이 범죄의 관할 속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직접 개시와 수행뿐만 아니라 전쟁의 계획과 공동모의(conspiracy)에 포함시켜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피고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침략'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은 기소장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검찰국을 지휘하는 미국 수석검사 키난(Joseph B. Keenan)은 헌장을 근거로 하여 28명의 주요 전범을 기소했는데, 이들 모두가 평화에 반하는 죄의 혐의를 받았다.[11] 재판 헌장은 평화에 반하는 죄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재판이 관할하는 세 가지 범죄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제검찰국이 작성한 기소장은 철저히 평화에 반하는 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장은 재판에서 다룰 범죄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총 55개의 소인(count)으로 구성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범죄는 '평화에 반하는 죄'로, 소인1부터 소인 36까지가 이 범죄를 다룬다. 두 번째 유형의 범죄는 '살인(murder)'으로, 소인 37으로부터 소인 52까지가 이를 다룬다. 세 번째 유형의 범죄는 '관습적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소인 53부터 소인 55까지에 해당한다.[12] 이처럼 기소장의 소인 대부분은 '평화에 반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고, 헌장이 규정하는 나머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

10 Neil Boister and Robert Cryer, 2008, 앞의 책, p. 120.

11 국제검찰국은 재판에 참여한 연합국 11개국이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나 기소에 관한 권한은 미국이 임명한 수석검사 키난이 독점하였다.

12 "IMTFE Indictmen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죄는 3개의 소인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살인'에 해당하는 16개의 소인은 극동국제군사재판만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헌장이 규정한 세 가지 범주의 범죄에 바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공격에 의한 군인 및 민간인의 살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인 전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적 침략으로 인한 살인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평화에 반하는 죄에 가까운 성격의 것이었다.[13]

기소장에서 침략에 관한 소인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인 1~5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침략과 공동모의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소인 6~17로 연합국 각 국가에 대한 국제법과 조약 위반 및 침략 계획과 준비를 다루며, 세 번째는 소인 18~36으로 연합국 각 국가에 대한 전쟁 개시 및 침략을 다룬다.

기소장의 내용 중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은 해당 지역에 식민지를 가진 국가인 영연방(소인 8~12, 22, 31), 네덜란드(소인 14, 32), 프랑스(소인 15, 23, 33) 및 필리핀(소인 13, 21, 30)과 태국(소인 16, 24, 34)에 대한 것에 있다. 국제검찰국은 일본의 침략범죄를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하여 관련 소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실상 각 국가에 대한 소인들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소인의 다수를 병합하거나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는 8개의 소인만 인정했다.[14]

살인죄에 대한 기소도 마찬가지였다. 살인에 대한 기소는 진주만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과 그로 인한 미군 장병 및 민간인 살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주만에 대한 소인(소인 39)과 함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중국 및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도 살인죄 소인에 포함되었다. 그중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살인으로는 말레이반도 코타바루(소인 41)와 필리핀 다바

13 공준환, 2024, 「아시아·태평양 전쟁 직후 미국 전범재판에서의 '정의'와 식민지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9~146쪽.

14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인 중에서 인정된 것은 소인 31(영연방), 소인 32(네덜란드), 소인 33(프랑스) 3개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소인 43)에서의 영국군과 미국군 병사에 대한 공격이 있다.[15] 두 소인에 현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살인에 대해서는 모든 소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살인죄는 처벌되지 않았다.

2. 아시아 없는 동남아시아 침략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침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주로 침략범죄의 입증과 반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국제검찰국의 기소, 증거제출 및 입증 단계는 물론 변호 단계와 판결에서도 일본의 침략이 전쟁범죄로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1946년 5월 3일 재판이 개정된 이후 1946년 6월 4일부터 1947년 1월 24일까지 약 6개월간 이어진 국제검찰국의 입증은 총 14개의 단계(phase)로 구성되었는데, 이 단계 중 제3 단계로부터 제12 단계까지가 침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쟁범죄와 관련한 입증은 제13 단계에 집중되었는데, 중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전쟁범죄 일부는 각 침략의 입증 단계에서 포함되었다. 마지막 제14 단계에서는 피고 개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 입증이 있었다.[16]

국제검찰국이 구분한 침략의 각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침략이다. 만주사변을 다루는 제3 단계로부터 제6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제검찰국은 중국 침략의 여러 측면을 다루었는데, 경제적 침략이나 중국 내 마약(아편)의 유통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난징학살로 대표되는 중국에서의 전쟁범죄도 이 단계에서 다루었다. 다음으로 제9 단계에서는 소련에 대한 침략을 다루었다. 나머지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침략으로, 미국, 영연방, 프랑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침략을 다루었다.

---

15 "IMTFE Indictment".

16 Solis Horwitz, 1950,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 465, pp. 504~5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제검찰국의 침략 입증 과정은 복잡한 여러 법적 논쟁을 초래했다. 변호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략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노력했는데,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전후에 만들어진 헌장에서의 '평화에 반하는 죄'를 근거로 재판하는 것은 사후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등의 법정 관할권에 문제 제기는 물론, 일본의 연합국 각 국가에 대한 전쟁이 침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을 통해 이를 부정하고자 했다. 예컨대 명시적인 전쟁 없이 일본에 점령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17] 일본의 직접 공격 이전에 연합국과 함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사례에도 침략범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논의되었다.[18] 변호인들은 또한 이 전쟁이 '침략'이 아니라 일본을 지키기 위

1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비시 정부의 명령을 받았던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총독부는 일본과 전쟁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일본의 인도차이나 진주에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공생관계는 1945년 3월 9일 일본이 프랑스 총독을 체포하고 직접 인도차이나를 통치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계속되었다. 프랑스 검사 오네토가 국제검찰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국제검찰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일본의 전시 동맹국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었고, 적어도 프랑스가 일본과 협력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 프랑스 검사가 취한 전략은 프랑스를 서구 국가 중 일본의 침략을 받은 첫 국가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1940년 6월 인도차이나 북부에 대한 군사 침략, 1941년 7월 인도차이나 전반에 대한 일본군 진주, 1945년 3월의 총독부 해체라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일본의 침략이 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재판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을 인정했다. Beatrice Trefalt, 2018, "The French Prosecution at the IMTFE: Robert Oneto, Indochina and the Rehabilitation of French Prestige", in Kerstin von Lingen ed., *War Crimes Trials in the Wake of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Asia 1945-1956 Justice in Time of Turmoil*, palgrave macmillan; IMTFE Document No. 6910, "Opening Statement-China".

18 일본의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침략도 쟁점 중 하나였다.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입증 단계에서 변호인 커닝햄(Cunningham)은 네덜란드가 재판에 참여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먼저 네덜란드가 포츠담 선언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쟁이 시작했을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합법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재판에 참여할 수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진주만과 말레이반도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영국에는 선전포고를 했으나 네덜란드에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자위전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침략의 범죄성을 부정하고자 했다.[19]

일본 침략의 범죄성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최종 판결에서 판사들이 침략에 대한 소인을 받아들이면서 인정되었다. 과반 이상의 판사들의 합의로 작성된 다수 판결(majority judgment)[20]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불법적이었다고 보았고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침략을 둘러싼 범죄의 모호성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몇몇 판사는 공개적으로 침략범죄의 유죄 판결을 반대하기도 했다. 재판의 무효와 일본 전범의 무죄를 선고한 인도의 팔(Radhabinod Pal) 판사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뢸링(Bert Röling) 판사와 같이 다른 전쟁범죄는 인정하면서도 '평화에 반하는 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21]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침략은 국제검찰국의 기소 내용이나 입증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합국, 즉 서구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침략을 제외하여 그 범위를 태평양 전쟁 시기로 압축하면 그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 과정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 아닌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 대한 침략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재판의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필리핀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는 사실상의 전쟁상태임을 인정하고 일본에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 다만 일본은 곧 이은 1942년 1월 11일에 인도네시아에 상륙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침략은 인정되었다. "IMTFE Transcript", 1947.12.3, pp. 11629~11631.

19 Neil Boister and Robert Cryer, 2008, 앞의 책, pp. 126~127.

20 뉘른베르크 재판에 참여한 4개국(미, 영, 프, 소) 판사가 전원 합의에 의해 판결문을 작성한 것에 반해,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11개국 판사들은 전원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재판부의 다수를 차지했던 미국과 영연방 계열의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었지만, 프랑스의 베르나르나 네덜란드의 뢸링, 인도의 팔은 반대 의견(dissenting opinion) 혹은 별도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필리핀 판사 자라니야도 보충 의견(concurring opinion)을 작성했고, 재판장인 호주의 웹 판사도 재판 이후 별도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21 박규훈, 2022, 「도쿄재판의 뢸링 판사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화에 반하는 죄와 제국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1권 2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침략을 둘러싼 공방이다.

국제검찰국은 기소 단계에서 필리핀에 대한 침략을 기소장에 포함했다. 기소장의 소인 13(필리핀에 대한 전쟁 계획과 준비), 소인 21(필리핀에 대한 전쟁 시작과 침략), 소인 30(필리핀에 대한 침략)은 필리핀에 대한 침략을 다루고 있다. 필리핀에 대한 소인은 미국이 재판 개정 직후인 1946년 7월 필리핀을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판사 및 검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필리핀의 재판 참여는 아시아 식민지를 해방하고 전후 아시아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1947년 7월 독립한 인도를 독립보다 1년 빨리 시작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판사와 검사국으로 재판에 참여시켰다. 필리핀과 인도의 재판 참여, 필리핀 침략에 대한 기소는 탈식민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전후 아시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필리핀이 일본 '침략'의 피해자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변호인단의 부단장이자 도조 히데키의 변호인인 기요세 이치로(清瀬一郎)는 인도와 필리핀이 포츠담 선언의 서명국이 아니라며 재판 참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22] 이어 필리핀은 전쟁 당시 미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침략을 기소장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변호인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에 필리핀이 '침략'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재판장은 필리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판사의 임명은 헌장에 의한 것으로, 헌장은 포츠담 선언의 서명 여부를 판사 임명의 자격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필리핀에 대한 침략을 독립적인 소인으로 유지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

22 "IMTFE Transcript", 1946.5.13.

23 宇田川幸大, 2022, 『東京裁判研究』, 岩波書店, 201~20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 판사들은 필리핀이 전쟁 중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독립적인 침략 소인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에 대한 침략에 포함한다고 결론 내렸다. 필리핀에 대한 침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대한 침략의 일부라 변호인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24] 필리핀 판사 자라니야(Delfin Jaranilla)는 판결문의 이러한 논리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태국에 대한 침략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연합국에 속하지 않았고 재판에 초대되지도 않았던 태국은 필리핀과는 입장이 달랐다. 전쟁 중 태국은 명목상 중립국을 선언했지만 일본의 동맹 혹은 일본의 점령지라는 이중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다만 미국의 호의로 태국은 전후 일본과 같은 패전국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25] 국제검찰국은 태국에 대한 침략을 범죄로 규정하고 3개의 소인(16, 24, 34)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태국의 침략 기소에 대해 변호인 기요세는 재판 개시 이전의 항변(motion) 단계에서 소인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기요세는 법정에 '평화에 반하는 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소련에 대한 침략 및 태국에 대한 침략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태국이 전쟁 중 '동맹'이었기 때문에 동맹국인 태국에 대한 전쟁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태국과 일본이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에 대한 기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6]

---

24 "IMTFE Major Judgment" Part C Chapter IX Findings on Counts of the Indictment.

25 태국은 1939년 중립국을 선언했지만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 12월 7일 태국 영토를 침범하자 일본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에 참가했다. 전후 영국은 태국이 일본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미국이 태국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태국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카이로 회담에서 태국을 독립국으로 간주한다고 중국과 합의하였고, 일본 패전 직후 태국이 적국이 아닌 해방된 국가라고 선언했다. 조흥국, 2008, 「식민주의 시기 및 일본 점령기 타이 역사의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18권 1호, 53~5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럼에도 검찰은 태국에 대한 침략의 기소를 이어나갔다. 태국에 대한 침략의 입증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을 다룬 제10 단계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해당 단계의 모두진술에서 프랑스 검사 오네토(Robert Oneto)는 프랑스와 태국 사이의 분쟁에 일본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태국에 대한 침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940년 6월 20일에 태국과 프랑스가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프랑스의 패전을 이유로 태국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영토를 요구하는 것에 일본이 개입하여 프랑스와 태국 사이의 휴전을 강제하였다는 것이다. 이 조약을 강제하기 위해 일본은 부대를 상륙시켰고 프랑스는 조약에 무조건 승인하게 되었다.[27]

다만 태국에 대한 침략의 입증을 프랑스가 담당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태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프랑스의 입증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으며, 개전 직후 일본군과 태국군과의 교전 등 태국에 대한 침략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태국에 대한 침략 소인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태국에 대한 침략을 별도의 범죄로 다루는 대신 일본의 태국 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개입이 일본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일본의 싱가포르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28]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침략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은 해당 지역의 식민 모국에 대한 침략으로만 간주되었다. 일본에 의한 아시아 지역의 '침략'을 기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을 재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연합국 국가들의 입장은 묘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냈다. 특히 재판 당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독립 선언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었던 프랑스와

---

26 "IMTFE Transcript", 1946.5.13, p. 135.

27 "Opening Statement-Relations with France and Thailand Aggression Against French Indo-China", III The Siamese Aggression, pp. 10~13.

28 "IMTFE Judgement", French Indo-Chna and Thailand to be Used for Attack on Singapo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네덜란드의 행동은 모순적이었다. 인도 판사 팔이 자신의 반대 의견(dissenting opinion)에서 신랄하게 비난한 것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침략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침략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였다.[29]

Ⅲ. 침략과 해방 사이

1. 아시아를 위한 전쟁, 아시아에 대한 전쟁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처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인정된 침략의 대상은 서구 국가들에 한정되었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목적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었고, 서구 국가에게 이 전쟁은 일본으로부터 아시아의 식민지를 사수하고 이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 세력 사이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은 주권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공간일 뿐이었다.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만을 범죄 행위로 상정하는 국제법과 국제재판의 틀 속에서 식민지 동남아시아의 문제는 주변화되

29 팔의 반대 의견 "Dissenting Opinion of the Member from India(Justice Pal)"은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팔은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모든 일본 전범의 무죄를 선언했다. 그의 의견은 영국에 대한 인도의 식민지배와 벵골 분할이라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의 '정의'는 서구 제국주의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는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팔에 대해서는 이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석연, 2011, 「동경재판과 "평화에 反한 죄"-라다비노드 팔의 죄형법정주의」, 『일본연구』 16; Nariaki Nakazato, 2016, *Neonationalist mythology in postwar Japan: Pal's dissenting judgment at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Lexington Book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을 둘러싼 법정 공방의 가운데에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 혹은 해방'이라는 이중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서구의 침략에 대항해 일본의 생존을 추구한 자위전쟁이었다. 일본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동아공영'이라는 구상 속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은 성립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제검찰국이 입증하고자 했던 것은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침략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대동아공영은 침략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이하에서는 대동아공영을 둘러싼 법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 문제를 검토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이 침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 수석검사 키난은 법정 개전 직후의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대동아공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동아 신질서'를 예로 들면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설명했다. 키난은 모두진술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으로 남은 일본의 "문명에 대한 전쟁 선포"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신질서'는 히틀러와 손잡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노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들의 미친 계획" 그 자체였다.[30] 또 국제검찰국의 기소장 부록 A에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보여준다고 적시되었다.[31] 검찰에게 일본의 '신질서'나 '대동아공영'은 일본 침략의 구호 그 자체였다.[32]

---

30 RG 331 Entry NM-11 321 M1669 1946.6.4, "Opening Statement by Joseph B. Keenan, Chief of Counsel".

31 "IMTFE Indictment" Appendix A, Japa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Portugal.

32 1938년 고노에 후미마로의 '동아신질서' 성명은 1940년 마쓰오카 외상의 '대동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면 변호인단은 대동아공영이나 신질서 혹은 '팔굉일우'가 침략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대표하여 나온 기요세는 변호 측 모두진술에서 일본제국의 선전 구호를 반복했다. 그는 일본제국 대외 정책의 본질이 독립 주권의 확산, 인종적 차별의 폐지 그리고 외교의 원리에 있다면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33] 또 '팔굉일우'는 삼국 동맹을 바탕으로 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동포주의(universal brotherhood)를 의미한다고 해명하고, 키난이 비난했던 '동아 신질서' 혹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표현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변 국가와의 좋은 관계에 기반을 둔 반공-경제 협력 공동체라고 설명했다.[34] 또 침략전쟁에 대한 피고의 공동모의 혐의에 대한 반론 과정에서 변호 측 증인들은 '팔굉일우'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 신질서' 또한 아시아 국가의 독립과 공동 발전에 관한 것이며 '대동아공영'은 아시아인들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을 도모하고 번영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35]

대동아공영에 대한 일본제국의 사상은 도조 히데키에 대한 신문 및 변론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1947년 12월 26일 도조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때 도조는

공영권'으로 발전했다. 대동아공영권의 개념은 처음에는 일본과 만주, 중국 권역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1940년대부터는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대동아공영권은 독일에서 '생활권'과 같은 지정학 이론을 발전시킨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등의 이론이 일본에 도입된 결과였다. 일본은 19세기 말 '아시아주의'에서 발전시킨 지정학의 논리를 대동아공영권으로 귀결시켰다. 대동아공영권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석원, 2008, 「'대동아'공간의 창출 - 전시기 일본의 지정학과 공간담론-」, 『역사문제연구』 12(1); 김경일 · 강창일, 200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 김정현, 1994,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체」, 『역사비평』 28호.

33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역, 1983a, 『東京裁判 上』, 太宗出版社, 225쪽.

34 "Defense Opening Statement Part I by Dr. Ichiro Kiyose", pp. 9~10.

35 Solis Horwitz, 1950, 앞의 글, pp. 527~5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법정에서 낭독하기 위한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도조의 진술은 그의 변호인인 기요세에 의해 일곱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자존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중 네 번째는 대동아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도조는 태평양 전쟁이 대동아 정책의 실현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전쟁 후에는 동아시아의 해방과 공영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도조는 동아시아 해방이란 식민지 및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각 민족이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열망해왔다고 진술했다. 도조는 쑨원과 왕징웨이의 대동아주의에 대한 주장을 인용해가면서 일본의 대동아정책과 대동아공영의 정당성을 재판에서 역설했다.[36]

도조의 이러한 진술은 재판에서 공개되자마자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아사히의 기사는 도조의 진술서가 "종전 전의 용어집을 먼지를 털고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고, 『뉴욕 타임즈』는 도조의 자위전쟁 주장을 힐난하면서 "이 논법을 따른다면 … 중국이며 조선·대만도 공격한 일이 없는, 죄도 없는 불쌍한 일본이" 전쟁을 발발한 것이냐고 평가했다.[37] 변호와 진술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일본 침략의 부정, 자위를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 혹은 '좋은 의도'를 가진 대동아공영과 신질서의 구상은 이미 패전과 함께 무너진 논리였기 때문에 재판을 바라보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다수 판결은 대동아공영을 논의하는 데 대체로 검찰의 주장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문은 일본의 침략을 설명하기 위해 판결문의 대부분을 침략이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재판부가 침략과 해방이라는 전쟁의 맥락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38] 대동아공영의 문제는 중국에 대한 침략을 다루는

---

36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엮음, 김병찬 외 옮김, 2016, 『A급 전범의 증언: 도쿄전범재판 속기록을 읽다 도조 히데키 편』, 언어의 바다, 206~212쪽.

37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역, 1983b, 『東京裁判 下』, 太宗出版社, 142~143쪽.

38 판결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판결문은 총 1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5장의 여섯 번째 섹션에서 처음 등장한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섹션은 중국에 대한 지배 계획이 대동아공영권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일본의 동아시아 신질서를 만들겠다는 '사명'은 중국의 장제스를 돕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동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지역을 대동아공영권으로 통합시키려는 의도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본의 확장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39년 7월 7일 육군대신 이타가키(板垣征四郎)와 해군대신 요나이(米内光政)가 신문 인터뷰에서 동아 신질서의 구축을 주장한 데 이어, 외무대신 아리타(有田八郎)가 1940년 6월 29일 연설을 통해 동아 신질서는 남양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 등을 보았을 때, 대동아공영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다.[39]

또 판결문에서 대동아 공영의 문제는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과 미국에 대한 침략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1940년 7월 구성된 고노에 내각의 외교정책은 '대동아공영권 수립의 촉진'을 목표로 삼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정치나 경제, 문화가 결합되는 영역을 구축하도록 결정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40년대 만들어진 일본의 기본국책은 삼국 동맹과 소련에 대한 불가침 조약을 바탕으로 중일전쟁의 승리, 동남아시아를 대동아공영권으로 통합, 유럽 전쟁의 중재 및 필리핀 독립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영국의 대동아공영권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40] 이에 따라 일본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는 대동아공영권으로의 참가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진출을 강요하고 미국에

어 있는데, 법정의 절차와 관할권을 설명하는 1~2장, 전쟁 이전 국제조약에 따른 일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 3장에 이어 4~8장은 침략의 준비, 중국에 대한 침략, 소련에 대한 침략, 태평양 전쟁 그리고 전쟁범죄를 각각 다루고 있다. 9장은 기소장의 소인 중 재판부가 인정한 것을 정리하고 10장에서는 피고 개개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밝히고 있다.

39 "IMTFE Judgement", Section VI.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40 "IMTFE Judgement", Japanese Policy in 194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대동아공영권의 수립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네덜란드와 미국 모두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침략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판결문의 논리였다.

한편, 네덜란드 판사 뢸링은 다수 판결과는 별도로 작성된 자신의 반대 의견에서 동아 신질서와 대동아공영을 내세운 변호인들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뢸링은 "일본이 신질서에 대한 선전에서 공개적으로 표방한 이상이 진실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질서가 대동아공영권 및 서방과의 단절을 통한 독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뢸링이 밝힌 것처럼 대동아공영의 이상이 진실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재판에서 일본 아시아 침략의 유무죄를 밝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41] 뢸링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일본에 대한 아시아의 지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이념적 침략의 방법에 불과했는지를 평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신질서와 아시아의 독립은 일본 침략의 한 방식이었다고 판단했다. 전쟁을 통해 전개된 일본의 아시아 지배 과정은 대동아공영의 이상적인 측면을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40년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인도네시아인의 완전한 자치와 독립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유의 박탈과 일본으로의 편입이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동아 신질서와 대동아공영권이 추구했던 것은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 창출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다.[42] 따라서 '아시아인의 번영'을 내세우는 논리로 일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었다.

41 "Opinion of the Member for the Netherlands", The Claim by Defense that Japan fought in a good cause.

42 "Opinion of the Member for the Netherlands", Japan and the Independence of the Asiatic Countries; Japan and the Co-Prosper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동남아시아의 독립과 자치

앞서 검토한 것처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이 아시아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서구 제국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뢸링이 지적한 것처럼 대동아공영은 일본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구 제국이 지배하던 동남아시아 지역을 일본의 권역으로 새롭게 포섭하려는 제국주의·군국주의의 기획에 불과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태평양 전쟁의 '좋은 의도'는 전쟁 중 일본이 저지른 행위를 근거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 대동아공영을 내세우며 아시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의 독립을 원하는 아시아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버마에서 바모(Ba Maw)를 지원했고, 필리핀에서는 바르가스(Jorge Vargas)를 이용한 정부를 만들었다. 인도차이나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 공식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없었지만, 이 지역에서도 반제국주의적 감정은 촉진되었다.[43]

물론 일본제국의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약속은 허울뿐이었고, 식민지를 해방하여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1945년 아웅 산(Aung San)이 이끄는 버마군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연합국에 가담한 것처럼, 일본의 아시아 민족주의 활용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본이 했던 해방과 독립의 약속은 전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재점령과 재식민화 과정에서 서구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었다. 종전 이틀 뒤인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가 독립선언을 한 것과 9월 2일 호찌민에 의한 베트남 독립 선언이 그 사례였다. 동남아시아 독립의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

43 W. G. Beasley 저, 정영진 역, 2013, 『일본제국주의 1894-1945』, Huebooks, 300~30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식민지의 독립 요구와 독립운동은 일본 침략의 한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증거로 독일 외교관의 보고서를 사용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일본에 의한 베트남 독립운동 및 '아시아연맹'의 활동, 반프랑스 정서를 앞세운 토착민 부대의 편성, 반프랑스 반란 선전 등을 '일본 영토 확장의 도구'로 설명했다.[4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검사 오네토는 인도차이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프랑스 본국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침략범죄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오네토에 따르면 그는 프랑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증거 서류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현지인의 충성 부족'이나 '현지인의 독립운동 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 문제가 전면에 내세워져, 베트남 독립의 문제가 재판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45]

반대로 네덜란드 검사는 이 문제를 전면화했다. 네덜란드의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본화' 범죄에 대한 기소인데, 네덜란드 검사 멀더(Borgerhoff Mulder)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과 지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급속한 '일본화'가 침략의 결과라고 판단하였고, '일본화'를 침략 소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독립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독립 선언은 일본 침략의 결과물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기소 내용은 재판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46]

---

44 梶居佳広, 2012, 앞의 글, 234~235쪽.

45 Beatrice Trefalt, 2018, 앞의 글, 64~65.

46 Lisette Schouten, 2018, "In the Footsteps of Grotius: The Netherlands and Its Re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1945-1948", Kerstin von Lingen ed., Transcultural Justice at the Toky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멀더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침략에 대한 모두진술에서 일본의 침략을 여섯 단계로 구분했으며, 마지막 단계가 일본의 점령과 지배였다. 이 부분에서 멀더는 일본의 지배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구의 것을 제거하고 일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의해 독재적인 지방정치 조직의 설립, 일본인에게 장악당한 경제기구, 서양인 사유재산의 몰수, 민주주의적 기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법제도의 설립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십만 명이 노예적 노동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교육하며 일본을 숭배하는 교육이 시작되고, 청년 조직들이 만들어졌으며, 헌병에 의한 공포 지배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1944년 12월 약속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독립은 현지 주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47]

다만 인도네시아의 '일본화'에 대한 네덜란드 검사의 주장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멀더는 증인과 증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위어드(Klaas de Weerd) 소령은 일본 점령 기간 동안 서구인들은 모두 수용소에 감금되었으며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와 같은 반서구 캠페인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다면서 마치 인종적 '성전'과 같은 방식으로 서구에 대한 전쟁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했다.[48] 그는 방대한 양의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 증언을 통해 검사는 일본화의 문제를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다.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은 일본의 점령 방침을 옹호하며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가 인도네시아인에게 더 가혹하지 않았는지를 지적했다. 변호인은 일본이 통치기구에 인도네시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위어드 소령은 네덜란드의 통치 방식이 일본의 점령보다

Tribunal: The Allied Struggle for Justice, 1946-48, Brill, pp. 256~257.

47 "IMTFE Transcript", 1946.12.3., pp. 11657~11668; 梶居佳広, 2012, 앞의 글, 240~241쪽.

48 "IMTFE Exhibit No. 13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네덜란드의 통치가 인도네시아인의 권리를 더 보장했다는 것이었다.[49] 식민지의 지배를 두고 일본과 네덜란드 두 제국이 서로 자신의 통치가 더 정당하고 공정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광경이 재판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의 침략을 처벌하는 연합국의 전범재판은 아시아의 독립 혹은 재식민화라는 기로에서 일본의 침략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식민지를 점차 독립시키면서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이 식민 지배를 유지하면서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한편으로 재판은 변호인의 입을 빌려 일본 전쟁의 '선한 의도'를 주장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둘러싼 법정에서의 이러한 공방은 더 나은 제국주의를 내세우려는 모순적인 경쟁처럼 보이기도 한다. 적어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 문제의 논의가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는 동남아시아 민족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히려 식민지는 서구와 일본에 의한 '이중의 침략' 사이에서 중층적인 식민지배의 구조에 갇혀 있었다.

Ⅳ. 점령과 지배의 이면

1. 전쟁범죄 기소와 아시아에서의 전쟁범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는 '평화에 반하는 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기소장에서 전쟁범죄는 세 번째 범주인 '관습적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포함되었다. 이 범주는 소인 53~55의 세 소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소인 53이 전쟁범죄의 공동모의를 다

49 梶居佳広, 2012, 앞의 글, 242~2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룬다면 소인 54는 전쟁법을 위반한 범죄의 실행과 명령, 소인 55는 모든 지역에서의 전쟁범죄를 다루었다.[50] 기소장은 전쟁범죄가 발생한 시기, 피해를 입은 국가, 기소된 피고를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양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전쟁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는 검찰의 입증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했다. 국제검찰국의 검사들은 일본의 자료 은폐 및 폐기로 인해 전쟁범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방대한 양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한 사실이었다. 다만, 점령지나 전장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일본 본토에 있던 고위층 전범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검찰국이 택한 전략은 일본 전쟁범죄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즉, 일본의 전쟁범죄가 개별 병사나 장교들의 일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여 최고위 명령권자들에게 그것을 지시한 혹은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쟁범죄의 경향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범죄의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51]

극동국제군사재판에는 여러 유형의 전쟁범죄가 제시되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연합국 전쟁포로에 대한 잔학행위였다. 동남아시아의 일본 전쟁범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필리핀 바탄 죽음의 행진이나 버마에서의 태면철도 건설 등으로 모두 연합국 포로에 대한 대규모 잔학행위였다. 국제검찰국은 전쟁범죄 입증을 위해 약 820건의 증거와 24명의 증인을 동원했으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 대부분은 연합국 포로 출신이었다.[52] 이들은 필리핀에서의 포로

50 "IMTFE Indictment".

51 David Cohen and Yuma Totani, 2018,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Law, History, and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3~208; Solis Horwitz, 1950, 앞의 글, p. 5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대, 태면철도 건설 과정에서의 잔학행위, 그 외에도 일본 본토나 조선 등의 포로수용소에서의 전쟁범죄를 증언했다.

물론 일본 점령지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가해진 다양한 전쟁범죄에 관한 증거도 법정에 제출되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실시되는 동안 연합국이 재점령한 아시아·태평양의 전 지역에는 하위 전범 재판소가 설치되어 전범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범에 대한 조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많은 증거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제출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주민에 대한 일본의 전쟁범죄도 연합국 국민에 대한 전쟁범죄로 취급되어 법정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다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재판은 침략범죄의 입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범죄의 증거를 법정에서 다루기에는 많은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수석 검사 키난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쟁범죄의 기소 자체를 취하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쟁범죄 조사를 주도한 호주 검사 맨스필드(Alan Mansfield)는 전쟁범죄의 기소가 재판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여 기소를 유지시켰고, 대신 많은 증거를 짧은 시간 안에 재판에서 제시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범죄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증거 역시 요약된 줄거리(synopsis)만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국제검찰국의 전쟁범죄 입증 전략은, 개별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보다 전쟁범죄의 패턴을 입증하는 것이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증인이 직접 나서 증언한 백인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례, 특히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전쟁범죄는 법정 공방 없이 검사들에 의해 요약되어 읽혔다. 또 변호인도 전쟁범죄의 증거를 부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거의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법정 내에서 전쟁범죄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53]

52 梶居佳広, 2012, 앞의 글, 217~2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증인과 증거가 제출되어 상세하게 다뤄진 난징학살조차 재판 이후에는 빠르게 망각되었다.[54] 그렇기에 증거만 제출되고 재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전쟁범죄가 기억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전쟁 피해의 당사자인 동남아시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었고, 전후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기억이 아시아 공동의 기억으로 자리 잡지도 못했다. 재판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쟁범죄의 증거들은 존재했지만, 이를 증언할 아시아인의 목소리는 '부재'하고 있었다.

2.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전쟁범죄의 양상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가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증거를 간략하게 다룬 국제검찰국의 전략은 많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다양한 전쟁범죄가 증거로 남았다. 전쟁범죄의 양상은 민간인에 대한 살해 및 학살, 고문, 폭행, 재산의 약탈, 불법적인 처형, 열악한 시설에의 감금, 강제 노역,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사, 방화, 성폭력, 위안소의 설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전쟁범죄는 지역별로 검사들에 의해 다루어졌지만,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에서 입증한 것처럼 일본 전쟁범죄의 패턴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아시아·태평양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지 주민에 대한 일본의 전쟁범죄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가 파괴적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

53 Yuma Totani, 2008, 앞의 책, 115~118쪽.

54 난징대학살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유지아, 2017, 「전후 전범재판에서의 난징대학살 심판 -아시아 부재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1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준다. 침략범죄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일본의 전쟁이 침략이 아닌 '해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동아공영의 이상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론을 할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의 주민들에 대한 해방을 내세우는 전쟁이었지만, 실상은 그들에 대한 잔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잘 보여주는 전쟁범죄의 사례로 강제노동, 학살 그리고 현지 주민의 저항에 대한 탄압을 살펴본다.

먼저 강제노동은 전쟁범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태면철도 사건은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와 현지 노동자에 대한 학대 모두를 다루었다. 버마와 태국 사이의 정글을 철도로 연결하는 태면철도 건설에는 약 6만 1,800명의 연합군 포로가 동원되었는데, 그중 1만 2,300명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고, 동남아시아의 현지인들은 약 20만 명이 동원되어 20%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일본의 전쟁범죄 중 강제노동에 관한 것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태면철도에 관한 증거 서류로는 22개의 선서진술서(affidavit)가 제출되었고, 네 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은 모두 영국군 혹은 호주군 장교들로 주로 연합군 포로의 학대 실태를 증언하고 있으나 아시아인의 문제도 언급했다. 법정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작성된 선서진술서는 다양한 사람에 의해 증언되어 제출되었다.

랑군에 거주하는 버마인 노동자는 1942년 일본이 버마인 노동자를 태면철도 건설에 모집할 때 높은 임금, 좋은 음식, 좋은 생활환경, 의복, 의약품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철도 건설을 위해 버마 남부의 탄부자야(Thanbyuzayat) 수용소로 갔을 때 그곳에만 1만 6,000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노동 조건에 놓였다.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취급받았으며 채찍과 몽둥이가 사용되었고 병에 걸리더라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2세의 아동부터 60세까지 노동에 동원되었고, 여성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55 Yuma Totani, 2008, 앞의 책, pp. 142~1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폭행도 있었으며, 수용소에는 300명의 '위안부(prostitute)'가 동원되기도 했다.[56] 이렇게 태면철도에 동원된 노동자의 총수는 대략 7만 5,000명에서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었다.[57]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 노동자에 대한 강제 모집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7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는데,[58] 이들 중 약 8만 명의 노동자는 태면철도 건설에 동원되었고 그들 중 다수가 사망했다.[59] 대부분이 자바에서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은 태면철도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전역의 농장, 공장이나 군사 시설 건설, 공항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60]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조사한 네덜란드 정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활주로 건설에 투입된 자바인 노동자 2,458명 중 512명이 사망하고 889명이 질병 등으로 환자가 되어 약 2/5 정도만 노동이 가능한 상태였다.[61]

다음으로는 민간인 학살이다.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거의 모든 점령지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일본군이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의 초기 국면이나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많이 나타났다. 점령 초기에는 백인 민간인과 포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살이나 약탈,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에 대한 학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62] 현지 주민

---

56 "IMTFE Exhibit No. 1377".

57 "IMTFE Exhibit No. 1374".

58 梶居佳広, 2012, 앞의 글, 237쪽.

59 "IMTFE Exhibit No. 1726".

60 인도네시아의 교과서에서도 일본 점령기 약 30만 명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고 적고 있다. 다만 다른 연구에서는 태면철도에만 13~16만 명이 보내져 15%가 사망하였고, 총 동원된 인원은 수백만에서 최대 천만 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제성, 2003,「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동아연구』45호, 87쪽.

61 "IMTFE Exhibit No. 1727".

62 예를 들어 일본은 말레이반도를 점령한 직후인 1942년 2월 28일에서 3월 3일까지 지역의 화교 약 7만 명을 체포하고 그중 5,000~4만 명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학살했다. 이에나가 사부로 저, 현명철 역, 2005,『전쟁책임』, 논형, 108~1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한 학살은 지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재판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 사건이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진 지역은 필리핀이다. 1945년 필리핀을 미국이 재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2월의 마닐라 점령 과정에서는 '마닐라 대학살'이 발생했다. 패배가 가까워지자 일본군은 게릴라화되어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약탈을 반복했고 이는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미국 및 필리핀 검사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필리핀 검사 로페스(Pedro Lopez)는 법정에서 필리핀에서의 학살로 민간인 9만 1,18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63] 학살의 형태는 다양했는데, 800명이 사망한 세인트폴 대학에서의 학살 사건을 보면 일본군은 주민을 모두 대학의 홀로 모이게 한 다음 내부의 거대한 샹들리에를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을 학살했다.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자 기관총을 발사했으며 총검으로 도망자들을 살해하기도 했다.[64] 이와 같은 필리핀 주민에 대한 학살 및 처형은 전투와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마닐라 이외의 지역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점령과 지배는 현지인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일본 지배에 저항하거나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고, 반일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주민에 대한 체포, 학살, 처형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본에 저항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연합국에게도 중요한 사실이었다. 주민들의 저항은 일본의 침략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해방'이 허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다.

먼저 버마 카라곤(Kalagon)에서의 학살이 있다. 모울메인 근처의 작은 마을인 카라곤에서 1945년 7월 일본군은 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저항한다는 이유로

63 Opening Statement of the Associate Prosecutor of the Philippines on Class C Offenses in General and Class B and C Offenses in the Philippines.

64 "IMTFE Exhibit No. 136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00명을 학살했다. 600명 중 175명은 남성, 195명은 여성, 260명은 아이였다. 여성과 아이가 대부분인 주민을 학살하면서 일본군은 이들이 일본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살 사건은 버마에서 실시된 영국 전범재판의 첫 사건으로 다루어졌고, 영국은 이 재판의 증거를 모아 극동국제군사재판에도 활용했다.[65]

다음으로는 영국령 보르네오 제셀턴(Jseelton)에서 학살이다. 1943년 10월 10일 현재의 코타키나발루인 이곳에서 일본 지배로 억압받던 중국인들이 게릴라의 지원을 받아 봉기했다. 이 봉기의 결과로 40명의 일본인이 살해되었는데, 일본군은 그 보복 조치로 제셀턴 북부를 폭격하고 수백 명을 게릴라 협조 혐의로 체포하여 고문하고 처형했다. 중국인 189명이 처형되었고 수백 명이 고문이나 기아, 질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또 중국인의 봉기 이후 일본 지배에 비협조적이었고 봉기에도 가담했던 술룩(Suluk)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술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섬들에 상륙하여 남성은 체포 후 고문하여 살해하고, 여성이나 아이도 학살했다. 일본 헌병대에 의한 이 학살은 술룩인의 성인 인구를 거의 절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 지배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인종에 대한 학살(제노사이드)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66]

마지막은 네덜란드령 보르네오 폰티아낙에서의 학살이다. 1943년 10월 일본에 반대하는 음모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현지의 일본군은 주민을 대량 체포하고 학살했다. 약 1,100명의 현지인과 240명의 현지 중국인이 처형되었는데, 체포되어 일본의 군법 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63명이었지만 일본군은 군법회의 판결과 관계없이 다수를 처형했다. 처형된 이들의 대부분은 군법 회의에서 2~3년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었다.[67] 이 외에도 주민의 저항이나 봉기에 대한 일본군의 잔혹한 보복의 사례는 많이 있었다.

---

65 "IMTFE Exhibit No. 1541"; Yuma Totani, 2008, 앞의 책, pp. 167~168.

66 "IMTFE Exhibit No. 1659".

67 "IMTFE Exhibit No. 169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같은 국제검찰국의 전쟁범죄 증거 제시에 대해 변호인들은 별다른 변론을 펼치지 못했는데, 전쟁범죄 행위를 기록한 물적 증거를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인들은 전쟁범죄가 기소된 피고 개개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자 노력했다. 피고 개인들이 해당 범죄를 통제할 책임이나 위치가 있지 않다는 것 혹은 전쟁범죄의 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68] 이러한 변론의 시도는 피고 개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었지만,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한 전쟁범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최종적으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쟁범죄에 관한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피고 중 전쟁범죄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이가 없다 하더라도 전쟁범죄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피고들은 전쟁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범죄를 막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또 판결문은 일본의 전쟁범죄가 모든 일본 점령지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69]

판결문은 난징학살, 바탄 죽음의 행진이나 태면철도 건설과 같은 주요 전쟁범죄를 거론하면서 전쟁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이외의 많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각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학살'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큰 틀 속에 유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대했다. 위에서 제시된 강제노동, 학살 등의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주요 장소와 시기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럼에도 제시된 전쟁범죄 대부분의 사례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의 양형에도 영향을 주었다.[70]

---

68 David Cohen and Yuma Totani, 2018, 앞의 책, p. 236.

69 "IMTFE Judgement" Part B. Chapter VIII Conventional War Crimes (Atrocities).

70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와 관련된 소인으로 유죄가 인정받은 피고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총 10명이다. 이들 중 동남아시아에서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이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은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시아인의 해방'을 내세운 일본군은 점령지의 아시아인을 노예처럼 다루었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대동아공영과 같은 지정학의 논리는 일본제국의 확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공영'이 대상이 된 동남아시아 주민들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에 불과했다.

V. 맺음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5월에 시작되어 최종 판결이 있었던 1948년 11월까지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재판이 시작된 1946년과 재판이 종료된 1948년의 세계는 같지 않았다. 전범재판은 전후 국제 정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재판이 끝날 무렵에 중요했던 것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갈등이었다. '식민지'를 둘러싼 지형도 달라지고 있었다. 재판 시작과 함께 필리핀이 미국에서 독립하였고, 1947년에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였으며, 1948년 1월에는 버마도 독립국을 이루었다. 인도차이나에서는 독립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의 독립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질서는 전범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전범재판에서 일본의 침략범죄와 전쟁범죄가 처벌되었다는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미래에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동남아시아는 전범재판이라는 전후 처리의 주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범재판의 결과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

로는 도조 히데키(포로 학대 및 태면철도 등), 무토 아키라(수마트라와 마닐라에서의 잔학행위), 기무라 헤이타로(태면철도 및 버마에서의 잔학행위), 이타가키 세이시로(싱가포르 및 말레이반도에서의 잔학행위)가 있다. 이들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전쟁범죄의 기소와 처벌 과정을 검토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다. 한 가지는 그 침략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둘러싼 전쟁이었다는 것으로,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제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는 점이었다. 양 제국은 서로의 침략을 비난하고 있지만 식민지배의 본질적인 속성은 같았다. 다른 한 가지는 동남아시아를 '해방'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점령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잔인한 전쟁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의 전쟁이 아닌 전쟁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피해자로 남았다.

일본의 '침략'을 전쟁범죄로 기소했던 재판에서 국제검찰국이 제시한 침략의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당시 국제법상 주권 국가, 즉 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인 서구 국가들에 대한 침략은 범죄였지만, 식민지로 주권을 가지지 못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침략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 혹은 국제사회가 식민지를 동등한 세계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이라는 형태로 국제법을 표현했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반복되었다. 앤지(Anghie)가 잘 설명한 것처럼 당시의 국제법이란 서구 제국의 식민지배를 바탕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식민지에게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71]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론은 '대동아공영'이나 '신질서'와 같은 일본의 전쟁 구호를 재판에 다시 소환했다.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면서도 서구의 지배를 정당화해야 하는 몇몇 연합국 검사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네덜란드 검사가 주장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이 일본 침략의 결과라고 하는 주장은 전범재판의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일본제국의 지배가 서구 제국의 지배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서구가 정당한지를 주장하는 연합국 검사들의 주장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

71 Antony Anghie, 2005,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물론 그것을 비판하는 일본은 철저히 자기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는 일본 지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의 많은 전쟁범죄가 아시아에서 일본 지배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일본의 서구 제국주의 비판이 결국 스스로를 향한 것이기도 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범재판은 제국주의가 다층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탈식민, 냉전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중층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식민지배는 서구의 식민지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한국의 상황과는 달랐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서구 제국주의가 일본을 통해 변형된 형태로 적용되었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서구와 일본 두 제국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이 글은 극동국제군사재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전쟁범죄 문제는 하위 전범재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두 재판을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재판에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일정한 보상 혹은 배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봉되었는데, 이 또한 재판의 결과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연구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남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엮음, 김병찬 외 옮김, 2016, 『A급 전범의 증언: 도쿄전범재판 속 기록을 읽다 도조 히데키 편』, 언어의 바다.

Beasley, W. G. 지음, 정영진 옮김, 2013, 『일본제국주의 1894-1945』, Huebooks.

우쓰미 아이코 저, 김경남 역,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우쓰미 아이코·무라이 요시노리 저, 김종익 역, 2012, 『적도에 묻히다: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역사비평사.

이에나가 사부로 저, 현명철 역, 2005, 『전쟁책임』, 논형.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역, 1983a, 『東京裁判 上』, 太宗出版社.

_____, 1983b, 『東京裁判 下』, 太宗出版社.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粟屋憲太郎, 1989,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宇田川幸大, 2018, 『考証 東京裁判: 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吉川弘文館.

_____, 2022, 『東京裁判研究』, 岩波書店.

大沼保昭, 1997, 『東京裁判から戦後責任の思想へ』, 東信堂.

Anghie, Antony, 2005,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ister, Neil and Cryer, Robert, 2008, *The Tokyo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 Reappraisal*, Oxford University Press.

Cohen, David and Totani, Yuma, 2018,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Law, History, and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kazato, Nariaki, 2016, *Neonationalist mythology in postwar Japan: Pal's dissenting judgment at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Lexington Books.

Totani, Yuma, 2008, The Tokyo *War Crimes Trial: The Pursuit of Justice i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ake of World War II,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논문

공준환, 2023, 「연합국의 전범재판과 '인권' 의제」, 『역사비평』 143호.

_____, 2024, 「아시아·태평양 전쟁 직후 미국 전범재판에서의 '정의'와 식민지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일·강창일, 200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

김석연, 2011, 「동경재판과 "평화에 反한 죄"-라다비노드 팔의 죄형법정주의」, 『일본연구』 16.

김성천, 2014, 「전범재판의 이념과 시사점-일본 전범재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6(2).

김영숙, 2022,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사진주보(写真週報)』」, 『한림일본학』 제41집 (1).

김정현, 1994,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체」, 『역사비평』 28호.

김창록, 2009, 「토오쿄오재판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문명의 심판 '대' 승자의 심판' 그리고 아시아」, 『東北亞歷史論叢』 25.

박규훈, 2022, 「도쿄재판의 롤링 판사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화에 반하는 죄와 제국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1권 2호.

신희석, 2015,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서울국제법연구』 22(2).

유지아, 2017, 「전후 전범재판에서의 난징대학살 심판 -아시아 부재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1집.

이석원, 2008, 「'대동아'공간의 창출 -전시기 일본의 지정학과 공간담론-」, 『역사문제연구』 12(1).

이장희, 2011,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전제성, 2003,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동아연구』 45호.

조흥국, 2008, 「식민주의 시기 및 일본 점령기 타이 역사의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18권 1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梶居佳広, 2012,「東京裁判における日本の東南アジア占領問題：検察側立証を中心に」,『立命館法学』年5·6号(345·346号).

Horwitz, Solis, 1950,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 465.

Lingen, Kerstin von, and Cribb, Robert, 2016, "Justice in Time of Turmoil: War Crimes Trials in Asia in the Context of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Kerstin von Lingen, ed, *War Crimes Trials in the Wake of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Asia 1945-1956 Justice in Time of Turmoil*, palgrave macmillan.

Schouten, Lisette, 2018, "In the Footsteps of Grotius: The Netherlands and Its Re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1945-1948", Kerstin von Lingen ed., *Transcultural Justice at the Tokyo Tribunal: The Allied Struggle for Justice*, 1946-48, Brill.

Trefalt, Beatrice, 2018, "The French Prosecution at the IMTFE: Robert Oneto, Indochina and the Rehabilitation of French Prestige", in Kerstin von Lingen ed, *War Crimes Trials in the Wake of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Asia 1945-1956 Justice in Time of Turmoil*, palgrave macmill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전쟁범죄

–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

공준환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및 전쟁범죄를 다룬다. 일본제국이 개전한 태평양전쟁은 동남아시아 식민지의 해방을 명분 삼아 이를 일본 권역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었지만, 일본의 침략을 심판한 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 심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정치적 논의를 검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과 전쟁범죄가 서구 식민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다룬다. 특히 필리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점령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주목하여,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제국주의적 이중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이나 동아 신질서와 같은 전쟁 구호는 일본 전쟁범죄의 잔인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나, 일본의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이 곧 서구 제국의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 중층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극동국제군사재판, 전범재판, 동남아시아, 침략, 전쟁범죄, 제국주의, 식민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Study on Japan's Aggression and War Crime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Kong Joonhwan

This study focuses on Japan's aggression and war crimes in Southeast Asia,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held in Tokyo following World War II. The Pacific War, initiated by the Japanese Empire, was waged with the intention of incorporating Southeast Asian colonies into Japan's sphere of influence under the pretext of liberation. Despite Southeast Asia's central role in the Pacific War, the IMTFE placed limited emphasis on Japan's aggression in the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political discourse surrounding the indictments, proceedings, and judgments of the IMTFE to analyze how Japan's aggression and war crimes in Southeast Asia were interpreted within the framework of Western colonialism and Japanese imperialism.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Philippin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ench Indochina, and the Dutch East Ind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Southeast Asia were addressed and reveals how the trials exposed the dual imperialist dynamics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Slogans such as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nd the New Order, which symbolized Japan's wartime ideology, lost their legitimacy as evidence of Japan's brutality surfaced during the trials. However, while the IMTFE aimed to prosecute Japan's war crimes, it did not serve as a justification for the continued legitimacy of Western colonial rule. Ultimately, the IMTFE not only condemned Japan's imperialist aggression but also functioned as a mechanism that reinforced Western imperial dominance, illustrating the multilayered complexities of colonial rule in postwar Southeast Asia.

Keywords: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War Trials, Southeast Asia, Aggression, War Crimes, Imperialism, Colonial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11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고고학의 재건과 굴절(1949~1978)

이유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고학 재건
III. 문물 조사
IV.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고고학의 굴절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 중국의 고고학을 주도한 기관은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산하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였다. 역사어언연구소는 1928년 설립과 동시에 고고학조(考古學組)를 설치하여 중국 고고학 연구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1] 이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1928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인쉬(殷墟) 발굴이었다.[2] 이는 당시 의고사조(疑古思潮)가 유행하며 역사성이 희석되었던 상(商) 왕조의 실재를 증명한 중요한 발굴이었다.

1937년 이후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역사어언연구소는 쓰촨(四川)의 펑산한묘(彭山漢墓)[3]와 청두(成都)의 전촉왕건묘(前蜀王建墓)[4]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서북(西北) 지역 조사를 수행하였고,[5] 청두

---

* 투고: 2025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25)로 수행된 연구임.

1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簡史', https://www1.ihp.sinica.edu.tw/AboutIHP/History(검색일: 2024.10.31.).

2 이에 대해서는 김정열(2024)의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동북아역사논총』 83); 홍영미(2024)의 「난징국민정부의 고대사 인식과 고고 연구기관」(『중국근현대사연구』 102) 등 참고.

3 南京博物院 編, 1991, 『四川彭山漢代崖墓』, 北京: 文物出版社.

4 馮漢驥, 1964, 『前蜀王建墓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5 王世民, 2024, 『中國考古學編年史』, 北京: 中華書局, 104, 110~114쪽; 石璋如, 1952, 『'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考古年表』, 臺北: 歷史語言研究所, 8~11쪽; 夏鼐, 1949, 「甘肅考古漫記」,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編輯, 2000, 『夏鼐文集』 中,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23~276쪽. 이 글은 1949년에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일부를 「敦煌考古漫記」라는 제목으로 『考古通訊』에 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2000년 『夏鼐文集』을 편찬할 때, 遺稿를 근거로 圖版을 추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충칭(重慶)에서는 '원고석기전(遠古石器展)'을 개최하기도 하였다.[6]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국공내전의 혼란 속에서 역사어언연구소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였다. 당시 소장을 맡고 있던 푸쓰녠(傅斯年, 1896~1950)은 "이왕 시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모두 해산하면 그만이다"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연구소의 해산을 원치 않았고, 다각적인 논의 끝에 타이완(臺灣)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 이는 1949년 푸쓰녠이 타이완대학(臺灣大學) 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7]

당시 역사어언연구소는 역사조, 언어조, 고고조, 인류학조 등 4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고고조에는 조장인 리지(李濟, 1896~1979)를 비롯하여 샤나이(夏鼐, 1910~1985), 둥쭤빈(董作賓, 1895~1963), 량쓰융(梁思永, 1904~1954), 궈바오쥔(郭寶鈞, 1893~1971), 가오취쉰(高去尋, 1910~1991), 스장루(石璋如, 1902~2004), 리샤오딩(李孝定, 1918~1997), 장빙췐(張秉權, 1919~?)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리지를 포함한 대다수의 연구자는 타이완으로 이주하였고, 대륙에는 궈바오쥔, 량쓰융, 샤나이만 남게 되었다.[8]

비록 대륙에 남은 이들이 인쉬 발굴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노장이었지만, 역사어언연구소의 고고조가 타이완으로 이동하면서 갑골과 청동기를 포함한 주요 문물, 도서, 연구 설비, 그리고 고궁에서 이관된 문물들까지 타이완으로 옮겨졌다.[9] 이에 따라 중국 대륙의 고고학 연구 기반 구축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하였다.

6 黃尙明 編著, 2019, 『中國考古學之父: 李濟傳』, 武漢: 華中科技大學出版社, 143~145쪽.

7 王汎森, 2009, 「王汎森談史語所八十年」, 余紀忠文教基金會, https://www.yucc.org.tw/info/3167(검색일: 2024.8.20.).

8 胡逢祥, 2013, 「史語所遷臺與1950-1960年代臺灣的人文學術建設」,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2, 68~71쪽.

9 胡逢祥, 2013, 위의 글, 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럼에도 중국의 고고학 발굴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중화민국 시기에 지질연구소(地質研究所)에서 구석기 고고학을 담당했던 페이원중(裴文中, 1904~1982), 자란포(賈蘭坡, 1908~2001), 양중젠(楊鍾健, 1897~1979), 류센팅(劉憲亭, ?~?) 등은 대륙에 남았다. 또한 중국 서북 지역 고고학을 담당했던 황원비(黃文弼, 1893~1966), 베이핑연구원(北平研究院) 역사조(歷史組)에서 활동했던 쉬쉬성(徐旭生, 1888~1976), 쑤빙치(蘇秉琦, 1909~1997), 그리고 동북 지역의 리원신(李文信, 1903~1982), 퉁주천(佟柱臣, 1920~2011) 등도 발굴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1949년 자란포 등은 중일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저우커우뎬(周口店) 발굴을 재개하였고,[10] 같은 해 지린성(吉林省) 둔화(敦化)에서는 류딩샨(六頂山) 묘지를 발굴하여, 유명한 발해의 정혜공주비(貞惠公主碑)를 발견하였다.[11]

그러나 고고학 연구를 총괄하는 중추 기구였던 역사어언연구소의 부재로 인해, 고고학 연구 진영의 재건이 필요했다.

이 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부터 개혁개방(1978) 이전까지 중국 고고학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며, 정책적 추진을 위한 중추 관리 기구의 재건, 인재 양성, 학술 잡지 창간 등을 통해 중국 고고학의 궤적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요 발굴 성과를 정리하여 당시 고고학적 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숙반운동, 반우파투쟁과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극좌 경향이 고고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로 인한 학문적 '굴절'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

10 賈蘭坡·黃慰文, 1984, 『周口店發掘記』,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62~165쪽.

11 閻萬章, 1956, 「渤海貞惠公主墓碑'的研究」, 『考古學報』 1956-2; 金毓黻, 1956, 「關於'渤海貞惠公主墓碑研究'的補充」, 『考古學報』 195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고학 재건

1. 고고 연구 기구 설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고고학의 체계적 재건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무원(政務院) 문화부(文化部) 산하에 문물국(文物局)을 설립하였다. 문물국은 도서처(圖書處), 박물처(博物處), 문물처(文物處)로 구성되어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문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문물국 초대 국장에는 정전둬(鄭振鐸, 1898~1958), 부국장에는 왕예추(王冶秋, 1909~1987)가 임명되었다. 문물처는 원래 '고물처(古物處)'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셰천성(謝辰生, 1922~2022)의 회고에 따르면, '고물'이라는 개념이 혁명 문물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물처'로 개칭되었다고 한다.[12]

또한 문물국은 화북인민정부(華北人民政府) 고등교육위원회(高等教育委員會) 소속이었던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베이징역사박물관(北京歷史博物館), 베이징도서관(北京圖書館), 베이징문물정리위원회(北京文物整理委員會) 등을 문화부로 귀속시켰다. 이를 통해 문물국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 및 문화재 관리의 중추 기구를 재건하는 데 주력하였다.[13]

아울러 각 지역의 문물관리위원회(文物管理委員會), 문물정리위원회(文物整理委員會), 문물보관위원회(文物保管委員會)와 같은 조직을 재정비하여 문물 보호와 발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1949년 12월에 난징시문물보관위원회(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 산둥성 칭다오시문화고물보관위원회(青島市文化古物保管委員會), 푸젠성(福建省) 혁명문물수집위

12 謝辰生 口述, 姚遠 撰寫, 2018, 『謝辰生口述: 新中國文物事業重大決策紀事』, 北京: 三聯書店, 19~20쪽.

13 國家文物局 編, 2002, 『中華人民共和國文物博物館事業紀事(1949-1999)』 上, 北京: 文物出版社, 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회(革命文物蒐集委員會) 등이 설립되거나 정상화되었다.[14]

중앙 문물국과 지방 문물관리위원회 등으로 연결되는 체계 외에도, 고고학 연구와 발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소의 설립은 절실한 과제였다. 이에 문물국은 1950년 5월 19일, 베이핑연구원 사학연구소와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의 일부 인원을 중심으로 고고연구소(考古研究所) 설립을 준비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중국과학원 내에 고고연구소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당시 문물국 국장이었던 정전둬가 소장을 맡았으며, 량쓰융과 샤나이가 공동으로 부소장을 담당하였다.[15] 이로써 고고연구소는 기존 역사어언연구소 고고조의 역할을 대신하며 본격적으로 고고학 발굴과 연구를 수행하는 중앙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중화민국 시기 저우커우뎬과 같은 구석기 유적 발굴을 주도했던 중국지질조사소 신생대연구실(新生代研究室)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인 1951년, 중국과학원 고생물연구소(古生物研究所) 산하 '신생대 및 고척추동물조(新生代

14 國家文物局 編, 2002, 위의 책, 9~10쪽.

15 國家文物局 編, 2002, 위의 책, 8~9쪽. 여기서 량쓰융과 샤나이가 부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정전둬가 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다소 의외의 인선으로 보일 수 있다. 그가 고고 발굴을 직접 수행하거나 심도 있는 고고학 연구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소장으로 임명된 데는 다음 두 가지 배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그의 개인적인 경력이다. 1928년 그는 『근백년 고성고묘 발굴사(近百年古城古墓發掘史)』를 저술하여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 근동, 나일강 유역에서 이뤄진 고고 발굴 성과를 소개한 바 있고, 중일전쟁(中日戰爭) 시기에는 귀중한 고서와 문물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고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도판화한 『중국역사참고도보(中國歷史參考圖譜)』를 발간하는 등 고고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기여한 바 있다. 둘째, 그가 문물국 국장이라는 점이다.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조율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문물국 국장이 소장직을 겸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고고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과 연구는 부소장인 샤나이가 담당하였다. 량쓰융 또한 부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당시 와병 중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샤나이의 경우, 문물국 문물처 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고고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무산되었다. 샤나이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했기에 겸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王世民, 1990, 「鄭振鐸先生與文物考古工作」, 『文博』 1990-1; 謝辰生口述, 姚遠 撰寫, 2018, 앞의 책, 20~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설립 연혁

연도	내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저우커우뎬 발굴 재개, 책임자: 자란포
1951년	기존 지질연구소 신생대연구실, 중국과학원 고생물연구소 산하 '신생대 및 고척추동물조'로 편입. 주임: 양중젠
1953년 4월	'신생대 및 고척추동물조', '고척추동물연구실'로 재편, 주임: 양중젠 저우커우뎬공작조 병설
1955년 4월	제1회 학술위원회 성립. 주임: 양중젠
1956년 3월	연구실 산하, '저등척추동물조', '고등척추동물조', '인류화석 및 문화조' 설치 저우커우뎬공작조, 저우커우뎬공작참으로 승격
1956년 10월	타이위안공작참 성립
1957년 3월	『고척추동물학보(古脊椎動物學報)』(계간) 창간
1957년 9월	'고척추동물연구실', '고척추동물연구소'로 승격. 소장: 양중젠 연구실 산하 3개 연구조, 모두 연구실로 승격
1960년 4월	연구소,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Institute of Vertebrate Paleontology and Paleoanthropology, IVPP)'로 개칭. 소장: 양중젠 '신생대지층실(新生代地層室)' 증설. 이 밖에 '화석수리실(化石修理室)', '모형장가실(模型裝架室)', '회도실(繪圖室)', '조상실(照相室)', '도서실', '편집실', '표본관' 등을 갖춤
1972년	잡지 『화석』 창간

及古脊椎動物組)'로 편입되었다. 이후 1953년 4월에는 '고척추동물연구실(古脊椎動物研究室)'로 개편되었으며, 양중젠이 주임으로 임명되었고, 페이원중, 자란포 등이 연구원으로 합류하였다.[16]

고척추동물연구실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저우커우뎬의 발굴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실 내에 저우커우뎬공작조(周口店工作組)가 설치되어 발굴 작업을 전담하였다. 이후 1956년, 연구실 산하에 저등척추동물조(低等脊椎動物組),

16 본문에서 정리한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의 연혁은 다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國家文物局 編, 2002, 위의 책; 王世民, 2024, 앞의 책; 古脊椎動物與古人類研究所, '歷史沿革' https://ivpp.cas.cn/jggk/lsyg/(검색일: 2024.10.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등척추동물조(高等脊椎動物組), 인류화석 및 문화조(人類化石及文化組)가 신설되었으며, 저우커우뎬공작조는 공작참(工作站)으로 개편되고, 타이위안공작참(太原工作站)도 추가로 설립되었다.

1957년 9월, 고척추동물연구실은 고척추동물연구소(古脊椎動物研究所)로 승격되고, 연구소 산하 3개의 연구조가 각각 연구실로 승격되었다. 이후 1960년에는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古脊椎動物與古人類研究所)'로 개칭되었으며, 소장은 계속해서 양중젠이 맡았다.

양중젠은 1923년 베이징대학 지질과를 졸업한 뒤, 1927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지질조사소 신생대연구실에서 부주임과 주임을 역임하였다. 또한 베이징대학, 시베이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재직하며 시베이대학 교장을 지내는 등 다양한 학술 및 행정 경험을 쌓았다.[17]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며 연구소의 성장을 이끌었다.

2. 인재 양성

중국은 문화부 문물국,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고척추동물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고고학 정책을 수행할 중추 관리 기구를 재건하였다. 지방의 문물관리위원회와 박물관은 중앙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고 발굴, 보존, 전시 등 실무를 담당해야 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기반(하드웨어)과 체계(메커니즘)는 갖추어졌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각 대학에 고고학 전공이 설치되지 않았고, 중일전쟁으로 고고 사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역사어언연구소 고고조가 대부분의 자료와 기자재를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중국 대륙은 심각한 자원 부족을 겪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공농

17 高源, 2020,「中國古脊椎動物學與自然史博物館事業的開拓者-楊鍾健院士」,『自然科學博物館研究』202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업 건설 사업(社會主義工農業建設事業)'[18]의 추진으로 각지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베이핑연구원 사학연구소와 사어소의 일부 인력, 지방 연구자들만으로는 중국 전역의 고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고고학 및 문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앙문화부,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베이징대학이 연합하여 '고고 공작 인원 훈련반(考古工作人員訓練班, 이하 훈련반)'을 조직하였다.[19]

훈련반의 설립은 1951년 말 문물국 부국장 왕예추가 주관한 '1952년 고고 공작 좌담회(1952年考古工作座談會)'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당시 참가자들은 훈련반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왕예추는 훈련반을 관련 업무 중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훈련반은 필요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20]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1952년 7월, 문화부와 교육부의 비준을 받아 문화부 문물국,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베이징대학의 연합 주최로 훈련반이 설립되었다. 문화부는 훈련반 조직과 준비를 담당했고, 고고연구소는 교원 및 실습을, 베이징대학은 교원과 수업 장소를 제공하였다.[21]

1952년부터 1955년까지 훈련반은 총 4기에 걸쳐 운영되었다.

첫 번째 훈련반은 1952년 8월 11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커리큘럼은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수업은 2개월 동안 베이징대학에서 이루어졌고, 실습은 1개월 동안 허난성 정저우(鄭州)와 뤄양(洛陽)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문물국 문물처의 페이원중이 담임을 맡았으며, 학생들은 전국 각 대행정구(大行政區)에서 선발된 문물 간부 72명으로 구성되었다.[22] 강의는 샤

18 高軍峰, 2011, 「1949-1978年新中國工農業發展方針的歷史演變」, 『毛澤東思想研究』 2011-2.

19 王仲殊, 2011, 「夏鼐先生傳略」, 『夏鼐日記』 1,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4쪽; 「考古工作人員訓練班成立」, 『文物參考資料』 1952-1.

20 孫秀麗, 2005, 「考古的'黃埔四期': 記1950年代考古工作人員訓練班」, 『中國文化遺産』 2005-3, 73쪽.

21 孫秀麗, 2005, 위의 글, 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이, 탕란(唐蘭, 1902~1979), 마헝(馬衡, 1881~1955), 안즈민(安志敏, 1924~2005), 량쓰청(梁思成, 1901~1972) 등이 담당했으며,[23] 10월 중순부터 진행된 발굴 실습은 고고연구소의 안즈민과 궈바오쥔이 각각 정저우와 뤄양에서 책임졌다.[24]

두 번째 훈련반은 1953년 8월 1일에 시작되어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89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샤오거우(燒溝) 실습에서는 전국(戰國) 시기의 무덤 59기를 발굴하며 성과를 거두었다.[25]

1954년 7월 23일에 시작된 세 번째 훈련반은 참가자 수가 12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론 수업과 실습의 비중을 동일하게 배정하기 위해 기존의 2개월 이론, 1개월 실습 체계를 각각 1.5개월로 개정하였다. 9월 초부터 시작된 발굴 실습은 샨시성 시안(西安)의 바차오공정지구(灞橋工程地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반포(半坡) 양사오문화(仰韶文化) 유적 및 후한~당대 무덤 24기를 발굴하였다.[26]

네 번째 훈련반은 1955년 7월 15일에 개강하였으며, 참가자 수는 71명으로 이전 기수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세 번째 훈련반과 동일하게 각각 1.5개월로 운영되었다. 실습은 9월 초부터 정저우 얼리강(二里崗)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국 시기부터 당대에 이르는 89기의 무덤 발굴과 상나라 거주

22 「考古工作人員訓練班成立」, 『文物參考資料』 1952-1; 石興邦, 2005, 「考古工作人員訓練班片斷」, 『中國文化遺産』 2005-3.

23 石興邦, 2005, 위의 글, 84~85쪽; 王世民, 2024, 앞의 책, 132쪽.

24 安志敏, 1954, 「1952年秋季鄭州二里崗發掘記」, 『考古學報』 8; 郭寶鈞·林壽晉, 1955, 「1952年秋洛陽東郊發掘報告」, 『考古學報』 9.

25 「第二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開學」, 『文物參考資料』 1953-8; 「第二屆考古人員訓練班結業」, 『文物參考資料』 1953-11; 王仲殊, 1954, 「洛陽燒溝附近的戰國墓葬」, 『考古學報』 8.

26 「第三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正式開學」, 『文物參考資料』 1954-8; 「第三屆考古訓練班學員畢業」, 『文物參考資料』 1954-11; 俞偉超, 1956, 「西安白鹿原墓葬發掘報告」, 『考古學報』 195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고고 공작 인원 훈련반 개요

기	기간	인원	실습	비고
1기(1952)	8.11.~11월 중순	72	정저우, 뤄양 등	이론 2+실습 1
2기(1953)	8.1.~11.4.	89	뤄양 샤오거우, 정저우 얼리강	상동
3기(1954)	7.23.~10.22.	120	시안 바차오공정지구 (반포, 한당 무덤)	이론 1.5+실습 1.5
4기(1955)	7.15.~10.15.	71	정저우 얼리강	상동

유적 정리라는 성과를 거두었다.[27]

이처럼 4기에 걸친 훈련반을 통해 약 350명이 참여하여 고고학 기초 이론과 실습을 경험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이론과 실습의 비중을 2대 1로 두었으나, 이후 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중을 1대 1로 조정한 것은 고고학 교육의 실무적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훈련반 운영을 계기로 두 개의 대학에 고고학 전공이 설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었다.

1952년 훈련반 1기가 종료된 후, 중앙문화부와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대학에 고고학 전공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베이징대학이었다. 베이징대학은 이미 1922년에 국학문(國學門) 산하에 '고고학연구실(考古學研究室)'을 설립하고, 이듬해 고적고물조사회(古跡古物調查會)(후에 '고고학회'로 개명)를 창립하는 등 중국 대학 중 가장 먼저 고고학 연구와 발굴을 수행할 기구를 마련한 바 있었다.[28]

1952년 당시에는 문과연구소(文科研究所)와 고기물정리실(古器物整理室, 주임: 상다)이 고고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기 훈련반 종료 후, 중앙문화부와 고고연구소의 지원으로 베이징대학은 문과연구소를 폐지하고, 고기물

27 「第四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開學」, 『文物參考資料』 1955-8; 「第四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結業」, 『文物參考資料』 1955-11.

28 이유표, 2024,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고고학 인식과 활동」, 『동북아역사논총』 83, 105~1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리실을 역사학과로 귀속시켜 역사학과 내에 고고학 전공을 설치하였다.[29] 이는 당시 중국에 고고학 전공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단순히 전공을 설치한다고 해서 충분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당시 베이징대학에는 장정랑(張政烺, 1912~2005), 샹다(向達, 1900~1966), 옌원루(閻文儒, 1912~1994), 천완리(陳萬里, 1892~1969) 등 고고학 강의를 맡을 수 있는 교수가 있었으나, 이들만으로는 고고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베이징대학은 고고연구소에서 고고학 전공 설치를 위해 파견된 쑤빙치를 정식으로 영입하고, 정전둬, 페이원중, 샤나이, 린야오화(林耀華, 1910~2000), 궈바오쥔, 한셔우셴(韓壽萱, 1899~1974) 등을 겸임 교수로 초빙하였다.[30]

특히,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 정전둬와 부소장 샤나이, 신생대 및 고척추동물조의 페이원중, 베이징역사박물관장 한셔우셴 등이 참여한 것은 당시 베이징대학 고고학 전공 설치에 중국 고고학계의 중추 관리 기구가 모두 투입되었음을 보여준다.[31]

---

29 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歷史沿革', https://archaeology.pku.edu.cn/xygk1/lsyg.htm(검색일: 2024.10.31.).

30 당시 커리큘럼을 보면, 샤나이가 고고학통론(考古學通論)을 강의했고, 린야오화가 인류학통론(人類學通論)을, 페이원중, 자란포, 안즈민 등이 선사고고학(史前考古學)을, 궈바오쥔, 쑤빙치, 쑤바이 등이 중국역사고고학(中國歷史考古學)을, 장정랑이 고문자학(古文字學)을, 샹다가 중국고고학사(中國考古學史)를, 정전둬와 쉬방다(徐邦達, 1911-2012), 천완리, 옌원루 등이 중국미술사(中國美術史)를, 그리고 당시 한셔우셴과 푸전룬, 왕전둬, 퉁주천 등이 중국박물관학통론(中國博物館學通論)을 강의하였다(黃建秋, 2023, 『百年中國考古』,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4~197쪽).

31 베이징대학은 1949년에 이미 설치된 박물관학 전공 학생들과 역사학 전공 학생들 중 일부를 고고학 전공으로 편입시켰다. 고고학 전공 설치 이전에도 일부 학생들이 훈련반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전공 설치 이후, 1950학번 학생들이 제2기 훈련반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제4기 훈련반까지 베이징대학 고고학 전공 학생들이 훈련반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記憶: 北大考古口述史』(趙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베이징대학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고고학 전공을 설치한 대학은 시베이대학(西北大學)이었다. 시베이대학의 전신인 시베이연합대학(西北聯合大學)은 이미 1938년 역사과에 '고고위원회(考古委員會)'를 설립하고, 황원비를 역사과 교수로 초빙한 바 있다. 1939년에는 '고고실(考古室)'을 설립하였으며, 장건묘(張騫墓)와 번쾌묘(樊噲墓) 등 한중(漢中) 지역의 문물과 고적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작업을 수행하였다. 1942년에는 황원비가 역사과 주임으로 임명되어 고고학 및 선사 관련 과목을 개설하며 고고학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2]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보룬(武伯綸, 1902~1991) 등의 노력으로 1954년 역사과에 '고고반(考古班)'이 설치되었고, 1956년에 정식으로 고고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마창서우(馬長壽, 1907~1971)가 고고과연실(考古科研室) 주임을 맡았으며, 천즈(陳直, 1901~1980)가 부주임, 류스어(劉士莪, 1927-2013), 리자한(李家翰, ?~?), 자더야오(賈德耀, ?~?), 차이얼궤이(蔡爾軌, ?~?) 등이 강의를 담당하였다.[33]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베이징대학 고고학 전공 설치를 지원했던 것처럼, 시베이대학에도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고고학 전공이 정식 설치되기 전부터 스싱방(石興邦, 1923~2022), 왕보홍(王伯洪, 1923~1974), 린서우진(林壽晉, 1929~1988), 마더즈(馬得志, 1923~) 등이 강의를 했고, 전공 설치 이후에도 궈바오쥔, 진쉐산(金學山, ?~?), 스싱방, 양훙(楊泓, 1935~), 궈이푸(郭義孚, ?~?) 등이 강의를 맡으며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였다.[34]

1966년 이전에 고고학 전공을 설치한 대학은 베이징대학과 시베이대학 두

主編,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를 참고.

32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 '學院簡介', https://culture.nwu.edu.cn/xygk/xyjj1/lsyg.htm(검색일: 2024.8.16.); 戴彤心, 1984, 「西北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中國考古學年鑒(1984)』, 北京: 文物出版社, 236쪽.

33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 '學院簡介', https://culture.nwu.edu.cn/xygk/xyjj1/lsyg.htm(검색일: 2024.8.16.); 戴彤心, 1984, 위의 글, 236쪽.

34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 '學院簡介', https://culture.nwu.edu.cn/xygk/xyjj1/lsyg.htm(검색일: 2024.8.16.); 戴彤心, 1984, 위의 글, 2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곳에 불과했으나, 여러 대학에서 '고고교연실(考古教研室)'을 설립하여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산대학(中山大學)은 1956년 역사학과에 고고교연실을 설립하고, 1973년에 고고학 전공으로 발전시켰다. 1981년 인류학과가 설립되면서 고고학 전공은 인류학과로 이관되었다.[35] 쓰촨대학(四川大學)은 1962년 노장 펑한지(馮漢驥, 1899~1977)의 주도로 고고교연실을 설립하고, 1973년에 고고학 전공을 설치하였다.[36]

〈표 3〉 중국 '개혁개방' 이전, 고고학 기구 설립 대학

대학	연도	내용
베이징대학	1922 1923 1924 1932 1934 1951 1952 1954 1958	연구소 국학문 산하에 '고고학연구실' 설립 '고고학연구실', '고적고물조사회'로 개편 '고적고물조사회', '고고학회'로 개명 '국학문', '연구원 문사부'로 개명 '연구원 문사부', '문과연구소'로 개칭 역사과 49학번에 '고고조' 설치 역사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고고학 전공, 역사 전공 고고전문화(考古專門化)로 개편 고고전문화, 고고학 전공으로 환원
시베이대학	1938 1939 1954 1956	시베이연합대학, 역사과에 '고고위원회' 설립 고고실 설립 시베이대학에 '고고반' 설치 고고학 전공 성립
중산대학	1956 1973 1981	역사학과에 '고고교연실' 설치 고고학 전공 성립 고고학 전공, 인류학과로 이관
쓰촨대학	1962 1973	역사학과에 '고고교연실' 설치 고고학 전공 성립
산둥대학[37]	1972	역사학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35 鍾成, 1984, 「中山大學人類學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中國考古學年鑒(1984)』, 北京: 文物出版社, 234~235쪽.

36 林向, 1984, 「四川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난징대학[38]	1972	역사학과에 '고고교연실' 성립
지린대학[39]	1972	역사학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샤먼대학[40]	1950년대 1973	역사학과에 '고고학전문화' 설치 역사학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우한대학[41]	1976	역사학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정저우대학[42]	1977	역사학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산시대학[43]	1977	역사학과에 고고학 전공 성립

훈련반과 대학의 고고학 전공 설립은 고고학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교재의 부족이었다. 1949년 이전에 웨이쥐셴(衛聚賢, 1899~1989), 장펑(張鳳, 1887~1966)[44] 등이 교재를 편찬한 사례가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재가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50년에는 『소련대백과전서』의 '고고학' 항목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였고,[45]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문물참고자료(文物參考資料)』와 『고고통신(考古通信)』 등을 통

37 劉敦願, 1984, 「山東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32~233쪽.

38 蔣贊初, 1984, 「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31쪽.

39 魏存成, 1984,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29~230쪽.

40 葉文程, 1984, 「廈門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32쪽.

41 「武漢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34쪽.

42 賈洲傑, 1984, 「鄭州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33쪽.

43 李壯偉, 1984, 「山西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 위의 책, 229쪽.

44 이유표, 2024, 앞의 글, 102쪽.

45 王世民, 2024, 「導言: 中國考古學的發展歷程概述」, 『中國考古學編年史』, 北京: 中華書局, 25~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 소련의 관련 저작을 번역하거나 동향을 소개하였다.[46]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중산대학과 정저우대학(鄭州大學)에서는 각각 『고고학통론(考古學通論)』이라는 교재를 편찬하기도 하였다.[47]

한편,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1956년 12월 15일부터 1957년 3월 9일까지 '고고연구소 견습원 훈련반(考古研究所見習員訓練班)'을 운영하였다. 훈련반의 강의 자료는 수합되어 『고고학기초(考古學基礎)』라는 교재로 출간되었다. 이 교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첫째, 기초지식: 선사 고고부터 상주, 진한, 위진남북조, 송원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고고학 개관
>
> 둘째, 주제별 보고: 석굴사(石窟寺), 한당(漢唐) 도시 유적, 고대 회화와 자기, 유물의 보관 및 박물관 진열, 그리고 인류와 동물 골격 연구와 같은 다양한 논의
>
> 셋째, 고고기술: 필드고고 방법론, 사진 촬영, 회도, 측량, 유물 정리 및 복원 기술 등

견습원 훈련반은 기존 훈련반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진 촬영, 측량, 회도, 유물 정리 및 복원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훈련생들이 수료 후 곧바로 발굴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므로 실습 과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48]

1958년 '대약진(大躍進)' 운동의 구호 속에서, 각 대학은 각 전공의 '대약진'을 외치며 다양한 교재를 편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대학과 시베이대학의 사례다. 베이징대학은 1958년 교수와 학생들이 협력하여 『중국고고학(中國

46 王世民, 2024, 위의 글, 25~26쪽.

47 黃建秋, 2023, 앞의 책, 204쪽.

48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58, 「前言」, 『考古學基礎』, 科學出版社, iii~iv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考古學)』 교재를 편찬하고,[49] 1960년에는 전국 고고 단위로 의견수렴본을 배포하였으나, 정식 출간을 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시베이대학에서는 1958년 3학년 학생들이 『중국고고목록(中國考古目錄)』을 편찬하고, 곧바로 『중국고고학(中國考古學)』 교재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석기 시대, 은주, 진한, 수당 시기의 고고학 대강(大綱)을 완성했으나, 교재 편찬 작업은 학교 내 다른 '운동'과 권위적인 교수들의 냉담한 태도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50]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고고학이라는 학문(학과)의 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훈련반과 고고학 전공 설치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진전이었다. 또한 교재 편찬은 고고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당시 '사회주의 공농업 건설 사업'이라는 현실적 배경과 마르크스주의 고고학 건설이라는 이론적 사명이 결합하면서 몇 가지 한계도 나타났다.

첫 번째는 소련 고고학 이론의 수용이다. 20세기 초 의고사조(疑古思潮)가 유행하며 중국 고대사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자, 이를 대안으로 고고학이 강조되었다. 고고학은 의고사조에 의해 축소된 중국 역사의 유구함과 고대 문명의 실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상 왕조의 존재를 증명했던 인쉬 발굴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을 목표로 소련의 고고학 이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소련에서 고고학은 역사과학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 간주되었으며,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의 과거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

49 제1책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두 편이 수록되었고, 제2책은 '상주', 제3책은 '전국진한'과 '위진-송원'으로 구성되었다.

50 劉昭豪, 1958, 「破除迷信,大膽動手編寫'中國考古學'大綱和教材」, 『考古通訊』 1958-10, 65~66쪽.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시베이대학에서는 '우파', '자산계급 학술권위'로 규정된 천덩위안(陳登原), 린관이(林冠一) 등에 대한 비판운동이 지속되었다. 여기서 말한 학교 내 다른 '운동'이 바로 이들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 보인다(人民出版社編輯部 編, 1959, 『歷史教學中兩條道路的鬪爭』(續輯), 北京: 人民出版社, 98~1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요 임무였다.[51] 이는 고고학을 역사학의 하위 분야로 본 것으로, 이는 중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면서 고고학의 독립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역사학을 보조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각 대학의 고고학 전공과 고고교연실이 대부분 역사학과에 설치된 이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영향이다. 비록 베이징대학과 시베이대학에서 교재 편찬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대약진' 운동의 구호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순수한 학문적 목적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그마저 아이러니하게도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전개된 '백기를 뽑고, 홍기를 심자(拔白旗, 插紅旗)', '자산계급 학술권위' 비판으로 인해 마침표를 찍지 못하였다. 이는 '대약진' 운동의 추진 동력이 대규모의 비판 운동으로 번지면서 지향점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3. 학술 잡지 창간

중앙문화부와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당시 중국 고고 업무의 중추 관리 기구로서, 인재 양성과 고고학 전공 설치에 힘쓰는 한편, 고고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 교류 플랫폼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중앙문화부 사회문화사업관리국(社會文化事業管理局)에서 창간한 『문물참고자료(文物參考資料)』를 들 수 있다. 이 간행물은 도서관, 박물관, 문물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법령, 보도, 경험, 기술, 이론 등을 다루며, 초기에는 소련의 선진 경험을 학습하기 위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수행하였다.[52] 창간 당시에는 비정기 간행물로 시작했으나, 1950년 7기부터 공개 간행으로 전환되었고,

51 王世民, 2024, 앞의 책, 25~26쪽.

52 1950년도 내용을 보면, 「蘇聯的圖書館」, 「蘇聯考古學權威吉謝列夫博士來我國講學」, 「我們向蘇聯歷史考古學學習什麼?-吉謝列夫博士在華講學略記」, 「蘇聯人民藝術博物館概況」(1950-7), 「蘇聯國立革命博物館」(1950-10) 등 소련의 박물관, 도서관을 소개하거나, 소련의 고고학 동향, 그리고 소련 학자를 소개하고 강의 내용을 정리한 기사들이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3년부터 월간으로 정기 간행되었다. 이후 1959년 『문물』로 개명되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53]

다음으로, 『고고학보(考古學報)』는 원래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에서 발간하던 『안양발굴보고(安陽發掘報告)』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고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안양(安陽)'이라는 지명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게 되자, 1936년에 『전야고고보고(田野考古報告)』로, 1947년에는 『중국고고학보(中國考古學報)』로 개명되었다. 이후 1949년 중단되었다가, 1951년 12월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복간되었고, 1953년부터 『고고학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54]

고고학 성과를 공유할 플랫폼이 부족했던 당시, 정전둬는 1954년 4월 고고연구소에서 반(半)통속적이고 반(半)학술적인 성격의 고고학 잡지 창간을 제안하였다.[55]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소련의 선진 경험을 소개하고, 지식 범위를 확충하며, 고고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고고통신(考古通信)』을 창간하였다.[56] 이 잡지는 5,000자를 넘지 않는 짧은 논문과 간보(簡報)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창간 초기에는 격월간으로 발간되다가 1958년 월간으로 개편되었다. 1959년에는 『고고(考古)』로 개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57]

이처럼 『문물참고자료』는 고고학 관련 법령, 보도, 경험, 이론 등을 다루며 학술성보다는 고고 업무 홍보와 통속적인 성격이 강했고, 『중국고고학보』는 고고학 성과와 연구를 심도 있게 다룬 학술성이 높은 간행물이었으며, 『고고통신』은 반통속적이고 반학술적인 성격을 띠며, 짧은 논문이나 간보(簡報)를 중심으로

53 朱乃誠·王景霞, 2009, 「中國考古文物類期刊的發展與中國考古學的發展」, 『南方文物』 2009-2, 105~106쪽; 黃建秋, 2023, 앞의 책, 188~189쪽.

54 黃建秋, 2023, 앞의 책, 188쪽.

55 黃建秋, 2023, 위의 책, 189쪽.

56 「發刊詞」, 『考古通訊』 1955-1.

57 朱乃誠·王景霞, 2009, 앞의 글, 105~106쪽; 黃建秋, 2023, 앞의 책, 1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고고삼대간' 명칭 변천

기간	연도	내용
문물	1950 1953 1959	중앙문화부 사회문화사업관리국, 『문물참고자료』 창간(내부자료, 비정기간행물) 1950년 제7기부터 공개 간행으로 전환 월간으로 개편 『문물』로 개명
고고학보	1929 1936 1947 1949 1951.12. 1953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발간, 『안양발굴보고』 『전야고고보고』로 개명 『중국고고학보』로 개명 정간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복간 『고고학보』로 개명
고고	1955 1958 1959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고고통신』 창간(격월간) 월간으로 개편 『고고』로 개명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이후 각각 『문물』, 『고고학보』, 『고고』로 개칭된 후, 현재에 이르면서, 『문물』과 『고고』는 주로 연구논문과 간보를 다루는 학술지로 발전했고, 『고고학보』는 장편의 발굴보고를 위주로 게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학술지가 창간되어 고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0년 난징박물원(南京博物院)이 『남박순간(南博旬刊)』을, 1955년 장시성문물관리위원회(江西省文物管理委員會)가 내부 참고용으로 『문물공작자료(文物工作資料)』를 발간하였다. 1957년 문물출판사(文物出版社)는 『박물관역총(博物館譯叢)』, 1958년 고궁박물원은 『고궁박물원원간(故宮博物院院刊)』, 뤼순박물관은 『뤼순박물관통신(旅順博物館通訊)』을 창간하였다. 또한 1959년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는 『고척추동물과 고인류(古脊椎動物與古人類)』, 1960년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은 『국제문물박물관공작참고자료(國際文物博物館工作參考資料)』, 1964년 광둥성문물관리위원회(廣東省文物管理委員會)와 광둥성박물관(廣東省博物館)은 『광둥문박자료(廣東文博資料)』를 창간하였다. 이처럼 적잖은 학술지가 간행되면서 학술 교류의 장이 확충되었으나, 1966년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혁명으로 인하여 모두 정간되었다.[58]

Ⅲ. 문물 조사

1. 전국적인 문물 조사 사업

1949년 11월 설립된 중앙문화부 문물국은 이듬해 전국적인 문물 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안북문물감찰단(雁北文物勘察團)'과 '동북고고단(東北考古團)'의 파견을 들 수 있다.

안북문물감찰단은 1950년 7월에서 8월 사이 산시(山西) 북부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감찰단의 단장은 페이원중이 맡았으며, 천멍자(陳夢家, 1911~1966), 류즈핑(劉致平, 1909~1995) 등이 부단장을 맡아 고고조(考古組)와 고건축조(古建築組)를 각각 이끌었다. 주요 참여 인물로는 푸전룬(傅振倫, 1906~1999), 옌원루, 자오정즈(趙正之, ?~?), 모중장(莫宗江, 1916~1999), 왕쉰(王遜, 1915~1969), 쑤바이(宿白, 1922~2018) 등이 있었다. 이들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0일간 다퉁(大同)의 윈강석굴(雲崗石窟), 산인(山陰) 구이춘고성(故驛村古城), 잉현(應縣) 및 수어현(朔縣) 고건축, 훈위안(渾源) 리위촌(李峪村)의 청동기 출토 지점, 양가오(陽高) 고성보(古城堡), 광우(廣武) 고묘군(古墓群), 우타이산(五臺山) 포광쓰(佛光寺) 등을 조사하였다.[59]

안북문물감찰단의 임무 종료 후, 문물국은 9월 21일 동북고고단을 랴오닝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동북고고단은 단장 페이원중을 비롯해 자란포, 옌원루, 퉁주천, 쑤바이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진시(錦西) 샤궈툰유적(沙鍋屯遺蹟), 이현(義縣) 펑궈쓰(奉國寺), 완포탕석굴(萬佛堂石窟), 칭허먼(淸河門) 쏸산커우

58 朱乃誠·王景霞, 2009, 앞의 글, 105~107쪽.

59 雁北文物勘察團, 1951, 『雁北文物勘察團報告』, 中央人民政府文化部文物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雙山口) 요묘(遼墓)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10월 5일부터는 페이원중, 자란포, 퉁주천이 현지 연구자인 리원신 등과 함께 지린시(吉林市) 시톈산(西團山)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북고고단의 작업은 11월 24일에 종료되었다.[60]

1950년 8월 설립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1951년 허난성조사발굴단(河南省調查發掘團), 샨시성조사발굴단(陝西省調查發掘團), 후난조사발굴단(湖南調查發掘團) 등을 조직하며 대규모 문물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허난성조사발굴단은 4월 15일 단장 샤나이를 비롯해 안즈민, 왕중수(王仲殊, 1925~2015), 마더즈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허난성의 안진화이(安金槐, 1921~2001), 장뤄스(蔣若是, 1921~1994), 자어(賈峨, 1925~) 등과 협력하여 4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청가오현(城皐縣) 광우진(廣武鎭) 부근을 조사하고,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멘츠현(澠池縣) 양사오촌(仰韶村) 부근 유적을 발굴하였다.[61]

샨시성조사발굴단은 단장 쑤빙치를 비롯해 스싱방, 왕보훙, 바이완위(白萬玉, 1900~?), 중샤오린(鍾少林, ?~?)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6월 30일까지 펑허(澧河) 양안을 조사하며 마왕촌(馬王村), 커싱좡(客省莊), 더우먼진(鬪門鎭), 뤄수이촌(洛水村) 등을 발굴하였다. 특히 커싱좡에서는 양사오문화보다 후대의 선사문화를 발견했는데, 이를 '커싱좡 2기문화(客省莊II期文化)'로 명명하였다.[62]

10월 18일, 고고연구소는 샤나이를 단장으로 하는 후난조사발굴단을 파견하였다. 샤나이를 비롯해 안즈민, 스싱방, 왕보훙, 왕중수, 천궁러우(陳公柔,

60 閻文儒, 1951a, 「遼西省義縣淸河門附近遼墓的發掘簡報」, 『文物參考資料』 1951-2; 閻文儒, 1951b, 「遼西義縣萬佛堂石窟調查及其硏究」, 『文物參考資料』 1951-9; 賈蘭坡, 1950, 「吉林西團山古墓之發掘」, 『科學通報』 1-8; 佟柱臣, 1964, 「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4-1.

61 夏鼐, 1951a, 「河南成皐廣武區考古紀略」, 『科學通報』 2-7; 夏鼐, 1951b, 「河南澠池的史前遺址」, 『科學通報』 2-9.

62 考古硏究所陝西省調查發掘團通訊組, 1951, 「1951年春季陝西考古調查工作簡報」, 『科學通報』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19~2004), 중샤오린, 난징박물원의 쑹보인(宋伯胤, 1921~2009)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이듬해 2월 7일까지 천자다산(陳家大山), 우자링(伍家嶺), 스즈링(識字嶺), 양자다산(楊家大山)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였다.[63]

이 밖에 대규모 문물 조사 발굴 사업으로 '황허수고고고공작대(黃河水庫考古工作隊)'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황허(黃河) 유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수몰 예정 구역의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1955년에 공작대를 결성하였다.[64] 공작대는 1960년까지 허난성 산먼샤(三門峽), 간쑤성 류자샤(劉家峽),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퉁샤(靑銅峽)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고고 조사와 발굴 작업을 수행하였다.[65]

---

63 夏鼐 主編, 1957, 北京: 『長沙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64 鄧子懷, 1991, 「關於根治黃河水害和開發黃河水利的綜合規劃的報告」, 黃河水利委員會勘測規劃設計研究院, 『黃河規劃志』,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485~502쪽; 「黃河水庫考古工作隊到三門峽調查古迹」, 『文物參考資料』 1955-11, 140쪽; 華平, 1955a, 「黃河水庫考古工作隊出發工作」, 『考古通訊』 1956-1, 10쪽; 華平, 1955b, 「黃河水庫考古工作隊各小組的動態」, 『考古通訊』 1956-1, 38쪽; 華平, 1955c, 「黃河水庫考古工作隊調查後的發現」, 『考古通訊』 1956-1, 76쪽; 華平, 1955d, 「黃河水庫考古工作隊初步野外調查工作結束」, 『考古通訊』 1956-1, 86쪽; 湯超, 2021, 「六十年前的黃河水庫考古工作隊」, 『江漢考古』 2021-6, 296쪽.

65 俞偉超, 1959, 『三門峽漕運遺迹』, 北京: 科學出版社; 安志敏·吳汝祚, 1957, 「陝西朝邑大荔沙苑地區的石器時代遺存」, 『考古學報』 1957-3; 黃河水庫考古工作隊, 1957, 「一九五六年河南陝縣劉家渠漢唐墓葬發掘簡報」, 『考古通訊』 1957-4; 黃河水庫考古工作隊, 「河南陝縣劉家渠漢墓」, 『考古學報』 1965-1; 安志敏, 1956, 「甘肅遠古文化及其有關的幾個問題」, 『考古通訊』 1956-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59a, 『廟底溝與三里橋』, 北京: 文物出版社;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59b, 『上村嶺虢國墓地』, 北京: 科學出版社;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4, 『陝縣東周秦漢墓』, 北京: 科學出版社;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 1973, 「山西芮城東莊村和西王村遺址的發掘」, 『考古學報』 1973-1; 黃河水庫考古工作隊甘肅分隊, 1959, 「甘肅永靖縣張家嘴遺址發掘簡報」, 『考古』 1959-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甘肅工作隊, 1974, 「甘肅永靖大何莊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74-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甘肅工作隊, 1975, 「甘肅永靖秦魏家齊家文化墓地」, 『考古學報』 1975-2; 黃河水庫考古工作隊甘肅分隊, 1962, 「甘肅臨夏姬家川遺址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샤나이는 공작대의 대장을 맡아 조사와 발굴을 총괄 지휘하였으며, 안즈민, 장충위(張蔥玉, 1915~1963), 궈바오쥔, 천멍자, 예샤오옌(葉小燕, 1933~2019) 등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수년에 걸친 조사와 발굴 작업을 이끌었다.[66]

이러한 전국적인 문물 조사 사업은 단순한 고고학 발굴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황허수고고공작대의 활동은 수몰 예정지의 고고 유물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중국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고려한 고고학적 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공농업 건설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며 중국 고고학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67]

2. 중국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지정

1956년 4월 2일, 국무원은 「농업생산 건설 중 문물 보호에 관한 통지(關於在農業生産建設中保護文物的通知)」를 발표하였다.[68] 이 통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전국적으로 농업 생산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물 파기, 수로 개설, 연못 조성, 댐 건설, 개간, 도로 건설, 토지 평탄화 등 다양한 농업 건설 사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지상과 지하에는 혁명 유적, 고대 문화 유적, 고분, 고건축, 비석, 고생물 화석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掘報告」, 『考古』 1962-2; 黃河水庫考古工作隊甘肅分隊, 1961, 「甘肅臨夏馬家灣遺址發掘簡報」, 『考古』 1961-11.

66 湯超, 2021, 앞의 글, 297~298쪽.

67 湯超, 2021, 위의 글, 296~304, 309쪽.

68 「關於在農業生産建設中保護文物的通知」(1956-4-2), 國家文物事業管理局編, 1987, 『新中國文物保護法規選編』, 北京: 文物出版社, 23~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가장 소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한 실물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건설 과정에서 이미 문물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는 '생산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문물 보호를 실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농업 생산 건설 과정에서 대중적인 문물 보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통지의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농업 생산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파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동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농촌 건설 계획과 문화재 보호: 생산 건설 과정에서 지장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며,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가치가 큰 문화재는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정 지역[69]에서 농업 생산 기본 건설을 진행할 경우 문화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가 방해되는 경우 긴급한 정리 및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재 보호 조사: 역사적 및 혁명적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보호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각 지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유적은 문화부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 지역의 농업생산 합작사가 보호 책임을 맡는다.

---

69 예컨대, 허난성 안양 인쉬, 신정(新鄭) 정한고성(鄭韓故城), 뤄양 한위고성(漢魏故城), 샨시성 시안시 펑하오유적(豐鎬遺址), 한성(漢城), 산둥성 린쯔현(臨淄縣) 제국고성(齊國故城), 취푸현(曲阜縣) 노국고성(魯國故城), 허베이성 한단(邯鄲) 조왕성(趙王城), 이현(易縣) 연하도(燕下都), 후베이성(湖北省) 장링(江陵) 초영도(楚郢都), 기남성(紀南城), 윈난성(雲南省) 다리현(大理縣) 남조고성(南詔故城),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닝청현(寧城縣) 요대명성(遼大名城),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카라호자(哈拉和卓) 고창고성(高昌故城), 야르호고성(雅爾湖故城) 및 혁명전쟁에서 중요한 기념가치가 있는 지점 등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넷째, 대규모 건설 공정과 문화재 보호: 대규모 수리 공사 및 산업 건설 시 문화재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고생물 화석의 보호: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는 고생물 화석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여섯째, 발견된 유물의 처리: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은 즉시 문화부에 신고해야 하며, 발견 당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자는 표창할 수 있고, 파괴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물참고자료』는 「문물 고적의 전수 조사 작업을 말하다(談文物古迹的普查工作)」를 통해, 조사의 필요성, 대상, 방법, 그리고 자료 정리 및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통지의 내용을 조사 작업에 맞게 재정리한 것이다.[70] 그러나 문물 보호 구역 지정 기준, 문물 소유권 문제, 조사 기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문물 고적의 전수 조사 작업을 말하다'에 관한 세 가지 성명(關於"談文物古迹的普查工作"一文的三點聲明)」을 통해, 조사된 모든 문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문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침을 수정하였고, 모든 보호 구역이 국가 소유로 일괄 전환되지 않고, 개인 소유 문물은 지역 상황과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침에서 제시한 엄격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우선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71]

1956년 4월, 산시(山西) 지방을 시작으로 추진된 전면적인 문물 조사는[72] 1960년까지 각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 9월 하순, 지린성에서 개최된 '문물 전수 조사 총결회(文物普查總結會)'[73]를 통해 제1차 문물

70 羅容, 1956a, 「談文物古迹的普查工作」, 『文物參考資料』 1956-5.

71 羅容, 1956b, 「關於"談文物古迹的普查工作"一文的三點聲明」, 『文物參考資料』 1956-6.

72 顧容, 1956, 「山西省進行文物普查試驗工作」, 『文物參考資料』 1956-5.

73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1960, 「吉林省文化局召開文物普查工作總結會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수 조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가 보존된 지역은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 산시성, 허베이성, 허난성, 장쑤성, 후난성, 샨시성, 간쑤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푸젠성, 저장성, 광둥성, 지린성, 장시성 등 총 17개 성(시/자치구)에 달하였다. 특히, 1956년 말 기준으로 5,572곳이었던 중국 전역의 성급 문물 보호 단위가 1959년 말에는 8,147곳으로 증가한 점은, 이번 조사의 성과가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물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74]

그러나 이번 조사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조사 작업이 급하게 추진된 데다 처음 시도된 조사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훈련반 등을 통해 조사 인력을 양성했지만, 전국 규모의 조사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였다.[75] 또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은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된 문물에 국한되었으며, 이동 가능한 문물에 대한 조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전국적인 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76]

그럼에도 이번 전수 조사는 중국 각지에 분포한 고대 유적, 무덤, 고건축 등의 분포와 보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이후 문물 보호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대중들 사이에서 문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무원은 1961년 「국무원의 문물 보호와 관리 업무

『文物』 1960-8·9, 74쪽.

74 史勇, 2023, 「第一次全國文物普查相關問題探析」, 『中國文物報』, 2023-12-26, 제5판.

75 劉建美, 2011, 「1956年第一次全國文物普查述評」, 『黨史研究與教學』 2011-5; 史勇, 2023, 위의 글.

76 이동 가능 문물이 조사된 곳은 샨시성, 지린성, 산둥성, 산시성, 광둥성, 허베이성, 후난성 등에 불과했다(史勇, 2023,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화에 관한 지시(國務院關於進一步加强文物保護和管理工作的指示)」[77]와 「문물 보호 관리 잠정 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180곳을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문물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78]

Ⅳ.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고고학의 굴절

1. 주요 고고학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중국 고고학이 학문적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인재 양성, 학과 개설, 교재 개발, 학술지 창간, 문물 조사 및 발굴,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의 지정 등 고고학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쉼 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는 문화부 문물국과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와 같은 고고학 정책의 중추 관리 기구가 있었으며, 이들은 중국 고고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6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전국 고고 업무 회의(全國考古工作會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회의는 고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물국과 고고연구소의 주도로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전국 21개 성시의 고고 업무 담당자와 주요 대학의 고고학 교수 등 180명이 참석한 중국 고고학계 최초의 업무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고

77 「國務院關於進一步加强文物保護和管理工作的指示」(1961-3-4), 國家文物事業管理局 編, 1987, 『新中國文物保護法規選編』, 北京: 文物出版社, 42~43쪽.

78 「國務院關於公布第一批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名單的通知」(1961-3-4), 國家文物事業管理局 編, 1987, 『新中國文物保護法規選編』, 北京: 文物出版社, 49~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학이 12년 내에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문화재 보호 방안 모색, 학술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79]

같은 해 3월 14일에는 국무원 산하에 '과학규획위원회(科學規劃委員會)'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80] 당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장이었던 정전둬는 고고학 분야 조장으로서 「고고학 연구 공작 12년 원경 규획 초안(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에서는 다섯 가지 중점 과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중국 신석기 시대 문화의 분기와 분포 연구, 둘째, 은·주·진·한 사회의 성격과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셋째, 소수민족 지역의 고고학적 업무, 넷째, 대유역 지구 수리 계획 종합 조사와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 다섯째, 중국 구석기 문화에 관한 연구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가 과학 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 정식으로 추진되지 않았다.[81]

그 원인은 정치적·행정적·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1957년에 시작된 '반우파투쟁(反右派鬪爭)'은 학문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국가 자원을 생산 목표에 집중시키면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원 배분이 크게 줄어든 것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학문적 연구보다 실적과 생산성 중심의 목표가 우선시되면서 고고학 연구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82] 그리고 위의 다섯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

79 郭沫若, 1956, 「交流經驗, 提高考古工作的水平 -在考古工作會議上的講話-」, 『考古通訊』 1956-2, 5~9쪽; 鄭振鐸, 1956, 「考古事業的成就和今後努力的方向-考古工作會議上的報告-」, 『考古通訊』 1956-2, 9~15쪽; 「第一次全國考古工作會議決議」, 『考古通訊』 1956-2, 16~17쪽; 華平, 1956, 「考古工作會議概況」, 『考古通訊』 1956-2, 100~105쪽.

80 儲著武, 2019, 「1956-1967年哲學社會科學規劃工作」, 『當代中國史研究』 2019-1; 儲著武, 2020, 「向現代科學進軍: 周恩來與1956-1967年科學規劃工作再認識」, 『當代中國史研究』 2020-1.

81 常懷穎, 2021, 「擘畫藍圖: 跋『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中國考古學發展規劃研究之一-」, 『南方文物』 2021-4, 29쪽.

82 常懷穎, 2022, 「深猷遠計: 『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的制定 -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으나, 당시 인력과 기술력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83]

그럼에도 일부 과제와 목표는 이후 고고학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56년 4월에 시작된 제1차 전국 문물 전수 조사 사업과 1955년부터 시행된 황허수고고고공작대(黃河水考古工作隊)의 활동은 이러한 고고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84] 특히 제1차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의 지정은 이 시기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후 1963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는 제4차 학부위원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철학사회과학부는 각 연구소에 1963년부터 1970년까지의 8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고고연구소는 샤나이의 주도로 「1963-1970년 고고학 연구 공작 규획(1963-1970年考古學研究工作規劃, 초안)」[85]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에서는 '중국 신석기 시대 문화의 분기와 분포'와 '하(夏) 문화의 탐색'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는 1956년의 규획보다 다소 현실적인 것으로, 기존의 시행착오 및 황허수고고고공작대와 전국 문물 전수 조사 등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86]

이처럼 1950~1960년대, 중국은 '전국 고고 업무 회의', 1956년의 '원경 규획'과 1963년의 '공작 규획'으로 학문적 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전국 문물 전수 조사 사업'과 '황허수고고고공작대' 등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상술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이 중 1957년 시작된 '반우파 투쟁'과 이후 대약진운동 등 좌경화된 정치적 환경은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되었다.

國考古學發展規劃研究之二-」, 『南方文物』 2022-3, 25~27쪽

83 常懷穎, 앞의 글, 38~39쪽; 常懷穎, 2023, 「以權達變: 『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的落實與執行 -中國考古學發展規劃研究之二三」, 『南方文物』 2023-3, 30~41쪽.

84 常懷穎, 2023, 위의 글, 32~37쪽.

85 常懷穎, 2022, 앞의 글, 26~27쪽; 王世民, 2024, 앞의 책, 202~20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좌경화와 고고학의 굴절

중앙 문화부 문물국과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고고학 진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항상 계획대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교재 개발 사례에서 전국적인 '대약진' 운동에 호응하며 고고학 교재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시베이대학의 경우 다른 정치적 '운동'에 투입되면서 교재 개발이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고고학 또한 당시 중국의 정치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가피하게 정치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굴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대학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창기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고고 전공 학생들의 구술을 담은 책인 『기억(記憶)』[87]에서는 특정 인물, 왕청탸오(王承祒, ?~1955)가 자주 언급된다. 왕청탸오는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1950학번으로, 1954년 졸업 후 장정랑 교수의 조교로 활동하며 중국 고대사를 전공했다. 그는 고고학 전공자는 아니었으나, 고고학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며 고고 전공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88]

그러나 1955년 본격화된 '후펑반혁명집단안(胡風反革命集團案)'[89]과 이에

---

86 샤나이는 1961년에 편찬한 『新中國的考古收穫』(文物出版社, 1961, 43쪽)에서 비록 '하'와 관련된 장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양 인쉬 발굴 이래로 상은(商殷)의 역사가 고고 발견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부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대의 역사 또한 고고 작업을 통해 같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문화의 탐색'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87 趙輝 主編, 2012, 앞의 책.

88 대표적인 성과가 1955년에 출판한 『中國古代社會史試論』(上海: 學習生活出版社)이다.

89 후펑은 당시 저명한 문학 평론가이자 이론가로, 본명은 장광런(張光人, 1902~1985), 후펑은 필명이다. 그는 문학의 자율성과 작가의 주관적 표현을 중시하는 문예 이론을 중시했다. 그러나 이는 문학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과 혁명적 사상에 봉사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문예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후펑은 문학이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른 '숙반운동(肅反運動)'에 휘말리며 그의 학문적 경력은 큰 좌절을 겪게 된다. 후펑은 당시 저명한 문학가였으나, 왕청탸오는 후펑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후펑 사건 이후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려는 대규모 정치적 운동이 확산되면서, 왕청탸오의 1947년 국민당 '삼민주의 청년단 분대장' 경력이 드러났다. 또한 '서주봉건설(西周封建說)'을 주장하며 당시 학계의 거두였던 궈모뤄(郭沫若, 1892~1978)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 정치적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90]

그 결과 왕청탸오는 학내 정치적 탄압과 심문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91] 그의 사건은 당시 정치적 탄압이 학문과 개인의 삶에 끼친 비극적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1957년 반우파운동에 휘말린 대표적인 고고학자 중 한 명으로 천멍자가 있다. 그는 고고학자이자 문학가로, 당시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 특히, 1940년대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의 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를 방문하며 중국 청동기 자료를 수집해 편찬한 『미국 소장 중국 청동기 집록과 중국 청동기 종술(*Chinese Bronzes in American Collections: A Catalogue and A Comprehensive Study of Chinese Bronzes*)』[92]은 그의 학문적 역량을

'30만언서(三十萬言書)'를 제시하며, 마오쩌둥의 문예 방침이 창작의 독창성과 개성을 억압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당 지도부에 의해 반혁명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계기로 1955년 1월 반혁명분자로 낙인찍혔다. 그 영향으로 2,1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78명이 공식적인 '후펑분자'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23명이 핵심인물로 규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한용(2007)의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사상개조운동 -'호풍사건'을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 7-2) 참조.

90 당시 궈모뤄는 전국시대에 봉건제에 접어들었다는 '전국봉건설(戰國封建說)'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왕청탸오가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韓巍, 2021, 「學術史上的失踪者-王承紹先生對古史研究的貢獻」, 北京大學歷史學系等 編, 『吳榮曾先生九十華誕頌德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697~713쪽.

91 왕스민의 회고에 의하면, 정치 운동 중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치적 의심을 받는 인물들 곁에 동료나 친구들이 상주하며 돌보게 했는데, 당시 리앙숭(李仰松)이 그 역할로 왕청탸오 옆에 있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고 한다(趙輝 主編, 2012, 앞의 책, 470~47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업이었다. 그는 연구 자료를 하버드 대학에 기탁한 후 귀국해, 칭화대학과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갔다.[93]

그러나 천멍자는 고전 가구와 예술품 수집 취미, 기독교 신학자인 장인 자오쯔천(趙紫宸, 1888~1979)과의 연루,[94] 그리고 자유롭고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학문적 활동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한자 간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였다. 천멍자는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의 '백화제방(百花齊放)'과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이른바 '쌍백방침(雙百方針)'에 따라,[95] 학문적 논의와 비판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신뢰하며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1957년 2월, 그는 『광명일보(光明日報)』에 「간단한 문자학 논의(略論文字學)」를 게재하면서 한자 간화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6] 이어 5월에는 『문회보(文匯報)』에 「신중하게 '한자개혁'을(愼重一點'改革'漢字)」을 발표하여, 간화 정책이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문적 기반 없는 개혁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97]

---

92 이 책은 영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미국 소장 중국 청동기' 부분을 정치적 핍박을 받던 1962년에 『美帝國主義劫掠的我國殷周銅器集錄』(北京: 科學出版社)이라는 명칭으로 출간한 바 있다. 훗날 2016년 金城出版社에서, 그리고 2019년 中華書局에서 '陳夢家著作集' 시리즈로 출간할 때, 원래 제목인 『美國所藏中國銅器集錄』으로 환원하였다.

93 潘思婷(Elinor Pearlstein) 著, 田天 等 譯, 「1940年代在美国调查中国青铜器的陈梦家」, 澎湃, 2020-4-19,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645676(검색일: 2025-1-10).

94 이 때문에 천멍자는 1951년에 시작된 '지식분자사상개조운동(智識分子思想改組運動)'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과거 서구 학문 경력과 개인주의적 사고를 부정하는 자아 비판을 강요받았다고 한다(湯志輝, 2015, 「'運動'中的陳夢家」, 『粵海風』 2015-3).

95 洪子誠, 2000, 「雙百方針」, 『南方文壇』 2000-1.

96 陳夢家, 1957a, 「略論文字學」, 『光明日報』 1957-2-4.

97 陳夢家, 1957b, 「愼重一點'改革'漢字」, 『文匯報』 1957-5-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같은 해 6월, 마오쩌둥이 「중공 중앙의 역량을 모아 우파 분자의 진공에 반격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지시(中共中央關於組織力量準備反擊右派分子進攻的指示)」[98]를 내렸는데, 결국 마오쩌둥의 쌍백방침은 우파 색출을 위한 함정이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천멍자는 우파로 낙인찍히며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학계에서도 그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료들의 비난이 잇따랐다.[99] 대표적인 비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뤄잉(駱英)·왕중수: 「천멍자, 넌 도대체 어디 편이냐(陳夢家, 你到底是那一家)」에서 천멍자의 반당적 태도와 사회주의 비판을 지적[100]
- 리쉐친(李學勤, 1933~2019): 「천멍자의 『은허복사종술』을 비평함(評陳夢家殷墟卜辭綜述)」에서 그의 연구와 정치적 입장의 모순을 비판[101]
- 탕란: 「우파분자 천멍자는 '학자'인가(右派分子陳夢家是'學者'嗎)?」에서 그를 기회주의적이며 속물적인 인물로, 학자의 탈을 쓴 기만자라 비난[102]
- 룽겅(容庚, 1894~1983): 「한자 간화는 번복될 수 없다(漢字簡化不容翻案)」에서, 천멍자 자신이 간화자를 사용하면서 간화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위선적이라 비판[103]
- 왕리(王力, 1900~1986): 「우파분자 천멍가의 문자 개혁 반대에 관한 황당한 언론을 비판한다(批判右派分子陳夢家關於反對文字改革的荒言論)」에서

98 中國共産黨第八屆中央委員會, 1957, 「中共中央關於組織力量準備反擊右派分子進攻的指示」, 1957-6-8.

99 당시 한자 간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변론을 모아 1958년에 新知識出版社에서 『1957年文字改革辯論選集』을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한자 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과 함께, 부록으로 천멍자의 한자 간화 반대 의견을 게재하였다.

100 駱英·王仲殊, 1957, 「"陳夢家, 圖博口 你到底是哪一家?"」, 『光明日報』 1957-8-12.

101 李學勤, 1957, 「評陳夢家殷墟卜辭綜述」, 『考古學報』 1957-3.

102 唐蘭, 1957, 「右派分子陳夢家是"學者"嗎?」, 『中國語文』 1957년 10월호.

103 容庚, 1957, 「漢字簡化不容翻案」, 『文字改革』 1957-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가 지식인과 당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으며, 문화 정책에 대해 반동적인 음모를 꾸민다고 주장[104]

천멍자의 직설적인 성격과 미국에서의 경력, 기독교적 배경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의 상사이자 동료였던 샤나이조차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천멍자는 결국 연구 중이던 『서주동기단대(西周銅器斷代)』를 중단하고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반우파운동이 잦아든 1960년대에 들어 샤나이는 천멍자를 다시 불러 연구를 재개하도록 했고, 그는 간독(簡牘)을 연구하면서 『한간철술(漢簡綴述)』을 저술하기도 했다.[105]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탄압과 심신의 피폐를 겪었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문화대혁명 시기 천멍자를 비롯해 샤나이, 뉴자오쉰(牛兆勳, ?~?), 린저민(林澤敏) 등은 '삼반분자(三反分子)'로, 쉬쉬성, 궈바오쥔, 황원비, 쑤빙치, 안즈민 등은 '반동권위(反動權威)'로 몰렸다. 왕보홍, 왕스민(王世民, 1935~)은 '보황파(保皇派)'로, 천멍자, 추스화(仇士華, 1932~), 차이롄전(蔡蓮珍, 1929~) 등은 우파 분자로 낙인찍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정치적 비판에 시달렸다.[106] 이러한 탄압 과정에서 황원비와 옌인(顔誾, 1908~1970)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황원비는 베이징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on, 1874~1960), 스벤 헤딘(Sven Hedin, 1865~1952)과 함께 서북과학고찰단(西北科學考察團)에서 활동하며 중국 서북 지역, 특히 신장(新疆) 지역의 고고조사에 헌신하였다.[107] 그는 "중국 신장 고고의 선구자"로 평가받았으나, 문화대혁명

104 王力, 1957, 「批判右派分子陳夢家關於反對文字改革的荒謬言論」, 『文匯報』 1957-10-30.

105 陳夢家, 1980, 『漢簡綴述』, 北京: 中華書局.

106 湯志輝, 2015, 앞의 글, 79~80쪽.

107 이진옥, 2024, 「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과 중국 근대고고학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83, 25~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기 이러한 경력이 서구 학자와의 협력 및 유물 외국 반출 의혹으로 비판받았다. 그는 '반동권위', '외국과 내통'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쓰고 비판받는 과정에서 1966년 사망하였다.[108]

옌인은 체질인류학과 해부학 연구를 선도한 학자로,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 및 고인류연구소와 고고연구소에서 신석기 시대 인류의 체질 연구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서구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판받으며, 1970년 문화대혁명 중 정치적 탄압과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러한 '숙반운동', '반우파투쟁'과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의 좌경화 경향은 중국 고고학 발전에 심각한 제동을 걸었다. '혁명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이 정치의 중심축이 되면서 학문은 혁명 완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고고학이 "봉건적 잔재"로 간주되며 학문적 연구가 억압되고, 학자 개인은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1949년 정권 수립 후에도 혁명 이데올로기를 통치 기조로 유지했던 중국은,[109]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개정판에서 계급투쟁을 더욱 강조하며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였다.[110] 또한 이른바 '항미원조 운동'과 스탈린 사후 중소관계 악화는 중국 내부에서 반미·반서구 정서를 고조시켰다.[111]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거나 서구 학문과 연루된 학자들을 우파, 반동분자로 몰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왕청탸오, 천멍자, 황원비, 옌인 등의 사례는 극단적인 좌경화가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고, 학자들의 삶과 연구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다. 고고학계를 포

108 張偉, 2007, 「黃文弼: 歷史的嘲弄」, 中國青年報, 2007-7-18, https://zqb.cyol.com/content/2007-07/18/content_1829906.htm(검색일: 2025-1-10).

109 王學典, 2005, 「意識形態與歷史: 近50年來農戰史研究之檢討」, 『史學月刊』 2005-7, 12쪽.

110 이유표, 2023, 「중국 '개혁개방' 이전, 고대 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양보정책론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65, 135~139쪽.

111 이경희·김호길, 1988, 「중공문화대혁명의 발단배경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6, 547~5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함한 중국 학문 전반은 정치적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압력으로 인해 많은 인적·학문적 손실을 겪었다. 이러한 비극은 학문과 정치의 관계를 성찰하며, 정치적 도구로서 학문이 남용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V. 맺음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고고학의 재건 과정은 학문적 기틀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중앙 정부 주도로 문화부 문물국과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등 고고학 연구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반 조직과 고고전공 및 고고교연실의 창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고고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술지 창간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전국적인 문물 조사와 발굴을 통해 중국 최초의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를 지정하여 문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숙반운동, 반우파투쟁과 대약진, 그리고 문화대혁명 등 극단적인 좌경화는 중국 고고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천멍자, 황원비, 옌인 등 저명한 학자들이 정치적 탄압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많은 고고 발굴이 중단되었으며, 학술지는 정간되는 등 학문적 활동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침체 속에서도 1968년 허베이성(河北省) 만청현(滿城縣)에서 터널 공사 중 발견된 만청한묘(滿城漢墓)[112]는 중공 중앙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는 중국과학원 원장 궈모뤄를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1971년 7월, 저우언라이는 베이징 고궁박물원에서 '문화대혁명' 기간 출토문물전람회를 비준하였다.[113] 같은 해 7월 22일

11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 1980, 『滿城漢墓發掘報告』 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113 國家文物局 編, 2002, 앞의 책, 247~2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24일에는 『고고학보』, 『문물』, 『고고』의 복간이 결정되었으며,[114] 중국 출토 문물의 해외 전람도 추진되었다.[115] 이로 인해 하방되었던 인력이 복귀하면서 고고 업무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고고 전공이 여러 대학에서 재건되며 고고학은 점차 활기를 띠었다. 1972년 지린대학, 난징대학, 산둥대학을 시작으로 1973년 중산대학, 샤먼대학, 쓰촨대학에 고고 전공이 설치되었으며, 1974년 시베이대학에서 고고 전공이 재건되었다.[116] 이와 더불어 만청한묘, 마왕두이한묘(馬王堆漢墓, 1972),[117] 인췌산한묘(銀雀山漢墓, 1972),[118] 진시황릉 병마용(1974),[119] 인쉬 부호묘(婦好墓, 1976)[120] 등 중요한 유적들이 발굴되며, 고고학은 급속도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회복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1979년 1월 25일 발간된 『고고』 제1호에는 「황원비·천멍자·옌인 선생 추도회 베이징에서 거행(黃文弼·陳夢家·顔闇先生追悼會在京擧行)」이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주최한 이 추도회는 세 학자의 죽음을 "린뱌오(林彪, 1907~1971)와 '사인방(四人幇)' 반혁명 수정주의 노선의 핍박"[121] 때문이라고 기록했으나, 이는 진실을 왜곡한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왜곡에 공개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

114 國家文物局 編, 2002, 위의 책, 248쪽; 王世民, 2024, 앞의 책, 222~223쪽.

115 설재희, 2020,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화재(文物) 보호: 1970년대 전시, 담론, 대중 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6 〈표 3〉 참조.

117 湖南省博物館 等編, 1973 『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118 山東省博物館 等, 1975, 「臨沂銀雀山四座西漢墓葬」, 『考古』 1975-6.

119 陝西省考古研究所 等編, 1988, 『秦始皇陵兵馬俑坑一號坑發掘報告(1974-1984), 北京: 文物出版社.

12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80, 『殷墟婦好墓』, 北京: 文物出版社.

121 「黃文弼·陳夢家·顔闇先生追悼會在京擧行」, 『考古』 1979-1, 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록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이후 중국 고고학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賈蘭坡 · 黃慰文, 1984,『周口店發掘記』,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國家文物局 編, 2002,『中華人民共和國文物博物館事業紀事(1949-1999)』 上, 北京: 文物出版社

南京博物院 編, 1991,『四川彭山漢代崖墓』, 北京: 文物出版社.

謝辰生 口述, 姚遠 撰寫, 2018,『謝辰生口述: 新中國文物事業重大決策紀事』, 北京: 三聯書店.

石璋如, 1952,『'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考古年表』, 臺北: 歷史語言研究所.

陝西省考古研究所 等編, 1988,『秦始皇陵兵馬俑坑一號坑發掘報告(1974-1984), 北京: 文物出版社.

雁北文物勘察團, 1951,『雁北文物勘察團報告』, 北京: 中央人民政府文化部文物局.

倪海曙 等, 1958,『1957年文字改革辯論選集』, 上海: 新知識出版社.

王世民, 2024,『中國考古學編年史』, 北京: 中華書局.

王承紹, 1955,『中國古代社會史試論』, 上海: 學習生活出版社.

俞偉超, 1959,『三門峽漕運遺迹』, 北京: 科學出版社.

人民出版社編輯部 編, 1959,『歷史教學中兩條道路的鬪爭』(續輯), 北京: 人民出版社.

趙輝 主編, 2012,『記憶: 北大考古口述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58,『考古學基礎』, 北京: 科學出版社.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59a,『廟底溝與三里橋』, 北京: 文物出版社.

_____, 1959b,『上村嶺虢國墓地』, 北京: 科學出版社.

_____, 1994,『陝縣東周秦漢墓』, 北京: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 1980,『滿城漢墓發掘報告』 上 · 下, 北京: 文物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80,『殷墟婦好墓』, 北京: 文物出版社.

陳夢家, 1980,『漢簡綴述』, 北京: 中華書局.

馮漢驥, 1964,『前蜀王建墓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夏鼐, 1961,『新中國的考古收穫』, 北京: 文物出版社.
夏鼐 主編, 1957,『長沙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湖南省博物館 等編, 1973『長沙馬王堆一號漢墓』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黃建秋, 2023,『百年中國考古』,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黃尙明 編著, 2019,『中國考古學之父: 李濟傳』, 武漢: 華中科技大學出版社.

논문

김정열, 2024,「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동북아역사논총』83.
설재희, 2020,「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화재(文物) 보호: 1970년대 전시, 담론, 대중 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한용, 2007,「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사상개조운동—'호풍사건'을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7-2.
이경희 김호길, 1988,「중공문화대혁명의 발단배경에 관한 연구」,『외대논총』6.
이유표, 2023,「중국 '개혁개방' 이전, 고대 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 양보정책론을 중심으로 -」,『역사교육』165.
_____, 2024,「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고고학 인식과 활동」,『동북아역사논총』83.
이진옥, 2024,「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과 중국 근대고고학의 성립」,『동북아역사논총』83.
홍영미, 2024,「난징국민정부의 고대사 인식과 고고 연구기관」,『중국근현대사연구』102.

「考古工作人員訓練班成立」,『文物參考資料』1952-1.
「關於在農業生産建設中保護文物的通知」(1956-4-2), 國家文物事業管理局 編, 1987,『新中國文物保護法規選編』, 文物出版社,
「國務院關於公布第一批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名單的通知」(1961-3-4), 國家文物事業管理局 編, 1987,『新中國文物保護法規選編』, 文物出版社.
「國務院關於進一步加强文物保護和管理工作的指示」(1961-3-4), 國家文物事業管理局 編, 1987,『新中國文物保護法規選編』, 文物出版社.
「發刊詞」,『考古通訊』195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蘇聯考古學權威吉謝列夫博士來我國講學」,『文物參考資料』, 1950-7.
「蘇聯國立革命博物館」,『文物參考資料』, 1950-10.
「蘇聯人民藝術博物館概況」,『文物參考資料』, 1950-7.
「蘇聯的圖書館」,『文物參考資料』, 1950-7.
「我們向蘇聯歷史考古學學習什麽?-吉謝列夫博士在華講學略記」,『文物參考資料』, 1950-7.
「第一次全國考古工作會議決議」,『考古通訊』1956-2.
「第二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開學」,『文物參考資料』1953-8.
「第二屆考古人員訓練班結業」,『文物參考資料』1953-11.
「第三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正式開學」,『文物參考資料』1954-8.
「第三屆考古訓練班學員畢業」,『文物參考資料』1954-11.
「第四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開學」,『文物參考資料』1955-8.
「第四屆考古工作人員訓練班結業」,『文物參考資料』1955-11.
「黃文弼·陳夢家·顔閻先生追悼會在京擧行」,『考古』1979-1
「黃河水庫考古工作隊到三門峽調查古迹」,『文物參考資料』1955-11.

賈洲傑, 1984,「鄭州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北京: 文物出版社.
賈蘭坡, 1950,「吉林西團山古墓之發掘」,『科學通報』1-8.
考古研究所陝西省調查發掘團通訊組, 1951,「1951年春季陝西考古調查工作簡報」,『科學通報』2-9.
高軍峰, 2011,「1949-1978年新中國工農業發展方針的歷史演變」,『毛澤東思想研究』2011-2.
顧容, 1956,「山西省進行文物普查試驗工作」,『文物參考資料』1956-5.
高源, 2020,「中國古脊椎動物學與自然史博物館事業的開拓者-楊鍾健院士」,『自然科學博物館研究』2020-5.
郭沫若, 1956,「交流經驗, 提高考古工作的水平 -在考古工作會議上的講話-」,『考古通訊』1956-2.
郭寶鈞·林壽晉, 1955,「1952年秋洛陽東郊發掘報告」,『考古學報』9.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1960,「吉林省文化局召開文物普查工作總結會議」,『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物』1960-8·9.
金毓黻, 1956,「關於'渤海貞惠公主墓碑研究'的補充」,『考古學報』1956-2.
羅容, 1956a,「談文物古迹的普查工作」,『文物參考資料』1956-5.
____, 1956b,「關於"談文物古迹的普查工作"一文的三點聲明」,『文物參考資料』1956-6.
駱英·王仲殊, 1957,「"陳夢家, 圖博口 你到底是哪一家?"」,『光明日報』1957-8-12.
唐蘭, 1957,「右派分子陳夢家是"學者"嗎?」,『中國語文』1957년 10월호.
戴彤心, 1984,「西北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北京: 文物出版社.
鄧子懷, 1991,「關於根治黃河水害和開發黃河水利的綜合規劃的報告」, 黃河水利委員會勘測規劃設計研究院 ,『黃河規劃志』,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史勇, 2023,「第一次全國文物普查相關問題探析」,『中國文物報』, 2023-12-26.
山東省博物館 等, 1975,「臨沂銀雀山四座西漢墓葬」,『考古』1975-6.
常懷穎, 2021,「擘畫藍圖: 跋『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中國考古學發展規劃研究之一-」,『南方文物』2021-4.
_____, 2022,「深猷遠計:『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的制定 -中國考古學發展規劃研究之二-」,『南方文物』2022-3.
_____, 2023,「以權達變:『考古學研究工作十二年遠景規劃草案』的落實與執行 -中國考古學發展規劃研究之二三」,『南方文物』2023-3.
石興邦, 2005,「考古工作人員訓練班片斷」,『中國文化遺産』2005-3.
孫秀麗, 2005,「考古的'黃埔四期': 記1950年代考古工作人員訓練班」,『中國文化遺産』2005-3.
安志敏, 1954,「1952年秋季鄭州二里崗發掘記」,『考古學報』8.
_____, 1956,「甘肅遠古文化及其有關的幾個問題」,『考古通訊』1956-6.
_____·吳汝祚, 1957,「陝西朝邑大荔沙苑地區的石器時代遺存」,『考古學報』1957-3
閻萬章, 1956,「渤海貞惠公主墓碑'的研究」,『考古學報』1956-2.
閻文儒, 1951a,「遼西省義縣清河門附近遼墓的發掘簡報」,『文物參考資料』1951-2.
_____, 1951b,「遼西義縣萬佛堂石窟調查及其研究」,『文物參考資料』195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葉文程, 1984,「廈門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王力, 1957,「批判右派分子陳夢家關於反對文字改革的荒謬言論」,『文匯報』1957-10-30.
王世民, 1990,「鄭振鐸先生與文物考古工作」,『文博』1990-1.
_____, 2024,「導言:中國考古學的發展歷程概述」,『中國考古學編年史』, 中華書局.
王仲殊, 1954,「洛陽燒溝附近的戰國墓葬」,『考古學報』8.
_____, 2011,「夏鼐先生傳略」,『夏鼐日記』1,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王學典, 2005,「意識形態與歷史: 近50年來農戰史研究之檢討」,『史學月刊』2005-7.
容庚, 1957,「漢字簡化不容驟案」,『文字改革』1957-11.
魏存成, 1984,「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劉建美, 2011,「1956年第一次全國文物普查述評」,『黨史研究與教學』2011-5.
劉敦願, 1984,「山東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劉昭豪, 1958,「破除迷信,大膽動手編寫'中國考古學'大綱和教材」,『考古通訊』1958-10.
兪偉超, 1956,「西安白鹿原墓葬發掘報告」,『考古學報』1956-3.
李壯偉, 1984,「山西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李學勤, 1957,「評陳夢家殷墟卜辭綜述」,『考古學報』1957-3.
林向, 1984,「四川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蔣贊初, 1984,「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儲著武, 2019,「1956-1967年哲學社會科學規劃工作」,『當代中國史研究』2019-1.
_____, 2020,「向現代科學進軍: 周恩來與1956-1967年科學規劃工作再認識」,『當代中國史研究』202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鄭振鐸, 1956,「考古事業的成就和今後努力的方向 -考古工作會議上的報告-」,『考古通訊』1956-2.
鍾成, 1984,「中山大學人類學系考古專業」, 中國考古學會 編,『中國考古學年鑒(1984)』, 文物出版社.
朱乃誠·王景霞, 2009,「中國考古文物類期刊的發展與中國考古學的發展」,『南方文物』2009-2.
中國共産黨第八屆中央委員會, 1957,「中共中央關於組織力量準備反擊右派分子進攻的指示」, 1957-6-8.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甘肅工作隊, 1975,「甘肅永靖秦魏家齊家文化墓地」,『考古學報』1975-2.
_____, 1974,「甘肅永靖大何莊遺址發掘報告」,『考古學報』1974-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 1973,「山西芮城東莊村和西王村遺址的發掘」,『考古學報』1973-1.
陳夢家, 1957a,「略論文字學」,『光明日報』1957-2-4.
_____, 1957b,「愼重一點'改革'漢字」,『文匯報』1957-5-17.
湯志輝, 2015,「'運動'中的陳夢家」,『粵海風』2015-3.
湯超, 2021,「六十年前的黃河水庫考古工作隊」,『江漢考古』2021-6.
佟柱臣, 1964,「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考古學報』1964-1.
夏鼐, 1949,「甘肅考古漫記」,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編輯, 2000,『夏鼐文集』中, 社會科學文獻出版社
____, 1951a,「河南成皐廣武區考古紀略」,『科學通報』2-7.
____, 1951b,「河南澠池的史前遺址」,『科學通報』2-9.
____, 1961,『新中國的考古收穫』, 北京, 文物出版社.
韓巍, 2021,「學術史上的失踪者—王承紹先生對古史研究的貢獻」, 北京大學歷史學系等 編,『吳榮曾先生九十華誕頌德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胡逢祥, 2013,「史語所遷臺與1950-1960年代臺灣的人文學術建設」,『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3-2
洪子誠, 2000,「雙百方針」,『南方文壇』2000-1.
華平, 1955a,「黃河水庫考古工作隊出發工作」,『考古通訊』195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 1955b,「黃河水庫考古工作隊各小組的動態」,『考古通訊』1956-1.
____, 1955c,「黃河水庫考古工作隊調查後的發現」,『考古通訊』1956-1.
____, 1955d,「黃河水庫考古工作隊初步野外調查工作結束」,『考古通訊』1956-1.
____, 1956,「考古工作會議概況」,『考古通訊』1956-2.
黃河水庫考古工作隊, 1957,「一九五六年河南陝縣劉家渠漢唐墓葬發掘簡報」,『考古通訊』1957-4
_____, 1965,「河南陝縣劉家渠漢墓」,『考古學報』1965-1.
黃河水庫考古工作隊甘肅分隊, 1959,「甘肅永靖縣張家嘴遺址發掘簡報」,『考古』1959-4.
_____, 1961,「甘肅臨夏馬家灣遺址發掘簡報」,『考古』1961-11.
_____, 1962,「甘肅臨夏姬家川遺址發掘報告」,『考古』1962-2.

기타 자료

古脊椎動物與古人類研究所, '歷史沿革' https://ivpp.cas.cn/jggk/lsyg/(검색일: 2024.10.20.).
潘思婷(Elinor Pearlstein) 著, 田天 等譯,「1940年代在美国调查中国青铜器的陈梦家」, 澎湃, 2020-4-19,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645676(검색일: 2025.1.10.).
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歷史沿革', https://archaeology.pku.edu.cn/xygk1/lsyg.htm(검색일: 2024.10.31.).
西北大學文化遺產學院, '學院簡介', https://culture.nwu.edu.cn/xygk/xyjj1/lsyg.htm(검색일: 2024.8.16.).
王汎森, 2009,「王汎森談史語所八十年」, 余紀忠文教基金會, https://www.yucc.org.tw/info/3167(검색일: 2024.8.20.).
張偉, 2007,「黃文弼: 歷史的嘲弄」, 中國青年報, 2007-7-18, https://zqb.cyol.com/content/2007-07/18/content_1829906.htm(검색일: 2025.1.10.).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簡史', https://www1.ihp.sinica.edu.tw/AboutIHP/History(검색일: 2024.10.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고고학의 재건과 굴절(1949~1978)

이유표

이 글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 고고학의 재건 과정과 정치적 굴절을 고찰한다. 중국 대륙의 고고학 연구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194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이를 재건하고자 문물국과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문물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고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술지를 창간하는 등 연구 기반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숙반운동(肅反運動), 반우파투쟁(反右派鬪爭),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등의 정치적 사건은 학문적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였으며, 연구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천멍자(陳夢家), 황원비(黃文弼) 등의 많은 고고학자가 숙청되었다. 국가 차원의 연구 기구가 설립되고 문물 보호 체계가 구축되었음에도 당시의 고고학 연구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 시기의 중국 고고학은 국가 주도의 연구 체계 속에서 발전했지만, 정치적 굴절로 인해 학문적 독립성을 상실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1978년 개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방 이후, 고고학은 학문적 독립성을 확보했을까? 이러한 의문을 던지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주제어: 중국 고고학, 문물 보호, 정치적 굴절, 문화대혁명, 반우파투쟁, 숙반운동, 개혁개방

ABSTRACT

Rebuilding and Political Distortions of Early Archae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ee Youpyo

This study examines the reconstruction process and political distortions of Chinese archaeology from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o the pre-reform era of 1978. Archaeological research in mainland China was interrupted due to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the Chinese Civil War. After 1949, the Chinese government sought to rebuild this field by establishing the Cultural Relics Bureau and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und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s well as launching nationwide archaeological surveys. Additionally, educational programs were introduced to train archaeologists, and academic journals were founded to establish a research foundation.

However, political movements such as the Suppression of Counterrevolutionaries(肅反運動) in the mid-1950s, the Anti-Rightist Campaign(反右派鬪爭), and the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verely suppressed academic freedom. Many scholars, including Chen Mengjia(陳夢家) and Huang Wenbi(黃文弼), were persecuted, and archaeological research was frequently disrupte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archaeology at the time was subjugated to socialist ideology and functioned as a political tool, rather than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Chinese archaeology developed under a state-led research framework, yet it lost its academic independence due to political distortions. This raises the question: Was archaeology able to regain its scholarly autonomy after the 1978 reform and opening-up? This study concludes by posing this fundamental inquiry.

Keywords: Chinese archaeolog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tical distortion, Cultural Revolution, Anti-Rightist Campaign, Suppression of Counterrevolutionaries, reform and opening-up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12

고고학과 마르크스주의 중국사 건설

– 소련 고고학의 수용과 중국 고고학의 지향 1949~1962

김정열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소련 고고학의 도입과 마르크스주의적 유적, 유물 해석
III. 핵심 과제와 중국 고고학의 전변(轉變)
IV. 『신중국의 고고 수확』, 그 이후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중국에서 고고학은 본래 서구로부터 수입된 학문이었지만,[1]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특히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련 고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궈모로(郭沫若, 1892~1978)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중국 이전부터 중국사 이해에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중국 성립 이후가 되면 그것은 고고학을 포함한 중국 역사학의 '공식적'인 지도이념이 되었다. 그에 따라 샤나이(夏鼐)가 일찍이 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고고학의 표지가 되었으며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1949년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고고학의 발전 방향과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했다.

신중국 수립 초기 중국의 고고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화의 기치 아래에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었고, 그것은 대약진운동 시기(1958~1962)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유적의 조사와 발굴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황허강 중하류, 양쯔강 중하류 등지의 고고학문화 서열이 점차 수립되어갔으며, 중국 역대 왕조의 도성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시안(西安) 반포(半坡) 유적, 싼먼샤(三門峽) 먀오디거우(廟底溝) 유적, 정저우(鄭州) 얼리강(二里岡) 유적, 뤄양(洛陽) 사오거우한묘(燒溝漢墓) 등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25)로 수행된 연구임.

1 중국의 고고학 수용 과정과 이때 형성된 중국적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 -중국 증사주의적 고고학의 성립-」, 『崇實史學』 45, 367~387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고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여러 유적도 이때 발굴되었다.[2] 활발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다양한 고고학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중국 고고학은 중국 고대사 시기구분논쟁과 학과(學科)의 구축 및 발굴, 연구 등의 실천을 거치면서 점차 그 학술체계와 연구모델을 구체적으로 형성해 갔다. 그 특징은 주로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과거 인류사회를 복원하고 그 발전맥락을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기치하에 인류사회의 발전법칙과 그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 시기 중국 고고학의 학술체계 구축과 연구모델 설정은 신중국의 건국이념과 국제적 환경의 영향, 그리고 학문적 수준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소련 고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신중국 성립 이후 초기 단계 중국 고고학의 성격과 특징은 소련 고고학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학술사적 논의는 중국 본토에서조차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3] 그것은 1950년대 중반을 거쳐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점차 노골화된 중소 우호관계의 파탄과 그 이후에 이어진 불안정한 양국관계 등 정치환경의 변화,[4] 그에 따른 소련 고고학의 영향력 감소, 중국문화의 독자적 성립·발전과 그 특성을 강조하는 문화사고고학의 풍미, 그리고 고고학사 연구에 대한 중국학계의 상대적인 무관심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중국 고고학의 발전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

2 王巍 主編, 2021,『中國考古學百年史』1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 Liangren Zhang, 2011, “Soviet inspiration in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85; 劉斌·張婷, 2016,「中國考古學發展中的蘇聯影響」,『東南文化』2016(5).

4 신중국 성립 초기 중소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요셉, 2021,「1960년대 초 중국 외교 좌경화의 원인 -마오쩌둥의 권력 장악력을 중심으로-」,『中國近現代史研究』92, 159~189쪽; 2022,「'강요된 밀월'에서 '자발적 밀월'로 -1949-1957 중소관계의 속성 변화-」,『中國近現代史研究』96, 199~23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고 그것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하에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고고학의 초기 발전 단계에 나타나는 소련 고고학의 영향과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중국 고고학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신중국 성립 이후 한동안 중국 역사학이 최종 목적으로 상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중국사회발전사 구축과 그에 관한 고고학의 기여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중국학계의 유적·유물의 이해와 해석, 인류사회 발전모델의 중국적 적용 등을 검토하고 그 한계 또한 지적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시간의 폭은 신중국이 성립된 1949년부터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영향 아래 중국적 물질문화사의 기틀이 최초로 제시된 『신중국의 고고 수확(新中國的考古收穫)』이 출판된 1961년까지임을 밝혀둔다.

Ⅱ. 소련 고고학의 도입과 마르크스주의적 유적, 유물 해석

1. 소련 고고학의 수용과 학과 체계의 구축

1950년대 초 신중국의 정치 지도자들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확립하고 그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산당 내외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선전 및 학습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이때에는 학계에서 주로 『실천론』, 『모순론』 등에 대한 집단학습이 진행되었다. 당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의 부소장직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고고학 관련 조사와 연구를 주도한 샤나이 역시 『모순론』을 학습하면서 지식인 사상 개조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5]

---

5 王興, 2024, 「夏鼐的馬克思主意考古學之路」, 中國社會科學網, https://www.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르크스주의 수용과 그에 따른 지식인의 사상 개조는 물론이고, 현대적인 신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중국 정부는 소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직전 중국을 방문한 소련 정치국원 미코얀(A. Mikoyan)에게 소련의 경제발전 방식을 중국의 경제재건의 기본 모델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무기, 군수산업, 철도건설에 대한 지원, 경제 전문가 파견, 차관 등을 요청했다.[6]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인 1953년 2월에도 마오쩌둥(毛澤東)은 "소련의 선진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고 언명하면서 과학과 교육 분야를 현대화하는 데 소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기대했다.[7] 고고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고고학은 소련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8] 이것은 195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전국고고학회의 석상에서 행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 정전둬(鄭振鐸, 1898~1958)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 고고학의 세 가지 과제를 열거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소련 고고학의 경험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 (우리의) 학술연구를 강화하여 12년 이내에 세계의 고고학 수준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생 역량을 대량으로 배양해야 한다. 우리의 고고학 종사가가 학술연구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고고학 종사자가 '전문가'의 칭호와는 거리가 멀다. 반드시 더욱 열심히 학습해야 하며, 소련 및 형제 국가의 선진적인 경험을 학습하고 세계의 최신 과학을 학습해야 한다. 원자학의 발전에 따라 고고학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시대도 왔다. 우리는 반드시 12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 대량으로 신생 역량을 배양하는 것

---

cssn.cn/skqns/skqns_qnzs/202406/t20240626_5761244.shtml.

6 이요셉, 2022, 앞의 글, 208쪽.

7 S. Pepper, 1987, "Education for the new order", R. MacFarquhar & J.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4, part 1, Cambridge Univ. Press, pp. 197~203.

8 劉斌·張婷, 2016, 앞의 글, 2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노력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또 잘 해내야 한다.[9]

사실 중소 양국 고고학계의 인적 교류는 신중국의 성립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1950년(그리고 1959년에 한 차례 더) 당시 소련과학원 물질문화사연구소 부소장이자 모스크바대학 교수로서 소련 고고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키셀레프(S. V. Kiselev, 1905~1962)가 방중했다.[10] 신중국이 건국된 지 겨우 다섯 달이 지난 후 중소우호협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 그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시안(西安), 정저우(鄭州), 안양(安陽) 등지에서 무려 23차례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베이징에서는 "소련의 역사과학과 교육", "소련의 고고학 연구"를 제목으로 하여 두 차례 강연이 개최되었는데,[11] 그 내용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어떻게 소련의 고고학에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소련의 고고학이 그동안 무엇을 성취하였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12]

이 강연은 중국의 고고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키셀레프의 활동은 소련의 고고학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의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신중국에서 고고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고고학 조사 및 연구 체계 건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소련의 고고학 연구" 강연에서 소련 역사학계가 레닌과 스탈린의 사회발전론에 의거하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획득한 고대 사적과 폐허를 고찰하고 각 민족의 고대 생활유적을 조사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제도의 변화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연구한다는 점을 중점적

9 鄭振鐸, 「考古事業的成就和今後努力的方向-考古工作會議上的報告」, 『文物參考資料』 1956(3), 6쪽.

10 키셀레프의 중국 방문 활동 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洪認淸, 2018, 「吉謝列夫與蘇聯考古學在中國的傳播」, 『史學理論與史學史學刊』 2018(2), 239~255쪽 참조.

11 黃建秋, 2023, 『百年中國考古』, 江蘇人民出版社, 184쪽.

12 張鐵弦, 1950, 「我們向蘇聯歷史考古家學習什麼?」, 『文物參考資料』 1950(Z1), 72~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설명했다.[13] 샤나이는 키셀레프의 활동에 대해 "중국의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소련의 선진적인 고고학을 이해하고, 중국 고고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1950년 신중국의 고고연구소가 창립되었을 때 고고학 사업의 목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련은 그들의 국가 물질문화사연구소의 부소장 키셀레프를 파견하여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사업 시행을 도와주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14]

중국에서도 인다(尹達, 1906~1983)와 페이원중(裴文中, 1904~1982)이 1954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소련과학원 역사학 분과 연회(年會)에 참석했다. 그 뒤를 이어 샤나이, 퉁주천(佟柱臣, 1920~2011), 정전둬 등도 연이어 소련에 가서 물질문화사연구소, 모스크바대학 등지를 참관했다.[15] 1956년에는 중국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웡두젠(翁獨健, 1906~1986) 등이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몽골, 중국, 소련 등 삼국의 역사학자 회의에 참석하여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발굴 중이던 카라코룸 유적 발굴을 참관했다.[16] 이어 1958년에는 그해 막 체결된 중소과학협력협약의 일환으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왕보홍(王伯洪, 1923~1974)과 왕중수(王仲殊, 1925~2015)가 7월부터 10월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소련 고고학을 '실습'했다.[17] 그들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그) 등지를 방문하여 물질문화사연구소와 민족학연구소를 탐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의 고고학 연구기관, 박물관, 대학 등을 참관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Khoresm) 유적과 흑해 북안의 올리비아(Olivia) 유적 발굴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18]

---

13 佚名, 1950, 「蘇聯考古學權威吉謝列夫博士來我國講學」, 『文物參考資料』 1950(Z1), 69~72쪽.

14 夏鼐, 1954, 「中國考古學的現狀」, 『文物參考資料』 1954(1), 63쪽.

15 Liangren Zhang, 2011, 앞의 글, pp. 1049~1050.

16 新華通訊社, 『新華社新聞稿』 1956年 11月 15日, 21쪽; 洪認淸, 2018, 앞의 글, 244쪽에서 재인용.

17 Liangren Zhang, 2011, 앞의 글, p. 1049; 黃建秋, 2023, 앞의 글, 1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소 양국의 학술교류가 연구자 상호 왕래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양국의 저작이 서로 소개되었는데, 그 주요한 방향은 소련의 것이 중국에 번역, 소개된 것이었다. 1955년 창간된 『고고통신(考古通訊)』에는 창간 때부터 1962년까지 68편에 달하는 소련 고고학의 교학(教學) 및 연구성과 등이 소개되었다. 방중한 키셀레프의 강연 내용은 1950년 『키셀레프강연집』이란 제목으로 신화서점(新華書店)을 통해 출판되었고, 그의 저작 『소련의 고고 연구(蘇聯的考古研究)』도 같은 해에 번역, 출판되었다.[19] 1959년 두 번째로 방중했을 때 키셀레프가 베이징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 역시 『고고(考古)』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남시베리아와 외바이칼호의 고대 도시생활에 관한 신자료 소개와 소련 경내의 청동기문화와 중국문화의 관계를 다룬 학술적 내용이 담겨 있다.[20]

소련의 영향은 중국의 고고학 조사, 연구 체계는 물론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도 크게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1949년 문화부(文化部) 아래에 문물사업관리국(文物事業管理局)을 두어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 사업 등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총괄하게 하였으며, 1951년에는 중국과학원 내에 고고연구소를 두어 전국적인 범위에서 발굴과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하게 했다. 한편, 각 성(省)과 시, 자치구(自治區)에도 중앙정부의 체제를 모방하여 문물관리위원회와 고고공작대(考古工作隊) 등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21] 이것은 물질문화사연구소를 통해 소련 전체의 고고학 활동과 제도를 총괄하게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 모스크바대학에서 교육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연구와 교육을 분리하도록 규정

18 王伯洪·王仲殊, 1959a, 「蘇聯考古學訪問記(一)-在物質文化史研究所」, 『考古』 1959(2), 101~104쪽; 1959b, 「蘇聯考古學訪問記(二)-訪問蘇聯科學院民族學研究所」, 『考古』 1959(4), 201~202, 211쪽; 1959c, 「蘇聯考古學訪問記(三)-在花剌子模考古隊實習」, 『考古』 1959(5), 264~267쪽; 1959d, 「蘇聯考古學訪問記」, 『考古』 1959(9), 496~504쪽.

19 黃建秋, 2023, 앞의 책, 186~187쪽.

20 C. B. 吉謝列夫 著, 阮西湖 譯, 1960, 「C. B. 吉謝列夫通訊院士在北京所作的學術報告」, 『考古』 1960(2), 45~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그리고 국내 전역에 박물관과 유적의 조사 및 보존을 책임지는 지역 연구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소련의 제도[22]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고고통신』 창간호에는 소련에서 발행된 『고고학통론』의 교학대강(教學大綱)이 소개되었다. 이 『고고학통론』은 소련 문화부 고등교육국에 의해 인가를 받아 국립대학의 사학과의 주요 교재로 채택된 것이었다. 편집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교학대강의 번역원고는 같은 해 여름 고등교육부가 전국 종합대학 문사교학좌담회((文史教學座談會)를 개최하였을 때 번역해서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이다.[23] 1952년 중국에서 대학의 학과체계가 개편된 이후, 베이징대학의 교과과정은 모두 소련의 것을 모델로 재편되었다. 고고학전공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같은 해 베이징대학에 고고학전공이 창립되고 "처음으로 한 일은 소련 모스크바대학에 그들의 기본교재, 교학계획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모스크바대학의 키셀레프를 초청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쑤빙치는 회고했다.[24]

베이징대학 고고학전공의 설립 목표는 "일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적 수양을 갖추고 광범위한 역사지식과 고고학 방면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전공 간부"를 배양하는 것이었다.[25] 이 교학이념의 실현을 위해 대학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 또한 소련의 것을 번역하여 사용했다. 1952년 교육부가 "계획적·체계적으로 소련의 고등교육 교재를 번역할 것"을 지시하자, 이전에는 그 교학대강(요목)만 소개되었던 『고고학통론』이 1956년에 들어서는 전부 번역되어 베이징대학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 중국의 다른 여러 대학

21 黃建秋, 2023, 앞의 책, 110~120쪽.

22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고고학사』 개정2판, 사회평론아카데미, 318~319쪽.

23 編輯者, 1955, 「蘇聯"考古學通論"教學大綱」, 『考古通訊』 創刊號, 71~78쪽.

24 蘇秉琦, 1995, 「圓夢之路(上)」, 『東南文化』 1995(4), 6쪽.

25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 1959, 「十年來的北京大學考古專業」, 『考古』 1959(10), 5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편찬된 고고학 교재, 이를테면 징싼린(荊三林)의 『고고학통론』, 량자오타오(梁釗韜)의 『고고학통론』 등에서도 예외 없이 소련 『고고학통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26]

활발하게 전개되어오던 중국과 소련의 학문적 교류는 1960년대에 들어 중소관계의 파국으로 인해 중지되었다.[27] 『고고(考古)』(『고고통신』의 후신)에는 더 이상 소련 고고학에 관한 글이 실리지 않았다.[28] 그럼에도 신중국 수립 이후 10여 년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된 중소 양국의 고고학의 제도적·학문적 교류는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국 수립 이후 재정립된, 또 그 일부의 유산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중국 고고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교육체계 학문적 성격과 지향, 행정체계와 발굴기법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기여 등에 대한 인식 등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 두루 관찰할 수 있다.[29]

이를테면 1930년대 소련에서 트리폴리(Tripolye) 유적을 발굴할 때 채택했던 전면발굴을 반포(半坡) 유적 등 중국의 취락유적 발굴에 적용한 것은 소련 고고학의 영향이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주목하면서 취락, 캠프, 수공업 공장 등에 대한 대규모 평면발굴을 통해 개체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그 사회의 전반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고학의 가장 큰 목적을 인류사회 발전 연구에 둔 소련의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

26 劉斌·張婷, 2016, 앞의 글, 36쪽.

27 이요셉에 따르면(이요셉, 2022, 앞의 글, 200~201쪽), "1950년대 후반 미국과의 데탕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역시 '대약진운동'이 야기한 국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1960년대 초반 반소정책을 포함한 외교 노선의 좌경화를 표방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후 1963년 8월 5일 미·소·영 간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의 체결과 1964년 중소 간 국경회담의 결렬은 중소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28 劉斌·張婷, 2016, 앞의 글, 33쪽.

29 黃建秋, 2023, 앞의 책, 110~2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굴기법이었다.[30] 1950년대에 중국에 소개된 소련의 저작들은 "전면발굴은 고대사회의 생활과 경제에 대해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선사시대 모계사회의 전모를 탐색함으로서 원시공산제사회의 생활 경관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간주되었다.[31]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반포 유적을 포함하여 위안쥔먀오(元君廟) 유적, 헝전(橫陣) 유적, 장자이(姜寨) 유적 등 앙사오문화의 다수 취락유적과 묘지에 대한 전면발굴을 통해 앙사오문화 사회의 사회조직과 사회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유행했다.[32] 전면발굴은 이후에도 중국의 대형 취락유적 발굴에서 즐겨 사용하는 기법으로 정착되었다.[3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기 이전 반드시 유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는 문화부의 허가 없이 건설을 진행할 수 없으며 건설 예산에는 발굴에 필요한 비용이 사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34] 고고학은 대중에게 봉사해야 하며 그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념하에 일반대중을 발굴에 참여시키거나 그들에게 유적 보호의 책임을 맡기는 것, 다량의 박물관과 유적전시관을 건설하고 빈번하게 대중강연을 개최하거나 기록영화를 제작한 것 등은 모두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35]

---

30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앞의 책, 325~327쪽.

31 張海, 2011, 「中國考古學的歷史主義特徵與傳統」, 『華夏考古』 2011(4), 139쪽.

32 張弛, 2021, 「民族與革命-百年中國考古學的研究取向」, 『文物』 2021(6), 47쪽.

33 夏鼐, 1954, 앞의 글, 68~69쪽; 張云鵬, 1957, 「由湖北石家河遺址發掘方法的主要錯誤談學習蘇聯先進經驗」, 『考古通訊』 1957(2), 68~73쪽; 劉斌·張婷, 2016, 앞의 글, 34쪽.

34 黃建秋, 2023, 앞의 책, 126쪽.

35 Liangren Zhang, 2011, 앞의 글, pp. 1053~105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고고학의 지향

1917년 수립된 소비에트정권은 과학지식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근대화하고, 사회 및 경제적 진보에 방해가 되는 러시아의 종교적 신비주의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고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1919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된 물질문화사연구소는 모든 고고학의 분과들을 포괄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 말이 되면 여기에 공산당 세포조직이 만들어져 기성의 고고학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레닌그라드대학 고고학과 창립멤버가 된 라프도니카스(V. I. Ravdonikas, 1894~1976)는 1929년 물질문화사연구소 당 조직의 명령을 받아 연구소 내부에서 『'소비에트 물질문화사'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글은 이듬해 출간되어 소련 전역의 고고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혔는데 그 내용은 당시 유력한 고고학자들의 이론적 입장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물질문화사'로 과거의 고고학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과거의 고고학은 마르크스주의와 대치되는 부르주아 학문의 산물이라 하여 전면적으로 거부되었다. 근대 고고학의 근간을 이루는 몬텔리우스식의 형식학은 관념론적이고 유물에 대한 맹목적 물신이라 하여 배척되었으며, 인류 역사를 생물학적 용어로 잘못 해석했다고 하여 비판되었다.[3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원시 평등사회로부터 계급사회를 거쳐 미래의 평등사회로 향하는 진화적 과정으로 법칙화했다. 라프도니카스와 동료들은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여 이 법칙성을 밝힘으로써 가설적 단계에 머물러 있던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때문에 이제 소련 고고학의 최우선적 관심은 사회의 법칙적 진화를 입증하는 데 놓이게 되었다. 이때 사용된 인류사회의 진화에 대한 내용은 모건의 『고대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연구에 토대를 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

36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앞의 책, 318~3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을 바탕으로 정식화되었다.[37] 이 정식은 스탈린 통치 시기 내내 경전적(經典的) 지위를 누렸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았다. 고고학자들은 이 틀에 맞게,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과 모순이 없도록 유적과 유물을 해석해야 했다.[38]

고고학은 역사학의 한 분과로서 인류사회의 진보적·법칙적 발전을 해명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소련 고고학의 학문적 목표는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1953년 샤나이는 "고고학 연구는 고고학을 위해서 고고학을 해서는 안 되며, 역사과학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39] 인다는 소련 고고학은 절대로 "고고학을 위해 고고학을 하지 않으며" 고고학을 역사과학 연구 사업의 중요한 분야로 간주한다. 고고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과학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40] 소련 고고학의 40년을 평가하는 『소련고고학』 편집실의 한 평론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1958년 중국에 소개되었다.

> 마찬가지로 중요한 소련 고고학의 두 번째 질적 특징은 그것의 분명한 목적성이다. 소련 고고학자는 역사유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출발한다. 자신의 주요한 목적은 인민의 역사, 즉 생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각종 유존(遺存)과 유물은 모두 일종의 사료로 취급되어 전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부르주아계급 고고학자는 늘 형식-유형학적 그리고 예술학적인 분석에 의해 제약되므로, 명백하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대량으로 출토되는 자료, 즉 인류의 각종 생산활동 유존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주거 유적 연구의 역사적 임무는 새로운 야외고고학적 방법을 운영할 것을 요구

37 F.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91,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38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앞의 책, 326~328쪽.

39 夏鼐, 1953, 앞의 글, 63쪽.

40 尹達, 1954, 「認眞學習蘇聯考古學者的寶貴經驗和工作作風」, 『科學通報』 1954(8), 66~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주거 유적에 전면발굴 방법을 채택하고, (이처럼) 연구 범위가 확대된 지역을 연구할 때에는 늘 수직과 수평의 기록을 종합하고, 문화퇴적층을 층위마다 분명하고 상세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옛 유적에 대해 전면발굴을 진행하는 역사 연구의 임무에도 부합된다.[41]

고고학은 물질문화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사회에 대한 연구였다.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중국의 역사학은 소련의 영향에 직접 노출되었다. 1950년대 중국에서 전개된 소련식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다섯 송이 금화(五朵金花)', 즉 고대사 분기 문제, 중국 농민전쟁 문제, 봉건사회 토지소유제 형식 문제, 자본주의 맹아 문제, 한민족(漢民族) 형성 문제 등의 다섯 가지 중점적 연구 과제는, 그 가운데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였다. 역사학의 한 분과인 고고학의 연구 목적 또한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42] 중국 고고학과 역사학의 관계는 나날이 가까워졌다. 1953년 출판된 판원란(范文瀾, 1893~1969)의 『중국통사간편(中國通史簡編)』 제1차 수정본은 고고학 자료를 대량으로 채용했다.[43]

민국시기 중국 고고학은 주로 발굴에 치중하면서 거기에서 출토된 유적과 유물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고대의 사회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 고고학의 학문적 입장은 중국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44]

그러나 고고학을 통한 사회사 연구가 이때 들어 중국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1920년대 고고학이 처음 중국에 처음 도입된 때부터 고고학은 이미 역사

41 潘孟陶 譯, 1958, 「蘇聯考古學四十年-"蘇聯考古學"1957年第4期社論」, 『考古通訊』 1958(4), 8쪽.

42 張弛, 2021, 앞의 글, 47쪽.

43 洪認淸, 1958, 앞의 글, 251쪽.

44 Liangren Zhang, 2011, 앞의 글, p. 10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의 한 분과로 인식되고 있었다.[45] 일찍이 국공합작(國共合作)이 결렬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 내지 중국의 지성계는 중국혁명의 전망에 대한 치열한 논쟁에 빠졌다. 이때 중국 사회발전의 전도(前途)를 조망하기 위해 중국의 사회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전 지성계에서 '사회사대논쟁(社會史大論戰)'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촉발한 대표적인 연구가 1929년에 출판된 궈모로의 『중국고대사회연구(中國古代社會研究)』였다는 점이다.[46] 궈모로의 이 저작은 전래문헌은 물론 지하에서 출토된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역사를 마르크스주의 사회발전이론의 틀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었다. 궈모로는 이 책이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속편이 되기를 원했다.[47]

궈모로가 전형적인 고고학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고고학적 자료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이 민국시기에 학계의 한 흐름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궈모로는 물론 일찍부터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을 수용한 뤼전위(呂振羽, 1900~1980)나 인다 등은 고고학적 자료로 중국의 고대사회를 연구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고고학 자료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적 고고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48] 쑤빙치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을 중국 고고학 연구에 응용한 것은 중국에서 고고학이 시작된 것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일"[49]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렇지만 발굴을 중심으로 한 야외고고학의 입장에

45 김정열, 2024,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 『동북아역사논총』 83, 128~130쪽.

46 張弛, 2021, 앞의 글, 47쪽.

47 張弛, 2021, 위의 글, 48쪽.

48 陳洪波, 2010, 「中國現代考古學的學術流派及其嬗變」,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0(3), 134~135쪽; 湯惠生, 2021, 「中國馬克思主義考古學派與類型學」, 『中國社會科學』 2021(9), 125~127쪽.

49 蘇秉琦, 1989, 「中國考古學-從初創到開拓-一個考古老兵的自我回顧」『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371~37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제한해보면,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은 민국시기의 중국에서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고고학을 바라보는 소련식의 시각이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련의 고고학은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고고학계 전반에 걸쳐 그 학술적 지향을 부여하고 거기에 마르크스주의의 법칙적·진보적 역사관을 입히는 절대적인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조직과 경제적 상태, 문화적 면모를 복원하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상부구조를 파악하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인류사회 발전의 법칙을 연구해야 한다는 일련의 논리가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의 차원에서 중국 고고학의 학술적 지향과 목표로 분명하게 정착된 것은 역시 소련 고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Ⅲ. 핵심 과제와 중국 고고학의 전변(轉變)

고고학이 역사학의 한 분야라면 그것의 주요한 목표 또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그것에 따라 정의되어야 했다. 소련의 역사학은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고, 고고학 역시 그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수용한 중국 고고학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중국 고고학계의 핵심 과제는 중국의 축적된 발굴자료와 소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사회발전사를 수립하는 데 놓여져야 했다.[50]

1952년 당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고 있던 샤나이는 「야외고고학서론(田野考古序論)」에서 중국 고고학의 목표는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수립에 있다고 천명했다. 그는 스탈린을 인용하여 고고학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대사회의 사회경제적 형성을 연구하는 것이며, 그 연구대상과

50 王興, 2023, 앞의 글, 29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범위 또한 그에 적합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51] 그는 1954년 중국 고고학의 방법론과 연구성과를 개괄한 한 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기도 했다.

> 1950년 고고연구소가 성립된 뒤, 인민정부의 영도하에서 고고학 공작의 목표는 변화를 맞이했다. 같은 해에 소련의 고고학 전문가 키셀레프가 중국에 와서 연설함으로써 중국의 고고학 종사자는 소련의 선진적 고고학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중국 고고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고고학 연구는 고고학을 위해 고고학을 해서는 안 되며 역사과학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실제적인 일, 즉 국가의 위대한 경제건설과 연계되어야 한다.[52]

고고학은 "고고를 위해 고고를 하면 안 되었으며" "역사과학을 위해 봉사" 해야 했다. 신중국 성립 후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이전의 중국 고고학에서 집중되었던 유물의 형식학적 연구가 옳지 않다고 하며, 그것이야말로 "물건을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見物不見人)" 자질구레한 철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쑤빙치의 학생으로서 베이징대학에서 고고학을 수학하고 이후 중국 고고학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위웨이차오(俞偉超, 1933~2003)와 장중페이(張忠培, 1934~2017), 두 명의 원로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1956년 이후, 특히 1958~1961년의 '대약진(大躍進)' 시기, 일련의 정치운동은 청년 학생의 합리적인 요구와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이상을 자극했다. 쑤빙치 선생이 고고학 교육을 담당한 베이징대학에서 많은 고고학 전공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 중국 고고학 체계를 건립하자"는 구호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고학 자료를

51 夏鼐, 1952,「田野考古序論-在考古工作人員訓練班講演摘錄」,『文物參考資料』1952(4), 81~91쪽.

52 夏鼐, 1954,「中國考古學的現狀」,『文物參考資料』1954(1), 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해 사회관계와 그 발전규율을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정확한 것이지만, 그들은 고고학의 기본 방법을 거부하고 형식학을 비판했다. 토기의 서열을 세우는 것을 "물건을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들은) "이론으로 역사를 대신하기를" 꿈꿨다.[53]

새로운 세대는 발굴자료를 이용하여 인류의 고대사회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고고학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중국 고고학은 이제 어떻게 하면 "물건을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물건도 보고 사람도 보는" 또는 "물건을 통해 사람을 보는" 방향으로 전환할지 모색해야 했다. 샤나이는 그것을 한마디로 "고고학의 최종 목표는 고대사회의 상황과 사회발전을 복원하고 사적유물론에 근거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함으로써 결론을 얻는 것이다"라고 정리했다.[54] 마르크스주의와 소련 고고학의 강렬한 영향을 받은 신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시대의 조류를 타고 이 시대의 '발언권'을 점차 장악해갔다. 그들의 목표는 종래의 부르주아계급 고고학 사상을 더러운 것으로 비판하고 소련 고고학을 모범으로 하여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을 건립하는 것이었다.[55]

때마침 신중국 성립 이후 전국에 걸쳐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 대형 토목공사가 급증하면서 구제발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막대한 양의 발굴자료가 축적되었다. 공산주의 혁명 이후 소련의 고고학자들은 일찍이 '원시사회사', '노예사회', 또는 '노예제부터 봉건제까지 각 시기의 문화' 등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인류사회 진보에 대한 가설을 물질자료를 통해 해석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이제 중국의 고고학자들도 이 문제에 뛰어들 만한 충분한 연구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

53 兪偉超·張忠培, 1984,「《蘇秉琦考古學論文選集》編後記」,『蘇秉琦考古學論文選集』, 文物出版社, 317~318쪽.

54 夏鼐, 2017,「考古學通論講義(之一), (之二)」,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夏鼐文集』1,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67~126쪽.

55 陳洪波, 2010,「20世紀中國考古學史研究述評」,『中原文物』2010(6), 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되었다.

이렇게 신중국 성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고고학은 마르크스주의에 부합되는 사회발전사의 '중국적' 뼈대를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와 마주했다. 유적 조사, 발굴과 정리, 연구 등을 포함하여 고고학계의 역량은 이에 집중되었다. 샤나이는 1953년 중국 고고학이 이제부터 노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능동적 연구 사업은 신석기시대 그리고 은대(殷代)와 양주(兩周)시대를, 특히 서주(西周)시대를 중점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자료를 발굴하여 전설(傳說) 및 문자 기록과 연계해서 이 몇몇 시대의 사회생활 양상과 그 발전과정을 연구하여야 한다. 고고학의 측면에서는 중국 사회가 어떻게 해서 신석기시대의 원시사회에서 야금기술을 채용하고 문자를 발명하여 국가를 확립하고 은대 노예제사회의 청동문화에 진입하였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것이 매우 적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석기시대 후기의 자료는 비록 약간 쌓여 있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단편적이다. … (지금)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적 측면에서 동주, 서주시대 사회 성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특히 서주시대의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56]

샤나이는 향후 사회생활 양상과 그 발전과정을 탐구하는 데 고고학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석기시대와 서주시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실제 ① 중국의 신석기시대는 모계사회를 거쳤는가, 거쳤다면 그 시대는 언제인가에 대한 연구, ② 중국의 노예제사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즉 노예제사회와 봉건제사회의 분기(分期)는 과연 서주시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연구 등 두 가지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되었다.

---

56 夏鼐, 1953, 앞의 글, 67~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문제는 당시의 역사학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것이었지만, 신석기시대의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는 문자기록이 없어 본질적으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였다.[57] 노예제와 봉건제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역사시대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의 전래문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에 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중국 전래문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이른바 의고파(疑古派)의 도전으로 대표되는 민국시대 이래 학계의 톱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이상의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고고학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역사학계에서도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양자는 어느 것이나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발전사의 뼈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했다.

1. 모계사회논쟁을 중심으로 한 선사 씨족사회 연구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은 원시사회 연구에서 선혈연(난혼)집단에서 모계씨족사회, 부계씨족사회로 이어지는 사회발전의 정식을 부여했다.[58] 이것은 원시사회의 씨족제에 대한 모르간의 『고대사회』를 바탕으로 엥겔스가 저술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제시된 것이다.[59] 엥겔스의 사회발전 모델은 중국 고고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부터 모계사회 또는 부계사회 등 씨족제도에 관한 연구가 중국의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문화 연구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60]

이때 주요 연구대상이 된 것이 바로 앙사오문화(仰韶文化, c. 5000~3000 BCE)였다. 중국 고고학계는 앙사오문화가 처한 사회발전 단계를 둘러싸고 치열

57 劉慶柱, 2016, 「考古學視閾下的馬克思主義唯物史觀」, 『中國史硏究』 2016(2), 6쪽.

58 Liangren Zhang, 2011, 앞의 글, p. 1052.

59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앞의 책, 327~328쪽.

60 劉斌·張婷, 2016, 앞의 글, 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논쟁을 전개했다. '모계사회논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논쟁은 고고학 유적·유물 해석에 엥겔스의 사회발전이론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이다. 반포, 먀오디거우, 싼리차오(三里橋) 등 앙사오문화의 주요 유적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앙사오문화를 대상으로 그것이 위치한 사회발전 단계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주거지의 형태와 규모, 배열 형태, 잔존된 유물의 분포 상황, 무덤의 크기, 형태와 피매장인의 장식(葬式), 남녀 무덤의 부장품 상황 등을 바탕으로 앙사오문화의 사회가 모계씨족사회인지 아니면 부계씨족사회인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다수의 고고학자들은 앙사오문화가 모계씨족사회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앙사오문화 시기에 여성이 주요노동, 즉 농업노동에, 남성은 보조적 노동에 종사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높았다고 생각했다. 앙사오문화 취락 유적에서 재구덩이(灰坑), 저장갱(窖穴) 등이 특정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현상은 씨족소유제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주거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덤 유적에서 이차장(二次葬)과 합장묘의 수량이 많으며 남성 숭배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우혼(對偶婚)으로 구성된 모계 대가족이 만연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61] 이에 반하여 소수의 연구자들은 앙사오문화는 부계씨족사회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제1차 사회분업이 완성된 후 부계씨족사회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앙사오문화 무덤에 나타나는 부장품의 차등 현상은 농업의 발달과 함께 부계가족 사유제가 출현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62]

남성 숭배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남성 성기 모형 토기(陶祖)의 문제 역시 앙사오문화의 사회발전단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의 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앙사오문화 부계씨족사회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앙사오문화 유

61 李衍垣, 1964, 「"仰韶文化"的討論綜述」, 『考古』 1964(7). 374~376쪽.

62 許順湛, 1962, 「"仰韶"時期已進入父系氏族社會」, 『考古』 1962(5), 256~2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에서 도조가 발견되며 이것은 남성 숭배를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모계씨족사회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그것이 룽산문화(龍山文化, c. 3000~2000 BCE) 단계의 유적에서 비로소 발견되기 시작한다고 하여 전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모계사회논쟁 과정에서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보여준 양자택일적 입장은 그들이 엥겔스의 원시사회 사회발전이론에 크게 경도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장중페이는 이와 같은 이론적 경도가 고고학적 실제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거의 유일한 고고학자였다. 그는 앙사오문화라고 해도 지역적 유형에 따라 묘제(墓制)가 서로 다르며, 그 가운데 하나인 반포유형의 자료를 통해 추론된 사회의 성격을 앙소문화 전체의 사회발전 단계로 일괄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63] 그럼에도 샤나이는 1962년 중국 고고학의 성과를 총결하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신석기시대의 농업 부락 거주지의 구조(布局)와 공동묘지의 상황은 그들이 처음에는 번영한 모계씨족사회 조직이었으며 나중에 부계씨족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어떤 특정한 문화 유형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모계사회에 속하는지 아니면 부계사회에 속하는지는 학술계에 아직 다양한 시각이 있다.[64]

샤나이의 발언은 신석기시대에 대한 중국 고고학계의 관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 사회발전 이론이 제시하는 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더 구체적으로는 앙사오문화의 사회발전단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63 張忠培, 1962, 「關于根據半坡類型的墓葬制度探討仰韶文化社會制度問題的商榷」, 『考古』 1962(7), 377~381쪽.

64 夏鼐, 1962, 「新中國的考古學」, 『考古』 1962(9), 4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노예제·봉건제의 분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고고학 연구

1919년 이후 일찍부터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수용한 일군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사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설정하기 위한 시론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노예제와 봉건제 사회의 획기(劃期)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크게 보아, 중국학계는 이 문제에 관해 크게 세 차례의 논쟁을 벌였으며(시기구분논쟁), 그중 두 번째 논쟁이 신중국 성립 직후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다.

논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1950년 궈바오쥔(郭寶钧, 1893~1971)이 『광명일보(光明日報)』에 발표한 「은주(殷周) 순장(殉葬)의 사실을 기록함」(3월 19일자)이라는 글이다. 일찍이 1930년대 초기에 우치창(吳其昌)은 갑골문 연구를 통해 은대에 인신공희를 수반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는데, 궈바오쥔의 이 글은 은허(殷墟)의 발굴을 통해 상대(商代)에 집단 순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순장된 사람이 모두 노예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두 생산에 종사한 노예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추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데 궈모로는 이 글을 읽고 즉각 상대의 순장인은 대부분 노예이며, 상대는 노예제사회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궈모로가 이전부터 견지해온 상주(商周) 노예제사회설을 재확인한 것이었지만, 이때 논쟁의 핵심적인 자료가 발굴을 통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노예제·봉건제 획기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65]

직접적인 관심은 순장된 자들이 노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지만, 순장자를 노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고, 순장과 희생에 대한 개념의 혼동도 존재했다. 집단 매장된 희생 인골이 생산노예인지 아니면 포로 등의 특수한 신분에 속하는 자인지 사실 분명하지 않았다.[66]

---

65 陳民鎭, 2017, 「奴隸社會之辯-重審中國奴隸社會階段論爭」, 『歷史研究』 2017(1), 166~1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신장(俯身葬) 문제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1950년 은허 발굴이 재개되었을 때 궈바오쥔은 무덤과 배장갱(排葬坑)의 인골 장식(葬式)을 분석한 후 『좌전(左傳)』 희공(僖公) 28년에 나오는 '득천(得天)'과 '복죄(伏罪)'의 기록을 원용하여 앙신장과 부신장은 소속 계급의 차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노예제사회론자들은 이에 입각하여 부신장으로 매장된 자들이 노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마더즈(馬得志) 등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에 의하면 순장자 가운데 부신장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장자를 노예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일부 순장자의 경우에는 도리어 앙신장(仰身葬)의 경우보다 더욱 풍부한 부장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사실 부신장과 앙신장은 피매장자의 자세 차이가 있을 뿐, 무덤의 형태, 복토(覆土), 장구(葬具) 또는 부장품의 다과와 수준 등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67]

은허의 순장자를 통해 상대에 생산노예가 존재했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로 말미암아 논쟁의 초점은 이제 노예제시대의 하한(下限)으로 옮겨졌다. 즉, 중국사에서 언제부터 봉건제가 시작되었냐의 문제였다. 궈모로는 『노예제사회(奴隸制社會)』에서 전국시대 봉건사회설을 주창했지만 판원란(范文瀾, 1893~1969)이나 양샹쿠이(楊向奎, 1910~2000) 등은 서주시대 봉건사회설을 주장했다. 고고학계는 이와 같은 역사학계의 동향에 대응하여 서주시대가 노예제사회인지 아니면 봉건제사회인지를 밝히기 위해 발굴의 중점을 서주시대 유적으로 돌렸다.

1950년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성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후이현(輝縣) 구웨이촌(固圍村) 유적 발굴[68]이나 1951년 4월부터 6월까지 시안(西安) 부근에서 진행한 발굴[69]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시도였다. 앞서 언

66 陳民鎭, 2017, 위의 글, 166~168쪽.

67 馬得志 등, 1955, 「一九五三年安陽大司空村發掘報告」, 『考古學報』 1955(9), 30~31쪽.

68 考古研究所輝縣發掘團通訊組, 1951, 「輝縣考古發掘三記」, 『科學通報』 1951(3), 247~25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급한 바와 같이 1953년 샤나이가 향후 고고학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석기시대, 상대와 양주를 연구의 중점적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서주시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70]

Ⅳ. 『신중국의 고고 수확』, 그 이후

모계사회논쟁과 고대사 시기구분논쟁에 대한 논쟁은 분명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가 시작될 무렵 출판된 『신중국의 고고 수확(新中國的考古收穫)』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체적 인식의 윤곽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1959년 초 '신중국십년고고(新中國十年考古)'를 편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때 샤나이는 여러 차례 편찬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여자들의 관심을 끈 가장 큰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중국 고고학 체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였다.[71] 이 작업의 결실은 1961년 원우출판사(文物出版社)에서 『신중국의 고고 수확』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72] 이 책의 기본적인 틀은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명백히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발전사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모델이며, 당시의 중국 고고학이 추구한 주요 목표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중국 고대사회의 발전맥락을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정립하려는 지향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73]

---

69 考古研究所陝西省調查發掘團通訊組, 1951, 「1951年春陝西考古調查工作簡報」, 『科學通報』 1951(9), 939~943쪽.

70 王興, 2023, 앞의 글, 299~300쪽.

71 記者, 1959, 「編寫新中國考古十年考古座談會在京召開」, 『考古』 1959(2), 61~62쪽.

7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61, 『新中國的考古收穫』,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에서 '원시사회'는 약 1/3의 편폭을 사용하여 서술되었는데, 이것은 신중국 건립 이래 이 분야의 조사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여기에서는 황허강 유역의 몇몇 전형적 앙사오문화 신석기 유적, 예컨대 반포 유적, 바오지(寶鷄) 베이서우링(北首嶺) 유적의 발굴자료를 통해 당시 황허강 중류의 취락에는 일정한 구획이 있으며, 취락의 중심부는 씨족 성원의 공공활동에 사용된 대형 건조물 또는 광장이 위치하고 그 주위에 많은 주택이 위치한 것 그리고 주거구역 부근에는 토기가마와 공동묘지가 입지했다는 등의 사실이 언급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앙사오문화 사회의 취락 구조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사회 성격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진다.

> 앙사오문화 주민의 서경농업(鋤耕農業) 발전 수준으로 볼 때, 농업은 아마도 여성에 의해 경영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사육된 가축은 돼지와 개 두 종류뿐이었으며 그 수량도 많지 않았다. 여성은 당시의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앙사오문화가 모계씨족사회 시기의 경제적 기초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안쥔먀오(元君廟)의 씨족공동체 묘지에서는 다량의 다인합장묘가 발견되었는데, 어떤 것은 여성 1인의 일차장이고 다른 남녀의 유골은 다른 곳에서 온 이차장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매장제도를 보여준다. 부장품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것이 남성의 것보다 풍부한데, 이것은 사회에서 부녀의 지위가 높았던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현상이다.[74]

다음으로, '노예사회'는 상은(商殷)과 서주춘추(西周春秋) 등 2개의 하부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도 서주·춘추시대의 사회 성격은 고대사 시기구

---

73 王興, 2024,「夏鼐的馬克思主意考古學之路」, 中國社會科學網, https://www.cssn.cn/skqns/skqns_qnzs/202406/t20240626_5761244.shtml.

7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61, 앞의 책, 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논쟁에서 격론을 벌였던 문제이다. 『신중국의 고고 수확』에 의하면, 서주시대의 생산은 상대보다 현저하게 발전하지 않았다. 농업생산공구도 대체로 유사하며, 수공업 생산의 성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의 순장 현상은 서주 중기에도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서주 후기의 귀족묘에서는 순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주시대의 귀족묘에서는 여전히 순장이 확인되어 당시에 노예제가 아직 발전 중에 있었음을 입증한다.

물질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서주시대와 춘추시대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국시대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철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철기가 출현한 것은 전국 초기 또는 그보다 더욱 이른 때이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전국 중기, 즉 열국(列國)의 변법(變法) 이후이다. 철제 쟁기 등 신형 농기구의 사용은 농업생산력을 제고하였으며 농업은 다시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때 상업도 발전하고 도시가 대량으로 등장했으며 금속화폐가 출현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 열국의 변법은 대부분 춘추 말기에서 전국 전·중기에 일어났다. 10년 동안의 철제 농기구 발굴 상황은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즉,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열국의 변법 이전이고 철제 농기구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열국 변법 이후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철기 사용 등의 요소로 말미암아 봉건적인 개체생산(個體生産)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중기에 이르러 봉건적 토지소유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면서 비로소 철제 농기구가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75]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① 앙사오문화는 모계사회에 속하는데, 그것의 판단 준거가 된 것은 주로 생산활동 수준과 매장제도이다. ② 중국의 노예제와 봉건제는 춘추·전국시대를 기준으로

75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1961, 위의 책, 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분되며, 봉건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논단은 생산력 발전이 생산관계를 변화시키며,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국의 고고학적 자료 속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발전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앙사오문화 시기는 원시사회의 모계사회에 속하며, 춘추·전국시대가 노예제와 봉건제의 경계라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발전법칙과 그것이 중국에서 관철된 양상이 『신중국의 고고 수확』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 책은 중국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첫 결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중국 성립 초기 중국 고고학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이 책은 중국이 고고학이 역사학의 한 분과로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였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중국에 고고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그것의 학문적 기능과 목표는 중국의 상고사를 중건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은허의 발굴은 그와 같은 초기 중국 고고학의 지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고고학의 '증사주의적' 발전 방향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76]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의 한 분과로서 고대사 복원을 최종 목표로 한 중국 고고학은 소련 고고학의 영향 속에서 그 본래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1959년 샤나이는 신중국 성립 이래 10년간의 고고학 사업을 개괄하면서, 그동안 매우 많은 양의 중요한 고물(古物)이 출토되어 고고학 발전을 촉진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고학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고고학이 역사과학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했다.[77] 중국의 고고학은 지금도 학문 분류상 철학사회과학 중의 역사과학에 속해 있으며, 역사과학은 인류사회 발전 규율을 연구하는 학문분과로서 이 규정은 고고학

76 張海, 2011, 앞의 글, 138~139쪽; 김정열, 앞의 글, 2020, 373~381쪽.

77 夏鼐, 1959, 「十年來的中國考古新發掘」, 『科學通報』 1959(21), 7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도 적용된다.[78]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신중국 성립 이전의 고고학이 중국의 민족사 건설을 초점에 둔 것이었다면, 신중국 성립 이후 소련 고고학의 영향을 받은 고고학은 인류 보편사 속에서 중국의 고대사를 재건하고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949년 이래 중국 고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운용하여 그 지도이론을 수립해갔지만, 실천의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마르크스주의라는 인류사회 발전에 관한 거시적 이론과 개별 고고학 자료의 물질성, 구체성 사이의 거리를 메꿀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이론과 연구가 극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해 유적의 형성과정을 연구하거나 고인류의 행위를 복원하는 연구(중범위이론, Middle range theory)가 실천과 이론 사이의 중간단계를 구성하고 있다면, 중범위이론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79]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교설(教說)을 직접 단편적인 유적과 유물의 양상에 연결시킴으로써 중국의 고고학은 '이론으로 사실을 대체(以論代事)'하는 '교조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80] 이를테면 여성 중심의 이차장은 모계씨족사회의 증거로, 철제 농기구의 등장은 봉건사회의 도래를 보여주는 지표로 즉각 치환됨으로써 고고학적 발견물의 의미는 단순화되고 더 이상 연구할 수 없는 상징적 표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은 병폐는 소련에서도 나타났지만,[81]

---

78 朱鳳瀚, 2021,「關于中國特色考古學的幾點思考」,『歷史研究』2021(1), 13~14쪽; 劉慶柱, 2021,「中國特色考古學解讀: 百年中國考古史之思考」,『考古學報』2021(2), 166쪽.

79 장하이(張海)는 중국에서 중범위이론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문헌사학이 발달하여 민족학과 인류학에서 제공하는 해석모델은 늘 2차적인 것 또는 보완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주변화되었다. 둘째, 문화 다양성을 배경으로 한 간단한 대비식(對比式)의 연구방법은 이론과 실제 자료 사이의 간극을 유의미하게 보완할 수 없었다. 張海, 2011, 앞의 글, 143쪽.

80 陳勝前, 2015,「中國考古學的創新問題」,『南方文物』2015(2), 35~36쪽.

81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앞의 책, 330~3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의 경우에는 대약진운동과 반우파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교정의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82]

인류 문명의 발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중국 고고학 내부의 발전 동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진적 과학 기술을 고고학에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54년 샤나이는 고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과학적 지식을 고고학의 영역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서 방사성탄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 공중촬영과 물리탐광법을 이용한 유적 조사, 분광학을 이용한 유물 성분 분석, 금속 미세결정 연구를 통한 동기 성분 분석, 화분과 토양 분석을 통한 고대 지리·환경 연구 등을 꼽은 바 있다.[83] 실제로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는 중국에서 화분과 토양 분석을 이용한 고대 지리환경 연구와 고동물, 고인류 화석에 근거한 고인류 생활 환경 연구가 시작되었다.[84]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국 문화 고유의 발전을 강조하는 문화사적 고고학에 압도되고 말았다.

소련과의 밀월기가 지나고, 이후 이데올로기적 경직기인 문화대혁명이 종결되면서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앙사오문화 모계사회설은 물론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85] 중국적 역사발전의 고유한 모델을 강조하면서부터는 마르크스주의 사회발전모델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적 풍조가 거세지고,[86] 그에 따라 1950년대 소련에서 수용된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발전론과 그에 따른 자료 해석이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87] 노예제사회와 봉건제사회

82 陳洪波, 2011, 앞의 글, 35쪽.

83 夏鼐, 1954, 앞의 글, 68~69쪽.

84 趙賓福, 2019,「新中國考古學70年的成就與貢獻」,『河北學刊』2019(5), 70쪽.

85 汪寧生, 1987,「仰韶文化葬俗和社會組織的研究-對仰韶文化母系社會論及其方法論的商榷」,『文物』1987(4), 36~43쪽.

86 童恩正, 1988,「摩爾根模式與中國的原始社會史研究」,『中國社會科學』1988(3), 177~19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기 문제에 대한 논쟁은 196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이후에는 중국 사회의 고유한 역사발전 노선이라는 화두에 묻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88]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적 해석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인류의 활동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흐름은 비슷한 시대의 서구에서는 기능과정주의 고고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졌지만[89] 중국은 그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는 대내외적 상황에 빠져 있었다. 중국 고고학은 오히려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인류사회의 보편적 발전에 대한 시야는 방기하고 그 대신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 '중화민족'의 형성 등과 같은 쑤빙치류(類)의 문화사적 고고학에 대부분의 정력을 쏟아부음으로써[90] 새로운 민족사 구축을 지상과제로 설정했던 민국시기의 고고학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이제 중국 고고학에서는 모계사회논쟁과 고대사 시기구분논쟁이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는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중국에 기능과정주의 고고학, 후기과정주의 고고학 등 최신 이론이 몰려들면서, 중국 고고학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과제도 변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중국 고고학의 핵심 과제는 물질문화사에서 다시 '사회'로 옮겨졌다. 특히 취락고고학 분야에서 큰 진전을 거두면서 취락 형태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복합화 과정과 문명의 성립을 연구하는 것이 고고학의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91] 1990년대 이래에는 연대학, 동식물고고학, 분자고고학, 동위원소고고학 등이 신속하게 발전하여 고대 인류의 사회 활동과 생활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면서 고고학의 주요 과제는 고대사회 복원 연구로 넘어갔다.[92]

---

87 劉斌·張婷, 2016, 앞의 글, 33쪽.

88 陳民鎮, 2017, 「奴隸社會之辯-重審中國奴隸社會階段論爭」, 『歷史研究』 2017(1), 176~178쪽.

89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앞의 책, 307~371쪽.

90 陳勝前, 2019, 앞의 글, 189쪽.

91 張海, 2011, 앞의 글, 1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렇다면 신중국 성립 초기에 중국 고고학을 뒤흔든 소련 고고학의 영향은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중국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이며 통일적인 사회발전 이론에 있기 때문이다. 신중국 성립 초기 약 10여 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현한 『신중국의 고고 수확』이 제시하는 중국의 사회 발전론은 여전히 중국의 교과서에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 현대 중국 고고학계의 중견 연구자인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의 한젠예(韓建業)가 "고고학 이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중국 고고학의 기본 지도 이념이며 서방의 많은 고고학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시각과 방법으로 분별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것 또한 최근의 일이다.[93]

V. 맺음말

중국의 고고학은 신중국 성립 초기 소련 고고학의 영향하에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이 글의 결론은, 중국 고고학이 1920년대부터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 고고학으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련 고고학의 영향이 압도적인 위세를 떨쳤던 1950년대 초, 베이징대학 고고전업(考古專業)을 졸업하고 1956년 이래 줄곧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근무한 쉬핑팡(徐苹芳, 1930~2011)은 1958년에 중국 고고학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92 陳勝前, 2019, 「中國考古學研究的範式與範式變遷」, 『中國社會科學』 2019(2), 201쪽.

93 韓建業, 2021, 「中國特色考古學的主要內容」, 『考古』 2021(4), 3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근대 고고학 초기에는 송, 청 이래의 금석학 연구성과를 계승하고, 서방 자본주의 학술사상의 영향하에서 몇몇 중요한 정리와 연구를 진행하여 금석학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고고학의 몇 가지 기본 내용이 성립될 수 있었다. 1927년 이후 대규모의 과학적 발굴이 전개되면서 고고학은 금석학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과학으로 발전되었다.[94]

신중국이 성립되어 민국시기의 고고학에 대한 전면적인 폄하가 만연하던 시대에 살았던 중국의 고고학 연구자들에게도 고고학은 여전히 서방 자본주의 학술의 영향하에서 성립된 학문이었다. 신중국의 천지개벽 후, 전 시대의 사회와 그것이 가져온 해악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비판되어야 할 것이었다. 고고학도 마찬가지였다.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을 유일한 이념적 준거로 채택한 중국 고고학자의 태도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일신의 안위를 구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욱 분명하게 읽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간 당사자들이 현실 사회 속에서 거치게 된 의식 형태의 변화이다.[95]

신중국 수립 이래 중국 고고학은 많은 것을 새로 해야 했다. 중국 고고학은 이때 학문적 또는 현실적 이유로 소련의 고고학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수용했다. 고고학을 국가의 필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이론적 틀과 방법을 개발해야 했다. 소련의 경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하면서도 유용한 열쇠가 되었다. 대체로 중국의 초기 고고학을 양육한 것은 소련의 고고학이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소련의 고고학을 모델로 하여 발굴과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고고학의 최종 목적을 물질자료를 통한 인류사회발전사 연구에 두고 그

---

94 徐苹芳, 1958, 「考古學簡史」,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 『考古學基礎』, 科學出版社, 164쪽.

95 夏鼐, 1955, 「批判考古學中的胡適派資産階級思想」, 『考古』 1955(3), 1~7쪽; 閻文儒, 1955, 「談談考古學中的資産階級思想」, 『考古』 1955(4), 66~71쪽; 尹達, 1958, 「考古工作中兩條路線的鬪爭」, 『考古』 1958(10), 9~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을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 봉사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이 시기의 중국 고고학의 초점은 유적과 유물 등의 출토자료를 통해 중국 사회의 발전을 인류의 보편적·법칙적 발전의 시각에서 포착하려는 데 놓였다. 이와 같은 고고학의 경향성은 중국 고고학이 유물과 유적에 중점을 둔 것에서 '유물도 보고 사람도 보는' 것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으며, 그것은 현대 중국 고고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96]

그렇지만 소련 고고학을 모범으로 한 중국 고고학의 혁명적 변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중소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소련 고고학은 학습해야 할 모범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중국 고고학의 주류는 쑤빙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사고고학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형식학에 기초한 문화 계보 연구가 학계를 평정하고, 인류의 보편사적 시야에서 탈각하여 중화민족과 '중국'의 기원과 발전을 물질자료를 통해 구명하는 데 학계의 역량이 집중되었으며, 이것을 중국 고고학의 독자적인 노선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97]

안타깝게도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중국 고고학은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후기에 들어 중국 고고학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소련 고고학의 영향이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다시 서구 고고학의 최신 이론들이 중국 고고학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련 고고학의 인류발전사 모델에 대한 논의는 중국의 고고학계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의 담론으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96 陳勝前, 2015,「中國考古學的創新問題」,『南方文物』2015(2), 31~38쪽.

97 蘇秉琦, 1981,「建國以來中國考古學的發展」『史學史研究』1981(4), 9~14쪽; 湯惠生, 2021, 앞의 글, 131~1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F.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91,『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트리거, 브루스 지음, 성춘택 옮김, 2019,『고고학사』 개정2판, 사회평론아카데미.

王世民, 2024,『中國考古學編年史』, 中華書局.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58,『考古學基礎』, 科學出版社.

_____, 1961,『新中國的考古收穫』, 文物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17,『夏鼐文集』 1,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黃建秋, 2023,『百年中國考古』, 江蘇人民出版社.

논문

김정열, 2020,「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 -중국 증사주의적 고고학의 성립-」,『崇實史學』 45.

_____, 2024,「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동북아역사논총』 83.

이요셉, 2021,「1960년대 초 중국외교 좌경화의 원인 -마오쩌둥의 권력 장악력을 중심으로-」,『中國近現代史研究』 92.

_____, 2022,「'강요된 밀월'에서 '자발적 밀월'로-1949-1957 중소관계의 속성 변화-」,『中國近現代史研究』 96.

考古研究所陝西省調查發掘團通訊組, 1951a,「1951年春陝西考古調查工作簡報」,『科學通報』 1951(9).

考古研究所輝縣發掘團通訊組, 1951b,「輝縣考古發掘三記」,『科學通報』 1951(3).

巩啓明, 2001,「從考古資料看仰韶文化的社會組織及社會發展階段」,『中原文物』 2001(5).

記者,「編寫新中國考古十年考古座談會在京召開」,『考古』 195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戴向明, 2001,「中國考古學觀念的回顧與反思」,『東南文化』2001(1).
童恩正, 1988,「摩爾根模式與中國的原始社會史研究」,『中國社會科學』1988(3).
劉慶柱, 2016,「考古學視閾下的馬克思主義唯物史觀」,『中國史研究』2016(2).
_____, 2021,「中國特色考古學解讀: 百年中國考古學史之思考」,『考古學報』2021(2).
劉斌·張婷, 2016,「中國考古學發展中的蘇聯影響」,『東南文化』2016(5).
劉巖, 2011,「中國考古學的當代反思-一個考古學理論的視角」,『南方文物』2011(2).
李新偉, 2020,「中國學派考古學的基本內容」,『南方文物』2020(6).
李衍垣, 1964,「"仰韶文化"的討論綜述」,『考古』1964(7).
李志義, 1958,「科學躍進中的北京大學考古專業」,『考古通訊』1958(12).
馬得志 등 1955,「一九五三年安陽大司空村發掘報告」,『考古學報』1955(9).
潘孟陶 譯 1958,「蘇聯考古學四十年-"蘇聯考古學"1957年第4期社論」,『考古通訊』1958(4).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 1959,「十年來的北京大學考古專業」,『考古』1959(10).
蘇秉琦, 1981,「建國以來中國考古學的發展」,『史學史研究』1981(4).
_____, 1989,「中國考古學-從初創到開拓-一個考古老兵的自我回顧」,『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蘇秉琦, 1995,「圓夢之路(上)」,『東南文化』1995(4).
C. B. 吉謝列夫 著, 阮西湖 譯, 1960,「C. B. 吉謝列夫通訊院士在北京所作的學術報告」,『考古』1960(2).
楊建芳, 1962,「仰韶時期已進入父系氏族社會了嗎」,『考古』1962(11).
余西雲, 2021,「歷史唯物論與中國考古學理論體系」,『中國社會科學』2021(9).
閻文儒, 1955,「談談考古學中的資產階級思想」,『考古』1955(4).
吳汝祚, 1961,「從墓葬發掘來看仰韶文化的社會性質」,『考古』1961(12).
汪寧生, 1987,「仰韶文化葬俗和社會組織的研究-對仰韶文化母系社會論及其方法論的商榷」,『文物』1987(4).
王伯洪·王仲殊, 1959a,「蘇聯考古學訪問記(一)-在物質文化史研究所」,『考古』1959(2).
_____, 1959b,「蘇聯考古學訪問記(二)-訪問蘇聯科學院民族學研究所」,『考古』1959(4).
_____, 1959c,「蘇聯考古學訪問記(三)-在花剌子模考古隊實習」,『考古』1959(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1959d,「蘇聯考古學訪問記」,『考古』1959(9).
王巍, 2009,「新中國考古六十年」,『考古』2009(9).
王巍 主編, 2021,「中國考古學百年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興, 2023,「夏鼐與中國馬克思主義史學的古史建構」,『考古學報』2023(3).
____, 2024,「夏鼐的馬克思主意考古學之路」, 中國社會科學網, Https://www.cssn.cn/skqns_qnzs/202406/t20240626-5761244.shtml.
俞偉超·張忠培, 1984,「《蘇秉琦考古學論文選集》編後記」,『蘇秉琦考古學論文選集』, 文物出版社.
尹達, 1958,「考古工作中兩條路線的鬪爭」,『考古』1958(10).
佚名, 1950,「蘇聯考古學權威吉謝列夫博士來我國講學」,『文物參考資料』1950(Z1).
張云鵬, 1957,「由湖北石家河遺址發掘方法的主要錯誤談學習蘇聯先進經驗」,『考古通訊』1957(2).
張弛, 2021,「民族與革命-百年中國考古學的研究取向」,『文物』2021(6).
張鐵弦, 1950,「我們向蘇聯歷史考古家學習什麽?」,『文物參考資料』1950(Z1).
張忠培, 1962,「關于根據半坡類型的墓葬制度探討仰韶文化社會制度問題的商榷」,『考古』1962(7).
張海, 2011,「中國考古學的歷史主義特徵與傳統」,『華夏考古』2011(4).
鄭振鐸, 1956,「考古事業的成就和今後努力的方向-考古工作會議上的報告」,『文物參考資料』1956(3).
趙賓福, 2019,「新中國考古學70年的成就與貢獻」,『河北學刊』2019(5).
朱鳳瀚,「關于中國特色考古學的幾點思考」,『歷史研究』2021(1).
陳民鎭, 2017,「奴隸社會之辯-重審中國奴隸社會階段論爭」,『歷史研究』2017(1).
陳勝前, 2015,「中國考古學的創新問題」,『南方文物』2015(2).
_____, 2019,「中國考古學研究的範式與範式變遷」,『中國社會科學』2019(2)
_____, 2021,「中國考古學的生長點: 過去, 現在與未來」,『中原文物』2021(6).
陳洪波, 2010,「20世紀中國考古學史研究述評」,『中原文物』2010(6).
_____, 2010,「中國現代考古學的學術流派及其嬗變」,『復旦學報(社會科學版)』2010(3).
沈頌金, 2003,「馬克思主義理論與中國考古學的發展」,『郭沫若學刊』2003(3).
湯惠生, 2017,「夏鼐, 蘇秉琦考古學不同取向辨析」,『中國社會科學』2017(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21,「中國馬克思主義考古學派與類型學」,『中國社會科學』2021(9).
編輯者, 1955,「蘇聯"考古學通論"教學大綱」,『考古通訊』創刊號.
夏鼐, 1952,「田野考古序論-在考古工作人員訓練班講演摘錄」,『文物參考資料』1952(4).
夏鼐, 1954,「中國考古學的現狀」,『文物參考資料』1954(1).
____, 1955,「批判考古學中的胡適派資產階級思想」,『考古』1955(3).
____, 1959,「十年來的中國考古新發掘」,『科學通報』1959(21).
____, 1962,「新中國的考古學」,『考古』1962(9).
韓建業, 2021,「中國特色考古學的主要內容」,『考古』2021(4).
許順湛, 1962,「"仰韶"時期已進入父系氏族社會」,『考古』1962(5).
洪認淸, 2018,「吉謝列夫與蘇聯考古學在中國的傳播」,『史學理論與史學史學刊』2018(2).

Pepper, S., 1987, "Education for the new order", R. MacFarquhar & J.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4, part 1, Cambridge Univ. Press.
Zhang, Liangren, 2011, "Soviet inspiration in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고고학과 마르크스주의 중국사 건설

– 소련 고고학의 수용과 중국 고고학의 지향 1949~1962 –

김정열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고고학의 지도이념이다. 샤나이가 일찍이 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고고학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기도 하다. 오사운동 이래 192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역사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1930년대 이후에는 중국 고고학의 발전에도 상당한 자극이 되었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명목적으로 중국 고고학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중국 고고학의 발전 방향과 그 내용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했다. 중국 고고학은 각종 연구기관과 교육체계의 구축, 조사 및 연구 활동 그리고 각종 논쟁을 거치면서 점차 그 학술체계와 연구모델을 구체적으로 형성해갔다. 여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주로 물질자료를 통해 고대 인류사회를 복원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여기에서 정식화된 인류사회의 발전법칙과 그 프로세스를 입증한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관점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지향과 그것이 최종 목적으로 제시한 마르크스주의적 중국사 구축 그리고 여기에서 관찰되는 특징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제어: 중국 고고학, 마르크스주의, 소련 고고학, 사회발전론, 모계사회론, 샤나이(Xianai), 키셀레프(S. V. Kiselev)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rcha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a Marxist Chinese History: The Reception of Soviet Archaeology and the Orientation of Chinese Archaeology(1949~1962)

Kim Jungryol

Marxism is the guiding ideology of Chinese archaeology. As Xianai (夏鼐, 1910-1985), a key figure in modern Chinese archaeology, once stated, Marxism is not only the hallmark of Chinese archaeology but also its defining identity. Since the May Fourth Movement, Marxism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Chinese historical academic community, starting in the 1920s. From the 1930s onward, it provided significant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archaeology. Particular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Marxism not only nominally guided Chinese archaeology but also practically shaped its developmental direction and cont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research institutions, educational systems, and the conduct o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vestigations and research activities, as well as through numerous debates, Chinese archaeology gradually developed its academic system and research models.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this process was the reconstruction of ancient human societies primarily through material evidence, guided by Marxist ideology, and the effort to validate the principles and processes of societal development formalized within this framework. From this persp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cademic orientation of Chinese archaeolog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arxist reconstruction of Chinese history as its ultimate goal, and the characteristics observed therein.

Keywords: Chinese archaeology, Marxism, Soviet archaeology,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matriarchal theory, Xianai, S. V. Kiselev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13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의 대외교류와 문화재 외교의 개황(槪況)

설재희 |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사학과 박사 수료

I. 머리말
II. 자력갱생을 통한 중국 고고학의 발전
III. 제3세계와 함께하는 국제연대: 북한, 알바니아 고고학계와의 교류
IV.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의 성과의 전시: 1970년대 문화재 외교
V. 포스트 마오 시대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해석을 둘러싼 토론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형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1930년대에 이미 중국 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고대 중국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 발전 단계가 중국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두고 활발히 토론하고 있었다.[1] 다만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중국 고고학의 '정수'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학습을 통해서였다.

건국 직후 사회의 제 분야가 소련의 선진 경험 학습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모색했듯이 중국 고고학자들은 소련 학자의 강연 내용 및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국내에 번역, 소개하며 소련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어떻게 고고학과 접목했는지 탐구했으며, 지속적인 지식, 기술 교류를 통해 고고학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켜갔다. 이러한 '선진 경험'의 학습은 중국 마르크스주의 고고학 정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했다.[2] 그러나 1950년대 말 시작된 중소(中蘇) 간 분쟁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중국 고고학계는 추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 글은 중소 분쟁 이후 급변한 국가 외교 정책에 따라 중국 고고학계가 대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4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25)로 수행된 연구임.

1 David W. Goodrich, 1981~1982, "A Marxist Perspective-In perspective," *Early China* 7, p. 38.

2 Zhang Liangren, 2011, "Soviet Inspiration in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85, no. 329, pp. 1051~10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 교류에서 어떠한 실천을 모색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고학계가 '자력갱생(自力更生)'과 '국제연대'라는, 다소 모순되게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국가적 비전에 어떻게 발 맞추어 나갔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고학계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 및 인적 자원의 독립을 도모하는 한편, 소련 이외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자 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1970년대 당-국가가 서구 자유주의 진영과 외교적 관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고고학계가 중국 문화재의 해외 순회 전시를 기획하며 핵심적인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덧붙여, 이 전시가 국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중국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정치성' 혹은 고고학과 이데올로기의 결합에 관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약 30년간 고고학의 대외교류 양상을 개괄하는 동시에, 중국 고고학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 자력갱생을 통한 중국 고고학의 발전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양자 간 노선의 차이가 드러나며 시작된 중소 간 갈등은 1959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서 소련이 인도를 지지함에 따라 본격화하였다. 1960년 이후 두 국가 간의 외교 결렬이 확실시되자, 중국 고고학계 역시 소련과의 교류를 단절해야만 했다. 양국 간 관계의 단절은 중국 고고학자들이 그동안 학습한 러시아어를 쓸모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중국 학자들이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고학에서 전문성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할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 고고학계는 10년 동안 소련으로부터의 집중적 학습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고고학 이론과 실천을 중국사 해석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이기도 했다.[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격적으로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난 중국은 이른바 '자력갱생'의 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력갱생은 중국이 외부의 지원 없이 국내 기술 및 인적 자원을 통해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건국 이전 중일 전쟁과 국공 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이 옌안(延安) 등 혁명 근거지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는 구호였다. 건국 직후 소련과의 활발한 기술 및 지식 교류 속에서 필요성을 잃고 자취를 감추었던 이 구호가 소련과의 갈등을 계기로 부활한 것이다.[4] 1959년 중국과학원 고고 연구소가 중국 최초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시행한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이 고고학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

1940년대 말 미국의 윌러드 프랭크 리비(Willard Frank Libby)가 최초로 개발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1955년 샤나이(夏鼐)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었다. 중국에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샤나이의 제안은 약 4년 뒤 물리학자 추스화(仇士華)가 1959년 고고 연구소에 합류하여 장비를 설계, 제작하면서 실현되었다. 훗날 추스화는 탄소연대측정연구실의 설립이 백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회고했다. 샤나이가 건네준 리비의 저작 『방사성탄소연대측정(*Radiocarbon dating*)』(1955)을 제외하고, 중국에서는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나 관련 부품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열악한 실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이 리비의 이론을 숙지한 후, 전기 기술, 금속 가공, 용접 등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를 가공하며 중국의 여건에서 구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해 실험을 거듭했다고 기억했다. 1962년 실험실이 대략 완성되자 시험 운행에 들어갔고 1965년까지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

3 Zhang Liangren, 2011, 위의 글, p. 1057; Zhang Liangren, 2013, "The Chinese school of archaeology," *Antiquity* 87 no. 337, p. 902.

4 자력갱생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Yang Long, 2019, "Self-reliance," in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edited by Christian Sorace, Ivan Franceschini, and Nicholas Loubere, ANU Press, pp. 231~23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가 이어진 후 이 기술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5] 이때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것이 미국의 학자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외국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과 인적 자원을 통해 외국과 동등하거나 그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중국이 추구한 자력갱생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기술 면에서의 독립 외에도 중국 고고학계는 중국의 인적 자원, 즉 대중의 역량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자력갱생의 노선을 실천하고자 했다. 예컨대, 1959년 학술지 『고고(考古)』는 1958년 대약진 이래 고고학계에 군중이 직접 고고학을 수행하는(群衆辦考古)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고 전하며 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공 중앙은 과학 사업에 대해 '토(土)'와 '양(洋)'의 방법, 즉 중국과 외국의 기술 및 자원을 병용하고 군중 운동과 전문 연구기관의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대중과 전문가가 각각 하나의 축이 되어 "두 다리"로 걸을 때 비로소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7] 『고고』는 중국 고고학계가 이 방침에 따라 1958년 이후 각지 군중에게 고고학 지식 및 기술을 보급하고 단기 훈련반을 조직하여 발굴 작업에 투입해 왔으며, 이러한 대중 참여가 고고 발굴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적었다.

예를 들어 후난(湖南)성 샹샹(湘鄉)현에서는 소학교 교사로 구성된 발굴 소조가 후난성 문물대(文物隊)에서 파견된 간부의 지도 아래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

5 仇士華, 張雪蓮, 2008, 「中國碳十四年代學的始創者——仇士華先生訪談錄」, 『南方文物』 4.

6 마오시대 담론에서 '토(土)'가 토종인, 중국적인, 지역적인, 군중의 것을 가리켰다면 '양(洋)'은 외국의, 서양의, 전문적인, 엘리트계층의 것들을 상징했다. 토와 양의 이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Sigrid Schmalzer, 2016,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4~38.

7 과학은 "두 다리로 걷는다"는 마오시대 과학의 비전은 이후 1970년대 중국을 방문한 급진적인 미국인 학자 그룹, 민중을 위한 과학(Science for the People)에 의해서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Science for the People, 1974, *China: Science Walks on Two Legs*, New York, NY: Avon Book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안 야외 발굴, 사진 촬영, 측량 기술, 기물 식별 및 연대 추정에 관한 지식을 배운 후 실질적인 발굴 작업에 투입되었다. 허난(河南)성 등지에서는 발굴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대중이 동원되기도 했다. 작업에 참여한 인원들은 대학생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학생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이전에 고고 발굴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는 이러한 단기간의 학습과 실천이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과거 후난성 문물대가 1957년에 200여 개 무덤에서 나온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1년 이상을 소비했다면, 대중의 힘을 입은 1958년에는 4~5개월간 2,800여 개의 무덤에서 발견된 50만 자가 넘는 자료들의 정리를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고』는 형식주의에 얽매여 글을 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문가들과 달리 군중들이 "과감히 틀을 깨고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이 같은 활동들이 단순히 작업의 효율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전문가 노선(專家路線)"에 반대하고 군중과 함께 일하는 "군중노선(群衆路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8] 이러한 서술은 당시 중국 고고학계가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 면에서도 군중 노선을 따르며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주의를 거부하고 군중의 역량을 동원하고자 했던 이 새로운 고고학을 '군중 고고학(群衆考古學, mass archaeolog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군중 고고학은 정치적 이상뿐만 아니라 전문 고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늘어난 발굴 작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 필요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했다. 1952년 이래 1차 5개년 계획의 진행에 이어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건설 사업을 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구제 발굴의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를 감당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9년 안후이성에서 실시된 단기훈련반 공작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9]

---

8 牛兆勛, 1959, 「認真貫徹考古工作中的群衆路線」, 『考古』 1, 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금 우리는 고고 공작 인원이 적어, 전문 고고 대오가 작년 시작된 공업과 농업의 약진 형세에서 비롯된 많은 업무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안휘성의 경우 수로망 건설 시에 토목공사를 한 것이 전체 성 면적의 20%를 차지했으며, 흙을 파낸 것이 40여 억 토방(土方, ㎥)에 달했다. 다른 성에서도 임박한 사업이 많고 문물, 고고 간부 부족이라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단기 훈련반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1958년 고고학계의 단기 훈련반 운영 경험은 이후 문화대혁명 도중 '농업은 다자이를 배운다(農業學大寨)' 운동의 여파로 전국 규모의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역공역농(亦工亦農)' 고고 훈련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농업과 공업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업무 외(業余) 시간을 활용해 고고 작업에 참여한다는 의미였다. 이 훈련반은 문물, 고고 종사자들에 의해 1970년대 말까지 그 필요가 주장되었다. 예를 들어 허베이(河北)성 문물관리처와 지린(吉林) 대학교 고고학 전공은 1976년 봄,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역공역농' 고고 훈련반을 운영했으며, 이때 사용한 교재 『공농고고기초지식(工農考古基礎知識)』은 1978년 중앙 문물, 고고 단위 및 북경대학 고고학 전공 등의 협조를 통해 출판되었다.[10] 이러한 사실은 고고 단기 훈련반이 1950년대 말 중공 지도부가 강조한 '자력갱생'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었지만, 군중 고고학이 오직 정치적 이상에 따라서만 유지된 것이 아닌, 실용적 필요에 의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11]

---

9 盈, 民, 1959, 「參加安徽省六安, 阜陽兩專區文物訓練班工作後記」, 『考古』 2, 105쪽.

10 吉林大學歷史係考古專業, 河北省文物管理處 編, 1978, 『工農考古基礎知識』, 文物出版社.

11 설재희, 2020,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화재(文物) 보호: 1970년대 전시, 담론, 대중 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72쪽; Chang K. C. 1977, "Chinese Archaeology since 194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6, no.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제3세계와 함께하는 국제연대: 북한, 알바니아 고고학계와의 교류

1960년 소련과의 단절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던 중국 고고학의 대외교류는 1962년 북한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공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며 재개되었다. 이 사업은 학술, 외교 면에서 양국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고고학계는 고조선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소련 역사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으며, 1961년부터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고고학계는 중국 고고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고조선의 존재를 실증함으로써 고대 한국사의 자주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소련과 단절 이후 다른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국 측에도 이 협력은 유리한 기회로 보였다. 기존 미진하던 동북 지역의 연구를 보강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13]

양국의 공동 발굴 작업은 북한이 소련과 분쟁 중이던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196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국은 몇 차례의 담화를 거친 후 조중고고발굴대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1963년부터 196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전조사 및 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지적하듯, 조중고고발굴대는 고조선의 존재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중단되었다. 북한 측은 발굴 결과에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명기하고자 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신석기, 청동기와 같은 전통적 편년체계를 고집한 것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는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외국과 공동 발굴을 진행한 사례

12 조호연, 2021,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7호, 362쪽.

13 강인욱, 2023,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와 북한-중국의 고조선 역사 갈등-『안지민 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9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남았다.[14]

북한과의 공동 발굴이 성공적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고고학계의 대외교류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알바니아 고고학계와의 교류를 도모한 것이 하나의 예시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당시 알바니아는 외교적으로 소련에 반대하고 친중 노선을 펼친 사회주의 우방 국가 중 하나로 중국에 그 중요성이 컸다.[15] 1962년 『고고』는 알바니아 티라나 국립대학 소속의 고고학자 셀림 이슬라미(Selim Islami)가 작성한 「알바니아 고고 발굴의 최신 성과」라는 글을 번역, 소개했으며,[16] 이듬해인 1962년 11월에는 고고학자 안즈민(安志敏)이 중국 과학원 대표단의 한 명으로 알바니아 티라나 국립 대학의 초청을 받아 알바니아를 직접 방문한 후 『고고』에 방문기를 기고했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알바니아학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회의에서는 고대 일리리아 문화에 관한 세 편의 고고학 논문이 발표되었고, 알바니아 고고학의 발전 과정, 연구 성과, 향후 임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17] 1965년에는 티라나 대학 소속으로 중국 고고학을 전공했던 무자페르 코르쿠티(Muzafer Korkuti)의 「알바니아 고고학의 신발견과 그 연구」 중문 번역본이 『고고』에 번역, 게재되었다.[18]

이 시기 중국에 소개된 알바니아 고고학의 성과들은 모두 알바니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의 새로운 발견과 경향에 대한 것들이었다. 안즈

14 강인욱, 2023, 위의 글, 407쪽.

15 Alba Kreka and Selim Bezeraj, 2022, "From Communist Allies to Pragmatics Partners: A Historical View of Albanian–Chinese Relations,"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8, no. 3, pp. 307~323.

16 S. 伊斯拉米, 1962, 「阿爾巴尼亞考古發掘的最新成果」, 『考古』 1.

17 安志敏, 1963, 「阿爾巴尼亞考古學的現狀–參加阿爾巴尼亞學會議紀要」, 『考古』 4. 이 밖에도 이들은 알바니아 독립 50주년 및 해방 8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하고, 각지의 명승고적, 박물관, 학교, 공장 등을 참관했으며, 고대 그리스–로마 시기의 아폴로니아 유적을 방문했다.

18 M.克爾庫蒂, 1965, 「阿爾巴尼亞考古新發現及其研究」, 『考古』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은 알바니아 방문 이후 『고고』에 투고한 글에서, '해방' 이전 알바니아 고고학 연구는 대부분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후 비로소 제국주의 학문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내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바니아의 새로운 고고학 연구가 주로 알바니아 민족의 뿌리로 여겨지는 일리리아 문화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19] 이는 사회주의 중국이 1949년 '해방' 이전 중국의 고고학 연구가 주로 외국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비판하며 민족 기원을 찾는 연구에 매진했던 것과 유사했다. 다만, 『고고』를 비롯한 중국 측의 자료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암시할 뿐, 과거 소련과 교류할 때와 같이 양국 간 유의미한 기술, 이론, 혹은 실천 측면에서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20]

1960년대 중국이 해외 고고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 교류한 것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중공의 '자력갱생'이라는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당시 중국은 정확히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하는' 자력갱생의 방침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21] 소련과 결별 이후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던 중국은 제3세계의 리더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지식, 기술을 교류하고, 그를 통해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싸움으로써 냉전 질서에서 함께 생존하기를 꾀했다.[22]

---

19 安志敏, 1963, 앞의 글, 174쪽.

20 1970년대 초 중국과학원 고고학 연구소가 알바니아의 양피지 서적 복원 사업을 도운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양자 간 유일한 교류의 사례이다. 王巍, 2021, 「中國考古學國際化的歷程與展望」, 『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 第四卷(上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샤나이는 1970~1971년 일기에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夏鼐, 2011, 『夏鼐日记 第七』,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1 Sigrid Schmalzer, 2019, "Breeding New Knowledge at Home: The Case of the Albanian Olive Friendship Tree in China," *Chinese Annal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no. 2, p. 199.

22 중국이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이던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자들을 파견한 것은 그러한 국제 연대 사례의 하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60년대 중국 고고학계의 대외적 행보는 이러한 당시 외교, 지식, 기술 교류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역사학자 시그리드 슈말저(Sigrid Schmalzer)가 1960년대 중국-알바니아 간 농업 지식 교류의 사례를 통해 지적했듯, 그러한 지식과 기술의 교류가 늘 순탄하게 진행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64년 알바니아는 중국에 대한 우호의 표시로 자국의 올리브 나무 1만 그루를 선물하고 재배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들을 중국에 파견한 바 있다. 중국의 항구에 도착한 올리브 나무들은 중국의 과학자, 기술자, 농부들에 의해 1975년까지 중국 13개 성에 걸쳐 널리 심어 가꾸어지며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널리 홍보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중국이 적용한 기술은 중국에 이미 익숙한 것이었으며, 알바니아 기술자들에게서 전해 받은 것은 아니었다. 알바니아 학자들이 중국에 도착하여 지식 및 기술을 주고받은 기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결국 그러한 교류가 의미 있게 쓰이지 못했던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둘러싼 이 사례는 정치적 목적이 선행된 대외 교류가 종종 명목상에 그치며 유의미한 지식 교류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23]

마찬가지로, 1960년대 북한, 알바니아와의 고고 교류는 중국 내부의 지정학적 이해와 관심에 따라 종종 그 향방이 좌우되곤 했던 지식 교류의 굴절을 잘 보여준다. 조중고고발굴대라는 구상이 초기에 중국 측에 긍정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공동 작업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중국 동북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으며, 사업이 3년 만에 종결된 것은 중국이 북한과 끝내 역사적 해석의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알바니아와의 교류가 양국 간 우호를 확인하고 학술 성과를 공유하는 것 외에, 북한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협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역시, 이 교류가 중국 고고학계에 직접적인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중국 고고

로 널리 알려져 있다. Jamie Monson, 2009, *Africa's Freedom Railway: How a Chinese Development Project Changed Lives and Livelihoods in Tanzani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3 Sigrid Schmalzer, 2019, 앞의 글, p. 2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계는 국가의 외교 노선에 따라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통한 마르크스 고고학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결국 내부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의 성과의 전시: 1970년대 문화재 외교

문화대혁명 초기(1966~1969)의 혼란이 줄어든 시점이던 1970년 초, 중국은 외교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71년 소위 '핑퐁 외교'로 시작된 미국과의 긴장 약화를 시작으로 비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교류하며 외교의 범위를 넓혀갔던 것이다. 문화대혁명 중의 혼란 속에서도 더디지만 발굴을 이어갔던 중국 고고학계는 이 새로운 국면 속에서 두 가지 대형 문화재 전시를 선보이며 국가 외교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71년 7월 1일, 문화대혁명 동안 닫혀 있던 북경 자금성 고궁박물관에서 대형 전시 〈문화대혁명 기간 출토 문물 전람〉이 개최되었다. 약 세 달 전, 북경을 방문한 미국 탁구 선수 및 관계자가 자금성을 방문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전시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외에는 문화대혁명 동안 "자금성이 불탔다"는 등 다소 과장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자금성을 개방하고 문화대혁명 기간 발굴된 문화재를 전시함으로써 그러한 소문을 바로잡고, 문화대혁명 동안 고고 발굴 및 문화재 보호 사업이 지속되었음을 국내외에 선전하고자 했다.[24] 이 전시는 고위 간부, 학계,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다양한 관객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국가 원수 및 정계 인사들과의 외교에서 주요한 무대로 쓰였다.

24 國家文物局 編, 1997, 「在籌備出國文物展覽工作人員會上的講話(1971-12-4)」, 『王冶秋文博文集』, 文物出版社, 12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시를 방문한 일본과 프랑스의 인사들은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특별히 자국에서의 전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해외 순방을 위한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 1971년 7월 24일, 저우언라이의 적극적 지시하에 국외 전시를 위한 준비조가 성립되었다. 고고학자 샤나이, 왕중슈(王仲殊)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전시의 범위를 확장하여 1949년 건국 이래 고고학계의 주요 발굴 성과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전시 〈중화인민공화국 출토 문물전람〉을 기획했다. 이는 1973년 이래 프랑스, 일본을 시작으로 이후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스웨덴, 멕시코,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이어 선보였고, 1978년 홍콩에서의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25] 문화대혁명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이 세계에 문을 연 데 대한 호기심에 더해 각국 정부의 전시 지원 및 홍보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 전시는 여러 국가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영국의 경우 일평균 7,000~8,000명, 많게는 1만 명이 전시를 방문하였고, 보다 많은 관람객 수용을 위해 야간 개장이 제안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은 워싱턴, 캔자스 전시였지만 추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샌프란시스코 전시가 추가되었다.[26]

이때의 전시는 건국 이후 중국의 발굴 성과를 비공산권 국가들에 선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했지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중국 고고학의 이론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매번 전시에 앞서 중국 측에서는 서문, 사진, 지도, 연표 등 전시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전시 개최국에서 자료들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27] 이때 중국에서 제공한 자료들은 중국 고대사를 '원시사회-노예사회-봉

25 두 전시의 구체적 내용, 일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설재희, 2020, 앞의 글.

26 설재희, 2020, 위의 글, 31~36쪽.

27 U.S. Treaties and Agreements Library Database, 1975, "TIAS 8154 People's Republic of China, Exhibition of archeological finds"(1974-10-28~1975-4-15), *United State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Volum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건사회' 등으로 구분한, 마르크스주의 역사철학에 입각한 시대구분 및 해설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다.[28] 다만, 이러한 역사 해석 및 시대 구분이 많은 국가에 익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그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긴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예로, 1974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토 문물 전람〉이 개최되었을 때, 전시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카탈로그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중국 고대 미술사 전문가인 런던대학의 윌리엄 왓슨(William Watson)이 작성한 공식 카탈로그에 더해, 중국 측에서 별도로 배포한 『공식적이고 확실한 소개 및 카탈로그(*Official and Authentic Introduction and Catalogue*)』라는 부제를 가진 자료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큐레이터 마틴 러너(Martin Lerner)는 이 보조 자료가 몇몇 전시품에 대한 "대안적 해석" 및 "서양의 일부 중국 애호가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연표를 제공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새로운 용어들(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등)이 공식 카탈로그에 포함되길 원했지만 (공식 카탈로그의) 저자가 그것을 반대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29]

한편, 러너를 비롯해 전시를 관람한 일부 평론가들은 이 전시가 내용 외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정치성을 가졌다고도 지적했다. 러너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전시 비평에서 이것이 "인상적이지만 강한 선전성(propagandistic)을 띠는" 전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기억에 남는 그 어떤 전시도 이처럼 '선전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만한 것이 없었다. 중국은 이 전시를 중국에 호의적인 (혹은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들에게 수여하는 외교적 보상으로 간주했다. … 이 전시가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면, 이는 우리[미국]

---

26 (Part 2), p. 2135.

28 Robert Fornara, 1976, "Ideology and Archaeology in Chin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1, no. 20, pp. 743~745.

29 Martin Lerner, 1974, "An Impressive but 'Propagandistic' Show of Chinese Art," *New York Times*, 1974-8-25; 설재희, 2020, 앞의 글, 34~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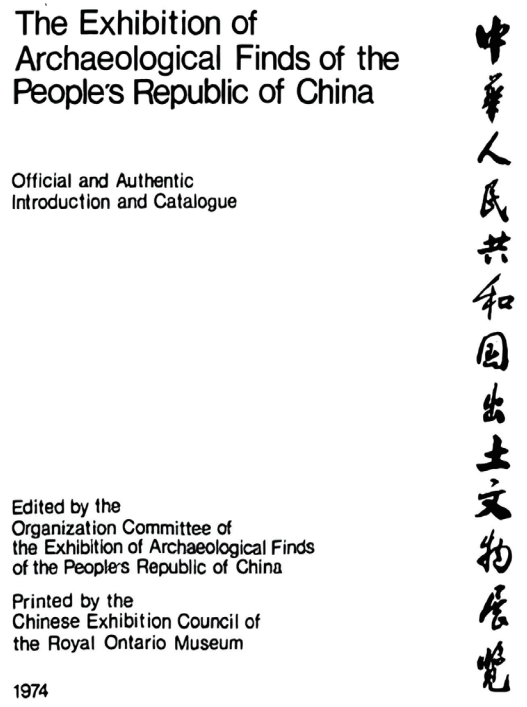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측 전시 기획위원회가 토론토 전시에서 배포한 『공식적이고 확실한 소개 및 카탈로그(*Official and Authentic Introduction and Catalogue*)』

와의 긴장 완화에 대한 보상의 하나로 여겨질 것"이라고 적었다.[30] 같은 해 겨울, 미국 워싱턴에 전시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어 전시의 공개를 막 앞두고 있던 시점, 『뉴욕 타임스』의 또 다른 기사는 외교와 관련해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언론 시사회 행사를 앞두고 대만, 남한,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언론의 참가를 금지했던 것이다. 기사는 과거 소련조차 몇 차례의 전시를 개최하면서 언론 시사회 행사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고

30 Martin Lerner, 1974, 위의 글, p.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할 때 중국의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31] 이러한 서술들은 중국 고고학계가 1949년 이래 고고학의 성과인 발굴 문화재를 전시함으로써 국외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용어의 수용에서는 종종 한계에 부딪혔으며, 더불어 정치적 목적으로 전시를 도구 삼았다는, 강한 선전성과 정치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전시는 중국 고고학이 내포한 정치성을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컨대 인류학자 로버트 포나로(Robert J. Fornaro)는 1976년 「중국에서의 이데올로기와 고고학」이라는 글에서, 1974년과 1975년에 수천 명의 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토 문물 전람〉을 관람하고 몇 가지 전시품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정작 "전시를 관람한 미국인 중 중국 고고학의 정치적 성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적었다.[32]

그는 중국의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고고학이 기존 제국 질서의 엘리트 중심 역사에서 벗어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민중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데 목표를 둔 혁명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엘리트 계층의 지식 독점을 견제하고 "군중들이 그들 스스로를 문화와 과학에 통달하게 만드는 것"이었기에 중국 고고학이 많은 노동자 및 군인의 기여를 특별히 강조해왔다고도 설명했다. 1949년 이래 중국의 고고학에 대한 인식과 군중 고고학에 대한 강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다. 전시를 향한 서구의 많은 비판을 의식하듯, 그는 순방 전시를 통해 중국 고고학이 서구 세계에 문을 연 이 순간 서구 고고학자들이 중국 고고학이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겨우 열린 문이 다시 닫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연구하는 고고학, 인류학

31 Bernard Gwertzman, 1974, "U.S. Gallery Drops Preview Over Demand by China", *New York Times*, 1974-12-11, p. 1, p. 5.

32 Robert J. Fornaro, 1976, "Ideology and Archaeology in Chin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1, no. 20, p. 7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들은 응당 중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 유의하면서도 중국이 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체적 관념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관점을 취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33]

V. 포스트 마오 시대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해석을 둘러싼 토론

마르크스주의 중국 고고학의 수용 및 해석을 둘러싼 국외의 논쟁은 포스트 마오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1979년 중국에서 출간된 『상주 고고(商周考古)』를 둘러싼 토론은 그러한 반응을 잘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이 책은 본래 1979년 북경대학의 저우헝(邹衡)이 학내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1949년 이래 축적된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성과를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었다. 1981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중국 고대 예술사와 고고학을 가르치던 로버트 소프(Robert Thorp)는 학술지 『고대 중국(*Early China*)』에 『상주 고고』에 대한 서평을 기고하면서, 이 책에 실린 방대한 데이터와 인용 면에서 훗날을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데이터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교리에 맞게 억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심을 표명했다.

예컨대 그는 『상주 고고』가 하(夏), 상(商), 주(周)를 원시사회와 봉건사회 사이의 중간 단계인 노예사회로 해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넘어서는 주제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상주 고고』가 하남성 이리두(二里頭) 유적에서 발견된 무덤 중 트렌치의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부장품이 없는 것들을 노예의 무덤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노예사회의 증거라고 주장하였다면, 소프는 그러한 무덤들이 극심한

33 Robert J. Fornaro, 1976, 위의 글, p. 74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난, 전쟁, 질병 등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노예/노예주의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덤일 수 있다고 보았다. 『상주 고고』가 가진 근거의 빈약함과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경도된 서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34] 그는 "만약 중국의 학자들이 이 책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분류를 계속 적용한다면, '우리'의 고대 중국(early China)과 '그들'의 고대 중국 사이의 간극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의 말을 덧붙였다.[35]

소프가 글을 실은 다음 호 『고대 중국』에 그의 서평에 대한 비평이 실렸다. 비평문을 작성한 데이비드 굿리치(David. W. Goodrich)는 소프가 우려한 중국-비중국 학자 간 발생할 '간극'에 관해 자신은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인식론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에 따른 분류법을 그만둘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변화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인과 비중국인 학자들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36]

그는 1979년 북경대학에서 저우헝과 리보첸(李伯謙)에게서 『상주 고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직접 수강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수업과 책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고대 중국의 재현이 자신이 이전에 미국에서 받아온 고고학 훈련과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서양의 고고학자들과 추형의 방식 사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양자 모두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둘째, 서양 고고학의 진화론은 1930년대 이래 고든 차일드(Gordon Childe)의 작업에 영향을 받아오면서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심지어는 소련 고고학)에 영감을 받아왔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는 "중국인과

34 Robert Thorp, 1980~1981, "The Chinese Bronze Age from a Marxist perspective," *Early China*, 6, p. 98.

35 Robert Thorp, 1980~1981, 위의 글, p. 102.

36 Goodrich, 1981~1982, 앞의 글, p. 3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중국인 학자들 사이의 이해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고고학이 서구 고고학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었다.[37]

굿리치의 시각에서 소프의 서평은 『상주 고고』가 가진 정치적 함축성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글을 오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는 중국 고고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학자들이 연구를 위한 유연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추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발견할수록 이전까지 확실한 근거가 없어 이론이 대체해온 자리를 메꾸면서 이론과 실증 사이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글의 말미에서 그는 중국인과 비중국인 학자들 사이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자 간의 소통을 방해할 정도의 '간극'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한 간극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학자들에게 있을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글을 끝맺었다.[38]

> 프룸킨(Grégoire Frumkin)이 소련 고고학을 비판하며 이야기했듯, '많은 서양의 고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비판을 늘어놓지만 아마 겨우 몇 사람만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이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서양의 중국학자들이 더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마르크스주의 용어가 (고대 중국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가로막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은 '정치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39] 그러한 비판은 비단 외국의 학

---

37 Goodrich, 1981~1982, 위의 글, p. 38; 고든 차일드의 연구와 그의 사회주의적 이상에 대해서는 박해운, 2018, 「고든 차일드, 한 사회주의 고고학자의 탄생」, 『사림』 64호 참조.

38 Goodrich, 1981~1982, 앞의 글, p. 42.

39 박성우, 2013,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고고학-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들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 시기 고초를 겪은 많은 중국 학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40] 고고학에 내포한 정치성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타당한 지적일 수 있으나, 비판 일변도의 논조는 자칫 중국 고고학이 기반으로 삼아온 본질에 대한 이해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중국에서 고고학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1976년 로버트 포나로가 중국 고고학을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 1982년의 굿리치는 서양의 고고학이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고고학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미 학계와 중국 학계 사이의 차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모두 중국 고고학의 성과와 해석을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글이었다. 1970년대의 문화재 외교 이후 중국 고고학이 서구 고고학계와 처음으로 직접 조우하던 그 순간 등장한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을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들의 제언은 지금도 유효하며, 중국 고고학에 대한 지금 우리의 인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Ⅵ.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고고학계의 대외 교류 양상을 추적하고 그 속에서 고고학계가 수행한 역할과 그를 둘러싼 해외의 반응 및 담론을 분석했다. 건국 이후 대륙에 남은 고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중국 고고학을 새로 정립하고자 했으며, 이 방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1950년대 소련 고고학계와의 교류였다. 중국 고고학자들은 소련으로부터의 적

『사림』 44호.

40 Tao Wang, 2011, "Public Archaeology in China: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New Perspectives in Global Public Archaeology*, edited by Katuyuki Okamura and Akira Matsuda, New York: Springer, p. 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극적인 배움을 통해 소위 신중국 고고학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1950년대 말 중소 간의 분열로 소련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들은 1960년대 자력갱생과 대외교류라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했다. 전자는 소련과의 단절 이후 중국공산당이 크게 강조했던 구호인 자력갱생의 일환으로서 중국 인민의 역량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군중을 위한, 그리고 군중에 의한 역사서술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적극 실천하는 방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1952년에 시작된 1차 5개년 계획과 이후 대약진 운동에서 비롯된 전국의 수많은 건설 사업으로 시급했던 구제 발굴의 현장에 인민을 동원, 투입함으로써 고고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이었다. 동시에 중국 고고학계는 북한, 알바니아 등 사회주의 진영 국가의 고고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종종 중국 내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며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비단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반의 학술활동을 위축시켰지만 고고 발굴 및 연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문화대혁명 도중에도 중국 전역에서 문화재 발굴 사업이 더디지만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발굴 성과들은 1971년 〈문화대혁명 기간 출토 문물 전람〉이라는 제목의 전시로 만들어져 자금성 고궁박물관에서 선보였다. 이 전시는 자금성이 불에 탔다는 등 문화대혁명 초기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에 관한 해외의 여러 소문을 잠식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로부터 순방 전시에 대한 요구를 자아냈다. 이후 1949년 이후의 발굴 성과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출토 문물 전람〉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1973년부터 1976년까지 14개국을 순방했다. 이 전시는 중국이 비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외교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무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9년 이래 중국 고고학의 성과 및 방법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국외의 일부 관찰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용어 및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상호 이해를 다짐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吉林大學歷史係考古專業, 河北省文物管理處 編, 1978, 『工農考古基礎知識』, 文物出版社.

王巍, 2021, 『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夏鼐, 2011, 『夏鼐日记 第七』, 华东师范大学出版社.

Monson, Jamie, 2009, *Africa's Freedom Railway: How a Chinese Development Project Changed Lives and Livelihoods in Tanzani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Schmalzer, Sigrid, 2016,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ience for the People, 1974, *China: Science Walks on Two Legs*, New York, NY: Avon Books.

논문

강인욱, 2023,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와 북한-중국의 고조선 역사 갈등-『안지민 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9호.

박성우, 2013,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고고학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림』 44호.

박해운, 2018, 「고든 차일드, 한 사회주의 고고학자의 탄생」, 『사림』 64호.

설재희, 2020,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화재(文物) 보호: 1970년대 전시, 담론, 대중 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호연, 2021,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7호.

仇士華·張雪蓮, 2008, 「中國碳十四年代學的始創者-仇士華先生訪談錄」, 『南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文物』4.
國家文物局 編, 1997,「在籌備出國文物展覽工作人員會上的講話(1971-12-4)」,『王冶秋文博文集』, 文物出版社.
安志敏, 1963,「阿爾巴尼亞考古學的現狀-參加阿爾巴尼亞學會議紀要」,『考古』4.
M.克爾庫蒂, 1965,「阿爾巴尼亞考古新發現及其研究」,『考古』10.
S. 伊斯拉米, 1962,「阿爾巴尼亞考古發掘的最新成果」,『考古』1.
牛兆勛, 1959,「認真貫徹考古工作中的群衆路線」,『考古』1.
盈, 民, 1959,「參加安徽省六安, 阜陽兩專區文物訓練班工作後記」,『考古』2.

Chang, K. C., 1977, "Chinese Archaeology since 194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6, no. 4.
Fornara, Robert J., 1976, "Ideology and Archaeology in Chin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1, no. 20.
Goodrich, David W., 1981~1982, "A Marxist Perspective-In perspective," *Early China,* 7.
Gwertzman, Bernard, 1974, "U.S. Gallery Drops Preview Over Demand by China," *New York Times*, 1974-12-11.
Kreka, Alba and Selim, Bezeraj, 2022, "From Communist Allies to Pragmatics Partners: A Historical View of Albanian-Chinese Relations,"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8, no. 3.
Lerner, Martin, 1974, "An Impressive but 'Propagandistic' Show of Chinese Art," *New York Times*, 1974-8-25.
Russell, John, 1974, "Beauty Fills the 'Chinese Exhibition' in Toronto," *New York Times*, 1974-8-9.
Schmalzer, Sigrid, 2019, "Breeding New Knowledge at Home: The Case of the Albanian Olive Friendship Tree in China," *Chinese Annal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no. 2.
Thorp, Robert, 1980~1981, "The Chinese Bronze Age from a Marxist perspective." *Early China,* 6.
U.S. Treaties and Agreements Library Database, 1975, "TIAS 8154 Peopl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public of China, Exhibition of archeological finds" (1974-10-28~1975-4-15), *United State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Volume 26 (Part 2).

Wang, Tao, 2011, "Public Archaeology in China: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New Perspectives in Global Public Archaeology*, edited by Katuyuki Okamura and Akira Matsuda, New York: Springer, p. 50.

Yang, Long, 2019, "Self-reliance," in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edited by Christian Sorace, Ivan Franceschini, and Nicholas Loubere, ANU Press.

Zhang, Liangren, 2011, "Soviet Inspiration in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85, no. 329.

_____, 2013, "The Chinese school of archaeology," *Antiquity,* 87, no. 3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의 대외교류와 문화재 외교의 개황(概況)

설재희

이 글에서는 1949년 건국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계의 대외 교류와 문화재 외교의 측면을 살펴본다. 건국 직후, 중국은 소련과의 긴밀한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고고학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시작된 중소 갈등으로 중국은 새로운 외교적 국면을 맞이했으며, 고고학계도 따라서 변화를 추구해야 했다. 소련과의 갈등 이후 중국 고고학계는 당-국가가 강조한 '자력갱생'의 기조에 따라 국내 인적 및 기술 자원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고, 한편으로는 대중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군중 고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제3세계 국가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당-국가의 외교 방침에 발맞추어 북한, 알바니아 고고학계와 긴밀히 협력, 교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국가 내부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경우 종종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곤 했다.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 국내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고고학계는 더디게 국내 발굴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때의 발굴 성과는 이후 1970년대 두 차례의 대형 문화재 전시를 통해 국내외에 선보였다. 이들 전시는 1970년대 미국과의 긴장 완화 이후 새로 형성된 외교적 국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30년간 발전시켜 온 중국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의 성과와 이론을 비사회주의 진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시 및 학술 교류를 통해 중국 고고학의 대외 교류의 지평이 넓어지는 이 과정에서 중국 고고학이 내포한 강한 정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부에게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주제어: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 마르크스주의 고고학, 자력갱생, 국제연대, 문화재 외교, 전시, 대중 고고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Foreign Relations and Relic Diplomacy in the Archae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ol Jaehee

This study explores the foreign relations and relic diplomacy of archae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fter its establishment, the PRC developed archaeological theories and practices rooted in Marxism through close exchanges with Soviet experts. However, with growing tensions with the Soviet Union, the PRC entered a new phase of diplomacy, and Chinese archaeology had to adapt accordingly. Following the Sino-Soviet split, Chinese archaeologists focused on developing domestic human and technical resources, in line with the party-state's emphasis on "self-reliance." This also included the promotion of "mass archaeology," which encouraged public participation in archaeological practices. Furthermore, in alignment with its solidarity with the Third World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as directed by the party-state, China's archaeologists worked closely with their North Korean and Albani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unterparts. However, this solidarity often failed to yiel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nflicted with the nation's internal interests. Despite the political turmoil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76), archaeological activities continued, albeit at a slower pace. The archaeological findings from this period were later showcased through two major exhibitions in the 1970s. These exhibitions not on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hina's new diplomacy with non-socialist countries, which began with the US-China détente in the early 1970s, but also presented the Marxist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nd theories of the PRC to the outside world. While these exhibitions and knowledge exchanges often attracted criticism for the political nature of Chinese archaeology, they also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mutual understanding among foreign observers.

Keywords: PRC archaeology, Marxist archaeology, self-reliance, international solidarity, relic diplomacy, exhibit, public archaeology, and community archaeolog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7.014

이념적 의례 속 현실적 교섭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김창수,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손성욱 | 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조공책봉관계'의 실제적 '전형성'
II. 책의 구성과 내용
III. 이념과 현실 사이의 '사신외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조공책봉관계'의 실제적 '전형성'

조선은 청이 최초로 '조공책봉관계'를 맺은 나라이자, 가장 '공순한' 조공국이었다. 조공국 중 유일하게 매년 청에 정기 사행을 보냈으며, 별사를 가장 자주 파견했다. 사행은 곧 의례의 실천을 통한 천하질서의 구현이자, 천자에 대한 신하로서의 복종을 의미했다. 이렇게 보면 조선은 가장 전형적인 조공국이었다. 그러나 그 '전형'은 조공국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조선은 청 중심의 세계질서에 가장 잘 포섭된 국가였지만, 그 관계는 전쟁을 통해 수립되었다. 조선에게 청은 자신들이 경시하던 오랑캐이자, 재조지은이 있는 명을 멸망시킨 원수였다. 조선은 청이 강요한 의례를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중원에서 중화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명을 계승한 소중화라고 여겼다. 그러나 안위와 국익을 위해 청의 예제적 질서 안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피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대청 사대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조공국의 '전형'이 되었다.

그 '전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전형'은 조공국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본보기가 될 수는 없다. 조선·청 관계에서 드러나는 조선의 '공순함'은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조공국도 조선과 같이 청에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지 않았으며, 그 정도의 차이가 현저했다. 하지만 청이 조선을 '공순하다'고 표현했듯 그것은 이상적 모델로서 이념적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조공책봉관계'를 지탱하는 천하관념이 강조되면, 국익을 두고 양국 간 존재했던 현안에 대한 실제적 교섭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예제적 설명으로 역사상을 왜곡하게 된다.

김창수의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는 조선·청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조선의 '전형성' 문제에서 출발하여 조선 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추적한다. 그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기존 조공책봉관계의 핵심 지표라고 여겨졌던 요소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청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본 연구의 과제이다. 조선이 청 중심의 의례 절차를 준수하고 정례적으로 사신을 파견했다는 점을 보면 양국 관계는 '전형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어떠한 관계도 고정된 제도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다.** 대외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제도에 없는 조치를 취했거나 혹은 제도를 변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논리적일 것이다.(16쪽, 강조 평자 표시)

청에 정례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조공책봉관계'의 예제적 구현이다. 하지만 예제적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선은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했다. 이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드러난다는 점에서 '교섭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지니며, '전형성'을 드러내는 '의례라고 하는 특수성'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조선의 대청 '외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본서가 주목하는 '보편성'은 일반적으로 '개항'으로 구분되는 조선 대외관계에 대한 전근대와 근대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는 병자호란부터 청일전쟁으로 인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이 개항하고 청과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의 변통이 일어났지만, 완전히 와해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은 1894년까지 조공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급변하는 근대 전환기에 전통적 요소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전근대와 근대를 단절적으로 바라보며 조청 관계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본서는 양국 간 책봉-조공 관계의 수립부터 종말까지 조선이 청에 파견한 '사신'에 주목하며, 양국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본서에서 강조하는 '사신'은 단순히 청의 의례적 요구를 수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 조선은 '조공책봉관계'라는 제도적 틀을 준수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교섭에 나섰다. 저자는 이를 '사신외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사신이 수행한 외교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정기 사행과 별사, 사신과 재자관의 역할 분화, 그리고 공식 의례와 비공식 교섭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전근대와 근대를 관통하는 조선·청 관계의 역사적 실상을 조망한다.

저자가 조선·청 관계의 역사상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통시적 접근 및 조선 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서의 학술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책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조선·청 관계를 '조공책봉관계' 수립부터 와해까지 장기적 맥락에서 의례와 교섭이라는 두 축의 지속과 변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이 청의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 조공국이 아니라, '사신외교'를 통해 능동성과 자율성을 지녔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

1장 '사신외교'의 구조

1. 사신 파견의 동인
2. 외교 사안의 전달
3. 교섭 활동

2장 17~18세기 조선 사신의 교섭 활동

1. 병자호란 이후 제한된 교섭 통로
2. 17세기 후반 다양한 교섭 통로의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18세기 안정된 교섭 통로의 확보
3장 18세기 후반 새로운 외교 관행의 창출
1. 정조의 즉위와 조선·청 관계
2. '진하외교'의 전개
3. '진하외교'의 성과
4장 18세기 후반 외교 의례의 확장과 교류 기반의 형성
1. '문금(門禁)'과 사신의 제한적 교류
2. 외교 의례의 관행과 변화
3. 새로운 교류 공간과 사신의 활동
5장 19세기 전반 사신 파견의 감소
1. '진하외교'의 지속과 퇴색
2. 진주사의 파견과 활동
3. 별재자관의 파견과 활동
6장 19세기 사신교류의 확대
1. 한인(漢人) 문인과의 교류
2. 만인(滿人) 관료와의 교류
7장 병인양요(1866)와 '인신외교'의 시도
1. 병인양요 시기 사신의 교섭 활동
2. 사적 교류에서 사적 교섭으로 —이흥민의 사함(私函)사건
8장 1860~70년대 대외위기와 조선·청의 공조
1. 대외위기와 특별한 사신 파견
2. 별재자행의 재개
9장 1880~90년대 조선·청 관계의 재편과 '사신외교' 활동
1. 조선·청 관계의 재편
2. 사신과 별재자관의 파견 양상
3. '사신외교' 활동
결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본서는 '사신외교'의 지속과 변용을 통시적으로 각 시기의 특징에 따라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사신외교'의 기본 구조와 작동 기제를 제시하고, 2장에서는 조선·청 관계에 초기의 제한된 외교 환경 속에서 점차 제도화되는 과정을 재구성한다. 3장과 4장은 정조대 '진하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고찰하며, 동시에 청의 외교 의례 확장이 조선·청 관계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한다. 5장과 6장은 19세기 전·중반 국제질서 변동 속에서 드러난 전통 외교의 한계와 이에 대응한 새로운 교섭 방식의 등장을 조명한다. 7장은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인신무외교'를 넘어 '인신외교'를 모색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8장과 9장은 1880년대 이후 청의 간섭과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 조선이 시도한 '사신외교'의 변용에 대해 고찰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조선·청 관계의 기반이 되는 '사신외교'의 구조와 기제를 다룬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에 명과의 관계 단절과 대명 사대에 준하는 규범의 준수를 강제했으며, 조선은 이에 따라 조공 사신을 파견했다. 조선은 그 어떤 조공국보다도 청에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으며, 사신은 양국 관계의 특수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개였다. 의례적 사안은 사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의례를 벗어난 실무적 사안은 주로 역관이 파견되는 재자관을 통해 처리되었다. 본서가 제시하는 '사신외교'에서 '사신'은 국왕을 대표하는 사신뿐만 아니라, 재자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외교' 역시 근대적 개념을 넘어 확장된 의미로 활용한다. 전근대에는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이 작동하였으며, 근대적 '외교'와 전근대의 '외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자는 『논어』에서 사신의 '전대(專對)' 역할을 강조했던 점을 들어, 실제적 교섭을 '외교'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사신외교'라는 개념을 조선·청 관계의 복합성과 연속성을 포착하는 유효한 분석틀로 제시한다.

2장은 17~18세기 조선 사신의 교섭 활동을 분석하여, 초기 '사신외교'의 발전 양상을 고찰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청 외교는 청의 강압적 통제와 감시 속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범월(犯越) 및 문서 위식(違式)에 대한 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죄(問罪), 문금(門禁)으로 인한 활동 제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조선 사신들은 청 고위 관료와의 접촉을 모색하며 유효한 교섭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18세기에는 김상명을 비롯한 유력 인물들과의 연계를 통해 교섭 공간을 확대했다.

3장에서는 정조 즉위 이후 18세기 후반 조선의 능동적 '사신외교'의 일환인 '진하외교'를 고찰한다. 즉위 초기 정조는 의례적 문제로 인해 청과 갈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정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에 정조는 건륭제의 칠순을 계기로 적극적인 '진하외교'를 추진했다. 기존의 관례와 달리, 칠순 생일에 맞춰 진하사를 파견하여 건륭제의 우호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정조는 안정화된 조청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치에서의 왕권과 주도권을 강화했다.

4장에서는 정조대 '진하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청의 외교 의례 확장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분석한다. 청은 북경 내 사행단의 이동을 제한하는 문금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조공국 사신에 황실 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의례 활동 공간을 조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사신들에게 청의 고위 관료들과 교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통적인 '인신무외교'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당시 사신들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80년 진하부사 강세황은 예부상서 덕보와 시를 주고받았으며, 공부상서 김간 등과 서화 및 시문을 교류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의례 공간에서 시작된 교류가 일회성 접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적 교류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사신들은 귀국 이후에도 청에 사행을 가는 지인들을 통해 청 문인과의 서신 교류를 이어갔다.

5장에서는 19세기 전반 조선 사신외교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했다. 정조대에 정착된 '진하외교'는 조선이 청 황제의 생일이나 반란 평정과 같은 주요 경사에 진하사를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 외교적 유대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연회 등 의례 행사가 축소되고, 정해진 하사품 이외에 가상(加賞)이 줄어들며 건륭제 때 확대된 의례의 의미가 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색되었다. 또한 조선의 진주사 파견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진주사의 임무가 종계변무와 같은 왕조의 정통성 문제에 한정되면서, 파견 빈도가 크게 감소했다. 실무 외교를 담당하던 별재자관 역시 외교적 교섭에서 점차 배제되어, 표민 송환과 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청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 결과였다.

6장에서는 19세기 조선-청 간 사신 교류의 확장과 변화를 분석했다. 조선 사신들의 대청 교류는 양적·질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시기 사신 교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했다. 한인 문인과의 교류는 18세기 후반 황실 연회 등 의례 공간의 확대 계기로 시작되어, 19세기에는 개인을 넘어 기윤, 옹방강 같은 저명 문인들 및 강전전계, 고사수계, 용희사 등 문인 집단과의 교유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만주족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18세기 전반에는 만주족은 경계의 대상이었으나, 정조 연간을 기점으로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북경의 만주족들이 조선 사신과의 교류를 모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인 교류의 확대는 단순한 문화적 접촉을 넘어 외교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비공식적 교류 공간의 확대는, 이후 새로운 국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통적 규범을 넘어 교섭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7장에서는 병인박해로 촉발된 대외 위기 속에서, 조선 사신들이 기존의 '인신무외교' 원칙을 넘어 '인신외교'를 모색하며 교섭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과정을 분석한다. 북경에 체류하던 조선 사신들은 프랑스 침공설에 대응하여 예부상서와 직접 접촉하고, 문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며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흥민은 시회(詩會)를 통해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예부상서 만청려에게 서신을 보내 서세동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만청려는 이를 황제에게 상주하여 총리아문에서 논의된 후, 예부를 통해 조선에 공식 답신이 전달되었다. 이는 '인신무외교' 원칙을 벗어난 사례였으나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진일보한 '인신외교'의 가능성이 열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장과 9장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근대적 체제로 전환되는 격변기(1860~1890년대)에 나타난 조선 외교의 구조적 변동과 적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860년 북경 함락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조선은 열하 문안사를 특별히 파견하여 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1870년대에는 정조대부터 이어진 '진하외교' 전통을 활용하여 위기 속에서도 연대를 유지했다. 병인양요, 오페르트 사건, 신미양요와 같은 서구 열강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별재자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양무 관련 사안을 전담하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1882년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북양대신아문이 주요 교섭 창구로 등장했음에도 조선은 전통적인 정기 사신과 진주사 파견을 지속하면서도, 조약, 국경 문제, 군대 주둔, 공사 파견 등 새로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별재자관을 통한 교섭을 확대했다. 특히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는, 전통적 외교 방식을 활용하여 청군 주둔 요청과 대원군 환국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주목할 점은 1880년대 중반부터 조선이 사신과 별재자관의 상호보완적 운용 및 천진 주재 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원세개와 이홍장의 개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북경에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사신외교'를 적절히 구사했다.

Ⅲ. 이념과 현실 사이의 '사신외교'

1. 통시적 접근과 연속성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는 병자호란에서 청일전쟁에 이르는 장기적 맥락 속에서 '사신'이라는 외교 행위자를 중심으로 조선·청 관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청 관계를 분절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서는 조선 사신의 활동을 지속과 변용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조선·청 관계를 통시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로 중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淸韓宗藩貿易 (1637-1894)』(張存武,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8), 『淸代中朝使者往來研究』(劉為,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中朝關係史: 明淸時期』(白新良 編,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淸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宋慧娟,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2007),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Yuanchong Wang, 2018, Cornell University Press)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중화제국의 천하질서에 기대어, 의례와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며, 예(禮)에 기반한 위계 질서의 실질성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조선이 중화질서 체제 내에서 어떻게 대청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는지, 수많은 제약 속에서 조선 사신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서는 '사신'을 통해 '조공책봉관계'가 단순한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실질적 외교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신외교의 양상이 통시적으로 변화했음을 분석한다. 병자호란 이후 청초에 조선은 청의 강한 압박 아래 제한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문서를 확보하고, 청 고관과 접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해 갔다. 17세기 후반 삼번의 난 진압 이후, 양국 관계가 점차 안정되면서 조선은 기존의 제한된 교섭 통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섭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18세기 후반 정조 즉위 초기에는 청과의 의례적 갈등을 전례 없이 적극적인 '진하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19세기 중반 병인양요 이후에는 조선 사신들이 역관을 매개로 한 간접적 교섭 방식을 넘어서, 청의 고위 관료들과 직접 접촉하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을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대청 관계에서 조선이 수동적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시적 접근의 유효성은 근대 전환기 분석에서 두드러진다. 본서는 근대적 외교의 흥기와 전통적 교섭의 쇠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과 근대적 통상 관계를 수립한 1882년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에도 조선의 사신 파견은 지속되었으며, 여전히 '사신외교'가 이루어졌다고 설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물론 고종은 정례적인 사신 파견을 폐지하고 북경에 상주 사절을 파견하고자 했지만, 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선은 청이 정한 '조공책봉관계'의 의례적 기초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능동적으로 '사신외교'를 펼쳤다. 대표적인 예가 '진하외교'이다. 1880~1890년대 두 차례의 '진하외교'가 있었는데, 모두 황태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두 번째 '진하외교'인 1894년 진하사 파견은 서태후의 존호 가상뿐만 아니라 황태후의 육순 생일 축하 의례 참석을 위해서였다. 파견 목적도 매우 특수했지만, 청일전쟁 직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역시 건륭제 시기 못지않은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파견이 건륭제 칠순 경하 '진하외교'를 상고해 따른 것으로, 변통의 시기에서도 단절되지 않은 '사신외교'의 연속성이다.

개항기 조선의 대외관계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근대적으로 변화하는 외교 사안과 사무에 주목했지만, 본서는 전통적 교섭 방식이 단순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적응과 조정을 거듭하며 지속되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용 속에서 주체적 플레이어로서 조선의 외교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급변의 시기에 지속된 전통적 외교 방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 소국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조건 속에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의 보편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본서에서 언급하는 '사신외교'의 보편성 역시,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했던 '교섭의 보편성'과 연결된다. 보편성이 일반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마주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각 시기 조선 외교의 능동성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본서가 제시하는 '사신외교'라는 분석틀에 대한 의문과도 닿아 있다. 즉, '외교'라는 용어를 조선·청 관계 전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전근대 대외 관계에서 일련의 행위들을 외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용어로 전근대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여러 연구자의 정의를 살펴보고(56쪽), 근대 또는 서구의 외교와는 다른 동아시아의 특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을 인정하며, 『논어』에서의 '전대'에 대한 설명을 빌려 '외교'가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문제는 19세기가 '중국적 세계질서'에서 서구의 국제법 질서로 변화하는 시기였고, 한자어 '외교'라는 용어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교섭이라고 하는 보편적 외교 활동과 함께 교섭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의 역사적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저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조선·청 관계의 전 시기의 활동에 '외교'를 적용하면 전근대와 구분되는 '외교'의 근대적 의미가 소거되어, 근대 전환기 당대 사람들이 세차게 겪었던 외교 관념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 조선 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

조선은 정기 사행 이외에 별사의 파견 시기와 형태, 재자관의 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대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사신단의 수장인 정사와 부사는 2품 이상의 관원으로, 명확한 계층성을 지녔고, 청이 규정한 의례 규정에 따라 표문과 공물을 전달하고, 조회, 연회 등 각종 의식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신들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공식 교섭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조선과 청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례 행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층위의 현안이 존재했다. 조선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사대 문서의 전달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며,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과 조율이 필수적이었다. 사신은 '인신무외교' 관념과 문금 정책 등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았지만, 불우비(不虞備)로 책정된 비공식적 외교 비용을 활용하여, 임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했다. 본서는 이러한 조선 사신들의 노력을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의례와 교섭을 중심으로 '사신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 사신은 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서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경종이 청에 주청한 전례 없는 왕세제 책봉을 들 수 있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로, 청으로부터 왕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 책봉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아닌 동생인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받기 위한 명분이 부족했다. 이에 주청사는 청에 사신으로 다녀간 경험이 있는 예부우시랑 나첨을 통해 비공식적인 주선을 모색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조선은 내무부시위(內務府侍衛) 김상명과 새로운 교섭 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김상명은 정묘호란 이전 만주로 이주한 신달리의 후손으로, 어머니가 강희제의 유모였기에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주청사는 김상명의 먼 인척으로 사행에 참여한 만상군관 김진필을 통해 그와 접촉하였고, 결국 그의 조력으로 왕세제 책봉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후 김상명과의 네트워크는 조선의 대청 외교에서 중요한 교섭 통로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의례가 아닌 비공식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였다.

김상명과의 교섭 채널 구축이 사신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조 즉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진하외교'는 의례를 둘러싼 마찰 속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정조대 '진하외교'를 통해 형성된 양국 간 우호 관계로 조선과 청의 문인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서양 열강의 등장과 청의 국력 쇠퇴는, 전통적 외교 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에 조선 사신들은 더욱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들은 청의 주요 관료 및 문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양 열강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본서는 서세동점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 사신은 기존의 의례적 외교 방식을 유연하게 변용하여 '인신외교'라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고 설명한다. '인신무외교' 관념 속에서도, 조선 사신들은 청 고위 관료들과 직접 접촉하여,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북경에 체류하던 유후조는 병인박해를 문제 삼아, 조선에 프랑스의 보복 공격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부상서 만청려를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 만청려는 만남을 피했지만, 조선 사신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의례 공간이 아닌 현안을 두고 조선의 국왕을 대리하는 정사가 조선 사무를 담당하는 청의 예부상서와 직접 접촉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18세기 후반 문인 교류가 확대되어 민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원에서의 '인신무외교'는 이미 무너졌지만, 조선 정사와 예부상서의 공식적 만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만청려는 유후조에게 프랑스를 외국으로 대하듯 하여 돌려보내라고 조언하면서도, 청은 군사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과의 대화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것은 '인신외교'의 시대로 들어서는 중요한 분기였다.

유후조와 만청려의 만남 이후, 이전에 사신으로 북경에 갔을 때 만청려와 교유했던 이홍민이 그에게 사적 서한을 보내 서세동점의 위기에 어찌 대처할지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강화도조약' 체결 전후로는 대청 사행 중 정사 이유원이 영평부 지부 유지개를 통해 북양대신 이홍장과 사적 서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본서 7, 8장에서 다루듯 '사신외교'는 두 차례 양요를 거치며 '인신외교'의 시기로 들어섰다.

'인신무외교'에서 '인신외교'로의 이행은 조선 사신의 능동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1882년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지속된 '사신외교', 즉 '인신외교'도 동일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와 근대적 통상 관계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교섭의 중심은 후자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조선 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은 전자에 속한 '인신', 즉 신하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후자의 공간을 통해 확보해야 했다. 상황에 따라 양자를 모두 운영하더라도 그 중심은 후자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후자의 공간은 바로 상주사절이 파견되는 천진의 주진독리(駐津督理)와 주진공관(駐津公館)이다. 하지만 주진독리의 파견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주진공관은 사실상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그 업무도 통상 행정 사무에 국한되었다. 본서는 사신과 주진공관의 협력을 설명하며 '사신외교'의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조선이 근대적 외교 체제를 통한 청과의 교섭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앞선 '통시적 접근'에 제시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급변의 시대에 지속된 '사신외교'의 의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창수의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는 조선·청 관계에서 근대와 전근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분절적 이해를 넘어 조선의 '전형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발휘된 능동성과 자율성을 추적하여 양국 관계를 설득력 있게 역사화했다. 특히 양국 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다른 쪽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념과 현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여러 한계점을 넘어선 역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 전환기라는 급변의 시기에 지속된 '사신외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는 본서가 기존의 문제들을 상당 수준 해결했기에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며, 그 의문의 지점은 향후 연구를 위한 '아쉬움'이자 근대사와 전근대사, 중국사와 한국사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사신'을 주제로 연구해온 평자와 저자 사이에 놓인 접점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 · 의결 ·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 · 심의 · 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 · 중관계연구소, 한 · 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편집위원

구도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7호(2025. 3)

초판 1쇄 발행 2025년 3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